

2012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 요구자료(Ⅰ)

2012. 9



금 융 위 원 회

총 목 차

(가, 나, 다, 순)

(I 권)

강 기 정 의원	1
강 석 훈 의원	389
김 기 식 의원	565
김 기 준 의원	749

(II 권)

김 영 주 의원	1
김 영 환 의원	111
김 용 태 의원	493
김 재 경 의원	501

(III 권)

김 중 훈 의원	1
노 회 찬 의원	447
민 병 두 의원	695
박 대 동 의원	963

(IV 권)

박 민 식 의원	1
성 완 종 의원	195
송 광 호 의원	351
송 호 창 의원	489
신 동 우 의원	547
안 덕 수 의원	629
유 일 호 의원	827

(V 권)

이 상 직 의원	1
이 종 결 의원	219
정 호 준 의원	707
조 원 진 의원	1001

요 구 자 료 목 차

(가, 나, 다, 순)

강기정 의원

1. 2010~2012년 감사원 처분요구서	3
2. 2010년 이후 자체/외부 감사보고서, 자체감사 계획서 및 자체 진정/ 비위 사항 조사내역	4
3.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25
4. 2009~2012년 송수신 문서 목록	128
5-1.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 거한 통보한 사항	129
5-2.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 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130
6. 각종 위원회 지적사항	131
7-1.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134
7-2.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136
8. 2007년 이후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 현황	142
9. 2007년 이후 임직원 징계조치 및 인사위원회 회부 현황, 징계위원회 구성, 회의록, 회의결과 사본	144
10.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 관련 공문서 ...	145
11.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147
12. 금융위원회 소송 및 행정심판 현황('10~'12)	148
13. 손비처리와 불납결손액	150
14.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및 해지 내역	151
15. 직원 해외 연수현황 및 해외 연수 계획, 결과보고서	152

16. 2008년 이후 연구용역 수행 내역	155
17. 인터넷 및 전화 등으로 제기된 진정/민원 등의 처리내역	160
18. 소관 법령 및 지침	161
19. 비밀문서, 대외비 문서 수발대장(최근 3년)	168
20. 정보공개청구 목록 및 처리결과, 공개된 정보의 사본	169
21. 서민금융 관련	170
- 사채시장규모 관련 보고서 일체(연구용역, 민간회사 보고서 포함)	

강석훈 의원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91
2. 최근 5년간 직원징계 현황 및 처리결과	392
- 직급, 징계자 주요업무, 징계사유, 적발기관(감사원, 경찰, 검찰, 내부감찰) 징계사항 및 결과 등	
3. 최근 3년간 내부감사 및 총리실·감사원 등 외부기관에 의한 감사 현황, 지적사항, 조치결과	393
4. 최근 3년간, 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제기 현황 및 처리결과	488
5. 최근 3년간 기관장 이하 임원단의 해외 출장, 교육 등에 대한 현황 (사유 포함)	495
6. 최근 3년간 기관장 이하 고위공무원단의 일반기업(금융기관 포함) 취업 현황	500
7. 최근 3년간, 국회에 보고했던 현안 관련 자료	501
8. 최근 3년간 발주 연구용역 목록	544
9. 최근 2년간 기관에서 발표한 보도/해명자료 목록	548

김기식 의원

1. 2008년 이후 현재까지 기관별·부서별 법률 자문 계약	567
2. 2008년 이후 현재까지 기관별·부서별 법률 자문 내역	568
3. 금융위원회 소송현황	569
4. 2008년 이후 현재까지 기관별 퇴직 인원 및 이직 상세내역 (계약직 포함)	585
5. 각 기관별 산하위원회 설치 현황	587
- 명칭, 설치이유, 법적근거, 주요활동사항, 구성원 인적사항, 2008년 이후 회의개최 실적 및 예산배정 내역, 예산 사용 내역	
6. 각 기관별 과징금, 과태료 부과현황	599
6-1. 세부현황	600
7. 금융위, 금감원 수발신 목록	601
8. 금융중심지 육성계획 추진계획 및 추진현황	602
- 기본 추진 계획 사본(추진 당시 계획서)	
- 추진 계획 중 변경된 사항	
- 금융중심지 추진 각 목표별 추진결과(성과, 실현여부, 미비 등 구체적으로)	
9. 서민금융 제도(미소금융,햇살론)에 대한 설명 및 추진계획 및 세부 사업 추진 실적	722
10-1. 설립이후 각 연도별 미소금융재단 기부금 모금내역	725
10-2. 전경련 회원기업별 미소금융재단 약정 내용 및 연도별 기부내역 (명단 및 금액)	726
10-3. 기타 미소금융재단 기부금 모금 내역 (기부자, 기부액)	727
10-4. 연도별 지역지점 설립 내역(이름, 소재지, 대기업/금융기관) 관련 ...	728

10-5. 연도별 미소금융 대출 현황 (대출금, 대출인원, 1인당 평균 대출금, 평균 대출 수수료)	733
10-6. 연도별 미소금융 대출금, 상환(금액, 율) 및 손실(율)현황, 기금 손실내역	734
10-7. 연도별, 시도별, 지점별 대출 현황, 상환(금액, 율) 및 손실(율) 현황, 기금손실 내역	734
10-8. 각 지점별 대출서류 목록 및 대출서류 평가(매뉴얼)	735
10-9. 연도별 복지사업자 지정현황(자체설립 지역지점, 기업 및 은행 설립지점, 민간사업자 구분(각 지점의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737
10-10. 연도별, 시도별, 지점별 월별 연체율 현황	740
11. 국내금융자격증 제도 현황(은행)	741
12. 인터넷 뱅크 제도 도입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747

김기준 의원

1. 금융위원회와 서울신문사(프레스센터)간의 사무실 임대 계약서 사본(계약 미체결일 경우, 현재까지 작성된 계약서 안 사본)	751
2. 현재 금융위원회 사무실(금융감독원 건물)임대 계약서 사본	751
3. 금융위원회 사무실 이전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 발송한 예비비 편성 요청 공문 사본	752
4. 서민금융정책(미소금융, 햇살론)과 관련, 현재 지원대상자의 자격 및 제도 시행이후 자격 변동내역	753
5. 서민금융정책(미소금융, 햇살론)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의 분기별 대출금액	755
- 취급금융기관, 사업자별 대출금액 별도 제출	

6. 서민금융정책(미소금융, 햇살론)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의 분기별 연체율 및 연체금액	758
- 취급금융기관, 사업자별 현황 별도 제출	
7. 서민금융정책(미소금융, 햇살론)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분기별 상환율 및 상환금액	761
- 취급금융기관, 사업자별 현황 별도 제출	
8. 서민금융(미소금융, 햇살론) 취급 금융기관, 사업자 현황 및 취급자격 ...	762
9. 서민금융정책 제도 시행 이후 법률, 규칙 위반 등으로 징계 조치된 금융기관, 사업자명 및 징계사유, 징계조치내역	764
10. 미소금융재단 설립 이후 금융기관별 휴면예금 출연 현황	765
- 금융기관별 출연일시, 출연금, 출연한 휴면예금 계좌수	
11. 미소금융재단 설립 이후 임원변동 현황	767
- 성명, 직책, 나이, 주요 학력 및 경력, 추천자	
12. 미소금융재단 2008~2012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770
13. 2010년부터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의 외부 연구 용역 현황	928
14.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에 따라 고정금리로 전환했다가 상대적인 피해를 본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가 이와 관련, 현재 검토 중인 보완대책이 있는지 혹은 향후 검토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932
15. 2008년 이후 퇴직자 재취업 현황	934
- 퇴직자명, 퇴직일, 퇴직사유, 재취업 기관명, 재취업 직급	
16. 2008년 이후 공직자 윤리법 제18조에 의해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서 및 취업승인 요청서 사본	936
17. 최근 4년간 소속직원에 대한 수사착수, 범죄사실 통보현황, 기소 여부 내역	937
18. 부처별 산하위원회 목록, 위원명단 및 인적사항	939

19. 감사원에서 금융위원회로 발송한 공문(금융기금감사국 제1과-1020호, 2012.05.01)에 의거 금융위원회가 산은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보낸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송부'라는 제목의 공문(감사담당관-517, 2012.05.02) 사본	947
20. 감사원에서 금융위원회로 발송한 공문(금융기금감사국 제1과-1020호, 2012.05.01)에 의거 산은금융지주회사 및 계열사가 금융위원회로 회신한 공문 사본 일체	948
21. 산은지주 IPO 세부 추진 계획	962
22-1. 기관내 TFT 설치 및 활동 현황	963
- 기간 : 2009.1.1~현재	
- TFT 명, 설치일, 설치목적, 활동종료일, 구성인원, 회의개최일, 활동성과 등	
- 회의개최일은 회의개최 횟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회의가 개최된 날짜를 모두 표시	
22-2. 소관 TFT(Task Force Team) 설치 및 활동 현황	965
- 기간 : 2009.1.1 ~ 현재	
- TFT명, 설치일, 설치목적, 활동종료일, 구성인원, 회의개최 회수, 회의개최일, 활동성과 등	
22-3. 소관 TFT(Task Force Team) 설치 및 활동 현황	966
- 기간 : 2009.1.1 ~ 현재	
- TFT명, 설치일, 설치목적, 활동종료일, 구성인원, 회의개최 회수, 회의개최일, 활동성과 등	
22-4. 소관 TFT(Task Force Team) 설치 및 활동 현황	967
- 기간 : 2009.1.1 ~ 현재	
- TFT명, 설치일, 설치목적, 활동종료일, 구성인원, 회의개최 회수, 회의개최일, 활동성과 등	

22-5. 소관 TFT(Task Force Team) 설치 및 활동 현황	968
- 기간 : 2009.1.1 ~ 현재	
- TFT명, 설치일, 설치목적, 활동종료일, 구성인원, 회의개최 회수, 회의개최일, 활동성과 등	
22-6. 소관 TFT(Task Force Team) 설치 및 활동 현황	969
- 기간 : 2009.1.1 ~ 현재	
- TFT명, 설치일, 설치목적, 활동종료일, 구성인원, 회의개최 회수, 회의개최일, 활동성과 등	
23. 감사기구 설치 및 감사책임자 선임 관련 자료	970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된 감사기구 및 감사책임자에 대한 자료	
- 설치일, 감사기구 명칭, 감사책임자명, 소속인원, 감사수행 실적, 최근 지적사항 내용 등	
24. 감사업무지침 또는 매뉴얼	970
25. 한국기업데이터 지배구조 개편 관련 자료	971
26. 한국기업데이터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세부 계획	971
- 사업추진 취지, 세부 일정, 주주구성 및 지분을 변경 계획, 지배구조 개편 방법, 재무구조 변경 계획 등의 내용포함	
27. 한국기업데이터를 「중소기업 전담 신용정보회사로 육성」 하기 위한 세부 계획	971
28. 한국기업데이터 지배구조 개편시 「금융기관과 신용정보 공유 추진」 세부계획	971
29. 과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용정보 인프라 구축」 과 관련한 사업실적	971
- 최근 5년간 사업추진 실적과 총투자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0. 한국기업데이터의 감사 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	971
- 추진사유, 재무적 이익, 자본감소비율 등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	
31. 한국기업데이터에 대한 중장기적 발전 계획	971
- 위상과 역할, 투자계획, 비즈니스 모델, 신용정보 인프라 확충 등의 내용	
32.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관련	972
- 최근 2년간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및 항목별 조치내역, 미 조치 내용의 향후계획	
-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주요 위원회로부터 권고받은 내역 및 항목별 조치내역, 미조치항목과 사유	
33-1. 최근 2년간 본부(본청)의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975
33-2. 최근 2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976
33-3.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	1005
33-4. 최근 2년간 「감사원법」 제29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1006
33-5. 2012년 자체감사계획서	1007
34-1. 최근 3년간 감사원 등 타 기관으로부터의 징계현황	1009
34-2. 최근 2년간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1010
35-1. 최근 3년간 연도별 고객만족도 및 친절도 조사결과보고서	1011
35-2. 금융위원회 소송현황	1023
35-3. 최근 3년간 연도별, 부분별, 유형별 민원제기 및 처리현황 ...	1025
35-4.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	1026
36. 비공개 회의 관련	1031
-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7월 30일까지 이사회 비공개 회의록 사본(원본대조필)	

-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7월 30일까지 기관에서 작성된 비공개 문서 현황 및 사본 일체(원본대조필)	
37. 조직, 인사 관련	1032
38. 성과보고 및 업무계획	1037
- 기관장 및 상급기관에 보고한 실·국 단위성과보고서(2011년)	
39. 성과보고 및 업무계획	1179
- 기관장에게 보고한 실·국 단위 업무계획서(2012년)	
40. 2009년 이후 연도별 기관장, 임원 법인카드 사용내역	1236
41. 기부금 납부 및 사회공헌활동 관련	1237
- 2009년 이후 연도별 기부금 지출명세서 및 지출사유(일자, 단체, 지출액)	
- 2009년도 이후 연도별 사회공헌활동 내역	
42. 광고홍보선전비 지출 관련 - 금융정책알리기	1240
43-1. 2009년 이후 연도별 기관장 및 임원, 직급별 급여총액, 인상을 현황	1243
43-2. 2009년 이후 기관장 및 임원별 기본급 및 기타 수당변동 현황 ...	1244
43-3. 2009년 이후 연도별, 직급별 각종 수당 신설 내역	1245
43-4. 2009년 이후 연도별, 직급별 성과급 지출현황	1246
43-5. 2009년 이후 연도별, 직급별 특별성과급 지출현황	1247
43-6. 2009년 이후 연도별 직급별 복지포인트 지급현황	1248
43-7. 2009년 이후 근로자복지자금 출연내역 및 근로자복지자금 지출내역	1249
43-8. 2009년 이후 신설된 임직원에 대한 각종 후생복지 세부내역	1250
43-9. 2009년 이후 임직원 주택자금, 학자금, 기타 각종 자금지원 현황 및 조건	1251

강 기 정 의 원

강기정 의원(민주통합당)

1. 2010~2012년 감사원 처분요구서

□ 2010~2012년 감사원 처분요구서는 총 10건임.

감 사 명	감사 기간	비 고
2009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검사 등 결산감사	'10.03.15 ~ 03.19	별첨1 별도제출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10.01.28 ~ 04.02	별첨2 별도제출
정책금융제도 개편 및 운영실태	'10.09.06 ~ 10.13	별첨3 별도제출
대한생명 매각 관련 공적자금 운용실태	'10.12.09 ~ 12.29	별첨4 별도제출
2010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검사 등 결산감사	'11.03.17 ~ 03.25	별첨5 별도제출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실태	'11.03.21 ~ 05.26	별첨6 별도제출
어음대체결제수단 이용 대출 등 운영실태	'11.07.04 ~ 07.29	별첨7 별도제출
증권시장 운영 및 감독실태	'11.09.19 ~ 10.31	별첨8 별도제출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12.01.09 ~ 02.28	별첨9 별도제출
금융위원회 재무감사	'12.03.05 ~ 03.16	별첨10 별도제출

강기정 의원(민주통합당)

2. 2010년 이후 자체/외부 감사보고서, 자체감사 계획서 및 자체 진정/비위 사항 조사내역

□ 2010년 이후 자체/외부 감사보고서, 자체감사 계획서는 총 12임

○ 감사계획서(3건)

계획연도	계획서	계획연도	비 고
2010년도	별첨1	2012년도	별첨3
2011년도	별첨2	-	-

○ 감사결과보고서(8건)

감 사 명	감사 기간	감사결과	비 고
한국회계기준원 종합감사	'10.03.29 ~ 04.06	별첨4	
금융결제원 종합감사	'10.05.31 ~ 06.14	별첨5	
전국은행연합회 종합감사	'10.11.15 ~ 11.26	별첨6	
2010년도 금융위원회 자체감사	'10.12.16 ~ 12.22	별첨7	
신용회복위원회 종합감사	'11.08.25 ~ 09.07	별첨8	
한국공인회계사회 종합감사	'11.11.21 ~ 11.29	별첨9	
미소금융중앙재단 종합감사	'11.10.20 ~ 10.28 / '11.12.05 ~ 12.16	별첨10	
2011년도 금융위원회 자체감사	'11.12.26 ~ 12.30	별첨11	
한국금융연구원 종합감사	'12.05.30~06.08	별첨12	

□ 자체 진정/비위사항 조사내역 : 해당사항 없음

2010년도 금융위원회 감사계획

◇ 기 본 방 향 ◇

- 자체감사는 부문감사로 수감부서의 '업무부담 최소화'
- 산하기관 감사는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성 극대화'

- 금융위와 산하기관중에서 감사원 감사대상을 제외한 산하기관 11개*를 대상으로 '10년 감사계획을 수립

* 휴먼에금재단, 공인회계사회, 여신전문협회,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 금융연수원, 금융연구원, 회계기준원, 금융보안연구원, 신용정보협회, 신용회복위원회

- 자체감사(점검)는 회계처리 등 기관운영 중심의 자체감사(7월), 민원 처리실태 점검(11월), 공직기강 점검(수시, 년 4~5회)으로 구분 실시

- 자체감사는 금년도 감사원 정기감사 생략에 대한 대체감사로 실시
- 민원처리실태 점검은 민원업무세척(연간 1회이상), 공직기강 점검은 「'10년 공직기강 추진계획」에 따라 각각 실시

- 산하기관 감사대상은 장기미실시 기관, 소관부서의 감사수요, 감사 가능인력 등을 고려하여 3개 기관을 선정·실시

- 회계기준원(1/4분기), 금융결제원(2/4분기), 은행연합회(3/4분기)
- 감사범위·방법은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현지감사

- 월별 세부일정(예정)

1~2월	3월	4~5월	6월
공직기강 점검	회계기준원 감사	공직기강 점검	금융결제원 감사
7~8월	9~10월	11월	12월
자체감사, 공직기강 점검	은행연합회 감사	민원점검	공직기강 점검

<별첨 2>

2011년도 금융위원회 감사업무 계획

◇ 기본 방향 ◇

- 자체감사는 부문감사로 수감부서의 업무부담 최소화
- 산하기관 감사는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성 극대화

1. 『금융위 감사규정』 개정('11년 상반기)

- ☐ 개정사항 : 공감법에 따라 “일상감사 실시, 자체감사결과 공개”에 대한 근거를 추가하고

- 금융위 여건에 부합하는 『일상감사 기준』 마련

◇ 공감법 후속조치 주요사항 ◇

- ☐ 권고사항 : 자체감사기구 소속은 최소한 부기관장 직속(비전담 감사기구)
- ☐ 의무사항 : 감사담당관의 자격 및 신분 보장(2년), 감사담당자 우대 및 장기근속(2년이상), 일상감사 실시 및 기준 마련, 자체감사 결과 공개

2. 자체감사(점검)

① 회계 등 부문 감사 (12월)

- ☐ 중점사항 :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국정과제 등 외부기관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 ☐ 실시형태 : 서면·부분감사

② 일상감사 ('11년 하반기부터 수시로 실시)

- ☐ 중점사항 : 주요정책 집행업무, 계약업무(건당 3천만원 이상), 예산관리업무의 적법성 여부 등

- ☐ 실시형태 : 서면·부분감사

③ 민원 처리실태 점검 (9월)

☐ 중점사항 : '10.9~11.8월말 처리한 민원 및 전년도 지적사항 이행 여부

☐ 실시형태 : 서면점검

* 민원업무시행세척은 연간 1회이상 자체 민원실태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

④ 공직기강 점검 (년 4~5회/1·7·9·12월 등)

☐ 중점사항 : 연말연시등 취약시기와 사정기관 점검시기에
금융위 및 산하기관의 복무상태 점검

☐ 실시형태 : 「'11년 공직기강 추진계획」에 따라 현지점검

3.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① 정기감사

☐ 대상기관 : 신용회복위원회(4월), 휴면예금관리재단(7월), 공인회계사회(11월)

☐ 중점사항 : 기관운영 전반(종합감사)

☐ 실시형태 : 현지감사

* 정기감사 대상기관 : 특별법 또는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법인)

* 선정기준 : 소관부서의 감사수요, 장기미실시 기관, 감사 가능인력 등

- 신용회복위원회 : '03년이후 감사 미실시, 예산 321억원('10년), 직원 200명
- 휴면예금관리재단 : '08이후 감사 미실시, 예산 151억원('10년), 직원 34명
- 공인회계사회 : '08년이후 감사 미실시, 예산 183억원('10년), 직원 81명

② 수시감사

☐ 대상기관 : 미 정

☐ 감사시기 : 위원장 지시 및 감사의 필요성이 발생하거나,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선제적 점검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사항

☐ 산하기관 감사시 필요할 경우 외부인력을 지원받아 실시

☐ 관련기관(감사원, 수감기관 및 관련부서)에 감사계획 사전 통보

○ 자체감사는 일상감사로 수감부서의 '업무부담 최소화'

○ 산하기관 감사는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성 극대화'

<별첨 3>

2012년도 금융위원회 감사계획

◇ 기 본 방 향 ◇

- 자체감사는 일상감사로 수감부서의 '업무부담 최소화'
- 산하기관 감사는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성 극대화'

□ 금융위와 산하기관중에서 감사원 감사대상을 제외한 산하기관 11개*를 대상으로 '12년 감사계획을 수립

* 휴먼에금재단, 공인회계사회, 여신금융협회,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 금융연수원, 금융연구원, 회계기준원, 금융보안연구원, 신용정보협회, 신용회복위원회

○ 자체는 일상감사(수시)와 공직기강 점검(수시, 년 4~5회), 민원 처리실태 점검(12월) 으로 구분 실시

· 자체 회계 및 기관운영 감사는 금년도 감사원 정기감사에 따라 미 실시

- 공직기강 점검은 「'12년 공직기강 추진계획」, 민원처리실태 점검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34조)에 따라 각각 실시

○ 산하기관 감사는 장기미실시 기관, 소관부서의 감사수요, 감사 가능인력 등을 고려하여 3개 기관을 선정·실시

- 금융연구원(5월), 여신금융협회(8월), 금융보안연구원(10월)

- 감사범위·방법 :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현지감사

□ 월별 세부일정(예정)

1월	4월	5월	7월
공직기강 점검(설명절)	공직기강 점검(총선)	금융연구원 감사	공직기강 점검(하계휴가)
8월	9월	10월	12월
여신금융협회 감사	공직기강 점검(추석)	금융보안연구원 감사	민원점검 공직기강점검(연말)

<별첨 4>

2010년 한국회계기준원 감사 결과 보고서

2010. 4.

**금 용 위 원 회
감 사 담 당 관 실**

- 목 차 -

I. 감사개요

II. 한국회계기준원 현황

III.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2. 부문별 감사결과

가. 조직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나.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다. 위탁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3. 조치계획 및 지적사항별 조치내역

4. 감사결과 처리요령

— < 목 적 > —

◇ 한국회계기준원의 위탁사무 처리현황 및 기관운영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업무처리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

□ 법적 근거

○ 민법 제37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감독

○ 행정권한위임위탁규정 제14조(지휘·감독)

*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

※ 외감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금융위는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업무(제·개정, 해석, 질의·회신)를 회계기준원에 위탁

□ 감사성격 : 정기 업무감사

※ (舊)금융감독위원회는 2005년 11월 회계기준원에 대하여 정기 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후 동 기관에 대한 감사는 미 실시

□ 실시기간 : 2010. 3. 29 ~ 4. 6 (7일간)

□ 대상범위 : '06.1.1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의 조직운영·관리, 예산집행·회계처리 및 위탁업무 처리상황

□ 감사요원 : 감사담당관 외 4명*

* 감사담당관실 2명, 공정시장과 2명

II

한국회계기준원 현황

□ 설립목적 및 연혁

-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 1999. 9. : 한국회계기준원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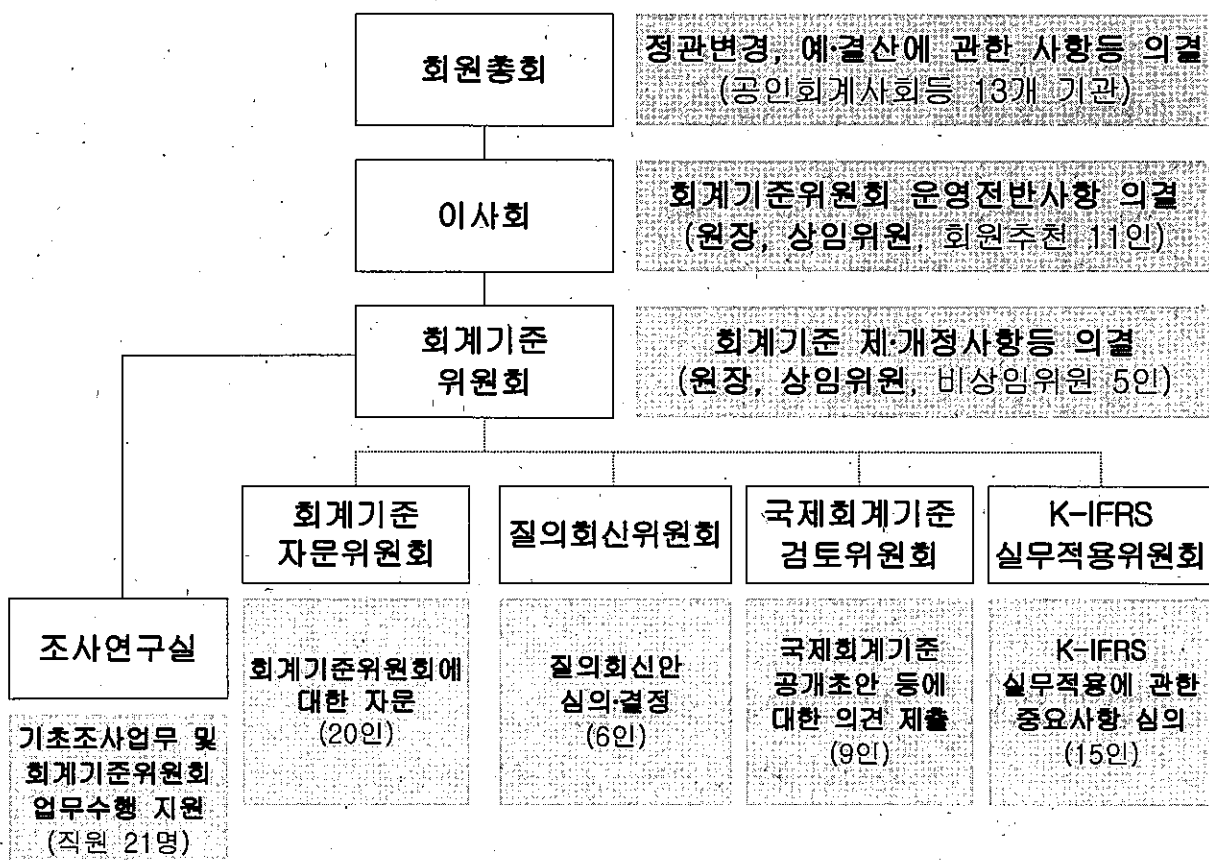
- 2000. 7. : 회계처리기준의 제·개정업무 등 수탁(외감법시행령)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84-11

** 원장(서정우, 55년생) : 국민대 경영대학 교수(現),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 회 원 : 13개 기관(공인회계사회, 상장사협의회, 은행연합회등)

□ 조직 · 정원 : 1실 5팀, 23명(원장, 상임위원, 직원 21명)



□ 주요업무

- 회계처리기준 제·개정
- 회계처리기준 해석 및 질의회신

□ 연도별수입·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E)
운영수익(a)	2,475	2,880	3,400	3,720	3,692
• 법정분담금 ¹⁾	693	775	1,306	1,661	2,310
• 회원분담금 ²⁾	1,560	1,690	1,268	1,317	1,093
• 기타(이자 등)	222	415	826	742	289
운영비용(b)	2,477	2,851	3,359	3,242	3,692
• 인력관리비	1,750	2,039	2,155	2,167	2,399
• 연구관리비	334	374	354	451	550
• 일반관리비등	393	438	850	624	743
차이(c=a-b)	△2	29	41	478	0

- 1) 법정분담금: 외감법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원받는 자금(유가증권발행분담금의 5%)중 법정적립금('06년까지는 50%, '07년부터는 30%)을 제외한 금액

(단위: 백만원)

연도별 법정분담금	'04	'05	'06	'07	'08	'09	'10(E)
운영경비	800	750	693	775	1,306	1,661	2,310
적립금	800	750	693	418	560	712	990
합 계	1,600	1,500	1,386	1,193	1,866	2,373	3,300

- 2) 회원분담금: 각 회원사는 '02년 이후 동결된 분담금액에 따라 연2회 균등분납(1.31, 7.31)하여 왔으나, 2008년부터는 법정분담금 증액(4% → 5%)에 따라 회원 분담금 축소 조정

10년 회원별 분담금 예산규모	금액(백만원)	분담율(%)
코스닥협회, 상공회의소, 상장사협의회, 공인회계사회	212	19.2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261	24.0
전국경제인연합회	135	12.4
한국금융투자협회	154	14.1
한국거래소	331	30.3
회원별분담금 총액	1,093	100.0

1. 총 평

□ 한국회계기준원은 정부로부터 회계처리기준의 제정(해석, 질의회신 포함)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민간 독립기구(비영리 사단법인)로서

- 기업회계기준의 제·개정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개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음

【2009년 주요 위탁업무 처리현황】

① 현행 기업회계기준 제·개정 관련 업무

- 회계기준 개정·공포(6건), 공개초안 심의·의결(9건), 일반 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 발표(7건), 회계기준 적용 의견서 발표(2건)등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개정 관련 업무

- 제·개정(7건), 공개초안 의결(11건), 국제회계기준 검토의견 제출(27건)등

③ 질의접수·회신 건수 : 총 65건 접수(35건 회신, 30건 철회)

□ 한편, 한국회계기준원의 정원(2010년 4월 현재)은 원장, 상임위원(1), 조사연구실(21명)등 총 23명으로,

- '06 ~ '09 기간중 연간 평균 집행경비는 29.8억원이며 인건비(연평균 20.3억원, 68%), 연구개발비 및 일반관리비로 구성됨

⇒ 감사결과 조직운영·관리, 예산집행·회계처리 및 위탁업무 수행 부분에 있어 중대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아니하며 다만, 각 부문별로 일부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2. 부문별 감사결과

가. 조직운영 · 관리에 관한 사항

- 원장, 상임위원(1) 및 조사연구실(5팀, 21명)등 23명으로 운영되며, 조직관리 전반에 심각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아니함
- 다만, 시간외근무 · 연차유급휴가제도 운용, 급여결정시스템 및 직원연수제도 등 일부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지적 및 조치요구사항】

① 시간외근무 및 연차유급휴가제도 운용 부적정

- '06년~'09년 기간중 직원 22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분 178.5일과 '07.12~'09.12 기간중 직원 22명의 초과근무 12,600 시간 발생 및 관련 보상 미실시

⇒ 휴가사용 촉진을 통해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 발생을 최소화 하는 한편, 차후 불가피한 시간외근무 및 휴가 미사용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보상기준 마련 필요(개선통보)

② 급여결정시스템 미흡

- 매년 직원과의 연봉계약 체결시 전년도 개인별 연봉금액에 당해연도 인건비 총액 인상을 및 다면평가 등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직원의 연봉액을 결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산정방식이나 직급별 연봉등급 등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 하는 등 급여결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함

⇒ 직급별 연봉등급 및 연봉결정기준 등이 반영된 시스템 마련을 통해 급여결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필요(개선통보)

③ 직원의 국내외 연수제도 운영 개선 필요

- '04년 이후 기준원의 지원을 받아 연수를 완료한 직원은 4명(국내연수 2명, 국외연수 2명)으로 이들에게 지원된 경비는 3.2억원에 달하나 이 중 3명(국내연수 1, 국외연수 2)은 의무복무기간(연수기간의 2배)을 채우지 못하고 1년여만에 퇴직함으로써 연수효과 퇴색

⇒ 연수전 최소 복무기간, 연수기간 및 지원금반환규정 개선등 연수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개선통보)

나. 예산집행·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 2006년 이후 2009년까지 연간 평균 운용경비는 29.8억원이며, 운용경비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집행(연평균 20.3억원, 68%)되고 있고, 05년도 검사결과에 따라 '업무추진비집행시행세칙'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부분에 있어 중대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아니함
- 다만, 인건비예산 편성방식, 비상임위원에 대한 수당지급방식 및 업무추진비 집행방식 등 일부에 개선이 필요함

【지적 및 조치요구사항】

① 예산 편성시 인력관리비 비목의 구체화 필요

- 지출예산의 인력관리비중 상근임직원 급여 과목에 직급별 세부 인건비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인건비 총액으로만 계상하여 예산 승인을 받음

⇒ 직급별 인건비 내역을 세부적으로 계상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관련 예산심의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할 필요(개선통보)

②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에 대한 지급수당 개선 필요

-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안전심의 및 회의참석에 따른 실비보상 성격의 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시 이를 인건비 항목에 포함하여 편성하고 실제 지급에 있어서도 매월 월정액(275만여원)을 급여성으로 지급

⇒ 관련 예산 편성시 '안전심의·검토수당' 및 '회의참석수당'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안전심의 및 회의참석 실적에 따라 실비로 지급토록 개선(개선통보)

③ 클린카드 도입등 업무추진비 집행 개선

- '업무추진비 집행 시행세칙'에서는 업무추진비의 심야시간대(밤 12시 이후)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며, 사용장소에 제한이 없는 일반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집행

⇒ 클린카드 도입등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 강화방안 마련 필요(현지조치)

다. 위탁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처리절차·과정·내용 등에 특이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아니하며 다만, 질의회신위원회 의결절차 등 일부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지적 및 조치요구사항】

① 질의회신위원회 의결절차 개선 필요

- 질의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질의회신위원의 의결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 등이 미비

⇒ 질의회신위원회 심의·의결의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질의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의견 제출 및 의결참여를 제한토록 관련 규정 개정(개선통보)

② 장기 미상환 차입금으로 인한 불필요한 이자비용 발생 개선

- '05년도 발생한 차입금(5.4억원)이 '10년 3월 현재까지도 상환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 불필요한 이자비용 발생

⇒ 차입금 상환자금을 검토하여 조기 상환계획 마련 필요
(개선통보)

③ 회계기준위원회 회의 관련

- 회계기준위원회는 공개가 원칙이나 실제에 있어서는 외부인이 공개회의에 참여한 경우가 거의 없음

⇒ 회계기준 제·개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안전 관련 자료의 사전 홈페이지 공개 확대등 외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함이 필요(현지조치)

3. 조치 계획 및 지적사항별 조치내역

- ☐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14조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에 통보 하여 2개월 이내에 적의 조치토록 요구

일련 번호	지 적 내 용	조치구분
1	시간외근무 및 연차유급휴가제도 운용 부적정	개선통보
2	급여결정시스템 미흡	개선통보
3	직원의 국내외 연수제도 운영 개선 필요	개선통보
4	예산편성시 인력관리비 비목 구체화 필요	개선통보
5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회에 대한 지급수당 개선 필요	개선통보
6	업무추진비 집행 개선(클린카드 도입 등)	현지조치
7	질의회신위원회 의결절차 개선 필요	개선통보
8	장기 미상환 차입금으로 인한 불필요한 이자비용 발생 개선 필요	개선통보
9	회계기준위원회 회의 공개 관련	현지조치

4. 감사결과 처리요령

1. 처분요구 사항의 조치기한

가. 문책사항 : 해당사항 없음

나. 변상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개선통보 : 2개월 이내에 개선 또는 조치계획 마련

2. 조치결과 보고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상기 조치기한 이내에 조치한 후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금융위(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함

3. 이의신청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의견서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별첨 5>

정기종합감사

2010.5.31~6.14

2010년 금융결제원 감사 결과 보고서

2010. 8.

금 융 위 원 회

- 목 차 -

I. 감사개요

II. 금융결제원 현황

III.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2. 부문별 감사결과

가. 기본재산 관리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예산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라. 급여 및 복지에 관한 사항

마.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

3. 감사결과 처리요령

I

감사 개요

〈 목 적 〉

- ◇ 우리 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인 금융결제원에 대한 정기 종합 감사를 실시하여 기관운영 및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제고

□ 법적 근거

- 민법 제37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 *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감독

□ 감사성격 : 정기 업무감사

- ※ 금융결제원에 대하여는 그 기능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03년, '05년, '07년등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왔음

□ 실시기간 : 2010. 5. 31(월) ~ 6. 14(월) (10일간)

□ 대상범위 : '07.1.1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의 내부통제, 고유·수익사업, 예산·회계, 급여·복지, 중요시설 관리 등

□ 감사요원 : 감사담당관 외 7명*

- * 감사담당관실 3명, 금융정책과 1명, 규제법무담당관실 1명, 금융감독원 2명

□ 중점 감사사항 : 기본재산 관리, 고유·수익사업 운영, 예산·회계처리, 급여·복지, 정보시스템 등



금융결제원 일반현황

□ 연 혁

○ '86. 6.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설립

* 전국어음교환관리소('84.5)와 은행지로관리소('77.6)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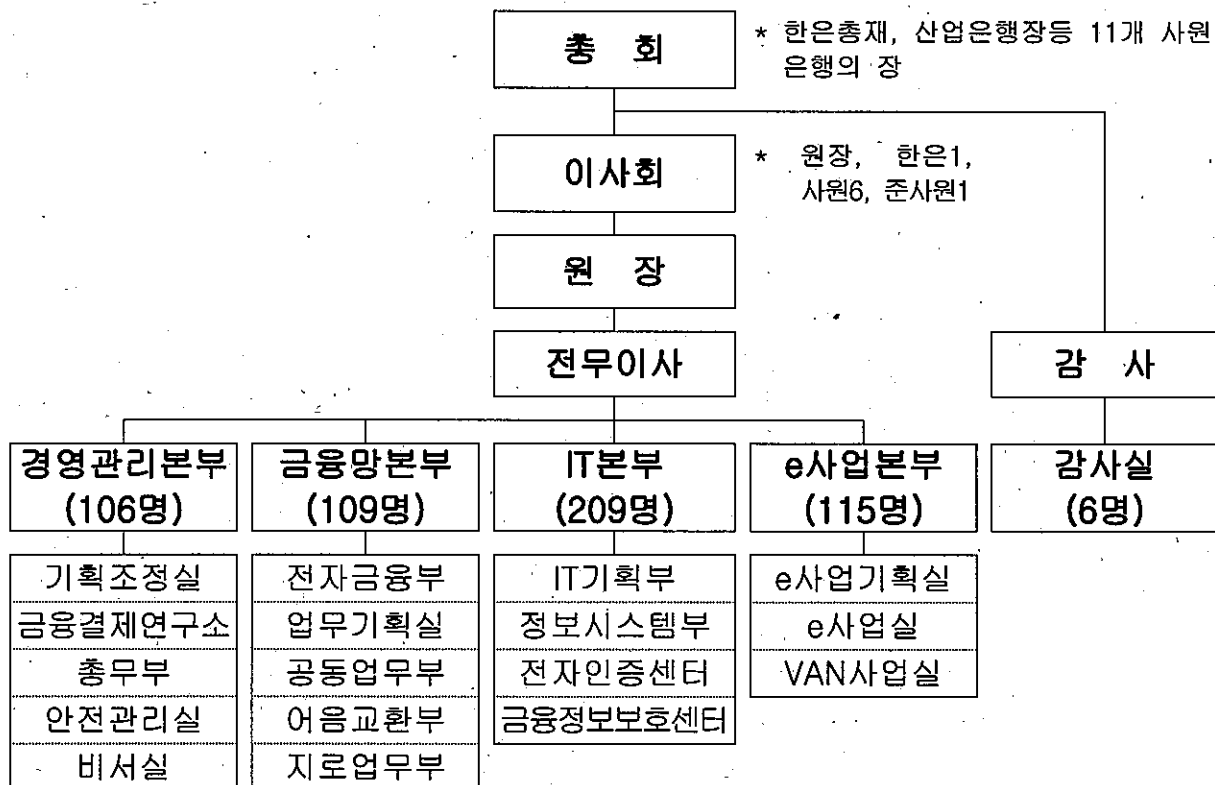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7(한국은행 강남지점 건물)

□ 조직 및 인원(정원) : 4본부 7부 8실 1연구소 2센터 6지역
본부, 615명(임원 7명)

* 원장 : 송창현(59세) / 서울대(법학과), 한국은행 부총재보('07.4 ~ '10.3)

감사 : 진석규(56세) / 연세대, 기재부 FTA국내대책본부 전략기획단장

【조직 및 인원(현원 기준)】



부산경남지역본부(4명) / 충청지역본부(3명) / 광주전남지역본부(5명) /
경기강원지역본부(4명) / 대구경북지역본부(5명) / 전북지역본부(4명)

□ 주요업무

- 어음교환소 설립·운영 및 지로제도 운영
- 금융공동망(CD, 전자금융, 타행환등) 구축·운영
- 금융기관 공동전산업무(공인인증등)
- 신용카드 관련 부가통신사업(VAN) 등 수익사업

□ 고유사업 및 수익사업 운영현황('09년도)

고유사업: 1,077억원				수익사업: 869억원			
회비 (898억원)	■ 기본회비 (134억원) * 11개 사원은행(한은 40%)			매출 (745억원)	■ 상품매출 (27억원) ■ 카드VAN수수료 (439억원) ■ CMS수수료 (228억원) ■ 전자금융수수료 (48억원) ■ 전자어음수수료 (2억원)		
	■ 업무별회비 (764억원) * 사원(11), 준사원기관(10), 참가기관(43)이 서비스망 이용실적에 따라 분담						
수익사업 잉여 전입 (102억원)				영업외수익 (124억원)			
기본재산 운용수익 (75억원)							
잡수입등 (2억원)							
↓				↓			
인건비 (51.5%)	경비 (26.6%)	전산비 (14.0%)	잉여* (7.9%)	원가 (39.5%)	인건비 (12.8%)	경비 (17.6%)	잉여** (30.1%)
수익사업 매출증가 현황				수익사업 매출증가 현황			
(억원 / 증가율, %)				(억원 / 증가율, %)			

Ⅲ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 금융결제원은 금융공동망 구축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간 자금결제 및 정보유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키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 공동망 참가기관의 지속적인 확대 등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잠재적 리스크 증대 등 다양한 내·외적 금융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2,300만건, 76조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의 지급결제업무량을 심각한 시스템 장애나 오류 없이 처리하는 등 고유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중대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아니함

【금융결제원 업무처리실적】

(단위: 백만건, 조원)

구 분	2007		2008		2009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어음교환	805	4,406	748	5,180	649	5,445
지 로	1,108	335	1,157	374	1,120	394
금융공동망*	3,320	10,102	3,875	12,912	4,218	15,998
e사업**	1,183	133	1,201	156	1,189	162
합 계 (일평균)	6,417 (21)	14,975 (52)	6,982 (23)	18,622 (65)	7,175 (23)	21,999 (76)

* CD, 타행환, 전자금융, K-CASH, 계좌이체PG, CLS

** CMS, 직불카드, 전자어음, 물품대금, 신용카드

- 다만, ①기본재산 관리, ②수익사업 운영, ③예산집행·계약, ④급여·복지, ⑤정보시스템 등의 부분에 있어 일부 주의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2

부문별 감사결과

가. 기본재산 관리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①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 '10년 5월 현재 가입금, 참가금 등으로 구성된 기본재산은 2,323 억원으로 이의 처분·사용에 관한 규정 없이 총회 의결로 사용
- '09년도에 33개 참가기관의 금융기관 공동코드 체계개편 소요 비용(419억원)을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보전하는 등 '01 ~ '10.5월 기간중 1,004억원 규모의 기본재산을 총회 의결로 사용
- 특히, '01년 및 '09년에는 각각 110억원 및 237억원의 직원 퇴직금을 기본재산으로 지급(정관 30조제1항* 위배)

* (정관 제30조 제1항) “결제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 운영수익과 사원, 준사원, 특별참가기관의 회비 및 사업수익으로 충당한다.”

【기본재산(예산외) 적립·사용현황】					(단위: 억원)
	'01~'06	'07	'08	'09	'10.1~5
적 립	835.9	8.2	57.1	659.1	627.4
사 용	298.0	43.1	4.5	653.8	5.2
잔 액	1,672.3	1,637.0	1,696.9	1,702.8	2,322.5

* '09년 이후 적립액 증가는 증권사의 참가금에 기인(4천억, 5~7년간 분납)
 * '09년 사용은 퇴직금(237억원) 지급 및 금융기관 공동코드 개편(419억원)

- ⇒ i) 기본재산의 처분·사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관에 명시하고
 ii)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엄격히 관리할 필요 **[개선]**

② 원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 부적정 등

○ 원장 및 원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된 업무는 결재원이 직접 수행함이 타당하나, 모집계획 수립 등 주요 업무를 한국은행이 수행

○ 또한, 원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2조에는 위원의 자격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 제8조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나 '04.3.31, '07.3.22, '10.3.16 위원회에서는 자체결의로 의사록 미작성

⇒ i)원장 및 원장후보추천위원 선임과 관련한 사무는 결재원이 직접 수행하고, ii)원장후보추천위원 선임시 적격성 심사 및 원장후보추천위원회 의사록 작성 등을 철저히 수행 [주의]

③ 전자금융위원회등 각급 위원회 운영 부적정

○ 결재원은 정관 제22조에 따라 본부에 어음교환심사, 지로운영, 전자금융, 전산, 기획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설치·운영

- '07.1~'10.5 기간중 5개 위원회는 총 227회 개최되었으며, 이 중 63%가 전자금융위원회*(78회) 및 전산위원회**(64회)에 집중

* 전자금융위: 금융공동망, 모바일, 공인인증, PG, B2B, 금융IC, 전자어음 등

** 전산위: CD공동망, 타행환 공동망, 무역망, 금융정보보호, 주택청약, CLS 등

- 한편, 같은 기간 5개 위원회의 회의는 66%(150회)가 서면결의 이었고 대면회의는 34%(77회)에 불과했음

⇒ 전자금융 및 전산위원회를 보다 세분화하여 운영하는 등 각급 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마련·시행 [개선]

나.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수익사업 범위 포괄적 규정(정관) 및 이사회 의결 없이 수행

- 정관 제4조제2항제1호는 수익사업 범위를 “고유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동 사업의 일부 또는 그 부대사업”으로 포괄·규정하여 별도의 정관변경 없이 다양한 수익사업 수행이 가능

* 결제원은 신용카드VAN, CMS, 전자금융, 전자어음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수행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나 결제원의 경우 수익사업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지속화될 경우 법인의 설립취지가 퇴색될 우려

< 금융결제원 고유사업 수입 및 수익사업 매출현황 >

07년		08년		09년	
고유사업	수익사업	고유사업	고유사업	고유사업	수익사업
934억 (64%)	527억 (36%)	1038억 (63%)	610억 (37%)	973억 (57%)	745억 (43%)

- 특히, 정부기관 통합 빌링 ASP서비스사업('08) 등을 이사회 의결 없이 추진(정관 37조 위배)

- 한편, '08년 이후 수익사업 이익잉여금(임의적립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의 구체적인 사용기준이 미흡

구 분	'07	'08년	'09년
수익사업 이익잉여금	42억원	147억원	262억원

⇒ i)정관상 수익사업 범위를 사업단위로 구체화하고, ii)'중장기 수익사업 관리방향' 마련을 통해 수익사업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iii)이익잉여금의 사용기준(계획)을 마련·시행할 필요 **[개선]**

다. 예산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

①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업무추진비는 결제원 회계규정(제16조 내지 제17조)에 따라 사전에 건별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지출결의서는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사용목적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그러나 건별 지출원인행위 없이 1개월간의 카드사용전표를 지출결의서에 일괄·첨부하였고, 사용목적도 부실하게 기재
- ⇒ 집행건별로 집행품의를 하고, 지출결의서에 업무관련성 입증이 가능토록 사용목적 등을 명확히 기재토록 개선 **[개선]**

② 용역비에서 직원의 사내 면접위원회등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 용역비는 결제원 회계규정(시행세칙 별표 제1호 과목해설)에 따라 시설 관리·유지 용역 등 외부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함
 - 그러나 결제원은 내부 직원으로 구성된 회의체* 운영시마다 참석 직원에게 각각 10 ~ 30만원씩의 참석수당을 용역비에서 지급
- * ‘신입채용면접위원회’, ‘직무별연수평가위원회’, ‘성과평가위원회’ 등
- ⇒ 용역비는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하게 외부용역 대가에 한정하여 집행되어야 함 **[주의]**

③ 6시그마컨설팅 계약 관련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등 부적정

- 결제원 회계규정(제36조)에 따라 수의계약은 엄격히 제한되며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그러나 결재원은 추정가격 22억원 규모의 '6시그마컨설팅 사업 ('05.1.27 원장 전결)'을 1~5차에 걸쳐 추진하면서 제안서 평가위원을 전부 내부직원으로만 구성하여 1차 사업자를 선정(제한 경쟁)하고, 2~5차 사업은 1차 사업자와 수의계약으로 추진

⇒ 향후 거액의 장기·연속계약 체결시에는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및 입찰에 있어 전문성·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 **[주의]**

④ 분당신축공사 설계변경 과다

- 분당센터 신축공사('04.12~'07.3)와 관련, 총 64건의 설계변경(62건은 시공사 요청)이 있었고 이로 인해 10.1억원의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

⇒ 향후 공사 추진시에는 엄격한 설계관리로 불필요한 설계변경 및 이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주의]**

⑤ 입찰공고방법 및 공고기간등 개선 필요

- 결재원 회계규정(시행세칙 제54조)에 의할 경우 입찰공고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로부터 10일(긴급한 경우나 재공고는 5일) 전에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G2B, 조달청)를 이용토록 규정

- 그러나 결재원은 상당수 계약을 1개의 일간신문에 회계규정상의 최소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함으로써 입찰참가자들의 참여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

⇒ 입찰공고는 일간신문 및 G2B를(조달청)를 함께 활용하는 한편 공고기간도 국가계약법령 수준(최장 40일)으로 개선 **[권고]**

라. 임직원 급여 및 복지에 관한 사항

①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운용 부적정

- 기업회계기준(제27조)상 퇴직급여충당금은 회계연도말 현재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함
- 그러나 결재원의 적립비율은 '07(37.8%), '08(40.2%), '09(11.4%) 등으로 매우 저조하며 이마저도 일부(약 21억원)를 직원주택 구매 지원(무상대여)으로 운용
- 특히, '01년 및 '09년도에는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액이 부족하여 각각 110억원 및 237억원의 직원 퇴직금(퇴직금 중간정산 및 희망퇴직금)을 기본재산으로 지급(정관 제30조 위배)

⇒ 적정수준의 퇴직급여충당금을 확보하고 적립목적에 부합토록 관리 [개선]

② 성과상여금 제도 운영 부적정

- '08년부터 성과상여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상을 부서장 및 팀장급으로 한정하고 5개 등급중 최고등급(340%)과 최저등급(290%)간 지급을 차이가 50%에 불과

구 분	E	A2	A1	A0	B
배분율(%)	5	10	15	40	30
지급율(%)	340	320	310	300	290

⇒ 성과상여금 제도의 도입취지 및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용대상' 및 '등급간 지급격차' 확대 [개선]

③ 학자금 및 전세보증금 지원 관련 규정 불합리

-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직원에게 해당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면서 사망직원에 대하여도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해당 직원의 정년퇴직 예정시까지 지원
- 한편, 학자금 및 전세보증금 지원시 기혼 여성 직원에 대하여는 배우자가 직장에서 관련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을 제한

⇒ 사망직원에 대한 학자금 지원은 사망원인에 따라 차등화하고, 학자금, 전세보증금 지원시 여성 직원에 대한 차별 개선 **[개선]**

④ 자가운전보조비 지급 부적정

- 소득세법(시행령 12조)은 월 20만원 한도내에서 '자가운전보조비'를 비과세소득(실비변상적 급여)으로 인정
- 이에 따라 결제원은 직원들이 교통비(월 15만원)와 자가운전보조비(직급별 월 15만원 ~ 40만원)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
- 그러나, '09년도 자가운전보조비 수령자 305명(퇴직자등 제외)중 254명(83.3%)은 당해 연도 시내출장이 0회였고, 시내출장이 확인되는 나머지(51명) 또한 연중 출장횟수가 10회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임
- 따라서 자가운전보조비는 업무특성상 시내출장 업무가 많은 영업사원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지급함이 타당

⇒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토록 개선 **[개선]**

마.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

① 정보시스템 도입시 규모산정방식 부적정

- ‘전자세금계산서 WAS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교체의 경우, 규모 산정시 ‘교체’에 대한 규모산정방식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이에 따라 시스템 교체시 ‘신규도입시의 규모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규모산정이 이루어지지 못함

⇒ 정보시스템 교체시 합리적인 규모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모 산정방법에 ‘교체’에 관한 사항 반영 **[개선]**

② 전자인증센터 정보시스템 관리 미흡

- 유사시 업무중단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현이 되어 있음에도 전자인증센터 정보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사례* 발생

* 2007년(3회 / 185분), 2008년(3회 / 223분)

⇒ 업무정지 발생으로 금융기관 및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 **[주의]**

③ 전산기기 도입시 기술평가위원 구성 개선 필요

- 전산기기 도입에 따른 기술평가지 외부전문가를 기술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외부전문가 참여사례는 미미

구 분	2007	2008	2009	2010.4
○ 전산기기 도입건수	22	88	81	26
■ 기술평가건수	4	16	16	7
■ 외부전문가 위촉 건수	-	1	-	1

⇒ 기술평가위원 구성시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방안 마련 **[권고]**

1. 처분요구 사항의 조치기한

가. 문책사항 : 해당사항 없음

나. 변상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개선(권고)통보 : 2개월 이내에 개선 또는 조치계획 마련

2. 조치결과 보고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상기 조치기한 이내에 조치한 후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금융위(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함

3. 이의신청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의견서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별첨 6>

정기 종합감사

2010.11.15~11.26

전국은행연합회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

2011. 1.

금 융 위 원 회

- 목 차 -

I. 감사실시 개요

II. 전국은행연합회 현황

III.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2. 분야별 감사결과

가. 신용정보집중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예산·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다. 임직원 복리에 관한 사항

라. 임직원 임용·복무에 관한 사항

마. 문서보안에 관한 사항

3. 분야별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4. 감사결과 처리요령

I. 감사실시 개요

☐ 법적근거

○ 민법 제37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감독(舊재정부는 '07년 3월 은행 연합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감독·검사등)

*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금감원에 위탁 → 2년 주기로 정기검사)

☐ 감사기간 : 2010. 11. 15(월) ~ 11. 26(금)(10일간)

☐ 감사대상 : 고유사업, 예산·회계, 임직원 복지, 조직·인력, 내부통제 등

☐ 감사요원 : 감사담당관 외 5명(서민금융팀 및 금감원 각 1명 포함)

☐ 감사중점

○ 고유사업* 운영의 적정성

* 금융기관간 업무협약, 신용정보 집중업무 등

○ 의사결정기구(총회 등) 구성·운영의 적정성

○ 예산편성·집행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 조직관리 및 인력운용의 적정성

○ 사내복지기금 및 복리후생 운영의 적정성

○ 청관등 제규정의 적정성 및 준수여부

II. 은행연합회 현황

1. 일반현황

□ 연 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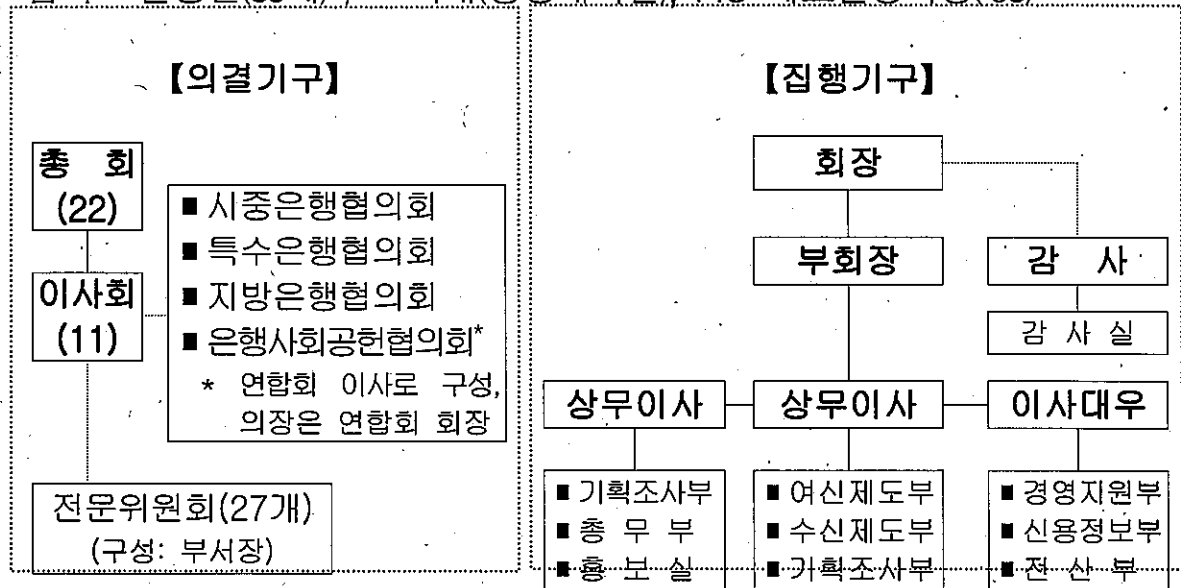
- '28.11. 1. 사단법인 경성은행집회소 설립
- '75. 4. 5. 사단법인 서울은행협회로 개편
- '84. 5. 9.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로 개편

□ 소재지 : 서울 중구 명동 3길 9(명동 1가 4-1)

□ 조직 및 인원 : 8부 2실, 130명(임원 6명)

* 회장 : 신동규(59세) / 서울대(경제), 한국수출입은행장('03 ~ '06)

감사 : 전병렬(55세) / 고려대(경영대학원), FIU 제도운영과장('08)



□ 주요업무

- 금융기관간 업무협약, 정보교환
- 금융 및 은행경영에 관한 조사연구
- 신용정보 관리 및 이에 대한 조사연구
- 금융기관 직원 등에 대한 연수 등

2. 예산 및 재산현황

□ 연도별 수입·지출내역

(고유목적사업)

(단위 : 억원)

구 분	2008	2009	2010. 6월말
수입(a)	237.9	226.9	178.7
·사원분담금	217.4	209.0	164.2
·전기잉여금	5.7	6.0	9.3
기 타	14.8	11.9	5.2
지출(b)	209.2	205.8	109.6
·인건비	101.9	96.5	51.7
·업무추진비, 회의비	9.4	7.1	3.9
·기타(전산비 등)	97.9	102.2	54.9
차이(c=a-b)	28.8	21.1	69.1

* '10년 예산 : 228.4억원(인건비 100.2억원)

(수익사업)

(단위 : 억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매출액	18.2	18.5	20.1	21.3
·영업이익	-4.4	-4.3	-3.2	0.8
·당기순이익	- 0.5	0.3	2.1	3.3

* 수익사업 매출의 대부분은 건물임대 매출임

□ 순재산 현황

(단위: 백만원, '09.12말 현재)

구 분	일반사업	신용정보사업	소 계
·출 자 금*	3	-	3
·가 입 금*	3,570	-	3,570
·기금(건물)	10,134	-	10,134
·적 립 금	2,943	8,549	11,492
·기 타	2,618	1,338	3,956
합 계	19,268	9,887	29,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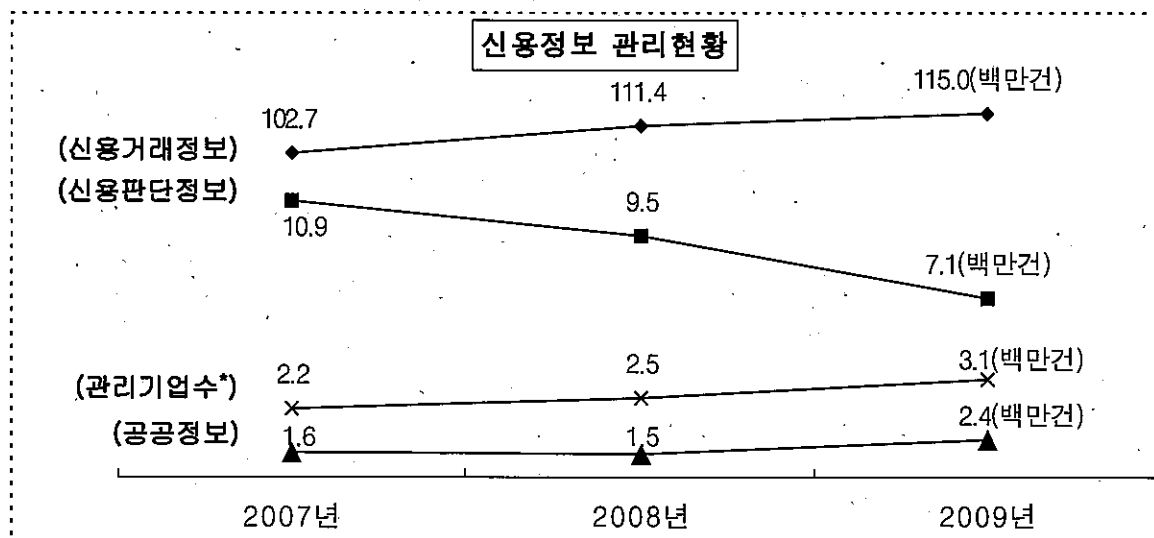
* 출자금은 설립초기 8개기관이, 가입금은 이후 31개 기관이 납입

III. 감사실시 결과

1 중 평

- 전국은행연합회는 금융기관 상호협조, 금융문제 조사연구 및 신용정보집중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 및 금융리스크에 대응하여 금융기관간 정보공유, 금융제도에 대한 대정부 건의 및 국내외 금융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와 함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써의 업무* 등 고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아니함

* '09년도말 현재 127.6 백만건의 신용정보 집중·관리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 수임

- 다만, 신용정보협의회 구성, 임직원 복리 및 자금관리 등의 부분에 있어 일부 주의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가. 신용정보집중업무 관련

① 신용정보협의회 구성·운영 부적정

- 경비분담율이 33%를 초과하는 신용조사회사의 경우 대표회사 1사만이 위원으로 구성되는 등 법령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신용정보법시행령 제22조제2항)종합신용정보지부중기관의 장은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규모, 경비분담비율, 업권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15인 이내에서 신용정보협의회를 구성

- 법령·규약 등에 근거가 없는 서면의결이 대부분*으로 경비분담 등 업권별 이해관계가 민감한 사안까지 서면의결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과정이 생략됨

* '07년부터 '10년까지 총 23건중 22건이 서면의결

⇒ 신용정보협의회 규약에 협의회 구성기준, 위원임기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협의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개선)

② 신용정보 제공시 대상자 성명과 주민번호 일치 여부 확인절차 미비

- 공공기관(세무서) 등의 조회요청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대상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에 확인 절차가 없어 대상자가 아닌 타인의 신용정보가 제공될 소지

⇒ 신용정보 제공시 대상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토록 업무개선 (개선)

③ 개인대출정보 집중·관리 개선 필요

- 개인대출정보를 집중·제공함에 있어 개인별 총잔액 및 주택담보대출 보유 여부만이 관리
 - 금융회사 등이 개인의 신용도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출금리, 담보여부 등 채무의 세부적인 조건을 감안할 필요

⇒ 금융회사 등이 개인의 신용도를 정확히 보다 판단할 수 있도록 개인대출정보 집중·제공 방식 개선 (개선)

나. 예산·회계 및 자금관리 관련

① 기본자산 관리·운용 관련 규정 미비

- 기본자산을 포함하여 연간 4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관리 하면서 매년 부회장 전결의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용 하고 있으나 별도의 관리·운용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아니함

<회계연도말 기준 예치금 현황(억원)>

구 분	'06말	'07말	'08말	'09말	'10(11.17 현재)
투자자금 (정기예금등)	362.5	362.5	386.0	374.0	399.0*
수시입출자금	37.1	39.1	35.1	31.6	37.2
합 계	399.6	401.6	421.1	405.6	436.2

⇒ 연합회 준립의 근간인 기본재산(출자금, 가입금, 적립금등)의 경우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방향 등을 규정화하여 안정적이고도 투명하게 관리·운용 (개선)

② 물품(비품·소모품) 구분 모호 및 관련 회계처리 부적정

- ‘고정자산 및 물품관리규정’ 및 ‘예산·회계규정’ 상의 물품·비품·소모품 구분이 서로 다르며, 이의 재무제표(B/S) 반영 기준 또한 이들 규정과 다르게 운용함

* ‘물품관리규정’ 제3조는 취득가액 20만원 미만을 소모품으로 분류하나, ‘예산·회계규정’은 100만원 미만을 ‘소모품비’로 규정

⇒ 물품(비품·소모품)에 대한 구분을 일관성 있게 명확히 규정하고 동 규정에 부합하게 회계처리 (개선)

다. 임직원 복지 관련

① 사내복지기금 출연 및 개인연금 지원 과다

- 2010년 10월 현재 기금잔액은, 83억원(1인당 평균 6,433만원) 수준으로 공공기관*에 비해 월등히 많음

* 기금 누적액이 1인당 평균 2,000만원 초과시 추가 출연 제한

- 이처럼 기금잔액이 상당함에도 '07~ '10.10말 기간중 매년 기금 출연액의 59.8 ~ 68.6% 정도가 적립되도록 과다 출연

- 또한 개인연금신탁 가입직원에 대하여 매월 통상임금의 15%를 지원하는 등 회원사에 비해 과도하게 개인연금 지원

* 10개 사원기관은 폐지, 지원중인 기관중 연합회보다 많은 경우는 2개사

⇒ 사원기관에 비하여 과도한 개인연금 지원 및 사내복지기금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선 (개선)

② 학자금 지원 및 의료보조비 지원기준 부적정

- 사망직원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순직 등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지원토록 하고 있고, 배우자가 직장에서 관련 지원을 받는 경우 이중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함

- 본인 및 부양가족에게 연 5백만원내에서 의료비를 보조하면서 직장 단체보험 수혜직원에 대한 중복지원 제한규정 없음

⇒ ○사망직원에 대한 학자금 지원시 순직 등 사망원인을 구분하여 엄격히 지원토록 하고, 학자금 및 의료비 지원시 중복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선 (개선)

라. 임직원 임용 및 복무

□ 이사대우제도운영규정 등 부적정

- 이사대우제도운영규정(제3조)은 이사대우 임면에 관한 사항만 규정할 뿐 결격자에 관한 규정은 없음
- 복무규정(제23조)은 '표창과 징계의 양정은 회장이 행한다.'고 규정할 뿐 표창 대상자 선정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음

⇒ 흠결이 치유되지 아니한 자가 이사대우로 임명되거나 표창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 개선 (주의 및 개선)

마. 문서보안

□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중요문서 보안관리규정 미흡

- 개인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신용정보 조회회답서'를 생산·관리하고 있으면서도 보안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않음

* '신용정보 조회회답서(책자)' 제작시 인쇄업무 감독확인서 징구 등 체계적인 외부유출 방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함

⇒ 보안이 필요한 문서의 경우 생산·관리·파기에 이르기까지 보안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수립·시행 (권고)

3 분야별 지적내역 및 조치계획

□ 분야별 지적내용

지적분야	지 적 내 용	조치수준
신용정보 집중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정보협의회 구성·운영 부적정 ■ 신용정보 제공시 대상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일치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미비 ■ 개인대출정보 집중방식 개선 필요 	(개선) (개선) (개선)
예산·회계 및 자금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재산 관리·운용 관련 규정 미비 ■ 물품(비품·소모품) 구분 및 관련 회계처리 부적정 ■ 예산불용 및 임의적립금 적립 과다 	(개선) (개선) (현지조치)
임직원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내복지기금 출연 및 개인연금 지원 과다 ■ 복지규정(학자금 지원 및 의료비보조) 부적정 ■ 근로자의 날 보로금 및 자기계발비 지급 관련 	(개선) (개선) (현지조치)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대우운영규정 등 부적정 ■ 중요문서 보안관리 관련 규정 미흡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과다 	(개선) (권고) (현지조치)

□ 조치계획

-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14조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하여 2개월 이내에 적의 조치토록 요구

1. 처분요구 사항의 조치기한

가. 문책사항 : 해당사항 없음

나. 변상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개선(권고)통보 : 2개월 이내에 개선 또는 조치계획 마련

2. 조치결과 보고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상기 조치기한 이내에 조치한 후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금융위(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함

3. 이의신청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의견서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별첨 7>

자체감사(정기)

12.16 ~ 12.22

2010년 금융위원회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2011. 1.

금 융 위 원 회
[감 사 담 당 관 실]

- 목 차 -

I. 감사개요

II.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2. 부문별 감사결과

가.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나. 출납업무 담당자 운용

다. 대통령 지시사항 등 주요사업 추진·관리

라. 법령 제·개정절차 이행수준

3.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4. 감사결과 처리요령

I. 감사실시 개요

〈목 적〉

◇ 예산집행·회계처리 및 국정과제, 대통령지시사항등 주요사업 이행·관리실태 등에 대한 정기점검

⇒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개선대안 마련 및 기관운영의 안정성·효율성 제고

* 「'10년 자체감사계획」('10.2.8 기보고)에 따른 감사임

1 실시개요

- ☐ 감사기간 : '10.12.16(목) ~ 12.22(수), 5일간
- ☐ 감사대상 : '08.7 ~ '10.11 기간중 예산집행실태 등
- ☐ 감사반원: 감사담당관실 5명(감사담당관, 5급 2, 주무관 2)
- ☐ 감사방법: 서면점검

* 수감부서의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서면위주로 실시

2 감사중점

- ☐ 예산집행·회계처리의 적정성
- ☐ 대통령 지시사항 등 주요사업 추진·관리의 적정성
- ☐ 법령 제·개정절차 이행의 적정성
- ☐ 외부감사(감사원) 지적사항 이행실태

Ⅱ.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 금번 감사는 '08년 자체감사('08.6.23~6.27) 이후 2년6월만에 실시
 - 예산집행 등 기관운영의 기본적 사항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조직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하는데 중점을 둠
- 감사결과 금융위 설립('08.2.28) 초기 업무시스템 정비 과정에서 나타났던 불안정성은 상당부분 안정화된 것으로 평가
 - 다만, 회계 관련 서류의 관리 등 예산집행의 세부적인 부분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보완할 부분도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분야별 주요 발견사항]

- ①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관서운영경비 출납부서)
 - ☞ 출납서류 편철·관리 및 지출증빙·집행방법 등 부적정
- ② 대통령 지시사항등 주요사업 추진·관리(행정인사과)
 - ☞ 정상적으로 추진·관리 → 특이사항 발견되지 아니함
 - * 대부분 과제가 완료되었거나 종료요청중이며, 일부 미완료과제도 정상 추진중
- ③ 법령 제·개정절차 이행 → 부패영향평가 의뢰 미흡(관련부서)
 - ☞ '09.7 ~ '10.6 기간중 21건의 제·개정(안)중 14건 기한도과 등
- ④ '09년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지적사항 이행(관련부서)
 - ☞ 관련 제도 개선등 적절히 조치

가.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① 출납서류 편철·관리 부실 및 지출증빙 처리 부적정

□ 출납 관련서류 편철·관리 부실

-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제31조 내지 제33조)에 따라 매월 출납업무 마감 후 출납계산서, 국고예금 월계대사표 및 비목별 지출증빙서류를 편철·관리하여야 함

<관서운영경비 출납서류 편철방법>

① 출납계산서(규칙 제7호 서식)	• 월단위로 편철
② 국고예금월계대사표(00년 00월분)	
③ 세목별 간지(본월지출액: 00원, 건수: 00건)	• 세목별로 구분
④ 지급결의서	
⑤ 내부결재(품의서)	• 5년간 보관
⑥ 기타 증빙자료(영수증, 계약서, 청구서 등)	

- 그러나 금융정책국 등은 예산집행 서류를 연간 목별로만 관리하는 등 계산증명규칙과 다르게 관리하여 출납계산서와 국고예금월계대사 및 지출증빙간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게 함

< 부서별 지적사항 >

부서명	지 적 내 용
■ 금융정책국	• '08.7~'10.11 기간중의 출납서류 관리 부실
■ 금융서비스국	• '08.7~'10.11 기간중의 출납서류 관리 부실
■ 자본시장국	• '10.1~'10.11 기간중의 출납서류 관리 부실
■ 대변인실	• '08.7~'10.11 기간중의 출납서류 관리 부실

□ 사전품의 없이 공공요금 등 관서운영경비 집행

- 「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24p)」은 예산 집행시
정당한 결재권자의 결재를 통하여 집행하도록 규정
 - 또한, 「금융위원회 위임전결규정」은 예산 집행시 **중요사항은 국장, 일반사항은 과장이 전결**토록 규정
-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 공공요금, 기타운영비 등을 집행하면서
사전 품의 없이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
 - * 예산집행시에는 집행건별로 집행사유, 집행대상, 소요예산 및 해당 예산과목
등에 대하여 결재권자의 결재(품의)를 득하여 집행하여야 함

□ 예산집행 품의서에 결재권자의 서명이 아닌 도장 날인

-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3조제8호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문서는
서명(행정전자서명 포함)에 의한 결재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 서명은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일부 부서에서 업무추진비등 품의서에 부서장 서명이 아닌
도장을 날인하여 증빙자료로 관리

□ 정부구매카드 사용시 부서명 서명 및 특근매식비 현금집행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24p 및 101p)」에 따라 정부구매
카드 사용시에는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하여야 하며,
 - 특근매식비의 집행은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야 함
- 그러나, 상당수 실·국에서 정부구매카드 사용시 부서명(○○팀 등)
으로 서명하였고, 대변인실은 특근매식비 집행시 현금으로 집행*
 - * '08.12.18(273,000원) 및 '08.12.23(25,000원)

② 관서운영경비 집행방법 부적정

□ 통역비 지급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미실시

- 소득세법시행령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 그러나 대변인실은 '09.9.29 김○○에게 통역료 80만원을 지급하면서 관련 세금(기타소득세)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 단, 지급금액의 80%(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기타소득)이 5만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소득세법 제21조제2항, 84조제3호, 시행령 제87조제1항)

- 강의료 25만원 지급시: 25만원의 80%(20만원)를 공제하면 기타소득은 5만원으로 기타소득세 비과세
- 강의료 30만원 지급시: 30만원이 80%(24만원)를 공제하면 기타소득은 6만원으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 09년도 발생 에디터 비용을 '10년도 예산으로 집행

- 국고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전년도 발생 채무확정액을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됨

* 예외) 공무원보수, 군인사망급여금, 군인전상급여금, 보험료, 이자 등

- 그러나, 금융정보분석원은 '09년 12월 발생한 영문에디터(2명) 비용 2,664,690원을 '10년도 예산(수용비)에서 지급

□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을 초과하여 관서운영경비 지급

-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32조제3항 및 제33조에 따라 출납공무원은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 내에서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여야 함

- 그러나 기획조정관실은 업무추진비를 지급함에 있어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자금을 초과하여 지급*

* '09.3, 6, 9월에 각각 1,580,000원, 393,000원, 6,160,000원씩을 초과 지급

⇒ 첫째, 예산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와 방법으로 집행할 것

- 반드시 정당한 결재권자의 서명에 의한 사전 결재로 집행
- 정부구매카드 영수증에는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
- 특근매식비는 정부구매카드로 집행
- 연도내 발생경비는 당해 연도 예산으로 집행(법령상 예외는 제외)
- 예산과목별 교부액을 준수하여 집행

둘째, 예산집행 서류는 계산증명규칙에 부합토록 편철·관리할 것

나.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 담당자 운용

□ 출납업무 담당자 운용 개선 필요

-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 담당부서 중 출납 관련 서류의 관리 등이 상대적으로 부실한 부서의 경우 대부분 공무원 경력이 없는 초임자(주무관) 1인이 출납업무를 담당
- 출납업무 뿐만 아니라 민원업무 등 다른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어 출납업무에 상대적으로 소홀

대변인실	금융정책국	금융서비스국	자본시장국
• 주무관 1(담당)	• 주무관 1(담당)	• 주무관 1(담당)	• 주무관 1(담당)

- 반면, 출납업무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부서의

경우 실무관이나 사무원이 출납업무 담당자를 보조

- 출납업무 담당자의 업무부담 완화 및 업무수행의 안정성·효율성을 제고

행정인사과	기획조정관실	금융정보분석원	공자위사무국
• 주무관 1(담당) • 주무관 1(보조)	• 주무관 1(담당) • 사무원 1(보조)	• 주무관 1(담당) • 주무관 1(보조)	• 주무관 1(담당) • 사무원 1(보조)

⇒ 출납업무 담당 1명만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서는 실무관 또는 사무원을 출납공무원 보조자로 지정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토록 지원할 것

*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에서 실시하는 예산·회계교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교육 등

다. 대통령 지시사항 등 주요사업 추진·관리

①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현황 : 특이사항 없음

□ '11.01 현재 총 38개 지시사항중 36개 완료, 2개 지시사항 추진중

< 미완료 대통령지시사항 추진현황 >

지시일	지시내용	이행단계	담당과	처리기한
09.09.03	구조조정 추진 관련	추진 중*	기재단	10.12.31
10.12.21	전국민 보안의식 강화	추진 중**	감사	11.12.31

* 추진계획 수정·보완하여 승인요청 중으로 승인시 처리기한 연장 예정

** 추진계획 수립 및 승인 완료

② 국정과제 추진현황 : 특이사항 없음

□ '11.01 현재 27개의 과제중 23개 완료, 4개 과제 추진중

< 미완료 국정과제 추진현황 >

세부실천과제	계 기	시 한	단 계
단기사채 제도 법적 근거 마련	인수위 국정과제	10.하	연장요청*
산업은행의 원활한 민영화 여건 마련	'09 8.15 경축사	12.하	추진 중
체계적인 금융교육실시	인수위 국정과제	12.하	추진 중
햇살론의 안정적 정착	'10 8.15 경축사	12하	추진 중

* '11년 상반기까지 기한연장을 요청 중에 있으며 1월중 연장승인 예정

⇒ '10.3.4 ~ 416 기간중 우리 위원회등 29개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된 감사원의 「주요사업 추진실태 감사」에서도 지적사항 없었음

다. 법령 제·개정시 필요절차 이행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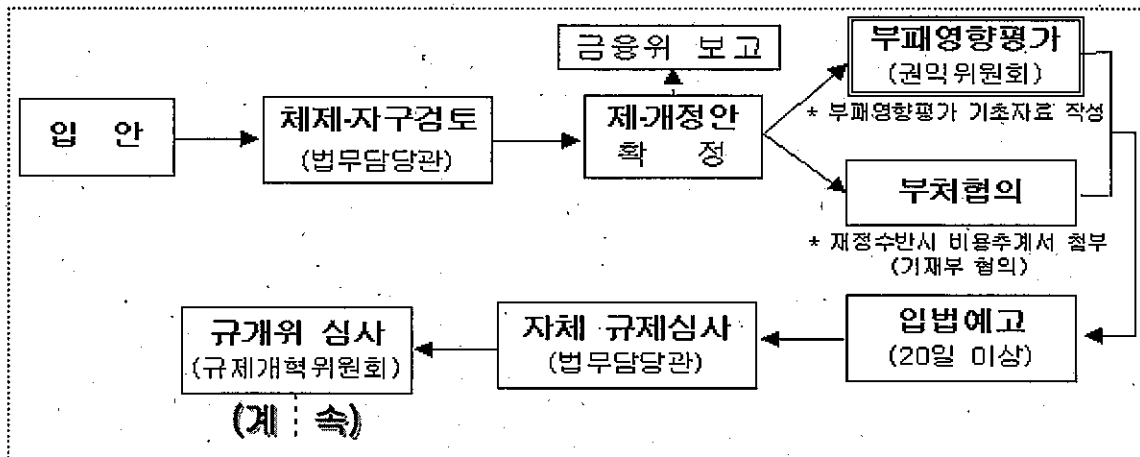
□ 현 황

- 법령 제·개정시에는 부패영향평가*, 부처협의,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준수 하여야 함 (표1 참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법령 입안시 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의뢰토록 규정(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30조)

-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09.10.1 ~ '10.9.30 기간중 총 21건의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안

< 부패영향평가 의뢰 : 부처협의와 병행 실시 >



□ 점검결과

- 법령 입안시 필요한 절차는 대체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으나, 부패영향평가 의뢰가 다소 미흡
- 총 21건 중 7건만이 기한내 부패영향평가를 의뢰, 12건은 입법예고 이후에 의뢰, 2건은 의뢰하지 않음 (표2 참조)

⇒ 향후 법령 제·개정시 반드시 부패영향평가 의뢰를 입법예고 전에 부처협의와 병행하여 실시토록 할 것

□ 지적사항 및 조치구분

지 적 사 항	조치구분
■ 출납서류 편철·관리 부실 및 지출증빙 처리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에 부합토록 집행 관련 서류 편철 → 1개월 이내 감사담당관실로 그 결과 회보 (금정국, 서비스국, 자본국, 대변인실) · 관서운영경비는 지급건별로 결재권자의 직접 서명에 의한 품의 (또는 전자결재)를 통하여 집행하고, 정부구매카드 사용시에는 카드 영수증에 반드시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할 것 (금정국, 서비스국, 자본국, 기획조정관실, 행정인사과, FIU, 공자위사무국) · 특근매식비를 현금으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대변인실) 	주 의
■ 관서운영경비 집행방법 부적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서운영경비 집행시 원천징수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 (대변인실) · 법령과 다르게 지난 연도 채무확정액을 현 연도 예산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할 것 (FIU) · 교부받은 과목별 자금한도를 초과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할 것 (기획조정관실) 	주 의
■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 보조인력 지정 등 개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관 또는 사무원을 출납업무 보조자로 지정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토록 지원하여 출납업무가 안정적·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개선 (금정국, 서비스국, 자본국, 대변인실) 	권 고
■ 민간전문가 파견·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전문가를 파견 받아 활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무원 임용령(제41조의2) 및 공무원임용규칙(제42조)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할 것 (전부서) · 민간전문가 파견·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행정인사과) 	현지조치

※ 위 지적사항과는 별도로 모든 부서는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시 반드시 부패영향평가 의뢰(국민권익위원회)를 부처협의와 병행하여 실시하시기 바람

□ 향후 조치계획

- 감사결과 각부서 및 감사원에 통보
-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교육 (1월중)

4 감사결과 처리요령

1. 처분요구 사항의 조치기한

- 가. 문책사항은 1월 이내
- 나. 변상사항은 3월 이내
- 다. 개선·개선통보·시정·권고사항은 2월 이내

2. 조치결과 보고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상기 조치기한 이내에 자체 조치한 후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함

3. 이의신청

소관부서는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의견서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별첨 8>

정기 종합감사
2011.8.25~9.7

신용회복위원회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

2011. 11.

금 융 위 원 회

- 목 차 -

I. 감사실시 개요

II. 신용회복위원회 현황

III.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2. 분야별 감사결과

가. 고유사업 운영 관련

나.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관련

다. 계약사무에 관한 사항

3. 분야별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4. 감사결과 처리요령

I. 감사실시 개요

— < 목 적 > —

- ◇ 우리 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인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기관운영 및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제고

□ 법적근거

- 민법 제37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감독

* 신용회복위 설립('03.11) 이후 외부감사는 금번 감사가 최초임

□ 감사기간(10일간) : 2011. 8. 25(목) ~ 9. 7(수)

□ 감사대상 : 고유사업, 의결기구, 예산·회계, 조직·인력, 임직원 복리, 내부통제 등

□ 감사요원 : 감사담당관 외 5명(서민금융팀 1명, 외부전문가* 1명 포함)

* 회계법인 소속 회계감사 전문 회계사

* 소요예산 : 약 150만원(1명 * 30만원 * 5일)

□ 감사중점

- 수행사업의 설립목적 부합성

- 채무조정, 소액금융, 교육·상담 등 업무 처리실태

- 예산집행, 회계처리, 계약사무의 적정성

- 인력·조직관리 및 임직원 보수복리후생의 적정성 등

II. 신용회복위원회 현황

1.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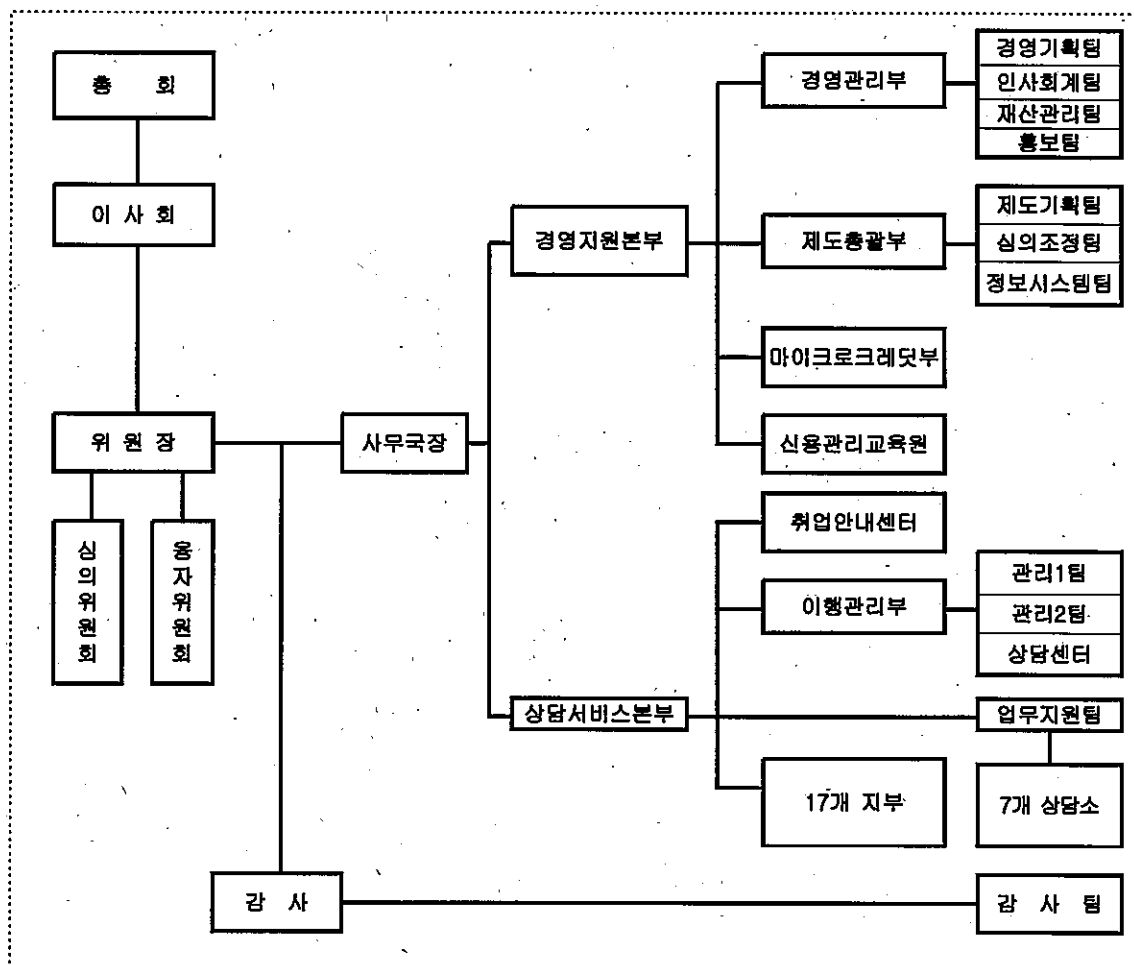
□ 연 혁

- '02.10.1. '금융기관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출범
- '03.11.1 비영리사단법인 인가

□ 소재지 : 서울 중구 명동 1가(명동센트럴빌딩 6층)

□ 조직 및 인원 : 2본부 4부 1원 1센타 17지부 2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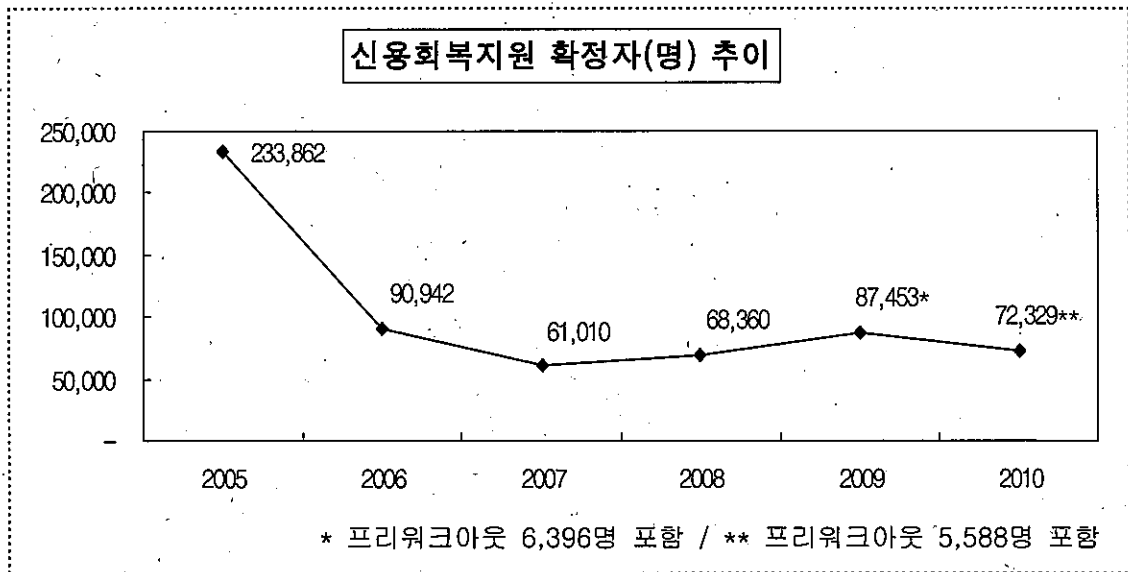
- * 위원장(상근): 이종휘(49년생) / 서울대(경영), 우리은행장, 서울장학재단 이사
- 감사(비상근): 황유노(58년생) / 홍익대(경영), 현대캐피탈 경지원본부장(現)



2.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 신용회복상담 : 총 387,648건 (1일 평균 1,538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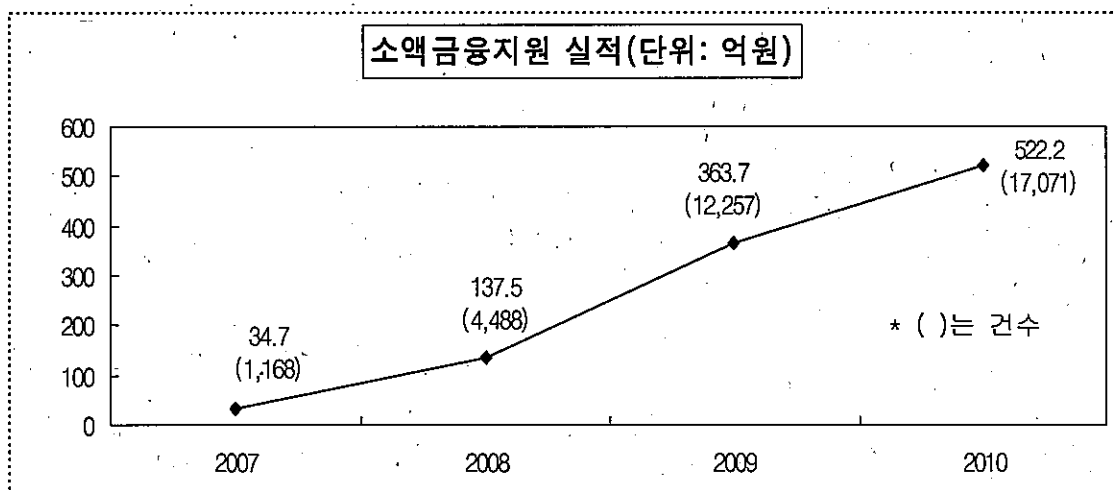
□ 개인채무조정 : 총 84,590명 신청 → 72,329명 확정



□ 신용관리교육 : 총 416,109명('09년 대비 11.7% 증가)

□ 취업안내 : 총 3,169명 취업 확정('09년 대비 56.3% 증가)

□ 소액금융지원 : 총 17,071건, 522.2억원 대출



* 대출잔액 기준 연체율: 3.4%(17.9억원 / 이자연체 15.8억원, 원금연체 2.1억원)

* 2006.11.13. 소액금융지원 업무 개시

3. 2010년도 수입·지출 및 재무상태

□ 수입·지출내역

(고유목적사업)

수 입 : 347억원		지 출 : 347억원	
▪ 전기잉여전입 :	55.6	▪ 인 건 비 :	124.8
▪ 회원분담금 :	203.6	▪ 경비·전산업무비 :	149.3
▪ 신용회복지원신청금 :	54.0	▪ 자 산 취 득 비 :	8.7
▪ 기 타 :	11.4	▪ 당 기 잉 여 :	64.5

(소액금융)

수 입 : 24억원		지 출 : 24억원	
▪ 예 금 이 자 :	7.2	▪ 인 건 비 :	5.7
		▪ 경 비 :	2.4
		▪ 보 험 료 :	10.4
		▪ 대 손 상 각 :	2.7
▪ 대출자산이자 :	16.8	▪ 고유사업준비금 :	5.2
		▪ 당 기 순 손 실 :	2.4

□ 재무상태

자 산 : 1,034억원		부채·자본 : 1,034억원	
▪ 현금 및 예금 :	460.1	▪ 부 채 총 계 :	707.4
▪ 대 출 채 권 :	499.5	- 장기차입금	565.2
- 생활안정자금대출	444.7	- 변제금수납예수금	136.3
- 학 자 금 대 출	17.1	- 대출변제예수금	0.7
- 시설개선자금대출	5.5	- 예 수 금	1.2
- 운영자금대출	19.8	- 미 지 급 금	0.6
- 고금리차환대출	16.5	- 미지급비용	3.4
- 대 환 대 출	0.9	▪ 자 본 총 계 :	326.8
▪ 유 형 자 산 :	17.5	- 자 본 금	0
▪ 기 타 자 산 :	57.1	- 자본잉여(고정자산조정금)	55.9
		- 미처분이익잉여금	270.9

III.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관리 및 신용회복에 관한 상담, 과중채무자의 채무조정,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소액금융 지원, 신용관리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위원회 출범('02.10) 이후 '11년 6월 현재까지 총 1,003,961 명으로부터 채무조정신청(프리워크아웃 포함)을 접수하여 이 중 914,745명(91.1%)에 대하여 신용회복지원을 확정하고,

(단위 : 명,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분기	'11년 2분기	누계
신청	629,931	63,706	79,144	101,714	61,882	22,706	22,170	1,003,961
확정	587,174	61,010	68,360	87,453	72,329	17,744	20,675	914,745

○'06년 11월 소액금융업무를 시작한 이래 '11년 6월말까지 총 43,393명에게 1,306.9억원의 소액금융을 지원하는 등 정관상 설립목적에 따른 고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아니함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분기	'11년 2분기	누계
신청인원	38	1,507	5,131	12,867	17,773	4,729	4,053	46,098
대출인원	17	1,168	4,488	12,257	17,071	4,425	3,967	43,393
실행금액	54	3,468	13,751	36,367	52,214	13,023	11,815	130,693

□ 다만,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운영, 채무조정신청비, 예산집행 관행 및 계약 관련 제도 등의 부분에 있어 일부 주의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가. 고유사업 운영 관련

① 심의·융자위원회 운영 등 개선 필요

- '02년 설치된 심의위원회의 경우 심사역의 숙련도 및 심사시스템 개선으로 심의비율('09이후 6~7%) 및 부결율('09이후 0.08%)은 지속 감소. 반면, 위원수('09이후 14명) 및 운영비용('10년 3.3억원)은 오히려 증가
- 융자위원회의 경우 소액대출신청이 급증하였으나 전체 대출건의 50%를 심의하고 있어 심의량이 크게 증가(회의당 평균 150건 이상)한 반면, '09년 이후 부결된 안건은 全無

⇒ 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융자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시행 (개선)

② 채무조정신청비 적정성 검토 필요

- 신규조정 및 재조정시 각각 5만원씩 신청비 납부. 제도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실직·병원비등 추가적 경제곤란으로 재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5만원을 추가 납부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

⇒ 채무재조정의 사유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채무재조정 신청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시행 (개선)

나. 예산집행·회계처리 관련

□ 예산집행 부적정

○ 교육훈련비, 조사연구비 등 집행 부적정

- 교육훈련비는 '직원교육 및 제반경비'에, 조사연구비는 '신용회복 제도 조사연구'에 집행되어야 하나, 일부 임원 교육비 지원에 사용
- 또한 소속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무국장에게 파견수당 이외에 차량운행보조금, 지급근거 없는 상여금 등 지원

○ 복리후생비 집행 부적정

- 직원의 후생복리와 무관한 위원장, 사무국장, 심의옹자위원 퇴임시 기념품등 제작비용을 복리후생비에서 지급

○ 예비비 사용 부적정

- 2010년도 「신복위 명칭 변경 컨설팅」 비용(2,800만원)을 지급함에 있어 용역비 예산에 충분한 여유가 있었음에도 예비비 사용

⇒ 교육훈련비, 조사연구비, 복리후생비 등의 집행은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토록 엄격히 집행하고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의 발생으로 예산내에서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토록 하며 (주의)

⇒ 주요 목별 예산집행에 대한 세부 기준(예산집행지침)을 마련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 (개선)

다. 계약 및 정보시스템 관련

① 경쟁입찰 불성립에도 재입찰 절차 없이 낙찰자 결정

- 입찰조건 불비 및 입찰설명회 불참 등으로 단 1개社만이 요건을 갖추는 등 실질적인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나 재입찰 절차 없이 당해 1개社를 낙찰업체로 선정

⇒ 계약규정 제15조(재입찰) 위반 (주의)

② 수의계약, 제한경쟁입찰 등에 관한 규정 개선 필요

- 계약규정상 제한경쟁에 대한 근거규정 없이 제한경쟁입찰 실행, 수의계약 사유 포괄적 규정, 입찰공고기한 추상적 규정 등

⇒ 제한경쟁의 근거 마련, 수의계약사유 명확화 등 계약규정을 보완·개선할 필요 (개선)

3 분야별 지적내역 및 조치계획

□ 분야별 지적내용

지적분야	지 적 내 용	조치수준
고유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융자위원회 운영 개선 필요 ■ 채무조정신청금 개선 필요 	(개선) (개선)
예산·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집행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훈련비·조사연구비 등 집행 부적정 · 복리후생비 집행부적정 · 예비비 사용 부적정 ■ 차량유류비 집행방법 개선 필요 	(주의/개선) (현지조치)
계 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입찰 불성립에도 낙찰자 결정 부적정 ■ 계약관련 규정 개선 필요 ■ 고정자산·물품실사 미 실시 	(주의) (개선) (현지조치)

□ 조치계획

-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14조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에 통보 하여 2개월 이내에 적의 조치토록 요구

1. 처분요구 사항의 조치기한

가. 문책사항 : 해당사항 없음

나. 변상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개선(권고)통보 : 2개월 이내에 개선 또는 조치계획 마련

2. 조치결과 보고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상기 조치기한 이내에 조치한 후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금융위(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함

3. 이의신청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의견서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별첨 9>

정기 종합감사

2011.11.21~11.29

한국공인회계사회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

2012. 1.



금융위원회

- 목 차 -

I. 감사실시 개요

II. 한국공인회계사회 현황

III.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2. 분야별 감사결과

가. 고유사업 운영 관련

나. 인사위원회 운영 관련

다.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관련

3. 분야별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4. 감사결과 처리요령

I. 감사실시 개요

〈 목 적 〉

◇ 우리 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기관운영 및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제고

□ 법적근거

○ 공인회계사법 제47조(감독)

- * 공인회계사회는 금융위원회가 감독
- * '01, '04, '07년 각각舊재정경제부로부터 감사를 받음

□ 감사기간(7일간) : 2011. 11. 21(월) ~ 11. 29(화)

□ 감사대상 : 고유사업, 조직·인력, 임직원 복리, 예산·회계, 내부통제 등

□ 감사요원 : 감사담당관 외 4명(공정시장과 1명, 외부전문가* 1명 포함)

- * 회계사(회계기준원 소속)

□ 감사중점

○ 수행사업의 설립목적 부합성

- * 회원의 지도감독, 회계감사 등 직무기준 제정, 윤리기준의 제개정 및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 회원에 대한 교육방침 수립 및 이행 점검 등

○ 예산집행, 회계처리, 계약사무의 적정성

○ 인력·조직관리 및 임직원 보수복리후생의 적정성 등

II. 한국공인회계사회 현황

1. 일반현황

□ 연 혁

- '45.10. 조선계리사회 설립
- '54.12. 계리사법에 의한 한국계리사회 설립
- '66. 9. 한국공인회계사로 재발족

□ 소재지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85-10

□ 조직 및 인원 : 6팀2실1위원회, 80명(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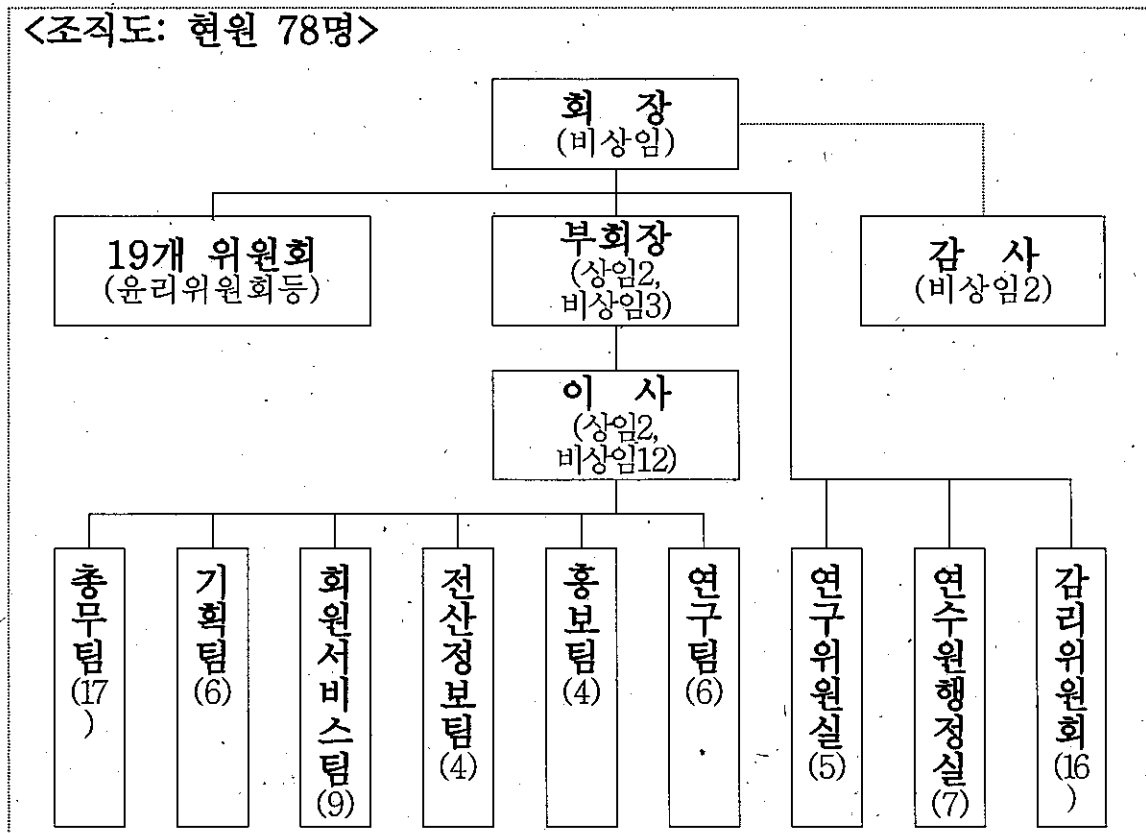
* 부설 국가회계기준센터(19명) 제외(기재부 위탁사업 수행)

* 회장: 권오형(47년생) / 경희대(경영), 국세청 국세행정위원회 위원(現), 세발심위원(現)

감사: 최종만(57년생) / 연세대(경영), 신한회계법인 대표이사(現)

감사: 최문원(58년생) / 성균관대(경제학), 한국공인회계사회 이사

<조직도: 현원 78명>



2. 2010FY 주요업무 추진실적

□ 제도개선

- 금융위의 '회계감독제도 선진화' 관련 개선방안 마련·추진
- '온실가스검증기관' 지정요건에 회계법인 포함
- 금융거래조회 및 회신절차 간편화 방안 추진 등

□ 업무영역 개선

- 외부감사대상기준에 '매출액' 신설 추진
- 비외감 중소기업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인증업무 확대 추진
- 새마을금고 의무외부감사제 도입 추진 등

□ 회원권의 보호

- 감사인 위협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규정 신설 추진 등

□ 공적기능 수행 등

- 기획재정부 위탁 '국가회계기준센터' 설치
- IFRS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 국민권익위원회와 '회계투명성 제고사업' 공동 추진(MOU 체결)

□ 회계감사품질관리 감리

- 「외감법」에 따른 감사보고서 및 품질관리 위탁감리 실시
- 「감리결과 직무연수의무자에 대한 직무연수 실시 등

※ 등록회원 현황('11.3.31 현재, 명)

개업회원			휴업회원	합 계
감사인소속	개업일반	소 계		
9,135	373	9,508	4,562	14,070

* 수습공인회계사 : 1,350명(회계법인 1,055명, 금감원 19명 등)

3. 2010FY 수입·지출 및 재무상태

□ 수입·지출('10.4.1 ~ '11.3.31)

구 분(억원)		고유사업	수익사업	기금운용	합 계
수 입 (A)	회원수입*	109.9	-	76.5	186.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	8.3	-	18.6	26.9
	연수수입	-	11.1	-	11.1
	간행물 판매	-	15.2	-	15.2
	수입이자	-	17.5	16.2	33.7
	기 타	1.1	20.8	2.4	24.3
	수입총계	119.3	64.6	113.7	297.6
지 출 (B)	사업비	42.4	28.0	86.6	156.9
	· 연구비(개발비)	17.8	0.3	-	18.1
	· 회의비	6.5	0.3	-	6.8
	· 자료발간비	4.5	13.8	-	18.2
	· 국가회계결산지원비	-	5.9	-	5.9
	· 손해배상공동기금반환금	-	-	58.7	58.7
	· 기 타	13.6	7.7	27.9	49.2
	일반관리비	64.0	36.5	2.7	103.2
	· 급여	39.0	12.0	-	51.0
	· 유지관리비	7.2	2.0	-	9.2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	-	17.7	-	17.7
	· 기 타	17.8	4.8	(세금공과)2.7	25.3
	지출총계	106.4	64.5	89.3	260.1
	잉여(A-B)	12.9	0.1	24.5	37.5

□ 재무상태('11.3.31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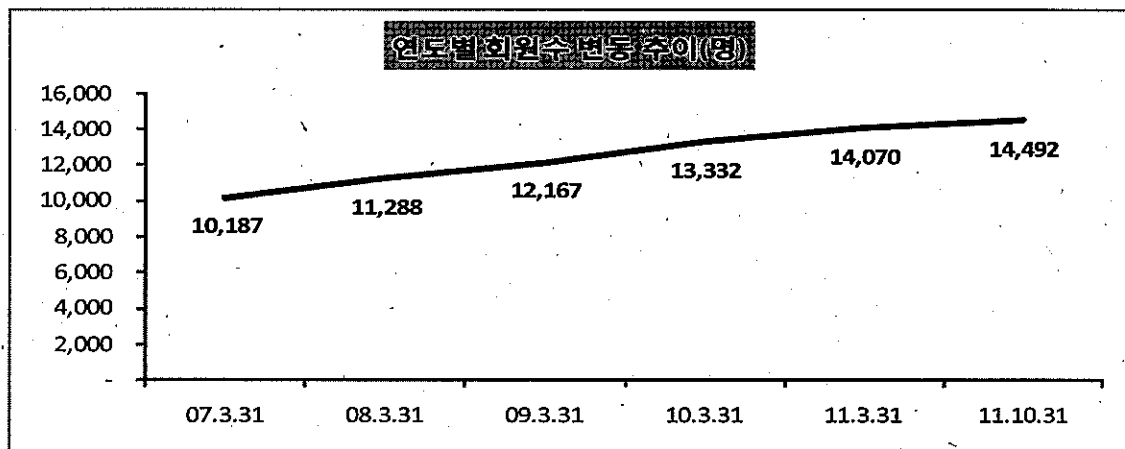
<p>♦ 자 산 : 1,035억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사업 : 124억원 · 수익사업 : 38억원 · 기금사업 : 874억원* <p>* 회관(154), 공제회부조(23), 공제회 복지(333), 손해배상공동(364)</p>	<p>♦ 부 채 : 41억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사업 : 7억원 · 수익사업 : 33억원 · 기금사업 : 1억원 <p>♦ 자 본 : 994억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금 : 851억원 · 수지차액 : 143억원
---	--

III.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의 사명의식·품위·자질향상, 직무의 질적 개선·확충, 회원의 지도·감독, 회원복지 및 상호간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 지속적인 회원 증가로 '11.10.31 현재 14,492명의 회원을 보유



- 제도개선, 업무영역 개선, 공적기능 수행 및 회원권익 보호 등 정관상 설립목적에 따른 고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아니함

* 「외감법」에 의한 위탁감리, 직무연수의무자에 대한 연수 실시, 기재부 위탁 '국가회계기준센터' 설치·운영, IFRS 순회설명회 등 공적기능 및 감사인 위협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규정 신설 추진 등 회원권익 보호업무 등 고유업무를 원활히 수행

- 다만, 윤리기준위원회 등 위원의 위촉,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감독평가, 인사위원회 운영, 예산집행 관행 등에 있어 일부 주의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가. 고유사업 운영 관련

① 연수프로그램 감독·평가 미흡

- 「연수규정시행세칙」 제4조제5항은 직원을 파견하여 교육 위원회에 등록된 연수프로그램의 실시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10년 이후 현장 실사 미실시
- 「연수규정」 제12조에 따라 프로그램 제공자는 연수 종료 후 강사와 수강자에게 평가를 받아 이를 교육위에 제출, 교육위는 프로그램의 연수목적 적합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나 미실시

⇒ 연수프로그램의 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프로그램 실시에 대한 현장 실사 및 프로그램 종료 후 정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 (주의)

② 윤리기준위 및 세무조정감리위 등 부적격자 위촉사례 발생

- '07년 연수시간 미이수로 인해 윤리위에 회부되어 회원권리 정지중인 자를 윤리기준위 위원으로 위촉
- 세무조정감리위는 '08년 위촉위원 중 회원권리가 정지된 자를 위원으로 계속 존치하였으며, '10년에는 증선위에서 감사 업무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계속 위원으로 활동

* 위원회의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제7조에 의한 회원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위원회 위원 위촉시 또는 위촉후 대상자의 징계이력 등을 철저히 점검하지 아니한 관련자 인사자료 통보 (통보 : 인사자료)

③ 윤조위의 징계요구 의결건 윤리위 회부 지연 (요구기한 없음)

- 윤조위에서 윤리위 징계요구 의결사항을 회장에게 보고하면 회장은 이를 윤리위에 회부하여야 하나 회부기한 규정 없음

* (사례) 장시간(101시간 이상) 연수미이수자에 대해 윤리위 징계요구를 하였음에도 최장 약 10개월 경과 후 윤리위에 회부

- 단기간 미이수자가 윤조위 의결로 바로 1년 이하 등의 회원권리 정지 처분을 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형평성에 맞지 아니함

⇒ 회장의 윤리위 징계의결 요구기한을 정함으로써 윤조위 조치로 종결되는 조치대상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 (개선)

④ 기업진단감리업무 수행 관련

- 「기업진단 감리업무규정」에는 상근감리위원의 자격, 임기만을 규정하고 이해관계에 따른 업무제한 규정이 없으며, 담당인원 또한 상근감리위원 1명으로, 유사시(업무제한 등) 대체인력 없음

⇒ 이해관계에 따른 업무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유사시에도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개선)

나. 인사위원회 운영 관련

□ 참석 인사위원 서명 미필 및 심의자료 미비

- '10 ~ '11년도중 개최된 3번*의 인사위원회시 승진서열명부 등 심의자료가 없고, 인사위원 서명없이 회장의 '확인서명'만으로 의결

* '10년도 제5차 인사위원회('10.11.29, 승진 5명), '11년도 인사위원회('11.7.4, 특별승진 1명), '11년도 제2차 인사위원회('11.10.19, 승진 2명)

⇒ 증진심사에 필요한 심의자료(서열명부 등) 구비 및 참석인사위원 전원의 서명에 의한 심의의결로 인사의 공정성을 기할 필요 (주의)

다.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관련

① 예산집행시 사전품의 미비 및 집행증빙 부적정

○ (업무추진비) '08 ~ '10 회계연도에 연간 1.5억여원씩 현금으로 집행하면서도 품의서 및 사용영수증 등을 남기지 않음

* '04년 및 '07년 舊재정경제부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개선되지 않음

○ (회의비) 비상근 임원들에게 회의 참석시 회당 15만원씩의 거마비(회의수당)를 지급하였으나 회의일시·장소·내용 등이 반영된 품의 없음

* '08~'10년간 지출현황: 매년 최저 69,810천원 ~ 최고 81,110천원 집행

○ (접대비) 연간 8,500여만원(680여건)을 집행하면서 사용목적·집행대상 등이 반영된 사전품의 없이 집행하고 사용영수증만 첨부

○ (업무연구개발비) 업무연구개발비('10예산 6.7억원) 예산중 '제도개선 업무개발비·신규업무개발비('10예산 3.5억원)'의 대부분을 접대성 경비로 집행하면서 사용목적·대상 등이 반영된 품의서 없이 집행

⇒ 예산집행은 매킨카드·계좌이체 등 외부증빙이 가능한 방법으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산 집행시에는 목적·대상·일시·장소 등에 대한 결재권자의 품의에 의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의), 예산집행 증빙의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관련자(회계담당자 및 책임자) 인사자료 통보 (통보: 인사자료)

② 업무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

- '08~'10 회계연도 기간중 업무연구개발비로 매년 5~6.7억원을 집행하여 왔으며, '10년 예산은 8.3억원으로 그 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

* 동 예산은 '법령등 제도개선 업무개발비', '신규업무개발비', '국제관련 업무연구개발비', '유관기관 파견자 인건비', '간담회 및 홍보비'로 구성되며, 이 중 제도개선 및 신규업무개발비는 매년 3~3.5억원을 차지

- 한편, 제도개선 및 신규업무개발비 집행내역을 보면 선물·상품권 구입, 골프장 이용, 간담회경비 등 대부분이 접대성(접외성)으로 집행

⇒ 업무연구개발비는 그 명목에 맞게 업무연구개발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에 한하여 지출토록 하고 접대성(접외성) 경비는 접대비 예산에서 지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 (주의)

③ 비상임 임원에 대한 차량유류비 지원 과다

- 비상임 임원(회장, 부회장3, 감사2, 이사12)에게 회의참석시마다 15만원의 회의참석수당(거마비)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별도로 매월 정액(회장 100, 부회장·감사 60, 이사 55만원)의 유류비를 지급

* 총 지급액은 연간 1.3억여원으로 전체 여비교통비 집행액의 90%이상을 차지

⇒ 회의참석시마다 회의수당(거마비)을 지급받는 비상근 임원에게 별도의 차량유류비를 월정액으로 지원하는 것은 중복 지원의 소지가 있고 그 내용 또한 과다함으로 합리적으로 개선 필요 (개선)

3 분야별 지적내역 및 조치계획

□ 분야별 지적내용

지적분야	지적내용	조치수준
고유사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프로그램 감독·평가 미흡 ■ 윤리기준위 및 세무조정감리위 등 부적격자 위촉사례 ■ 윤조위의 징계요구 의결건 윤리위 회부 지연 ■ 기업진단감리업무 이해관계에 따른 업무제한 미비 등 ■ 지회에 대한 지도·감독 미흡 	<p>주의 통보(인사자료) (○○○ 외 4명)</p> <p>개선 개선 현지조치</p>
인사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위원회 참석위원 서명 미필 및 심의자료 미비 	주의
예산집행 / 회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집행시 사전품의 미비 및 집행증빙 부적정 ■ 업무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 ■ 비상임 임원에 대한 차량유류비 지원 과다 	<p>주의 / 통보(인사자료) (○○○ 외 3명)</p> <p>주의 개선</p>
계 약 /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입찰 공고방법 부적정 및 재입찰 대상 수의계약 	현지조치

□ 조치계획

-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14조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통보하여 2개월 이내에 적의 조치토록 요구

1. 처분요구 사항의 조치기한

가. 문책사항 : 해당사항 없음

나. 변상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개선, 통보(인사자료) : 2개월 이내에 조치 또는 조치계획 마련

2. 조치결과 보고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상기 조치기한 이내에 조치한 후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금융위(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함

3. 이의신청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의견서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별첨 10>

종합감사	특별점검
'11.10.20~10.28	'11.12.05~12.16

미소금융중앙재단 감사 결과 보고서

2012. 1.



금융위원회

I. 감사실시 개요

〈 목 적 〉

- ◇ 우리 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인 미소금융중앙재단에 대한 종합 감사 및 특별점검을 통해 기관운영 및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제고

□ 법적근거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금융위원회는 재단을 지도·감독한다.

* 재단 설립('08.4) 이후 외부감사는 금번 감사가 최초임

□ 감사기간

- 정기감사 : 2011. 10. 20(목) ~ 10. 28(금), 7일

- 특별점검 : 2011. 12. 05(월) ~ 12. 16(금), 2주

□ 감사대상

- 정기감사 : 고유사업 수행 및 기관운영 전반

- 특별점검 : 복지사업자 선정 및 관리·감독

□ 감사요원

- 정기감사 : 감사담당관 외 5명(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1명 포함)

- 특별점검 : 감사담당관 외 6명(금융감독원 조사역 3명 포함)

□ 감사중점

- 수행사업의 설립목적 부합성

* 휴면예금 관리·운용, 원권리자 지급, 복지사업자 지원·감독 등

- 예산집행·회계처리, 자금관리, 계약사무의 적정성

- 인력·조직운영 및 임직원 보수복지후생의 적정성 등

II. 미소금융중앙재단 현황

1.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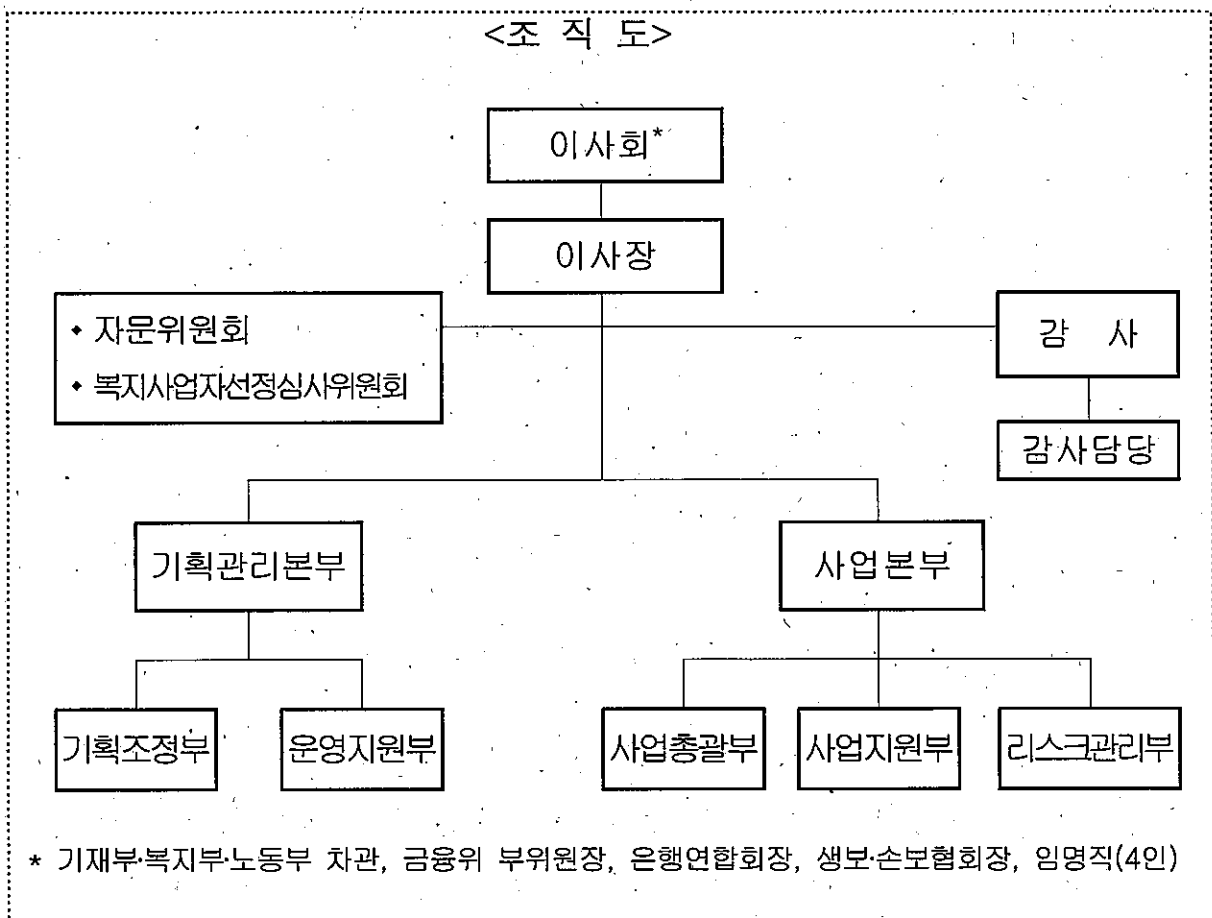
□ 연 혁

- '07. 8.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
- '08. 4.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등기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청진동 136번지(삼공빌딩 7층)

□ 조직 및 인원 : 2본부 5부 1담당 34명(정원)

- * 이사장(비상근): 김승유(43년생) / 고려대(경영),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現)
- 감사(비상근): 황덕남(57년생) / 서울대(법학),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現)
- 본부장(상근): 장훈기(49년생) / 성균관대(행정학), 재정경제부 출자관리과장



2.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 재원확보 : 총 4,253억원(누계 1조44억원)

휴먼예금(억원)			기부금(억원)			합 계
은행권	보험권	소계	지정 (기업은행)	일반	소계	
659	417	1,076	1,490	1,687	3,177	4,253

* 휴먼예금·보험금 원권리자 지급액 : 206억원(71,370건)

* 자금운용 수익 : 211억원 발생

□ 미소금융 : 총 795.6억원(7,770명)

미소금융 (억원)	기업재단	은행재단	지역지점	합 계
	465.9	259.1	70.6	795.6

* 2011년 상반기 : 1,252억원(8,639건) / 누적 : 3,252억원(44,543건)

* 31일 이상 연체율('11.6월 현재) : 2.5%(기업은행 2.3%, 지역 6.1%)

□ 복지사업자 지원 : 총 352억원(7,426명)

(단위 : 억원)

창업지원	사회적기업지원	신용회복지원	전통시장상인대출
38.6	50.5	130	133.5

* 2011년 상반기까지 누적 지원액 : 1,205억원(28,134건)

□ 소액보험사업 : 49억원(10,264명)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08년부터 3년간 114억원 지원

□ 미소금융사업 인프라 구축 등

○ 전국 네트워크 구축(106개 지점: 수도권 48, 지방 58),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중복수혜 방지등), 지원활성화(신용평가시스템 및 신규상품 개발), 홍보활동 강화('찾아가는 미소금융' 서비스 개시등)

3. 2010년도 운영성과 및 재무상태

□ 운영성과(2010년 결산)

수 익	비 용	성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익: 213.0 · 이자수익: 211.0 · 보험사업비환입: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용: 69.9 · 소액보험: 49.5 · 지정기부금: 9.0 · 일반기부금: 11.4 ♦ 운영비용: 58.1 · 인건비: 13.5 · 대손상각비: 9.6 · 감가상각비: 6.3 · 전산업무비: 5.6 · 홍보비: 5.6 · 지급임차료: 3.6 · 용역수수료: 2.5 · 복리후생비: 1.4 · 기타: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총이익: 143.2 ♦ 당기순이익: 85.0

※ '11년도 운영비 예산: 82.4억원(인건비 15.9, 일반관리비 59.7, 예비비 6.8)

* 교육센터 운영비 신규편성(7.9억), 감가-대손상각비 증가(4.2억원) 등으로 '10년도 집행실적(58.1억) 대비 41.8% 증가

□ 재무상태(2010년말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 산 : 7,847억원 · 유 동 자 산 : 7,120억원 · 대 출 채 권 : 715억원 · 기타(비품등): 12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 채 : 5억원 · 퇴직급여충당금 : 1.8억원 · 미 지 급 금 : 3.2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 본 : 7,842억원 · 자 본 금 : 7,666억원 · 이익잉여금 : 176억원

III. 감사실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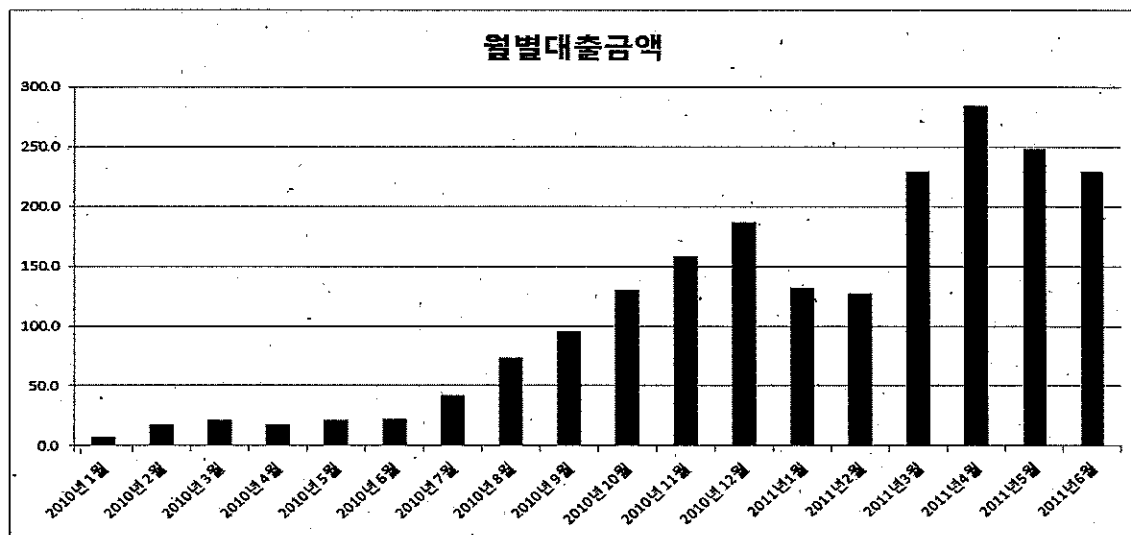
1 총 평

□ 미소금융중앙재단은 휴면예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운용 등을 통해 예금자 보호, 서민생활의 안정 및 복지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 2010년도에 4,253억원*의 재원을 확보하는 등 ‘10년말 누계기준 총 1조44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원권리자 보호, 미소금융 사업 등 설립목적상 고유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

* 휴면예금 1,076억원, 기부금 3,177억원

□ 미소금융 사업의 경우 2010년 796억원(7,770건)에 이어 2010년 상반기에는 1,252억원(8,639건)의 지원하는 등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



□ 다만, 복지사업자 선정 및 관리감독 등의 부분에 있어 일부 주의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2

감사결과

□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 부적정 및 사전현장실사 개선 필요

- 평가지표가 공신력(30%), 재정능력(25%), 사업수행능력(45%) 등 정성적 지표 위주, 평가자의 주관이 과도하게 개입될 소지
- 사전 현장실사의 경우 관련 명시적 규정이 없고, 실사내용 또한 신청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부족

⇒ 평가자의 주관 개입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 개선 및 현장실사의 내실화 방안 마련 필요 (개선)

□ 기존복지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필요

- '08년 이후 매년 1회씩 정기 방문감독을 실시하였으나 체계적인 감독계획의 수립 등이 미흡하여 형식적 감독활동에 그침

⇒ 기존복지사업자 관리·감독 개선방안 마련 시행 (개선)
· 문제가된 복지사업자에 대하여는 자원금 환수등 적정조치 (시정)
· 감독업무 담당자 적의 인사조치 (통보: 인사자료)

□ 통합정보시스템 보완·개선 필요

- 미소금융은 지역지점, 은행기업재단 지자체, 사회적기업 등 사업주체* 및 지원상품이 다양. 이를 반영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필요

* '11.9월말 현재 미소금융 복지사업자: 26개 지역지점, 5개 기업재단, 6개 은행재단, 12개 기존 복지사업자(신나는 조합 등), 전국 113개 지자체 등

⇒ 전통시장 상인회 등 미소금융사업의 지원정보를 반영한 통합 정보시스템 조속히 구축시행 (권고)

□ 미소금융 특성화상품 운영 개선 필요

- 화물차구입자금 대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화물운송차량 구입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 방지 측면에서 대출원금에 대한 담보를 설정하는 사례

⇒ 은행·기업재단이 보다 다양한 직능단체를 대상으로 한 특성화 상품을 개발토록 지도, 무보증·무담보 소액대출의 취지에 맞게 대출자금에 대한 담보 설정 관행 개선 (개선)

□ 휴면예금 출연기관 확대 등 필요

- 은행,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만 재단과 협약을 맺어 출연, 또한 협약에서 '개인명의' 휴면계좌만을 출연대상으로 제한

⇒ 출연대상 기관 확대 및 출연대상 계좌 제한 축소 등 출연 유도 노력을 제고할 필요 (권고)

3 분야별 지적내역 및 조치계획

□ 분야별 지적내용

지적분야	지적내용	조치수준
복지사업자 선정 관련	■ 사업자 선정 평가지표 등 부적정 및 사전현장 실사 부실	개선
복지사업자 관리·감독	■ 기존복지사업자 관리·감독 부실 ■ 통합정보시스템 보완·개선 필요 ■ 미소금융 특성화상품 운영 개선 필요	시정 / 개선 / 통보(인사자료) 권고 개선
미소금융 인프라	■ 휴면예금 출연기관 확대 등 필요	권고

□ 조치계획

-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14조에 따라 미소금융중앙재단에 통보하여 2개월 이내에 적의 조치토록 요구

1. 처분요구 사항의 조치기한

가. 문책사항 : 해당사항 없음

나. 변상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개선, 권고, 시정 및 통보(인사자료) : 2개월 이내에 조치 또는 조치계획 마련

2. 조치결과 보고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상기 조치기한 이내에 조치한 후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금융위(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함

3. 이의신청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의견서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별첨 11>

자체감사(정기)

2011.12.26 ~ 12.30

2011년 금융위원회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2012. 2.

금 용 위 원 회

[감사담당관실]

- 목 차 -

I . 감사개요

II .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2. 부문별 감사결과

가.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나. 민원업무 처리

3.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4. 감사결과 처리요령

I. 감사실시 개요

〈목 적〉

◇ 예산집행·회계처리, 계약사무, 민원처리실태 등에 대한 정기점검

⇒ 취약한 부분에 대한 개선대안 마련으로 기관운영의 안정성·효율성 제고 및 爲民奉仕의 행정구현

* 「'11년 자체감사계획」('11.2.1 기보고)에 따른 감사임

1

실시개요

- ☐ 감사기간 : '11.12.26(월) ~ 12.30(금), 5일간
- ☐ 감사대상 : 以前 자체감사 대상 이후의 예산집행실태 등
* 예산집행실태 등은 '10.12월 이후, 민원처리실태는 '10.7월 이후
- ☐ 감사반원: 감사담당관실 5명(감사담당관, 5급 2, 주무관 2)
- ☐ 감사방법: 서면점검(필요시 현장실사)

2

감사중점

- ☐ 예산집행·회계처리의 적정성
- ☐ 민원업무 처리의 적정성
- ☐ 以前 자체감사 지적사항 이행의 적정성

II.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 ☐ 예산집행 및 민원처리 등 기관운영의 기본적 사항에 대한 정기 점검을 통해 조직운영의 안정성·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
- ☐ 감사결과 중대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아니함. 다만, 예산집행 서류의 관리 및 민원처리기한 준수 등 일부 보완이 필요

[분야별 주요 발견사항]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관련>

①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관서운영경비 출납부서)

☞ 지출증빙 관리 및 배정한도 준수 집행 등 철저 필요

② 5천만원 초과 전용건 일상감사 미이행(기획행정실)

☞ 건당 5천만원 초과 이·전용 및 이월은 일상감사 대상

<민원업무 처리 관련>

① 처리기한 미준수 및 연장통보 부적정

☞ 처리기한 도과 처리(109건, 1.7%) 및 임의형식 연장통보 등

② 이첩민원 해소 필요(산금과 민원 92% 신보·기보·캠코에 이첩)

☞ 신보·기보·캠코에 국민신문고 구축하여 직접처리 필요

가.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관련

1. 점검 개요

□ 2011년도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중 각 부서에서 직접 집행하는 관서운영경비를 중심으로 점검

○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총액은 1조 5,530억 77백만원으로 대부분이 전출금·상환지출·이전지출* 등이며,

*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 IBRD차관원리금상환, 모기지론이차보전, 농어가목돈마련장려기금출연 등

○ 직접 집행액은 306.8억원(2.0%)으로 이 중 인건비(144.1억원)를 제외한 집행(162.7억원)을 중점 점검

<2011년도 일반회계 집행실적 (억원, %)>

구분	인건비	물건비	자산취득	이전지출	상환지출	전출금등	계
예산 (비중)	163.2 (1.0)	155.1 (1.0)	5.0 (0.0)	707.7 (4.5)	31.8 (0.2)	14,493.5 (93.2)	15,556.3 (100.0)
지출 (비중)	157.1 (1.0)	144.1 (0.9)	4.3 (0.0)	705.0 (4.5)	26.7 (0.2)	14,493.5 (93.3)	15,530.8 (100.0)
이월	0	0.7	0	0	0	0	0.7
불용	6.1	10.3	0.7	2.7	5.1	0	24.9

□ 예산집행지침, 감사원 계산증명규칙 등 관련 규정 부합여부 및 집행절차, 증빙처리의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② 점검결과 지적사항

① 관서운영경비 집행방법 부적정

□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을 초과하여 관서운영경비 집행 등

○ 국고금관리법시행령(제32조3항 및 제33조)에 따라 출납공무원은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 내에서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여야 함

○ 그러나 금융정책과 등은 업무추진비 등을 지급함에 있어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자금을 초과하여 지급*

* 금융정책과(업무추진비 5,095,100원, 특근매식비 2,984,780원 / 6~9월), 자본시장과(업무추진비 2,345,932원 / 4월)

○ 또한, 기획행정실은 국외출장에 따른 여비를 국외여비가 아닌 국내여비 예산에서 집행

* APG 연차총회 참석(인도)을 위한 국외여비 2,861,610원을 국내여비로 집행(7.15)

□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시 상대방 성명 등 기재 미비

○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지침 141p)

○ 그러나, 기획재정담당관실 등은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주된 상대방의 소속·성명 미기재*

* 기획재정담당관실('11.2.28 / 970,000원), 국제협력팀('11.6.8 / 954,800원), 정책홍보팀('11.8.11 / 568,000원)

⇒ 매월 교부받은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을 준수하고, 예산과목에 충실하여 집행하며,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집행시에는 반드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성명을 기재할 것 (주의 : 해당부서)

② 출납서류 편철·관리 및 지출증빙 처리 부적정

□ 출납 관련서류 편철·관리 부실

-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제31조 내지 제33조)에 따라 매월 출납업무 마감 후 출납계산서, 국고예금월계대사표 및 비목별 지출증빙서류를 편철·관리하여야 함

<관서운영경비 출납서류 편철방법>

① 출납계산서(규칙 제7호 서식)	• 월단위로 편철
② 국고예금월계대사표(00년 00월분)	
③ 세목별 간지(본월지출액: 00원, 건수: 00건)	• 세목별로 구분
④ 지급결의서	
⑤ 내부결재(품의서)	
⑥ 기타 증빙자료(영수증, 계약서, 청구서 등)	• 5년간 보관

- 그러나 금융정책과 등은 월별 출납서류에 출납계산서 등 일부 서식을 누락하여 편철

부서명	누락서류
■ 금융정책과	• 출납계산서, 세목별 간지, 지급결의서
■ 정책홍보팀, 기획행정실	• 국고예금월계대사표
■ 기획재정담당관실	• 세목별 간지

□ 사전품의 없이 관서운영경비 집행

- 「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24p)」은 예산 집행시 **정당한 결재권자의 결재**를 통하여 집행하도록 규정

- 그러나 자본시장과는 일반수용비 집행에 있어 일부 품의서 누락

부서명	품의서 누락 사례
■ 자본시장과	• '11.2.23(생수 1,101,100원), 3.16(복사기드럼 765,600원), 4.14(용지 2,127,000원), 5.19(사무용품 657,900원), 9.7(명패 283,800원), 11.30(토너 4,957,700원) 등

⇒ 예산집행 서류는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에 부합토록 편철·관리하고, 수용비 집행시 품의서 누락사태가 없도록 할 것 (주의: 해당부서)

③ 건당 5천만원 이상 전용건에 대한 일상감사 미이행

□ 「금융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은 건당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산전용에 대하여 일상감사 대상으로 규정

※ 일상감사대상(금융위 일상감사 실시지침)

- 예산이 5억원 이상인 사업
- 성과관리계획상 주요 정책과제 (집행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일정규모 초과 계약건 (종합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기타공사: 8천만원, 용역·물품의 제조·구매: 5천만원)
- 건당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산의 아전용 및 이월
- 주거·은행의 선정·변경
- 실·국 단위 이상에서 개최하는 워크숍, 연찬회 등 행사 및 외부 참석인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과단위 행사 포함)

□ 그러나 기획행정실은 FIU 인건비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본부 인건비에서 8,000만원을 전용('11.12.23)하면서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아니함

<FIU 인건비 전용내역>

(단위 : 백만원)

일자	건명	세부사업명	'11예산현액	변경액	변경 후 금액
12.23	FIU 인건비 부족에 따른 예산 자체전용	FIU 인건비	2,926	80	3,006
		본부 인건비	12,745	△80	12,665

⇒ 향후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산전용건에 대하여 반드시 일상감사를 의뢰하는 등 「금융위 일상감사 실시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 (주의: 기획행정실)

④ 성실한 업무처리로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모범사례)

□ ○○국은 '10년 자체감사시 예산집행 서류를 연간 목별로만 관리하는 등 계산증명규칙과 다르게 하여 출납계산서와 국고예금월계대사 및 지출증빙간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게 하였고,

○ 수용비, 공공요금 등을 결제권자의 결제를 득한 사전품의 없이 집행하였으며, 정부구매카드 사용시 사용영수증에 사용자의 실명이 아닌 부서명으로 서명한 사례가 빈번하여 지적(주의)을 받은 바 있음

□ 그러나, '11년 1월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 담당자가 아래와 같이 교체되면서 금번 감사일 현재 '10년도 감사 지적사항을 완전히 해소하는 한편 관서운영경비 집행과정에서 '예산집행지침'을 성실히 이행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크게 제고함

소 속	성 명	직 급	담당업무	담당기간
○○과	○○○	○○	○○국 관서운영경비 출납	'11.1월 ~ 현재

⇒ 각 과장은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 담당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동 모범사례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 행정인사과장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한 상기 담당자에게 포상 등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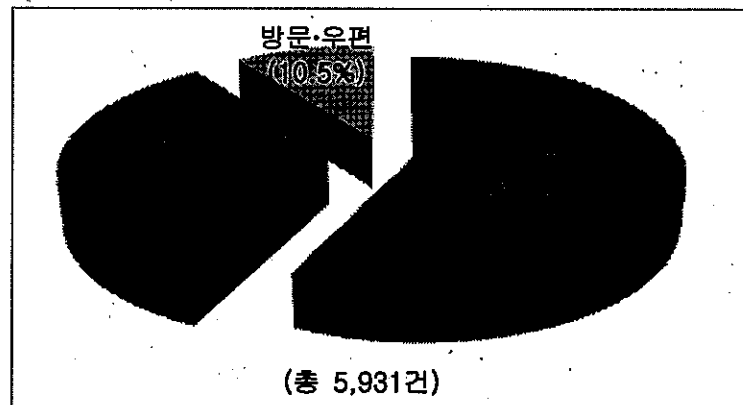
나. 민원업무 처리 관련

① 현황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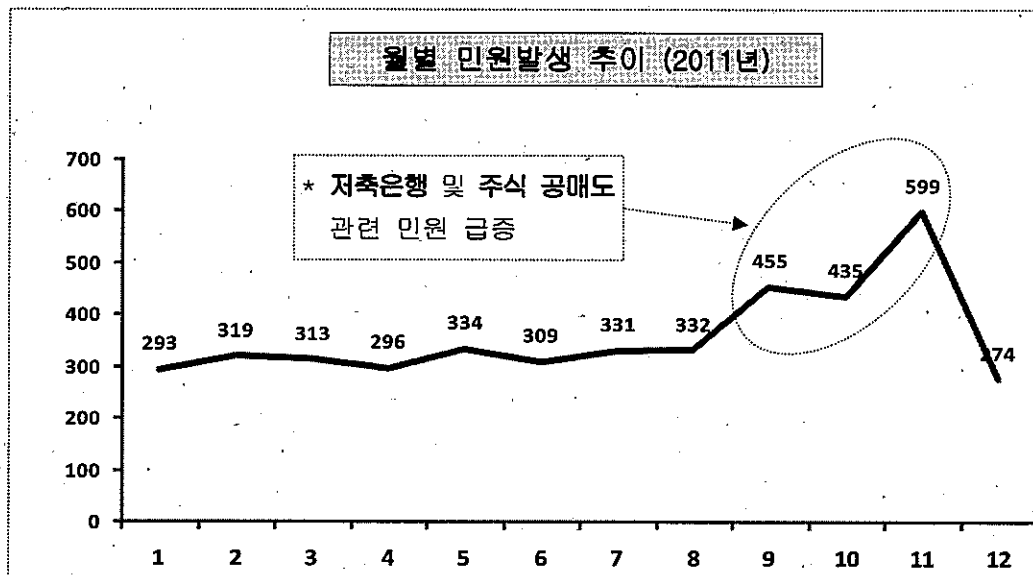
□ 점검대상기간('10.7.1 ~ '11.11.30)중 총 5,931건* 접수·처리

* 반복민원 433건 포함시 6,364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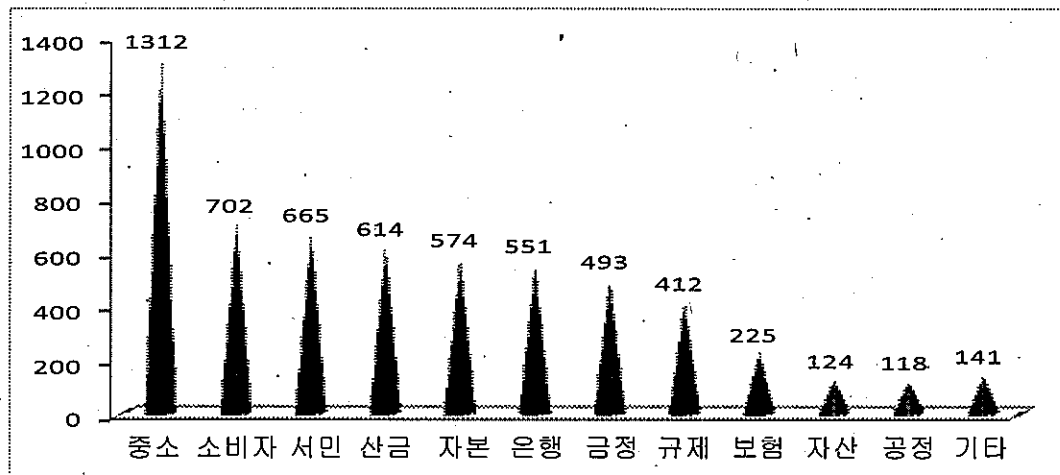
구 분	건 수
신 문 고	3,238
홈페이지	2,067
방문·우편	626
합 계	5,931



- 통상적으로 매월 3백건 내외의 민원이 발생하며, 저축은행 등 특정사안 발생시 일시적으로 급증



□ 부서별 : 중소기업과 → 금융소비자과 → 서민금융과 순



○ 중소기업·소비자·서민 등 3개 과의 민원은 모두 서민금융 관련 민원으로 총 2,679건으로 전체 민원의 45.2% 차지

- 이들 민원의 만족도*는 44.7%로 전체 만족도 49.0% 보다 4.3%p 낮게 나옴

* 중소기업(41.7%), 금융소비자(48.5%), 서민금융(49.2%)

○ 산업금융과 민원*은 대부분(91.8%) 신보, 기보, 캠프 민원으로 해당 기관에 이첩되었으며, 만족도는 42.9%로 나타남

산금과 민원(건)	신 보	기 보	캠 코	기 타	합 계
	311	98	155	50	614

□ 속성별 : 일반민원*(3,544) → 법령질의(1,160) → 제도개선(592) → 진정(493) → 기타(231)의 순

* 일반민원 대부분도 현행제도 내에서 해소가 어려운 진정성 민원

* 법령질의 만족도는 83.3%로 전체 평균(45.2%)보다 월등히 높음

② 점검결과 지적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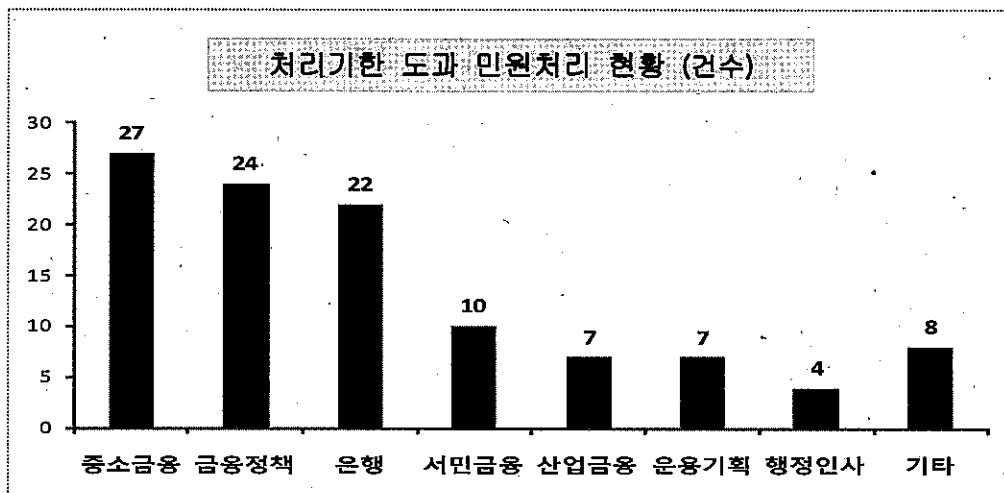
① 처리기한 미준수 및 연장처리 부적정

□ 처리기한 준수율은 98.3%로 '10년 점검시의 95.8%보다는 개선되었으나, 중앙행정기관 평균 99.5%* 보다는 낮음

* 「2011년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만족도 평가(권익위)」에서 금융위의 처리기한 준수율은 '보통'으로 외통부, 교과부 등과 함께 최하위권

○ 처리기한 연장 등의 조치 없이 처리기한*을 초과한 경우는 109건 (1.7%)으로 중소기업과, 금융정책과, 은행과에 집중됨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일반질의·상담은 7일, 법령질의는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함



□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연장사유 및 처리예정기한을 명확히 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및 시행규칙(제8조)

○ 그러나, 일부 서신민원(방문·우편)의 경우 당해 민원인에게 처리기한 연장통보 없이 국민신문고상으로만 연장처리

* 서신민원의 경우 행정편의상 국민신문고에 등재·관리하더라도 처리기한 연장은 당해 민원인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서신으로 하여야 함

<사 례>

민원인	접수일	처리일	연장횟수	처리부서
김OO	'11.01.31.	'11.03.18.	3회	금융정책과
이OO	'10.07.16.	'10.08.17.	3회	산업금융과
강OO	'10.10.29.	'10.11.26.	3회	중소금융과
황OO	'11.05.20.	'11.06.22.	3회	서민금융팀
홍OO	'10.08.11.	'10.09.10.	3회	은행과
심OO	'11.10.17.	'11.11.17.	3회	보험과
김OO	'10.07.21.	'10.08.20	3회	운용기획팀

- 또한, 서신으로 연장통보 하는 경우 공문 또는 법정 서식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나 **임의양식***으로 처리

* 담당자, 시행일, 기관장직인 등 없이 A4 용지에 연장사유 및 예정처리 기한만을 임의로 작성하여 민원인에게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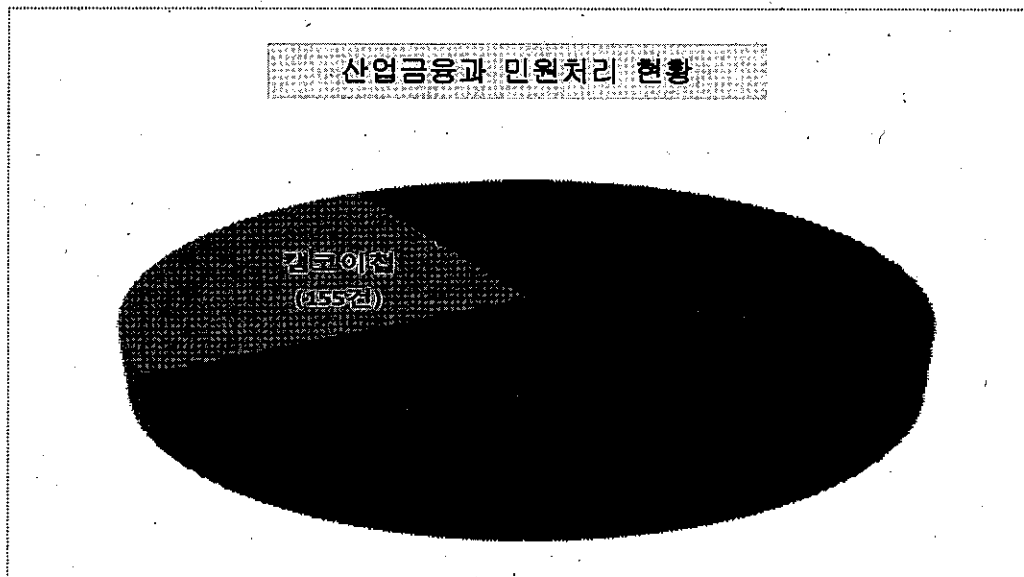
<사 례>

관련 민원현황				처리부서
민원인	신청일	접수일	처리일	
박OO	'11.08.30	'11.08.30	'11.09.16	산업금융과

⇒ 법정 처리기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서신민원의 처리기한 연장 통보는 반드시 공문 또는 법정서식에 의할 것 (주의 : 해당부서)

② 이첩민원 해소노력 필요

- 산업금융과 민원 경우 대부분이 신보, 기보, 캠코 관련 민원으로 접수민원의 92% 가량을 해당 공공기관에 이첩



- 이는 해당 공공기관에 국민신문고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른 것으로 국민신문고 구축시 신속한 민원회신과 함께 이첩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감소시킬 것으로 판단
- * '10년 민원점검시 지적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국민신문고가 구축됨에 따라 자본시장과 민원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최근 예금보험공사의 신문고 구축으로 금융소비자와 민원도 상당수 감소
- * LH공사, 국민연금공단, 대한주택보증 등 상당수 공기업들 또한 국민신문고를 구축하여 소관 민원을 직접 처리

⇒ 신보 등에 국민신문고를 구축함으로써 신속한 민원회신과 함께 이첩에 따른 행정업무를 감소시킬 필요 (권고 : 산업금융과)

□ 지적사항 및 조치구분

분야	지 적 사 항	조치 구분
예산 집행 / 회계 처리	■ 출납서류 편철·관리 부실 및 지출증빙 처리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납계산서, 한국은행 월계대사, 세목별 간지, 지출결의서 및 지출증빙(품의서, 영수증 등) 등을 '감사원 계산증명 규칙'에 부합토록 철저히 관리할 것 (금융정책과, 정책홍보팀, 기획재정담당관실, 기획행정실) 일반수용비 집행시 품의서 누락사례가 없도록 할 것 (자본시장과) 	주의
	■ 관서운영경비 집행방법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별 교부받은 예산과목별 자금한도를 초과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할 것 (금융정책과, 자본시장과) 국외여비를 국내여비예산에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기획행정실)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집행시 증빙서류에 주된 상대방의 소속성명을 기재할 것 (기획재정담당관실, 국제협력팀, 정책홍보팀) 	주의
	■ 일상감사 미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당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산전용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일상감사를 이행할 것 (기획행정실) 	주의
	■ 성실한 업무처리로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한 업무처리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 (모범사례) 	모범 사례
민원 처리	■ 처리기한 미준수 및 연장처리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처리기한을 준수하며, 서신민원에 대한 처리기한 연장은 연장사유·예정처리기한을 명확히 한 공문 또는 법정서식에 의할 것 (행정인사과, 금융정책과, 산업금융과, 은행과, 보험과, 중소기업과, 서민금융과, 신용기획팀) 	주의
	■ 이첩민원 해소노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보 등에 국민신문고를 구축함으로써 신속한 민원회신과 함께 이첩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일 필요 (산업금융과) 	권고

□ 향후 조치계획

○ 감사결과 각부서 및 감사원에 통보

1. 처분요구 사항의 조치기한

가. 문책사항은 1월 이내

나. 변상사항은 3월 이내

다. 개선·개선통보·시정·권고사항은 2월 이내

2. 조치결과 보고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상기 조치기한 이내에 자체 조치한 후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함

3. 이의신청

소관부서는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의견서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별첨 12>

정기종합감사

2012.5.30~6.8

한국금융연구원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

2012. 5.

금 융 위 원 회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II. 한국금융연구원 현황

1. 일반현황

2.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3. 2012년도 수입·지출예산 및 2011년도 결산

III. 감사실시 결과

1. 분야별 감사결과

2. 분야별 지적내역 및 조치계획

3. 감사결과 처리요령

I. 감사실시 개요

□ 법적근거

○ 민법 제37조* 및 비영리법인 설립·감독규칙(총리령) 제9조

*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감사, 감독한다.

* 금융연구원에 대한 直前 외부감사는 2006년 10월 舊 재경부가 실시

□ 감사기간 : 2012. 5. 30(수) ~ 6. 8(금), 7일(근무일 기준)

□ 감사대상 : 고유사업, 예산·회계, 조직·인력, 임직원 복리, 내부통제 등

□ 감사요원 : 감사담당관 외 4명(외부전문가* 1명 포함)

* 회계법인 소속 회계감사 전문 회계사

* 소요예산 : 약 150만원(1명 * 30만원 * 5일)

□ 감사중점

○ 수행사업의 설립목적 부합성

*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금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

○ 예산집행·회계처리, 자금관리, 계약사무의 적정성

○ 인력·조직관리 실태

○ 임직원 보수·복리후생의 적정성

○ 정관등 제규정 준수여부

○ 종전 외부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 등

II. 한국금융연구원 현황

1.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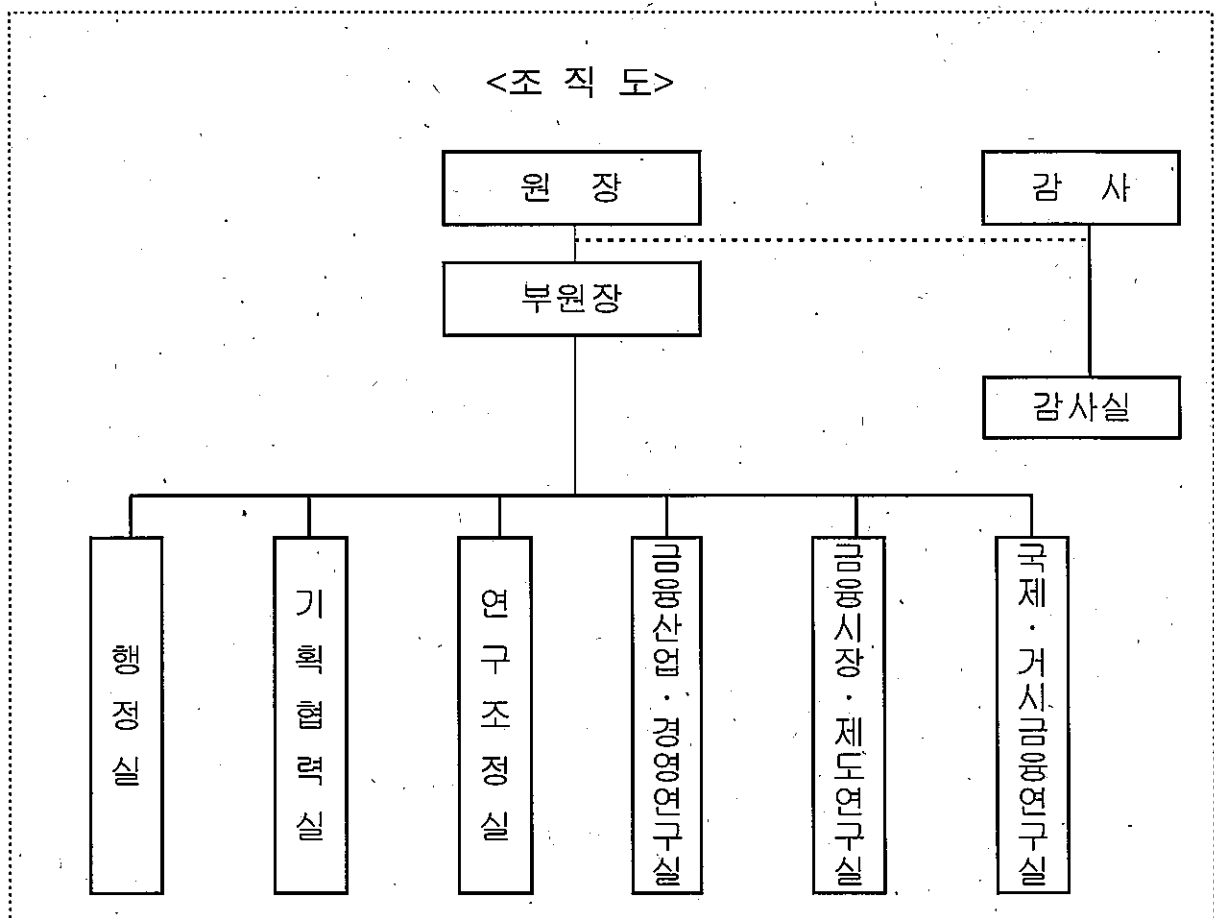
□ 연 혁

- '91. 4. 9. 사단법인 한국금융연구원 설립 인가(재무부령 1653호)
- '91. 4. 25. 사단법인 한국금융연구원 설립등기

□ 소재지 : 서울 중구 명동1가 4-1 (은행회관 5~8층)

□ 조직 및 인원 : 7실, 1팀 109명(정원)

- * 원장 : 윤창현(60년생) / 서울대(경제),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現)
- 감사 : 정병기(55년생) / 영남대(행정학), 기획재정부 감사담당관(前)



2.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 연구사업 : 총 195건

수시과제	선제과제	용역과제*	연구과제**	합계
136건	34건	19건	6건	195건

* 금융위(6), 기재부(6), 국토부(1), 금감원(1), KDI(2), KIEP(2), 은행연합회(1)

** 은행 수익기반 다변화의 효과 분석 및 시사점 등

□ 회의사업 : 총 130회

포럼, 심포지엄, 정책간담회 등	한국경제의 분석 패널	주례세미나	합계
48회	19회	78회	130회

□ 발간사업 : 총 137권

○ 정기간행물 : 69권

- 주간 금융브리프(Weekly Financial Review)
- 계간 금융동향(분석과 전망)
- KEFR(Korea Economic and Financial Review)
- 금융연구(금융학회와 공동발간)
- 한국경제의 분석, 경제전망 등

○ 연구간행물 : 68권

연구 보고서	정책 보고서	금융 VIP 시리즈	금융 CEO 에센스	Issue Analysis	Working paper	금융 리포트	합계
5권	3권	26권	2권	3권	18권	11권	68권

3. 2012년도 수입·지출예산 및 2011년도 결산

□ 2012년도 수입·지출 예산

수 입	지 출
○ 수입총액 : 186.5억원	○ 지출총액 : 186.5억원
▶ 사원분담금 : 159.8억원	▶ 인 건 비 : 105.9억원
▶ 전기이월금 : 10.4억원	▶ 자산취득비 : 2.6억원
▶ 잡 수 입 : 1.3억원	▶ 경 비 : 73.0억원
▶ 전입금수입 : 15.0억원	▶ 전산업무비 : 3.9억원
	▶ 예 비 비 : 1.0억원

* 2011년 수지예산 대비 0.49% 증가한 수준임

□ 2011년도 결산

○ 재무상태(B/S)

◆ 자 산 : 93.4억원 · 유동자산(예금등) : 85.3억원 · 투자자산(보증금등) : 6.0억원 · 유형자산(집기등) : 2.1억원	◆ 부 채 : 34.4억원 · 퇴직급여충당부채 : 26.6억원 · 예수금·미지급금 등 : 7.8억원
	◆ 자 본 : 59.0억원 · 임 의 적 립 금 : 43.3억원 · 미처분잉여금 : 15.7억원

○ 수입·지출현황

◆ 수입총액 : 181.0억원 · 사원분담금 : 152.4억원 · 전기이월금 : 22.7억원 · 잡 수 입 : 0.7억원 · 전입금수입 : 5.2억원	◆ 지 출 : 165.3억원 · 인 건 비 : 91.5억원 · 경 비 : 70.5억원 · 전산업무비 : 2.6억원 · 자산취득비 : 0.7억원
	◆ 당기잉여금 : 15.6억원

III. 감사실시 결과

1 분야별 감사결과

가. 인사제도 운영 관련

① 인력수급계획 수립 관련

- 인사규정 제7조*에 따라 연구조정실장과 행정실장은 매년 직급별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정원을 확정하고 이를 예산심의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 동 조항은 2006년도 舊 재정경제부 감사시 지적되어 개정('07.4.1 시행)

- 그러나, 연구원은 매년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 인력수급계획에 직급별 정원의 증감만을 표기*하였을 뿐 증감 사유 및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내용은 전혀 반영하지 아니함

* 정원 증감표에 승진연수 도래 연구원의 승진 등을 위한 직급별 수요를 반영

* 인력운용의 경우에도 매년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인력을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 바, 2010년도의 경우 연구위원 정원은 3명에 불과했으나 현원은 8명으로 당해 직급 정원의 2.5배를 운영

⇒ 인사규정에 부합토록 연도별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정원을 확정토록 하고,

인력수급계획에는 정원의 증감뿐만 아니라 당해 증감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며, 정원을 초과하여 인력을 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주의: 기관, 개인)

② 직원 채용시 필요절차 등 미이행

- 별정직 채용은 공모에 의하여야 함(별정직운용요령 제5조), 또한 2급이상 일반직 채용시 인사위 심의를 거쳐 함(인사규정 제58조)
- 그러나, '07.2.1 및 '10.6.1 별정직 이○○ 및 조○○을 공모 없이 채용하였고, '08.9.1 인사위 심의 없이 이○○을 일반직 2급으로 임용

⇒ 직원 채용 및 임용시 인사 관련 규정에 의한 공모절차 및 인사위원회 심의절차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직원 채용·임용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주의: 기관)

나. 성과평가제도 운영 관련

□ 업적연봉 및 연구장려금 지급을 위한 평가체계 부적정

- 연봉제보수규정 제3조에 따라 연구원의 연봉은 기본연봉, 업적연봉, 연구장려금 및 조사연구비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업적연봉과 연구장려금은 성과평가에 따라 결정됨
- 그러나, 평가등급별 배분비율의 총합이 현원의 140%가 되도록 함으로써 하위등급 평가대상자가 거의 없도록 성과평가제도 운영
- 또한, 연구장려금의 경우 평가등급별 기준금액 규정이 없고, 지급근거 및 지급기준이 없는 가산금액을 가산하여 지급

⇒ 연구장려금에 적용되는 가산금액 지급근거 및 지급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업적연봉 및 연구장려금 지급을 위한 평가등급별 배분비율을 합리적으로 개선 (개선통보)

다.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관련

□ 일부 회계처리 관행 개선 필요

○ 예산회계규정 제56조에 따라 모든 수입과 지출은 발생의 사실에 따라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함

- 그러나, 미수이자 및 Database 이용료 선납분 등의 회계처리에 있어 실제 수익·비용의 발생연도가 아닌 현금수입·지급연도의 수익·비용으로 인식하여 회계처리

⇒ 일부 현금주의 회계처리 관행을 실제 수익·비용의 발생사실에 기초하여 회계처리토록 개선할 필요 (권고통보)

라. 임·직원 복리후생 및 내부통제 관련

① 주택구입자금·임차보증금 대출 운영 부적정

○ 복지규정 제10조는 자택이 없는 직원에 대하여 주택 구입자금 및 임차보증금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요령'에서는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토록 규정

⇒ 주택구입자금 및 임차보증금은 무주택 직원에 한하여 지원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 (개선통보)

② 학자금 지원 부적정

○ 복지규정 제9조에 따라 직원 자녀의 중·고교 및 대학교 등록금에 대하여 총 4인 한도로 예산에서 지원

- 그러나, 일반공사립과 특수학교(국제중, 민족사관고)간 지원항목이 달라 지원금액 차이 과다 발생

<2011년도 서울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 자녀 지원 현황>

구 분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공·사립)	특수(국제중)	일반(공·사립)	특수(민족사관고)
수업료	×	○	○	○
학교운영비	○	○	○	○
학생활동비	×	○	×	○
분기별 지원액	62천원	1,575천원	449천원	1,793천원

* 일반 공·사립 중학교의 경우 2012년부터 학비(학교운영비+수업료) 전액 면제

⇒ 일반학교와 특수학교간 지원항목의 차이가 없도록 하고, 특수학교에 대한 지원액 또한 일반학교 평균 지원액과 과다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 (개선통보)

③ 연간감사계획 미수립 및 정기감사 미실시

- 감사규정 제5조(2012.1.15 개정전)에 따라 연도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업무전반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 2008년 이후 자체 정기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함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감사계획 수립 여부	○	○	×	×	○
감사실시 여부	○	×	×	×	×

⇒ 연도별 감사규정에 따라 감사계획 수립 및 정기감사 실시에 철저를 기할 것 (주의: 기관)

2 분야별 지적내역 및 조치계획

□ 분야별 지적내역

지적분야	지적내용	처분내용
인사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수급계획 수립·운영 부적정 ■ 직원 채용시 필요절차 미이행 	주의(기관개인) 주의(기관)
성과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적연봉 및 연구장려금 지급을 위한 평가체계 부적정 	개선통보
예산집행 / 회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회계처리 관행 개선 필요 	권고통보
복리후생 / 내부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구입자금 및 임차보증금 대출운영 부적정 ■ 학자금 지원 부적정 ■ 연간감사계획 미수립 및 정기감사 미실시 	개선통보 개선통보 주의(기관)

□ 조치계획

-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14조에 따라 한국금융연구원에 통보하여 2개월 이내에 적의 조치토록 요구

1. 처분요구 사항의 조치기한

가. 문책사항 : 해당사항 없음

나. 변상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개선통보, 권고통보 : 2개월 이내에 조치 또는 조치계획 마련

2. 조치결과 보고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상기 조치기한 이내에 조치한 후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금융위(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함

3. 이의신청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의견서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강기정 의원(민주통합당)

3.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 대통령 지시사항

- '12.8월 현재 '08년 이후 모든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이 완료된 상황('08년~현재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 실적)

지시일	시달일	구분	지시내용	추진실적
08.03.03	08.03.19	검토	신기술에 대한 담보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	종료 (09.9.30승인)
08.03.11	08.03.31	검토	금년도 사업 조기발주 추진	종료 (08.12.29승인)
08.03.10	08.04.08	계획	예산 10% 절감	종료 (09.1.30승인)
08.03.10	08.04.08	계획	규제개혁의 조속한 추진	종료 (09.6.17승인)
08.03.31	08.04.10	계획	법을 바꿔야하는 개혁과제 신속 추진	종료 (09.1.30승인)
08.03.31	08.04.10	계획	산업은행 민영화	종료 (08.7.25승인)
08.09.02	08.09.09	검토	9월 위기설 신중 대응	종료 (08.10.21승인)
08.11.18	08.12.02	검토	무역금융 적극 지원	종료 (09.9.13승인)
08.11.18	08.12.02	검토	한은 금리 인하 관련 협조	종료 (09.9.13승인)
09.01.22	09.02.12	검토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사항 국내외 홍보	종료 (09.11.13승인)
09.04.14	09.04.22	검토	고리 사채 문제 대책 강구	종료 (09.9.13승인)
09.05.19	09.06.02	검토	금융기관 용어 변경 검토	종료 (09.11.25승인)
09.05.21	09.06.02	검토	시중 단기유동성자금 현황 검토	종료 (09.11.25승인)
09.09.03	09.09.14	검토	위기 탈출을 위한 구조조정 추진	종료 (11.5.6승인)
10.01.01	01.01.15	검토	금년도 예산의 적극적 집행	종료 (11.2.17승인)
10.03.25	10.04.07	검토	가계부채 모니터링 및 영향 점검	종료 (11.2.17승인)
10.04.01	10.04.07	검토	미소금융 지원 활성화	종료 (11.2.17승인)
10.11.30	10.12.06	검토	연말 친서민정책 평가 및 점검	종료 (11.11.18승인)
10.12.21	10.12.27	검토	전국민 안보의식 강화	종료 (11.12.30승인)
11.1.18	11.1.24	검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전시 자료 적극 수집	종료 (11.12.20승인)

② 국무총리 지시사항

- 총 11개의 지시사항중 8개(설 명절 민생안정 지원대책, 북한 장거리 로켓발사 대비 철저)는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3개 과제는 조치계획 수립중에 있음

< 총리실 지시사항 목록 >

지시일	지시내용	추진실적
12.04.24	불법 사금융 척결 관련	추진중
12.04.20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	추진중
12.04.10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대비 철저	완료(4.16일)
12.03.27	민생경제 침해사범 대처 강화	추진중
12.01.10	설 명절 민생안정 지원대책	완료(2.15일)
10.07.13	기업간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과 상생협력 대책 마련	완료
10.06.08	국가위기 관리 및 대응매뉴얼 전면적 개선	완료
08.10.28	공공부문 고통분담 솔선	완료
08.07.30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운영 관련	완료
08.03.15	재래시장 카드 수수료 관련	완료
08.03.18	물가안정, 금융시장 안정화 관련	완료

i) 설 명절 민생안정 지원대책

- 정책금융기관(4.0조원), 시중은행 협조(9.3조원) 등을 통한 설 전후 자금공급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으며,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찾아가는 미소금융' 추진

ii) 민생경제 침해사범 대처 강화

- **대부업자 광고규제를 강화***한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12.3월)하였고, 대부업협회 자율심의 등을 통해 업계 스스로 **과장·과다 광고행위를 제한·시정토록 유도**

* 광고시 상호·등록번호·전화번호 등의 글자크기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제한, 과도한 차입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표시 의무화 등

iii)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대비 철저

- 비상금융합동상황대응회의 개최(4.13일), 사이버테러 대비 위기상황대응반 운영 등 추진

iv)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

- 현재 산하 공공기관에서 주민번호 수집실태 자체점검 중(7.16 일~)이며, 향후 법령에 근거해서만 주민번호 수집·이용 예정
- 전 금융권역(은행·증권·보험 등) 개인정보 수집실태 전수조사(4~6월) 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T/F운영중(6월~)

v) 불법 사금융 척결 관련

-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은 서민들의 피해상담·신고를 접수하고 서민금융 등 지원 실시
 - * 4.17~7.12중 43,028건의 피해상담·신고를 접수, 이중 서민금융 희망자 2,166건 중 642건(29.6%) 서민금융 지원
- 불법 사금융 척결 추진과정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서민금융 지원요건 등도 개선(5.31)
 - * 예 : 과거 연체기록이 있는 경우도 바뀌드림론 지원 대상에 포함, 대부업체의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가입 확대 등

강기정 의원(민주통합당)

4. 2009~2012년 송수신 문서 목록

☐ 별도제출

강기정 의원(민주통합당)

5-1.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강기정 의원(민주통합당)

5-2.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 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 해당사항 없음

강기정 의원(민주통합당)

6. 각종 위원회 지적사항

은 행 과

1.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일	제도개선 권고 내용	처리결과
'10.03.10	우체국 예금 건전성에 관한 감독기구 협조	-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예금의 건전성 기준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고, 우리위원회는 기준 안에 대한 검토의견 전달 - 우정사업본부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정
'10.03.10	예금의 구속행위에 대한 관련자 제재수준 강화	- 개정 은행법('10.4월 국회 통과, 11.18일 시행)에서 은행의 예금 구속행위(꺾기) 등 불공정 영업 행위를 금지하고 반드시 과태료 (5천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제재 규정 신설

보 험 과

1.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일	제도개선 권고 내용	처리결과
'10.10.19	【보험피해방지 제도개선 권고】 ○ 보험계약시 계약자에 대한 보험모집자의 설명의무 구체화, 보험설계사 관리감독 강화 및 선지급수수료제도 개선 등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안 중 수용가능한 의견의 경우 보험업법 및 시행령등 개정시 ('11.1.24시행) 반영

2.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일	제도개선 권고 내용	처리결과
'10.7.28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및 대출심사 기준 차별금지】	- 보험가입 및 대출심사 기준을 조사하여 장애인 차별 조항이 있는 경우 시정하도록조치
'10.10.4 '10.11.4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 금지 등】 ○ 보험상품 이용과 관련한 장애인 차별방지를 위한 규정검토 및 감독강화	-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 시 장애인차별 금지조항 신설 (보험업법§97①, '11.1.24시행) - 보험가입심사시 비장애인과 동일기준으로 심사하도록 모집인에 대한 교육강화 및 설계사 자격시험시 관련 문항 출제하도록 조치

제 도 팀

기관명	지 적 사 항	치 리 결 과
국민권익 위원회	임의적 절차(진행) 규정의 강행규정화	- 제재규정 강행규정화 대상 선정 · 규정변경예고(~2010.11.12일)
	제재기준의 세분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2010.1.5) - 내부적으로 운영 중인 제재기준을 시행 세칙에 반영
	임직원에 대한 금전적 제재 방안 검토	- 주요 선진국 등 해외사례 조사·연구 진행 중
	감독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신뢰성 제고	「제재내용 공개수준 확대방안」 시행 (2010.1.28) - 재판상 공개 곤란한 경우 등을 제외 하고 원칙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강기정 의원(민주통합당)

7-1.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기획재정담당관실

< '09년도 평가 결과 >

□ '09년도 12개 성과목표, 31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우수 5개(15%), 다소 우수 8개(25%), 보통 12개(40%), 다소 미흡 5개(15%), 미흡과제 1개(5%)로 나타남

○ 우수한 과제는 기업자금조달 확대 방안 마련, 은행 자본 확충 추진 등이며,

- 미흡한 과제는 권역별 법령 정비작업 추진인 것으로 평가됨

□ 전체 44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 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율은 84%로

○ 37개 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7개 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함

○ 성과목표 미달성은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 지연 및 금융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방향 변경

< '10년도 평가 결과 >

□ '10년도 총 35개 주요정책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우수 5개(14%), 다소 우수 9개(26%), 보통 15개(43%), 다소 미흡 2개(6%), 미흡 4개(11%)로 나타남

○ 잠재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G-20 회의의 성공적 개최 등 5개 과제는 우수한 과제로 평가됨

□ 총 35개 관리과제의 59개 성과지표 중 58개 성과지표의 목표는 달성하였고,

- 1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하여 新국제감사기준 채택 시기를 2011년으로 연기*하였기 때문임

* 新국제감사기준의 적용을 주도한 EU 등 선진국에서 시행시기를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임을 고려하여 결정

< '11년도 평가 결과 >

□ 총리실 권고사항에 맞춰 상대평가함 : 총 55개 과제중 (매우)우수과제는 10개*

* (1소위) ① PF대출 부실예방 및 정리노력 강화, ②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및 장기고정금리 활성화, ③G20 합의사항의 적극적 이행, ④외환건전성 감독 강화 등

(2소위) 자동차보험 소비자 부담 경감, ②저소득층의 금리 부담 지속 경감 등

(3소위) 기존 금융투자회사의 수익다변화 및 특성화 유도 등 전문화특성화 촉진

총리실 권고 사항		금융위 자체평가결과			계
순위 누적% (등수/전체과제수)	등급	1소위	2소위	3소위	
~상위 5%이내	매우 우수	1	1	0	2
5%초과 ~ 20%이내	우수	3	4	1	8
20%초과 ~ 40%이내	다소 우수	4	5	2	11
40%초과 ~ 70%이내	보통	6	7	3	16
70%초과 ~ 85%이내	다소 미흡	3	4	1	8
85%초과 ~ 95%이내	미흡	2	2	1	5
95% 초과 ~	부진	2	2	1	5
과제 수 합계		21	25	9	55

강기정 의원(민주통합당)

7-2.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감사담당관실

☐ 자체 전화친절도 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음.

보 고 서 명	평 가 일	결과보고서	비 고
2011년도 전화친절도 평가결과보고서	'11.12.23	별첨1	

금융위원회 직원 전화친절도 평가결과 보고

I

평 가 개 요

① 평가기간 : '11. 12. 23(금), 28(수) 2회에 걸쳐 실시

② 평가대상 : 4·5급 이하 직원 84명

※ 선정기준

- '10년도 전화친절도 조사 미흡직원(70점 이하) 17명
- 직급별 배분: 4·5급(29명), 6·7급(35명), 실무관·사무원(10명), 파견(10명)
- 과별 배분: 과직원 6명 미만 2명, 6명 이상 3명, 15명 이상 4명씩 선정

③ 평가항목

- 최초응대 : 수신신속성(10점), 최초인사(10점)
- 응대내용 : 친절성(20점), 정확성(20점), 담당자 연결(20점)
- 마무리 : 끝인사 여부 등 끝맺음(20점)

④ 평가방법 및 평가자

- 평가방법 : 2차에 걸쳐 평가
 - 1차로 자체감사기간 중 실시하였으나 사전 정보 유출 등으로 유의성 있는 결과로 보기 곤란
 - 이에따라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불시에 2차 평가 시행
- 평가자 : 전문가 2인(OOOOOO, OOOOOO), 금융정책알리미 2인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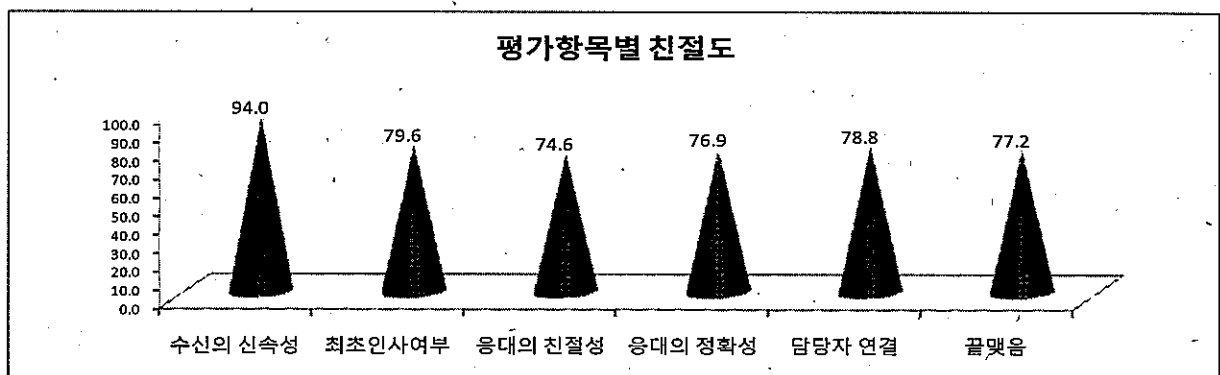
평가결과

- ① (총 평) 전체 평균점수는 78.9점이며, 보통 이상 67명(80%)으로 금융위 직원의 전화친절도는 대체로 양호

< 평가점수별 인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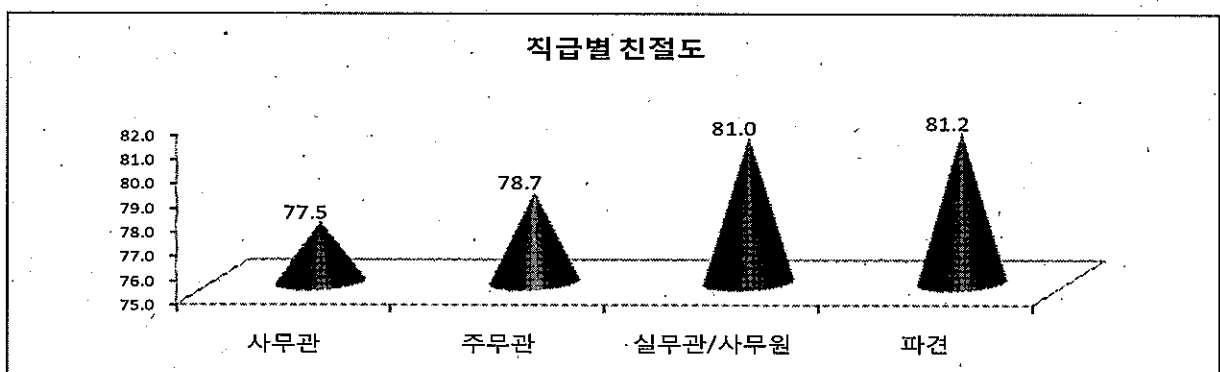
등급	인원	등급	인원
우수(90점 이상)	8	미흡(70점 이하)	16
양호(80~90)	41	미응신	1
보통(70~80)	18	-	-

- ② (항목별 평가) 수신자의 신속성은 우수하나, 그 외의 평가항목은 개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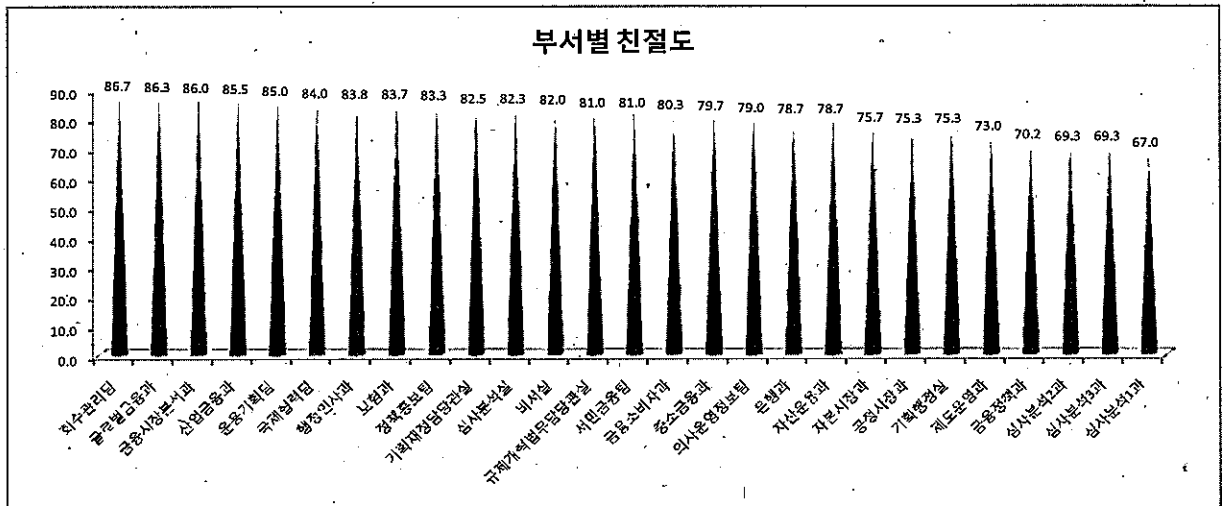
- ① 최초인사 : 첫인사 및 자기소개 미흡
- ② 친절성·정확성 : 통명스러운 말투, 소관이 아니라면서 말 끊기
- ③ 연결 : 잘못된 부서 또는 민원실 연결, 업무담당자 안내 부족 등
- ④ 끝맺음 : 인사말 없이 민원인보다 먼저 끊음

- ③ (직급별 평가) 파견직원과 실무관(사무원)의 친절도는 우수하나, 사무관의 친절도가 상대적으로 미흡



④ (부서별 평가) 각 부서의 업무 특성에 따라 전화친절도 상이

- 회수관리팀, 글로벌금융과, 금융시장분석과 순으로 높게 평가됨
- 대통령 업무보고 등 현안업무가 많은 부서 미흡(금융정책과)
- 업무특성상 민원인과의 접촉 기회가 없는 부서 미흡(금융정보분석원)
- 특히, 일부부서의 경우 부재자의 전화를 당겨받지 않아 통화 연결이 어려움(산업금융과 등)



⑤ 개인별 평가 : 전년도 미흡자(70점 이하 17명)의 경우 전체 평균수준으로 응대 태도가 개선

- 올해 평가에서 다시 미흡 평가를 받은 인원은 3명

Ⅲ 조 치 계 획

□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 등

- 우수 부서(상위 3개과) 및 개인(90점 이상)에 대한 포상 : 행정인사과
- 불량자(70점 미만자)에 대한 '주의' 조치 : 감사담당관실

□ 평가결과 각 실·국 통보

【별첨1】 11년 금융위 직원 전화친절도 평가결과

【별첨2】 평가결과에 따른 전화응대시 유의사항

[별첨1]

11年 금융위 직원 전화친절도 평가결과

□ 부서별 평가결과 [전체평균: 78.9점]

순 위	과(팀)명	점 수	순 위	과(팀)명	점 수
1	회수관리팀	86.7	15	금융소비자과	80.3
2	글로벌금융과	86.3	16	중소금융과	79.7
3	금융시장분석과	86.0	17	의사운영정보팀	79.0
4	산업금융과	85.5	18	자산운용과	78.7
5	운용기획팀	85.0	19	은행과	78.7
6	국제협력팀	84.0	20	자본시장과	75.7
7	행정인사과	83.8	21	공정시장과	75.3
8	보험과	83.7	22	기획행정실	75.3
9	정책홍보팀	83.3	22	제도운영과	73.0
10	기획재정담당관실	82.5	24	금융정책과	70.2
11	심사분석실	82.3	25	심사분석2과	69.3
11	비서실	82.0	26	심사분석3과	69.3
13	서민금융팀	81.0	27	심사분석1과	67.0
14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81.0			
평 균	78.9				

* 우수부서(3): 회수관리팀, 글로벌금융과, 금융시장분석과(각 20만원 포상)

□ 개인별 우수자 [90점 이상]

구 분	우 수 직 원	직급평균
4·5급	000(95, 금융시장분석과)	77.5
6·7급	000(92, 글로벌금융과)	78.7
실무관사무원	000(96, 국제협력팀), 000(91, 산업금융과)	81.0
파견직원	000(91, 보험과), 000(91, 중소기업과)	81.2

* 5급 1명, 6·7급 1명, 사무원 2명, 파견직원 2명(각 10만원 포상)

□ 기타사항

- 친절도 조사 결과 결과 미흡자에 대한 친절교육 실시 예정

[별첨2]

전화 응대시 유의사항

(“이것만은 지켜시다!”)

단계별	유 의 사 항
최초 수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히 받을 것(벨소리 3회 이내) ■ 소속 및 성명을 반드시 밝힐 것 ☞ 안녕하세요? ○○과 ○○○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상냥한 어조로 밝고 경쾌하게 받을 것
의사 소통	<p>①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하여 성급히 상대방의 말을 끊지 말 것 ■ 충분히 경청(필요시 메모)하면서 중간 중간 친절히 ‘예~’라고 응대 ■ 민원의 요지를 되물어 확인하고 친절히 소관부서로 연결 <p>☞ “선생님께서 ○○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동 건은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어서, 제가 직접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관찮으시다면 담당부서인 ○○과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연결 중에 전화가 끊어질 경우 불편하시더라도 000번으로 다시 걸어 주시면 담당자와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식으로 친절히 응대</p> <p>② 소관부서를 모를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하여 성급히 상대방의 말을 끊지 말 것 ■ 충분히 경청(필요시 메모)하면서 중간 중간 친절히 ‘예~’라고 응대 ■ 민원의 요지를 되물어 확인하고 담당자 확인 후 즉시 연락하겠다고 양해를 구할 것(잘못된 부서나 민원실로 연결하지 말 것) <p>③ 소관 사항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분히 경청(필요시 메모)하면서 중간 중간 친절히 ‘예~’라고 응대 ■ 민원요지를 되물어 확인하고 쉽고 명료하게 민원에 회답 ■ 수용이 어려운 사안은 거절식 즉답 보다는 완곡한 표현으로 회답 <p>☞ “선생님의 안타까운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정책 수립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식으로 완곡히 응대</p>
끝맺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끝맺음 인사 잊지 말 것(“감사합니다” 등) ■ 민원인이 끊은 것을 확인하고 수화기를 내려놓을 것

강기정 의원(민주통합당)

8. 2007년 이후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 현황

□ 금융위 출범(2008.3) 이후 퇴직 및 재취업 현황

연도	퇴직일	이름	직위/직급	퇴직전부서	재취업처 및 직책
2008	'08.03.28	이○○	원장	금융정보 분석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08.04.30	전○○	과장	제도운영과	은행연합회 감사
	'08.05.15	김○○	과장	혁신행정과	법무법인 변호사
	'08.06.07	윤○○	일반계약직5호	정책홍보팀	-
	'08.08.01	하○○	일반계약직5호	공정시장과	검찰청 검사
	'08.08.20	장○○	일반계약직5호	글로벌금융과	-
	'08.10.07	김○○	일반계약직6호	공정시장과	금융감독원
	'08.11.19	강○○	일반계약직5호	공정시장과	법무법인 회계사
	'08.12.09	김○○	상임위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부원장
2009	'09.01.05	정○○	서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협회 부장
	'09.01.09	이○○	행정사무관	은행과	법무법인 변호사
	'09.01.20	전○○	위원장	금융위원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09.01.20	홍○○	서기관	공정시장과	법무법인 변호사
	'09.03.26	양○○	실장	기획행정실	한국자금중개 전문
	'09.04.30	김○○	행정주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협회
	'09.05.13	나○○	서기관	감사담당관실	한국산업은행
	'09.05.15	한○○	서기관	금융위원회 (고용휴직)	신영증권 상무이사
	'09.09.11	박○○	부이사관	금융위원회 (타기관파견)	SK C&C 상무
	'09.10.12	김○○	행정사무관	금융위원회 (타기관파견)	-
	'09.11.17	김○○	원장	금융정보 분석원	한국증권금융 사장
	'09.11.19	이○○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아시아개발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2010	'10.02.17	김○○	전산서기보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	한국거래소
	'10.03.02	나○○	행정사무관	행정인사과	정책금융공사 팀장

연도	퇴직일	이름	직위/직급	퇴직전부서	재취업처 및 직책
	'10.04.15	임○○	상임위원	금융위원회	금융통화위원
	'10.04.15	서○○	일반계약직5호	자산운용과	정책금융공사 팀장
	'10.06.17	김○○	일반계약직5호	보험과	-
	'10.08.23	김○○	일반계약직5호	기획행정실	-
	'10.10.14	남○○	행정사무관	산업금융과	정책금융공사 팀장
	'10.12.06	임○○	서기관	금융위원회	파인트리 파트너스 (자산운용사)
2011	'11.01.03	진○○	위원장	금융위원회	송실대 객원교수
	'11.02.16	최○○	원장	금융정보 분석원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11.03.27	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11.03.28	이○○	상임위원	금융위원회	법무법인 변호사
	'11.05.02	김○○	고위공무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11.06.02	안○○	행정사무관	서민금융팀	-
	'11.09.23	공○○	행정사무관	감사담당관실	금융감독원
	'11.09.28	남○○	팀장	국제협력팀	KT 상무
2012	'12.01.01	이○○	외신대변인	정책홍보팀	-
	'12.02.27	박○○	일반계약직5호	회수관리팀	-
	'12.03.14	원○○	과장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	금융결제원 감사
	'12.03.21	이○○	국제협력관	금융정책국	두산그룹
	'12.05.18	김○○	행정사무관	금융소비자과	예금보험공사
	'12.05.21	이○○	과장	감사담당관실	산용보증기금 이사
	'12.05.26	김○○	사무처장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사장
	'12.07.02	진○○	고위공무원	자본시장국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12.08.02	김○○	일반계약직5호	금융정책과	법무법인 변호사
	'12.08.13	전○○	서기관	금융위원회	Ibk 캐피탈 부사장
	'12.08.17	김○○	일반계약직5호	자산운용과	한국증권금융
	'12.08.31	김○○	일반계약직5호	기획행정실	-
	'12.09.04	오○○	전산사무관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	-

강기정 의원(민주통합당)

9. 2007년 이후 임직원 징계조치 및 인사위원회 회부 현황, 징계위원회 구성, 회의록, 회의결과 사본

□ 금융위 출범(2008.3) 이후 징계현황

징계일	피 징계자	징계종류	피징계 사실개요	징계시 직위·직급
'09. 1.16	○○○	전책	음주운전	서기관
'09. 2.27	○○○	감봉	금품수수	서기관
'09. 2.27	○○○	감봉	금품수수	서기관
'09. 2.27	○○○	전책	음주운전	행정 사무관
'11.12.16	○○○	파면	금품수수	일반직 고위공무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5급이상 공무원의 징계관할은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징계위원회에 있음

강기정 의원(민주통합당)

10.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 관련 공문서

☐ 별도첨부

외부기관으로부터 범죄관련 통보받은 현황

- 2008년 금융위 설립이후 이후 검·경찰로부터 기소(유예 포함)받은 금융위원회 직원 현황 및 결과는 다음과 같음.

연번	접수(통보)	직위	혐의내용	검찰 처분내용	징계
1	08.04.18	서기관	음주운전	벌금150만원	견책
2	08.07.28	사무관	음주운전	벌금110만원	견책
3	09.1.23	주무관	공연음란	기소유예	불문경고
4	09.11.16	주무관	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경고
5	10.10.4	사무관	가정폭력(상해, 재물손괴)	기소유예	불문경고
6	11.6.22	고위공무원	뇌물수수	징역1년6월 벌금 10,000,000	파면
7	12.9.6	서기관	뇌물수수	현재 불구속 기소 수사중	미정

강기정 의원(민주통합당)

11.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 해당사항 없음

강기정 의원(민주통합당)

12. 금융위원회 소송 및 행정심판 현황('10~12)

□ 연도별 소송 현황('12.9.10. 기준)

연도	신규 접수	종결 처리(확정)					계류 (차년이월)
		계	승소	패소	취하	기타	
2010	29*	13	10	0	3	0	16
2011	27	12	8	1	3	0	31
2012	34	13	7	0	6	0	52
계	90	38	25	1	12	0	-

* 2009년 이월 19건 포함

□ 패소 사건 상세 내역

종결 년도	사건명 (원고, 사건번호)	심급별 판결 요지	심급별 결과
2011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연대, 서울행정 2007구합35166)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 등 관련 자료 정보공개 청구 거부를 취소 ○이 사건 정보는 진행 중 재판(형사사건)의 쟁점이 아니며, 제3자가 비공개 요청을 한 사유만으로 비공개 대상이 될 수는 없음	1심 : 일부 패
		○1심 판결 요지 원용 ○(추가) 금융위(금감원) 미보유 정보는 각하	2심 : 일부 패
		○2심 판결의 잘못이 없음	3심 : 일부 패

□ 연도별 행정심판 현황('12.9.10. 기준)

연도	신규 접수	종결 처리(확정)					계류 (차년이월)
		계	기각	각하	인용	기타	
2010	13*	8	4	3	1	0	5
2011	11	12	7	5	0	0	4
2012	7	5	3	2	0	0	6
계	31	25	14	10	1	0	-

* 2009년 이월 9건 포함

□ 인용 사건 상세 내역

종결 년도	사건명 (청구인)	사건 개요 및 결정 요지
2010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차○○)	<p>○(주)씨모텍(코스닥 상장기업) 허위공시관련 과징금 부과 기록 일체 정보공개 청구</p> <p>-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검사 및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내용이며,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공개시 씨모텍의 사업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이유로 거부 처분</p> <p>○이 사건 정보는 전자정보시스템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초과하지 않고 있어 비공개로 인한 이익보다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함</p>

강기정 의원(민주통합당)

13. 손비처리와 불납결손액

☐ 손비처리

○ 해당사항 없음

☐ 불납결손액

< 불납결손 내역 >

(단위 : 백만원)

발생년도	건 수	불납결손액
'08	(주)G○S 등 38건	2,017
'09	(주)신○○IT 등 57건	834
'10	(주)경○○○랜드 등 56건	245
'11	(주)신○크 등 86건	621

※ '07년부터 실시(과태료 포함건임)

강기정 의원(민주통합당)

14.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및 해지 내역

□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및 해지 내역(7월말 기준)

사업명	계약시점	용역비	계약방법	계약자
통신설비 유지보수 용역	12.01.27	39.6	수의	(주)대성텔레콤
소송대리인선임계약(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8469)	12.02.01	5.5	수의	정부법무공단
보이스피싱 근절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2.04.04	20	수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년 홈페이지 유지보수	12.04.10	39	수의	(주)트루디정보기술
ELS 및 DLS 투자자 보호 강화방안 연구	12.04.24	26	경쟁입찰 →수의	한국자본시장연구원
금융위 뉴스저작물 통합이용	12.04.30	71.4	수의	한국언론진흥재단
고령화대비 공·사 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방안 연구	12.04.30	30	수의	보험연구원
소송대리인선임계약(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7305,40844)	12.04.12	11	수의	법무법인(유한)태평양
금융세계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12.05.04	30	경쟁입찰 →수의	한국금융연구원
소송대리인선임계약(서울고등법원 2012누7761)	12.04.30	5.5	수의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	12.05.22	39	경쟁입찰 →수의	한국채권연구원
기업공시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12.05.25	35	경쟁입찰 →수의	한국자본시장연구원
금융위원회 홍보브로슈어(영문) 제작	12.07.11	18	수의	(주)란스콤
대학생 고금리 대출 이용 실태조사	12.07.17	10	수의	(주)한국궤협조사 연구소

- 해지내역 : 해당사항 없음.

강기정 의원(민주통합당)

15. 직원 해외 연수현황 및 해외 연수 계획, 결과 보고서

☐ 직원 해외 연수현황

- 첨부 파일 참조

☐ 해외 연수 계획

- 공무원교육훈련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원으로 2013년도 장기일반과정 국외훈련 5명 예정 (영어권 2명, 비영어권 3명)

☐ 국외훈련결과보고서

- 교육훈련정보센터(www.training.go.kr)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 직원해외연수현황

계급	성명	소속	기간	연수국가
행정사무관	이OO	산업금융과	08.06.18-10.06.17	미국
행정사무관	선O	정책홍보팀	08.06.23-10.06.22	미국
서기관	윤OO	혁신행정과	08.06.25-09.12.24	미국
행정사무관	홍OO	혁신행정과	08.06.30-09.06.29	싱가포르
행정사무관	이OO	규제개혁담당관	08.07.03-10.05.03	스위스
서기관	최OO	재정경제부	08.09.01-10.02.28	미국
행정주사	조OO	감사담당관실	08.12.7~09.5.16	영국
서기관	김O	금감위	09.01.03-09.12.31	미국
서기관	박OO	자본시장과	09.03.18-10.09.17	홍콩
행정사무관	김OO	산업금융과	09.06.27-11.06.24	미국
행정사무관	이OO	금융소비자과	09.07.06-10.07.05	싱가포르
행정사무관	고OO	은행과	09.07.13-11.07.12	미국
행정사무관	이OO	중소서민금융과	09.08.02-11.07.25	미국
행정사무관	김OO	국제협력팀	09.10.01-10.09.30	일본
서기관	이OO	기획행정실	09.11.17-10.11.16	중국
행정주사	목OO	자산운용과	09.11.30~10.5.09	호주
행정사무관	박OO	서민금융팀	10.01.03-10.12.31	미국
서기관	성OO	산업금융과	10.01.03-10.12.31	미국
행정사무관	손OO	산업금융과	10.01.05-11.12.31	미국
행정사무관	김OO	공정시장과	10.06.16-11.06.17	미국
행정사무관	박OO	위원장실	10.06.28-12.06.27	미국
행정사무관	고OO	보험과	10.06.30-11.06.29	싱가포르
행정사무관	이OO	금융정책과	10.07.21-12.06.20	미국
서기관	김OO	산업금융과	10.07.22-12.01.21	미국
행정주사	최OO	자본시장과	10.08.02~11.01.11	영국
행정주사	이OO	중소금융과	10.09.29-현재	중국
행정사무관	조OO	운용기획팀	10.09.30 - 현재	일본
서기관	송OO	공정시장과	10.12.13-12.06.12	호주
행정사무관	김OO	행정인사과	10.10.24-11.04.04	영국
행정주사	채OO	산업금융과	11.01.03-11.06.06	프랑스

계급	성명	소속	기간	임수국기
서기관	변OO	금융정책과	11.01.05-현재	미국
행정주사	정OO	은행과	11.06.13-11.12.03	영국
행정사무관	오OO	공정시장과	11.06.20-현재	네델란드
행정사무관	고OO	위원장실	11.06.22 -현재	싱가포르
행정주사	최OO	행정인사과	11.06.27-11.12.23	영국
행정사무관	김OO	보험과	11.07.05-현재	말레이시아
행정사무관	김OO	자산운용과	11.07.17-현재	미국
서기관	윤OO	자본시장과	11.07.25-현재	캐나다
서기관	하OO	자산운용과	11.08.17-현재	미국
행정주사	김OO	국제협력팀	11.09.09-현재	카타르
행정사무관	주OO	서민금융팀	11.09.16 - 현재	미국
행정사무관	전OO	자본시장과	11.09.26 - 현재	일본
행정사무관	김OO	기획행정실	11.11.15-12.5.4	중국
행정사무관	이OO	심사분석실	12.02.06-현재	베트남
행정주사	변OO	행정인사과	12.04.02-현재	모로코
서기관	김OO	행정인사과	12.06.06-현재	미국
사무관	송OO	운용기획팀	12.06.24-현재	싱가포르
서기관	윤OO	미래위 파견	12.07.22-현재	미국
서기관	김OO	금융소비자과	12.07.23-현재	영국
서기관	남OO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12.07.25-현재	미국
행정사무관	신OO	위원장실	12.07.29-현재	영국

강기정 의원(민주통합당)

16. 2008년 이후 연구용역 수행 내역

□ 2008년

연번	과제명	계약 기간	계약자 (책임연구원)	용역비 (백만원)
1	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08.07.04~ 08.10.03	한국금융연구원 (정찬우)	30
2	외환시장 발전방향	08.07.11~ 08.08.2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덕룡)	19
3	미국 FinCEN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실태	08.07.22~ 08.12.21	이주대 산학협력단 (이진국)	40
4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08.07.28~ 08.10.26	한국금융연구원 (구정환)	30
5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08.07.28~ 08.11.20	연세대 산학협력단 (연강흠)	22
6	FTA, DDA 등 금융서비스분야 국제협상 법률적 검토	08.08.01~ 08.12.24	법무법인 태평양 (정의중)	40
7	서브프라임사태이후 금융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개선	08.08.06~ 08.11.04	(사)국제금융센터 (오창석)	46
8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 수준 제고를 위한 감독검사 효율화 방안	08.08.13~ 08.12.12	엔스트앤영 어드바이저리㈜ (정태수)	37
9	단기금융시장 제도 개편에 따른 시장 영향 분석	08.08.18~ 08.10.17	한국금융연구원 (이윤석)	20
10	홈페이지 개편 연구개발	08.11.05~ 08.12.26	(주)사이버 이미지네이션	30
11	비명시적규제 개혁 외부평가	08.11.27~ 08.12.26	동국대 산학협력단 (이관제)	25
12	금융중심지 선정에 관한 금융 전문가 의견조사	08.12.12~ 08.12.29	KDI경제정보센터 (이용수)	19

□ 2009년

연번	과제명	계약기간	계약자 (책임연구원)	용역비 (백만원)
1	금융상품 판매제도 도입에 따른 불완전 판매 방지방안	09.04.13~ 09.08.14	자본시장연구원 (신보성)	30
2	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방안	09.03.16~ 09.12.16	한국금융연구원 (이상제)	45
3	국내 자본시장-외환시장 연계성 증가의 파급효과 분석	09.06.01~ 09.08.31	자본시장연구원 (이인형)	20.5
4	금융위기 이후(Post-Crisis) 대비 금융감독체제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09.06.10~ 09.08.15	연세대 산학협력단 (최홍식)	40
5	수도권 광역금융벨트 조성 방안	09.05.13~ 09.11.3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용협)	30
6	위탁보증 제도 개선방안 연구	09.05.28~ 09.11.11	한국금융연구원 (김동환)	28.8
7	자본시장 등 금융부문별 노동력 특성 분석 및 수급 전망	09.04.21~ 09.08.28	서울대 산학협력단 (김대일)	30
8	금융위기의 원인분석 및 시사점분석	09.07.09~ 09.11.30	한국금융연구원 (장민)	35
9	금융투자산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09.08.05~ 09.12.02	자본시장연구원 (신보성)	32
10	테러자금조달 방지 체제의 선진화·국제화 방안 연구	09.08.28~ 09.12.28	이주대 산학협력단 (이윤제)	35
1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국내 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09.10.07~ 09.12.06	한국금융연구원 (이병운)	30
12	주요국에서의 금융변혁기에 대응한 금융정책사례 연구	09.10.15~ 09.12.17	한양대 산학협력단 (박대근)	40
1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금수취 비은행금융 회사 발전방안 등에 관한 연구	09.09.30~ 09.12.05	한국금융연구원 (정찬우)	20
1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09.09.18~ 09.12.17	(사)한국보험연구원 (유경원)	20
15	금융정보생산의 시스템 리스크 완화방안 연구	09.10.08~ 09.12.23	한국금융학회 (이인호)	20
16	마이크로크레딧 활성화 방안 연구	09.11.11~ 09.12.10	한국채권연구원 (박창균)	23
17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09.09.16~ 09.11.16	자본시장연구원 (김필규)	20

□ 2010년

연번	과 제 명	계약 기간	계약자 (책임연구원)	용역비 (백만원)
1	지역금융활성화 방안 연구	10.03.26~ 10.07.25	한국개발연구원 (손욱)	30
2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도입 방안	10.04.01~ 10.07.31	서울대 산학협력단 (정순섭)	30
3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10.04.19~ 10.08.31	한국개발연구원 (강동수)	40
4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방안 검토	10.05.28~ 10.07.31	법무법인 올촌 (김정수)	30
5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 연구	10.04.13~ 10.07.12	한국개발연구원 (연태훈)	45.5
6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 검토	10.06.09~ 10.7.30	한국금융연구원 (구본성)	30
7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자본시장 활용방안	10.04.09~ 10.09.03	자본시장연구원 (김재철)	30
8	국내외 조기경보 활동 동향 점검 및 금융시장 조기 경보모형 개선	10.05.01~ 10.10.31	한국금융연구원 (장민)	20
9	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검토	10.08.30~ 10.12.20	한국금융연구원 (정찬우)	30
10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와 평가	10.09.16~ 10.12.15	한양대 산학협력단 (박대근)	30
11	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10.09.20~ 10.12.20	한국금융연구원 (김정환)	25
12	신용정보 유통체계 개선방안	10.10.11~ 10.12.11	한국금융연구원 (이상제)	30
13	국내은행 해외 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 감독 방안	10.10.11~ 10.12.11	한국금융연구원 (서근우)	25
14	기업경영 안정 등을 위한 상품파생시장 제도 개선방안	10.10.15~ 10.12.14	서울대 산학협력단 (안동현)	30
15	회계감독제도 개편 등에 대응한 감리조치기준 개선안 연구	10.10.15~ 10.12.14	한국법제연구원 (이준호)	30
16	우리나라 특정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이행방안	10.04.20~ 10.11.30	한국금융연구원 (이상제)	30
17	금융회사 자금세탁 판단지표(Rule)의 유용성 연구	10.10.15~ 10.12.27	(주)데이타메이션 (한미혜)	27.7
18	한국의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 -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10.10.25~ 10.12.20	KAIST, 삼성경제연구원 (이병태)	47.5
19	미국 금융규제개혁법 중 자본시장 관련 규제내용 및 시사점	10.11.03~ 10.12.20	자본시장연구원 (정찬우)	10
20	미국 금융개혁과 보험규제에 대한 시사점 연구	10.11.03~ 10.12.20	보험연구원	3

□ 2011년

연번	과제명	계약기간	계약자 (책임연구원)	용역비 (백만원)
1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종합 대응 방안 마련	11.01.27~ 11.06.02	금융연구원 (이명환)	40
2	금감원장 및 감사 성과평가 개선방안	11.04.06~ 11.05.30	금융연구원 (이병윤)	20
3	회계산업 중장기발전 방안	11.05.02~ 11.06.30	한국회계학회 (이창우)	30
4	저축은행 경영부실 실상 및 원인 규명 백서	11.06.27~ 11.09.26	KDI (정찬우)	15
5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백서	11.07.01~ 11.12.30	KDI (고영선)	50
6	대형 IB 자기자본규제에 관한 연구	11.07.11~ 11.11.04	자본시장연구원 (장정모)	30
7	금융소비자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11.07.26~ 11.11.30	KDI (천규승)	25
8	금융회사의 금융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연구	11.08.19~ 11.10.31	법무법인 태평양 (정의중)	29
9	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계약간 규제 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11.09.23~ 11.12.15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30
10	법인설립과 신탁계약 등이 자금세탁 등 불법적 목적에 이용될 위험과 그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11.10.04~ 11.12.20	김&장법률사무소 (서문식)	39
11	비금융전문직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도 분석에 관한 연구	11.10.12~ 11.12.20	금융연구원 (이윤석)	44
12	금융회사간 단기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및 관리감독 개선 방안	11.10.19~ 11.12.16	금융연구원 (이규복)	30
13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 규제 도입방안	11.10.19~ 11.12.20	금융연구원 (김동환)	30
14	ETF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	11.10.25~ 11.12.15	금융연구원 (연태훈)	30
15	부동산개발금융 제도개선방안 연구	11.10.26~ 11.12.25	건국대산학협력단 (고성수)	30
16	외은지점 규율체계 정비관련 주요 검토사항	11.10.27~ 11.12.27	금융연구원 (서병호)	30
17	외환, 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11.07.15~ 12.02.2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덕용)	35
18	청년창업 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방안	11.12.22~ 12.04.21	금융연구원 (구본성)	30

□ 2012년

연번	과제명	계약기간	계약자 (책임연구원)	용역비 (백만원)
1	보이스피싱 근절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2.04.06~ 12.06.03	형사정책연구원 (윤해성)	20
2	ELS 및 DLS 투자자보호 강화 방안	12.04.24~ 12.09.23	자본시장연구원 (남길남)	26
3	고령화 대비 공·사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12.04.30~ 12.08.31	보험연구원 (김대환)	30
4	금융세계 현황 및 발전 방향	12.05.04~ 12.08.31	금융연구원 (연태훈)	30
5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12.05.18~ 12.10.31	한국채권연구원 (박창균)	39
6	기업공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2.05.25~ 12.09.24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35
7	대학생 고금리 대출 이용 실태조사	12.06.08~ 12.07.07	한국갤럽연구소 (박병일)	10
8	주요 신흥국과의 전략적 금융 협력 강화 방안	12.06.25~ 12.10.31	대외경제연구원 (강대창)	26
9	금융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12.07.06~ 12.10.05	한국재정학회 연세대 산학협력단 서강대 산학협력단 (원윤희 외 3명)	20
10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12.07.17~ 12.11.20	금융보안연구원 (김영대)	40
1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향	12.07.26~ 12.11.26	한국연금학회 (신성환)	30
12	대부업 관리·감독 효율성 제고 방안	12.07.30~ 12.10.29	한국금융연구원 (서병호)	20
13	가계부채 미시분석	12.08.16~ 12.11.15	한국금융연구원 (서정호)	40
14	핵·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금지 국제기준 이행 방안	12.08.31~ 12.12.10	형사정책연구원 (박미숙)	35
15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상품정보 제공방안	12.09.10~ 12.11.30	서울대 산학협력단 (나종연)	34
16	新 FATF 국제규범 주요 내용과 대응전략 (금융부문 중심)	12.09.13~ 12.12.30	한국금융연구원 (김자봉)	35

강기정 의원(민주통합당)

17. 인터넷 및 전화 등으로 제기된 진정/민원 등의 처리내역

☐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 접수현황

(단위 : 건)

	민원	진정
2010년 (‘10.1.~’10.12.)	3,776	755
2011년 (‘11.1.~’11.12.)	3,223	128
2012년 (‘12.1.~’12.8.)	2,129	6

○ 처리결과

(단위 : 건)

	처리완료	민원취하 등
2010년 (‘10.1.~’10.12.)	4,666	380
2011년 (‘11.1.~’11.12.)	3,554	368
2012년 (‘12.1.~’12.8.)	2,042	262

강기정 의원(민주통합당)

18. 소관 법령 및 지침

☐ 별도 첨부

금융위원회 법령 현황

연번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
3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	
4	금융지주회사법	○	
5	한국산업은행법	○	
6	한국정책금융공사법	○	
7	중소기업은행법	○	
8	기술신용보증기금법	○	○
9	신용보증기금법	○	○
10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	○
11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	
12	예금자보호법	○	
13	금융중심지의조성과발전에관한법률	○	
14	은행법	○	
1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16	전자금융거래법	○	
1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
18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	
19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	
20	보험업법	○	○

21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
22	상호저축은행법	○	○
23	여신전문금융업법	○	○
2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25	신용협동조합법	○	○
2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
27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29	공사채등록법」	○	○
3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31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회사법	○	
32	담보부사채신탁법	○	○
3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34	공인회계사법	○	○
3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
36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
37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	○
38	공적자금관리특별법	○	
39	공적자금상환기금법	○	
40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41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지침 등 규정 현황

연번	규정 명
1	금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3	과징금징수업무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4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5	자금세탁방지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6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7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8	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업무 지침
9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관계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0	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 업무 운영준칙
11	금융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12	기업구조조정조합등록규정
1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
14	신용협동조합 인가지침
15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17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18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업무 인가지침
19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 감독규정
20	자산유동화업무 감독규정
2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연번	규정명
	제3항제2호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22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23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24	신용정보업 인허가지침
25	자금세탁방지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
26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등에 관한 규정
27	금융위원회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규정
28	금융위원회 인사관리기준
29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30	소액신용대출사업의 법인세 비과세요건 고시
3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32	특정금융거래 보고 및 감독규정
33	금융정보분석원 업무지침
34	금융위원회 위임전결규정
35	상호금융업감독규정
36	기록관운영지침
37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38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39	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
40	금융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
41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42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연번	규정 명
43	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44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45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 적립금 관리·운용 기준
46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47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48	전자금융감독규정
49	퇴직연금감독규정
50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51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52	보험업감독규정
53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54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5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6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체결 이외에 관한 사항
57	한국정책금융공사 감독규정
58	금융감독법규 위반여부에 대한 사전심사 청구제도 운영규칙
59	은행업 감독규정
60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61	금융위원회 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
62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63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64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연 번	규 정 명
65	행정지도 운영규칙
66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67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68	금융투자업 규정

강기정 의원(민주통합당)

19. 비밀문서, 대외비 문서 수발대장(최근 3년)

☐ 별도제출

강기정 의원(민주통합당)

20. 정보공개청구 목록 및 처리결과, 공개된 정보의
사본

- ☐ 2011~2012년 9월 현재 정보공개 접수목록 및 처리결과
별도제출

강기정 의원(민주통합당)

21. 서민금융 관련

- 사채시장규모 관련 보고서 일체(연구용역, 민간회사 보고서 포함)

- ☐ “08년 사금융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및 “대학생
고금리대출 이용실태 점검결과” 보고서
<별첨자료> 참조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현황 및 정책 과제

2009. 12

한국채권연구원

목 차

<요약>

I 서론

II. 마이크로크레디트의 개념과 발전

1. 개념
2. 마이크로크레디트 발전에 관한 역사적 고찰

III. 후진국의 마이크로크레디트 현황

1. 사업규모
2. 수익성 및 자산 건전성
3. 사업 확산도

IV. 유럽연합지역 마이크로크레디트의 현황 및 정책

1. 유럽연합지역 마이크로크레디트의 현황
2. 유럽연합의 마이크로크레디트 정책

V. 국내 서민금융시장 및 마이크로크레디트 현황

1. 서민금융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
2. 국내 마이크로크레디트 수행기관 현황
3. 마이크로크레디트에 대한 정책지원
4. 우리나라 마이크로크레디트 부문의 문제점

VI. 마이크로크레디트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1. 명확한 정책목표의 설정
2. 장기적 지속가능성의 확보
3. 대출대상자 기준의 합목적성 제고
4. 미소금융 중앙재단과 지방재단의 관계 정립
5. 마이크로크레디트 전문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
6. 투자수입 확대 방안에 대한 검토

참고문헌

< 요약 >

I. 서론

- 최근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대한 신용공급 제약이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대안적 통로로 마이크로크레디트에 대한 관심 고조
 - 신용공급 결정을 전통적 금융기법에 의존하지 않는 마이크로크레디트(micro-credit; MC)에 대한 관심 증가
 - MC는 정량적 지표에 집중하여 대출 대상자를 선정하고 차주의 상환능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회수를 제고를 추구
- 정책 당국은 자활의지는 있으나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소금융” 설립을 통한 MC사업의 확대를 추진
 - 금융시장이 발달한 지역에서 최초로 추진되는 대규모 MC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더불어 한국적 상황에 필요한 사업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
- 본 연구는 최근 MC의 국제적인 경향과 국내 서민금융시장 구조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미소금융의 효과적 운영방안에 대한 정책방안 도출을 목표로 함.

II. 마이크로크레디트의 개념과 발전

1. 개념

- 원래 의미에서 마이크로파이낸스(micro-credit; MC)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규모 무담보 대출서비스 제공을 지칭
 - 차주가 직접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소규모 자영업이나 영세기업(micro-enterprise)에 대한 창업 및 운영자금 공급함으로써 이들의 소득창출기반 강화를 지원
 - 전통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을 추구하는 비영리 민간기구(non-profit non-government organizations)가 MC서비스 공급자의 다수를 차지
- MC의 개념적 외연은 꾸준히 확장되면서 재정의 되고 있음.
 - 대출 서비스만을 지칭하는 MC에서 시작하여 전반적인 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의미하는 마이크로파이낸스(microfinance, MF), 나아가 시장을 둘러싼 금융환경까지 포괄하는 포괄적 금융시스템(inclusive financial system)으로 확대
 - 금융서비스 공급을 통한 빈곤퇴치를 보다 광범위한 규모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면서 금융서비스 자체 뿐 아니라 이를 둘러싼 환경에까지 관심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MC의 개념적 외연이 확대
- MC는 개념적으로 뿐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선진국에도 수용되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소득 분배 불평등 문제에

대응하는 중요 수단으로 활용 되고 있음.

- 1980년대 이후 구미 제국을 위시한 선진 각국에서 고기술 노동 (high-skilled labor)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고용관계의 불확실성이 증대하면서 소득 분배가 빠르게 악화
- 이러한 소득 불평등 확대 문제에 대응하는 주요 정책 수단으로 MC를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대두
 -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들의 생존 가능성과 소득 창출 능력 제고를 추구
 - 저소득층 지원을 목표로 순수 민간 차원의 노력이 NGO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 최근에는 각국 정부가 MC를 유력한 정책 수단의 하나로 인식하고 이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MC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목적, 대상, 수단 측면에서 공통적인 요소를 찾을 수 있음.

- 목적 측면에서 저소득층의 소득창출기반 강화를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빈곤퇴치, 경제발전, 소득분배개선 등을 추구
- 저소득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설정
- 영세자영업자에 대하여 신용을 공급하고 경영관련 기술을 제공

2. MC 발전에 대한 역사적 고찰

가. 발흥기: 1970년대

- 현대적 의미의 MF는 중남미에서 시작된 ACCION-International, 방글라데시에서 시작된 Grameen Bank를 효시로 함.
 - 1973년 ACCION International이 영세기업(micro-enterprise; ME) 개념을 확립하고 후진국의 빈곤퇴치를 위해서 이들에 대한 원활한 금융 서비스 제공이 중요한 과제임을 부각시킴.
 - ME 창업을 원하는 빈곤층에 대한 적절한 금융 서비스의 공급을 통하여 빈곤퇴치를 추구하는 사업 모델 제시
 - Grameen Bank는 방글라데시 농촌 지역의 빈곤 퇴치를 목적으로 Muhammad Yunus가 1976년 빈곤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규모 대출 사업, 즉 MC 공급 사업에 그 기원을 두고 있음.
 - 장시간의 노동에도 불구하고 살인적인 고금리 사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농촌 지역 거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이자율을 부과하는 대체적인 신용 공급원을 제공함으로써 노동을 통한 자발적인 빈곤 탈출을 지원
- 이 시기 MC 모델의 특징으로 ① 후진국의 빈곤 퇴치를 궁극적 목적으로 ② 빈곤층의 소득 창출 능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③ 빈곤층이 종사 또는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저리의 소규모 대출을 ④ 비영리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제공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음.

나. 성장기: 1980년대

- MC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저소득·저신용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에 대한 기존의 통념에 반하는 결과들이 도출

- 저소득, 저신용 계층에 대한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90% 이상의 높은 대출 회수율 유지
- 빈곤층이라고 하더라도 대출 서비스에 대하여 상당한 수준의 이자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

□ 1980년대에는 상업적 요소를 강조하는사업 MC모형 출현

- 사업 수행 방식을 적절히 설계하는 경우 공공 부문이나 자선 단체로부터의 기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사업 수입만으로 장기적 생존 및 성장이 가능한 정도의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판명됨.
- 기존의 비영리 단체가 정식 상업은행으로 변모하여 제도권 금융 기관으로 전환하되 여전히 MC 개념에 부합하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기존의 상업은행이 새로 MC 시장에 진입하는 등의 변화가 발생

다. 확산기: 1990년대

□ 1990년대에 들어 MF 개념이 정착되었으며 국제화가 진전

- 소액 단기 대출을 지칭하던 MC의 외연이 확대되어 빈곤층에 대하여 보다 다양한 형태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로 진입하였으며 그에 따라 MF 개념이 대두
- 서비스가 도달하는 지역적·계층적 범위(scale)를 확장하기 위하여 성공적인 MFI들이 국제적 차원의 사업을 수행
 - 종래 개별 국가 수준에서 사업을 수행하던 MFI들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갖추고 사업을 전개
 - 다른 나라의 MFI를 자회사로 편입하여 직접 진출하거나 이들 국

가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MFI에 대하여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진출하는 방식을 모두 구사

- 선진 각국이 후진국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MC와 MFI에 대한 자금공급, 기술지원이 적극 활용되기 시작
 -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은 후진국에 대한 원조의 한 방식으로 MFI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활용
 - 세계은행, EBRD 등과 같은 다자간 개발원조기구 산하 국제금융기구가 MFI에 대한 주요 자금 공급원으로 부상

라. 제도약기: 2000년대

- MFI에 대한 자금 공급으로 목적으로 하는 MF 투자펀드(microfinance investment fund)의 활동에 힘입어 MC의 사업 규모와 범위가 확장되었고 자본비용의 감소로 저렴한 금융 서비스 제공 가능
 - MF 투자펀드는 사회적 책임투자 계열의 투자펀드와 상업적 목적을 추구하는 투자펀드로 구분 가능
 - 어떤 경우이든 MF 투자펀드가 MFI에 투자할 때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수익 창출을 전제로 함.
 - 종래 제도권 금융기관에 적용되던 각종 위험관리 기법을 적절히 변형하여 MFI에 적용함으로써 투자 자산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면서 금융혁신이 발생하기도 함.
- MFI가 후진국에서 거둔 빈곤 퇴치 성과에 주목하고 이를 서구 선진국에 이식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전개

-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빈곤 감소와 소득 불평등 문제 완화를 추구
 - 창업을 통한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통하여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점차 심화되는 소득 불평등 문제에 대응하려는 시도
- 영국의 Street UK, 프랑스의 Adie, 스페인의 Fundacio Un Sol Mon, 아일랜드의 Aspire 등이 대표적
 - 저소득층의 소규모 창업에 대한 자금제공 및 경영지도가 중심적인 사업

III. 후진국의 MC 현황

- 2005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서 약 3000여개의 MFI 및 유사 기관이 저소득 빈곤층을 주된 대상으로 대출 및 예금 서비스 제공
 - 이 중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단기 소액 대출 및 예금 수취, 보증 제공 등의 업무에 특화된 전통적 MF 모델을 따라 활동하는 MFI는 약 900여개로 추산됨.

1. 사업 규모

- 2005년 말 MIX가 파악하고 있는 MFI는 약 245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약 178억 달러가 대출

- MFI가 보유한 예금은 약 111억 달러로 대출의 45% 가량이며 자본금은 44.6억 달러
- MFI의 가장 핵심적 기능인 대출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MF 사업이 진행되어온 중남미(78.3억 달러),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동아시아(46.5억 달러), 남아시아(19.95억 달러) 등에서 활발하게 전개
- 1997년부터 2005까지 8년 동안 MFI의 자산은 연 30%, 대출은 연 40%의 높은 성장세 시현
- 최근 아프리카와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빠르게 성장

2. MFI의 수익성 및 자산 건전성

- MFI의 수익률과 자산건전성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임.
 - 2005년 자기자본수익률(ROE)이 4.67%이며 MF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한 중남미와 동아시아의 경우 각각 11.14%와 5.28%로 상당한 수익성을 보임.
 - 대손비율(write-off ratio)은 1.57%로 매우 낮은 상황이나 중남미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MF 역사가 짧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에서 MFI들이 운영의 자립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익성이 상당한 변동성(volatility)을 나타내고는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상승하는 추세
 - 대손비율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운영 자립도

는 매우 빠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 MFI가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 충분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음.

3. 사업의 확산도(outreach)

□ 전 세계적으로 약 4,300만명의 후진국 주민이 MFI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음.

- 인구 밀집지역인 남아시아와 동아시아 지역의 대출자 수가 전체 대출자의 70% 가량을 차지
- \$300이하의 소액 대출이 60% 가량을 차지하며 GNI 대비 대출 규모는 50% 수준을 보임.
- 빈곤선(poverty line)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은 55% 수준

□ 대출자 수는 1998년 이래 연 평균 30%의 빠른 성장세를 보였으나 300 USD이하의 소액 대출 비중은 점차 하락

- 1998년 약 700만명에 불과하던 MFI 대출자가 2005년에는 4,30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빠르게 증가
- 소액 대출의 비중 감소는 전반적인 소득 증가와 사업 성숙으로 인하여 대출의 평균 규모가 상승하는 현상을 반영

IV. 유럽연합지역의 MC 현황 및 정책

1. 유럽연합지역의 MC 현황

가. 유럽연합지역 MC부문 개관

- 유럽연합은 경제발전 단계, 금융시장발전 정도, MC 사업 모형 등 측면에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방식의 MC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지역
 -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 및 금융시장 환경은 MC가 시작된 남미나 남아시아 국가들보다는 유럽연합 회원국과 가까움.
 - MC 사업의 주체 및 사업 방식 등 사업모형 측면에서도 유럽연합에서 시도되고 있는 모형이 우리나라에 더 많은 시사점을 제공
 - EMN(European Microfinance Network)이 발표한 역내 국가의 MC 진전 상황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중심으로 논의

1) 대출 규모

- 유럽연합 MC 기관들은 2007년 42,759건, 3억 9,400만 유로를 대출
 - 일반적으로 유럽연합 지역에서 MC 대출은 고용인 10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에 대하여 행해진 25,000유로 이하의 대출을 의미
 - 대출 건수를 기준으로 할 때 프랑스, 불가리아, 독일, 루마니아, 스페인, 핀란드, 영국 등지에서 활발한 활동이 확인됨.
 - 대출 건수 측면에서는 스페인,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대출 금액

측면에서는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등의 국가에서 최근 MC
가 빠르게 성장

□ 대부분의 MC 기관은 여전히 매우 영세한 규모로 머물러 있음.

- 39%가 20건 이하의 대출을 시행할 정도로 소규모 영업 유지하공
있으며 400건 이상의 대출을 실시한 경우는 20%에 불과
- 2007년 대출의 평균 규모는 약 11,000유로 수준
 -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핀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등의 국가가
전체 평균보다 큰 규모의 대출을 시행

2) 대출기관의 성격

□ NGO와 재단 등 비영리 MC 기관이 산업을 주도

- NGO가 28%, 재단(foundation)이 26%, 정부 소속 기관이 17%를 차
지하여 비영리 주체가 다수를 점하고 있음.
- 지역적으로는 영국, 포르투갈, 폴란드, 이탈리아 등의 국가에서
NGO의 비중이 특히 높음.
 -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의 국가에서는 정부 소속 기관이 상
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

□ MC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안정적인 금융서비스 접근을 제공함으로써
영세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

- 설립목적은 ① 고용 촉진과 기업가 정신 제고 ② 중소기업 육성과
경제발전 ③ 금융배제(financial exclusion) 해소 ④ 사회통합과 빈
곤퇴치 등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정리 가능

□ MC 기관이 추구하는 목적과 기관의 형태, 평균적인 대출 규모 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존재

- 사회 통합 촉진이나 금융 배제 해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보다 고용 촉진이나 중소기업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제시한 MC 기관의 건당 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경향

□ MC 기관의 대부분은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규모 또한 영세

- 설문에 응한 MFI의 60% 가량이 2000년 이후에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1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기관은 30% 가량에 불과
- 2/3 가량의 MC 기관이 5인 이하의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경우는 15% 가량에 불과
 - 절반가량의 MC 기관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주로 대출서류의 진위 검증, 대출 전 상담 등의 영업에서 활동

3) 고객 집단

□ 대부분의 MFC 기관이 영세자영업 창업 또는 운영자금 공급을 추구

- 노점상 등 미등록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제공을 시행하는 경우는 32% 가량인 것으로 조사됨.
- 일반적으로는 저소득 저신용 계층에 대한 대출을 표방하고 있으나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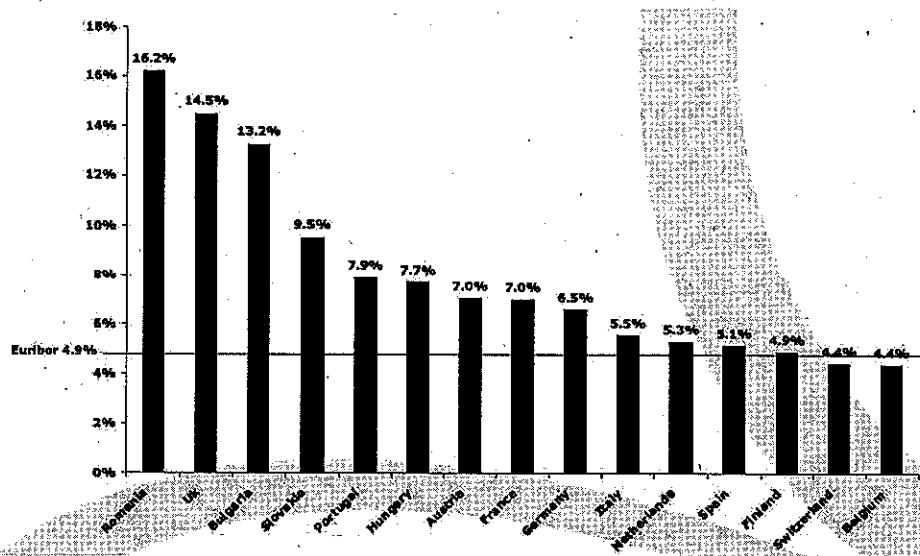
4) 대출 상품

- 만기 6개월부터 8년까지 다양한 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나 70%가량이 만기 3년~5년의 대출
 - 만기 1년 이하의 단기 대출은 10%, 만기 6년 이상의 장기 대출은 15% 가량을 차지
 - 약 2/3 가량의 대출 상품이 1달부터 2년까지 다양한 거치기간을 허용하고 있으며 평균 거치기간은 6개월
- 국가별로 상당한 이자율 수준의 차이를 보임.
 - 루마니아(16.3%), 영국(14.5%), 불가리아(13.2%) 등의 국가에서는 10%가 넘는 높은 이자율이 부과되고 있음.
 - 이자율 수준의 차이는 MC 기관의 설립목적과 조직형태 등의 차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
 - 사회적 목적을 강조하는 NGO나 재단이 주류를 이루는 핀란드, 스위스, 벨기에 등에서 5%내외로 이자율이 낮음.
 - 보다 상업적인 형태의 MC기관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동유럽 국가의 경우 대부분 10% 내외의 높은 이자율 부과
 - 이자 이외에 대출 신청료나 대출 심사료 명목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여 대출 관련 행정 비용의 회수를 추구하는 경우가 40% 가량에서 발견되었으며, 38%는 연체이자를 부과
- 담보나 보증 및 보증인 요구, 예금 예치 요구 등 전통적인 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위험 감소 수단을 활용하기도 함.
 - 43%는 대출에 아무런 담보 조치를 취하지 않는 순수 신용 대출 상

품을 취급

- 보증인(43%), 담보(33%), 보증 프로그램(21%) 등을 전제로 하는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
- 후진국 MF에서 자주 활용되는 동료집단에 의한 압력(peer pressure)을 위험 감소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17%에 그침.

국가별 평균 대출금리



□ 62,100유로부터 525유르까지 다양한 건당 평균 대출 규모를 보임.

- 상업적 측면을 강조하는 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정부 소속 기관의 평균 대출규모가 10,000유로를 넘어 상대적으로 큰 반면 NGO, 저축 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은 규모가 작은 대출에 집중
- 건당 평균 대출 규모는 국민소득(GNI)의 50%~70% 수준이 일반적

- 대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정성적·정량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
 - 대출 여부에 영향을 주는 중요성에 따라 ① 보유 자산의 규모 또는 추가적인 투자 재원 보유 여부 ② 보증 존재 여부 ③ 담보 제공 여부 ④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창업 희망 업종의 전망 ⑤ 차주의 인간적·개인적 특성 등
- 개인을 대출단위로 설정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대출신청 후 실제 대출이 일어질 때 까지 평균 40일 가량이 소요
 - 집단대출을 시행하는 경우는 12%에 불과하였으며 94%가 개인대출 상품을 판매
 - 22%의 MC 기관은 최초 대출이 무사히 상환되는 경우 이어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위험 관리를 추구
- 대부분의 MFI가 대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 경영 컨설팅 서비스 제공
 - 경영 컨설팅을 강제적으로 요구(23%)하거나 필요한 경우 요구(29%)하는 경우가 다수
 - 경영 컨설팅 전문가와 차주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20%)하거나 차주가 요청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12%)하는 경우도 있음.

5) 경영 상태

- 절반가량의 MC 기관이 100%를 넘는 운영자립도를 달성하여 자생적인 활동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운영자립도는 영업수입(operating revenue)과 영업비용(operating cost)의 비율로 계산되며 추가적인 외부 자금 유입 없이 자체적인

수입 기반으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 평균 운영자립도는 80% 가량으로 조사되었으며 국가별로는 이탈리아의 128%부터 벨기에의 5%까지 매우 다양한 분포를 보임.

□ 대출 상환비율은 평균 89%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

- 동유럽 국가 소재 MFI가 높은 상환 실적을 나타내었으며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MFI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성과를 보임.

□ 평균 14%의 연체율을 유지할 정도로 우수한 자산 건전성을 유지

- 대출자산 중 회수 불가능한 대출의 비율로 정의되는 대손비율(write-off ratio) 또한 5%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68%로 상당한 수준의 자산 건전성을 확보

6) 자금 조달

□ 운영비용을 외부에 의존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

- 민간 기부금이나 공공부문 지원금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66%를 차지하였으며 자체적인 수입으로 이를 충당하는 경우는 28%에 불과

□ 대출재원은 민간 기부금, 공공부문 지원금, 차입 등으로 충당

- 조사 대상 MFI의 59%가 민간 기부금을, 41%가 공공부문 지원금을, 13%가 차입을 대출 재원으로 활용

나. 유럽연합지역 MC 기관 사례

- Aspire Micro Finance는 내전으로 피해를진 북아일랜드 지역에서 영세자영업자나 영세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공급을 목적으로 활동
 - 신규 창업 지원보다 기존 영세업자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업주가 지원 대상
 - 최초 대출은 100~5,000 파운드로 비교적 소규모이나 상환실적이 좋은 차주에 대해서는 15,000 파운드까지 대출하는데 평균 대출 규모는 4,000파운드 가량
 - 대출 기간은 최초 대출에 대해서는 3~9개월로 비교적 짧게 설정되지만 상환실적이 좋은 차주에 대해서는 18개월까지 연장
 - 이자율은 15%~20% 수준에서 차주와 대출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
- Street UK는 5인 이하 영세기업에 대한 신용공급과 기술지원을 목적으로 2000년 영국 Binghamton에서 출발
 - 고객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2003년부터는 직접적인 MC 대출 사업에 더하여 여타 소규모 MC 기관들을 위하여 신용상태 점검, 상환 및 연체 실적 관리 등 back office 기능을 대신 해주는 사업 수행
 - 신용위험 관리를 위하여 상환실적에 따라 대출의 규모와 조건을 조정하는 방식을 활용

- 최초 대출자에 대하여 10,000파운드를 상한으로 대출하지만 상환 실적에 따라 25,000파운드까지 증가 가능.
- 대출기간 또한 최초 대출의 경우 1년을 상한으로 하지만 5년까지 연장 가능

□ Fair Finance는 2005년부터 영국 런던지역에서 소액 서민대출과 금융상담 서비스를 공급

○ 긴급자금이나 생계자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개인대출 (personal loan), 영세자영업 창업 및 운영자금으로 목적으로 하는 사업대출(business loan), 저소득 계층에 대한 일반 금융상담 (financial counseling) 서비스 등 세 가지 업무 수행

- 개인대출의 경우 최대 2,000파운드까지 만기 1~2년의 무담보 대출 제공

- 사업대출의 경우 최대 10,000파운드까지 5년까지 무담보 대출

○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1996건 1,915,900파운드를 대출

□ Adie는 창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은행권 대출 서비스 접근에 제약을 받고 있는 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을 목적으로 프랑스에서 출발

○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대출상품을 제공

- 최대 5,500유로를 7.98%이자율로 2년간 대출하는 상품은 대출금액의 5%에 해당하는 대출 수수료는 별도로 부과하는데 Grameen 모형의 집단대출 정신에 영향을 받아 대출 금액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증인(guarantor)의 공동 서명 요구

- 외부기관과 협조하여 제공되는 준지분(quasi-equity)성 대출 상

품은 무담보, 무이자(5% 대출 수수료는 별도)로 최대 7,400유로 까지 대출하며 상공회의소와 지역 정부의 자금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음.

- 최초 대출에 대해서는 1,000유로의 상한을 설정하는 등 차주의 신용도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
- 대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외부 컨설팅 기관과 연계하여 발전 전략 수립 보조, 경영기법 전수, 판매전략 수립 조언 등의 서비스를 제공
- 2008년 약 13,000건의 대출을 실시하였으며 62,0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알려짐.

- 프랑스 전역에 130여개의 사무실에서 400여명의 직원이 종사

□ Fair Initiative는 지역사회의 소규모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던 20여개의 프랑스 정부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1985년 출범한 통합체

- "Prets d'honneur"로 불리는 준지분성 대출 상품을 제공
 - 상대적으로 은행에 대한 접근 장애가 덜한 계층(almost bankable persons)이 종사자 3~10인의 영세기업 창업 시 자금 지원
 - 평균 대출 규모는 7,400유로(2007년)이며 이 금액의 7~10배에 해당하는 은행대출이 수반되는 경우가 다수
 - 2007년 동안 12,500건의 대출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은행을 통하여 추가적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가 약 5,000건
- 프랑스 전역에 걸쳐 240여개의 사무실에 500여명의 전문인력 종사

□ 스페인에서는 저축은행(savings bank)이 MC 대출을 주도

○ 저축은행들은 자체 재원으로 또는 정부의 각종 영세기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MC 대출을 실시

- 저축은행을 위시한 MC 기관과 대출자의 중간에 "MC 지원 사회 기구(social micro-credit support organization: SMSO)"가 위치하여 대출자에 대한 정서적 지원, 경영기법 전수, 사업계획의 이행 및 진전에 대한 모니터링 등 부가적인 지원을 제공

○ 46개 저축은행 전부가 자체 재원을 바탕으로 하는 MC 대출을 취급

-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7개의 저축은행은 2005년까지 약 10년의 기간 동안 3,921건, 4,180,000,유로의 대출 실적을 보였음.

○ 영세기업의 창업 및 운영개선을 목적으로 최대 25,000유로를 6년 동안 대출하는 상품이 가장 일반적

- 이자율은 3%~6%(2005년)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며 담보는 요구하지 않음.

- 차주의 상황과 업종 특징에 따라 6개월까지의 거치기간을 허용

○ 저축은행은 정부가 지원하는 ICO 프로그램을 통한 대출에도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 2005년까지 약 2000만 유로의 MC 자금을 대출

- 영세기업의 창업 및 운영개선을 목적으로 5%~6%의 이자로 최대 25,000유로를 5년 동안 대출

- 창업 및 경영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전액이 아니라 95%가량을 대출함으로써 낮은 이자율로 인한 문제 발생에 대응

□ MicroBank는 스페인의 저축은행 중 하나인 Catalan Savings Bank la Caixa가 상업적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MC 사업의 본격적 확장을 위하여 설립한 MFI

○ MicroBank는 금융에 대한 접근 확대라는 사회적 목적의 달성과 재무적인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

○ 사회적 MC, 재무적 MC, 가족지원 MC등 세 가지 프로그램 운영

- 사회적 MC는 공식 금융부문에 대한 접근에 제약을 받고 있는 개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대 15,000유로 대출

- 재무적 MC는 영세기업의 창업이나 결합에 소요되는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최대 25,000유로까지 대출

- 가족지원 MC는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가족에 대한 긴급 생계자금 대출 프로그램

○ 2008년 말까지 33,000건 2억4600만 유로의 대출을 실시

□ Bank Etica는 금융영역에서 개인과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경제적 활동 수행을 목적으로 1998년 이탈리아에서 시작

○ 구체적으로 은행사업 영역에 윤리적 측면을 도입함으로써 설립 목적 달성을 추구

○ 수취한 자금을 환경과 사회발전(social development) 등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는 영역에 투자

- 투자자금 조달을 위하여 요구불 예금, 저축 예금, 연금, 온라인 서비스, 계좌이체,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 제공

○ 2003년부터 다른 기관과 연계하여 MC 상품을 제공

- 자영업 창업자와 빈곤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상품을 제공
- 자영업 창업자에 대한 대출은 최소 5,000유로에서 최대 25,000유로를 3년~7년의 기간 동안 대출
-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목적의 대출은 1,000유로~7,500유로를 3년 만기로 대출하며 자영업 창업자금에 비하여 낮은 이자율 부과
- 2008년 말 현재 200여명의 직원 이탈리아 전역에 산재한 12개의 지점에서 활동 중
 - 3만여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기업회원 4,400여 곳이 포함

□ CREDAL은 1985년 설립된 벨기에의 신용협동조합으로 1996년부터 MC 대출 상품을 판매

- CREDAL의 목적은 사회적 목적을 위한 저축상품을 제공하고 신용 공급과 상담을 통하여 사회적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
- 2000년 "Credel MC²"라는 독자적인 MC 대출 프로그램 운영 시작
 - 투자목적 신용(Credit d'investissement)은 최대 12,500유로를 4년 동안 5% 이자로 대출하고 현금흐름 신용(Credit de tresorerie)은 최대 10,000유로를 1년 동안(차환 가능) 8% 이자율로 대출
 - 대출 원금의 50%에 대하여 보증인을 요구하고 대출 관련 수수료 3%는 별도 부과
- 2008년에는 MC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Fonds de Participation"과 제휴하여 새로운 대출 상품 출시
 - CREDAL은 대출자 선정과 대출 사후 관리를 담당하고, "Fonds de Participation"은 대출관련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분업 체계를

형성

- 연체로 인한 손실의 85%는 "Fonds de Participation"이 제공하는 보증으로 커버하고 나머지 15%는 CREDAL이 부담

□ Brussels Regional Investment Company (BRIC)는 브뤼셀 지역의 중소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대주주로 참여하여 설립된 벤처캐피탈(VC)

- 2000년에는 벨기에 정부와 EIF의 자금 지원으로 "창업기업 지원과 MC"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사업수행을 위하여 자회사인 BRUSOC 설립
- BRUSOC은 영세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상품과 빈곤층의 자영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상품을 제공
 - 2009년 말까지 280건, 6백만 유로의 자금을 공급
 - 대출에 대하여 사전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실시함으로써 사업 성공 확률을 높이고 상환률 제고를 추구

□ (시사점 1) MC의 주된 목적으로 영세 자영업이나 영세기업 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긴급 생계자금 대출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음.

- MC의 대상으로는 실업자, 저소득층, 여성 및 이민자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설정
 - 신용등급을 직접적인 기준으로 설정하기보다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신용등급이 낮고 그 결과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 획득에 애로를 겪는 계층을 대상으로 설정

- 창업 및 경영개선을 통한 실업 상태 탈출과 고용 확대를 강조하는 경향이 발견
- 투자를 전제로 하지 않는 소비성 자금에 대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

□ (시사점 2)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확고한 합의가 형성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 MC가 도입된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NGO가 주도하고 사회 운동 차원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사회지향형 MC 모형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사회지향형 MC 모형은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자금 공급을 통하여 곤경으로부터의 탈출을 지원한다는 점을 중시하므로 시장 이자율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5% 내외의 이자율을 부과
 - 이자 수입만으로는 자체적인 운영경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재정적인 자립을 이루지 못하고 공공부문 보조금이나 민간 기부금 등 외부 지원에 재원의 상당 부분을 의존
- 자체적인 수입으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자율 현실화 이외에 다수가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된 것은 아님.

□ (시사점 3) 다양한 형태의 MC 기관이 자신의 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저소득층의 창업을 통한 소득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무담보 소액대출이라는 공통점을 보유하지만 저소득층 중에서도 실업자, 여성, 이

민자, 기존 영세자영업자 등 보다 특정된 집단을 target group으로 설정하고 사업을 집중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

- 대출자가 종사하는 업종의 특징, 특히 현금흐름을 감안하여 상환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수요자에 요구에 부응하는 상품을 제공

- 대출 규모, 만기 등을 대출자의 현금흐름에 부응하도록 설계

- 최초 대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액·단기 대출을 제공하고 상환실적에 따라 보다 큰 규모의 자금을 추가적으로 공급

□ (시사점 4) MC 부문에 대한 정부의 간여(involverment)는 매우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짐.

- 프랑스나 스페인 등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직접 자금을 공급하거나 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 태도 견지

- 영국이나 아일랜드의 경우 정부가 MC 시장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법률적·제도적 기반을 정비함으로써 MC의 확산을 간접 지원

- 역사적으로 광범위하고 정교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대상에 영세 자영업과 영세기업을 포함

2. 유럽연합의 MC 정책

가. EC의 MC 정의

□ EC(2007)는 효과적 정책수행을 목적으로 사업 대상, 사업 목적, 영업방식 등의 측면에서 MC를 자세히 정의

- 종사자 10인 미만, 연대출(또는 총자산) 200만 유로 미만인 영세기업(micro-enterprise)의 기업주, 자영업자, 또는 사회적 소외계층 중 제도권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 영세기업의 창업이나 사업확장과 같이 소득창출과 고용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에 사용될 목적으로 25,000 유로 이하 소규모 자금을 무담보로 대출하는 금융서비스를 MC로 정의

나. 유럽지역 MC의 현황과 특징

- 유럽지역의 MC는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동유럽과 서유럽에서 상이한 양상으로 발전
 - 동유럽의 경우 MC가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금융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산시키는 도구로 인식
 - 서유럽에서는 주로 저소득층의 소득 증진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통합 제고를 목적으로 MC가 추진
- 1990년대 초반 동구권의 몰락 이후 동유럽 지역에서 MC는 전통적 금융회사, 특히 은행에 대한 대안으로 빠르게 부상
 - 계속된 혼란과 내전으로 인하여 황폐화된 사회와 경제 환경에서 은행을 위시한 전통적 금융기관의 역할 수행 미흡
 - 1990년대 중반까지 동유럽의 MC 기관은 170만 대출고객과 230만 예금고객을 유치하는 성과 시현하였으며 매년 3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MC가 정착단계에 접어든 일부 국가에서는 상업은행들이 MC 영역

에 진출하면서 상업적 고려에 기반을 둔 사업 모형이 빠르게 확산

□ 서유럽 지역에서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 MC가 개발도상국에서 거둔 성공담이 전해지면서 이를 접목시키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이 전개

- 프랑스의 Adie, 영국의 Street UK 등과 같은 단체들이 서유럽에 적합한 MC 모형의 개발을 위하여 이 시기에 설립된 대표적 단체
- 초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유럽 각국에서 MC 성공사례가 축적되면서 2000년대 들어서서는 고용유지와 소득재분배 악화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MC의 유용성이 부각
- 여전히 독자적인 지속가능성을 완전하게 확보하지 못한 상태
 - 정책당국의 지원이나 민간 기부금 등에 재원의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에는 사업규모가 지나치게 제한적

다. MC에 대한 유럽연합의 기본 입장

□ 유럽연합은 사회통합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MC를 적극 지원

- 제도권 금융기관의 이용에 제약을 받는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하여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도록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더 확고한 사회통합 달성을 추구
- 사회통합정책과 관련하여 MC가 활용되는 또 하나의 영역은 2000년대 이후 유럽연합이 확대되면서 새로이 회원국이 된 남동부 유럽

각국과 기존 서유럽 회원국 간의 경제적·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목적으로 실시되는 지역결속정책(regional cohesion policy) 부문

□ 유럽연합의 MC 관련 정책은 상호 유기적 관계 속에서 정교한 계층적 구조로 편성

- 가장 높은 수준에서 신리스본전략이 유럽연합 차원의 장기비전과 전략목표를 제시되고 다음 단계에서 영역별로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이 수립되어 있음.

라. 마이크로크레딧 정책의 기본 체제: A European Initiative for the Development of Micro-credit in Support of Growth and Employment(EIDMC)를 중심으로

□ 유럽연합이 MC를 바라보는 시각과 기본 정책방향을 천명한 EIDMC는 MC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네 가지 영역에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

- 첫째, 회원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법적·제도적 환경을 정비할 필요

- 은행 등 전통적 금융기법에 의존하는 금융기관을 규제·감독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기존의 법적·제도적 환경이 MC 기관의 운영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MC의 지속가능성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둘째, 기업가정신의 함양에 적합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책적 노력이 필요

- 구체적으로 영세기업과 MC 간에는 크게 세 단계에 걸쳐 연결고리가 존재: ① 영세기업 창업에 비하여 임금노동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운용되고 있는 고용정책을 개선하고 영세기업 창업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이나 기술지원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으며 ② 실업자나 사회보장수급자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③ 기존 영세기업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경영진단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생존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임.
- 셋째, 유럽연합은 물론 회원국 차원에서 MC의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전체 회원국에 전파할 필요
- 넷째, MC 기관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MC 기관의 안정적인 대출재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증, 대출, 출자 등 다양한 형태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2008년에는 5,000만 유로 규모의 Joint Action to Support Microfinance Institutions in Europe (JASMINE) 펀드, 2009년에는 5억 유로 규모의 PROGRESS Micro-finance Facility를 조성하여 MC에 대한 금융 지원 사업을 수행

마. MC 관련 금융지원 정책

1)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Framework Programme 2007-2013 (CIP)

□ CIP는 유럽연합의 장기발전전략 기본 지침인 신리스본전략이 제시한

전략목표인 “성장과 고용”의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의 하나로 수립

- CIP의 세 가지 하위 프로그램 중 MC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프로그램은 EIP인데 이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금융지원은 다음의 세 가지

- 창업이나 사업확장 단계에 있는 혁신중소기업에 대하여 지분참여 또는 유사지분(quasi-equity) 매입을 목적으로 하는 High Growth and Innovative SME Facility(GIF)
- 회원국의 중소기업 보증기구나 금융기관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SME Guarantee Facility(SMEG)
- 혁신중소기업에 투자하는 PEF(private equity fund) 등 투자자의 전문성과 기업평가 역량 제고를 지원하는 Capacity Building Scheme(SBC)

□ SMEG에는 영세기업 대출을 주업무로 하는 역내 MC 기관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장치가 특별히 마련

- 보증적격 요건은 종사자 9인 이하인 영세기업에 제공되는 만기 6개월 이상 대출 원금 25,000유로 이하의 대출
- MC 대출에 대한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대출 원금의 최대 75%까지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원으로 별도의 수수료나 보증료가 부과하지 않음.
- SMEG를 통하여 MC 기관에 최대 50,000유로에 달하는 기술지원(technical support)을 무료로 제공할 수도 있음.

2) Joint European Resources for Micro to Medium Enterprises (JEREMIE)

□ JEREMIE는 역내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EC, EIB, EIF가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펀드

○ EC는 유럽지역개발펀드(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의 자금을 사용하여 JEREMIE에 출자

○ 2007년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2008년부터 정식으로 출범

- 25억 유로의 자본금과 이를 바탕으로 발행한 75억 유로의 회사채 수입금을 합하여 총 100억 유로의 자금을 보유한 JEREMIE 홀딩펀드를 조성하여 이를 EIF가 위탁받아 운영

- JEREMIE는 기업에 대하여 직접 대출하지 않으며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에 대한 대출을 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출자, 보증제공, 대출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자금을 제공

-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이 보다 좋은 조건으로 용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

3) Joint Action to Support Microfinance Institutions in Europe (JASMINE)

□ JASMINE은 2007년 EIDMC에서 제시된 MC 관련 정책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 2008년 EC와 EIF가 주도하여 출범

○ JASMINE의 역할은 MC에 대한 금융지원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으며 MC 기관의 경영 개선 및 성장 촉진, 지속가능성 제고를 지원하

기 위한 활동까지 포괄

□ JASMINE은 EIF와 EC가 출자한 5,000만 유로의 자금을 재원으로 중장기 대출이나 유사지분에 대한 투자 등의 형식으로 MC 기관에 자금을 공급

- 2008년 9월 펀드 조성을 잠정적으로 완료하였으며 2009년 1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
- MC 기관이 일반 상업은행으로 전환하거나 신규 지점망 구축 등 사업규모 확대를 추구할 때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MC 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은 JASMINE의 사업영역이 아님.
 - 중장기 대출 제공이나 후순위채권 매입 등 MC 기관의 자본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자금공급 방식을 택하고 있음.
- 민간투자자가 MC 기관에 대하여 투자할 의사를 나타내는 경우에만하여 JASMINE이 민간투자자의 투자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투자
 - MC 기관의 규모 확대와 상업화 과정에 내재하는 위험의 일정부분을 공공부문이 공유함으로써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선택된 투자방식
- JASMINE은 MC 기관에 투자와 동시에 또는 별도로 무상으로 기술 지원을 제공

4) PROGRESS Micro-finance Facility (PMF)

□ PROGRESS Micro-credit Facility(PMF)는 2007년 하반기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로 인하여 큰 타격을 입은 고용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추구하기 위하여 설립된 MC 투자펀드

- EC가 PROGRESS 프로그램에 배정된 예산 중 1억 유로를 출자하여 펀드를 설립한 후 추가로 4억 유로를 차입하여 총 5억 유로의 재원을 조성
- 펀드 운영을 담당한 EIF는 MC 기관에 대하여 지분투자, 채무증서(debt instruments) 인수, 보증제공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자금 공급
- 펀드의 자금공급이 힘입어 향후 8년 간 약 45,000건의 MC 대출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

5) The European Fund for Southeast Europe (EFSE)

□ EFSE는 MC를 통하여 1990년대 발칸반도에서 발생한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남동부 유럽의 재건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MC 투자펀드

- 재건을 촉진하는 구체적 방안으로 중소기업, 특히 영세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MC 투자펀드를 설립하는 방안이 채택
- EFSE의 가장 큰 특징은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 투자자까지 유도한 것
 - 투자위험을 적절하게 재가공(repackaging)하여 위험의 정도가 서로 다른 복수의 트랜치(trenche)를 만들어 위험추구 성향이 서로 다른 투자자에게 제공

- 이런 방식을 거쳐 처음 민간기부로 조성된 금액의 7배 규모에 이르는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펀드를 구축
- 2009년 6월 말 현재 총 6억 7,200만 유로의 자금이 조성

바. 시사점

- (시사점 1) MC를 경제적인 목적과 사회적인 목적을 동시에 성취하는 수단으로 활용
 - 유럽연합에서 MC의 일차적 목표는 빈곤퇴치와 소득격차 축소라는 사회적 목적
 - 고용창출과 혁신능력 제고라는 경제적인 목적 달성에도 MC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인식
- (시사점 2) 영세기업에 대한 배려의 차원이 아니라 이들이 스스로 존립 기반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는 정책적 배려 없이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생존해 나갈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정책 원칙 확립
 -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생적 존립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영세기업을 선별
 - 보조금 지급 등과 같이 일방적이고 시혜적인 수단은 가급적 피하고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이 작동하도록 보증이나 대출제공 등의 지원에 대하여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요구
- (시사점 3) 영세기업을 직접 지원하지 않고 영세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경영기법을 전수하는 MC 기관을 지원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

- 저렴한 대규모 자금조성에 비교우위를 보유한 공공부문과 잠재력 있는 영세기업의 선별에 비교우위를 보유한 민간 MC 기관이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함으로써 공동 목표의 달성을 추구하는 전략
- 공공부문이 싸고 풍부한 자금을 MC 기관에 공급함으로써 이들 MC 기관의 사업역량을 강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더 큰 규모의 자금이 더 많은 영세기업에 흘러들어 가도록 유도하는 전략

□ (시사점 4) MC 기관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짐.

- 매입, 기술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수단을 구비하고 있으며 정책지원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수단을 동원하여 지원

V. 국내 서민금융시장 및 마이크로크레디트의 현황

1. 서민금융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

- 서민금융은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자금 규모가 작고, 담보능력이 떨어지며, 신용이 낮은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공급을 의미
 - 서민금융기관의 대출 이자율은 일반 금융기관 대출 이자율보다 높고, 이자나 원금의 연체율도 높으며, 상환 만기도 짧은 것이 특징
 - 담보가 부족한 계층을 상대로 신용위주의 영업을 하기 때문에 부실 가능성이 크고, 특히 서민들의 경제상황이 경기 하강 시 빠르게 악

화됨에 따라 서민금융기관의 경영 상태는 경기순환에 매우 민감

- 2003년 신용카드 위기 이후 저소득·저신용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시장이 급속하게 위축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신용경색 사태가 도래하면서 “금융소외” 문제가 대두

□ “금융소외”는 경제적·비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제도권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신용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 가능

- 신용시장에 만연하는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신용자원 배분 과정에서 시장실패가 발생하고 그 결과 일부 계층이 신용 획득에 실패하는 경우를 경제적인 이유에 의한 금융소외로 규정 가능
- 비경제적 요인에 의한 금융소외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으나 신용평가시스템의 불완전성, 규제, 사회적 관습 등을 가장 큰 원인으로 들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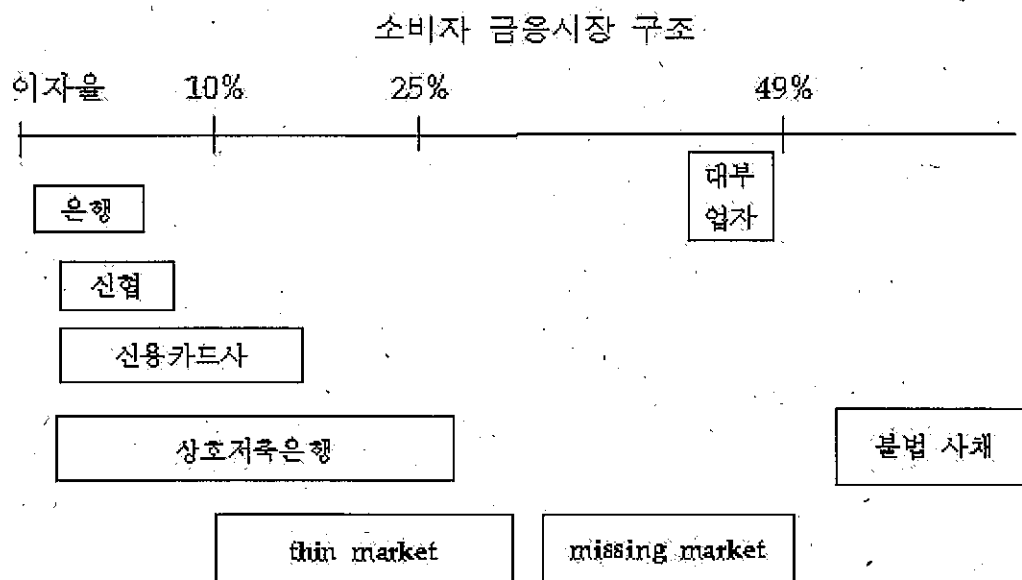
□ 금융소외는 매우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소비자 신용시장에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결과한다는 공통점을 가지므로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됨.

- 정보 비대칭성에 의한 신용할당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시장에 참가하여 자금을 공급하거나 시장에 참가할 의사가 있는 민간 경제주체를 지원함으로써 대응
- 신용평가시스템의 불완전성이나 규제 등이 금융소외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 상응하는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대응

□ 우리나라 소비자 금융시장의 다양성 결핍과 그로 인한 차상위 시장에

서의 경쟁 부재는 심각한 수준

- 은행을 위시한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회사가 우량 고객을 목표로 삼고 유사한 영업 전략을 추진
- 저축은행,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은 997년 말 경제위기 이후 금융구조 조정 과정에서 입지가 축소되고 자산 건전성이 강조되면서 전통적 활동 영역에서 사실 상 철수
- 대부업자는 일본계 자금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법률적으로 허용된 49%의 법정 이자율을 부과하면서 높은 수익률 실현
 - 불법 대부업자는 법정 금리를 훨씬 넘는 살인적 고금리를 부과하면서 성업 중



□ 이자율 20% 이상의 차상위 소비자 금융시장에는 영세 자영업 관련 자금 수요와 소비성 단기 대차자금 수요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차별적 정책 대응 필요

- 영세 자영업 창업 및 운영개선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 것은 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신용제약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존의 서민금융기관 역할 강화와 MC 활성화로 대응
- 소비성 단기대출 수요에는 대부업 시장의 경쟁 촉진으로 대응
 - 제도권 금융회사, 특히 은행이 대부업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
 - 동시에 대부업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감독 강화로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

2. 국내 MC 수행기관 현황

□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MC는 2000년 설립된 신나는 조합과 2002년 설립된 사회연대은행이 그 효시

- 신나는 조합은 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Grameen Bank)의 사업모형을 차용하여 설립된 MC 기관
 - 사업을 같이하는 개인들로 구성된 대출공동체가 대출 기본단위로 하여 이들은 대출에 대하여 공동책임을 부담
 - 2000년부터 2008년까지 157개의 대출공동체에 대하여 총 30억 6,836만원을 대출
 - 대출채원은 복지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정부지원금과 민간기업

또는 민간자선단체의 기부금으로 구성

- 사회연대은행은 개인을 대출의 기본단위로 하고 도시 저소득층의 창업자금을 공급하는 남미형 사업모형을 채택하고 있는 MC 기관
 - 도시지역에서 공동책임을 지는 대출집단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므로 자영업 창업이나 확장을 모색하는 개인이나 가족을 대출의 기본단위로 설정
 - 2003년 10건 2억3,000만원의 대출을 실시한 것에서 시작하여 2009년 말까지 총 1,165건, 248억 8,000만원의 자금을 공급
 - 대출재원은 신나는 조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부지원금과 민간기부금으로 조달
- MC 사업의 성과가 알려지면서 종교단체나 NGO의 주도 아래 다수의 MC 기관이 설립되어 사업을 확장

3. MC에 대한 정책지원

□ MC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지원은 2009년 시작된 희망키움뱅크

-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금융서비스 접근에 큰 어려움에 직면한 서민층을 지원한다는 정책방향이 설정됨에 따라 3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확장되면서 희망키움뱅크 탄생
- 희망키움뱅크는 민간 MC 기관에 대하여 대출재원을 공급함으로써 MC의 확대 촉진을 추구
 - 심사를 통과하여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MC 기관에 복지부가 대출 한도를 배분하고 MC 기관은 대출 자격, 1인당 대출액 상

한, 적용 이자율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복지부가 미리 지정한 기준에 따라 대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희망키움뱅크에 통보함으로써 대출 확정 및 시행

- MC 기관은 희망키움뱅크의 대출업무를 보조하는 대리점으로 가능을 수행할 뿐이며 따라서 대출채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관계에서 배제

□ 정부 재정이 직접 투입된 사업은 아니지만 정부 주도 하에 MC 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소액서민금융재단이 주관하는 저소득층 창업 또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시행

- 재단은 저소득층의 창업 또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 사업,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저소득층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

□ 2009년부터 중소기업청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영세자영업자와 무점포·무등록 사업자에 대한 보증을 제공

-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자영업자와 무점포·무등록 사업자의 경영자금 애로 완화를 위하여 특례보증을 실시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제공하고 농협을 위시한 제도권 금융회사가 보증을 근거로 자금을 대출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가지고 있던 보증 프로그램으로는 신용위험이 너무 높아 보증 획득이 불가능하던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금융상의 애로 해소를 보조하기 위한 조치라는 측면에서 MC와 동일한 목적을 추구

- 신용등급 6~8등급이며 3개월 이상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세 자영

업자에 대하여 대출을 위한 보증을 제공

- 2009년 말까지 31만 4천명에 대하여 3.6조원의 대출을 위한 보증을 제공

4. 우리나라 MC 부문의 문제점

가. 자금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한 규모의 한계

- MC를 통한 의미 있는 사회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보다 대규모의 안정적인 대출재원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 대출 재원의 대부분을 기업을 기업 기부금이나 정부 재정지원에 의존한다는 근본적인 한계점으로 인하여 사회적 변화를 추동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확대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존재
 - 미소금융재단의 설립은 우리나라 MC 영역에 획기적인 전기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음.
 - 규모에서 종래에 비하여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음은 물론 장기간 동안의 기부 액수에 대하여 미리 약속을 받음으로써 안정적인 대출재원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

나. MC 기관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결핍

- 외부 지원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현재의 재원조달 구조로는 MC부문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점
 - 자금 공급자의 요구에 따라 비용에 상응하는 이자율을 부과할 수

없는 MC 기관은 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자금 공급자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

-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대폭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MC 부문의 위축을 피할 수 없을 것

□ MC 부문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이크로파이낸스(MF) 투자펀드”를 통한 자금 공급 체계를 구축할 필요

- MF 펀드는 MC 기관에 대한 대출자 또는 투자자로서 MC 기관에 대한 일상적인 평가 및 감시 기능을 수행하지만 MC 기관의 의사결정이나 영업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는 없음.

- 따라서 자금을 기부하는 기업이 MC 기관에 대하여 매우 낮은 수준의 이자율 부과를 요구하는 등의 현상은 발생하지 않음.

- MF 투자펀드를 중심으로 하는 대출채원 공급 체계가 확립된다면 MC 부문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다 봐 용이하게 성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VI. 마이크로크레딧 부문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1. 명확한 정책목표의 설정

□ 향후 장기적인 정책방향의 설정과 발전전략 수립을 위하여 MC 정책

의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

- 명시적으로 제시된 바는 없으나 현재 MC 정책의 목표는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대한 원활한 신용 제공을 통한 서민생활의 어려움 경감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추론 가능
 - 현재 제시된 수준의 정책 목표는 MC를 통하여 성취를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과 정확하게 부합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제도권 금융회사와의 거래에서 애로를 겪는 저신용·저소득 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을 통하여 서민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거나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경감하는 등의 정책목표는 MC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간 단계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
 - MC 정책 목표에 대한 명확한 제시는 향후 정책 방향 설정과 발전 전략 설정에 대하여 기준을 제공하며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
- “창업 및 경영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공급”이라는 측면을 좀 더 명확히 부각시킬 필요
- MC는 우리나라 서민금융시장에서 빠진 고리(missing link)라고 할 수 있는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무담보 대출시장에서 자금 공급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궁극적 정책목적으로 해석되는 “서민 생활 안정”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수동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좀 더 구체적이고 능동적인 정책목표 설정이 필요
- MC의 목적을 “신용제공을 통한 지원”이 아니라 “소득 창출 기반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경영지원 체계 제공"으로 넓게 해석할 필요

- 보다 근본적으로는 영세자영업 부문의 생산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그에 따른 양질의 고용 창출이라는 적극적인 정책목표를 추구할 필요가 있음.

□ ① 경쟁력 있는 자영업 및 영세기업 육성을 통하여 고용을 확대하고
② 저소득층의 소득창출기반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제고하는 것을 MC 정책의 목적으로 명시적으로 천명하는 방안을 검토

- 현재 우리나라의 서민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①을 추구하는 시장지향형 MC와 ②를 추구하는 사회지향형 MC가 모두 필요

- 경제상황과 사회 환경에 따라 무게중심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두 가지 형태의 MC 모델이 공존하면서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

- 시장지향형 MC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고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사회지향형 MC는 그 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을 것

2. 장기적 지속가능성의 확보

□ 미소금융이 처한 환경을 감안할 때 외부로부터 추가적인 자금지원 없이 현재 계획된 사업 규모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 15%~20%의 이자율 부과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됨.

- benchmark로 행정비용 15%, 대손비율 5%, 투자소득비율 2.5%를 가정하는 경우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이자율 수

준은 18.6%로 추산됨.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에 요구되는 평균 이자율

	AF	CF	LL	K	I	필요 이자율
낙관적 가정	0.1	0	0.03	0	0.05	8.4%
Benchmark	0.15	0	0.05	0	0.025	18.6%
비관적 가정	0.2	0	0.1	0	0.0125	32.1%

- ☐ 지속가능한 MC 체제 구축을 위하여 요구되는 이자율 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점진적인 이자율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미소금융의 사업을 시장지향형 MC와 사회지향형 MC로 구분하고 정책적 판단에 따라 전체 기금을 배분하고 각 형태에 맞는 이자율 체계를 구축할 필요
 - 시장지향형 MC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15% 내외의 이자율 부과를 전제하고 차주의 상황, 자금 용도, 대출 금액, 대출 기간, 상환 실적 등에 따라 다양한 이자율과 상환방식을 부과하는 체제 구축이 필요
 - 사회지향형 MC에 대해서는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요구되는 이자율 부과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분간 현재와 같은 5% 내외의 이자율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 이 경우 중앙재단 및 지방재단의 운영경비를 보전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원의 확보가 전제될 필요
- ☐ 궁극적으로는 지방재단이 자신이 지향하는 MC 대출 모델을 선택하고 중앙재단이 제시한 원칙(guideline) 하에서 개별 대출 건에 대하여 자

체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이자율을 결정하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

- 지방재단이 시장지향형 MC를 추구할 것인지 사회지향형 MC를 추구할 것인지를 선택
- 지방재단은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선택한 MC 모델과 지역 실정에 적합한 대출 상품을 설계하고 그에 따라 이자율도 자율적으로 결정
- 중앙재단의 guideline은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강조, 이자제한법에 대한 강조, 비영리 기관으로서 미소재단의 법적 지위에 대한 강조 등 추상적이고 원칙적인 수준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그러나 이상의 대안은 지방재단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확립된 이후에야 시도할 수 있을 것임.

□ 미소금융 지방재단이 사회적 기업 인증을 획득하여 재정부로부터 운영경비를 일부 지원받음으로써 장기적 지속가능성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이자율을 낮게 유지할 수 있는 방안 추진을 검토

- 소정의 절차를 거쳐 노동부에 의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경영지원, 시설비 지원,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조세 감면,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 보조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됨.
- 사회적 기업의 인증 요건은 여러 가지이나 미소금융 중앙재단과 지방재단 요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거나 약간의 조정을 거친다면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사회적 기업 인증 획득에 성공하는 경우 평균적인 RM 인건비의 30%~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부로부터 지원 받아 행정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대출대상자 기준의 합목적성 제고

- 현재와 같이 자격요건과 대출 조건에 대하여 자세한 기준을 제시하기 보다는 ① 제도권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신용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애로를 겪는 대출 희망자가 ② 종사자 10인 미만(일부 업종의 경우 5인 미만)의 영세 자영업 및 영세 기업 창업이나 경영개선을 위하여 ③ 5,000만원 이하의 자금조달을 추구하는 경우 정도로 일반적 원칙만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요건 ①은 잠재적인 상환능력은 있으나 제도권 금융회사와의 거래에 장애를 겪는 계층에 대한 대출이라는 MC 본래 의도를 반영
 - 요건 ②는 영세 자영업이나 영세기업의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공급 목적으로 자금이 공급되어야 함을 규정 하는 것
 - 요건 ③은 무담보로 제공되는 대출로 구성된 자산 포트폴리오의 신용위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으로 이해 가능
 - 세 가지 매우 일반적인 요건만으로도 현재 상당히 자세히 규정되어 있는 대출 적격 요건을 모두 포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차주가 처한 상황에 부합하는 신축적인 대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장점 확보

4. 미소금융 중앙재단과 지방재단의 관계 정립

- 현재, 구도 하에서는 미소금융 지방재단의 유인 구조가 정책목적 달성과 합치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배제하지 못함.
 - 부실채권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방재단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유인구조가 확립되어 있지 않음.

- 특히 중앙재단이 보상하는 운영경비가 대출액에 연동되어 있는 경우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매우 느슨한 대출심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임.

- 지방재단이 신용위험 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대출 재원 배분을 전년도 상환률이나 대손비율에 연동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여기에도 상당한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

□ 장기적으로 중앙재단이 자금을 지방재단에 사실상 위탁하여 집행하는 현재 방식을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대출하는 체제로 전환할 필요

- 중앙재단은 현재와 같이 민간 기부금과 휴면예금 전입금을 바탕으로 MC 대출 재원을 마련하여 이를 관리

- 대출 재원 배분에서 중앙재단은 미리 정해진 원칙에 따라 지방재단에 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

- 지방재단은 중앙재단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아 자기 책임 하에 대출을 실시

- 이 경우에도 중앙재단은 지방재단에 대하여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출 적격이나 대출 조건 등에 일정한 제약을 부과할 것임.

- 중앙재단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은 반환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결과는 지방재단에 귀속되므로 지방재단은 회수를 제고를 위한 신용위험 관리에 노력을 기울일 것

- 중앙재단에 대한 채무 상환 의무를 완수하지 못하는 지방재단의 부실화 및 파산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이를 지방재단에 대한 규율도구로 활용

□ 기업재단이 희망하는 경우 직접 대출을 중단하고 MF 투자펀드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

○ 평판위험(reputation risk)에 민감한 기업들이 대출심사나 사후관리에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기업의 사회공헌 차원에서 MC 사업에 참가한 기업재단이 대출 신청자의 불만을 감수하면서 철저한 스크리닝을 실시하거나 강력한 연체발생 억제 정책을 채택하지 않을 것

○ 기업재단의 느슨한 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로 인한 문제는 기업재단의 부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원칙에 따라 적용하는 지방재단에 대한 불만으로 비화할 수 있음.

○ 대출 심사 및 관리 조직 운영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재단이 희망하는 경우 중앙재단과 마찬가지로 지역재단에 대하여 저리로 자금을 대여하는 MF 투자펀드로 전환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단기적으로는 지방재단에 대한 대출재원 배분을 미리 공표된 척도로 측정된 실적과 연동시키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함으로써 전체 대출 포트폴리오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목표 달성을 추구할 필요

○ 대출재원 배분 기준은 지방재단이 과거 성취한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임.

- 재무적 성과지표에는 연체율이나 손실 비율 등 주로 대출자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포함

- 사회적 성과 지표에는 일정 기간 지속된 신규 고용 창출 정도나 대출자의 소득 향상 정도 등이 중요한 요소로 포함될 수 있을 것

5. MC 전문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

□ MC 관련 전문인력 확보는 MC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

- MC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약 2,000~3,000명의 RM이 확보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추산됨.
- 현재 RM의 양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사업 규모 확대 계획에 맞추어 RM이 적절하게 배출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가 다수

□ RM 양성에 소요되는 물적·시간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가용한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되 직업인으로서 MC에 전념할 수 있는 핵심적 RM 집단을 양성하는 것이 긴급요

- 제도권 금융회사 퇴직자를 일정한 보수교육 후 RM으로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은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시도해볼 가치가 있는 대안
- 그러나 원칙적으로 RM 전체 또는 다수를 자원봉사인력으로 충당하는 방안은 MC 사업의 효과적 효과이나 MC 기관의 전문성 축적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MC 신용정보시스템 구축, MC 대출 관리 IT 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구축은 중앙재단이 선도적으로 나서야 할 분야

- MC 신용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중복 대출과 상습 연체자에 대한 대출을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 국내외 MC 기관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실채권 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단에 보급함으로써 회수를 제고를 추진

5. 투자수입 확대 방안에 대한 검토

□ 미소금융 중앙재단이 보유 자금의 일부를 투자자산 획득에 배분한다는 결정을 내린다면 안전성·윤리성을 먼저 고려한 후 수익성을 고려하는 접근법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궁극적으로는 MC 대출에 사용되어야 하는 자금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안전성을 투자자산 선택의 우선적 기준으로 설정할 필요
- 기부금과 휴면예금 전입금으로 구성된 자금의 성격을 감안한다면 투자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윤리적 기준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임.
- 투자수입을 통한 기금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제고가 목표이므로 수익성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투자 자산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지만 안전성과 윤리성보다는 하위에 위치하는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됨.

□ 안전성과 윤리성을 모두 갖추고 있으면서도 상당한 수익성을 제공하는 투자자산으로 후진국 MC 대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구조화 채권을 들 수 있음.

- 일정한 규모 이상의 MC 기관이 보유한 대출 채권을 결집하여 이를 기초자산으로 삼고 금융공학 기법을 적용하여 다양한 신용등급의 구조화 채권을 발행하여 판매에 성공한 사례가 있으며 향후에도 후진국 MC 기관의 대출재원 마련을 위한 자금조달 창구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측됨.
- 구조화 채권은 AAA에서 투기등급까지 다양한 신용등급이 존재하므로 신용등급이 높은 tranche를 구입함으로써 안정성 확보 가능.

- 구조화 채권의 매입을 통하여 후진국 MC 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에 기여하게 되므로 투자의 윤리성이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투자 대상
- 예금이나 국채에 비하여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므로 수익성 측면에서도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음.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현황 및 정책 과제

I. 서론

- 최근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대한 신용공급 제약이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
 -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빠르게 전개된 소비자 금융 시장의 팽창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 2003년 말 발생한 신용카드사 부실 문제로 인하여 금융시장 혼란과 함께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면서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은 더욱 보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엄격한 신용평가에 기초한 신용공급 결정의 관행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금융회사의 보수적 태도 견지는 이해될 수 있는 현상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의 급작스런 축소 또는 차단은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
 - “서민금융기관”으로 불리는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 금고 등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자체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하여 역량이 부족한 상황
 -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고금리 사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
-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대한 신용공급 통로로 마이크로크레디트에 대한 관심이 고조

-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을 제도권 금융회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
 -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정량적 지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신용평가시스템을 통과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
 -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대한 대출은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려워 높은 대출관련 행정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수익성이 낮음.
- 신용공급 결정을 전통적 금융기법에 의존하지 않는 마이크로크레디트(micro-credit; MC)에 대한 관심 증가
 - MC는 정량적 지표에 집중하여 대출 대상자를 선정하고 차주의 상환능력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회수율을 제고
 - 최근에는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대한 신용공급 뿐 아니라 신용카드 발급, 계좌이체 서비스 제공, 소액 보험 상품 제공 등 금융서비스 전반으로 영역을 확대하여 마이크로파이낸스(microfinance; MF)로 불리기도 함.
- 정책당국은 자활의지는 있으나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소금융재단” 설립함으로써 MC사업의 확대 추진 의지를 표명
 - 미소금융은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을 통한 소득창출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MC의 한국적 수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 MC가 시작된 남아시아나 남미의 후진 각국과는 상이한 경제·사회적 환경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 도입이 필요

□ 미소금융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지속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금융시장 환경에 적합한 사업의 틀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

○ 금융시장이 고도로 발달한 지역에서 사실상 최초로 추진되는 대규모 MC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더불어 한국적 상황에 필요한 사업모형(business model)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

○ 미소금융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내용, 대출금 회수, 자활컨설팅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미소금융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업수행주체의 유인 구조를 적절히 설계하고 이를 실행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

□ 본 연구는 최근 MC의 국제적인 경향과 국내 서민금융시장 구조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미소금융의 효과적 운영방안에 대한 정책방안 도출을 목표로 함.

○ 제2장에서는 MC의 개념과 발전 및 전반적 현황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 짐.

○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세계 각국의 MC시장에 대한 유형별 분석을 수행

- MC가 발원한 남미와 남아시아 등 후진국 MC시장 현황 분석

- 후진국과는 다른 측면에서 MC를 수용하고 있는 서유럽 각국의 MC 시장 및 정책 현황 분석

-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 서민금융시장의 구조 및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MC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점검하고 우리나라 MC의 현황에 대하여 논의
- 제6장에서는 미소금융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과제에 대한 논의
 - MC 정책목표의 명확한 설정, MC 사업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대출대상자 기준의 합목적성 제고, 미소금융 중앙재단과 지방재단 간의 관계 정립, MC 전문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 방안, 미소금융 중앙재단의 투자수입 확대 방안에 대한 검토 등이 주요 논의 주제

II. 마이크로크레디트의 개념과 발전

1. 개념

- 원래 의미에서 마이크로파이낸스(micro-credit; MC)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규모 무담보 대출서비스 제공을 지칭
 - 저소득 빈곤층, 여성,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대출
 - 차주가 직접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소규모 자영업이나 영세기업(micro-enterprise)에 대한 창업 및 운영자금 공급함으로써 이들의 소득창출기반 강화를 지원
 - 자산 축적의 미흡으로 인하여 담보 제공 능력이 극히 취약하거

나. 전무한 계층을 상대로 무담보로 대출

- 지역사회 또는 대면 관계인과의 공동 연대 보증(group guarantee), 강제 저축(compulsory savings) 등의 보완책을 강구함으로써 연체로 인한 손실발생에 대응
- 전통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을 추구하는 비영리 민간기구(non-profit non-government organizations)가 MC서비스 공급자의 다수를 차지
- 이러한 소규모 무담보 대출 서비스 제공은 처음 시작된 남미나 남아시아 각국에서 규모가 커지고 제도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1970년대 후반부터 MC로 불리기 시작
- MC는 개념적 외연이 확대되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창출 기반강화의 지원을 위한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을 지칭하는 마이크로파이낸스(MF)로 대체되는 경향
- 대출에 국한된 MC가 특히 후진국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가 증대
 - 저소득층이 필요로 하는 금융서비스는 대출에 국한되지 않고 적절한 저축계좌, 자금이체, 보험 등 보다 넓은 범위의 금융서비스를 포괄
 - 이들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저소득층의 접근 또한 대출과 마찬가지로 매우 제한적이거나 부재
 - 금융서비스에 대한 저소득층의 접근 제역으로 인한 문제점은 대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대

○ 보다 넓은 범위의 금융서비스 제공이 보다 일반적인 사업 형태로 정착되면서 MF 개념이 종래의 MC 개념을 대체

○ MF 개념이 확립과 함께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 주체가 등장

- 저소득층의 신용위험에 대한 정보 축적 및 평가 기법 개발, 사업 경험 축적, 높은 상환 실적 등의 사업성과 누적

- 사업 규모가 확대되면서 종래의 비영리 단체가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 모델로 전환하거나 원래부터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

- 영리 추구의 정도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의 MC 공급자가 사업을 수행

* 완전히 상업적 기반에서 시장수익률(market return)을 추구하는 MF 투자자가 일부 존재

* 사업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재무적 수익률(financial return)을 전제로 빈곤 퇴치, 환경 보호, 여성 인권 개선 등 사회적 목적의 달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MF 투자자가 광범위하게 등장

□ MF는 최근 그 영역이 더욱 확장되어 저소득층을 위한 종합적인 금융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포괄적 금융 시스템(inclusive financial system)으로 재정의 되어 가는 과정

○ 저소득층 빈곤 탈출의 근본적인 해법은 소득 창출 능력의 증대이며 이는 개별적인 금융서비스의 제공 수준만을 통해서 해결하기 힘든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

- 물론 저소득층의 신용에 대한 접근성 증대라는 전통적인 사업 영역은 여전히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

- 저소득층을 둘러싼 금융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들이 처한 금융환경의 개선을 위한 활동을 병행하여 추진
 - 민간 차원에서 시작된 개별 사업 모형의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보다 대규모 차원에서 적용하려는 노력이 전개
- 포괄적 금융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활동 주체와 범위 및 성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수준(level)의 활동으로 구성¹⁾
 - 미시 수준(micro level): 저소득층에 대하여 대출을 중심으로 한 금융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주체, 즉 MFI(microfinance institutions)로 구성되며 전체 시스템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음.
 - 중간 수준(meso level): 미시적 수준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지원 체제
 - * 거래 비용 절감, 사업의 확산범위(outreach) 확장,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투명성 증대 등을 위하여 물적·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
 - * 구체적인 과제로 MFI에 대한 감사(audit) 체제 확립, 신용 평가 기관(rating agency) 및 신용정보회사(credit bureau)의 역할 제고, 지급결제 서비스망의 포괄 범위 확대, 정보기술의 보급 확산, MF 전문인력 양성 등을 들 수 있음.
 - 거시 수준(macro level): 미시 수준과 중간 수준에서 관련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법적·제도적 환경
 - * MF의 장기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환경 구축이 과제이며 구체적으로 MFI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규제 및 감독체제의 확립, MF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지나친 이자율 상한 규제의 철폐, 지나

1) CGAP(2007)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한 내용임.

치게 강력한 외환규제의 정비 등을 들 수 있음.

* 중앙은행, 재무성(ministry of finance), 금융감독기구(financial regulatory body) 등의 공적 주체(public entity)가 수행하여야 할 과제

□ 이상과 같이 MC의 개념적 외연은 꾸준히 확장되면서 재정의

○ 대출 서비스만을 지칭하는 MC에서 시작하여 전반적인 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의미하는 MF, 나아가 시장을 둘러싼 금융환경까지는 포괄하는 포괄적 금융시스템으로 확대

○ 이러한 개념의 확대는 MC가 거둔 가시적 성과에 가장 크게 기인

- 지난 30여년의 경험을 통하여 극심한 금융결핍 사회에 최소한의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가시적인 빈곤퇴치 성과를 이룩할 수 있음을 증명

- 금융서비스 공급을 통한 빈곤퇴치를 보다 광범위한 규모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면서 금융서비스 자체 뿐 아니라 이를 둘러싼 환경에까지 관심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MF의 개념적 외연이 확대

□ MC는 개념적으로 뿐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선진국에도 수용되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소득 분배 불평등 문제에 대응하는 중요 수단의 하나로 활용 되고 있음.

○ 1980년대 이후 구미 제국을 위시한 선진 각국에서 소득 분배가 빠르게 악화

- 소득 불평등 심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제시되고 있으나 고기술 노동(high-skilled labor)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견해가 다수

- 더하여 노동시장에서 가격기구의 원활한 작동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추세가 확산되면서 근로자 측면에서 고용관계의 불확실성이 증대하였다는 점도 소득 격차 확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 고용관계의 불확실성 증대는 상대적으로 대체가 쉬운 저기술 노동자에게 더욱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
- * 실업이나 실질임금 감소 등으로 인하여 저기술 노동자가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더욱 커짐.

- 이러한 소득 불평등 확대 문제에 대응하는 주요 정책 수단으로 MC를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대두

-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들의 생존 가능성과 소득 창출 능력 제고를 추구
- 저소득층 지원을 목표로 순수 민간 차원의 노력이 NGO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 최근에는 각국 정부가 MC를 유력한 정책 수단의 하나로 인식하고 이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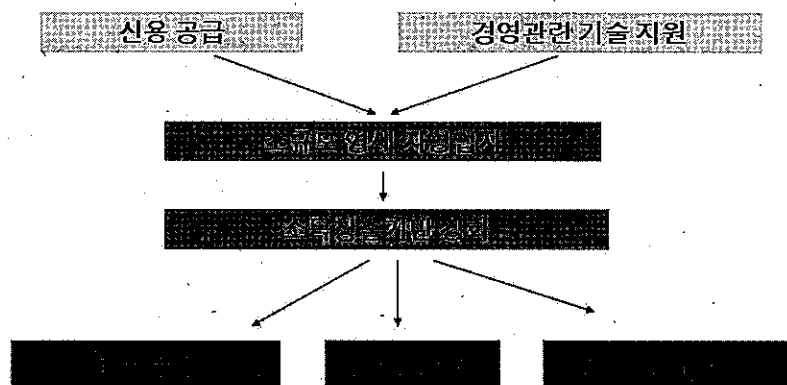
- * 특히 유럽연합의 경우 MF를 중소기업 정책(SME policy)의 일부분으로 편입하여 정책을 펴고 있으며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로 혁신촉진, 고용증진, 사회적 유대(social cohesion) 강화 등을 내걸고 있음.

-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책 당국이 저소득 계층에 대한 신용제약을 완화함으로써 이들의 소득 창출 기반 강화를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MC의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음.

- MC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목적, 대상, 수단 측면에서 공통적인 요소를 찾을 수 있음.

- 목적 측면에서 저소득층의 소득창출기반 강화를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빈곤퇴치, 경제발전, 소득분배개선 등을 추구
- 저소득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설정
- 영세자영업자에 대하여 신용을 공급하고 경영관련 기술을 제공

[그림 II-1] MC의 역할과 기능



2. 마이크로크레딧 발전에 대한 역사적 고찰

가. 발흥기: 1970년대

- 현대적 형태의 MF는 1970년대 후진국에서 빈곤퇴치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민간차원에서 시작
- 1950년대부터 미국, 독일 등 국가에서 농업협동조합을 위시하여 국영 또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개발금융기관(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의 주도로 농촌 지역의 소득 창출 능력 증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신용을 공급하는 노력이 전개

- 낮은 이자율로 공공부문이 제공한 자금에 대한 대출자의 도덕적 해, 정책지원 대상집단(target group)과 실제 수혜집단 간의 괴리 등 문제로 인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

- 정부 주도 신용공급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을 기반으로 민간차원의 움직임이 발생

□ 현대적 의미의 MF는 중남미에서 시작된 ACCION International, 방글라데시에서 시작된 Grameen Bank를 효시로 함.

- 1973년 ACCION International이 영세기업(micro-enterprise; ME) 개념을 확립하고 후진국의 빈곤퇴치를 위해서 이들에 대한 원활한 금융 서비스 제공이 중요한 과제임을 부각시킴.

- ACCION International은 1961년 미국의 사회운동가 Joseph Blatchford가 중남미의 빈곤 퇴치를 목적으로 설립
- 초기에는 빈곤의 결과 발생하는 문제 해결에 관심을 기울이고 전력 및 상하수도 보급 확대, 교육시설의 확충, 영양상태(nutrition) 개선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 지역사회와 밀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인 빈곤 퇴치를 위해서는 빈곤층의 소득 창출 능력 제고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하여 ME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부각
- ME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이들에 대한 신용공급 애로이며 이는 금융시장의 발전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후진국에서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하여 해결하기 힘든 현상임을 강조

- ME에 대한 신용 공급을 중점 사업으로 설정하고 빈곤층에 대한 적절한 금융 서비스의 공급을 통하여 빈곤 퇴치를 추구하는 사업 모델을 제시

- Grameen Bank는 방글라데시 농촌 지역의 빈곤 퇴치를 목적으로 Muhammad Yunus가 1976년 빈곤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규모 대출 사업, 즉 MC 공급 사업에 그 기원을 두고 있음.

- 금융시장 발달 부재와 극심한 신용계약으로 말미암아 장시간의 노동에도 불구하고 살인적인 고금리 사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농촌 지역 거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이자율을 부과하는 대체적인 신용 공급원을 제공함으로써 노동을 통한 자발적인 빈곤 탈출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

- 이후 1979년 자카르타 은행(Jakarta Bank)의 자금 공급을 바탕으로 전국적인 규모로 사업을 확장하였고, 1981년 Grameen Bank가 정식으로 설립됨으로써 빈곤 퇴치를 위한 수단으로서 MC가 중요한 지위를 확립

□ 이 시기 MC 모델의 특징으로 ① 후진국의 빈곤 퇴치를 궁극적 목적으로 ② 빈곤층의 소득 창출 능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③ 빈곤층이 종사 또는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저리의 소규모 대출을 ④ 비영리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제공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상업적 관점에서 보다는 빈곤층을 지원한다는 사회적 관점에서 시

장 금리에 비하여 낮은 이자를 부과

- 시장 금리보다 낮은 금리에서 유발되는 각종 문제점, 특히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강구
 - 지역 사회의 유대감에 바탕을 둔 연대 보증(group guarantee)의무를 부과하거나 채무자에 대하여 매우 높은 강도의 정보 수집 및 모니터링(monitaring)을 실시
 - 대출 회수를 제고를 위하여 개인이 아닌 집단을 상대로 대출을 실시하거나 일정 수준의 저축을 강제하는 등의 도지도 강구
 - 정부나 대규모 국제기구에 비하여 지역 밀착형 비영리 민간단체가 이 시기 MC 사업의 성공적 수행에 좋은 조건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나. 성장기: 1980년대

- MC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저소득·저신용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에 대한 기존의 통념에 반하는 결과들이 도출
 - 저소득, 저신용 계층에 대한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90% 이상의 높은 대출 회수율 유지
 - 대출 대상자 선정 과정에 지역, 사정에 밝은 심사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많은 모니터링 비용을 들여 대출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한데서 주된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소규모 단기 대출, 지역사회의 연대감에 기반을 둔 보증 시스템, 탄력적인 상환 스케줄 허용 등 채무자의 상황과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대출 상품이 설계된 것도 높은 회수를 달성에 기여

- 일방적이고 일회적인 자금 공급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경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출 상환의 기반이 되는 사업의 유지 및 발전을 지원
- 빈곤층이라고 하더라도 대출 서비스에 대하여 상당한 수준의 이자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
 - MFI가 외부의 자금지원 없이 자체적인 수입만으로 생존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을 수준의 이자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
 - 인도네시아의 Bank Rakyat Indonesia (BRI)가 자체 이자 수입만으로 장기적 생존 및 성장을 추구하는 사업 모델을 채택하여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예

□ 1980년대에는 상업적 요소를 강조하는사업 MC모형 출현

- 사업 수행 방식을 적절히 설계하는 경우 공공 부문이나 자선 단체로부터의 기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사업 수입만으로 장기적 생존 및 성장이 가능한 정도의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판명됨.
 -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start-up)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사업 모델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란이 존재
 - 초기 단계를 성공적으로 넘어서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 수입만으로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뿐 아니라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의 이익까지 창출한 경우가 다수 출현

- 기존의 비영리 단체가 정식 상업은행으로 변모하여 제도권 금융 기관으로 전환하되 여전히 MC 개념에 부합하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기존의 상업은행이 새로 MC 시장에 진입하는 등의 변화가 발생
 - Grameen Bank는 NGO 기반의 MFI로 출발하였으나 1983년 정식 은행으로 전환하였으며, 인도네시아 RBI는 기존 상업은행이 마이크로크레딧 부분에 진출한 대표적 예
 - 이러한 현상들은 모두 MC가 상업적으로 자생력을 가진 사업 모형이라는 점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

다. 확산기: 1990년대

□ 1990년대에 들어 MF 개념이 정착되었으며 사업의 국제화가 빠르게 진전

- 소액 단기 대출을 지칭하던 MC의 외연이 확대되어 빈곤층에 대하여 보다 다양한 형태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로 진입하였으며 그에 따라 MF 개념이 대두
 - MFI가 빈곤층을 대상으로 소규모 저축 계좌, 자금 이체, 보험 등의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공급
- 서비스가 도달하는 지역적·계층적 범위(scale)를 확장하기 위하여 성공적인 MFI들이 국제적 차원의 사업을 수행
 - 종래 개별 국가 수준에서 사업을 수행하던 MFI들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갖추고 사업을 전개

* ACCION International, Grameen Bank 등이 자신의 성공 모델을 바탕으로

다른 후진국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시킨 대표적 예

- 다른 나라의 MFI를 자회사로 편입하여 직접 진출하거나 이들 국가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MFI에 대하여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진출하는 방식을 모두 구사
 - 사업의 국제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업화가 더욱 빠르게 진전
 - 상당수의 MFI들이 상업은행으로 전환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MFI로 변신
 - 대출 채권 증권화(securitization), 구조화 증권(structured securities)의 발행 등 각종 첨단 금융 기법을 동원하여 국제 금융 시장에서 대규모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 조달하기 시작
 - MFI가 더 이상 제도 금융권의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공급이라는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권 금융기관의 한 형태로 확립
- 선진 각국이 후진국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MC와 MFI에 대한 자금공급, 기술지원이 적극 활용되기 시작
-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은 후진국에 대한 원조의 한 방식으로 MFI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활용
 - 미국은 2000년 “자립 촉진을 위한 소규모 기업 지원법(The Micro-enterprise for Self-reliance Act)의 제정을 통하여 대외 원조청(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이 집행하는 원조 자금의 50% 이상을 최빈국에 집중하고 이들 자금이 소규모 기업의 육성 및 지원 사업에 사용되도록 조치

- 유럽연합은 아프리카, 캐리비안, 태평양 국가들 (ACP group)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EU-ACP MF 프로그램을 시행
- 세계은행(World Bank), EBRD(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등과 같은 다자간 개발원조기구(multi-lateral development agency) 산하 국제금융기구(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FIs)가 MFI에 대한 주요 자금 공급원으로 부상
- IFI들은 후진국에서 MC 사업을 직접 전개하고 있는 MFI에 대하여 지분 참여, 부채 공여, 보증 제공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금을 공급

라. 재도약기: 2000년대

- MFI의 대형화, 국제화, 상업화 현상이 2000년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개
 - MF의 개념을 넘어서서 금융시장은 물론 이를 둘러싼 환경 요인을 모두 포괄하는 포괄적 금융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개념의 외연 확대가 진전
 - 서비스의 규모 및 범위 확대, 서비스 제공 비용의 절감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해석 가능
 - 현재 공급되고 있는 금융서비스의 질과 양을 확대하여 기존의 고객들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적시에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체제 구축을 추구
 - 서비스 공급 대상을 확대하여 종래에는 지리적 한계와 경제적

고려에서 MC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빈곤층까지 서비스 범위 확대를 추구

- 서비스 제공에 수반되는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고객들에 보다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MFI의 수익성 제고를 추구

□ MFI에 대한 자금 공급으로 목적으로 하는 MF 투자펀드(microfinance investment fund)의 활동에 힘입어 MC의 사업 규모와 범위가 확장되었고 자본비용의 감소로 저렴한 금융 서비스 제공 가능

- MF 투자펀드는 사회적 책임투자 계열의 투자펀드와 상업적 목적을 추구하는 투자펀드로 구분 가능

- Unitus, Andromeda, Omidyar-Tufts Micro-finance Fund 등이 사회적 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계열의 펀드

- Profund, AfriCap 등이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MFI에 대하여 투자하는 펀드의 예

- MFI로서 큰 성과를 거둔 기관이 다른 MFI에 투자하는 경우도 출현하였는데 ACCION Investment, Grameen Bank 등이 대표적 예

- 어떤 경우이든 MF 투자펀드가 MFI에 투자할 때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수익 창출을 전제로 함.

- 종래 제도권 금융기관에 적용되던 각종 위험관리 기법을 적절히 변형하여 MFI에 적용함으로써 투자 자산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면서 금융혁신이 발생하기도 함.

□ MFI가 후진국에서 거둔 빈곤 퇴치 성과에 주목하고 이를 서구 선진국에 이식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전개

-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빈곤 감소와 소득 불평등 문제 완화를 추구
 - 창업을 통한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통하여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점차 심화되는 소득 불평등 문제에 대응하려는 시도
- 영국의 Street UK, 프랑스의 Adie, 스페인의 Fundacio Un Sol Mon, 아일랜드의 Aspire 등이 대표적
 - 저소득층의 소규모 창업에 대한 자금제공 및 경영지도가 중심적인 사업

III. 후진국의 마이크로크레디트 현황

- 2005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서 약 3000여개의 MFI 및 유사 기관이 저소득 빈곤층을 주된 대상으로 대출 및 예금 서비스 제공
 - 이 중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단기 소액 대출 및 예금 수취, 보증 제공 등의 업무에 특화된 전통적 MF 모델을 따라 활동하는 MFI는 약 900여개로 추산됨.
 - CGAP(Consultative Group to Assist the Poor)가 운영하는 MIX(Micro-finance Information Exchange) Network은 MFI의 현황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

1. 사업 규모

- 2005년 말 MIX가 파악하고 있는 MFI는 약 245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약 178억 달러가 대출
- MFI가 보유한 예금은 약 111억 달러로 대출의 45% 가량이며 자본금은 44.6억 달러
 - MFI의 가장 핵심적 기능인 대출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MF 사업이 진행되어온 중남미(78.3억 달러),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동아시아(46.5억 달러), 남아시아(19.95억 달러) 등에서 활발하게 전개
 - 예금의 경우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동아시아, 중남미 등의 지역이 앞서 나가고 있음.

<표 III-1> MFI 현황: 2005년

(단위 : 백만 달러)

	자산	자본	대출	예금
아프리카(사하라 이남)	2,390	572	1,396	929
동아시아/태평양	7,387	795	4,650	5,074
유럽/중앙아시아	1,584	493	1,303	105
중남미	9,736	1,711	7,830	4,705
중동/북아프리카	707	305	593	35
남아시아	2,699	581	1,995	277
전 체	24,503	4,459	17,767	11,090

주: 1) 동아시아는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를 모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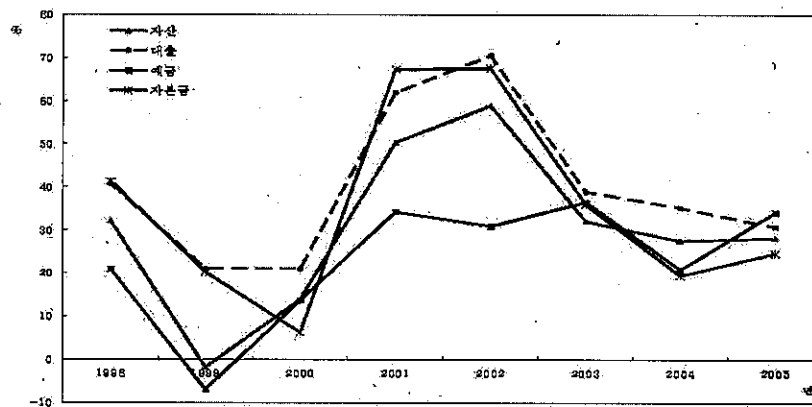
2) 유럽/중앙아시아는 러시아 및 구조권 지역을 포함

자료: <http://www.mixmarket.org>

□ 1997년부터 2005까지 8년 동안 MFI의 자산은 연 30%, 대출은 연 40%의 높은 성장세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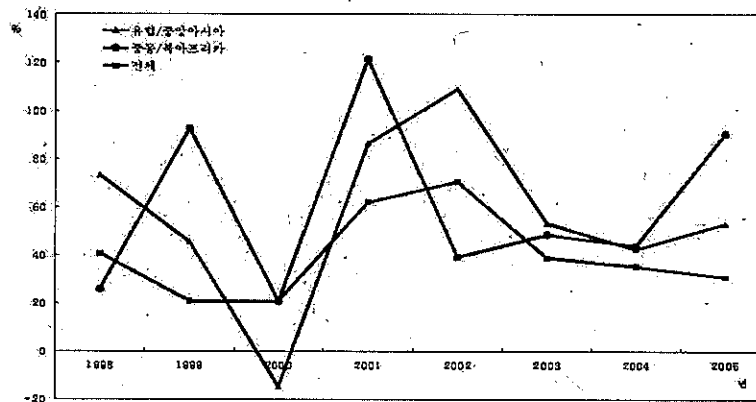
○ 최근 아프리카와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빠르게 성장

[그림 III-1] MFI의 규모 추이



자료: <http://www.mixmarket.org>

[그림 III-2] 신흥지역 MFI 대출 추이



자료: <http://www.mixmarket.org>

2. 수익성 및 자산 건전성

□ MFI의 수익률과 자산건전성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임.

- 2005년 자기자본수익률(ROE)이 4.67%이며 MF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한 중남미와 동아시아의 경우 각각 11.14%와 5.28%로 상당한 수익성을 보임.
 - 아프리카의 경우 아직까지는 장기적인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음.
 - 남아시아 지역의 수익성 부진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됨.
- 대손비율(write-off ratio)은 1.57%로 매우 낮은 상황이나 중남미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III-2> MFI의 수익성 및 자산 건전성: 2005년

(단위 : %)

	ROE	대손비율	운영 자립도
아프리카	-2.58	2.99	155.32
동아시아	5.28	1.30	86.53
유럽/중앙아시아	5.97	1.17	194.57
중남미	11.14	3.32	200.06
중동/북아프리카	2.50	0.27	38.93
남아시아	-2.04	0.51	107.63
전체	4.67	2.19	130.51

주: 1) 동아시아는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를 모두 포함

2) 유럽/중앙아시아는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을 포함

3) 운영 자립도는 각 지역의 단순평균

자료: <http://www.mixmarket.org>

○ MF 역사가 짧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에서 MFI들이 운영의 자립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운영 자립도(organizational self-sufficiency)는 정상경비 대비 정상수입(operating income)의 비율로 계산

□ 수익성이 상당한 변동성(volatility)을 나타내고는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상승하는 추세

○ 대손비율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운영 자립도는 매우 빠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 MF사업이 본격적인 발전 단계에 이미 접어든 남미와 동아시아의 경우 수익성의 상승 추세는 더욱 뚜렷이 나타남.

○ MFI가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 충분한 가능성을 시사

<표 III-3> MFI의 수익성 및 자산 건전성 추이

(단위 : %)

연도	ROE	대손률	운영자립도
1998	-5.43	0.13	16.61
1999	1.12	0.27	23.27
2000	0.74	0.38	33.74
2001	2.11	0.55	50.18
2002	0.12	1.01	68.22
2003	-6.81	1.36	97.24
2004	11.83	1.51	120.33
2005	4.67	1.57	130.51

자료: <http://www.mixmarket.org>

<표 III-4> MFI의 수익성 및 자산 건전성 추이: 남미 및 동아시아

(단위 : %)

	남미			동아시아		
	ROE	대손률	운영 자립도	ROE	대손률	운영 자립도
1998	-0.88	0.23	15.21	-0.74	0.05	9.76
1999	-0.17	0.48	17.99	0.89	0.16	13.40
2000	3.00	0.64	19.17	1.53	0.14	17.78
2001	6.51	0.87	21.10	1.13	0.34	30.38
2002	2.05	1.18	41.79	2.18	1.16	40.66
2003	3.15	2.08	58.69	-0.12	0.94	68.60
2004	15.22	3.90	90.00	8.04	0.96	86.30
2005	11.14	3.32	107.63	5.28	1.30	86.53

주: 동아시아는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를 모두 포함

자료: <http://www.mixmarket.org>

3. 사업 확산도(outreach)

□ 전 세계적으로 약 4,300만명의 후진국 주민이 MFI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음.

- 인구 밀집지역인 남아시아와 동아시아 지역의 대출자 수가 전체대출자의 70% 가량을 차지
- \$300이하의 소액 대출이 60% 가량을 차지하며 GNI 대비 대출 규모는 50% 수준을 보임.
 - MF가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동아시아, 남아시아, 남미 지역에서 GNI 대비 대출은 50%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빈곤선(poverty line)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은 55% 수준

-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의 경우 \$300 이하의 대출 비율이나 빈곤선 이하에 대한 대출 비율이 30% 가량에 불과하고 GNI 대비 대출 금액 비율이 100%에 달하여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에 대하여 큰 규모의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 빈곤선 이하 주민에 대한 대출의 경우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의 경우 70%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남미의 경우 45% 수준에 머물러 두 지역의 사업 모델이 다소 다르다는 사실을 추론 가능

<표 III-5> MF 확산도: 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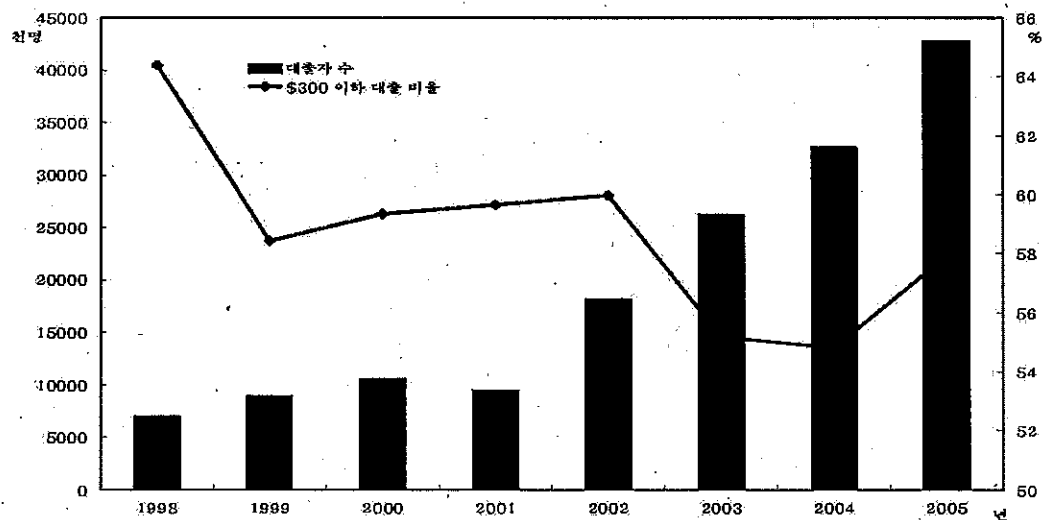
(단위 : 명, %)

	대출자 수	예금자 수	GNI 대비 대출	\$300 이하 대출 비율	빈곤선 이하 대출 비율
아프리카	3915228	4538654	141.48	65.34	62.05
동아시아	9150871	32805870	42.05	76.00	70.00
유럽/중앙아시아	645658	471037	96.31	29.97	29.85
중남미	7124445	4488188	51.74	48.05	45.78
중동/북아프리카	977925	4185	22.91	-	-
남아시아	20958209	5200733	43.58	82.23	69.52
전체	42772336	47508667	78.79	57.91	54.10

주: 1) 동아시아는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를 모두 포함
 2) 유럽/중앙아시아는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을 포함
 3) GNI 대비 대출 비율은 각 지역의 단순평균
 자료: <http://www.mixmarket.org>

- 대출자 수는 1998년 이래 연 평균 30%의 빠른 성장세를 보였으나 300 USD이하의 소액 대출 비중은 점차 하락
- 1998년 약 700만명에 불과하던 MFI 대출자가 2005년에는 4,30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빠르게 증가
 - 소액 대출의 비중 감소는 전반적인 소득 증가와 사업 성숙으로 인하여 대출의 평균 규모가 상승하는 현상을 반영

[그림 III-3] MFI 대출자 수와 \$300 이하 대출 비율 추이



자료: <http://www.mixmarket.org>

IV. 유럽연합지역의 마이크로크레딧 현황 및 정책

1. 유럽연합지역의 마이크로크레딧 현황

가. 유럽연합지역 MC부문 개관

- 유럽연합은 경제발전 단계, 금융시장발전 정도, MC 사업 모형 등 측면에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방식의 MC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지역
 -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 및 금융시장 환경은 MC가 시작된 남미나 남아시아 국가들보다는 유럽연합 회원국과 가깝음.
 - MC 사업의 주체 및 사업 방식 등 사업모형 측면에서도 유럽연합에서 시도되고 있는 모형이 우리나라에 더 많은 시사점을 제공
- EMN(European Microfinance Network)은 2년에 한 번씩 역내 국가의 MC 진전 상황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발간
 - EMN은 유럽연합이사회(European Commission)의 지원 하에 2003년 지역 내 MC 기관들이 MC 관련 정보 교환 및 모범사례 전파를 목적으로 설립한 민간단체
 - 2년에 한 번씩 지역 내 MC의 진전 및 MC기관의 활동상황을 정리한 "Overview of the Microfinance Sector in the European Union"을 발간
 - 보고서는 지역 내 MC 기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
 - 이하에서는 가장 최근 발간된 2008년 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논의

- 2008년 보고서는 지역 내 MC 기관의 2006·2007년 기간 동안의 활동과 성과에 대한 정리 및 평가임.
- 27개 유럽연합 회원국 중 21개국에 비회원국인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를 더하여 총 23개의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94개 MC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 대출 규모

- 2007년 유럽연합 소재 MC 기관들은 42,759건, 3억 9,400만 유로의 대출을 실시
 - 일반적으로 유럽연합 지역에서 MC 대출은 고용인 10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에 대하여 행해진 25,000유로 이하의 대출을 의미
 - 2006년에 비하여 대출 건수는 14%, 대출 금액은 32% 증가한 수치
 - 조사에 응한 MC 기관의 누적 대출 건수는 237,495건, 금액은 499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대출 건수를 기준으로 할 때 프랑스, 불가리아, 독일, 루마니아, 스페인, 핀란드, 영국 등지에서 활발한 활동이 관측되었음.
 - 대출 건수 측면에서는 스페인,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대출 금액 측면에서는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등의 국가에서 최근 MC가 빠르게 성장
- 대부분의 MC 기관은 여전히 매우 영세한 규모로 머물러 있음.
 - 39%가 20건 이하의 대출을 시행할 정도로 소규모 영업 유지
 - 400건 이상의 대출을 실시한 경우는 20%에 불과

□ 2007년 대출의 평균 규모는 약 11,000유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2005년 7,700유로, 2006년 10,800 유로에 비하여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핀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등의 국가가 전체 평균보다 큰 규모의 대출을 시행
- 헝가리를 제외한 모든 동유럽 국가들의 평균 대출규모는 전체 평균에 미달하였는데 이는 이들 국가의 소득 수준이 낮다는 점을 반영
- 높은 소득 수준에도 불구하고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지에서는 평균 대출 규모가 10,000유로에 미달

2) 대출기관의 성격

□ NGO와 재단 등 비영리 MC 기관이 유럽연합 지역의 MC 산업 주도

- 설문에 응답한 MC 기관 중 NGO가 28%, 재단(foundation)이 26%, 정부 소속 기관이 17%를 차지하여 비영리 주체가 다수를 점하고 있음.
 - 비은행 금융기관, 저축은행, 일반 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영리를 추구하는 전통적 금융기관이 MC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는 약 20% 가량의 비중을 차지
- 지역적으로는 영국, 포르투갈, 폴란드, 이탈리아 등의 국가에서 NGO의 비중이 특히 높음.
 - 한편,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의 국가에서는 정부 소속 기관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

- 스페인의 경우 저축은행이 MC 산업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저축은행들이 연합하여 Social Work Fund를 조성하고 MC 대출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비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안전장치가 제공된다는 점에 힘입은 것으로 알려짐.

□ MC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안정적인 금융서비스 접근을 제공함으로써 영세기업의 발전을 지원”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

- MC 기관이 천명하는 설립 목적은 다양하나 주된 목적으로 ① 고용 촉진과 기업가 정신 제고 ② 중소기업 육성과 경제발전 ③ 금융배제(financial exclusion) 해소 ④ 사회통합과 빈곤퇴치 등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정리 가능
- 서유럽 소재 MC 기관은 고용 촉진과 기업가 정신 제고를 더욱 강조하는 반면 동유럽 소재 MC 기관은 중소기업육성과 경제발전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임.

□ MC 기관이 추구하는 목적과 기관의 형태, 평균적인 대출 규모 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존재

- NGO와 재단 형태의 MC 기관은 고용 확대와 금융배제 해소, 사회통합 제고 등을 강조하는 반면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형태의 MC 기관은 중소기업 육성과 경제발전에 중점을 두는 경향
 - 정부 소속 MC 기관은 고용 촉진과 중소기업 육성을 주된 목표로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
- 사회 통합 촉진이나 금융 배제 해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보다 고용 촉진이나 중소기업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제시한 MC 기관의 건당 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경향

- MC 기관 대부분은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규모 또한 영세
 - 설문에 응한 MC 기관의 60% 가량이 2000년 이후에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1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기관은 30% 가량에 불과
 - 2/3 가량의 MC 기관이 5인 이하의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경우는 15% 가량에 불과
 - 절반가량의 MC 기관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주로 대출서류의 진위 검증, 대출 전 상담 등의 영업에서 활동
 - NGO나 재단 형태의 MC 기관이 다른 형태의 MC 기관에 비하여 자원봉사자 활용에 적극적

3) 고객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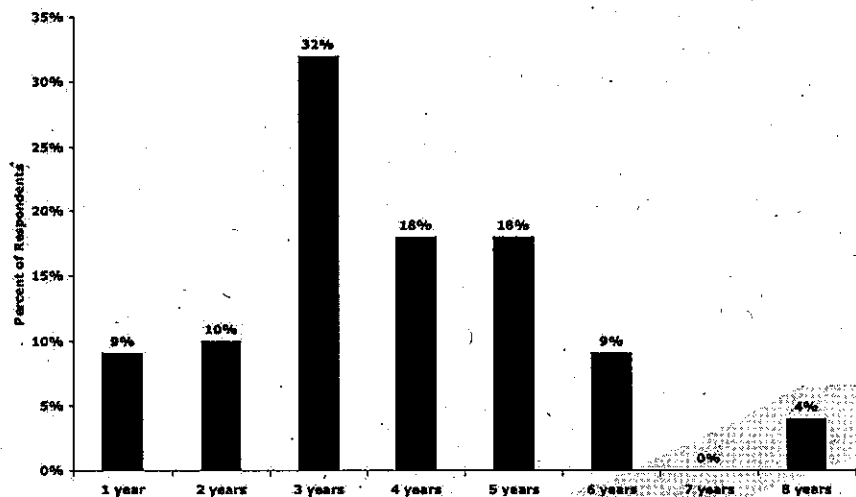
- 대부분의 MC 기관이 영세자영업 창업 또는 운영자금 공급을 추구
 - 노점상 등 미등록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제공을 시행하는 경우는 32%에 불과
- 일반적으로는 저소득 저신용 계층에 대한 대출을 표방하고 있으나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
 - 여성, 한 부모 가정, 노인, 장애인, 25세 이하 청년 실업자, 이민자 및 소수 인종 집단 소속 저소득층 등이 금융서비스 접근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스페인, 불가리아, 영국 등에서 여성 대출 비율이 높은 경향
 - 이민자의 경우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25세 이하 청년

의 경우 헝가리, 스페인, 영국 등에서 높은 대출자 비중을 차지

4) 대출 상품

- 만기 6개월부터 8년까지 다양한 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나 70%가량이 만기 3년~5년의 대출
 - 만기 1년 이하의 단기 대출은 10%, 만기 6년 이상의 장기 대출은 15% 가량을 차지
 - 약 2/3 가량의 대출 상품이 1달부터 2년까지 다양한 거치기간을 허용하고 있으며 평균 거치기간은 6개월

[그림 IV-1] MC 기관의 대출만기 분포: 유럽연합 지역



자료: Jayo et. al. (2008)

□ 국가별로 상당한 이자율 수준의 차이를 보임.

- 루마니아(16.3%), 영국(14.5%), 불가리아(13.2%) 등의 국가에서는 10%가 넘는 높은 이자율이 부과되고 있음.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5%~8% 수준의 이자율의 부과되고 있으며 일반 상업은행의 단기 조달 금리인 Euribor 보다 낮은 이자율을 부과하는 경우도 스위스, 벨기에 등 일부국가에서 발견됨.

- 이자율 수준의 차이는 MC 기관의 설립목적과 조직형태 등의 차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

- 사회적 목적을 강조하는 NGO나 재단이 주류를 이루는 핀란드, 스위스, 벨기에 등에서 이자율이 낮음.

- 보다 상업적인 형태의 MC 기관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동유럽 국가의 경우 대부분 10% 내외의 높은 이자율 부과

- 이자 이외에 대출 신청료나 대출 심사료 등의 수수료 부과를 통하여 대출 관련 행정 비용의 회수를 추구하는 경우가 40% 가량의 MC 기관에서 발견되었으며, 38%의 MC 기관들은 연체이자를 부과

□ 담보나 보증 및 보증인 요구, 예금 예치 요구 등 전통적인 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위험 감소 수단을 활용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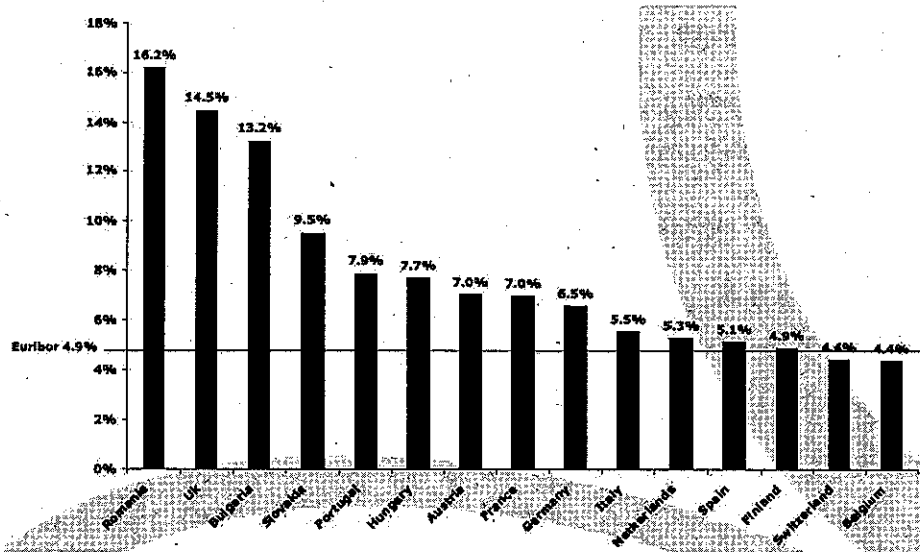
- 43%의 MC 기관은 대출에 아무런 담보 조치를 취하지 않는 순수 신용 대출 상품을 취급

- 보증인(43%), 담보(33%), 보증 프로그램(21%) 등을 전제로 하는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

- 후진국 MC에서 자주 활용되는 동료집단에 의한 압력(peer

pressure)을 위험 감소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17%에 그침.

[그림 IV-2] 국가별 평균 대출금리



자료: Jayo et. al. (2008)

□ MC 기관의 성격에 따라 62,100유로부터 525유로까지 다양한 건당 평균 대출 규모를 보임.

- 대출액이 25,000유로를 넘어서는 경우 MC 대출로 간주되지 않으나 중소기업 육성이나 고용 촉진 및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독일, 이탈리아, 헝가리 등의 국가에서는 그 보다 큰 규모의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다수 존재
- MC 기관의 조직 형태에 따라서도 평균 대출규모는 큰 차이
 - 상업적 측면을 강조하는 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정부 소속 기관

의 평균 대출규모가 10,000유로를 넘어 상대적으로 큰 반면
NGO, 저축 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은 규모가 작은 대출에 집중

- 전당 평균 대출 규모는 국민소득(GNI)의 50%~70% 수준이 일반적
 - 헝가리(193%)와 루마니아(116%)가 예외적으로 높은 수준
 - 폴란드(27%), 프랑스(38%), 영국(38%), 스위스(47%) 등이 비교적 낮은 국민소득 대비 대출 규모를 보이는 국가

□ 대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정성적·정량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

- 대출 여부에 영향을 주는 중요성에 따라 ① 보유 자산의 규모 또는 추가적인 투자 재원 보유 여부 ② 보증 존재 여부 ③ 담보 제공 여부 ④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창업 희망 업종의 전망 ⑤ 차주의 인간적·개인적 특성 등
- 종래에는 ④와 ⑤가 대출 결정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
- MC 기관의 규모가 커지고 장기적 지속가능성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 강조되면서 전통적인 금융회사가 활용하는 신용위험 관리 수단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증대하는 모습

□ 개인을 대출단위로 설정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대출신청 후 실제 대출이 일어질 때 까지 평균 40일 가량이 소요

- 집단대출을 시행하는 경우는 12%에 불과하였으며, 94%가 개인대출 상품을 판매
- 22%의 MC 기관은 최초 대출이 무사히 상환되는 경우 이어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위험 관리를 추구
- 대출 신청 후 10일 이내에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22%에 불과

□ 대부분의 MC 기관이 대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 경영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어떤 형태의 경영컨설팅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16%에 불과
- 경영 컨설팅을 강제적으로 요구(23%)하거나 필요한 경우 요구(29%)하는 경우가 다수
- 경영 컨설팅 전문가와 차주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20%)하거나 차주가 요청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12%)하는 경우도 있음.

5) 경영 상태

□ 절반가량의 MC 기관이 100%를 넘는 운영자립도를 달성하여 자생적인 활동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운영자립도는 영업수입(operating revenue)과 영업비용(operating cost)의 비율로 계산되며 추가적인 외부 자금 유입 없이 자체적인 수입 기반으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 설문 대상 MC 기관의 평균 운영자립도는 80% 가량으로 조사되었으며 국가별로는 이탈리아의 128%부터 벨기에의 5%까지 매우 다양한 분포를 보임.
- 운영자립도가 80%에 미치지 못하는 MC 기관도 26%로 상당한 수준

□ 대출 상환비율은 평균 89%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

- 상환비율이 96%를 넘는 경우가 40%, 91%를 넘는 경우가 73%로 매

우 양호한 실적으로 보임.

- 동유럽 국가 소재 MC 기관이 높은 상환 실적을 나타내었으며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MC 기관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성과를 보임.
- 조사대상 MC 기관의 37%가 5% 이하의 연체율을 유지할 정도로 우수한 자산 건전성을 유지
 - 총 대출자산 중 30일 이상 원금상환이 연체된 대출의 비중으로 정의되는 연체율은 평균 14%를 기록
 - 대출자산 중 회수 불가능한 대출의 비율로 정의되는 대손비율(write-off ratio) 또한 5%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68%로 상당한 수준의 자산 건전성을 확보

6) 자금 조달

- 운영비용을 외부에 의존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
 - 민간 기부금이나 공공부문 지원금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66%를 차지하였으며 자체적인 수입으로 이를 충당하는 경우는 28%에 불과
 - NGO나 재단 형태의 MC 기관은 운영자금을 외부의 지원으로 충당
- 대출재원은 민간 기부금, 공공부문 지원금, 차입 등으로 충당
 - 조사 대상 MC 기관의 59%가 민간 기부금을, 41%가 공공부문 지원금을, 13%가 차입을 대출 재원으로 활용
 - NGO나 재단 형태의 MC 기관은 대출자금을 대부분 민간 기부

금으로 충당

- 프랑스, 불가리아, 독일, 스페인, 루마니아 등지에서는 MC 기관이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차입하는 것이 허용
- MC 기관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장기적 과제로 지속가능성 확보와 사회적 역할 수행을 제시한 경우가 가장 많았음.
 - 그 외 금융배제의 정도가 심한 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확대, 규모의 확대 등을 장기 목표로 제시한 경우도 다수 존재
 - 장기 목표의 달성에 장애 요인으로 재원 부족보다는 기관의 역량 부족, MC 기관에 대한 법적·규제적 환경 정비 미흡 등을 드는 경우가 다수

나. 유럽연합지역 MC 기관 사례

1) Aspire Micro Finance (영국)

- 오랜 기간의 내전으로 파괴해진 북아일랜드 지역에서 영세자영업자나 영세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공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MC 기관
 - “European Union Special Support Programme for Peace and Reconciliation”이 지원하는 자금을 기반으로 설립
 - “Northern Ireland Bankers Association”과 “International Fund for Ireland”도 출자에 참여
 - 이사회는 공공부문 대표와 자발적으로 선출된 지역사회 대표로 구성

□ 신규 창업 지원보다 기존 영세업자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업주가 지원 대상

- 택시 운전사, 영세 소매점, 미용실, 카페, 건설 하청업자, 재택
자영업자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계층이 주
된 대상

○ 최초 대출은 100~5,000 파운드로 비교적 소규모이나 상환실적이 좋
은 차주에 대해서는 15,000 파운드까지 대출하는데 평균 대출 규모
는 4,000파운드 가량

○ 대출 기간은 최초 대출에 대해서는 3~9개월로 비교적 짧게 설정되
지만 상환실적이 좋은 차주에 대해서는 18개월까지 연장

- 짧은 상환기간은 차주들이 종사하는 영세자영업의 짧은 생애주
기를 감안하여 차주와 MC 기관 모두의 위험관리를 추구한 결과

○ 이자율은 15%~20% 수준에서 차주와 대출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

○ 상환은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이루어짐.

2) Street UK (영국)

□ 5인 이하 영세기업에 대한 신용공급과 기술지원을 목적으로 2000년
Binghamton에 설립된 MC 기관

○ 고객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도록 지원하
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2002년 100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pilot study를 실시한 후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

- 사업규모와 지역이 확대되면서 잉글랜드 중부지역에서 가장 큰 MC 기관의 하나로 성장
- 2003년부터는 직접적인 MC 대출 사업에 더하여 여타 소규모 MC 기관들을 위하여 신용상태 점검, 상환 및 연체 실적 관리 등 back office 기능을 대신 수행
- 신용위험 관리를 위하여 상환실적에 따라 대출의 규모와 조건을 조정하는 방식을 활용
- 최초 대출자에 대하여 10,000파운드를 상한으로 비교적 소규모로 대출하지만 상환실적에 따라 대출금은 25,000파운드까지 증가 가능
- 대출기간 또한 최초 대출의 경우 1년을 상한으로 하지만 5년까지 연장 가능

3) Fair Finance (영국)

- 2005년부터 런던지역에서 소액 서민대출과 금융상담 서비스를 공급
- 2000년경부터 동부런던(East London) 지역에서 금융배제(financial exclusion) 퇴치를 위하여 활동하던 Environment Trust가 전신
 - 저소득층 여성 실업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소액 대출과 과도한 부채를 보유한 가구에 대한 재무상담 컨설팅 서비스 제공
- 긴급자금이나 생계자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개인대출(personal loan), 영세자영업 창업 및 운영자금으로 목적으로 하는 사업대출(business loan), 저소득 계층에 대한 일반 금융상담

(financial counseling) 서비스 등 세 가지 업무 수행

- 개인대출의 경우 최대 2,000파운드까지 만기 1~2년의 대출 제공
 - 차입자가 주간 또는 월간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담보는 요구하지 않음.
 - 대출 신청 후 1일 이내에 대출 여부를 결정하여 대출자의 긴급 자금 수요에 부응하도록 설계
- 사업대출의 경우 최대 10,000파운드까지 5년까지 대출
 - 무담보 대출이며 매월 원리금 분할 상환
 - 대출 신청 후 2주일 이내에 대출 여부가 결정됨.
-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1996건 1,915,900파운드를 대출
 - 개인대출이 189건 1,337,700파운드, 사업대출이 157건 578,300파운드를 차지

4) Adie (프랑스)

- Adie(Association pour le droit a l'initiative economique)는 창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은행권 대출 서비스 접근에 제약을 받고 있는 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을 목적으로 프랑스에서 출발
 - Grameen 은행을 모델로 French Development Agency의 지원 아래 Maria Nowak이 주도하여 1989년 설립
 - 2008년을 기준으로 프랑스에는 약 20만 건의 MC 대출에 대한 수요가 만족되고 있지 않을 정도로 financing gap이 큰 것으로 알려짐.

- 2006년 창업자의 50% 가량이 8,000유로 이하의 자금으로 창업한 영세기업이었으나 이들 중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는 1/4 정도에 불과
- 신용에 대한 접근 장애는 장기실업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활발한 해법 모색 시도

□ 두 가지 종류의 대출상품을 제공

- 최대 5,500유로를 7.98%이자율로 2년간 대출하는 상품
 - 대출금액의 5%에 해당하는 대출 수수료는 별도로 부과
 - Grameen 모형의 집단대출 정신에 영향을 받아 대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증인(guarantor)의 공동 서명을 요구
 - 정부나 기업 등 외부의 지원 없이 자체 재원으로 MC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계된 상품
 - 대부분의 대출 재원은 BNP-Paribas를 위시한 상업은행으로부터의 대출
- 외부기관과 협조하여 제공되는 준지분(quasi-equity)성 대출 상품
 - 무담보, 무이자(5% 대출 수수료는 별도)로 최대 7,400유로까지 대출하는 상품: 상공회의소와 지역 정부의 자금 지원으로 운영되는 상품
 - 창업 보조금: 정부의 창업 지원금을 Adie가 배분
 - 창업 지원 대출: 창업기업에 대한 정부 대출 자금을 Adie가 집행

- 설비구입자금: 영세기업 창업에 필수적인 각종 기구를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
 - 최초 대출에 대해서는 1,000유로의 상한을 설정하는 등 차주의 신용도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
 - 대출기업을 대상으로 외부 컨설팅 기관과 연계하여 발전 전략 수립 보조, 경영기법 전수, 판매전략 수립 조언 등의 서비스를 제공
- Adie는 2008년 약 13,000건의 대출을 실시하였으며 62,0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알려짐.
 - 프랑스 전역에 걸쳐 130여개의 사무실에서 400여명의 직원이 종사

5) France Initiative (프랑스)

- 지역사회의 소규모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던 20여개의 프랑스 정부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1985년 출범한 통합체
 - 각 지역에 위치한 상공회의소와 밀접한 연계 하에서 지역 소규모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실시
 - 대출자가 기존 영세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자금 지원
- "Prets d'honneur"로 불리는 준지분성 대출 상품을 제공
 - 무담보, 무이자 대출상품인데 대출자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으로부터 추가적인 자금을 공급받아 창업자금으로 활용
 - 상대적으로 은행에 대한 접근 장애가 덜한 계층(almost bankable persons)이 종사자 3~10인의 영세기업 창업 시 자금 지원

- "Prets d'honneur"의 평균 대출 규모는 7,400유로(2007년)이며 이 금액의 7~10배에 해당하는 은행대출이 수반되는 경우가 다수
 - 2007년 동안 12,500건의 대출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은행을 통하여 추가적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가 약 5,000건
- 프랑스 전역에 걸쳐 240여개의 사무실에 500여명의 전문인력 종사

6) Micro-credit by Savings Banks (스페인)

- 스페인에서는 저축은행(savings bank)이 MC 대출을 주도
 - 저축은행들은 자체 재원으로 또는 정부의 각종 영세기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MC 대출을 실시
 -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ICO Microcredit Line"과 The Microcredit Programme for Entrepreneurial and Business Women of the Women's Institute"가 대표적
 - 저축은행을 위시한 MC 기관과 대출자의 중간에 "MC 지원 사회 기구(social·micro-credit support organization: SMSO)"가 위치하여 부가적인 지원을 제공
 - 대출자에 대한 정서적 지원, 경영기법 전수, 사업계획의 이행 및 진전에 대한 모니터링 제공 등의 활동을 수행
 - SMSO는 지역 상공회의소, NGO, 노동조합, 협동조합 등이 담당

[그림 IV-3] 스페인의 마이크로크레딧 모델



- 스페인의 46개 저축은행 전부가 자체 재원을 바탕으로 하는 MC 대출을 취급
 - MC 영역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7개의 저축은행은 2005년까지 약 10년의 기간 동안 3,921건, 4,180,000,유로의 대출 실적을 보였음.
 - 영세기업의 창업 및 운영개선을 목적으로 최대 25,000유로를 6년 동안 대출
 - 이자율은 3%~6%(2005년)로 비교적 낮은 수준
 - 차주의 상황과 업종 특징에 따라 6개월까지의 거치기간을 허용
 - 담보는 요구하지 않음
- 스페인 저축은행은 정부가 지원하는 ICO 프로그램을 통한 대출에도 중추적 역할을 담당
 - 2005년까지 약 2000만 유로의 MC 자금을 대출

- 영세기업의 창업 및 운영개선을 목적으로 최대 25,000유로를 5년 동안 대출
 - 5%~6%의 이자가 부과되며 담보는 요구하지 않음.
 - 창업 및 경영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전액이 아니라 95%가량을 대출함으로써 낮은 이자율로 인한 문제 발생에 대응

7) MicroBank la Caixa (스페인)

- MicroBank는 스페인의 저축은행 중 하나인 Catalan Savings Bank la Caixa가 상업적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MC 사업의 본격적 확장을 위하여 설립한 MC 기관
 - MicroBank는 금융에 대한 접근 확대라는 사회적 목적의 달성과 재무적인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
 - 생산적 활동을 독려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며 개인 자영업과 영세기업의 창업을 자극한다는 목적을 내걸고 MC 사업에 특화
 - 자본금 7550만 유로는 Catalan Savings Bank la Caixa가 전액 출자
- 사회적 MC, 재무적 MC, 가족지원 MC등 세 가지 프로그램 운영
 - 사회적 MC는 공식 금융부문에 대한 접근에 제약받고 있는 개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프로그램
 - 최대 15,000유로까지 대출하며 외부 전문기관과 제휴하여 차주의 사업을 지원하고 모니터링 실시
 - 재무적 MC는 영세기업의 창업이나 결합에 소요되는 자금을 공급하는 대출 프로그램

- 대출 대상 프로젝트 규모를 감안하여 최대 25,000유로까지 대출
- 가족지원 MC는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가족에 대한 긴급 생계자금 대출 프로그램

□ 2008년 말까지 33,000건 2억4600만 유로의 대출을 실시

- 2008년 말 현재 30,000건 1억 7760만 유로의 대출이 유지되고 있음.

8) Bank Etica (이탈리아)

□ Bank Etica는 금융영역에서 개인과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 경제적 활동 수행을 목적으로 1998년 이탈리아에서 시작

- 구체적으로 은행사업 영역에 윤리적 측면을 도입함으로써 설립 목적 달성을 추구

- 은행 운영의 원칙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 사항을 천명

- 경제적 행위가 비경제적 결과를 초래함을 유의하여 의사 결정
- 신용에 대한 접근은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
- 이윤은 모든 회원(주주 및 예금자)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모든 관계자의 이해관계는 존중되어야 함.
- 투명성과 효율성은 윤리적 요구임.
- 모든 이해관계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

□ 수취한 자금을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는 영역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수익 창출

- 주로 환경과 사회발전(social development) 영역에 대한 투자
 - 투자자금 조달을 위하여 다양한 금융상품 제공
 - 요구불 예금, 저축 예금, 연금 상품, 온라인 서비스, 계좌이체, 윤리적 투자를 추구하는 펀드상품 판매, 예금이 투자된 대상에 대한 정보 및 분석 자료 제공
 - 2003년부터 다른 기관과 연계하여 MC 상품을 제공
 - 자영업 창업자와 빈곤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상품을 제공
 - 자영업 창업자에 대한 대출은 최소 5,000유로에서 최대 25,000유로를 3년~7년의 기간 동안 대출
 -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목적의 대출은 1,000유로~7,500유로를 3년 만기로 대출하며 자영업 창업자금에 비하여 낮은 이자율 부과
- 2008년 말 현재 200여명의 직원 이탈리아 전역에 산재한 12개의 지점에서 활동 중
- 3만여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기업회원 4,400여 곳이 포함
 - 자본금 2280만 유로, 총 예금액 5억 6천만 유로의 규모를 성취한 금융기관으로 성장
 - 총 3,300여건 대하여 4억 3,200만 유로를 대출
 - MC 대출 영역에서는 5년여의 기간 동안 117건, 2백만 유로의 창업대출, 383건 170만 유로의 사회적 대출을 실시

9) CREDAL (벨기에)

- CREDAL은 1985년 설립된 벨기에의 신용협동조합으로 1996년부터 MC 대출 상품을 판매
 - CREDAL의 목적은 사회적 목적을 위한 저축상품을 제공하고 신용 공급과 상담을 통하여 사회적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
 - MC 대출은 금융의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는 CREDAL의 목적에 잘 부합하는 상품
 - 1997년에는 MC 대출 상품의 직접적인 판매를 중단하고 여타 MC 기관들과 협력하여 설계한 MC 프로그램인 "Prets Solidaires"에 참여하여 영세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로 수행
 - 2000년 "Credel MC²"라는 독자적인 MC 대출 프로그램 운영 시작
- "Credel MC²"는 두 종류의 MC 대출상품을 제공
 - 투자목적 신용(Credit d'investissement)은 최대 12,500유로를 4년 동안 5% 이자로 대출
 - 현금흐름 신용(Credit de tresorerie)은 최대 10,000유로를 1년 동안 (차환 가능) 8% 이자율로 대출
 - 대출 원금의 50%에 대하여 보증인을 요구하고 대출 관련 수수료 3%는 별도로 부과됨.
 - CREDAL은 상환률 제고를 위하여 대출자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 2008년에는 MC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Fonds de Participation"과 제휴하여 새로운 대출 상품 출시

- CREDAL은 대출자 선정과 대출 사후 관리를 담당하고, "Fonds de Participation"은 대출관련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분업 체계를 형성
 - 연체로 인한 손실의 85%는 "Fonds de Participation"이 제공하는 보증으로 커버하고 나머지 15%는 CREDAL이 부담

10) BRIC (벨기에)

- Brussels Regional Investment Company (BRIC)는 브뤼셀 지역의 중소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대주주로 참여하여 설립된 벤처캐피탈(VC)
 - 2000년에는 벨기에 정부와 유럽투자은행의 자금 지원으로 "창업기업 지원과 MC"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
 - 사업수행을 위하여 자회사인 BRUSOC 설립
- BRUSOC은 영세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상품과 빈곤층의 자영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상품을 제공
 - 2009년 말까지 280건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6백만 유로의 자금을 공급
 - 대출자에 대하여 사전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실시함으로써 사업 성공 확률을 높이고 상환률 제고를 추구

다. 시사점

- 유럽연합은의 MC 환경과 전개는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여 우리나라

의 향후 MC 부문 발전전략 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

-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 및 금융시장 환경은 MC가 시작된 남미나 남아시아 국가들보다는 현재의 유럽연합 회원국과 유사
- 특히 은행을 위시한 금융기관의 발달이 부재한 환경에서 사실상 유일한 소비자 및 중소기업 신용공급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후진국의 MC 기관은 기관의 목표나 행태 등에서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것과는 상이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실업문제 해소나 소득격차 완화 등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면서도 장기적 지속가능성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는 유럽연합지역의 MC 사업 모형이 우리의 경제 및 사회 환경에 보다 적합
- 따라서 유럽연합 지역, 특히 유럽연합이 확대되기 이전 회원국인 서유럽의 유럽연합 회원국에서의 MC 발전 경험은 우리나라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

□ (시사점 1) MC의 주된 목적으로 영세 자영업이나 영세기업 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긴급 생계자금 대출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음.

- MC의 대상으로는 실업자, 저소득층, 여성 및 이민자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설정
 - 신용등급을 직접적인 기준으로 설정하기보다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신용등급이 낮고 그 결과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 획득에 애로를 겪는 계층을 대상으로 설정
 - 제도권 금융기관에 의한 신용공급 배제 자체가 MC가 필요한 층

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일 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신용공급 대상을 확정하는 것보다는 보다 합목적적인 태도

- 창업 및 경영개선을 통한 실업 상태 탈출과 고용 확대를 강조하는 경향이 발견되는데 이는 1970년대 후반 이후 심각한 실업문제에 시달려온 서유럽 각국의 역사적 경험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됨.
- 투자를 전제로 하지 않는 소비성 자금에 대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창업 대출에 대한 보조적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시행

□ (시사점 2)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확고한 합의가 형성되어 있으나 그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 MC가 도입된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NGO가 주도하고 사회 운동 차원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사회지향형 MC 모형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사회지향형 MC 모형은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자금 공급을 통하여 곤경으로부터의 탈출을 지원한다는 점을 중시하므로 시장 이자율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5% 내외의 이자율을 부과
 - 이자 수입만으로는 자체적인 운영경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재정적인 자립을 이루지 못하고 공공부문 보조금이나 민간 기부금 등 외부 지원에 재원의 상당 부분을 의존
- 외부의 자금지원에 의존하는 구조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사업규모의 확대에도 명백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

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

- 따라서 자체적인 수입으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자율 현실화 이외에 다수가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된 것은 아님.

- 영국이나 아일랜드 등 앵글로 색슨 국가에서는 MC 대출에 대하여 시장 이자율에 근접하는 이자율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진전되고 있으나 프랑스나 스페인 등 대륙계 국가에서는 아직도 시장 이자율보다 매우 낮은 수준의 이자율 정책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유럽연합은 시장 이자율 부과를 통한 MC 부문의 장기적 지속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임을 강조

□ (지사점 3) 다양한 형태의 MC 기관이 자신의 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저소득층의 창업을 통한 소득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무담보 소액대출이라는 공통점을 보유
- 그러나 저소득층 중에서도 실업자, 여성, 이민자, 기존 영세자영업자 등 보다 특정된 집단을 target group으로 설정하고 사업을 집중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
- 대출자가 종사하는 업종의 특징, 특히 현금흐름을 감안하여 상환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수요자에 요구에 부응하는 상품을 제공
 - 대출 규모, 만기 등을 대출자 현금흐름에 부응하도록 설계
 - 가령 신규 창업자의 경우 상당한 거치 기간을 인정함으로써 사

업 초기 현금흐름의 부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업종의 특성에 따라 투자의 회임기간이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만기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신축적으로 조정

- 최초 대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액·단기 대출을 제공하고 상환실적에 따라 보다 큰 규모의 자금을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전략을 취함으로써 차주의 신용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

□ (시사점 4) MC 부문에 대한 정부의 간여(involverment)는 매우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짐.

- 프랑스나 스페인 등에서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직접 자금을 공급하거나 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 견지
 - 프랑스의 France Initiative, 스페인의 ICO 등이 대표적
- 영국이나 아일랜드의 경우 정부가 MC 시장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법률적·제도적 기반을 정비함으로써 MC의 확산을 간접지원
 - 영국은 MC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를 "Community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CDFI)"라는 법적 개념으로 유형화하여 이들에 대하여 각종 지원과 동시에 감독을 수행
- 역사적으로 광범위하고 정교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대상에 영세 자영업과 영세기업을 포함
 - 여타 유럽 국가에 비하여 MC 기관의 활동은 활발하지 못한 형편이지만 KfW를 중심으로 구축된 중소기업 지원체계가 영세 자영업이나 영세기업을 포괄

2. 유럽연합의 마이크로크레딧 정책

가. EC의 MC 정의

- EC(2007)는 효과적 정책수행을 목적으로 사업 대상, 사업 목적, 영업 방식 등의 측면에서 MC를 자세히 정의
 - 종사자 10인 미만, 연매출(또는 총자산) 200만 유로 미만인 영세기업(micro-enterprise)의 기업주, 자영업자, 또는 사회적 소외계층 중 제도권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 영세기업의 창업이나 사업확장과 같이 소득창출과 고용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에 사용될 목적으로 25,000 유로 이하 소규모 자금을 무담보로 대출하는 금융서비스
- MC의 대상으로 설정된 영세기업은 EC의 중소기업 분류에서 숫자나 고용 규모 측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표 IV-1> 유럽연합의 중소기업 분류

	종사자 수	연간 매출	총자산	기업 수
중기업	250인 이하	5,000만 유로 이하	4,300만 유로 이하	25.5만개
소기업	50인 이하	1,000만 유로	1,000만 유로 이하	163.9만개
영세기업	10인 이하	200만 유로 이하	200만 유로 이하	2,128.8만개

주: 연간 매출과 총자산은 선택적 기준임.

자료: EC(2003)

- 유럽의 경우 직종이나 지역에 기반을 둔 연대조직의 전통이 강하여 별도의 조직으로 MC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문제제기 가능
 - 유럽은 동업자조합의 전통이 강하고 중산층이하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조합(credit cooperatives)이 발달한 지역
 - 신용협동조합 등 기존 조직체가 MC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MC 기관과 함께 MC의 중요 부분을 구성
 - 신용협동조합이 MC의 중요구성요소이며 수적으로도 전 세계 MC 기관의 약 6% 정도를 신용협동조합이 차지
 - MC는 지역 및 직능기반 금융조직이 수행하던 금융기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환경에 맞는 형태와 구조로 재설계된 새로운 형태의 대안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조합원의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는 신용협동조합과 달리 MC 기관은 저소득층의 자영업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공급에 특화한다는 측면에서 차별성 보유
 - 유럽연합도 MC를 기관의 형태가 아니라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의 형태를 중심으로 정의
 - 신용협동조합이나 NGO, 기존 금융회사를 막론하고 저소득층의 창업 및 운영자금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무담보 대출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MC로 파악하고 정책지원 대상으로 설정

나. 유럽지역 MC의 현황과 특징

- 유럽지역의 MC는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동유럽과 서유럽에서 상이한 양상으로 발전
 - 동유럽의 경우 MC가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금융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산시키는 도구로 인식
 - 서유럽에서는 주로 저소득층의 소득 증진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통합 제고를 목적으로 MC가 추진
- 1990년대 초반 동구권의 몰락 이후 동유럽 지역에서 MC는 전통적 금융회사, 특히 은행에 대한 대안으로 빠르게 부상
 - 계속된 혼란과 내전으로 인하여 황폐화된 사회와 경제 환경에서 은행을 위시한 전통적 금융기관의 역할 수행 미흡
 - 1990년대 중반까지 동유럽의 MC 기관은 170만 대출고객과 230만 예금고객을 유치하는 성과 시현하였으며 매년 3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MC가 정착단계에 접어든 일부 국가에서는 상업은행들이 MC 영역에 진출하면서 상업적 고려에 기반을 둔 사업 모형이 빠르게 확산
- 구 유고연방 지역에서 MC가 가장 활발하게 전개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코소보, 마케도니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등 국가에서 MC의 확산이 매우 빠르게 관찰됨.
 - NGO 주도의 MC 기관과 더불어 서유럽 지역에서 조달된 투자금을 재원으로 MC 사업에 특화된 상업적 금융기관으로 설립된 마이크로은행(micro-bank)이 괄목할 성과를 보이고 있음.

-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의 중동부 유럽국가에서도 빠른 성장세
 - 약 500만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신용협동조합이 MC 영역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
- 지난 10여년 동안 꾸준한 발전을 통하여 동유럽 지역의 MC는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 기반을 성공적으로 구축
 - 운영자립도가 NGO MC 기관의 경우 138%, 마이크로은행의 경우 119%,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120%로 나타나 MC 기관이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 가능
- 서유럽 지역에서는 최근 고조되는 관심에도 불구하고 MC가 아직 초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독일의 Raiffeisen 은행, 영국의 lending charity, 이탈리아의 Casse Ruralie 등과 같이 MC와 유사한 개념의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기관들이 나름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 영세자영업에 대한 소규모 무담보 대출을 핵심적 구성요소로 하는 현대적 의미의 MC에 대한 관심 증대는 최근의 현상
- 서유럽 지역 MC의 시발점은 1980년대부터 서유럽 각국을 괴롭혀 오던 실업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에서 찾을 수 있음.
 - 제2차 석유위기 이후 공급 측면의 충격으로 인하여 서유럽 경제는 장기 침체에 돌입하였고 그에 따라 실업문제가 가장 큰 사회적 화두로 대두

- 서유럽 각국은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비효율적 운영과 높은 연체율로 인하여 대규모의 손실 발생
 - 벨기에의 Fonds de Participation, 독일의 Kassel, 영국의 Prince's Trust 등이 대표적인 프로그램

□ 실업자 대상 대출프로그램의 실패에 대한 반성과 함께 1990년대 들어서면서 MC가 개발도상국에서 거둔 성공담이 전해지면서 이를 서유럽에 접목시키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이 전개

- 프랑스의 Adie, 영국의 Street UK 등과 같은 단체들이 서유럽에 적합한 MC 모형의 개발을 위하여 이 시기에 설립된 대표적 단체
- 초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유럽 각국에서 MC 성공사례가 축적되면서 2000년대 들어서서는 고용유지와 소득재분배 악화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MC의 유용성이 부각
- 정책 당국은 물론 기존의 제도권 금융부문이 MC의 확산을 지원하면서 MC는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

□ 서유럽 MC는 독자적인 지속가능성을 완전하게 확보하지 못한 상태

- 여전히 정책당국의 지원이나 민간 기부금 등에 재원의 상당부분을 의존
-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에는 사업규모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을 노정

다. MC에 대한 유럽연합의 기본 입장

□ 유럽연합의 경제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은 2006년 채택된 신리스본전략

(Lisbon Strategy for Growth and Jobs)에서 제시된 장기 전략목표에 부합하도록 수립

- 경제 측면에서 "혁신과 투자확대를 통한 경제성장과 고용확대"를 중요 전략목표로 설정
- 사회통합 측면에서는 "교육과 고용의 기회평등, 빈곤 퇴치를 통한 사회정합성(social cohesion) 제고"를 장기 전략목표로 제시
- MC는 두 가지 목표의 달성에 모두 기여하는 정책수단으로 간주

□ 유럽연합 고용시장에서 영세기업은 절대적 중요성을 차지

- 고용의 양 측면에서 영세기업의 비중은 절대적
- 지속적 경제성장에 요구되는 핵심역량인 혁신(innovation)의 주체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

□ 영세기업의 창업 또는 경영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존재

- MC는 영세기업에 대하여 소액 신용대출을 제공함으로써 자금 확보 애로에 대응할 수 있는 통로로 각광
- 유럽연합은 영세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원으로서 은행 등 전통적인 신용공급 기관보다 MC가 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인식에 근거하여 MC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최근 들어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약이 소득격차를 확대하고 사회갈등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이 강조되면서 사회정책 측면에서 MC를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강화

- 저소득층 여성, 이민자, 장애인 등 소위 소외계층은 열악한 노동시

장 지위로 인하여 빈곤에 시달리는 경우가 다수

- 이들이 빈곤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소득창출 기반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영세기업에 취직하거나 창업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
- 담보 부재, 소득과 자산에 대한 정보 불투명성 등으로 인하여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 또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 제한은 새로운 경제적 기회에 대한 정보획득 기회를 박탈하여 이들의 경제적·사회적 곤경상태가 고착화되는 결과를 초래

□ 유럽연합은 사회통합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MC를 적극 지원

- 제도권 금융기관의 이용에 제약을 받는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하여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 이들이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도록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더 확고한 사회통합 달성
- 사회통합정책과 관련하여 MC가 활용되는 또 하나의 영역은 2000년대 이후 유럽연합이 확대되면서 새로이 회원국이 된 남동부 유럽 각국과 기존 서유럽 회원국 간의 경제적·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목적으로 실시되는 지역결속정책(regional cohesion policy) 부문
 - 구 유고연방 제국, 알바니아, 루마니아 등 동구권에 소속되어 있던 남동부 유럽 국가의 경우 서유럽 각국에 비하여 금융시장 발전 단계가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에 접근 가능한 인구가 한정
 - 유럽연합은 발칸 전쟁의 피해 복구를 촉진하고 경제 성장을 자

극하여 서유럽 회원국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남동부 유럽
각국의 MC 기관을 적극 육성하는 전략을 구사

□ 유럽연합의 MC 관련 정책은 상호 유기적 관계 속에서 정교한 계층적
구조로 편성

○ 가장 높은 수준에서 신리스본전략이 유럽연합 차원의 장기비전과
전략목표를 제시

○ 다음 단계에서 영역별로 구체적 실행 프로그램이 수립

- MC는 실행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정책수단으로 특히 경제정책과
사회통합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

라. 마이크로크레딧 정책의 기본 체제: A European Initiative
for the Development of Micro-credit in Support of Growth
and Employment(EIDMC)를 중심으로

□ 유럽연합의 MC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과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2007년
EC가 발표한 EIDMC에 자세히 제시

○ EIDMC가 2004년의 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한 바에 의하면 유럽연합
전역에서 영세기업의 창업과 사업 확장을 위해 70만 건, 63억 유로
의 잠재적인 대출수요가 존재하지만 MC 기관의 대출은 50만 건,
50억 유로를 넘지 않아 영세기업 부문에서 자금의 수요와 공급 불
일치가 심각

○ 이는 근본적으로 정보비대칭성(asymmetry of information)으로 인
하여 발생하는 시장실패의 특징적 증상

- 영세기업의 경우 취약한 지배구조, 엄격한 회계처리 원칙 부재, 비공식적 사업 관행 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발생
- 따라서 영세기업에 대한 신용공급 부족은 가격기구의 신축적 조정을 통하여 해소될 수 없으며 일정한 정도의 정부 개입 요구
- 고용과 혁신에서 영세기업부문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럽연합은 이러한 요구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

□ EIDMC는 유럽연합 지역에서 MC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크게 네 가지 영역에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

○ 첫째, 회원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법적·제도적 환경을 정비할 필요

- MC는 차주의 신용위험을 평가함에 있어 정량적 분석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금융기법을 탈피하고 계량화가 어려운 정성적 자료를 중시하는 금융기법
- 따라서 은행 등 전통적 금융기법에 의존하는 금융기관을 규제·감독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기존의 법적·제도적 환경이 MC 기관의 운영에 장애물로 작용 가능
 - * 가령 은행의 건전성 관련 규제를 MC 기관에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 MC 기관은 사실상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됨.
- MC는 높은 신용위험으로 인하여 제도권 금융기관이 포기한 계층을 고객으로 하면서도 상업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모형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다수의 성공 사례를 통하여 증명
- MC의 지속가능성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 다양한 MC 고객의 금융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MC 기관 육성, MC 기관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는 이자율 상한 규제의 완화, 대출자 신용정보에 대한 MC 기관의 접근 확대, 세제 혜택 부여를 통한 운영비용 감축, MC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 및 감독기준의 설정, MC 기관에 적합한 회계기준 확립 등을 법적·제도적 환경정비의 구체적인 예로 제시할 수 있을 것임.

○ 둘째, 기업가정신의 함양에 적합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책적 노력이 필요

- MC는 창의적인 영세기업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기업가정신의 실현을 뒷받침

- 구체적으로 영세기업과 MC 간에는 크게 세 단계에 걸쳐 연결고리가 존재: ① 영세기업 창업에 비하여 임금노동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운용되고 있는 고용정책을 개선하고 영세기업 창업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이나 기술지원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으며 ② 실업자나 사회보장수급자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③ 기존 영세기업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경영진단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생존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임.

○ 셋째, 유럽연합은 물론 회원국 차원에서 MC의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전체 회원국에 전파할 필요

- 이미 일정한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고 있는데 European Microfinance Network, Microfinance Center for Central and Eastern Europe 등 정보공유기구가 설립되어 활발하게 활동

- 유럽연합 차원의 MC 정책을 주관할 전문 조직 구축, 유럽연합에 적합한 MC 모형 개발, MC 기관의 행동강령 개발 등도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
- 넷째, MC 기관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MC 기관의 안정적인 대출재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증, 대출, 출자 등 다양한 형태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2008년에는 5,000만 유로 규모의 Joint Action to Support Microfinance Institutions in Europe (JASMINE) 펀드, 2009년에는 5억 유로 규모의 PROGRESS Micro-finance Facility를 조성하여 MC에 대한 금융 지원 사업을 수행
- 유럽연합의 MC 정책은 금융영역과 비금융 영역에서 종합적으로 시행
 - 시장에 대한 파급효과 측면에서는 금융영역정책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

마. MC 관련 금융지원 정책

1)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Framework Programme 2007-2013 (CIP)

- CIP는 유럽연합의 장기발전전략 기본 지침인 신리스본전략이 제시한 전략목표인 “성장과 고용”의 달성을 위한 실천계획의 하나로 수립
- CIP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Programme (EIP),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통한 중소

기업 경쟁력 제고 추진을 목표로 하는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Support Programme (ICP),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 확대와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Intelligent Energy Europe (IEP) 등 세 개의 하위 프로그램으로 구성

- 2007년부터 2013년까지 8년 동안 EIP에 21억 7,000만 유로, ICT에 7억 2,550만 유로, IEP에 7억 2,550만 유로 등 총 36억 2,100만 유로의 예산이 배정

□ CIP의 세 가지 하위 프로그램 중 MC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프로그램은 EIP

- EIP의 목적으로 다음 여섯 가지가 제시

- 중소기업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혁신활동에 대한 투자 활성화 지원
- 회원국 간 중소기업정책 협력 강화
- 기업의 혁신활동 촉진
- 환경관련 혁신활동(eco-innovation) 지원
- 기업가정신과 혁신문화 창달
-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경제 및 행정환경 조성

-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유럽연합은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출자, 대출, 보증 등 여러 가지 금융수단을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과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 기업 활동 관련 정보 확산과 협력을 위하여 "Enterprise Europe

Network"를 구축하여 지원

- 기업가정신과 혁신역량 축진을 위하여 회원국 간 협력체제 구축하여 모범사례 발굴하고 이를 전파하는 활동을 지원
- 친환경 혁신기술의 개발 및 상품화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회원국의 정책입안을 지원하고 기존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함으로써 회원국의 정책 역량제고를 촉진

□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규모나 중요성 측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금융접근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수단 제공

- EIP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금융지원은 다음의 세 가지
 - 창업이나 사업확장 단계에 있는 혁신중소기업에 대하여 지분참여 또는 유사지분(quasi-equity) 매입을 목적으로 하는 High Growth and Innovative SME Facility(GIF)
 - 회원국의 중소기업 보증기구나 금융기관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SME Guarantee Facility(SMEG)
 - 혁신중소기업에 투자하는 PEF(private equity fund) 등 투자자의 전문성과 기업평가 역량 제고를 지원하는 Capacity Building Scheme(SBC)
- SMEG에는 영세기업 대출을 주업무로 하는 역내 MC 기관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장치가 특별히 마련
 - SMEG는 EC가 출연하여 펀드를 구성하고 운영을 EIF(European Investment Fund)에 위탁

○ SMEG의 금융지원은 다음의 네 가지 지원통로를 통하여 이루어짐.

-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SME 대출에 대한 보증제공
- 영세기업, 특히 창업기업에 대한 무담보 소액대출 보증제공
- 창업단계 중소기업의 지분투자에 대한 보증제공이나 사업이전 (business transfer)을 추구하는 중소기업을 인수하기 위한 메자닌투자(mezzanine financing)에 대한 보증제공
-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제공을 목적으로 대출포트폴리오 유동화 (securitization)를 추진하는 경우 보증제공

○ SMEG의 두 번째 지원통로는 MC 대출에 대한 보증제공을 전제로 설정된 것

- 보증적격요건으로 종사자 9인 이하인 영세기업에 제공되는 만기 6개월 이상 대출 원금 25,000유로 이하의 대출로 설정된 점을 통해서 확인 가능
- MC 대출에 대한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대출 원금의 최대 75%까지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원
- 별도의 수수료나 보증료가 부과하지 않음.
- MC 대출에 수반되는 높은 대출처리 관련 행정비용으로 인하여 영세기업에 부과되는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문제점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SMEG를 통하여 MC 기관에 최대 50,000유로에 달하는 기술지원(technical support)을 무료로 제공

2) Joint European Resources for Micro to Medium Enterprises (JEREMIE)

- 유럽연합은 역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낙후된 회원국이나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지역결속정책 (regional cohesion policy)을 추진
 - 물적 수단으로 결속펀드(Cohesion Fund), 유럽사회펀드(European Social Fund), 유럽지역개발펀드(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등 세 개의 펀드를 설치
 - 이들을 총칭하여 구조펀드(Structural Fund)로 부르기도 함.
 - 결속펀드는 수렴(convergence) 목적 달성을 위한 펀드
 - 경제발전이 부진한 회원국이 환경관련 시설이나 유럽횡단수송망 (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 관련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을 제공
 - 유럽사회펀드는 수렴목적과 경쟁력 제고 및 고용 확대 목적의 달성을 위한 사업에 자금을 지원
 - 근로자와 기업의 적응력 향상, 노동시장 참가 촉진, 노동시장 차별 철폐,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 등을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설정
 - 유럽지역개발펀드는 지역정책의 세 가지 목표 모두를 추구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특히 연구개발, 혁신활동, 환경보호, 사회간접자본 등의 영역을 지원하는데 비중을 두고 차원을 배분

<표 IV-2> EC의 지역정책 목적과 수단

정책 목적	활용가능 수단			예산 비율
수렴	ERDF	Social Fund	Cohesion Fund	82%
경쟁력 제고/고용 확대	ERDF	Social Fund		16%
회원국 간 협력 촉진	ERDF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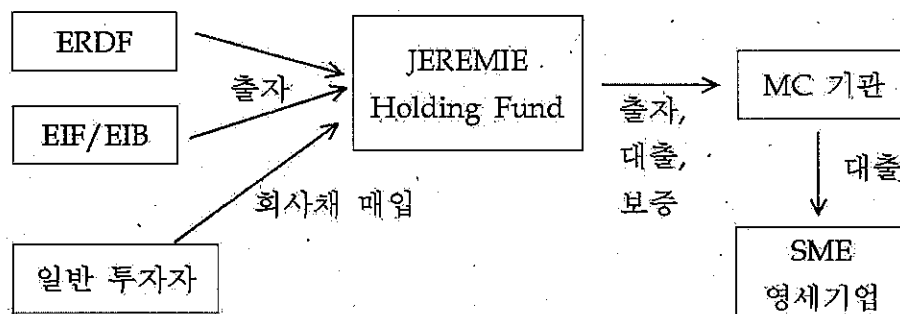
주: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지역정책에 책정된 예산은 총 3,474억 유로임.

□ JEREMIE는 역내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EC, EIB, EIF가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펀드

- EC는 ERDF의 자금을 사용하여 JEREMIE에 출자
-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활성화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데 유용할 것이라는 전망에 바탕을 둔 조치
- 2007년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2008년부터 정식으로 출범
 - 25억 유로의 자본금과 이를 바탕으로 발행한 75억 유로의 회사채 수입금을 합하여 총 100억 유로의 자금을 보유한 JEREMIE 홀딩펀드를 조성하여 이를 EIF가 위탁받아 운영
 - JEREMIE는 기업에 대하여 직접 대출하지 않으며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에 대한 대출을 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출자, 보증제공, 대출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자금을 제공
 -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이 보다 좋은 조건으로 용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

- 2008년 말 현재 루마니아 1억 유로, 라트비아 1억 8,300만 유로, 우크라이나 8,000만 유로, 그리스 1억 유로, 슬로바키아 1억 2,100만 유로, 이탈리아 9,000만 유로, 프랑스 3,000만 유로의 자금이 지원된 것으로 파악됨.

[그림 IV-4] JEREMIE의 작동 구조



3) Joint Action to Support Microfinance Institutions in Europe (JASMINE)

- JASMINE은 2007년 EIDMC에서 제시된 MC 관련 정책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 2008년 EC와 EIF가 주도하여 출범
 - JASMINE의 역할은 MC에 대한 금융지원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으며 MC 기관의 경영 개선 및 성장 촉진, 지속가능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까지 포괄
 - MC 기관에 대한 금융지원과 기술지원은 CIP의 SMEG 프로그램이나 JEREMIE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MC 기관만

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른 프로그램과 구별

□ JASMINE은 EIF와 EC가 출자한 5,000만 유로의 자금을 재원으로 중장기 대출이나 유사지분에 대한 투자 등의 형식으로 MC 기관에 자금을 공급

○ 2008년 9월 펀드 조성을 잠정적으로 완료하였으며 2009년 1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

○ MC 기관이 일반 상업은행으로 전환하거나 신규 지점망 구축 등 사업규모 확대를 추구할 때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MC 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은 JASMINE의 사업영역이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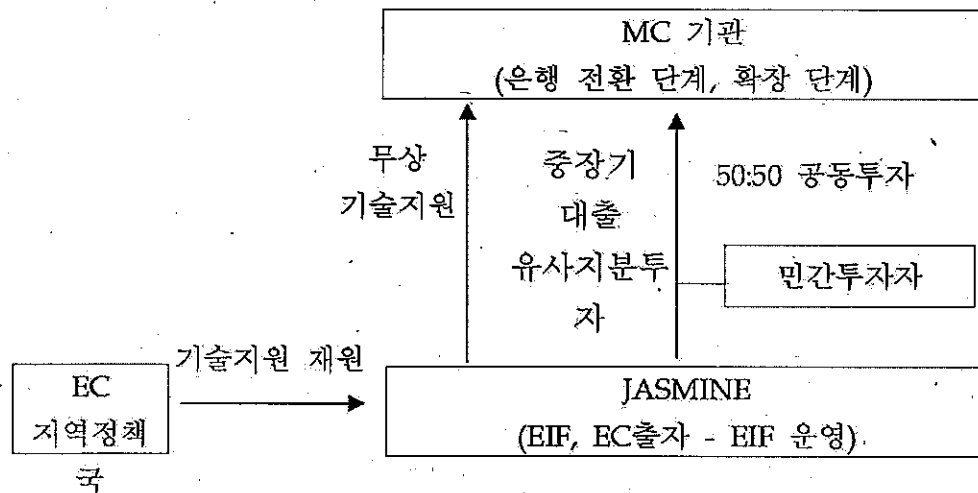
- 이는 JASMINE의 궁극적인 목적이 단순히 MC의 확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MC 부문이 자생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음을 의미

- 따라서 자금공급의 형태도 단기대출이나 보증제공 등과 같이 MC 기관의 대출재원 확충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장기 대출 제공이나 후순위채권 매입 등 MC 기관의 자본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

○ 민간투자자가 MC 기관에 대하여 투자할 의사를 나타내는 경우에 한하여 JASMINE이 민간투자자의 투자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투자

- MC 기관의 규모 확대와 상업화 과정에 내재하는 위험의 일정 부분을 공공부문이 공유함으로써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선택된 투자방식

[그림 IV-6] JASMINE의 작동 구조



- JASMINE은 MC 기관에 투자와 동시에 또는 별도로 무상으로 기술지원을 제공
- MC 기관의 영업활동 진단 및 점검, 독립적 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조직 및 지배구조 진단, 신용등급 부여를 위한 기초 작업, 인적자원 관리 등 주로 상업적 원리를 따라 MC 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 EC의 지역정책국(DG Regional Policy)이 JASMINE에 출연한 자금을 재원으로 삼고 있음.

4) PROGRESS Micro-finance Facility (PMF)

□ 2007년 하반기에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로 인하여 유럽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으며 특히 고용시장안정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음.

○ 대규모 실업사태의 발생 가능성에 직면한 유럽연합은 2009년 3월 고용시장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인 "Shared Commitment for Employment (SCE)"를 발표

- SCE에 제시된 정책은 다음과 같이 10가지로 분류 가능: ① 고용 시장 안정을 위하여 직무능력 향상 지원, 기업가 정신의 함양 지원, 고용 서비스 관련 공적 인프라 확충 등에 약 190억 유로를 긴급 투입 ② 기존의 EU 예산을 재조정하여 1억 유로의 재원을 조성하고 EIF와 공동으로 새로운 MC 펀드를 설립 ③ 유럽연합 전역에 걸쳐 적어도 500만 이상의 인턴 자리를 제공 청년실업자에 제공 ④ 단기 근로나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제한된 일자리를 나눌으로써 고용을 유지하려는 노력에 대한 지원 ⑤ 실업의 장기화와 직무 능력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과 고용알선 서비스 강화 ⑥ 가사 도우미 등과 같은 비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 발굴, 고용 관련 비용 절감 및 고용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처한 실업자의 노동시장 재진입 촉진 ⑦ 직업소개 네트워크의 전면 정비 ⑧ 산업구조 변동에 노동수요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인적자본 정책을 강화 ⑨ 기업구조 조정 과정에 노동시장에 주는 충격 최소화를 위한 지원 ⑩ 중소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시행

○ 경제위기로 인하여 중소기업은 한층 큰 충격을 받았는데 고용시장

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지위를 감안하여 SCE는 중소기업 부분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 EC가 1억 유로의 재원을 출자하여 EIF와 공동으로 새로운 MC 투자펀드를 설립할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

□ PROGRESS Micro-credit Facility(PMF)는 이러한 SEC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MC 투자펀드

- 재원은 고용 확대와 사회통합 제고를 목표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던 "PROGRESS 프로그램"에 배정된 예산을 조정하여 마련
- 펀드의 작동 방식은 JEREMIE와 매우 유사
- EC가 PROGRESS 프로그램에 배정된 예산 중 1억 유로를 출자하여 펀드를 설립한 후 추가로 4억 유로를 차입하여 총 5억 유로의 재원을 조성
- 펀드 운영을 담당한 EIF는 MC 기관에 대하여 지분투자, 채무증서(debt instruments) 인수, 보증제공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자금을 공급
- 펀드의 자금공급이 힘입어 향후 8년 간 약 45,000건의 MC 대출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

5) The European Fund for Southeast Europe (EFSE)

□ EFSE는 MC를 통하여 1990년대 발칸반도에서 발생한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남동부 유럽의 재건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MC 투자펀드

- EFSE의 설립에 앞서 논의 과정에서 전후 재건과 사회 안정을 이룩하기 위하여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 부문 발전이 중요하다는 데는 인식이 일치
- 남동부 유럽지역의 경우 금융부문 발전이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중소기업이 처한 금융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것이 현실
- 이러한 어려움에 대응하는 구체적 방안으로 중소기업, 특히 영세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MC 투자펀드를 설립하는 방안이 채택

□ EFSE의 가장 큰 특징은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 투자자까지 유도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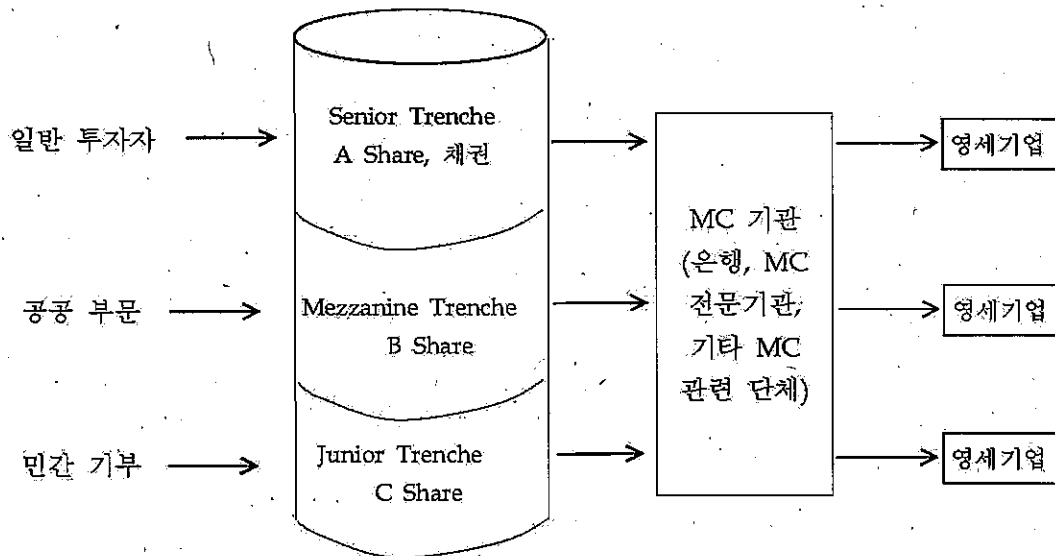
- 투자위험을 적절하게 재가공(repackaging)하여 위험의 정도가 서로 다른 복수의 트렌치(trenche)를 만들어 위험추구 성향이 서로 다른 투자자에게 제공
 - 민간의 기부로 조달된 자금이 손실분담 서열(seniority)에서 가장 뒤처지는(junior) "C 주식(C Share)"에 투자
 - C 주식의 발행액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손실분담 서열이 중간인(mezzanine) "B 주식"을 발행하여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 개발금융 전문기관 등 공공부문에 판매
 - B 주식과 C 주식 총 발행액의 250% 한도 내에서 손실분담 서열이 가장 앞서는(senior) "A 주식"과 만기 5년 내지 10년의 채권(note)을 발행하여 이를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
- 이런 방식을 거쳐 처음 민간기부로 조성된 금액의 7배 규모에 이르

는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펀드를 구축

- 투자위험이 높은 MC 분야 투자에 민간자금을 성공적으로 유인
 -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재가공하여 민간 투자자의 위험 선호에 부합하는 상품을 제공
 - 이익 배분 측면에서 가장 큰 위험을 부담하는 C 주식이나 공공 부문이 투자하는 B 주식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험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수익률만을 보장함으로써 민간 투자자가 투자하는 A 주식이나 채권에 대하여 충분히 높은 수익률을 제공
- 2009년 6월 말 현재 총 6억 7,200만 유로의 자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채권 1억 6,900만 유로, A 주식 2억 700만 유로, B 주식 9천만 유로, C 주식 2억 600만 유로로 구성
 - 채권을 매입한 민간투자자로 Sal.Oppenheim, Deutsche Bank, Omidyar Tufts MF Fund, Credit Cooperatif 등이 대표적
 - A 주식과 B 주식 투자에는 KfW, IFC, FMO, EIB, OeEB, BN & P-Good Growth Fund, Frankfurt School of Finance & Management 등의 국제투자회사가 주로 참여
 - C 주식 투자에는 German Government (BMZ), European Investment Fund (as Trustee for EC), Swiss Government (SDC), Austrian Government (ADA), Government of Denmark (DANIDA), OeEB 등 공공부문이 참여
- 남동부 유럽 10개국에 소재한 58개의 MC 기관에 대하여 총 6억 6,310만 유로의 자금을 투자

- 펀드 운용은 MC 투자에 오랜 경험을 가진 독일의 KfW가 담당

[그림 IV-7] EFSE의 펀드조성 및 작동구조



바. 시사점

- 유럽연합의 MC 지원정책은 신용시장의 실패를 보정한다는 전제에서 출발
 - 영세기업이 역내 고용시장의 탄력성을 유지하고 사회통합을 제고 하는데 중요하다는 인식 확립
 - 양적지표에 의존하여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조달이 어렵고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사업수

- 행에 필요한 경영기법을 습득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
-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신용시장에서 배제되는 상황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 이하의 영세기업만이 생존
- 유럽연합 뿐 아니라 각국 정부가 정책수단을 통하여 개입
- 우리나라의 경우 자생적으로 전개된 후진국형 MC 모형 보다는 적극적인 정책 개입을 바탕으로 서유럽에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선진국형 MC 모형이 보다 적합한 것으로 판단
- 후진국에서는 MC를 금융시장이 낙후되어 있고 경제발전 단계가 뒤쳐진 국가에서 영세기업의 창업을 촉진함으로써 빈곤문제에 대응하고 경제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수단으로 인식
- 선진국형에서는 MC를 저소득층의 소득창출기반 강화를 통한 사회적 격차해소와 빈곤문제 해결수단으로 인식
- 서유럽의 MC 정책이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
- (시사점 1) MC를 경제적인 목적과 사회적인 목적을 동시에 성취하는 수단으로 활용
- 유럽연합에서 MC의 일차적 목표는 빈곤퇴치와 소득격차 축소라는 사회적 목적
 - 목적 달성을 위하여 종래 시혜적 복지정책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저소득층 스스로 소득창출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가적으로 실시
- 고용창출과 혁신능력 제고라는 경제적인 목적 달성에도 MC가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인식

- 유럽연합 노동시장에서 중소기업, 특히 영세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며,
- 1970년대 이후 북미나 일본 등 다른 선진 경제권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심각한 실업문제에 시달려왔던 서유럽에서 고용문제가 지니는 사회경제적 의미는 매우 큼.
- 유럽연합은 고용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고용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세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MC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 생산력의 비약적 발전을 결과한 상당수의 중요한 혁신이 중소기업 부문에서 발생하였으며 MC의 대상인 영세기업은 중소기업의 한 부분을 이루는 구성원
- 창업과 확장을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한 부문 지원에 역량을 집중

- (시사점 2) 영세기업에 대한 배려의 차원이 아니라 이들이 스스로 존립 기반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는 정책적 배려 없이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생존해 나갈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정책 원칙 확립
-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생적 존립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영세기업을 선별
 - 보조금 지급 등과 같이 일방적이고 시혜적인 수단은 가급적 피하고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이 작동하도록 보증이나 대출제공 등의 지원에 대하여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요구

□ (시사점 3) 영세기업을 직접 지원하지 않고 영세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경영기법을 전수하는 MC 기관을 지원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

- 저렴한 대규모 자금조성에 비교우위를 보유한 공공부문과 잠재력 있는 영세기업의 선별에 비교우위를 보유한 민간 MC 기관이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함으로써 공동 목표의 달성을 추구하는 전략
- 공공부문이 싸고 풍부한 자금을 MC 기관에 공급함으로써 이들 MC 기관의 사업역량을 강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더 큰 규모의 자금이 더 많은 영세기업에 흘러들어 가도록 유도하는 전략
- 공공부문이 직접 대출 대상 영세기업을 선정하는 경우 상당한 문제점이 존재
 - 공공부문이 직접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차입자들의 상환의지가 약화되는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
 - 평판위험(reputation risk)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공공부문이 시장규율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수준 이하의 이자율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음.

□ (시사점 4) MC 기관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짐.

- 영세기업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그에 따라 필요로 하는 지원의 구체적 내용 또한 다양
- 특정 MC 기관이 이질적인 영세기업의 요구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어려운데 그에 따라 MC 기관도 재원조성 방법, 사업 목적, 사업 형태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 및 운영

- 유럽연합은 보증제공, 직접 대출, 회사채 매입, 출자 또는 유사지분 매입, 기술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수단을 구비하고 있으며 정책지원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수단을 동원하여 지원

V. 국내 서민금융시장 및 마이크로크레디트 현황

1. 서민금융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

- 서민금융은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자금 규모가 작고, 담보능력이 떨어지며, 신용이 낮은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서비스의 공급을 의미
 - 서민금융기관의 대출 이자율은 일반 금융기관 대출 이자율보다 높고, 이자나 원금의 연체율도 높으며, 상환 만기도 짧은 것이 특징
 - 담보가 부족한 계층을 상대로 신용위주의 영업을 하기 때문에 부실 가능성이 크고, 특히 서민들의 경제상황이 경기 하강 시 빠르게 악화됨에 따라 서민금융기관의 경영 상태는 경기순환에 매우 민감
 - 2003년 신용카드 위기 이후 저소득·저신용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시장이 급속하게 위축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신용경색 사태가 도래하면서 “금융소외” 문제가 대두

□ “금융소외”는 논자에 따라 다소 뉘앙스가 다르지만 경제적·비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제도권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신용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 가능

○ 신용시장에 만연하는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신용자원 배분 과정에서 시장실패가 발생하고 그 결과 일부 계층이 신용 획득에 실패하는 경우를 경제적인 이유에 의한 금융소외로 규정 가능

- 차주의 상환능력과 신용도에 대한 차주와 금융회사 간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용에 대한 초과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이자율을 인상하지 않고 상환능력이 높다고 판단되는 일부 차주에게만 신용을 공급하는 신용할당(credit rationing)이 발생

- 이와 같이 시장실패의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모든 신용 수요자에게 신용이 공급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현상이며 신용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계층(주로 저소득층)에 대하여 신용공급이 거절되는 것은 비록 불완전 하지만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이 작동한 결과로 파악할 수 있음.

- 그러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신용제약이 시장실패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므로 시장에만 의존하는 경우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피할 수 없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은 물론임.

○ 비경제적 요인에 의한 금융소외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으나 신용평가시스템의 불완전성, 규제, 사회적 관습 등을 가장 큰 원인으로 들 수 있음.

- 차주의 신용능력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금융회사는 신용평가모형을 사용하는데 신용평가모형의 불완전성으로 말미암아 신용능력이 충분한 차주에 대하여 신용공급이 거절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함.

- * 신용평가 시스템은 항상 오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통계학적 도구
- * 신용평가 시스템의 오류는 신용공급이 가능한 차주에 대하여 대출이 거절되는 오류(1종 오류)와 신용공급이 가능하지 않은 차주에 대하여 대출이 결정되는 오류(2종 오류) 두 가지로 구분 가능
- * 1종 오류는 금융소외를 2종 오류는 건전성 문제를 야기하는데, 두 종류의 오류를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은 없으며 대부분의 신용평가 시스템은 1종 오류보다는 2종 오류의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음.
- * 2종 오류의 발생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1종 오류의 증가를 용인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상환능력이 충분한 차주에 대하여 대출이 거절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높아짐.

- 고금리에 대한 문화적 적대감 또는 금융시장 현실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규제 등에 의하여 금융소외가 발생하기도 함.

- * 고금리(고리대)에 대한 사회적 적대감과 평판위험에 대한 고려로 말미암아 고금리 대출시장에서 충분한 경쟁 부재로 인하여 금융소외 현상이 발생
- *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수준에 설정된 이자율 상한 규제도 금융소외를 야기

□ 이와 같이 금융소외 현상은 매우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소비자 신용시장에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결과한다는 공통점을 가지므로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됨.

- 정보 비대칭성에 의한 신용할당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시장에 참가하여 자금을 공급하거나 시장에 참가할 의사가 있는 민간 경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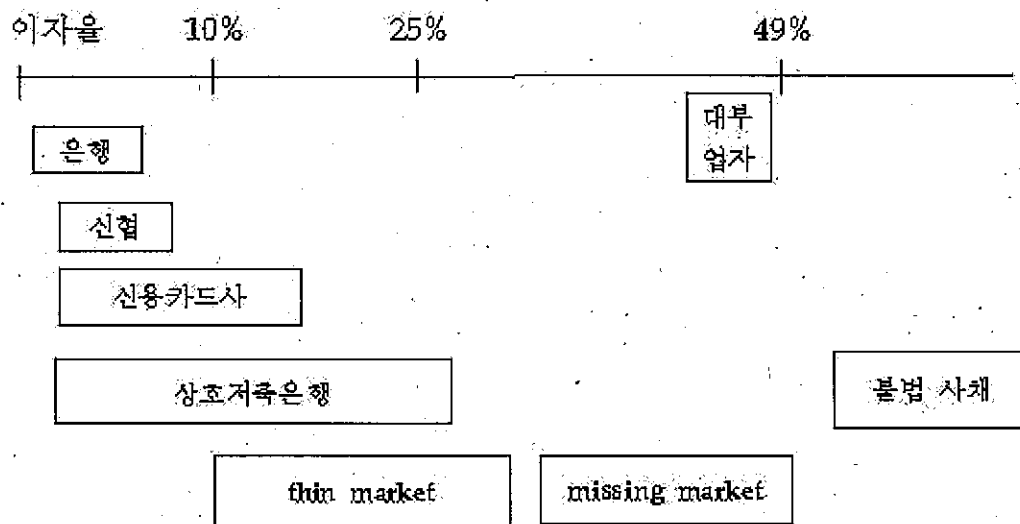
체를 지원함으로써 대응

- 신용평가시스템의 불완전성이나 규제 등이 금융소외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 상응하는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대응
- 우리나라 소비자 금융시장의 다양성 결핍과 그로 인한 차상위 시장에서의 경쟁 부재는 심각한 수준
 - 은행을 위시한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회사가 우량 고객을 목표로 삼고 유사한 영업 전략을 추진
 - 이자율 20% 이하의 시장에서는 금융권역을 초월하여 금융회사 간 극심한 경쟁이 전개되는 반면
 - 이자율 20%~49% 시장에서 thin market 현상이 발생
 - 저축은행,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은 전통적 활동 영역에서 사실 상 철수
 - 1997년 말 경제위기 이후 금융구조 조정 과정에서 입지가 축소되고 자산 건전성이 강조되면서 안정성 위주의 경영으로 소비자 신용시장에 대한 소극적 영업 전략 구사
 - 최근 대부업체가 누리고 있는 높은 수익성에 주목한 저축은행업계가 고금리 소비자 대출 시장에 재진입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조심스러운 접근태도를 취하고 있음.
 - 대부업자는 일본계 자금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높은 수익률 실현
 - 대부분 법률적으로 허용된 49%의 법정 이자율을 부과하면서 높은 수익률 실현
 - 대출자의 신용위험에 관계없이 법정 최고금리를 부과할 수 있다

는 것은 경쟁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

- 불법 대부업자는 법정 금리를 훨씬 넘는 살인적 고금리를 부과하면서 성업 중

[그림 V-1] 소비자 금융시장 구조



- 이자율 20% 이상의 차상위 시장에 제도권 금융회사 진출이 부진함에 따라 불법 고리 사채가 성행
 - 자산 건전성에 대한 강조, 평판위험에 대한 우려, 신용평가시스템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제도권 금융회사가 차상위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힘든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
 -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고객이 긴급한 자금 수요에 직면하는 경우

불법 고리 사채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

- 불법 사채시장은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 구조로 형성
- 대부분의 경우 연체는 필연적인 귀결이며 연체 채권에 대한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 야기되기도 함.

□ 차상위 소비자 금융시장에는 영세 자영업 관련 자금 수요와 소비성 단기 대차자금 수요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차별적 정책 대응 필요

○ 영세 자영업 창업 및 운영개선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 것은 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신용제약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존의 서민금융기관 역할 강화와 MC 활성화로 대응

- 사업규모, 담보능력이나 신용위험의 정도에 따라 서민금융기관과 MC 기관 간 적절한 분업 체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

○ 소비성 단기대출 수요에는 대부업 시장의 경쟁 촉진으로 대응

- 제도권 금융회사, 특히 은행이 대부업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

* 평판위험으로 말미암아 제도권 금융회사가 직접적으로 대부업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지만 컨소시엄을 형성하거나 대부업 펀드를 조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임.

- 동시에 대부업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감독 강화로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

2. 국내 마이크로크레디트 수행기관 현황

□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MC는 2000년 설립된 신나는 조합과 2002년 설립된 사회연대은행이 표시

- 전통사회로부터 이어져 오는 계나 상호부조에 기반을 둔 신용공급 체계인 신용협동조합 등도 신용공급 과정에서 유사한 원리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광의의 MC에 포함시킬 수는 있을 것이나,
- 저소득 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을 통하여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한다는 현대적 의미의 MC 원칙을 명시적으로 내걸고 대출상품을 제공하기 시작한 것은 신나는 조합과 사회연대은행이 최초

□ 신나는 조합은 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Grameen Bank)의 사업모형을 차용하여 설립된 MC 기관

- 사업을 같이하는 개인들로 구성된 대출공동체가 대출 기본단위로 하여 이들은 대출에 대하여 공동책임을 부담
- 이러한 집단대출(group lending) 기법은 대출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자발적인 스크리닝(screening)과 모니터링(monitaring)을 통하여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로 인한 대출채권 회수의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됨.
 - 집단대출은 주로 공동체 의식이 강하게 작동하는 후진국의 MC 대출에 활용되어 그 유용성을 인정받았음.
- 2000년부터 2008년까지 157개 대출공동체에 30억 6,836만원 대출하였는데 약 93%의 대출공동체가 상환의무를 성실하게 이행
- 대출재원은 복지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정부지원금과 민간기업

또는 민간자선단체의 기부금으로 구성

- 사회연대은행은 개인을 대출의 기본단위로 하고 도시 저소득층의 창업자금을 공급하는 남미형 사업모형을 채택하고 있는 MC 기관
 - 도시지역에서 공동책임을 지는 대출집단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므로 자영업 창업이나 확장을 모색하는 개인이나 가족을 대출의 기본단위로 설정
 - 대출 시행 이후 채무자에 대한 모니터링에 집중함으로써 상환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신용위험을 관리하는 접근법 채택
 - 2003년 10전 2억3,000만원의 대출을 실시한 것에서 시작하여 2009년 말까지 총 1,165건, 248억 8,000만원의 자금을 공급
 - 대출재원은 신나는 조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부지원금과 민간기부금으로 조달

<표 V-1> 신나는 조합과 사회연대은행 개요

구 분	신나는 조합	사회연대은행
설립일	2000년 6월	2002년 9월
자산규모	38억 4,900만원	203억 4,000만원
주요 후원단체	그라민, 씨티그룹 등	삼성, 국민은행, KT 등
지원 대상	농어촌 빈곤층 등 소외계층	차상위계층 이하 전 빈곤층
1인당 대출금	100~500만원	2000만원 이하
대출 금리	연 4%	연 0~4%(평균 2%)

주: 자산규모와 누적대출금액은 2008년 말 기준

□ MC 사업의 성과가 알려지면서 종교단체나 NGO의 주도 아래 다수의 MC 기관이 설립되어 사업을 확장

○ 아름다운세상기금, 열매나눔재단, 창원지역 사회복지은행 등이 비록 소규모 이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자체적으로 조달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꾸준히 MC 사업을 수행

○ 2000년대 후반 MC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함께 일하는 재단, 해피월드 복지재단, 하나희망재단 등의 MC 기관이 설립되어 사업을 전개

- 금융회사나 기업이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공급하던 자금에 더하여 휴면예금 재원을 활용한 소액서민금융재단의 자금, 그리고 복지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재정지원 자금 등 대출채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금원이 다양해 졌을 뿐 아니라 규모도 이전에 비하여 대폭 커진 것이 MC 기관 증가의 가장 큰 동력

3. MC에 대한 정책지원

□ 민간 주도 MC의 성과가 알려지면서 MC의 정책적 유용성에 정책당국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

○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민간 주도 MC 부문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MC가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대한 자금공급을 통하여 소득창출 능력을 제고하고 자립기반을 강화하는데 유용하다는 점이 부각

○ 2003년 발생한 신용카드위기의 여파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이들에 대한 금융서비스 공급을 거절하면서 소위 “금융소외”의 문제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상태로까지 비화

- 어려운 여건 하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MC 부문은 대출재원 확보나 MC 전문인력 수급 등 측면에서 한계에 직면하였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

□ MC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지원은 2009년 시작된 희망키움뱅크

-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MC의 가능성을 가늠하던 보건복지가족부(복지부)가 2005년부터 매년 20억원을 MC 기관에 대출재원으로 공급하는 등 소규모의 산발적인 지원은 있어왔으나,
-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금융서비스 접근에 큰 어려움에 직면한 서민층을 지원한다는 정책방향이 설정됨에 따라 3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확장되면서 희망키움뱅크 탄생

□ 희망키움뱅크는 민간 MC 기관에 대하여 대출재원을 공급함으로써 MC의 확대 추진을 추구

- 심사를 통과하여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MC 기관에 복지부가 대출 한도를 배분
- MC 기관은 대출 자격, 1인당 대출액 상한, 적용 이자율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복지부가 미리 지정한 기준에 따라 대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희망키움뱅크에 통보함으로써 대출 확정 및 시행
 - 대상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1/3이상 참여하고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저소득층으로 구성된 자활공동체와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초수급자 또는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고 일정한 수준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개인으로 한정
 - 점포운영자금과 전세자금을 대출하며 대출규모는 2,000만원을

원칙으로 하되 자활공동체의 경우 전세자금으로 1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

- 대출기간은 5년인데 6개월 거치 후 남은 64개월 동안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여야 하며 연리 2%의 고정금리가 적용

○ MC 기관은 희망키움뱅크의 대출업무를 보조하는 대리점으로 가능을 수행할 뿐이며 따라서 대출채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관계에서 배제

□ 정부 재정이 직접 투입된 사업은 아니지만 정부 주도 하에 MC 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소액서민금융재단이 주관하는 저소득층 창업 또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시행

○ 소액서민금융재단은 일정기간 이상 동안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을 재원으로 구성된 공익재단

○ 재단은 저소득층의 창업 또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 사업,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저소득층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

○ MC 대출로 인한 채권채무관계가 재단에 귀속되지 않고 대출을 결정한 MC 기관에 귀착된다는 측면에서 재정이 투입되는 희망키움뱅크의 경우보다 간접적이고 MC 기관의 자율성·독자성을 인정하는 사업방식인 것으로 판단되나 여전히 대출만기와 이자에 대하여 상한선을 요구하고 있는 등 일정한 한계가 존재

□ 전통적인 MC 개념에 완벽하게 부합하지는 않으나 중소기업청이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영세자영업자 창업과 경영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

- 소상공인지원정책은 ①경영컨설팅 ②경영기법전수 및 교육 ③ 경영진단 ④자금지원 등 네 가지 영역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사업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과 폐업 자영업자 전업자금 지원이 포함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은 ①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도소매업의 경우 5인 미만)의 업체를 ② 신규 창업하거나 기존 업체의 경영개선을 시도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③ 업체당 최고 5,000만원 한도 내에서 ④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하고 ⑤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 금리에서 0.33% 포인트를 차감한 이자율을 부과하여 대출되는 정책자금
- 매년 5,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출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무담보 신용대출인 MC와 차이
- 2009년부터 중소기업청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영세자영업자와 무점포·무등록 사업자에 대한 보증을 제공
 -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자영업자와 무점포·무등록 사업자의 경영자금 애로 완화를 위하여 특례보증을 실시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제공하고 농협을 위시한 제도권 금융회사가 보증을 근거로 자금을 대출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가지고 있던 보증 프로그램으로는 신용위험이 너무 높아 보증 획득이 불가능하던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금융상의 애로 해소를 보조하기 위한 조치라는 측면에서 MC와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파악 가능

- 신용등급 6~8등급이며 3개월 이상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하여 대출을 위한 보증을 제공
 - 대출 조건은 5년 만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이자율 7~8%
 -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애로 해소를 목적으로 2,000만원 한도에서 대출을 보증
 - 이와 별도로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및 신용등급 9~10 등급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하여 500만원을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보증을 제공
- 2009년 말까지 31만 4천명에 대하여 3.6조원의 대출을 위한 보증을 제공

4. 우리나라 MC 부문의 문제점

가. 자금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한 규모의 한계

- 대출 재원의 대부분을 기업은행 기업 기부금이나 정부 재정지원에 의존한다는 근본적인 한계점으로 인하여 사회적 변화를 추동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확대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존재
 - 기업 기부금의 경우 경제 환경의 변화에 좌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안정적인 재원이 될 수 없으며 자금공급 규모가 원칙적으로 MC자금에 대한 수요와 관계없이 공급자가 처한 여건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된다는 문제점이 존재
 - 정부의 재정지원도 원칙적으로 기업기부금과 동일한 근본적인 문제점에서 자유롭지 못함.

-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악화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환경에서 MC 대출 재원의 상당 부분을 재정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는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음.
- 2000년 이후 약 10년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80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MC 대출 실적을 보임.
 - 2000년부터 2009년 7월까지 기업 기부금 343억원, 재정자금 80억원, 휴면예금 기금 337억원 등 총 772억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파악됨.
- 대출이 지역적으로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점 또한 해결을 요하는 문제이나 이는 대출 자원 확보의 문제가 극복된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 MC를 통한 의미 있는 사회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보다 대규모의 안정적인 대출자원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 미소금융재단의 설립은 우리나라 MC 영역에 획기적인 전기를 제 공하였다고 할 수 있음.
 -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MC 자금을 공급하던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미소금융 중앙재단”으로 확대 개편
 - 향후 10년간 기업 기부금 1조원과 휴면예금 출연금과 금융회사 기부금 1조원을 합하여 총 2조원의 대출 재원을 조성
 - 규모에서 종래에 비하여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음은 물론 향후 1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의 기부 액수에 대하여 기업과 금융권의 약속을 받음으로써 안정적인 대출자원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나. MC 기관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결핍

- 대부분의 재원을 외부의 일방적인 지원에 의존하는 자금수급구조로 인하여 대출상품을 설계함에 있어 MC 기관의 자율성이 무시되는 현상이 발생
 - 기업의 경우 자금을 제공하면서 대출 조건, 특히 이자율 수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간여하는 경우가 대부분
 -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MC 자금을 제공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평판위험을 무릅쓰고 고금리의 MC 대출 상품을 허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임.
 - 정책 당국 또한 재정자금을 지원에 기초한 대출상품이 고금리로 설계되는 것을 용인할 수는 없을 것임.
 - 대출자의 상황과 필요에 관계없이 획일적인 형태의 대출상품이 판매됨으로써 MC 기관의 강점 중 하나인 “고객 밀착형 금융 기법”의 구사가 대출 상품 설계 단계에서는 사실 상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발생
- 외부 지원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현재의 채원조달 구조로는 MC부문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
 - 자금 공급자의 요구에 따라 비용에 상응하는 이자율을 부과할 수 없는 MC 기관은 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자금 공급자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

- 운영경비를 영업을 통하여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규모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 자금 공급자의 지원에 의존
-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대폭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MC 부문의 위축을 피할 수 없을 것
- MC 부문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이크로파이낸스(MF) 투자펀드”를 통한 자금 공급 체계를 구축할 필요
 - MF 투자펀드는 MC 기관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환을 전제로 “대여”하거나 “투자”
 - 상황에 따라 MC 기관이 발행하는 준지분 증서나 구조화 채권을 매입하거나 보증을 제공하기도 함.
 - MC 기관에 대한 대출자 또는 투자자로서 MC 기관에 대한 일상적인 평가 및 감시 기능을 수행하지만 MC 기관의 의사결정이나 영입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는 없음.
 - 따라서 자금을 기부하는 기업이 MC 기관에 대하여 매우 낮은 수준의 이자율 부과를 요구하는 등의 현상은 발생하지 않음.
 - 대출 상품 설계나 대출자 선정 등 MC 관련 업무는 MC 기관이 독립적으로 행사
 - MF 투자펀드는 제공한 자금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 또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
 - MF 투자펀드는 서유럽을 비롯한 각국에서 MC 기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자금공급 주체로 활발하게 활동

- MF 투자펀드는 상업적 동기에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우, 사회적 책임 투자의 입장에서 재무적 수익(financial return) 뿐만 아니라 사회적 수익(social return)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우, 사회적 목적 추구를 위하여 MC를 활용한다는 입장에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경우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
- 유럽연합을 위시한 정책당국도 MC 지원 자금을 공급할 때 MF 투자펀드를 설립하여 그 운영을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
- MF 투자펀드를 중심으로 하는 대출재원 공급 체계가 확립된다면 MC 부문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보다 더 용이하게 성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VI. 마이크로크레딧 부문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1. 명확한 정책목표의 설정

- 향후 장기적인 정책방향의 설정과 발전전략 수립을 위하여 MC 정책의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
 - 명시적으로 제시된 바는 없으나 현재 MC 정책의 목표는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대한 원활한 신용 제공을 통한 서민생활의 어려움 경감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추론 가능
 - 1997년 말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소득격차

심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 확대와 2003년 신용카드사태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어려운 사정이 지속적으로 부각

- 특히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금융시장 위축의 여파로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금융거래, 특히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신용을 획득하는데 큰 어려움에 직면
-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의 신용획득에 애로를 겪은 사람들이 사금융에 주로 의존하게 됨에 따라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채무부담 누적과 높은 금리로 인하여 채무자의 부실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고 일부 사금융업체의 과도한 채권 추심으로 인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 야기
-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 당국은 개인 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 저금리 전환대출, 소액서민금융재단 설립, 저신용 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증지원 등 서민의 금융생활 애로를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정책의 체감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제기됨.
- 정책 체감도에 대한 불만에 대하여 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의 부족, 엄격한 자격요건, 접근성의 제한 등 여러 가지 원인을 제시할 수 있으나, 기존 정책들이 서민계층이 당장 직면하고 있는 금융거래의 어려움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나머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 즉 취약한 소득창출 능력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 가능

- MC는 서민층이 제도권 금융회사와의 거래에서 어려움에 처하는 근본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취약한 소득창출기반에 대하여 근본적인 해결을 시도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MC가 기존 정책의 한계를 일정 부분 극복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기대에서 최근 관심이 고조
- 현재 제시된 수준의 정책 목표는 MC를 통하여 성취를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과 정확하게 부합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됨.
 - MC는 신용공급을 통하여 자영업 및 영세기업의 창업과 경영개선을 촉진함으로써 저신용·저소득 계층의 소득창출기반 강화를 추구하는 금융수단
 - 따라서 제도권 금융회사와의 거래에서 애로를 겪는 저신용·저소득 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을 통하여 서민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거나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경감하는 등의 정책목표는 MC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간 단계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
- MC 정책 목표에 대한 명확한 제시는 향후 정책 방향 설정과 발전 전략 설정에 대하여 기준을 제공하며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
 - MC 정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재원조달 방식, 대출상품 구조, MC 기관에 운영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 다르게 설정될 것임.
 - 또한 성과관리의 핵심적 구성요소인 성과목표 도출을 위해서도

정책 목표의 명확한 제시는 중요

□ 현재 정책목표의 중요부분으로 강조되고 있는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창업 및 경영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공급”이라는 측면을 좀 더 명확히 부각시킬 필요

○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필요로 하는 모든 용도의 자금수요가 MC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오해로 많은 불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긴급자금 및 일시적 자금부족을 만족시키기 위한 자금 공급이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에 비하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MC로는 대처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영역이라는 측면에서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책 대응이 필요

○ 서민금융시장을 자금 용도에 따라 “소비성 대차자금 시장”과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시장”으로 구분 가능

- 소비성 대차자금 시장은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긴급자금이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차입시장으로 일반적으로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지 않으며 단기, 소액, 고금리 대출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데 현재 대부업체와 상호저축은행 등이 주된 자금 공급자로 활동

- 영세 자영업이나 영세기업의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시장은 다시 담보나 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로 구분 가능

* 차주가 담보나 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을 위시한 소위

서민금융기관이 신용을 공급하고 있으나,

* 그렇지 못한 경우 심각한 시장실패로 인하여 신용시장은 사실 상 실종 상태인데 바로 이 영역에서 MC가 장점을 발휘할 수 있음.

- 현재 서민금융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담보나 보증을 제공하기 힘든 경우 소비성 대차자금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가 상당한 정도로 확산되어 있다는 점

- 극심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영세 자영업 시장에서 기대되는 수익으로는 소비성 대차자금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성 대차자금 시장에서 창업자금이나 경영개선 자금 조달을 추구하는 것은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의 원칙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주의 과도한 위험추구(excessive risk taking)의 전형적인 예이며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연체가 발생

- MC는 현재 우리나라 서민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빠진 고리(missing link)라고 할 수 있는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에 대한 무담보 대출시장에서 적극적인 자금 공급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궁극적 정책목적으로 해석되는 “서민 생활 안정”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수동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좀 더 구체적이고 능동적인 정책목표 설정이 필요

- MC의 목적을 “신용제공을 통한 지원”이 아니라 “소득 창출 기반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경영지원 체계 제공”으로 넓게 해석할 필요

- 넓은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에도 신용제공이 가장 핵심적인 수단임은 물론이나,
- 경영기술 및 정보 지원,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비금융적 지원이 수반.
- 개념상의 혼란이 계속되는 경우 MC를 둘러싼 향후 논의가 잘못된 방향으로 오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MC 정책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보다 근본적으로는 영세자영업 부문의 생산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그에 따른 양질의 고용 창출이라는 적극적인 정책목표를 추구할 필요가 있음.
 - 이미 포화상태인 영세자영업 부문에 신규 진입을 촉진하는 정책을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비판적 시각 존재하지만,
 - 전통적 제조업 중심의 경제체제에서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이 진전되면서 전통 산업부문의 고용흡수 능력이 저하되고
 -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완충장치 필요
 - 자영업과 영세기업을 중소기업의 형태로 파악하고 MC 정책을 중소기업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
 - MC의 지원을 통하여 창출되는 자영업이나 영세기업은 기존업자보다 높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근본적인 차이점
- 그러나 제도권 금융기관이 이루지 못하는 것을 MC 기관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양 자는 경쟁관계보다는 보완관계로 파악할 필요

- 은행과 MC 기관은 서로 다른 고객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금융 기법을 활용하여 영업을 하는 금융기관
- 거래하는 고객의 평균적인 신용위험에 따라 두 부문의 구분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두 부문이 일정 부분 교차하면서 연속적으로 존재
-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MC의 궁극적 목표로 “은행 거래가 가능한 주체(bankable person)를 양성”하는 것이 제시되기도 함.

□ ① 경쟁력 있는 자영업 및 영세기업 육성을 통하여 고용을 확대하고
② 저소득층의 소득창출기반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제고하는 것을 MC 정책의 목적으로 명시적으로 천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우리나라와 금융시장 및 경제 환경이 유사한 유럽연합이 내걸고 있는 MC 정책 목표를 참고로 제시한 것
 - 유럽연합은 MC 정책의 목적을 영세기업(micro-enterprise)의 활성화를 통한 고용 확대 및 혁신 역량 강화, 사회통합성(social cohesion) 제고로 설정하고 각종 정책적 지원책을 강구
-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해 있는 영세 자영업 시장에 단순히 새로운 경쟁자를 진입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자에 비하여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새로운 유형의 소규모 사업가를 배출함으로써 시장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계기로 활용
 - MC가 단순한 신용공급의 수단 차원을 넘어서서 종합적인 경영

지원 체계로 확립될 필요성

- 자영업과 영세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고용확대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신용시장의 실패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초점을 맞출 필요
 -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시장을 통해서는 신용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의 근원
 - 상환 능력을 갖춘 차주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위험에 상응하는 이자율 수준에서 신용 획득에 실패하는 현상에 대응하는 조치가 필요
 - 정부와 민간이 MC 기관의 대출 재원 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MC 기관은 비용에 상응하는 수준의 이자율을 부과하는 "시장지향형 MC" 모델의 확립이 적절한 대응책인 것으로 판단됨.
- 저소득층 지원을 통한 사회통합성 제고 달성을 위해서는 신용공급 자체 뿐 아니라 신용공급 조건에 대하여 일정 부분 외부의 지원을 전제로 하는 MC 모델이 구축될 필요
 -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탈락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사회 공동체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사회 정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
 - 이를 위하여 소득분배의 개선이 요구되나 가격기구 만에 의존하는 경우 달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정책적 개입이 필요
 - MC는 사회적 약자 계층의 소득창출기반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소득분배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

- 비용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이자율을 부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출자에게 일정한 수준의 보조금(subsidy)을 지급하되 그 차이는 공공이나 민간의 지원으로 충당하는 "사회지향형 MC" 모델의 확립이 필요한 대안
- 현재 우리나라의 서민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시장지향형 MC와 사회지향형 MC가 모두 필요
 - 경제상황과 사회 환경에 따라 무게중심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두 가지 형태의 MC 모델이 공존하면서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일 것
 - 시장지향형 MC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고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사회지향형 MC는 그 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을 것
 - * 한 개의 MC 기관이 두 가지 사업 모델을 모두 수용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배제할 필요는 없으나 개별 MC 기관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한 쪽으로 특화하고 각 영역에서 복수의 MC 기관이 양질의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경쟁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

2. 장기적 지속가능성의 확보

- MC 기관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은 외부로부터의 추가적인 지원 없이 자체적인 수입만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 가능
 - MC 기관의 경우 이자수입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 문제는 대출 이자율 수준의 결정 문제로 귀결
 - 설립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고 충분한 사업규모가 확보되어 비용

구조가 비교적 안정화 된 MC 기관의 경우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할 필요가 있는 연간 평균 실질이자율(average effective annual rate) R 은 다음과 같이 주어짐.

$$R = \frac{AF + CF + LL + K}{1 - LL} - I$$

위에서 AF 는 대출관련 행정 비용, CF 는 자본조달비용, LL 은 대손 비율, K 는 투자 회수율(capitalization rate), 그리고 I 는 투자소득 비율을 나타내며 모든 변수는 연간 평균 대출 잔액에 대한 비율로 표시

□ MC는 매우 노동집약적인 금융기법이며 높은 대출관련 행정비용 지출이 요구됨.

○ 제도권 금융기관과 MC 기관은 대출이라는 동일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서로 다른 고객에 대하여 서로 다른 사업모형으로 접근

- MC 기관은 제도권 금융기관이 높은 신용위험을 이유로 대출을 거절한 자를 대상으로 대출

-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신용심사과정에서 제도권 금융기관은 계량화가 가능한 양적 지표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만 MC 기관은 사업전망, 차주의 평판 등 질적 정보를 더욱 중요한 평가지표로 활용

-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도 MC 기관은 차주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부실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도권 금융기관에 비하여 강력한 모니터링을 적용

○ MC는 대출 관련 행정비용을 늘임으로써 신용위험 감축을 추구하

는 금융기법

- 줄어드는 신용위험으로 인한 비용 절감보다는 강화된 screening과 monitoring에 소요되는 비용이 더 많은 것이 일반적

- MC 운영의 경험이 풍부한 후진국 MC 기관의 예에 비추어 볼 때 효율적인 인력 및 조직 운영을 전제로 하는 경우 10%~25%의 행정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됨.

-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보건복지부가 희망키움은행 사업을 실시하며 MC 기관에 대하여 대출 금액의 15%를 운용비용, 즉 대출관련 행정비용으로 인정한 예가 있음.

□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MC 대출의 평균적인 신용위험이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에 비하여 높아 대손비용 또한 많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

- 대손비율(write-off ratio)은 부실채권에서 발생하는 연간 실제 손실액을 연간 평균 대출 잔액의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연체율(delinquency rate)과는 다른 개념

- 연체율은 원금이나 이자 상환이 약속된 시점에 이루어지지 않은 대출의 비율을 나타내지만 대손비율은 완전히 회수불능으로 판단되어 MC 기관의 대차대조표 자산 항목에서 이탈되는 경우를 의미

- 연체된 원금과 이자가 정상적으로 회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손비율은 연체율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것이 일반적

- 후진국 MC 기관의 경우 대손비율이 5% 이상이면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일반적으로 1%~2%의 대손비율을 유지할

것이 요구됨.

- 이러한 평가는 전통적인 금융기관의 활동이 극히 부진한 상태에서 MC 기관들이 은행의 잠재적 고객을 일부 흡수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 은행을 위시한 금융 네트워크가 고도로 발달한 우리나라에 후진국의 경험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며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더라도 최소 5% 가량의 대손 발생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
- 유럽연합 지역의 경우 대손비율이 5% 이하인 MC 기관이 조사 대상의 68%, 6%~10%가 13%, 10% 이상이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자본조달비용은 대출재원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비용을 의미

- 대출재원은 자기자본과 부채로 조달되며 각각의 재원에 대하여 요구되는 대가, 즉 요구수익률은 각기 다름.
- 자기자본에 대한 요구수익률은 지분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며 상업적인 기반의 투자인 경우 부채에 대한 요구수익률에 비하여 높은 것이 일반적
- 부채는 MC 기관의 업무 범위에 따라 수취 예금, 타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 회사채 발행을 통한 차입 등으로 구성
- 미소금융의 경우 대출 재원이 전액 투자 수익을 요구하지 않는 민간 기부금과 휴면예금 재원으로 구성되므로 자본조달비용은 사실상 0이라고 할 수 있음.

□ 투자 회수율은 MC 기관이 달성하고자 목표하는 실질 이익률을 의미

- MC 기관의 성장은 자산, 특히 대출자산의 규모 증가로 실현됨.
 - 한편 대출 자산의 확대는 자기자본의 증가 또는 부채의 증가를 수반
 - 따라서 MC 기관의 성장은 자기자본 또는 부채의 증가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는 물리적으로 달성이 불가능
 - 그러나 부채의 증가는 무한정 지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
 - 따라서 자기자본의 증가가 MC 기관의 장기적 성장을 보장하는 근본 요인
 - 자기자본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유보이익으로 구성되는데 납입자본금의 증가에는 많은 어려움이 수반
 - 유보이익은 MC 기관이 당해 연도에 실현한 이익 중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남은 금액으로 투자 회수율과 밀접하게 연관
 - * 배당률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경우 유보이익은 투자 회수율에 비례하여 증감
 - 미소금융이 당분간은 자체적인 수입원을 바탕으로 자산 규모의 확대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한다면 투자 회수율을 0으로 가정할 수 있음.
- 투자 소득은 MC 기관이 보유한 자산 중 대출을 제외한 자산에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소득을 의미
- MC 기관은 대출 이외에 현금이나 예금 등 순수 유동성 조절용 자산 뿐 아니라 양도성 예금증서나 MMF 예치금 등과 같은 투자성

자산을 보유

- MC 기관이 주식이나 채권 등 비교적 유동성이 떨어지는 투자자산을 보유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투자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MC 기관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이자율을 낮아지는 효과 발생
 - 그러나 투자소득의 증가는 원금 손실의 가능성 증가를 감수하는 위험투자의 확대 또는 대출 자산의 축소를 수반
 - 투자소득의 확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대출 자산이 축소되는 경우 MC 사업의 본질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
 - 사회지향형 MC 모델에서 외부자금에 대한 의존을 가능한 한 줄이면서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투자소득의 확대를 추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을 것이나 대출을 위축시키지 않고 충분한 투자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큰 규모의 기금(fund)이 먼저 조성되어 있어야 할 것임.
- 평균 대출 잔고 대비 1%~3% 수준의 투자수입이 일반적인 경험치인 것으로 알려짐.
 - 평균 투자 수익률 10%를 가정하는 경우 전체 자산의 80%를 대출에 배분하고 나머지 20%를 투자자산에 배분하는 경우 투자수입이 대출 잔고의 2.5% 수준에 도달
 - 대출을 무된 목적으로 하는 MC 부분의 본질을 감안할 때 투자수입 확대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대출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

□ 미소금융이 처한 환경을 감안할 때 외부로부터 추가적인 자금지원 없이 현재 계획된 사업 규모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 15%~20%의 이자율 부과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됨.

○ benchmark로 행정비용 15%, 대손비율 5%, 투자소득비율 2.5%를 가정하는 경우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이자율 수준은 18.6%로 추산됨.

- 미소 금융의 자본조달 방식과 장기적 정책 목표 등을 반영하여 자본조달비용과 투자회수율은 0으로 가정

○ 행정비용 10%, 대손비율 3%, 투자소득비율 5%를 가정하는 낙관적 시나리오 하에서 필요 이자율은 8.4%로 대폭 낮아짐.

○ 그러나 행정비용 20%, 대손비율 10%, 투자소득비율 1.25%를 가정하는 비관적 시나리오 하에서 필요 이자율은 32.1%까지 대폭 상승

<표 VI-1>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에 요구되는 평균 이자율

	AF	CF	LL	K	I	필요 이자율
낙관적 가정	0.1	0	0.03	0	0.05	8.4%
Benchmark	0.15	0	0.05	0	0.025	18.6%
비관적 가정	0.2	0	0.1	0	0.0125	32.1%

□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이자율 수준은 행정비용과 대손비율의 증감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투자수입비율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행정비용 5%p 절감(증가)은 필요 이자율 5.2%p 하락(상승)을 수반

- 대손비율 2%p 절감(5%p 증가)은 이자율 2.5%p 하락(6.7%p 상승) 수반
- 투자수입비율 2.5%p 증가(1.25%p 감소)는 이자율 1.3%p 2.5%p 하락(1.3%p 상승)을 수반

<표 VI-2>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에 요구되는 평균 이자율의 민감도

AF	CF	LL	K	I	필요 이자율
0.1	0	0.05	0	0.025	13.3%
0.15	0	0.05	0	0.025	18.6%
0.2	0	0.05	0	0.025	23.8%
0.15	0	0.03	0	0.025	16.1%
0.15	0	0.05	0	0.025	18.6%
0.15	0	0.1	0	0.025	25.3%
0.15	0	0.05	0	0.0125	19.8%
0.15	0	0.05	0	0.025	18.6%
0.15	0	0.05	0	0.05	16.1%

□ 지속가능한 MC 체제 구축을 위하여 요구되는 이자율 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점진적인 이자율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출 종류에 따라 다소 간의 차이는 있으나 현재 미소금융이 부과하는 이자율은 최대 4.5%
 - 건 당 1000만원을 초과하는 프랜차이즈 창업자금과 창업임차자금의 경우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에 걸쳐 최대 4.5% 이자 부과
 - 건 당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프랜차이즈 창업자금과 창업임차자금의 경우 상환기간 동안에만 최대 4.5% 이자 부과

- 운영자금과 시설개선자금에 대해서는 상환기간 동안에만 최대 4.5% 이자 부과
- 무등록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상환기간 동안에만 최대 2% 이자 부과
- 미소금융이 처한 경제 및 금융환경을 고려할 때 현재의 이자율 수준으로는 외부로부터 추가적인 자금유입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수입만으로 계획된 규모의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사업 초기에 발생하는 각종 고정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최소 15% 가량의 이자율 부과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인 것으로 판단됨.
 - 현재와 같은 수준의 이자율은 대출관련 행정비용을 전액 외부지원으로 충당한다는 전제 하에서 유지 가능
- 미소금융의 사업을 시장지향형 MC와 사회지향형 MC로 구분하고 정책적 판단에 따라 전체 기금을 배분하고 각 형태에 맞는 이자율 체계를 구축할 필요
 - 시장지향형 MC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15% 내외의 이자율 부과를 전제하고 차주의 상황, 자금 용도, 대출 금액, 대출 기간, 상환 실적 등에 따라 다양한 이자율과 상환방식을 부과하는 체제 구축이 필요
 - 미소금융이 안정적으로 확산되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부터 일정 정도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자율 수준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검토
 - 장기적인 목표 이자율 수준의 달성을 위하여 매년 점진적으로

이자율을 높여가는 방안 추진 필요

- 사회지향형 MC에 대해서는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요구되는 이자율 부과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분간 현재와 같은 5% 내외의 이자율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 이 경우 중앙재단 및 지방재단의 운영경비를 보전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원의 확보가 전제될 필요
- 추가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강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와 같은 사회지향형 MC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경우 머지않은 장래에 재원이 고갈되는 상태에 직면할 것임.

□ 궁극적으로는 지방재단이 자신이 지향하는 MC 대출 모델을 선택하고 중앙재단이 제시한 원칙(guideline) 하에서 개별 대출 건에 대하여 자체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이자율을 결정하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

- 지방재단이 시장지향형 MC를 추구할 것인지 사회지향형 MC를 추구할 것인지를 선택
- 지방재단은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선택한 MC 모델과 지역 실정에 적합한 대출 상품을 설계하고 그에 따라 이자율도 자율적으로 결정
- 중앙재단의 guideline은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강조, 이자제한법에 대한 강조, 비영리 기관으로서 미소재단의 법적 지위에 대한 강조 등 추상적이고 원칙적인 수준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그러나 이상의 대안은 지방재단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확립된 이후에야 시도할 수 있을 것임.

□ 미소금융 지방재단이 사회적 기업 인증을 획득하여 재정으로부터 운영경비를 일부 지원받음으로써 장기적 지속가능성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이자율을 낮게 유지할 수 있는 방안 추진을 검토

○ 법률적 정의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은 “취약 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을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을 의미

○ 소정의 절차를 거쳐 노동부에 의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경영지원, 시설비 지원,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조세 감면,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 보조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됨.

○ 사회적 기업의 인증 요건은 여러 가지인데 미소금융 중앙재단과 지방재단 요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거나 약간의 조정을 거친다면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미소재단은 공익재단으로 조직 형태 요건(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을 만족시키고, 1인 이상의 사회적 기업 활동 관련 유급종사자를 고용(동법 제8조 2항)할 뿐 아니라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자활지원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동법 제8조 3항) 정관이 인증에 요구되는 형식에 부합(동법 제8조 6항)

- 한편 동법 제8조 제5항과 시행령이 규정하는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총 노무비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대부분의 경우 어렵지 않게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마지막으로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

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동법 제8조 제4항의 요구사항은 현재 상태에서 다소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가지고 있으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운영협의회 설치 등을 통하여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요건을 갖추고 노동부의 심사를 거쳐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획득하면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인건비 일부와 4대 보험료 전부를 재정에서 지원
 - 2010년의 경우 참여자 1인 당 858,990원을 지원
- 사회적 기업 인증 획득에 성공하는 경우 평균적인 RM 인건비의 30%~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으로부터 지원 받아 행정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임.

3. 대출대상자 기준의 합목적성 제고

- 현재 미소금융의 형식적 대출 적격은 신용등급, 현재 연체 여부, 자산 및 부채 보유 현황 등 매우 다양한 조건으로 규정되어 있음.
 - 형식적 대출적격의 대전제는 대출 신청자가 개인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해당될 것
 - 대출 신청일 현재 국내에서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세 개의 CB(credit bureau) 중 적어도 한 군데 이상에서 7등급 이하의 신용등급이 부여된 것이 확인되어야 함.
 - 정책목적의 효과적 달성과 신용위험 관리를 위하여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라고 하더라도 자산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거나 고위험군이

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출 대상에서 제외

- 현재 대출금을 연체 중이면서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가 관리하는 신용정보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세금 체납이나 금융질서 문란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 포함)
- 보유재산이 「긴급 복지지원 법령(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한 재산 합계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1억 3,500만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
- 보유재산 대비 채무액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단 총 채무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에 있거나 개인파산 면책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현재 다른 채무를 연체 하고 있어 은행연합회가 관리하는 신용정보 기록에 등재된 경우에도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출 자격 부여
 -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의해 신용회복지원이 진행 중인 연체자 중 2년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한마음금융주식회사, 희망모아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 신용회복기금 포함), 상록수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 개인회생 결정 후 회생계획을 완수한 경우
 - 개인파산 면책 결정 후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 형식적인 대출 적격에 더하여 자금의 용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실질적인 대출 적격도 존재

- 자금의 용도는 프랜차이즈 창업이나 개인 창업 임차자금, 기존 자영업 운영자금 및 시설개선자금, 무등록사업자 창업 및 운영자금 등으로 한정
- 대출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현실성 및 타당성이 가장 중요한 대출의 실질적 요건

□ 현재의 대출 적격 요건, 특히 형식적 적격요건이 MC 정책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설정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의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신용등급 7등급 이하로 요건을 설정한 것은 이들의 경우 제도권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신용서비스에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금융계의 상식에 근거한 것으로 추측됨.

- 낮은 신용등급은 낮은 소득수준과 상당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그 결과 취약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나름의 근거를 가지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신용등급 7등급 이하라고 하더라도 담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신용획득이 가능하고 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제도권 금융회사에 대한 접근에 애로를 겪는 계층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다소 자의적인 기준이라는 비판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임.

- 물론 자산보유 한도를 추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담보 능력이 있는 대출 희망자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 보유재산 대비 채무액 상한을 동시에 부과함으로써 자산보유 한도를 만족시키면서 미소금융의 대출금액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정도의 담보 능력을 보유한 계층이 미소금융 대출 적격에 해당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

- 신용등급 7등급과 6등급 간에 제도권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성에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중소기업청이 제공하는 자영업자 특별보증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 자격 요건을 설정하고 있는 등 유사한 지원 프로그램 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

- 현실적으로도 회수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신용등급 7등급과 8등급에 자금공급이 집중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인데 이 경우 오히려 대출 대상자를 찾기가 어려운 사업 확대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

- 자격요건과 대출 조건에 대하여 자세한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① 제도권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신용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애로를 겪는 대출 희망자가 ② 총사자 10인 미만(일부 업종의 경우 5인 미만)의 영세 자영업 및 영세 기업 창업이나 경영개선을 위하여 ③ 5,000만원 이하의 자금조달을 추구하는 경우 정도로 일반적 원칙만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요건 ①은 잠재적인 상환능력은 있으나 제도권 금융회사와의 거래에 장애를 겪는 계층에 대한 대출이라는 MC 본래 의도를 반영

- 신용등급에 상한을 둬으로써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으나 확실적인 기준제시보다는 대출 희망자를 직접 대면하는 MC 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최종적인 결정권을 부여함으로써 대출 희망자의 특수한 상황에 부합하도록 신축적 대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할 필요

- 제도권 금융회사에 대한 접근 장애는 신용등급 만으로는 판단하기 힘든 복잡한 요인들이 결합된 결과로 타나나는 현상임을 감안할 필요
- 요건 ②는 영세 자영업이나 영세기업의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공급 목적으로 자금이 공급되어야 함을 규정 하는 것
 - 종사자 10인 미만(도소매, 음식, 숙박, 개인 서비스업의 경우 5인 미만) 요건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제시된 소상공인의 정의로 중소기업청이 관련 이법에 의거하여 관련 정책을 펼 때 활용하고 있음.
 - 유럽연합 등 다른 나라의 영세기업 정의와도 부합하는 등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진 기준인 것으로 판단됨.
 - 소비성 대차자금이 아니라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의 공급이 MC의 목적임을 명확하게 하는 규정
- 요건 ③은 무담보로 제공되는 대출로 구성된 자산 포트폴리오의 신용위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으로 이해 가능
 - 동시에 소액대출이라는 MC의 원형과도 부합
- 세 가지 매우 일반적인 요건만으로도 현재 상당히 자세히 규정되어 있는 대출 적격 요건을 모두 포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차주의 처지와 필요에 부합하는 신축적인 대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을 확보
 - 대출 적격 여부를 직접 심사하는 지방재단이 각기 다른 적격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 어차피 제시된 대출 적격은 대출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며 상환 가능성에 대한 RM(relationship manager)의 주관적 평가나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이 대출 여부 결정에서 핵심적으로 고려되는 요인임을 감안한다면 대출 심사 주체에 따라 신용등급 기준을 다소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한편 신용등급을 명시적인 대출 적격 요건으로 제시하지 않고 MC 기관이 중요한 참고자료로만 사용하는 경우 신용등급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
- 더하여 사업전망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 7등급 등 형식적인 자격 요건을 만족한다는 이유만으로 대출 거절에 대하여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불만을 완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4. 미소금융 중앙재단과 지방재단의 관계 정립

- 현재 구도 하에서는 미소금융 지방재단의 유인 구조가 정책목적 달성과 합치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배제하지 못함.
 - 부실채권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방재단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유인구조가 확립되어 있지 않음.
 - 중앙재단은 휴면예금 및 민간기부에서 발생하는 자금을 집중하고 이를 지방재단에 대출채원으로 무이자 대여
 - 지방재단은 법적으로 독립된 실체로서 대출심사와 대출관리를 담당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중앙재단의 지원을 받음.

- 형식적으로 대출자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지방재단에 귀속하지만 부실자산이 발생하여 지방재단이 중앙재단에 대하여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강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측면에서 대출자산을 사실 상 중앙재단의 자산으로 파악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것
- 부실 발생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유인 구조 하에서 지방재단은 신용위험 관리를 소홀히 취급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음.
- 특히 중앙재단이 보상하는 운영경비가 대출액에 연동되어 있는 경우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매우 느슨한 대출심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임.
 - 더하여 차입자의 입장에서 다소 불편스럽지만 상환률 제고를 위하여 필수적인 대출 사후관리가 소홀하게 행해질 가능성도 있음.
 - 신용위험 발생으로 인한 손실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 지방재단은 철저한 대출 심사와 사후관리를 통하여 신용위험을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하기보다는 중앙재단이 제공하는 운영경비를 노리고 대출 규모 확장에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음.
- 지방재단이 신용위험 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대출 자원 배분을 전년도 상환률이나 대손비율에 연동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여기에도 상당한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
 - 지방재단의 부진한 회수 실적으로 자원 배분에서 불이익을 받은 지역사회의 불만 제기 가능성

- MC 기관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하여 차입자가 피해를 보는 구조가 타당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중앙재단이 자금을 지방재단에 사실상 위탁하여 집행하는 현재 방식을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대출하는 체제로 전환할 필요

- 중앙재단은 현재와 같이 민간 기부금과 휴면예금 전입금을 바탕으로 MC 대출 재원을 마련하여 이를 관리
- 대출 재원 배분에서 중앙재단은 미리 정해진 원칙에 따라 지방재단에 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
- 지방재단은 중앙재단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아 자기 책임 하에 대출을 실시

- 물론 이 경우에도 중앙재단은 지방재단에 대하여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출 적격이나 대출 조건 등에 일정한 제약을 부과할 것임.

- 중앙재단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은 반환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결과는 지방재단에 귀속되므로 지방재단은 회수율 제고를 위한 신용위험 관리에 노력을 기울일 것

- 이와 같이 중앙재단에 대한 채무 상환 의무를 완수하지 못하는 지방재단의 부실화 및 파산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이를 지방재단에 대한 규율도구로 활용

- 중앙재단의 guideline에서 벗어나는 행태를 보이는 지방재단에 대해서는 자금공급을 중단함으로써 중앙재단이 최소한의 영향력을 행사할 통로 확보 가능

- 이 경우 대출관련 사항, 특히 이자율과 대출액 등 대출 상품의 구체적인 설계에 대한 지방재단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

- 중앙재단은 대출상품의 구조에 대한 원칙

□ 기업재단이 희망하는 경우 직접 대출을 중단하고 MF 투자펀드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

- 일부 기업재단의 경우 금융기관 영위에 상당한 부담을 표현하고 있는 상황

- 조직 운영 및 유지의 문제점, 대출상품 운영의 문제점, 부실채권 회수 관련 문제점 등에 대하여 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특히 평판위험(reputation risk)에 민감한 기업들이 대출심사나 사후관리에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기업의 사회공헌 차원에서 MC 사업에 참가한 기업재단이 대출 신청자의 불만을 감수하면서 철저한 스크리닝을 실시하거나 강력한 연체발생 억제 정책을 채택하지 않을 것

- 기업재단의 느슨한 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로 인한 문제는 기업재단의 부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원칙에 따라 적용하는 지방재단에 대한 불만으로 비화할 수 있음.

- 따라서 대출 심사 및 관리 조직 운영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재단이 희망하는 경우 중앙재단과 마찬가지로 지역재단에 대하여 저리로 자금을 대여하는 MF 투자펀드로 전환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MF 투자펀드는 MC 기관에 대한 자금대여나 지분투자 뿐 아니라 보증제공, 준지분 매입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대출재원을 공급
- 공익재단으로 구성된 지방재단의 법적 조직을 감안할 때 지분투자보다는 자금 대여나 보증제공 등이 보다 현실적인 자금공급 방식인 것으로 판단됨.

□ 단기적으로는 지방재단에 대한 대출재원 배분을 미리 공표된 척도로 측정된 실적과 연동시키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함으로써 전체 대출 포트폴리오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목표 달성을 추구할 필요

- 대출재원 배분 기준은 지방재단이 과거 성취한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임.
 - 재무적 성과지표에는 연체율이나 손실 비율 등 주로 대출자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포함
 - 사회적 성과 지표에는 일정 기간 지속된 신규 고용 창출 정도나 대출자의 소득 향상 정도 등이 중요한 요소로 포함될 수 있을 것
-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성과변동에 대출재원 배분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몇 년간의 성과 평균을 최종적인 지표로 선택하는 방안 검토
- 앞서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이러한 방안에는 MC 기관의 부진한 성과로 인하여 해당 지역 주민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하지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대출자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책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선택임.

5. MC 전문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

□ MC 관련 전문인력 확보는 MC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

○ 특히 전문성을 갖춘 RM(relationship manager)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

- 금융관련 업종 퇴직자 등 자원봉사 인력의 활용을 통하여 일정 정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비용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 제도권 금융회사의 관행에 익숙한 이들에게 MC의 목적과 운영 원리를 주지시키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 이미 경험을 통하여 증명되었음.

- 무엇보다 RM은 MC의 핵심 전문인력으로 자원봉사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full-time job임.

○ MC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약 300명 내외의 RM이 확보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추산됨.

- 개별 RM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출은 30건~50건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향후 10년 동안 총 2조원의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평균 대출 규모를 2,000만원으로 상정할 때 약 100,000건, 즉 1년간 10,000건의 대출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

- 따라서 10,000건의 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300명 내외의 잘 훈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RM이 필요하다는 추론에 도달

- 현재 RM의 양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사업 규모 확대 계획에 맞추어 RM이 적절하게 배출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가 다수

□ MC의 핵심역량인 RM의 양성에는 많은 물적·시간적 자원 투입이 필요하므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집중적인 교육 뿐 아니라 현장 실무를 통한 경험 축적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 MC 사업의 규모 확대는 전문인력 확보의 수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절되어야 할 것임.

- 지방 및 기업 재단의 사업규모는 확보된 전문인력의 역량과 수준에 따라 보수적으로 설정하고,

- 사업 경험이 축적되고 전문인력 확보가 진전됨에 따라 사업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

- 중앙재단의 전면적인 지원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

- 우리나라 MC 부문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기존 MC 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RM 양성을 위한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됨.

- 장기적으로는 RM 양성 교육을 전담하는 조직을 중앙재단 산하에 설치하거나 외부 전문기관과의 계약을 통하여 상설화 하는 방안 추진을 검토

-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RM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교육 또한 중요

한 과제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

□ RM 양성에 소요되는 물적·시간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가용한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되 직업인으로서 MC에 전념할 수 있는 핵심적 RM 집단을 양성하는 것이 긴급요

○ 제도권 금융회사 퇴직자를 일정한 보수교육 후 RM으로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은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시도해볼 가치가 있는 대안

- 자원봉사자들이 제도권 금융회사와 MC의 근본적인 차이를 숙지하고 자원봉사자가 보유한 금융전문성을 MC의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태도(attitude)의 전환”을 이룩하는 것이 중요

- MC가 단순히 저소득 계층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의 노동을 통하여 자립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보조”하고 “지원”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전제할 필요

○ 그러나 원칙적으로 RM 전체 또는 다수를 자원봉사인력으로 충당하는 방안은 MC 사업의 효과적 효과이나 MC 기관의 전문성 축적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RM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직업”으로 인식하고 이에 헌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서의 위상과 임금 측면에서 일반 조직과 유사한 정도의 유인 구조를 제공하여야 할 것임.

- 비용 문제로 인하여 모든 RM을 전업(full time) 직원으로 고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장기적으로 조직을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만큼의 인력만이라도 전업 직원으로 충원하는 것이 필요

□ MC 신용정보시스템 구축, MC 대출 관리 IT 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구축은 중앙재단이 선도적으로 나서야 할 분야

○ MC 신용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중복 대출과 상습 연체자에 대한 대출을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 MC 신용정보시스템을 기존의 개인 신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성실한 상환 기록을 확보한 MC 차입자가 제도권 금융회사로 부터 대출 받을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일정한 기간 MC를 통하여, 신용기록을 축적한 후 이를 근거로 제도권 금융회사와 거래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bankable person"의 양성이라는 MC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

□ 국내외 MC 기관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실채권 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단에 보급함으로써 회수율 제고를 추진

○ 민원 발생을 우려하여 채권 추심에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해당 채무자 뿐 아니라 다른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도 있는 민감한 문제

○ 일차적으로 채무자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지방재단이 연체 가능성을 보이는 채무자를 인식하고 연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

- 연체위험이 현실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처한 어려움과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맞추어 상환 조건 및 일정의 재조정을 적극 추진

- 물론 이 경우에도 채무 재조정이 상환 가능성이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단순히 부실 현실화를 유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될 것

- 연체가 발생한 이후에도 정상 상환을 독려하기 위하여 사업장 방문 및 상담, 사업 전망 진단, 채무 상환 일정 및 조건 재조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 연체 채권의 관리는 개별 RM 차원이 아니라 중앙재단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도덕적 해이의 확산을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

6. 투자수입 확대 방안에 대한 검토

- 낮은 수준의 이자율을 유지하면서 MC 사업을 유지하는 방안 중 하나는 투자수입을 증대시키는 것
 - 행정비용 절감, 대손비용 축소 등을 통해서도 동일한 목적 달성이 가능하지만 투자수입 증대 방안에 논의의 초점을 맞춤.
- 투자수입 증대는 투자 절대금액 확대와 수익률 향상으로 성취 가능
 - 중앙재단이 보유한 자금의 총 규모가 주어진 일정하게 주어진 상황에서 투자금액의 확대는 MC 대출에 활용되는 자금의 축소를 의미
 - 한편 적절한 전략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투자 수익률의 향상은 포트폴리오의 평균적인 위험 증가와 동시에 이루어 짐.
 - 따라서 투자수입의 확대에 대한 결정은 MC 대출의 상대적 축소나 투자 원금 손실 가능성의 증가라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어려운 선택의 문제
-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유 자금의 일부를 투자자산 획득에 배분한다면 안전성·윤리성을 먼저 고려한 후 수익성을 고려하는 점

근법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궁극적으로는 MC 대출에 사용되어야 하는 자금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안전성을 투자자산 선택의 우선적 기준으로 설정할 필요
- 기부금과 휴면예금 전입금으로 구성된 자금의 성격을 감안한다면 투자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윤리적 기준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임.

- 구체적으로 서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책임투자 펀드(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fund)의 투자 기준을 활용 할 수 있을 것임.

- 투자수입을 통한 기금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제고가 목표이므로 수익성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투자 자산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지만 안전성과 윤리성보다는 하위에 위치하는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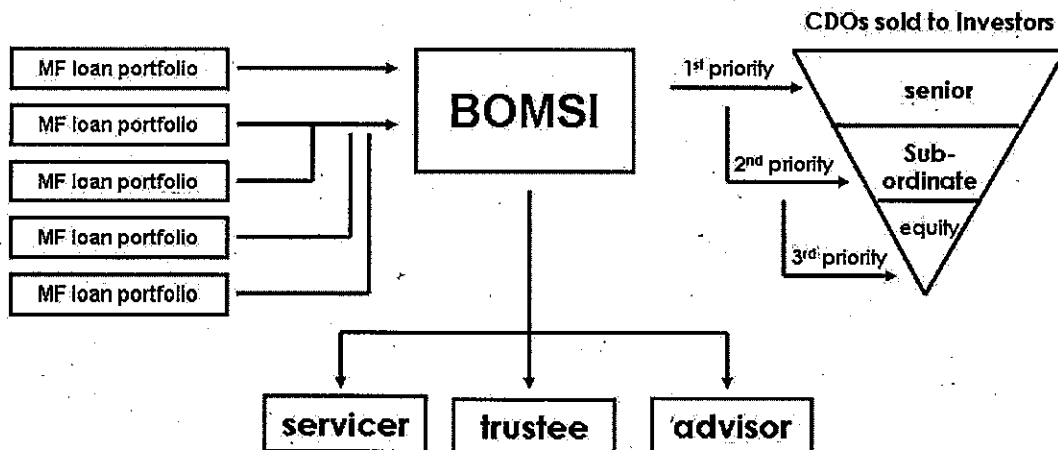
□ 안전성과 윤리성을 모두 갖추고 있으면서도 상당한 수익성을 제공하는 투자자산으로 후진국 MC 대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구조화 채권을 들 수 있음.

- 일정한 규모 이상의 MC 기관이 보유한 대출 채권을 결집하여 이를 기초자산으로 삼고 금융공학 기법을 적용하여 다양한 신용등급의 구조화 채권을 발행하여 판매에 성공한 사례가 있으며 향후에도 후진국 MC 기관의 대출재원 마련을 위한 자금조달 창구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측됨.
- 구조화 채권은 AAA에서 투기등급까지 다양한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용등급이 높은 tranche를 구입함으로써 안정성 확보

- 구조화 채권의 매입을 통하여 후진국 MC 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에 기여하게 되므로 투자의 윤리성이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투자 대상
 - 예금이나 국채에 비하여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므로 수익성 측면에서도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음.
- BOMSI는 MC 기관의 대출 포트폴리오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대표적인 구조화 채권
- BOMSI는 13개국 21개 MC 기관이 보유한 MC 대출 포트폴리오를 기초자산으로 BlueOrchard가 주도하여 발행된 CDO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 성공적인 발행의 결과 MC 관련 단일 거래로는 최대 규모인 991만 USD를 만기 5년 고정금리로 MC 기관에 공급
 - 포트폴리오는 달러, 유로, 영국 파운드, 멕시코 페소, 콜롬비아 페소, 러시아 루블 등 6개국 통화로 구성
 - 전체 25%를 참여 MC 기관이 소재한 국가의 통화 단위로 발행
 - 발행된 대부분의 CDO는 유럽 소재 대형 은행을 비롯한 전통적인 의미의 기관 투자자에 매각
 - 매입자는 은행 66%, 뮤추얼 펀드 17%, 보험회사 9%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MC 관련 투자 경험이 없던 투자자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에서 CDO의 안전성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상당한 수준이었음을 추론할 수 있음.
- BOMSI은 서로 다른 화폐 단위로 표된 동일 신용등급의 세 class와 신용등급이 한 단계 낮은 달러 표시 class로 구성

- Class A1, A2, A3 class에 대해서는 신용보강을 통하여 투자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이 부여
 - Class A1은 유로화 표시 채권이며 3개월 만기의 tranche로 유로 리보에 0.75%의 가산 금리를 추가로 제공
 - Class A2는 파운드화 표시 채권이며 5.586%의 고정 금리 제공
 - Class A3는 달러 표시 채권이며 6.017%의 고정 금리 제공
- Class B는 신용보강이 부여되지 않은 달러 표시 채권이며 9.027%의 고정 금리 제공하는 후순위 채권
 - 네덜란드의 국영 개발금융회사인 FMO는 신용보강이 이루어 지지 않은 부분을 인수

[그림 VI-1] BOMSI의 발행 구조



참고 문헌

Armendiaz de Aghion, B., and J. Morduch, *The Economics of Microfinance*, MIT Press, Cambridge, 2005.

Cull, Robert., Asli Demirguc-Kunt, and J. Morduch, "Microfinance Meets the Market,"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23, No. 1, pp. 167-192, 2009.

European Commission, "Presidency Conclusions", Lisbon Economic Council, 23 and 24, Brussels, 2000.

European Commission, "Working Together for Growth and Jobs; A New Start for the Lisbon Strategy", Communication to the Spring European Council, COM(2005) 24, Brussels, 2005.

European Commission, "Establishing a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Framework Programme: 2007 to 2013", Decision No 1639/200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2006a.

European Commission, "Establishing a Community Programme for Employment and Social Solidarity - Progress", Decision No 1672/200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2006b.

European Commission, "A European Initiative for the Development of Micro-credit in Support of Growth and Employment",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COM(2007) 708,

Brussels, 2007.

European Commission, "Establishing A Microfinance Facility for Employment and Social Inclusion (Progress Microfinance Facility)", Commission Staff Working Paper, COM(2009) 333, Brussels, 2009.

Kenner, J., "The EU Employment Title and the 'Third Way': Making Soft Law Work?"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Labour Law and Industrial Relations*, Vol.15, No.1, pp.23-60, 1999.


Matthaus-Maier. I., and J. D. von Pischke, *Microfinance Investment Funds*, Springer, Berlin, 2007.

Matthaus-Maier. I., and J. D. von Pischke, *New Partnerships for Innovation in Microfinance*, Springer, Berlin, 2009.

Siewertsen, H., J. Evers, S. Forster, I. Heetvelt, P. Ramsden, and W. Thomas, "Policy Measures to Promote the Use of Micro-credit for Social Inclusion," Study conducted on behalf of the European Commission DG Employment, Social Affairs, and Equal Opportunities, 2005.

Tucker, "The Lisbon Strategy and the Open Method of Coordination: A New Vision and the Revolutionary Potential for Soft Governance in European Union", mimeo, Political Science Department,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y, 2003.

UEAPME, "European SME finance Survey/Results 2009", UEAPME, Study Unit, 2009.

 금융위원회	보 도 자 료	• 금융산업의 선진화 •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배포시 보도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장학과		
책 임 자	(금융위원회) 신진창 과장 (2156-9470) (기획재정부) 이형일 과장 (2150-2750) (교육과학기술부) 황판식 과장 (2100-6285)	담당자	(금융위원회) 김태훈 사무관 (2156-9475) (기획재정부) 백경원 사무관 (2150-2754) (교육과학기술부) 한위전 사무관 (2100-6271)
배 포 일	2012. 6.14(목)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8) 총 12 매

제 목 : 「대학생 고금리대출 이용실태 점검결과」

- ☐ 지난 3.30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대학생의 고금리 대출 이용실태를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
- * 「청년·저소득층 서민금융 확대방안」 발표(금융위)
- 기재부, 교과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학생의 제2 금융권·대부업·사채 등 고금리 대출 이용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모색

개요

- ☐ 전국 5,037명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 대학생의 18.3%(922명)가 대출이용 중이며, 이중 고금리 대출 이용자는 3.7%(188명)
- * 한국갤럽 대학생 설문조사('12.4.16~5.10) 결과
- * 고금리 대출 : 저축은행·대부업체(캐피탈 포함)·카드사 대출 및 사채
- * 저금리 대출 : 장학재단(712명) 및 은행·보험·증권사(104명) 대출
- ※ 신용정보사(NICE)를 통한 보완조사결과는 조사대상 대학생(112만명) 중 3.0%(사채제외)가 고금리대출 보유로 나타남(☞ 별첨 : NICE 보완조사 결과)
- 고금리 대출의 업권별 분포는 저축은행 1.6%(83명), 카드사 0.8%(40명), 대부업체 1.1%(55명), 사채 0.2%(12명)

⇒ 전국 대학생 298만명* 중 고금리대출 이용 대학생 11.0만명,
이 중 대부업·사채 이용 대학생은 3.9만명으로 추정

* '11년도 기준, 일반·전문대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휴학생 포함)

나.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주요 특징

□ (가족 소득) 낮은 소득구간에 속한 가정의 대학생일수록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학생의 비중이 높음

- * 가족 소득구간별 고금리대출 이용 학생 비중(%) :
(월 199만원 이하) 10.7 (200~299만원) 6.5 (300~399만원) 3.8 (전체) 3.7

□ (수입·지출) 일반 대학생에 비해 아르바이트 등을 통한 수입이 높아, 수입(월 55.1만원)과 지출(월 58.5만원) 간 격차가 크지 않음

- * 전체 대학생 평균 수입-지출(만원) : (수입) 47.0 (지출) 58.7 (격차) △11.7
고금리대출 이용 대학생 (만원) : (수입) 55.1 (지출) 58.5 (격차) △3.4
- * 월별 아르바이트(과외 제외) 수입(만원) : (고금리) 26.6 (전체) 14.2

□ (등록금) 일반 대학생에 비해 본인이 등록금 납부에 기여하는 경우가 많음(일부 기여 포함)

- * 등록금 납부에 기여하는 학생비중(%) : (고금리대출 이용학생) 43.6 (전체) 13.4
- * 고금리대출자 등록금 납부주체 비중(일부기여 포함, 중복응답, %) :
(부모님) 78.7 (장학금) 10.1 (본인) 43.6 (친인척 등 지인) 2.7

다. 대출이용 현황

□ (대출 잔액) 고금리 대출의 대출잔액(평균 276만원)은 저금리 대출(평균 599만원)에 비해 작은 수준

- * 저금리대출 잔액(만원) : (은행 등) 719.8 (돈돈학자금) 585.9 (일반학자금) 568.3
- * 고금리대출 잔액(만원) : (카드) 380.3 (저축은행) 278.4 (대부업·캐피탈) 228.1 (사채) 133.3

□ (금리) 고금리 대출기관의 금리는 20~30% 수준으로 저금리 대출기관 금리 3~5%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

- * 저금리대출 금리(%) : (은행 등) 4.47 (돈돈학자금) 3.49 (일반학자금) 3.62
- * 고금리대출 금리(%) : (저축은행) 23.0 (카드) 20.2 (대부업·캐피탈) 28.9 (사채) 31.8

□ (대출목적) 고금리 대출은 사고 등 급전필요(42.5%), 등록금(27.4%), 생활비(22.6%) 등이 주된 대출 목적

- 저축은행·카드 이용 대학생의 고금리대출 목적은 등록금(36.6%)이, 대부업·사채는 사고 등 급전 필요(57.1%)가 높은 비중

- ☐ (장학재단 대출 관련) 등록금 용도로 고금리대출을 받은 대학생 (51명) 중 장학재단의 등록금·생활비 대출을 받지 못한 학생은 42명
- 장학재단 대출을 받지 못한 사유는 '대출조건 미충족(21명, 50%)', '장학재단 생활비 대출이 가능한지 몰랐음(7명, 16.7%)' 등
- ☐ (상환 상태 및 상환가능성) 고금리 대출은 부모·형제 등 도움 (8.3~38.6%)보다는 자력으로 갚는 비중(42~75%)이 높음
- * 저금리 대출은 주로 부모·형제·친척의 도움으로 상환(48~54%)
 - 고금리대출 상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환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대부분(81.1%)
 - * 정상상환 가능(32.1%), 다소 어려우나 상환 가능(48.9%), 상환이 매우 어려움(15.8%), 상환이 완전히 불가능(3.2%)

리. 고금리대출 이용 대학생의 행태

- ☐ (정보습득 경로) 지인 등 주위사람(33.3%), 인터넷(36.0%), TV광고 (18.8%) 등을 통해 고금리 대출 정보를 습득
- * 대부업·사채의 경우 TV광고(36.5%)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 (제1금융권 이용 시도) 고금리대출 이용 대학생 중 47.8%만이 은행 등 제 1금융권 이용을 시도해 보았다고 응답(52.2% 미시도)
- * 저축은행·카드 이용자의 54.4%, 대부업·사채 이용자의 34.9% 시도
- ☐ (대출이용 이유) 은행 등에서 대출받기 어려워(43.0%), 곧바로 빌릴 수 있거나 이용이 편리해서(38.7%) 등
- ☐ (채권추심) 대부업·사금융 이용 연체자(9명) 중 3명(33.3%)이 불법·부당한 채권추심(협박 등)을 경험
- * 대학생 중 연체자 비중(%) : (은행·증권·보험) 6.7 (저축은행) 8.4 (카드) 17.5 (대부업·캐피탈) 10.9 (사채) 25.0

마. 대응 방향

□ 기존 고금리채무를 가지고 있던 대학생에 대해서는 미소금융의 학자금 전환대출(6.18일 시행)을 통해 저리자금 지원

- 학자금 용도 또는 저소득 청년층 고금리채무(20%이상)를 저리(6.5%수준)대출로 전환 지원(최대 2,500억원 규모)
(☞ 세부내용 : 은행연합회·미소금융 별도 보도자료(6.14) 참조)

※ 학자금 전환대출 개요

- 지원대상 : ① 학자금 용도로 고금리(연 20%↑) 대출을 받고 신청일 현재 연체가 없는 대·학(원)생 또는 ② 고금리(연 20%↑) 대출을 받고 신청일 현재 연체가 없는 저소득(연소득 2천만원 이하) 청년층(20~29세)
- 전환대출 시행일(6.18일) 이전의 기존 고금리 채무에 한정
- 전환대출 금리 : 6.5% 수준
- 운용규모 : 은행권 기부금 등을 통해 500억원의 보증자원을 조성
→ 미소금융을 통해 최대 2,500억원 규모 전환대출 공급

- 대학생의 기존 고금리 채무(조사결과에 따라 약 3,000억원 규모로 추정)를 해소 가능할 것으로 기대

□ 대학생의 신규 등록금·생활자금·긴급 자금수요 등은 장학재단 대출, 미소금융 긴급 생활자금 대출 등으로 해소

- 국가 장학금을 통해 저소득층(7분위 이하)에 대한 등록금 부담을 경감 (평균 25.2% 부담 경감)
- 학자금대출 제도개선을 통해 금리부담 완화, 지원대상 확대 등을 지속 추진

※ 학자금대출 제도개선('12.1학기 중) 주요 내용

- 든든·일반 학자금 금리 인하 : 4.9% → 3.9%
- 성적요건 완화 : ① 신입생에 대해서는 성적요건 폐지 ② 든든학자금 성적기준 완화(B0 → C0)
- 학점요건이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수 추천 등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별 추천제 확대 시행

- 생활자금·긴급 소액자금 등에 대해서는 장학재단 생활자금 대출, 미소금융 긴급 소액자금 대출(5.31 시행) 등 공급

* 학기당 100만원 한도(연 200만원), 금리 연 3.9% 수준

- 특히, 미소금융은 대학생의 긴급한 소액자금 수요에 대해 300만원 한도로 매년 300억원 규모로 지원

· 지원추이를 보아가며 추가 재원조성 검토

※ 긴급 생활자금대출 개요

- 지원대상 : 만 20~29세 청년·대학생 중 ①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또는 ②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자
- 지원 한도 : 1인당 300만원
- 금리 : 연 4.5%
- 지원 규모 : 미소금융 재원으로 매년 300억원 규모 지원

- 고금리대출 이용 대학생의 생활자금 수요(수입·지출 격차로 추정시 매년 450억원 규모*로 추정)를 해소 기대

* 수입·지출 격차($\Delta 3.4$ 만원) \times 12개월 \times 11만명 = 448.8억원

- 대학생들이 대부업·사채를 이용하기 보다는 장학재단 대출 또는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 미소금융 학자금 전환대출, 긴급 생활자금 소액대출, 장학재단 생활자금 대출 제도 등에 대해 적극 홍보

* 대학신문, 각 대학 홈페이지, 학내 게시판 등에 지원제도 안내문 게재

- 등록금 고지서 발송시 장학재단 대출 및 서민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

- 등록금 납부시기 등 대학생 자금수요가 높은 시기에 서민금융 지원기관 등이 전국 대학을 방문하여 지원제도 안내 실시

- 대부업자의 과도한 광고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대부중개업자의 대학생에 대한 대부중개 행위를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

별첨 1 : 대학생 설문조사 세부 내용

별첨 2 : 신용정보사 보완조사 결과

별첨 3 : 대학생이 있는 가구의 부채(통계청 가계금융조사)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별첨 1 : 대학생 설문조사 세부 내용

① 대학생 가족 월 수입

가족 월수입	199만원 이하	200만원 ~ 299만원	300만원 ~ 399만원	400만원 ~ 499만원	500만원 이상	전체
명 수(명)	252	706	1,434	1,201	1,408	5,037
고금리대출 이용학생 비중(%)	10.7	6.5	3.8	3.3	1.4	3.7

* 모름/무응답 : 36명

② 대학생 수입원 · 지출 내역

< 대학생 유형별 수입원 >

(단위 : 만원)

	용돈	아르바이트	과외	기타	합계
전체 대학생	29.9	14.2	2.2	0.7	47.0
고금리 이용 대학생	27.2	26.6	1.1	0.3	55.1

< 대학생 유형별 지출 내역(등록금 제외) >

(단위 : 만원)

	학습 교재비	식비	패션	취미 문화	유흥비	학원	주거	교통	기타	합계
전체	7.8	14.5	8.1	5.2	6.9	1.0	7.8	7.0	0.3	58.7
고금리	6.7	13.8	7.6	4.5	8.2	1.7	7.1	7.4	1.5	58.5

* 월별 등록금 지출은 전체 대학생 53.7만원, 고금리대출 이용학생 56.4만원
(등록금 포함시 지출 : (전체) 112.4만원 (고금리) 114.9만원)

③ 등록금 납부주체(중복 응답)

		부모님	장학금	본인	친인척 등 지인
전체 (5,037명)	명 수(명)	4,211	831	675	50
	비 중(%)	83.6	16.5	13.4	1.0
고금리 (188명)	명 수(명)	148	19	82	5
	비 중(%)	78.7	10.1	43.6	2.7

④ 대출 기관별 대출 잔액

(단위 : %, 만원)

	저금리			고금리				기 타
	등등 학자금	일반 학자금	은행 증권 보험	저축 은행	카드	대부업 · 캐피탈	사채	친인척
명 수(명)	(508)	(204)	(104)	(83)	(40)	(55)	(12)	(4)
100만원 이하	3.1	2.5	1.9	19.3	17.5	30.9	66.7	-
101~200만원	9.8	11.8	5.8	22.9	30.0	32.7	25.0	-
201~300만원	20.3	19.1	15.4	24.1	25.0	18.2	8.3	75.0
301~400만원	20.9	21.1	19.2	12.0	7.5	5.5	-	25.0
401~500만원	13.6	14.2	13.5	19.3	12.5	9.1	-	-
501~1,000만원	17.3	18.6	22.1	1.2	2.5	1.8	-	-
1,001~2,000만원	9.8	6.9	10.6	-	-	-	-	-
2,000만원 이상	1.6	2.5	3.8	-	2.5	-	-	-
모름/무응답	3.5	3.4	7.7	1.2	2.5	1.8	-	-
평 균	585.9	568.3	719.8	278.4	380.3	228.1	133.3	310.0

⑤ 대출기관별 금리

(단위 : %, 만원)

	저금리			고금리				기 타
	등등 학자금	일반 학자금	은행 증권 보험	저축 은행	카드	대부업 · 캐피탈	사채	친인척
명 수(명)	(508)	(204)	(104)	(83)	(40)	(55)	(12)	(4)
5.0% 이하	77.6	69.6	54.8	-	-	-	-	50.0
5.1~10.0%	4.3	8.3	20.2	-	-	-	-	-
10.1~15.0%	-	-	-	8.4	5.0	-	-	-
15.1~20.0%	-	-	-	22.9	47.5	27.3	25.0	-
20.1~25.0%	-	-	-	25.3	20.0	10.9	-	-
25.1~30.0%	-	-	-	13.3	10.0	10.9	25.0	-
30.0% 이상	-	-	-	8.4	-	47.3	41.7	-
모름/무응답	18.1	22.1	25.0	21.7	17.5	3.6	8.3	50.0
평 균	3.49	3.62	4.47	23.03	20.17	28.85	31.83	0.00

⑥ 대출 목적

	저축은행 · 카드(123명)		대부업 · 사채(63명)	
	명 수(명)	비중(%)	명 수(명)	비중(%)
등록금	45	36.6	6	9.5
사고 등 급전 필요	43	35.0	36	57.1
생활비	32	26.0	10	15.9
유학비	10	8.1	11	17.5
다른부채 상환	10	8.1	2	3.2
주거 비용	6	4.9	1	1.6
사업비용 / 창업	-	-	1	1.6
기 타	-	-	1	1.6

7 장학재단 대출 관련

장학재단 대출 有 (고금리대출 추가대출 사유)	구 분	저축은행·카드		대부업·사채		합 계	
		명수(명)	비중(%)	명수(명)	비중(%)	명수(명)	비중(%)
	등록금 부족	5	83.3	1	33.3	6	66.7
	생활비 부족	1	16.7	1	33.3	2	22.2
	용돈·학비 부족	-	-	1	33.3	1	11.1
	합 계	6	100.0	3	100.0	9	100.0
장학재단 대출 無 (장학재단 대출을 받지 않은 이유)	구 분	명수(명)	비중(%)	명수(명)	비중(%)	명수(명)	비중(%)
	대출조건 미해당	18	46.2	3	100.0	21	50.0
	생활비 대출 가능한지 몰랐음	7	17.9	-	-	7	16.7
	기간이 지나서	3	7.7	-	-	3	7.1
	준비서류 과다	3	7.7	-	-	3	7.1
	신용 부족	3	7.7	-	-	3	7.1
	대출한도 초과	2	5.1	-	-	2	4.8
	등록금마감날짜와 안 맞음	1	2.6	-	-	1	2.4
	연체 누적	1	2.6	-	-	1	2.4
	급전필요 등 기타	2	5.2	-	-	2	4.8
	합 계	39	100.0	3	100.0	42	100.0

* 등록금 용도로 고금리 대출을 빌린 대학생(51명)을 대상으로, 장학재단 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대출 사유를, 없는 경우 받지 않은 이유를 질문

8 상환상태·상환 가능성

< 대출 기관별 상환 상태 >

(단위 : %)

	저금리			고금리				기 타
	든든 학자금	일반 학자금	은행 중권 보험	저축 은행	카드	대부업 · 캐피탈	사채	친인척
명 수(명)	(508)	(204)	(104)	(83)	(40)	(55)	(12)	(4)
부모·형제 · 친척 등 도움	17.1	48.0	53.8	38.6	37.5	25.5	8.3	75.0
자력 (아르바이트·과외등)	6.1	19.6	10.6	44.6	42.5	67.3	75.0	-
다른대출로 갚고 있음	0.2	-	-	-	5.0	-	-	-
상환기간 미도래	75.0	31.9	32.7	13.3	5.0	5.5	8.3	-
기 타	0.8	-	2.9	3.6	7.5	1.8	8.3	25.0
취업후 분할 상환	0.2	-	-	-	-	-	-	-
모름/무응답	0.6	0.5	-	-	2.5	-	-	-

< 상환 가능성 응답 >

(단위 : %)

	저금리			고금리				기 타
	돈돈 학자금	일반 학자금	은행 증권 보험	저축 은행	카드	대부업 · 캐피탈	사채	
명 수(명)	(508)	(204)	(104)	(83)	(40)	(55)	(12)	(4)
정상상환 가능	54.5	49.5	56.7	24.1	40.0	36.4	41.7	25.0
다소 어려우나 상환 가능	28.0	33.8	30.8	59.0	35.0	47.3	33.3	50.0
상환이 매우 어려움	8.7	12.3	6.7	15.7	12.5	16.4	25.0	-
상환이 완전히 불가능	8.9	4.4	5.8	1.2	12.5	-	-	25.0

9 정보습득 경로

	저축은행 · 카드(123명)		대부업 · 사채(63명)	
	명수(명)	비중(%)	명수(명)	비중(%)
지인 등 주위사람	50	40.7	12	19.0
인터넷	47	38.2	20	31.7
TV 광고	12	9.8	23	36.5
전단지	11	8.9	6	9.5
명 합	2	1.6	2	3.2
없 음	1	0.8	-	-

10 제1금융권 이용 시도

	저축은행 · 카드(123명)		대부업 · 사채(63명)	
	명수(명)	비중(%)	명수(명)	비중(%)
시도해 봤음	67	54.5	22	34.9
시도하지 않았음	56	45.5	41	65.1

11 고금리 대출이용 이유

	저축은행·카드(123명)		대부업·사채(63명)	
	명수(명)	비중(%)	명수(명)	비중(%)
은행 등에서 대출받기 어려워서	54	43.9	26	41.3
곧바로 빌릴수 있어서	45	36.6	27	46.0
인터넷 대출, 전화상담 등 이용이 편리해서	18	14.6	4	6.3
광고를 통해 이용 접근이 쉬워서	4	3.3	4	6.3
금리 차이가 크지 않아서	2	1.6	-	-

12 불법 채권추심

		대부업·사채 이용자 중 연체자(9명)	
채권추심 경험 여부	구 분	명 수(명)	비 중(%)
	있 음	3	33.3
	없 음	6	66.7
	합 계	9	100.0
채권추심행위 종류 (복수 응답)	구 분	명 수(명)	비 중(%)
	협박	1	33.3
	방문하여 불안·공포 조성	1	33.3
	전화하여 불안·공포 조성	2	66.7
	전 체	3	100.0
추심 대상	구 분	명 수(명)	비 중(%)
	원 채권자	2	66.7
	업무처리 위탁자	1	33.3
	합 계	3	100.0

별첨 2 : 신용정보사(NICE) 보완조사 결과

- (대출 보유자) CB자료 조사대상 대학생(112만명)의 3.0%(3.3만명)가 현재 고금리 대출을 보유 중 (저축은행 2.3% 카드 0.3% 대부업 0.8%)

< CB자료 조사대상 대학생 대출 보유 현황 >

	전 체	대출 보유자	장학 재단	은행	저축 은행	카드	대부업	기 타
보유자수(명)	1,120,436	643,355	616,572	193,872	25,852	3,432	9,324	13,385
비율(%)	100.0	57.4	55.0	17.3	2.3	0.3	0.8	1.2

- ◇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와 CB데이터 분석 비교시 고금리 대출자 비중 등이 대체로 합치 ☒ 유의미한 설문조사 결과

		전 체	저축은행	카드	대부업	사채	고금리 계
대 학생 설문조사	명 수(명)	5,037	83	40	55	12	188
	비 중(%)	100.0	1.6	0.8	1.1	0.2	3.7
CB 분석결과	명 수(명)	1,120,436	25,852	3,432	9,324	-	33,167
	비 중(%)	100.0	2.3	0.3	0.8	-	3.0

- (대출잔액) CB자료 조사대상 대학생의 고금리 대출 총 대출 잔액은 1,819.5억원

- 업권별 평균 대출잔액은 저축은행 542.5만원, 카드 293.7만원, 대부업 339.1만원

< 업권별 대출 잔액 >

	대출 보유자	장학 재단	은행	저축 은행	카드	대부업	기 타
총 잔액(억원)	64,443.1	45,392.0	14,305.2	1,402.4	100.8	315.2	2,927.6
평균 잔액(만원)	1,001.7	736.2	737.9	542.5	293.7	339.1	2,187.2


별첨 3 : 대학생이 있는 가구의 부채 [통계청 가계금융조사, '11.3월 기준]

- (대학생 가구) 대학생이 있는 가구(275.8만 가구) 중 25.8%인 71.1만 가구가 교육비 목적의 부채를 보유
- 가구당 평균 교육비 부채는 1,706만원으로, 교육비 부채가 있는 가구의 평균 총 부채 6,753만원의 25.3% 차지
 - 교육비 부채가 있는 가구 총부채(6,753만원)의 총자산(26,605만원) 대비 비율은 25.4%, 가처분소득(3,756만원) 대비 비율은 179.8%

대학생 가구(A) (천가구)	교육 부채 가구(B)	교육부채 가구비율 (B/A, %)	교육비 부채가구(만원)					총부채/ 총자산 (%)	총부채/ 가처분 소득 (%)
			총자산	총부채	교육비 부채	순자산	가처분 소득		
2,758	711	25.8	26,605	6,753	1,706	19,852	3,756	25.4	179.8

- (금리 구간별) 대출금리 10% 이하의 저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가구(81.9만가구)가 전체 교육비 대출가구(94.9만가구)의 86.3%
- * 금리구간별 가구 산정시에는 가구별 산정이 곤란하여 대출건별 집계
 - 금리 20% 초과하는 가구(3.4만가구)는 전체의 3.5%이고, 가구당 교육비 부채규모도 454만원으로 크지 않음
- (대출기관별) 은행에서 대출받는 가구(51만가구) 비중이 53.7%이고, 저축은행·대부업체 대출 가구(1.8만가구)는 1.9%

구분		교육부채 가구 (천가구)	가구비중 (%)	교육비 부채가구(만원)				총부채/ 총자산 (%)	총부채/ 가처분 소득(%)
				총자산	총부채	교육비 부채	가처분 소득		
전체		949	100.0	26,856	6,626	1,978	3,587	24.7	184.7
대출 금리 구간별	5%이하	355	37.4	27,219	5,834	2,018	3,852	21.4	151.4
	5~10%	464	48.9	28,253	7,098	2,302	3,595	25.1	197.5
	10~15%	68	7.2	16,836	5,254	948	2,705	31.2	194.2
	15~20%	29	3.0	24,232	3,230	475	3,704	13.3	87.2
	20%초과	34	3.5	26,347	14,172	454	2,377	53.8	596.2
대출 기관별	은행	510	53.7	26,651	7,218	2,177	3,565	27.1	202.5
	비은행	82	8.6	32,654	7,146	2,672	3,458	21.9	206.7
	보험회사	100	10.5	17,494	3,727	1,746	3,371	21.3	110.5
	공제회	66	7.0	44,258	6,516	2,523	5,548	14.7	117.5
	직장	25	2.6	40,435	8,521	2,491	5,286	21.1	161.2
	개인	15	1.6	21,830	2,077	1,345	2,226	9.5	93.3
	저축은행 대부업체	18	1.9	15,189	3,179	2,123	2,074	20.9	153.3
	신용카드	101	10.6	25,449	8,412	557	3,054	33.1	275.4
	기타	33	3.4	11,523	2,253	933	2,763	19.6	81.6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2008. 6. 3(화) 15:00시 부터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금융과			
책 임 자	우상현 과장(2156-9850)	담 당 자	이석란 사무관(2156-9854)
배 포 일	2008. 6. 2.(월)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1~48) 총15매

제 목 : 제5회 대부업정책협의회 개최

- 정부는 2008.6.3(화) 15:00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제5차 「대부업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금융위원회 위원장(주재), 법무부·행안부·기획재정부 차관, 공정위부위원장 (☞참고1)

- 금번 협의회에서는 ①사금융 시장 실태조사, ②불법 사금융 단속 실적, ③지자체 대부업 관리 강화 추진현황, ④금감원 직권점사 추진실적 및 계획, ⑤금융소외자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그 동안의 실적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음

《주요 논의결과》

- ① (사금융 실태조사) 등록 대부업체와 사금융 이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 금번 실태조사의 의의

- 그 동안 사금융 시장 규모는 각 연구소 등에서 18~45조원으로 추산
 - 그러나 동 추정치는 90년대 통계치, 등록 대부업체 조사 등 일부 제한적인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정책자료로 사용하기엔 부적합
 ➔ 이에 전국민과 사금융 이용자,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고 다각적인 실태조사를 시행
 - 사금융 시장에 대한 신뢰성 있는 현황 자료를 통해 현실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조사결과 전체 사금융 시장의 규모는 전 국민(20세 이상 3,500만명)의 5.4%인 약 189만명인 것으로 추정

- 이중 49.9%는 등록 대부업체, 17.6%는 무등록 대부업체, 32.4%는 지인으로부터 차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금융 이용자들의 평균 사금융 이용액은 873만원으로 전체 사금융 시장 규모는 약 16.5조원으로 추정됨

○ 사금융 대출의 이자율 평균은 연 72.2%*이고, 사금융 이용자들은 평균적으로 2곳에서 사금융을 이용

* 사금융 이자율이 법상 이자율보다 크게 높은 것은 사금융 이용자들이 법 개정후 이자가 낮아진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용자는 자신이 부담하는 금리를 높게 인식하기 때문 (등록 대부업체 조사결과 신용대출 금리는 약 37~44%로 조사됨)

※ 기타 자세한 실태조사 결과는 별첨 참조(☞참고2)

○ 동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월중 금융소외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규모 및 재원조성 방안 등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회의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할 계획

② (불법 사금융 단속) 경찰과 검찰은 작년에 이어 금년 3~4월 중 불법 사금융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

* '08.1~4월중 1,185명을 단속

○ 하반기에도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추가하여 실시하되

- 금감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불법 사금융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보다 효과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할 예정

○ 또한, 국세청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자를 적발해 등록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엄중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공정위에서는 그 동안 대부업체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를 조사('07.6~12)하여 시정권고·명령하고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표준 대부보증 계약서의 제개정을 추진할 예정

③ (지자체 대부업 관리강화) 대부업체 DB구축, 지자체 대부업 전담인력 보강*, 시·도관계기관협의회 운영** 등을 지속 추진중

* 지자체의 대부업 전담인력을 '07~'08.5월중 26명까지 확보

** 16개 시도중 12개 시도 개최

○ 각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대부업체 정보의 DB화를 완료('08.2)

- 향후 관계부처가 단속·조사를 실시하거나, 일반국민이 대부업체 여부 확인시 동 DB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④ (금감원 직권검사) 대부업법 개정('08.3 시행)으로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 금감원이 직접 검사를 하게 되었음

* 2개 이상 시·도지사에 등록된 경우, 자산규모가 70억원 이상인 경우

○ 이에따라, 금감원의 관련조직을 확대개편하고, 현재 지자체를 통해 검사대상 대부업자 현황을 파악중이며, 직권검사 대상 업체에게 설명회를 통해 검사내용 등을 안내

- 금년 하반기부터는 직권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에 따라 지자체에 통보하고 조치를 요구할 계획임

⑤ (금융소외자 지원방안) 금융소외자의 자활을 위해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추진

- ① 국민연금 기납부액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 ② 소액서민 금융재단을 통한 창업·취업지원, 신용대출, ③ 신용회복기금 설치를 통한 연체채무 재조정 및 고금리 채무 환승 지원, ④ '신용회복지원중' 기록말소, ⑤ 불공정 채권추심방지법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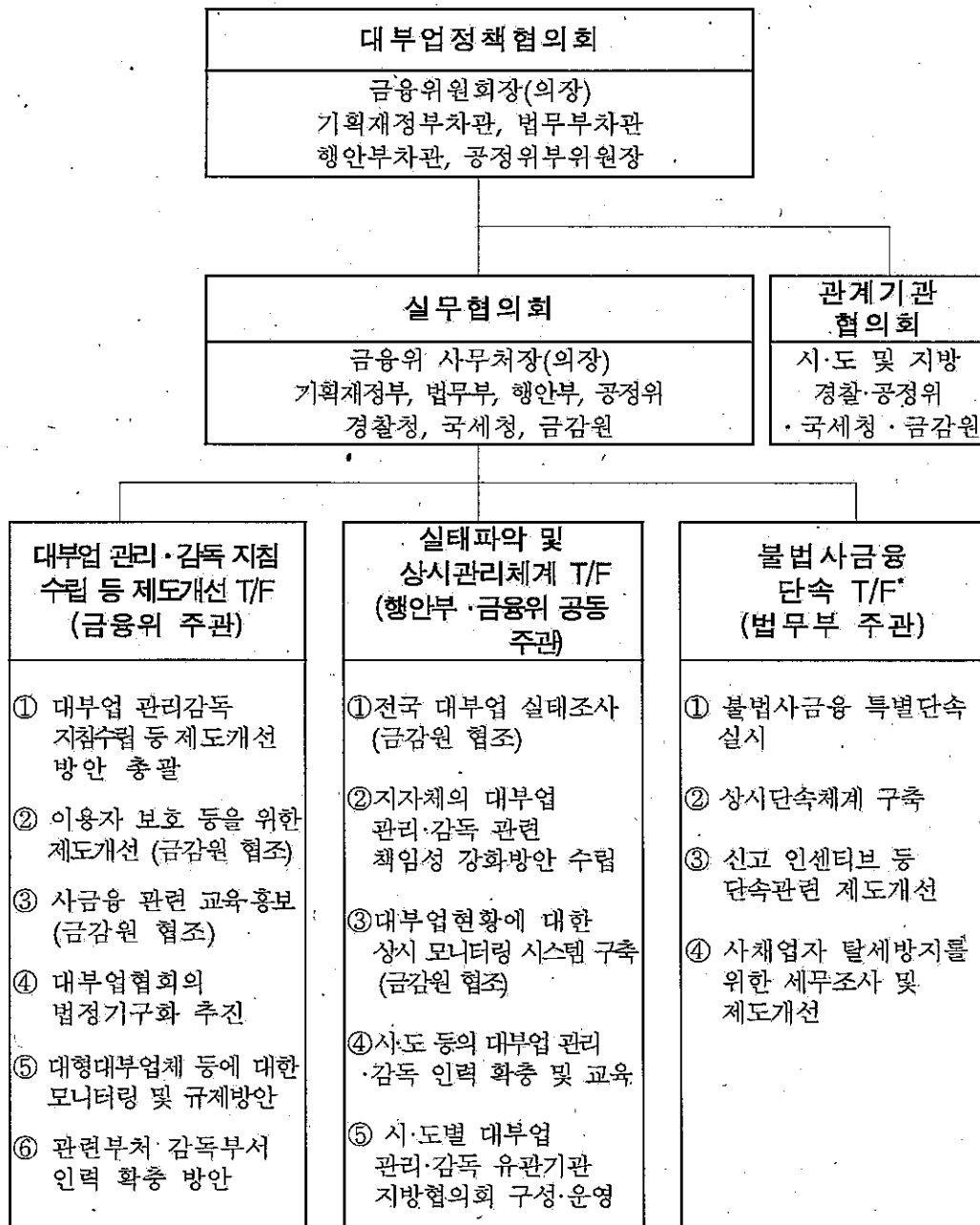
○ 이를 위해 대부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과 필요한 재원마련 방안도 논의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참고1》

대부업 정책협의회 구성



《참고2》

사금융 실태조사 결과

< 목 차 >

I. 조사개요

II.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 결과

1. 전체 사금융 시장 규모
2. 사금융 이용자의 연체 및 제도권 대출 이용 현황
3. 사금융 시장의 특성
4. 사금융 이용자의 특성

III. 정책 시사점

I. 조사 개요

1. 목 적

- 금융소외자의 사금융 이용 현황 및 상환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사금융 실태조사를 실시
 - 사금융시장에서의 공급자(등록 대부업체)와 수요자(대부 이용자) 측면에서 각각 조사
 - ➔ 지원 가능한 대상의 범위, 지원한도 등을 정하고, 지원 대상자 수, 필요 예산 등을 산정하기 위함

2. 경 과

① 등록 대부업자 실태조사 ('08.4월 : 1개월)

- 전체 등록업자 대상 : 전국 약 18,000개 등록 대부업자를 서면으로 조사
 - * 자료분석이 가능한 7,058개 대부업체의 자료를 기초로 분석
- 일부 현장조사 : 247개* 등록 대부업자를 방문하여 업무 담당자 및 임원 면접
 - * 대형업체 67개, 중소법인 80개, 개인업체 100개

② 사금융 이용자 실태조사 ('08.4월 : 1개월)

- 전국민 조사 : 1만명 전화조사 (한국갤럽, 미디어리서치)
- 사금융 이용자 조사 :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3,0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
- 기존 데이터 활용 : 한신평정, 한신평 CB에 등록된 약 3,500만명의 대출정보 분석

II.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 결과

1. 전체 사금융 시장 규모

① (사금융 이용자) 전국민(20세이상 3,500만명)의 5.4%인 189만명이 현재 사금융을 이용

- 이중 49.9%는 등록 대부업체, 17.6%는 무등록 대부업체, 32.4%는 지인으로부터 차입

* 사금융 이용자중 128만명이 대부업체(등록+무등록)를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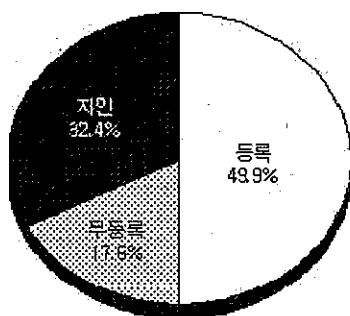
② (사금융 시장규모) 약 16.5조원(189만명×873만원)으로 추정

* 1인당 평균 사금융 이용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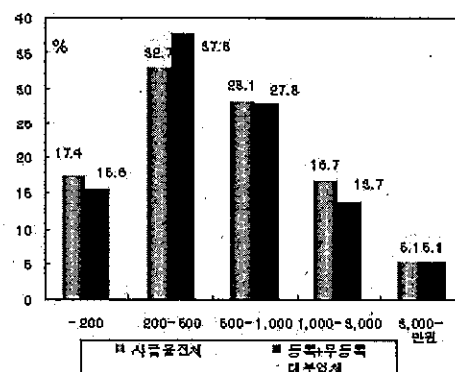
- 이중 지인을 통한 차입을 제외한 등록 및 무등록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규모는 총 10.0조원 (127.6만명×783.4만원)

* 등록 및 무등록 대부업체 이용자의 평균 사금융 이용액

<사금융 이용 형태>



<사금융 대출 금액>



2. 사금융 이용자의 연체 및 제도권 대출 이용 현황

㉠ (사금융 연체) 사금융 대출자중 연체자의 비율은 약 26.4%

* CB사에 등록된 대부업체 이용자의 연체율(23%)와 무등록 대부업체 연체율(대부업체 연체율의 1.55배=36%)의 평균

- 연체된 사금융 채무중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가 46.5%로 다수이나, 1년 이상 연체된 채무도 29.4%에 달함

㉡ (제도권 대출 이용) 사금융 이용자중 57.4%가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

- 사금융 이용자의 평균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규모는 3천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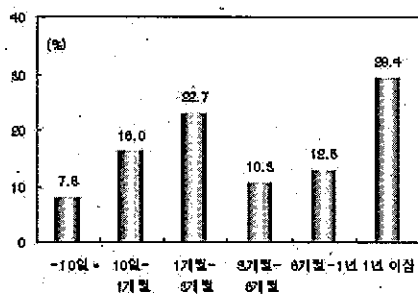
*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중 신용대출 이용자의 비율은 68.5%
(신용대출의 경우 1천만원 이하 대출자가 53.0%, 3천만원 이하가 84.7%, 5천만원 이하는 91.7%로 평균신용대출 금액은 1,900만원)

-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자중 13.7%가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을 연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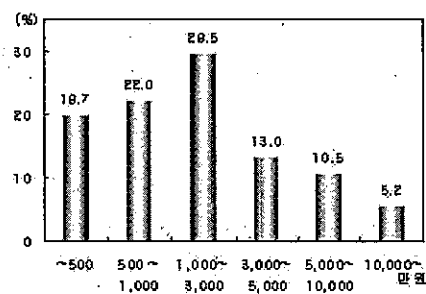
* 전체 국민의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 연체율(3개월 이상 연체)은 5.2%

- 이중 3개월 이하 연체자는 32.2%이고, 3개월~1년 연체는 29.2%, 1년이상 연체는 37.2%

<사금융 연체일수>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규모>



3. 사금융 시장의 특성

① (이자율) 사금융 대출의 이자율 평균은 연 72.2%

○ 연 30% 이하 대출이 17.8%, 연 30~49%가 33.9%, 연 49%이상 대출이 48.1%

* 등록 대부업체 이자율 평균이 연 68%인 반면, 무등록 대부업체는 이보다 높은 연 78%

** 대부업법상 이자한도 : 49% ('07.10.4일부터 시행)

*** 사금융 이자율이 법상 이자율보다 크게 높은 것은 사금융 이용자들이 법 개정후 이자가 낮아진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용자는 자신이 부담하는 금리를 높게 인식하기 때문(등록 대부업체 조사결과 신용대출 금리는 약 37~44%로 조사됨)

② (이용업체수) 사금융 이용자는 평균적으로 2곳에서 사금융을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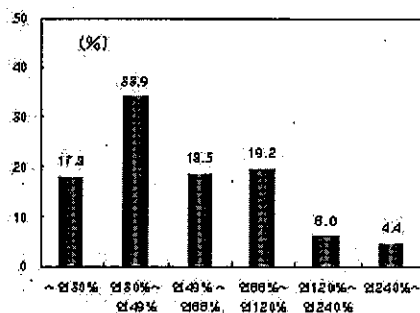
* 이용업체수 : 1군데(48.5%), 2군데(19.4%), 3군데(17.2%), 4군데(6.6%), 5군데 이상(5.1%)

③ (대출형태) 사금융 시장의 76.0%는 개인 신용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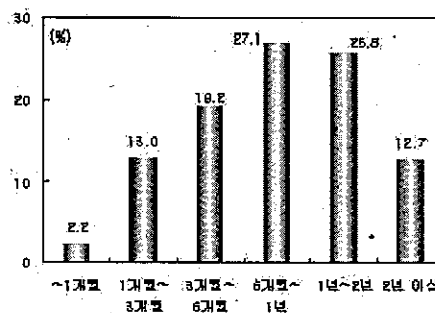
* 개인 담보대출은 15.4%, 타인신용보증 대출은 8.6%

④ (상환기간) 일반적인 사금융 상환기간은 3개월~1년(46.3%)이지만, 12.7%는 상환기간이 2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함

<사금융 연 이자율>



<사금융 평균 상환기간>



4. 사금융 이용자의 특성

① (사금융 이용계기) 주로 **가계 생활자금**(47.4%)이나 **사업**(39.6%)을 위해 사금융을 이용

- 가계생활자금 용도로는 생활비 비중이 46.0%로 가장 높고, 교육비(24.5%), 병원비(14.9%) 순임

② (상환의지) 대다수 사금융 이용자들은 **상환의지가 비교적 높고**, **상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스스로 긍정적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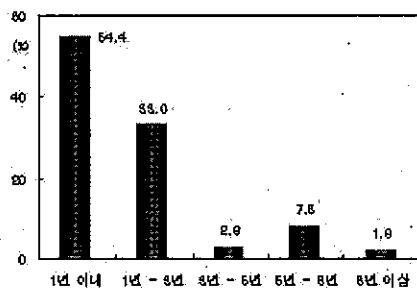
- 자력(73.6%) 또는 주변사람들의 도움(10.4%)으로 상환을 계획
 - * 기타답변 :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음(6.2%), 추가대출로 상환(3.2%), 새로운 신용회복 대책 기다림(3.2%), 개인회생이나 파산 활용(1.8%), 현행 신용회복 기구 이용(1.5%)

- 사금융 연체자의 경우에는 36.5%만이 상환할 수 있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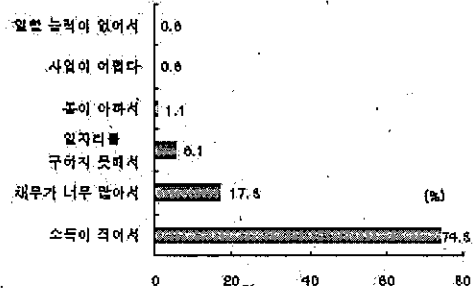
- 이들중 1년 이내에 상환 할 수 있다고 한 이용자는 54.4%

- 상환할 수 없는 이유로는 대체로 소득은 있지만 **소득규모가 작거나 소득대비 채무가 많기 때문**으로 나타남

<사금융 연체 대출금 상환시기>



<연체 대출금 미상환 이유>



③ (상환능력) 사금융 연체자의 경우 대출상환 가능금액은 월평균 5만원, 정상상환자는 약 62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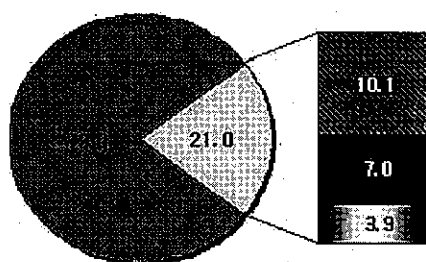
* 연체자 가구 월평균 가구소득은 166만원, 정상 상환자 월평균 가구 소득은 223만원, 월평균 생활비는 161만원

- 연간 가구소득 대비 총채무액(제도권+등록+무등록)은 100% 미만인 69.8%이고, 100~120%가 5.2%, 120% 이상이 25%
- 사금융 이용자중 6.3%는 무직상태
- 현재, 개인의 월평균 부채 상환액은 73만원으로 나타남

④ (금융채무불이행자) 사금융 이용자중 21%는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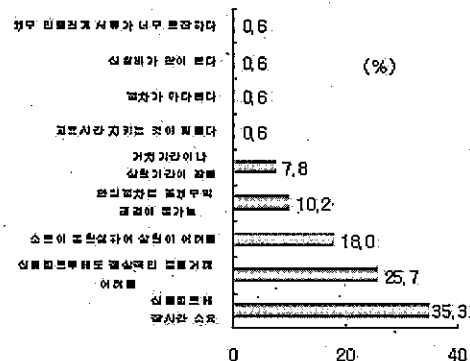
- 이중 현재도 금융채무불이행인 경우는 48.3%, 신용회복 지원금은 18.4%, 신용회복을 완료하고 정상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는 33.1%로 나타남
- 신용회복 지원제도 이용과 관련한 불편 사항으로 '신용회복에 장시간 소요'(35.3%), '신용회복 이후에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움(25.7%)' 등을 지적

<금융채무불이행자 현황>



■없다 ■현재도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완료(정상) ■신용회복 지원중

<신용회복 지원제도 불편사항>



⑤ (기초수급자) 제도권 금융기관 또는 사금융을 통한 대출이 있는 자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1.5%인 27만명

*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06년 현재 약 153만명으로 전국민의 3.2% 이지만 소득이 낮아 대출이 어려워 대출자중 비중이 낮음

○ 제도권 금융기관 및 사금융 대출을 연체중인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10.3만명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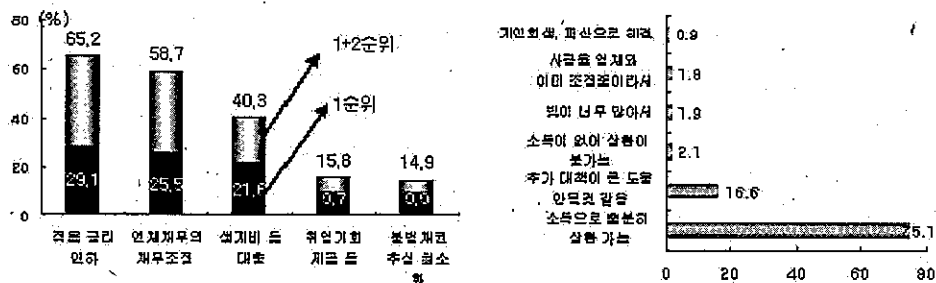
- 제도권 금융기관 및 사금융 대출 연체자(286만명)의 약 3.6%, 대출중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약 38%

⑥ (정부대책) 정부의 추가적인 신용회복 대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61.6%)이 많은 반면, 추가대책 참여 의향은 다소 낮음(46.2%)

○ 사금융 이용자들이 희망하는 추가 신용회복 대책은 '적용금리 인하', '연체채무의 채무조정(장기분할 상환)', '생계비 대출' 순으로 나타남

○ 추가 신용회복 대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본인의 소득으로 충분히 상환 가능'하기 때문이 대부분(75.1%)

<희망하는 추가 신용회복 대책> <신용회복 추가대책 비참여 이유>



○ 또한, 정부 자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23.5%가 참여의향을 밝힌 가운데, 창업관련 지원을 주로 희망

*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 37.3%,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금 대출 32.6%, 중소기업 취업지원 13.3%, 직업훈련 11.9%, 공공근로 4.7%

Ⅲ. 정책 시사점

① 금융소외자 지원 대상수 추정

전 국 민 4,700 만명	대출 있음 (1,774 만명)	제도권 대출만 있음 (1,646만명)	대부업체 대출 있음(128만명)	
			제도권 대출 있음 (71만명)	제도권 대출 없음 (57만명)
		정상상환 (1,339만명)	정상상환 (49만명)	정상상환 (42만명)
		금융채 무불이행 (240만명)	금융채 무불이행 (20만명) -돌다연체(17만명) -제도권만 연체(3만명)	대부업체 대출 연체 (15만명)
			신용회복중 (67만명)	
	대출없음 (2,926만명)			

➔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규모 및 재정투입 여부
및 방식 등은 6월중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

② 대부업체의 정책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 채무재조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신청 대상자의 모든 제도권·사금융 채권을 일괄하여 조정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① 대부업협회와 공동으로 채권매각 등 대부업체가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 노력
 - ② 대부업체로부터 일괄하여 채권을 매입함과 동시에 채무조정 대상자의 다른 사금융 채권도 조정할 수 있도록 개별 매입을 추진하며
 - ③ 불법대부업체의 참여등을 위해 신복위, 대부업 협회 등 민간 기구의 채무조정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③ 매입대상 연체채권의 범위

-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 3개월 이상 연체인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로서 금융활동이 제한되므로
 - 금융채무불이행자를 채무조정 대상으로 고려
- (대부업체 대출) 대부업체 연체채권(3개월 이상 연체)중에서 사실상 채권가격이 충분히 낮게 형성되고, 대부업체들도 매각의사를 밝히고 있는 6개월 이상 연체 채권이 정책대상이 될 가능성이 큼
 - * 대부업체의 경우 6개월 이하의 연체채권은 추심을 통해 어느정도 상환받을 수 있어 매각의사가 없음

④ 사금융 이용자의 상환의지 및 상환능력

- 실태조사 결과 대체로 사금융 이용자들은 상환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
 - 다만, 사금융 연체자의 경우 소득에 비해 채무규모가 커 채무 상환이 어렵다는 답변이 다수
- ➔ 연체 채무자에 대해서는 소득규모에 맞는 상환이 가능하도록 채무를 재조정하여 채무 상환 가능성을 높일 필요

⑤ 사금융 이용자들의 정책 희망사항

- 사금융 이용자들은 적용금리 인하 방안을 가장 선호
 - 현재 사금융시장에서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대출을 제도권 금융기관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조치가 필요
- 또한, 지원제도 시행시 혜택의 폭을 넓히고, 이용을 편리하게 하며,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

⑥ 채무외의 근로 및 창업지원 병행

- 현재 사금융 이용자중 실직자의 비율은 약 6.3%로 실질적인 자활지원과 도덕적 해이 최소화를 위해서는 이들의 상환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지원이 병행될 필요
 - 사금융 이용자들은 자활 지원과 관련하여 근로보다는 창업 지원을 희망
 - 지원제도 참가자중 희망자에 대해서는 창업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창업교육을 완수하고 의지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창업자금을 지원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강 석 훈 의원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2009~2011년 국정감사 시정처리 결과보고서

(별도 제출)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2. 최근 5년간 직원징계 현황 및 처리결과

- 직급, 징계자 주요업무, 징계사유, 적발기관(감사원, 경찰, 검찰, 내부감찰) 징계사항 및 결과 등

□ 금융위 출범(2008.3) 이후 직원 징계현황

직급	주요업무	징계사유	적발기관	징계종류
서기관	타기관 파견	음주운전	경찰	견책
서기관	자본시장 등 정책부서	금품수수	감사원	감봉
서기관	자본시장 등 정책부서	금품수수	감사원	감봉
행정 사무관	지원부서	음주운전	경찰	견책
일반직 고위공무원	저축은행 등 정책부서	금품수수	검찰	파면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3. 최근 3년간 내부감사 및 총리실·감사원 등 외부기관에 의한 감사현황, 지적사항, 조치결과

□ 최근 3년간 외부기관(감사원) 감사결과는 총 10건임.

(감 사 원) 감 사 명	감사 기간	비 고
2009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검사 등 결산감사	'10.03.15 ~ 03.19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10.01.28 ~ 04.02	
정책금융제도 개편 및 운영실태	'10.09.06 ~ 10.13	
대한생명 매각 관련 공적자금 운용실태	'10.12.09 ~ 12.29	
2010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검사 등 결산감사	'11.03.17 ~ 03.25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실태	'11.03.21 ~ 05.26	
어음대체결제수단 이용 대출, 등 운영실태	'11.07.04 ~ 07.29	
증권시장 운영 및 감독실태	'11.09.19 ~ 10.31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12.01.09 ~ 02.28	
금융위원회 재무감사	'12.03.05 ~ 03.16	

○ 감사원 지적사항(별첨1) 및 조치결과(별첨2)

□ 최근 3년간 내부 감사결과는 총 2건임

(내 부) 감 사 명	감사 기간	지적사항	조치결과
2010년 금융위원회 자체감사	'10.12.16 ~ 12.22	별첨3	별첨5
2011년 금융위원회 자체감사	'11.12.26 ~ 12.30	별첨4	별첨6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	주요	모기지를 이차보전사업 관리·감독 및 시행 부적정	2010.05.03	2009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감사 등 결산감사	-
2	주요	2009회계연도 성과계획 수립 및 실적보고 부적정	2010.05.03	2009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감사 등 결산감사	-
3	주요	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	2010.05.03	2009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감사 등 결산감사	-
4	주요	국가채권 관리보전조치 및 불납결산처분 부적정	2010.05.03	2009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감사 등 결산감사	-
5	통보	대부업 동일 상호 중복 등록에 대한 제한 제도 미비	2010.12.21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조치 완료
6	통보	금융감독원 직권감사 범위 설정 불합리	2010.12.21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조치 완료
7	통보	대부업자 관리·감독권 분담 불합리	2010.12.21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8	통보	대부업 실태조사 및 조사 결과 분석·방법 부적정	2010.12.21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9	통보	대부업 등록정보 조회시스템 구축 추진 미흡	2010.12.21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조치 완료
10	통보	대부업 감독 업무 조정 및 기관 간 협조 미흡	2010.12.21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11	통보	상호금융회사의 휴면 예적금 등 활용방안 미수립	2010.12.21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12	통보	비과세 예탁금 한도 상향 등에 따른 수신 증가분 활용 방안 미흡	2010.12.21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조치 완료
13	통보	상호저축은행 계정 적자 해소를 위한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대책 미흡	2010.12.21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14	통보	상호저축은행의 여신감독규정 운영 및 지도·감독 부적정	2010.12.21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15	통보	상호저축은행의 대형화·개업화에 따른 차등 감독기준 미정비	2010.12.21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조치 완료
16	통보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견제를 위한 내·외부 시스템 운용 부적정	2010.12.21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17	통보	부실한 상호저축은행의 제3자 인수 추진 부적정	2010.12.21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18	통보	상호저축은행 경영건전성에 대한 검사·감독 불철저	2010.12.21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19	통보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확대 제도 운영 부적정	2010.12.21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20	통보	대출제한 부족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 지원사업 차질 우려	2010.12.21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조치 완료
21	통보	금융기관 휴면예금의 출연 관리 및 자금 운용 부적정	2010.12.21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22	권고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기준 불합리	2010.12.21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조치 완료
23	통보	○ ○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처리 태만	2011.03.14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조치 완료
24	주요	재래시장 소재 신용카드 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인하정책 추진 부적정	2010.12.21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
25	주요	미소금융 사업 지원 대상 선정 부적정	2010.12.21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

26	주요	상호저축은행 경영건전성에 대한 검사·감독 불철저	2010.12.21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
27	주요	금융감독원의 내부업자 검사업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 부적정	2010.12.21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
28	주요	사금융 피해 관련 민원·신고사항 처리 및 지도·감독 부적정	2010.12.21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
29	통보	한국산업은행 민영화 및 한국정책금융공사 정제성 관련 대책 마련 미흡	2011.06.08	정책금융제도 개편 및 운영실태	조치완료
30	통보	한국산업은행 등 산은금융지주 자회사에 대한 배당정책 수립 미흡	2011.06.08	정책금융제도 개편 및 운영실태	조치완료
31	통보	정부 미보충 단기 외화채무의 관리대책 미흡	2011.06.08	정책금융제도 개편 및 운영실태	조치완료
32	통보	한국산업은행 주요 재무지표 개선노력 미흡	2011.06.08	정책금융제도 개편 및 운영실태	조치완료
33	통보	한국산업은행 민영화 세부 추진방안 미비	2011.06.08	정책금융제도 개편 및 운영실태	조치완료
34	통보	정책금융 영역인 기업대출 업무 미취급	2011.06.08	정책금융제도 개편 및 운영실태	조치완료
35	통보	해외자원 개발사업 검토절차 부적정	2011.06.08	정책금융제도 개편 및 운영실태	조치완료
36	통보	한국정책금융공사 간접대출(On-lending) 실제 부적정	2011.06.08	정책금융제도 개편 및 운영실태	조치완료
37	통보	금호생명 인수 업무 부당 처리	2011.10.10	정책금융제도 개편 및 운영실태	조치완료
38	주요	정책성 자산인 벤처·중소기업 주식 미이관	2011.06.08	정책금융제도 개편 및 운영실태	-
39	주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2011.06.08	정책금융제도 개편 및 운영실태	-
40	주요	매각심사소위 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충분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 공자위에 전달하고, 공자위 위원 해촉 등 출석관리 업무를 철저하 할 것	2011.07.15	대한생명 매각 관련 공적자금 운용실태	-
41	주요	녹색금융특화 MBA 예산 집행 부적정	2011.04.29	2010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검사 등 결산감사	-
42	주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과다 출연	2011.04.29	2010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검사 등 결산감사	-
43	주요	2010회계연도 성과계획 수립 및 성과실적 보고 부적정	2011.04.29	2010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검사 등 결산감사	-
44	통보	B2B대출 등 상거래대출 실행 총액에 대한 국내은행 간 통합 관리. 공유 시스템 부재	2011.12.02	어음대출결제수단 이용비율 등 운영실태	-
45	통보	금융상품 관련 악관 심사에 대한 지도·감독 등 부적정	2012.02.13	금융 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 실태	-
46	통보	법령에 근거 없이 행정관한을 부당하게 위탁	2012.02.13	금융 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 실태	-
47	통보	금융기관 건전성 확보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 수단인 제재권 분담체계 등 불합리	2012.02.13	금융 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 실태	-
48	통보	전자금융거래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금융당국의 감독. 검사 부적정	2012.02.13	금융 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 실태	조치완료
49	통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불철저	2012.02.13	금융 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 실태	-
50	통보	투자자 위탁금 관리 및 이용료 지급 불합리	2012.02.13	금융 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 실태	-
51	통보	증권투자자 부담 위탁수수료 인하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2012.02.13	금융 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 실태	-
52	통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미흡	2012.02.13	금융 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 실태	-
53	통보	소액공모제도 편법 운용 방지로 투자자 피해 발생	2012.02.13	금융 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 실태	조치완료
54	통보	신용카드사의 일방적인 부가서비스 변경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2012.02.13	금융 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 실태	-
55	통보	신용카드 발급 시 개인정보제공 동의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2012.02.13	금융 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 실태	-
56	통보	외국법 제위반에 따른 공인회계사 제재 부적정	2012.02.13	금융 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 실태	조치완료
57	통보	금융기관들의 협회비 분담 등으로 금융소비자들에게 부담 증가	2012.02.13	금융 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 실태	-
58	주요	금융상품 관련 악관 심사에 대한 지도·감독 등 부적정	2012.02.13	금융 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 실태	-
59	주요	민원. 제도개선협의회 등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 운영 부적정	2012.02.13	금융 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 실태	-

60	주요	법령에 근거 없이 행정권한을 부당하게 위탁	2012.02.13	금융 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 실태	-
61	주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불철저	2012.02.13	금융 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 실태	-
62	주요	**저축은행 영업정지 결정 지연 등 업무 불철저	2012.02.13	금융 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 실태	-
63	주요	펀드 위탁금 관리 지도.감독 불철저	2012.02.13	금융 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 실태	-
64	주요	자문형 랩어카운트 상품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2012.02.13	금융 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 실태	-
65	통보	주식워런트증권(ELW) 제도 운영 부적정	2012.02.24	증권시장 운영 및 감독 실태	조치 완료
66	통보	금융투자업자의 예탁증권 관리 부적정	2012.02.24	증권시장 운영 및 감독 실태	-
67	통보	조건부매도증권 의무예탁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2012.02.24	증권시장 운영 및 감독 실태	-
68	주요	한국거래소 등에 대한 수수료 인하 지도.감독 부적정	2012.02.24	증권시장 운영 및 감독 실태	-
69	주요	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	2012.04.17	금융위원회 재무감사	-
70	주요	성과계획 수립 및 성과실적보고 부적정	2012.04.18	금융위원회 재무감사	-
71	통보	영조지주도증권 미담양증권간 상호 증권 내인 지도.감독 불철저	2012.07.10	금융위원회 감독 실태	-
72	통보	상호저축은행의 다른 회사의 경영권 확보 등에 대한 금지 규정 마련 미흡	2012.07.10	금융위원회 감독 실태	-
73	통보	상호저축은행과 다른 금융회사 대주주 간 교차대출 금지에 대한 감독 미흡	2012.07.10	금융위원회 감독 실태	-
74	통보	출자한 상호저축은행 등의 주식매입을 위한 신용공여 금지 규정 마련 미흡	2012.07.10	금융위원회 감독 실태	-
75	통보	공영(간강).유사보험 관련 보험사기 대응체계 구축에 기여	2012.07.10	금융위원회 감독 실태	-
76	통보	금융감독기관 간 정보공유 등 부적정	2012.07.10	금융위원회 감독 실태	-
77	통보	금융감독기관 상호 간 금융에 대한 지도.감독 부각	2012.07.10	금융위원회 감독 실태	-
78	통보	연체상환 등 신용정보 변동사항 보고지연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2012.07.10	금융위원회 감독 실태	-
79	통보	대출성 카드자산에 대한 위험관리 지도.감독 부적정	2012.07.10	금융위원회 감독 실태	-
80	통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결정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2012.07.10	금융위원회 감독 실태	-
81	통보	협업인가 심사기준 부적정	2012.07.10	금융위원회 감독 실태	-
82	통보	변액보험 특별계정 보수 관련 공시기준 미비	2012.07.10	금융위원회 감독 실태	-
83	통보	변액보험 특별계정 보수 관련 공시기준 미비	2012.07.10	금융위원회 감독 실태	-
84	통보	자동차보험금 부당지급 통제를 위한 시스템구축 등 미비	2012.07.10	금융위원회 감독 실태	-
85	통보	유상증자 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면제규정 불합리	2012.07.10	금융위원회 감독 실태	-
86	통보	단기매매자의 반환제도 실효성 확보 부적정	2012.07.10	금융위원회 감독 실태	-
87	통보	금융기관 사외이사 결격요건 규정 불합리	2012.07.10	금융위원회 감독 실태	-
88	주요	특**상호저축은행의 솔로몬 PEF에 대한 출자승인 업무 불철저	2012.07.10	금융위원회 감독 실태	-
89	주요	**저축은행의 대전저축은행 인수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2012.07.10	금융위원회 감독 실태	-
90	주요	재무상태개선조치 미이행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2012.07.10	금융위원회 감독 실태	-

(2011. 6. 15. 현재)

[기관명 : 금오아원회]

입력 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집행상황 및 집행계획	완결여부
	2010.12.21	통보	□ 제목 : 개별취주 신용공여 한도 확대 제도 운영 부적정 - 조치할 사항 ① 개별취주 신용공여 확대 관련 자격 요건 강화 ② PF 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 편중 방지	□ 우량저축은행 여신한도 확대조치 폐지 추진 ("11.3/4분기내 시행령 개정 예정) ②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 한도 규제 근거 마련 및 한도 규제 강화("10.9월 관련 규정 시행) * i) PF대출비중 한도 : 30%('11.6월까지) → 20%('13.7월 이후) ii) 부동산PF대출 + 건설업 + 부동산임 및 임대업 관련 대출 비중 한도 : 50%	추진중 완료


작성일자 : 중소기업융합 신장수 사무관(2156-9853)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2012. 8. 14. 현재)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 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집행계획	완료여부
17	2010.12.21	통보	<p>○ 제목: 금융감독원 직권검사 범위 설정 불합리</p> <p>- 조치할 사항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용자 수 또는 대부잔액 등이 많거나 불법적인 고금리 수취 또는 채권추심행위 등이 빈번하여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대부업자를 금융감독원에서 검사하도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p>	<p>□ 금융감독원 직권검사 범위 확대를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11.11월)</p> <p>○ 직권검사 대상에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법인인 대부업자등의 대부거래자 수가 1천명 이상이고 대부금액의 잔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신설</p>	완료

확인자(대결) : 서민금융과 김태훈 사무관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2012. 2. 14 현재)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 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현 집행상황 및 집행계획	완결여부
6	2012. 02. 13	통보	<p>○ 제목 : 금융기관 건전성 확보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 수단이 제재권 분담체계 등 불합리</p> <p>- 조치할 사항 :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제재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을 확충하도록 하는 등 금융감독원이 제재를 주도적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통보)</p>	<p>□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11. 12. 28) 완료</p> <p>○ 현행 3인의 내부위원을 1인으로 축소하고, 4인의 외부 민간위원을 6인으로 확대하여, 제재심의위원회의 공정성 강화</p>	추진완료

작성자 : 금융제도팀 박정원 사무관 (2156-9683)

확인자 : 금융제도팀 손주형 팀장 (2156-9680)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2012. 2. 14 현재)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 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현 집행상황 및 집행계획	완결여부
6	2012. 02. 13	통보	<p>○ 제목 : 금융기관 진전성 확보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 수단이 제재권 분담체계 등 불합리</p> <p>- 조치할 사항 : 금융기관·임직원에 대한 제재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제재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 마련(통보)</p>	<p>□ 제재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재양정기준의 보완방안에 대한 금감원 외부 연구용역 추진 ('12년 중)</p> <p>○ 외부용역 결과 등을 감안, 제재양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검사및제재규정 시행세칙 개정 추진 ('13년 중)</p>	추진중

작성자 : 금융제도팀 박정원 사무관(2156-9683)

확인자 : 금융제도팀 손주형 팀장(2156-9680)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2011. 3. 31. 현재)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 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집행계획	완결여부
2	2010.12.17.	통보	<p>○ 제목: 금융기관 휴면예금의 출연 관리 및 자금 운용 부적정</p> <p>- 조치할 사항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 기관 휴면예금 출연 규모의 적정성과 적기 출연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법 인명의 계좌와 공동명의 계좌 등의 휴면에 금도 미소금융사업 재원으로 출연받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p>	<p>□ 미소금융중앙재단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휴면예금의 출연 관리 및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도모</p> <p>○ 아울러, 미소금융중앙재단과 공동으로 출연 금융기관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p>	추진중

작성자 : 서민금융팀 안현찬 사무관(2156-9472)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2012. 4. 12. 현재)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 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집행계획	완료여부
	2012.2.13	통보	<p>○ 제목: 금융기관들의 협회비 분담 등으로 금융소비자들에게 부담 전가</p> <p>- 금융관련 협회들의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필요시 체재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p> <p>* 특히 은행연합회에는 개인연금지원금이 협회 회원사에 비해 파다함을 지적</p>	<p>○ 감사원 지적사항 등 연합회 운영 개선방안 관련 하여 연합회와 협의(2.21)</p> <p>○ 은행연합회에 경영효율화 등 연합회 운영 개선 방안 마련 요구 공문발송(2012.3.19)</p> <p>○ 은행연합회 경영효율화 등 연합회 운영 개선방안(초안)* 마련</p> <p>* 등 개선안에는 개인연금지원금 축소방안이 포함</p> <p>○ 연합회 운영 개선방안(초안)에 대한 검토 및 협의 2회(3.30(금), 4.6(금))</p> <p>⇒ 은행연합회 경영효율화 등 개선방안 확정 후 계획대로 실행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감독할 계획</p> <p>○ 기타 연합회의 업무가 공익에 반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시정명령을 조치할 계획(금융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p>	진행중

작성자 : 은행과 고영호 사무관(2156-9812)

확인자 : 은행과 배준수 과장(인) (2156-9810)

배준수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 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현 집행상황 및 집행계획	완결여부
		통보	<p>○ 제목 : 금융기관들의 협회비 분담 등으로 금융소비자들에게 -부담 전가</p> <p>- 조치할 사항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기관들이 필요 이상의 분담금 등을 납부하여 금융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전국 은행연합회 등 금융 관련 협회들의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필요시 제재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p>	<p>□ 금융소비자에 대한 부담 전가를 완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금감원과 협의하여 금투협회의 회비시스템 개선방안 마련을 협회에 통보할 예정</p> <p>* 협회는 회비시스템개선방안 계획에 대해 회원사의 의견수렴과 연구용역 검토를 통해 제출예정</p> <p>- 또한, 금투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위해 금감원의 검사추기를 단속하는 등의 방안도 금감원과 협의</p>	추진중

작성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인) (2156-9876)

확인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인) (2156-9876)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 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현 집행상황 및 집행계획	완결여부
		통보	<p>○ 제목 : 금융상품 관련 약관 심사에 대한 지도·감독 등 부적정</p> <p>- 조치할 사항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요청된 불공정 약관을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불공정한 약관들을 게재하는 등의 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p>	<p>□ 금융소비자들이 불공정한 약관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공시를 강화하여 투자자보호를 제고</p> <p>- 다만, ① 금융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활용도가 높다는 점과, ② 약관의 신고 및 심사업무가 위임된 점 등 행정일관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예정</p> <p>* 현재 금융투자회사의 법령상 공시사항(위탁매수료, 투자자에탁금이용료 등) 및 주요 통계, 표준약관 등이 금투협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되고 있음</p> <p>- 협회의 시스템이 정비되는대로 공시 예정(12.6월)</p>	추진중

작성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인) (21566876) 21566876
 확인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인) (21566876) 21566876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 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현 집행상황 및 집행계획	완료여부
		통보	<p>○ 제목 : 금융투자업자의 예방 증권 관리 부적정</p> <p>- 조치할 사항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①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 예방증권을 임의로 자사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감독원을 통한 검사 및 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p> <p>② 투자자 예방증권을 무단로 사용한 주식회사 △중권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등에 따라 적정한 체제조치 방안을 마련하지기 바람 니다.</p>	<p><input type="checkbox"/>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과 투자자가 예방한 투자자 재산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p> <p>- 향후 본 건과 같이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의 예방 증권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금융 감독원 정기·검사 시 종점적으로 감사기록 요구 할 예정</p> <p><input type="checkbox"/> 금번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거쳐 제재 대상·수위 등을 검토한 후 조치할 예정</p>	추진중

작성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9875)

확인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9870)

일련 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조치결과	완결여부
1	2011. 10. 12	통보	<p><input type="checkbox"/> 제목: 금호생명 인수 업무 부당 처리</p> <p>○ 조치할 사항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산업은행장 민유성을 보좌하여 기업 인수업무와 같은 중요한 의사 결정 시 사외이사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이사회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하게 하고, 정확한 재무실사 없이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기업 인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한국산업은행 수석 부행장 김영기의 비위행위는 공공기관의 등기임원으로서 당연히 준수하여야 할 성실 경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 고 판단되어 그 비위내용을 통보하니 이를 인시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p>	<p><input type="checkbox"/> 산업은행 및 산은금융지주(주)가 통 내용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는 등 적의조치 하도록 지도(11.12.7일 공문발송)</p>	완료

담당자 :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선욱 사무관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일련 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현 집행상황 및 집행계획	완결여부
1	2012. 2.13	통보	<p>제목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불철저</p> <p>○ 조치할 사항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 등과 같이 안정적인 농업 외 소득이 있는 자에게 저축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부당 가입자 또는 부당 수급자로 확인된 경우 부당하게 지원된 저축장려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환수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p>	<p>□ 부당가입자의 저축장려금 지급 제한</p> <p>① 시행령(§2)개정을 통해 농업의 소득이 있는 자는 가입이 불가하도록 가입요건 강화 추진</p> <p>- (기존) 일정토지 이하를 소유한 농민 → (개선) 다른업종을 겸영함으로써 일정 소득수준을 초과한자는 제외</p> <p>② 농수협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부당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p> <p>- 업무방범서 가입요건 준수여부에 대해, 농수협 중앙회를 통해 단위조합 점검 실시(12년중)하고, 이후 금감원의 단위 농수협 무작위 검사 추진</p> <p>- 법률개정후 금감원·중앙회 일제 점검 추진</p>	추진중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대부업)

(2011. 2.18. 현재)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 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집행계획	완결여부
13	2010.12.21	통보	<p>○ 제목: 대부업 감독 업무 조정 및 기관 간 협조 미흡</p> <p>- 조치할 사항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대부업 실태조사, 검사·감독 및 제재 등에 대한 세부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고 대부업 관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과 아울러 대부업정책협의회의 업무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p>	<p>① 지자체의 통일적 업무수행을 위해 대부업정책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대부업 관리·감독지침」을 작성하여 배포(09.10)</p> <p>○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대부업 관리감독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겠음</p> <p>* 대부업 실태조사 기준, 검사 및 감독 매뉴얼 등 포함</p> <p>② 기타 감사원 지적사항을 대부업정책협의회의에 서 논의하여 업무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음</p>	추진중

작성자 : 중소기업과 이동욱 사무관(2156-9475)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2011. 2.18. 현재)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 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집행계획	완결여부
18	2010.12.21	통보	<p>○ 제목: 대부업 동일 상호 중복 등록에 대한 제 한 제도 미비</p> <p>- 조치할 사항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대부이용 자가 전국적으로 영업하는 대부업자의 상호가 중복 등록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p>	□ '10.6.18일부터 개시된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 회서비스」를 통해 업체명 조회시 중복상호 조회 가능 (완료)	완결

작성자 : 중소기업정책 이동욱 사무관 (2156-9475)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대부업)

(2011. 2.18. 현재)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 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집행계획	완결여부
14	2010.12.21	통보	<p>○ 제목: 대부업 등록정보 조회시스템 구축 추진 미흡</p> <p>- 조치할 사항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대부업 정책에 관한 관계 부처 간의 이견을 적극적 으로 조정하여 정책집행 기능을 강화하고, '대부업 등록정보 조회시스템' 및 정보공유시 스템을 신속히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p>	□ '10.6.18일부터 금융위원회 서버에 대부업 DB를 구축하여,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19' 및 한국대 부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 개시	완결

작성자 : 중소기업과 이동욱 사무관(2156-9475)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대부업)

(2011. 2.18. 현재)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 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집행계획	완결여부
15	2010.12.21	통보	<p>○ 제목: 대부업 실태조사 및 조사 결과 분석 보고서 부적정</p> <p>- 조치할 사항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대부업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사금융예외종합센터' 등에서 확보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이자율 현황 자료를 활용하는 등 종합적인 실태조사의 통계결과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조사 방법과 조사범위를 개선하여 실태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서민 등 대부업 이용자의 실태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p>	<p>① 실태조사 범위개선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여신형태별(소비자/사업자, 신용/담보) 대출현황도 함께 분석하겠음 (11년 상반기부터)</p> <p>② 매년 금감원과 대부협회 공동으로 실시하는 사용자 설문조사 결과도 정책수립시 보완적으로 활용</p> <p>○ 다만, 불법 사금융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정확한 집계가 곤란하여 공식통계로 사용은 부적절</p>	추진중

작성자 : 중소기업정책과 이종욱 사무관(2156-9475)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2011. 2.18. 현재)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 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집행계획	완결여부
16	2010.12.21	통보	<p>○ 제목: 대부업자 관리·감독권 분담 불합리</p> <p>- 조치할 사항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대부업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서 일정규모 이상 대형 대부업자의 관리·감독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수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p>	<p>□ 대부업 감독시스템 개편 검토</p> <p>○ 이관시 소요되는 인력과 조직에 대한 영향 분석을 거쳐 장기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한 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음</p> <p>* 대부업 감독권 개편 관련 법률개정안(이진복, 권택기 의원)이 국회 계류중</p>	추진중

작성자 : 중소기업과 이동욱 사무관(2156-9475)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2011. 3. 31. 현재)

[기관명 : 금융위원회]

2010.12.17.	통보	<p>○ 제목: 대출제한 부족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소액 금융 지원 사업 차질 우려</p> <p>- 조치할 사항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지원 사업이 위축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휴면예금관리채단으로부터의 지원금 확대 등 사업의 안정적 재원확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p>	<p><input type="checkbox"/> 신용회복기금에서도 신용회복지원자 소액대출 시행('10.6월)</p> <p>* 신복위 신용회복지원자도 신복기금에 소액대출 신청시 지원 가능</p> <p><input type="checkbox"/> '10년중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신복위에 소액 금융 재원으로 132억원 무이자 대여</p> <p>* (5월) 87억, (10월) 30억, (12월) 15억</p> <p><input type="checkbox"/> 신용회복기금이 신복위에 소액금융 재원 200억원 무이자 대여('10.10월)</p> <p><input type="checkbox"/> 신복위 소액금융 재원 마련을 위한 "새출발 마중물기금" 모금 후원행사 개최('10.11월)</p> <p>* 6개 금융협회·중앙회 주관, 금융위원회 후원</p> <p><input type="checkbox"/> 신복위 재원 소진시 신용회복기금에서 직접 소액대출 지원 예정</p>	원료
-------------	----	--	--	----

작성자 : 서민금융팀 안한찬사무관(2156-9472)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2011.3.31일 현재)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 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현 집행상황 및 집행계획	완결여부
		주의·통보	<p>○ 제목 : 법령에 근거 없이 행정 권한을 부당하게 위탁</p> <p>조치할 사항 : ① 법령에 명시적 근거 없이 금융감독원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 32개 소관업무의 법령상 위탁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통보)</p> <p>② 앞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사무를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 없이 금융감독원에 부당하게 위탁하여 처리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p>	<p><input type="checkbox"/>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기준 결정 등 10개 업무의 법령상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고,</p> <p>○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예비인허가 심사 등 22개 업무에 대하여는 현재 법령 개정을 준비 중임</p> <p>- 법률 개정 사항은 향후 법률 개정시 위탁근거를 마련 (자회사 간 신용공여 관련 적정담보 부족 발생 시 추가 담보 확보 유예기간 연장 등 4개 과제)</p>	추진 중

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박경덕 사무관(내선 2156-9623)

확인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 인 파 장(인) (2156-9620)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2011. 6. 15. 현재)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 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집행상황 및 집행계획	완결여부
6	2010.12.21	통보	<p><input type="checkbox"/> 제목 : 부실한 상호저축은행의 제3자 인수 추진 부적정</p> <p>- 조치할 사항</p> <p>① 부실저축은행의 제3자 인수 승인시 정확한 부실규모 파악, 경영정상화 계획에 대한 철저한 심사 및 부실책임 대주주·경영진에 대한 책임 추궁을 강화</p> <p>② BIS 비율 미달인 대전저축은행에 대해 적기 시정조치를 검토하고 전주·토마토2·미래2·수위스삼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검사 실시</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부실책임 대주주·경영진에 대한 책임 추궁 강화 방안 검토 중(일부 기 시행)</p> <p>○ 대주주 직접검사 제도 도입 및 대주주 불법 대출시 해당 대주주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준 강화('11.3/4분기내 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p> <p>○ 경영관여 대주주의 등기임원화 유도('11.3/4 분기내 감독규정 개정 예정)</p> <p>○ 부실저축은행 영업정지 즉시 부실책임 규명 추가 검사(금감원) 및 조사(예보) 착수(시행중)</p> <p>○ 향후 부실저축은행 제3자 인수 승인시 정확한 부실규모 파악 및 경영정상화 계획에 대한 철저한 심사 조치 실시 예정</p> <p>○ 부실저축은행의 제3자 인수과정에서 금산 법상의 적시정조치 유예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개선방안 검토(총리실 금융감독 혁신 TF, '11.6월말 방안 마련 예정)</p>	추진중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2011. 6. 15. 현재)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 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집행상황 및 집행계획	완결여부
				<p>② 대전저축은행의 경우 금감원 검사 실시 및 이후 경영개선명령 절차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주주(부산·부산2저축은행)의 941억원 출자로 BIS비율이 개선되어 경영개선요구 조치("10.12.15) ○ 전주 등 4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10년중 既 검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 : 부문검사("10.6.14~6.25) - 토마토2 : 부문검사("10.3.16~3.31) - 미래2 : 부문검사("10.9.1~9.14) - 현대스위스3 : 부문검사("10.5.26~6.9) 	완료

작성자 : 중소기업정책과 신장수 사무관(2156-9853)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2011. 6. 15. 현재)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 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집행계획	완결여부
11	2010.12.21	통보	<p>○ 제목 : 비파세 예탁금 한도 상향 등에 따른 수신 증가분 활용 방안 미흡</p> <p>- 상호금융회사 비파세 예탁금의 일정 비율을 보증 대출 채원으로 활용하는 등 증가된 수신을 서민 대출로 연결시키는 방안 강구</p> <p>- 증가된 수신을 유가증권에 과도하게 투자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강구</p>	<p>□ 보증부 서민대출 “햇살론” 시행(7.26)</p> <p>○ 상호금융회사의 서민금융공급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호금융회사 출연 재원을 바탕으로 보증부 서민대출 “햇살론” 시행</p>	완결
			<p>□ 실험 여유자금 운용 관련 모범규준(10.2월) 시행</p> <p>○ 증가된 수신을 유가증권에 과도하게 투자하지 않도록 모범규준 마련·시행</p>		

작성자 : 중소기업과 장석인 사무관(2156-9856)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2011. 6. 15. 현재)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 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집행계획	완결여부
12	2010.12.21	통보	<p>○ 제목 : 상호금융회사의 휴면 예·적금 등 활용 방안 미수립</p> <p>- 상호금융회사가 보유 중인 휴면 예·적금을 휴면에금관리제단에 출원하거나 서민대출 보증 제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서민금융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p>	<p>상호금융회사의 서민금융공급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증부 서민대출 “햇살론” 시행(7.26)</p> <p>○ 다만, 신협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휴면 예·적금에 대해 원권리자가 지급청구권을 주장할 경우 보증재단원의 안정적 관리가 어렵게 되므로 휴면 예·적금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보증재단원으로 소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p> <p>② 현재도 「휴면에금관리제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농협·수협·새마을금고·신협을 동범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상호금융회사의 휴면 예·적금 출연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p> <p>○ 다만, 필요시 상호금융회사의 휴면 예·적금 출연 권유</p>	추진중


작성자 : 중소기업과 장석인 사무관(2156-9856)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2011. 3. 31. 현재)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 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집행계획	완결여부
		통보	<p>○ 제목: 상호저축은행 계정 적자 해소를 위한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대책 미흡</p> <p>- 조치할 사항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상호 저축은행의 예금자보호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기금의 상호저축은행 계정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시 기 바랍니다.</p>	<p>□ 상호저축은행 계정 적자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개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 완료(4.1일 시행)</p> <p>○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따라 '11.1월부터 발생 하는 저축은행 계정적자를 특별계정으로 이 관하여 전 금융권이 분담하여 해소(특별개정 은 '26년까지 운영)</p> <p>* 각 업권의 예보료 45% 및 저축은행 예보료 전액을 특별계정에 납입</p> <p>□ 예금자보호한도 조정 여부는 구조조정 완료 이후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신중하게 검토</p>	추진중

작성자 : 금융소비자과 김정명 사무관(2156-9772) 

확인자 : 금융소비자과 김홍식 과 장(2156-9770)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2011. 6. 15. 현재)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 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집행상황 및 집행계획	완결여부
	2010.12.21	통보	<p>□ 제목 : 상호저축은행 경영건진성에 대한 감사·감독 불철저</p> <p>- 조치할 사항</p> <p>① 부동산 PF대출 부실 해소</p> <p>② 감사결과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확인된 서울·창원·신라·부산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 및 여타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건진성 확인 및 증자 등 적정 조치</p>	<p>□ 부실(우려) PF대출 3.7조원(원금기준)의 구조조정기금 매각 및 MOU체결 등을 통한 증자 등 자구노력 유도("10.6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관련 대출 한도 규제 강화("10.9월), ○ PF대출 자산건전성 분류시 사업성 평가 반영 조치("10.9월) ○ PF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마련("10.10월) ○ PF대출 상시감시시스템 구축("11.1월 가동) <p>* 저축은행측에서 PF사업장의 토지매입률, 공사진행률 등을 월단위로 입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축은행 PF사업장 실태 점검을 토대로 구조조정기금 및 채권 고유제정을 통해 부실(우려) PF대출 추가 매입 추진("11.6말 예정) <p>□ 서울 등 4개 저축은행에 대한 점사 실시 및 적기시정조치 절차 진행 등을 통해 대주주 증자 또는 외부투자자 유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타 저축은행의 경우 정기적인 스트레스 테스트 점사 등을 통해 부실우려시 대주주 증자 등 자구노력 유도 	추진중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2011. 6. 15. 현재)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 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집행상황 및 집행계획	완결여부
7	2010.12.21	통보	<p><input type="checkbox"/> 제목 :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견제를 위한 내·외부 시스템 운용 부재정 - 조치할 사항</p> <p>① 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 기능 강화</p> <p>② 감사의 독립성 확보 등 내부감시기능 제고</p>	<p><input type="checkbox"/> 저축은행 검사인력 30명(외부전문인력 20명 포함) 기 증원('10.9월)</p> <p>○ 우수한 검사인력 보강 및 검사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금감원 검사 역량 지속 강화</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감사 역할 및 독립성 강화 방안 검토 중</p> <p>○ 총리실 주관 "금융감독 혁신TF"에서 감사 제도 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개선 방안 논의 중</p> <p>○ 감사활동 보고서 제출 의무화 ('11.3/4분기내 법 개정안 국회 제출)</p> <p>○ 부실감사 등에 대한 제재 수준 강화('11.3/4분기내 금감원 제재양정기준 개정)</p> <p>○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를 위한 저축은행 내부 고발지침 마련 유도('11.3/4분기) 및 실태 점검 ('11.3/4분기 이후)</p>	완료

작성자 : 중소금융과 신장수 사무관(2156-9853)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2011. 6. 15. 현재)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 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집행상황 및 집행계획	완결여부
8	2010.12.21	통보	<p><input type="checkbox"/> 제목 : 상호저축은행의 대행화·계열화에 따른 차등감독기준 미정비</p> <p>- 조치할 사항</p> <p>○ 저축은행간 규모외 격차, 대형·계열화에 따른 리스크 증가 등을 반영한 차등 감독 기준 마련</p>	<p><input type="checkbox"/> 대형·계열화에 따른 리스크 방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 기 조치</p> <p>○ 대형·계열저축은행에 대한 매년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실시(중소형은 격년) 및 매년 금감원 심사 실시(중소형은 격년)</p> <p>○ 계열저축은행에 대한 계열단위 여신한도 적용 ('10.9월)</p> <p><input type="checkbox"/> 계열단위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 등 추가 차등감독 기준 검토 중('11.3/4분기내 법 개정안 국회 제출)</p>	완료

작성자 : 중소기업정책과 신장수 사무관(2156-9853)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2011. 6. 15. 현재)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 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집행상황 및 집행계획	완결여부
9	2010.12.21	통보	<p><input type="checkbox"/> 제목 : 상호저축은행의 여신감독규정 운영 및 지도·감독 부적정</p> <p>- 조치할 사항</p> <p>○ 저축은행의 부실 여신을 방지하기 위해 여신 심사조치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여신담당자의 부실 심사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p>	<p><input type="checkbox"/> 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기능 강화 방안 검토 중 ('11. 3/4분기내 감독규정 개정 예정)</p> <p>○ 일정 규모 이상의 저축은행의 경우 독립적인 여신심사위원회 설치</p> <p>○ 여신심사 및 여신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체 감리 의무화 등</p>	추진중

작성자 : 중소기업정책 연구관(2156-9853)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 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현 집행상황 및 집행계획	완결여부
		통보	<p>○ 제목 : 소액공모제도 편법 운용 방치로 투자자 피해 발생</p> <p>- 조치할 사항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① 경영부실로 퇴출위기에 처한 상장기업이 '소액공모제도'를 악용하는 점을 차단하기 위하여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유기증권의 모집·매출을 개시하기 일정 기간 이전에 제출하도록 하고, 부실기업의 편법 소액공모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 및 담당 이사 등이 공시서류에 서명날인을 하도록 하는 등 소액공모 공시서류의 작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p> <p>② 소액공모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손실 방지 및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부실한 상장기업(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소액공모제도'의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p>	<p>□ 한계기업의 소액공모 제도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중('12.6.26 국무회의 통과, '12.6.29 시행)</p> <p>○ 투자자가 투자여부를 충분히 숙려할 수 있도록 소액공모서류 공시기간 연장(\$137㉠)</p> <p>* (현행) 공모개시전 지체 없이 → (개선) 공모개시 3일전까지 서류제출</p> <p>○ 소액공모한도(10억원 미만) 선정방법 개선을 통해 한도를 축소(\$120㉠)</p> <p>* (현행) 증권 종류별(보통주·우선주·채무증권 등) 10억원 산정 → (개선) 증권 종류에 관계없이 발행 금액을 합산 등</p> <p>○ 투자자의 청약증거금 관리업무(수납·보관·환급)를 발행기업이 아닌 금융회사(은행, 증권사, 증권금융)가 수행하도록 의무화(\$137㉠)</p>	조치완료

			<p>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p> <p>③ 소액공모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액공모의 한도를 산정할 때에 증권 종류와 상관없이 연간 최대 10억 원 내에서만 소액공모가 가능하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를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p>	<p><input type="checkbox"/> 다만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 등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방안 및 한계기업의 소액공모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원활화를 막을 수 있는 등 중소기업의 반발이 예상되는 바,</p> <p>○ 소액공모 한도 축소 등을 우선 시행하고,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대응 필요시 도입 추진</p>	
--	--	--	---	---	--

작성자 : 공정시장과 전희규 사무관(2156-9912)


확인자 : 공정시장과 김홍식 과 장(2156-9910)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여전전문금융업)

(2011. 4.12. 현재)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 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집행계획	완결여부
			<input type="checkbox"/> 제목 : 신용카드 발급 시 개인정보제공 동의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조치할 사항 <input type="checkbox"/> 선택적 사항의 경우 신용정보 제공을 동의 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원이 신청한 신용 카드 발급	<input type="checkbox"/> 선택적 사항에 대한 신용정보제공 등의 거부시에도 신청한 신용카드가 발급될 수 있도록 개선(12년 내)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상 개인신용정보 조취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변경 - 필수적 정보와 선택적 정보의 제공동의를 명확하게 구분 <input type="checkbox"/> 금감원으로 하여금 회원이 선택적 신용 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신청한 카드를 발급하도록 지도	진행중

작성자 : 중소금융과 김정주 사무관 (2156-9854) 

확인자 : 중소금융과 권대영 과 장 (2156-9850)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여전전문금융업)

(2011. 4.12. 현재)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 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집행계획	완결여부
		통보	<p><input type="checkbox"/> 제목 : 신용카드 발급 시 개인정보제공 동의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p> <p><input type="checkbox"/> 조치할 사항</p> <p>○ 선택적 사항의 경우 신용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원이 신청한 신용 카드 발급</p>	<p><input type="checkbox"/> 선택적 사항에 대한 신용정보제공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한 신용카드가 발급될 수 있도록 개선(12년 내)</p> <p>○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상 개인신용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변경</p> <p>- 필수적 정보와 선택적 정보의 제공동의를 명확하게 구분</p> <p>○ 금감원으로 하여금 회원이 선택적 신용 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신청한 카드를 발급하도록 지도</p>	진행중

작성자 : 중소기업과 김정주 사무관 (2156-9854) (인)

확인자 : 중소기업과 권대영 과 장 (2156-9850) (인)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2011.4.6 현재)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 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현 집행상황 및 집행계획	완결여부
12	2011.3.14	통보	<p><input type="checkbox"/> 제목: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겸 사·감독 업무 처리 태만</p> <p>-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OO상호저축은행의 부당행위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처리를 태만히 한 예금보험공사 이사 OO 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p>	<p><input type="checkbox"/> 감사원의 처분결과를 예금보험공사로 통지 (2011.3.15)</p> <p><input type="checkbox"/> 예금보험공사에서는 OO이사에 대하여 시장 명의로 주의촉구 완료</p> <p>○ 주의장 발부 및 수령 확인(2011.3.31)</p> <p>○ 감사원으로 처분결과 통지(2011.4.6)</p>	완료

(감사담당관실 공영도 사무관 / 2156-9553)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 번호	시행일	치분요구 종류	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현 집행상황 및 집행계획	완결여부
		통보	<p>○ 제목 : 외감법 제위반에 따른 공인 회계사 제재 부적정</p> <p>조치할 사항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한국공인회계사회로 하여금 공인 회계사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은 「공인회계사법」이 아닌 위 법률에 따라 제재 하고, 그 제재 사실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위 법률 제위반에 따른 각종 제재 조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p>	<p><input type="checkbox"/>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및 관련 내규 정비</p> <p>○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위탁된 비상장법인에 대한 감리업무 수행하는 위탁감리위원회는 감사인이 「외감법」을 위반한 경우 이를 조치할 근거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으나,</p> <p>○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2011. 07. 29. 금융위원회 승인) 및 「위탁감리위원회 운영규정」 (2011. 07. 13. 증권선물위원회 승인)을 개정하여, 「외감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근거를 명문화하였음</p> <p>○ 이에 따라 「외감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탁 감리위원회가 외감법령에 따른 제재를 의결하고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각종 제재조치가 일관되게 이루어질 것임</p>	조치완결 (11.7월)
				<p><input type="checkbox"/> 징계이력 조화사이트 구축</p> <p>○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특정 담당자가 공인회계사 및 감사인의 최근 2년간</p>	조치완결 (12.5~7월)

				<p>「외감법」(증권신설위원회, 위탁감리위원회 조처 내역) 및 「공인회계사법」(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 정계위원회 윤리위원회 정계내역) 위반에 따른 정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화사이트 구축("12.5.17)</p> <p>○ 한국공인회계사회 「정계처분의 조회 및 기록발 소에 관한 규정」 개정("12.7.11)</p>
--	--	--	--	---

작성자 : 공정시장과 구의청 사무관(인) (2156-9910) ~~419~~
 확인자 : 공정시장과 김홍식 과 장(인) (2156-9910) ~~2~~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 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현 집행상황 및 집행계획	완결여부
		통보	<p>o 제목 : 전자금융거래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부적정 - 조치할 사항</p> <p>① 주요 금융정보시스템에 대해서 보안 취약점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안대책을 수립· 이행하도록 하고, 기초적인 보안기준의 준수와 내부 보안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외부 위탁관리 범위를 제한</p> <p>② 한편, 금융정보시스템 보안관련 예산을 적정 하게 편성·집행하도록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p>	<p><input type="checkbox"/> 전자금융거래법시행 안전성 확보 및 내부 통제 강화, 외부 위탁관리 제한, IT인력 및 예산 확보 등을 반영한 「전자금융감독 규정」 및 「금융IT 보호업무 모범규준」 개정 완료('11.10월)</p> <p>- 정보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을 매년 실시, 공개용 시스템은 반기마다 점검 실시</p> <p>- 비밀번호 변경 등 전산정보보안대책 수립</p> <p><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가 보안예산을 적정하게 확보 하고 있는지 여부를 금융감독원으로 하 여금 지도·감독하도록 금융감독원에 공문 조치('12.2월)</p>	완료

작성자 : 전자금융팀 이종림 서무팀장 (2156-9491)

확인자 : 전자금융팀 김진홍 팀장 (2156-9490)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2011. 8. 10. 현재)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 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집행계획	완결여부
6	2011. 6. 8.	통보	<p>□ 제목: 정부 미보증 단기 외화채무의 관리대책 미흡</p> <p>○ 조치할 사항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산업은행이 민영화될 경우 정부 및 한국산업은행의 경영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정부 미보증 단기 외화채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p>	<p>□ 산업은행이 미보증 단기 외화채무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도("11.8월 공문발송 계획)</p> <p>○ 민영화시 총격완화를 위해 단기 외화자금 조달 수단 다변화, 민영화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한 해외 마케팅 강화 등의 방안 마련 지도</p>	추진중

작성자 : 산업금융과 사무관 선옥(2156-9751)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2011. 8. 10. 현재)

[관련명 : 금융위원회]

일련 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집행계획	안결여부
3	2011. 6. 8	통보	<p>□ 제목: 정책금융 영역인 기금대출 업무 미취급</p> <p>○ 조치할 사항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정책금융공사로 하여금 한국산업은행이 민영화될 경우, 한국산업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기금대출 업무 중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기금대출업무를 이관 받아 원활히 취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p>	<p>□ 향후 산은 민영화가 가시화될 경우 산은의 기금대출업무를 공사로 이관하도록 지도</p> <p>○ 정책금융공사로 하여금 기금대출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도 (‘11. 4/4분기)</p> <p>* ①KoPC 내부규정 및 제도정비 ② 기금대출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 준비 등</p> <p>※ 다만, 기금대출업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감안하여 신중히 추진해 나갈 계획</p> <p>① 기금 소관 부처와의 협의 필요</p> <p>② 기금대출업무는 수요자 편의성이 중요한 바, 정책금융공사의 지점 설치 및 조직 확대 등을 감안할 필요</p>	추진중

작성자 : 산업금융과 사무관 선옥(2156-9751)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 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현 집행상황 및 집행계획	완료여부
		통보	<p>○ 제목 : 조건부매도증권 의무 예탁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p> <p>- 조치할 사항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대고객 환매조건부매거래를 하면서 의무예탁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증권주식회사 등 9개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0조 등에 따라 적정한 제재조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p>	<p><input type="checkbox"/> 금융위원회는 향후 금융감독원 감사시 대고객 환 매조건부매거래에 따른 투자자 보호에 대한 사 항을 중점적으로 감사·감독하도록 요구할 예정</p> <p><input type="checkbox"/> 또한 금번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된 행위에 대해 서는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거쳐 제재 대상·수위 등을 검토한 후 조치할 예정</p>	추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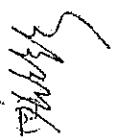
작성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6(제136-98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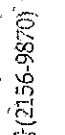
확인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6(제136-9875)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 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현 집행상황 및 집행계획	완결여부
		통보	<p>○ 제목 : ELW 운영 · 관리 부적정 - 조치할 사항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주식위턴트증권(ELW)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과도한 ELW 발행 및 호가 제출을 제한하는 등 유동성공급자(LP)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ELW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유지 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하시기 바랍니다</p>	<p>□ 유동성공급자(LP)의 유동성공급목적 이외의 호가 제출을 제한함으로써 LP의 과도한 호가제출을 제한</p> <p>○ 시장스프레드율이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도록 제한</p> <p>* 시장스프레드율이 15%를 초과할 경우 8~15% 이내로만 제출 가능</p> <p>□ ELW 상장종목수 제한을 통해 무분별한 상장 제한</p> <p>○ 개별 증권사의 발행횟수를 월 1회로 제한하였으며, LP평가 성적이 낮은 증권사의 경우 상장종목수를 제한</p> <p>○ 상품의 내역이 일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 제한</p> <p>* 기초자산, 행사가격, 전환비율 등</p> <p>□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를 통해 불공정거래가 증가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p>	완료 (12.3.12 시행)

작성자 : 자본시장과 이환섭 사무관(2156-9874) (인) 

확인자 : 자본시장과 김합수 과 장(2156-9870)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2011. 3. 31. 현재)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 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현 집행상황 및 집행계획	완결여부
1	2010.12.21.	권고	<p>○ 제목: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기준 불합리</p> <p>- 조치할 사항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일정 금액 이하*의 만기연장을 위한 대환대출은 신규대출에서 제외(DTI 비적용)하도록 하는 등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2를 개정하여 서민 고객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선택폭을 확대하고 은행 간 경쟁 촉진 및 고객 간 형평성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권고)</p> <p>* 금리한 변화 시 금융감독에서 DTI 규제를 완화한다는 심리적 파급 효과가 우려될 수 있고 저소득 서민층이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입정금에 이하의 만기연장을 위한 대환대출로 제한함</p>	<p>□ 지난해 8.29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마련시 서민층 금융예로 해소를 위해 DTI가 면제되는 소액대출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109.17,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p> <p>□ 이에 따라 1억이하 대출의 경우 은행간 대환대출에 대한 차별적 규제 적용문제는 해소된 상황</p>	완료

작성자 : 금융정책과 사무관 오유정(2156-9712)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 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복 및 조치할 사항	현 집행상황 및 집행계획	완결여부
		통보	<p>○ 제목 : 투자자 예약금 관리 및 이용료 지급 불합리</p> <p>- 조치할 사항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투자업 규정」 제446조를 개정하여 향후 증권회사들이 투자자 예약금의 운용수익에서 별도 예치 의무 준수를 위해 부담하는 예금자 보험료, 감독분담금 등 직접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고객에게 돌려주도록 제도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p>	<p><input type="checkbox"/> 향후 「금융투자업 규정」 제446조 및 관련규정 등을 개정하여 투자자예약금관련 수익이 합리적으로 지급 되도록 할 예정</p> <p>- 다만, 비용산정에 있어 보험료, 분담금 이외에 투자자예약금 관리·보관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반영하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도록 할 예정</p> <p>* 감독원을 통해, 간접비용이 합리적으로 산출될 수 있게 ‘원가표준산업안’ 연구용역을 추진('12. 34분기)</p> <p>- 원가산정이 도출된 후 검증과정과 회사의 전산 시스템 구축기간 등을 고려하여 '13회계연도부터 시행할 것을 목표로 추진</p>	추진중

작성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인) (2156-9879) *531*
 확인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인) (2156-9879) *644*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2011. 8. 10. 현재)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 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집행계획	안결여부
7	2011. 6. 8	통보	<p>□ 제목: 한국산업은행 등 산은금융지주 설립 미흡 대한 배당정책 수립</p> <p>○ 조치할 사항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정책 금융공사 설립 당시의 취지에 따라 한국정책 금융공사의 현금흐름을 개선하는 방안의 하나 로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산은금융지주주식 회사로 하여금 자회사들에 대한 배당정책을 수립하여 한국정책금융공사에 적정한 배당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p>	<p>□ 산은지주의 정책금융공사에 대한 배당 원칙 마련('11.3월)</p> <p>○ 정책금융공사의 신금액 인수에 따른 구조적 손실에 대해 산업은행이 연도별 배당의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는 범위에서 손실 보전해당기로 합의('11.3월)</p> <p>○ 이를 토대로 산은지주가 자회사에 대해 배당 정책을 수립할 계획</p>	완료

작성자 : 산업금융과 사무관 선욱(2156-9751)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2011. 8. 10. 현재)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 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집행계획	완결여부
10-1	2011. 6. 8	통보	<p>□ 제목: 한국산업은행 민영화 및 한국정책금융공사 정제성 관련 대책 마련 미흡</p> <p>○ 조치할 사항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정책금융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는 등 민영화를 위한 기본설계를 통해 정책금융공사의 지속적인 손실 발생 구조를 개선하고, 산업은행의 업무를 정책금융공사로 이관할 때 조직·인력 관리에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이관 계획 등을 마련하기 바랍니다.</p>	<p>□ 산은지주가 금융산업 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민영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p> <p>○ 1단계로 수신기반 확충, 재무구조 개선 등 산은의 체질개선 추진중</p> <p>* 예수금비중('09말 13.0% → '11.3말 18.2%) 순이자마진('09말 0.7% → '11.3말 1.6%)</p> <p>○ 2단계로 국내의 시장상황, 국내 금융산업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분매각 추진('14.5월까지 최초 지분매각 추진)</p> <p>□ 정책금융공사의 손실발생구조 개선</p> <p>○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어 시장매각이 가능한 현대건설, 하이닉스 등의 매각 추진</p> <p>* 현대건설 ('11.4. 매각이익 9,202억원) 하이닉스 ('11.8월 예비실사중)</p> <p>○ 산은지주의 정책금융공사에 대한 적정 배당 원칙을 마련('11.3월)</p>	추진중

				<p>○ 증장기적으로 국내의 시장상황, 국내 금융산업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은지주의 지분 매각 방안을 마련 공사의 구조적 손실 발생문제 개선</p> <p>□ 정책금융공사로 업무 이관시 효율적인 조직·인력 관리계획 마련</p> <p>○ 향후 산은 민영화시 정책금융공사로 업무 이관에 따른 인력 동반이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지도</p>	추진중
10-2	2011. 6. 8.	통보	<p>□ 제목 : 한국산업은행 민영화 및 한국정책금융공사 정제성 관련 대책 마련 미흡</p> <p>○ 조치할 사항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국가 전체적인 정책금융체계를 수립하여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정책금융체계 속에서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업무가 다른 정책금융기관들과 중복되지 않고 민간금융기관들과의 시장마찰이 최소화되도록 정책금융공사의 정제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p>	<p>□ 정책금융기관간 업무중복 해소 추진</p> <p>○ 신·기보는 창업초기 리스크가 큰 중소기업에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창기보증이용기업에 대해 정책금융공사의 간접대출로 전환하여 지원 하는 방안 마련 추진('11.4/4분기 계획)</p> <p>○ 정책금융공사 무역보험공사 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공동 지원을 위한 MOU체결('10.6월)</p> <p>○ 수은·KSURE·정책금융공사·산은간 유기적으로 공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11.4분기)</p> <p>* '공동적용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동 수출금융기관 실무협의회' 구성·운영</p>	추진중

				완료
			<p>□ 정책금융공사의 독자적 업무영역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 산은이 하는 방식과는 달리 중소기업에 대한 온렌딩(On-lending) 도입 등 새로운 형태의 정책금융 시행('09.10) ○ 리스크가 커서 시장의 지원이 소극적인 녹색·신성장동력산업 육성에 정책금융공사가 선도적 역할 수행 ○ 저축은행 정상화를 위한 금융안정기금 설치 등을 통해 대내외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한 금융 시장 안정 지원('11.7월 발표) 	추진중
10-3	2011. 6. 8	통보	<p>□ 제목: 한국산업은행 민영화 및 한국정책금융공사 정체성 관련 대책 마련 미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치할 사항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 추진방안을 마련하며, 한국산업은행의 시장 매력도를 높일 수 있도록 주요 재무지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추진중

			추진('11.4/4분기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증권 투자한도(은행법상) : ('09말) 27조 한도초과 → ('11.3말) 한도 이내 ○ 금융채 발행한도(은행법상) : ('09말) 5.3조 한도초과 → ('11.3말) 한도 이내 ○ 타법인 출자한도(은행법상) : ('09말) 718억 한도초과 → ('11.3말) 452억 한도초과 <p>※ 산은 민영화이행점검위원회를 통해 반기별로 산은의 주요 재무지표 개선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p>	
--	--	--	------------------	---	--

작성자 : 산업금융과 사무관 선옥(2156-9751)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2011. 8. 10. 현재)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 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집행계획	완결여부
4	2011. 6. 8	통보	<p>□ 제목: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 세부추진방안 대비</p> <p>○ 조치할 사항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산업은행 민영화 방법과 전략, 일정 등을 담은 민영화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의 점포 신설 및 인력·조직 확충 계획을 수립하여 중박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p>	<p>□ 산은지주가 금융산업 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민영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p> <p>○ 1단계로 수신기반 확충, 재무구조 개선 등 산은의 체질개선 추진중</p> <p>* 예수금비중('09말 13.0% → '11.3말 18.2%) 순이자마진('09말 0.7% → '11.3말 1.6%)</p> <p>- 특히, 산은은 '11년 '공공기관 경영자율권 확대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점신설에 필요한 정원증원(160명) 확보</p> <p>○ 2단계로 국내외 시장상황, 국내 금융산업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민영화 방안 마련('14.5말까지 최초 지분매각 추진)</p>	추진중

작성자 : 산업금융과 사무관 신숙(2156-9751)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2011. 8. 10. 현재)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 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집행계획	완결여부
5	2011. 6. 8	통보	<p>□ 제목: 한국산업은행 주요 재무지표 개선노력 미흡</p> <p>○ 조치할 사항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산은 민영화 준비 과정에서 수신기관 확충 등을 통해 산업금융채권 중심의 조달구조를 완화 하는 등으로 향후 한국산업은행에도 적용될 각종 금융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 운용의 포트폴리오 개선을 추진하여 유가증권 투자비중 및 대기업 여신 비중을 줄이도록 지도·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p>	<p>□ 산은금융지주내에 설치되어 있는 민영화이행 점검위원회 등을 통해 반기별로 산은의 수신 기반 확보, 산금채 중심의 조달구조 개선 등을 추진중('11.4/4분기 점검)</p> <p>○ 유가증권 투자한도(은행법상) : ('09말) 27조 한도초과 → ('11.3말) 한도 이내</p> <p>○ 금융채 발행한도(은행법상) : ('09말) 5.3조 한도초과 → ('11.3말) 한도 이내</p> <p>○ 타법인 출자한도(은행법상) : ('09말) 718억 한도초과 → ('11.3말) 452억 한도초과</p> <p>※ 대기업 여신 비중 감축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나, 급격히 감축할 경우 해당기업의 영업기반 훼손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p>	추진중

작성자 : 산업금융과 사무관 선옥(2156-9751)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2011. 8. 10. 현재)

[기관명 : 금융위원회]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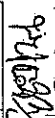
작성자 : 산업금융과 사무관 권옥(2156-9751)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정책금융제도 개편 및 운영실태)

(2012. 8.14. 현재)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 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집행계획	완결여부
	2011. 6. 8	통보	<p><input type="checkbox"/> 제목 : 해외자원 개발사업 검토절차 부처정</p> <p><input type="checkbox"/> 조치할 사항</p> <p>한국정책금융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참여와 관련 하여 한국수출입은행 등 다른 정책금융기관과 업무충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국정책금융공사로 하여금 다른 정책금융기관과 유기적으로 공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p>	<p><input type="checkbox"/>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들이 상호업무 중복을 최소화 하면서 유기적으로 공조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간 MOU 체결</p> <p>○ 정책금융공사-무역보험공사 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공동 지원을 위한 MOU 체결('10.6월)</p> <p>○ 수은·산은간 해외자원개발 등 대규모 해외프로젝트 공동지원을 위한 MOU 체결('10.8월)</p> <p>○ 해외프로젝트 수주 확대를 위한 정책금융기관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MOU 체결('12.2월)</p> <p>○ '해외프로젝트 수주확대를 위한 정책금융기관간 공동적용 업무 가이드라인' 제정('12.6월)</p>	완료

작성자 : 산업금융과 황기정 사무관 (2156-9753) 

확인자 : 산업금융과 윤창호 과 장 (2156-9750)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 번호	시행일	치분요구 종류	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현 집행상황 및 집행계획	완결여부
	'12.2.13	통보	<p>○ (제 목)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미흡</p> <p>○ (조치할 사항) 확정급여형 퇴직 연금의 재정건전성 검증과 관련, 금융위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통보 의무나 절차 등에 관한 근거 규정 미마련</p> <p>- 퇴직연금 사업자의 업무보고서에 재정건전성 검증 결과를 포함 하고, 고용노동부의 공유하는 방안 마련 필요</p>	<p>○ 현재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재정 건전성 검증 절차 강화 등을 포함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중</p> <p>○ 동 시행령에 마련된 금융위 감독 근거에 따라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퇴직연금 감독 규정을 개정할 예정</p>	추진중

작성자 : 자산운용과 김태완 사무관 (2156-9899)
 확인자 : 자산운용과 김정각 과장 (2156-9890)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2012.2.2. 현재)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 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현 집행상황 및 집행계획	완결여부
		통보	<p>○ 제목 : B2B대출 등 상거래대금 실행 총액에 대한 국내은행 간 통합 관리·공유 시스템 부재</p> <p>- 조치할 사항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은행총재와 협의하여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이 정상적인 상거래에 기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거래대금 실행 총액을 전 국은행연합회 등의 전산망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은행으로 하여금 기업의 매입액과 상거래대금 실행 총액을 비교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한 여신한도 부여 및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p>	<p>□ (집행상황) 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은행의 '전자적 방식의 대출'을 취급시 전자세금계산서 진위 확인을 통하여 부당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p> <p>* 「전자적 방식의 대출 제도개선 T/F」 운영(11.22~12.31) : 금융위, 국세청, 금감원,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 등 참여</p> <p>○ 은행 대출시 전자세금계산서 진위확인을 위한 "제3자 세금계산서 조회시스템" 확대 적용 방향에 대하여 국세청과 협의 완료(2012.2.1)</p> <p>- 다만, 기업의 매입액과 상거래대금 실행 총액 비교를 위한 '기업의 매입신고액' 자료의 경우, 국세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전자세원과-35)함에 따라 추가 조치가 어려운 상황</p> <p>○ 은행연합회 및 금융결제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확인시스템 구축을 지도(금감원 공문, 2012.2.2)</p> <p>□ (집행계획) 국세청과 금융결제원, 은행간의 전자 세금계산서 확인시스템 구축·시행('12년 중)</p>	추진 중

작성자 : 은행과 서나윤 사무관 (2156-9814)

확인자 : 은행과 성대규 과장 (2156-9810)

자체감사(정기)
12.16 ~ 12.22

2010년 금융위원회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2011. 1.

금 융 위 원 회
(감 사 담 당 관 실)

- 목 차 -

I. 감사개요

II.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2. 부문별 감사결과

가.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나. 출납업무 담당자 운용

다. 대통령 지시사항 등 주요사업 추진·관리

라. 법령 제·개정절차 이행수준

3.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4. 감사결과 처리요령

I. 감사실시 개요

〈목 적〉

◇ 예산집행·회계처리 및 국정과제, 대통령지시사항등 주요사업 이행·관리실태 등에 대한 정기점검

⇒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개선대안 마련 및 기관운영의 안정성·효율성 제고

* 「'10년 자체감사계획」('10.28 기보고)에 따른 감사임

1 실시개요

□ 감사기간 : '10.12.16(목) ~ 12.22(수), 5일간

□ 감사대상 : '08.7 ~ '10.11 기간중 예산집행실태 등

□ 감사반원: 감사담당관실 5명(감사담당관, 5급 2, 주무관 2)

□ 감사방법: 서면점검

* 수감부서의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서면위주로 실시

2 감사중점

□ 예산집행·회계처리의 적정성

□ 대통령 지시사항 등 주요사업 추진·관리의 적정성

□ 법령 제·개정절차 이행의 적정성

□ 외부감사(감사원) 지적사항 이행실태

II.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 금번 감사는 '08년 자체감사('08.6.23~6.27) 이후 2년6월만에 실시
 - 예산집행 등 기관운영의 기본적 사항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조직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하는데 중점을 둠
- 감사결과 금융위 설립('08.2.28) 초기 업무시스템 정비 과정에서 나타났던 불안정성은 상당부분 안정화된 것으로 평가
 - 다만, 회계 관련 서류의 관리 등 예산집행의 세부적인 부분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보완할 부분도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분야별 주요 발견사항]

- ①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관서운영경비 출납부서)
 - ☞ 출납서류 편철·관리 및 지출증빙·집행방법 등 부적정
- ② 대통령 지시사항등 주요사업 추진·관리(행정인사과)
 - ☞ 정상적으로 추진·관리 → 특이사항 발견되지 아니함
 - * 대부분 과제가 완료되었거나 종료요청중이며, 일부 미완료과제도 정상 추진중
- ③ 법령 제·개정절차 이행 → 부패영향평가 의뢰 미흡(관련부서)
 - ☞ '09.7 ~ '10.6 기간중 21건의 제·개정(안)중 14건 기한도과 등
- ④ '09년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지적사항 이행(관련부서)
 - ☞ 관련 제도 개선등 적절히 조치

2 분야별 감사결과

가.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① 출납서류 편철·관리 부실 및 지출증빙 처리 부적정

□ 출납 관련서류 편철·관리 부실

-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제31조 내지 제33조)에 따라 매월 출납업무 마감 후 출납계산서, 국고예금월계대사표 및 비목별 지출증빙서류를 편철·관리하여야 함

<관서운영경비 출납서류 편철방법>

① 출납계산서(규칙 제7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단위로 편철 • 세목별로 구분 • 5년간 보관
② 국고예금월계대사표(00년 00월분)	
③ 세목별 간지(본월지출액: 00원, 건수: 00건)	
④ 지급결의서	
⑤ 내부결재(품의서)	
⑥ 기타 증빙자료(영수증, 계약서, 청구서 등)	

- 그러나 금융정책국 등은 예산집행 서류를 연간 목별로만 관리하는 등 계산증명규칙과 다르게 관리하여 출납계산서와 국고예금월계대사 및 지출증빙간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게 함

< 부서별 지적사항 >

부서명	지 적 내 용
■ 금융정책국	• '08.7~'10.11 기간중의 출납서류 관리 부실
■ 금융서비스국	• '08.7~'10.11 기간중의 출납서류 관리 부실
■ 자본시장국	• '10.1~'10.11 기간중의 출납서류 관리 부실
■ 대변인실	• '08.7~'10.11. 기간중의 출납서류 관리 부실

□ 사전품의 없이 공공요금 등 관서운영경비 집행

- 「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24p)」은 예산 집행시
정당한 결재권자의 결재를 통하여 집행하도록 규정
- 또한, 「금융위원회 위임전결규정」은 예산 집행시 중요사항은
국장, 일반사항은 과장이 전결토록 규정
-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 공공요금, 기타운영비 등을 집행하면서
사전 품의 없이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
 - * 예산집행시에는 집행건별로 집행사유, 집행대상, 소요예산 및 해당 예산과목
등에 대하여 결재권자의 결재(품의)를 득하여 집행하여야 함

□ 예산집행 품의서에 결재권자의 서명이 아닌 도장 날인

-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3조제8호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문서는
서명(행정전자서명 포함)에 의한 결재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 서명은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일부 부서에서 업무추진비등 품의서에 부서장 서명이 아닌
도장을 날인하여 증빙자료로 관리

□ 정부구매카드 사용시 부서명 서명 및 특근매식비 현금집행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24p 및 101p)」에 따라 정부구매
카드 사용시에는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하여야 하며,
 - 특근매식비의 집행은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야 함
- 그러나, 상당수 실·국에서 정부구매카드 사용시 부서명(○○팀 등)
으로 서명 하였고, 대변인실은 특근매식비 집행시 현금으로 집행*
 - * '08.12.18(273,000원) 및 '08.12.23(25,000원)

② 관서운영경비 집행방법 부적정

□ 통역비 지급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미실시

- 소득세법시행령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 그러나 대변인실은 '09.9.29 김○○에게 통역료 80만원을 지급하면서 관련 세금(기타소득세)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 단, 지급금액의 80%(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기타소득)이 5만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소득세법 제21조제2항, 84조제3호, 시행령 제87조제1항)

- 강의료 25만원 지급시: 25만원의 80%(20만원)를 공제하면 기타소득은 5만원으로 기타소득세 비과세
- 강의료 30만원 지급시: 30만원이 80%(24만원)를 공제하면 기타소득은 6만원으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 09년도 발생 에디터 비용을 '10년도 예산으로 집행

- 국고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전년도 발생 채무확정액을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됨

* 예외) 공무원보수, 군인사망급여금, 군인전상급여금, 보험료, 이자 등

- 그러나, 금융정보분석원은 '09년 12월 발생한 영문에디터(2명) 비용 2,664,690원을 '10년도 예산(수용비)에서 지급

□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을 초과하여 관서운영경비 지급

-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32조제3항 및 제33조에 따라 출납공무원은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 내에서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여야 함

- 그러나 기획조정관실은 업무추진비를 지급함에 있어 지출관
으로부터 교부받은 자금을 초과하여 지급*

* '09.3, 6, 9월에 각각 1,580,000원, 393,000원, 6,160,000원씩을 초과 지급

⇒ 첫째, 예산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와 방법으로 집행할 것

- 반드시 정당한 결재권자의 서명에 의한 사전 결재로 집행
- 정부구매카드 영수증에는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
- 특근매식비는 정부구매카드로 집행
- 연도내 발생경비는 당해 연도 예산으로 집행(법령상 예외는 제외)
- 예산과목별 교부액을 준수하여 집행

둘째, 예산집행 서류는 계산증명규칙에 부합토록 편철·관리할 것

나.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 담당자 운용

□ 출납업무 담당자 운용 개선 필요

-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 담당부서 중 출납 관련 서류의 관리
등이 상대적으로 부실한 부서의 경우 대부분 공무원 경력이 없는
초임자(주무관) 1인이 출납업무를 담당
- 출납업무 뿐만 아니라 민원업무 등 다른 업무도 함께 수행
하고 있어 출납업무에 상대적으로 소홀

대변인실	금융정책국	금융서비스국	자본시장국
• 주무관 1(담당)	• 주무관 1(담당)	• 주무관 1(담당)	• 주무관 1(담당)

○ 반면, 출납업무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부서의 경우 실무관이나 사무원이 출납업무 담당자를 보조

- 출납업무 담당자의 업무부담 완화 및 업무수행의 안정성·효율성을 제고

행정인사과	기획조정관실	금융정보분석원	공자위사무국
• 주무관 1(담당) • 주무관 1(보조)	• 주무관 1(담당) • 사무원 1(보조)	• 주무관 1(담당) • 주무관 1(보조)	• 주무관 1(담당) • 사무원 1(보조)

⇒ 출납업무 담당 1명만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서는 실무관 또는 사무원을 출납공무원 보조자로 지정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지원할 것

*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에서 실시하는 예산·회계교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교육 등

다. 대통령 지시사항 등 주요사업 추진·관리

①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현황 : 특이사항 없음

□ '11.01 현재 총 38개 지시사항중 36개 완료, 2개 지시사항 추진중

< 미완료 대통령지시사항 추진현황 >

지시일	지시내용	이행단계	담당과	처리기한
09.09.03	구조조정 추진 관련	추진 중*	기재단	10.12.31
10.12.21	전국민 보안의식 강화	추진 중**	감사	11.12.31

* 추진계획 수정·보완하여 승인요청 중으로 승인시 처리기한 연장 예정

** 추진계획 수립 및 승인 완료

② 국정과제 추진현황 : 특이사항 없음

□ '11.01 현재 27개의 과제중 23개 완료, 4개 과제 추진중

< 미완료 국정과제 추진현황 >

세부실천과제	계 기	시 한	단 계
단기사채 제도 법적 근거 마련	인수위 국정과제	10.하	연장요청*
산업은행의 원활한 민영화 여건 마련	'09 8.15 경축사	12.하	추진 중
체계적인 금융교육실시	인수위 국정과제	12.하	추진 중
햇살론의 안정적 정착	'10 8.15 경축사	12하	추진 중

* '11년 상반기까지 기한연장을 요청 중에 있으며 1월중 연장승인 예정

⇒ 10.34 ~ 4.16 기간중 우리 위원회등 29개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된 감사원의 「주요사업 추진실태 감사」에서도 지적사항 없었음

다. 법령 제·개정시 필요절차 이행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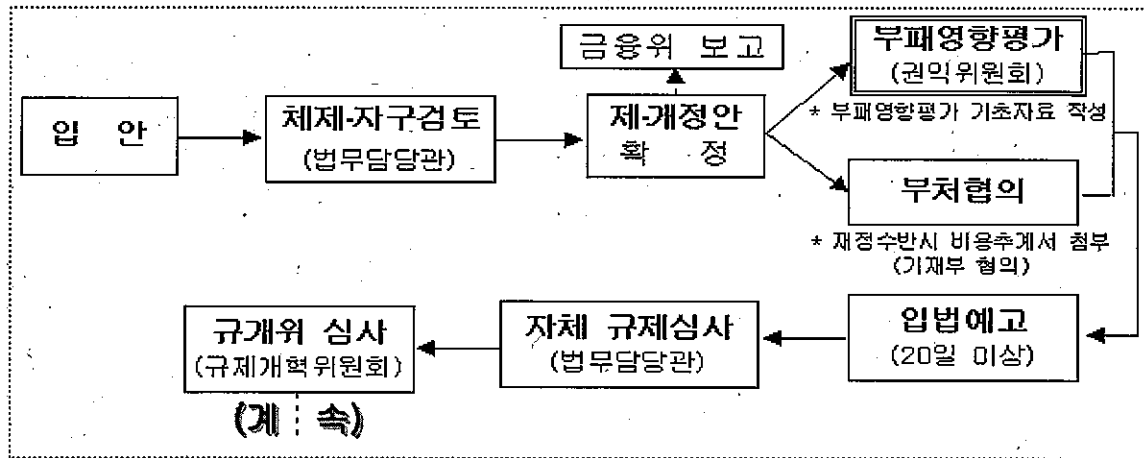
□ 현 황

- 법령 제·개정시에는 부패영향평가*, 부처협의,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준수 하여야 함 (표1 참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법령 입안시 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의뢰토록 규정(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30조)

-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09.10.1 ~ '10.9.30 기간중 총 21건의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안

< 부패영향평가 의뢰 : 부처협의와 병행 실시 >



□ 점검결과

- 법령 입안시 필요한 절차는 대체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으나, 부패영향평가 의뢰가 다소 미흡
- 총 21건 중 7건만이 기한내 부패영향평가를 의뢰, 12건은 입법예고 이후에 의뢰, 2건은 의뢰하지 않음 (표2 참조)

⇒ 향후 법령 제·개정시 반드시 부패영향평가 의뢰를 입법예고 전에 부처협의와 병행하여 실시토록 할 것

□ 지적사항 및 조치구분

지 적 사 항	조치구분
■ 출납서류 편철·관리 부실 및 지출증빙 처리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에 부합토록 집행 관련 서류 편철 → 1개월 이내 감사담당관실로 그 결과 회보 (금정국, 서비스국, 자본국, 대변인실) · 관서운영경비는 지급건별로 결재권자의 직접 서명에 의한 품의 (또는 전자결재)를 통하여 집행하고, 정부구매카드 사용시에는 카드 영수증에 반드시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할 것 (금정국, 서비스국, 자본국, 기획조정관실, 행정인사과, FIU, 공자위사무국) · 특근매식비를 현금으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대변인실) 	주 의
■ 관서운영경비 집행방법 부적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서운영경비 집행시 원천징수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 (대변인실) · 법령과 다르게 지난 연도 채무확정액을 현 연도 예산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할 것 (FIU) · 교부받은 과목별 자금한도를 초과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할 것 (기획조정관실) 	주 의
■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 보조인력 지정 등 개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관 또는 사무원을 출납업무 보조자로 지정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토록 지원하여 출납업무가 안정적·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개선 (금정국, 서비스국, 자본국, 대변인실) 	권 고

※ 위 지적사항과는 별도로 모든 부서는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시 반드시 부패영향평가 의뢰(국민권익위원회)를 부처협의와 병행하여 실시하시기 바람

□ 향후 조치계획

- 감사결과 각부서 및 감사원에 통보
-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교육 (1월중)

1. 처분요구 사항의 조치기한

가. 문책사항은 1월 이내

나. 변상사항은 3월 이내

다. 개선·개선통보·시정·권고사항은 2월 이내

2. 조치결과 보고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 는 상기 조치기한 이내에 자체 조치한 후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함

3. 이의신청

소관부서는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의견서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자체감사(정기)
2011.12.26 ~ 12.30

2011년 금융위원회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2012. 2.

금 융 위 원 회
[감 사 담 당 관 실]

- 목 차 -

I. 감사개요

II.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2. 부문별 감사결과

가.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나. 민원업무 처리

3.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4. 감사결과 처리요령

I. 감사실시 개요

〈목 적〉

- ◇ 예산집행·회계처리, 계약사무, 민원처리실태 등에 대한 정기점검
- ⇒ 취약한 부분에 대한 개선대안 마련으로 기관운영의 안정성·효율성 제고 및 爲民奉仕의 행정구현
- * 「'11년 자체감사계획」('11.2.1 기보고)에 따른 감사임

1 실시개요

- ☐ 감사기간 : '11.12.26(월) ~ 12.30(금), 5일간
- ☐ 감사대상 : 以前 자체감사 대상 이후의 예산집행실태 등
 - * 예산집행실태 등은 '10.12월 이후, 민원처리실태는 '10.7월 이후
- ☐ 감사반원: 감사담당관실 5명(감사담당관, 5급 2, 주무관 2)
- ☐ 감사방법: 서면점검(필요시 현장실사)

2 감사중점

- ☐ 예산집행·회계처리의 적정성
- ☐ 민원업무 처리의 적정성
- ☐ 以前 자체감사 지적사항 이행의 적정성

II.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 ☐ 예산집행 및 민원처리 등 기관운영의 기본적 사항에 대한 정기 점검을 통해 조직운영의 안정성·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
- ☐ 감사결과 중대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아니함. 다만, 예산집행 서류의 관리 및 민원처리기한 준수 등 일부 보완이 필요

[분야별 주요 발견사항]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관련>

- ①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관서운영경비 출납부서)
 - ☞ 지출증빙 관리 및 배정한도 준수 집행 등 철저 필요
- ② 5천만원 초과 전용건 일상감사 미이행(기획행정실)
 - ☞ 건당 5천만원 초과 이·전용 및 이월은 일상감사 대상

<민원업무 처리 관련>

- ① 처리기한 미준수 및 연장통보 부적정
 - ☞ 처리기한 도과 처리(109건, 1.7%) 및 임의형식 연장통보 등
- ② 이첩민원 해소 필요(산금과 민원 92% 신보·기보·캠코에 이첩)
 - ☞ 신보·기보·캠코에 국민신문고 구축하여 직접처리 필요

가.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관련

① 점검개요

□ 2011년도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중 각 부서에서 직접 집행하는 관서운영경비를 중심으로 점검

○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총액은 1조 5,530억 77백만원으로 대부분이 전출금·상환지출·이전지출* 등이며,

*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 IBRD차관원리금상환, 모기지론이차보전, 농어가목돈마련장려기금출연 등

○ 직접 집행액은 306.8억원(2.0%)으로 이 중 인건비(144.1억원)를 제외한 집행(162.7억원)을 중점 점검

<2011년도 일반회계 집행실적 (억원, %)>

구분	인건비	물건비	자산취득	이전지출	상환지출	전출금등	계
예산 (비중)	163.2 (1.0)	155.1 (1.0)	5.0 (0.0)	707.7 (4.5)	31.8 (0.2)	14,493.5 (93.2)	15,556.3 (100.0)
지출 (비중)	157.1 (1.0)	144.1 (0.9)	4.3 (0.0)	705.0 (4.5)	26.7 (0.2)	14,493.5 (93.3)	15,530.8 (100.0)
이월	0	0.7	0	0	0	0	0.7
불용	6.1	10.3	0.7	2.7	5.1	0	24.9

□ 예산집행지침, 감사원 계산증명규칙 등 관련 규정 부합여부 및 집행절차, 증빙처리의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② 점검결과 지적사항

① 관서운영경비 집행방법 부적정

□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을 초과하여 관서운영경비 집행 등

○ 국고금관리법시행령(제32조3항 및 제33조)에 따라 출납공무원은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 내에서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여야 함

○ 그러나 금융정책과 등은 업무추진비 등을 지급함에 있어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자금을 초과하여 지급*

* 금융정책과(업무추진비 5,095,100원, 특근매식비 2,984,780원 / 6~9월),
자본시장과(업무추진비 2,345,932원 / 4월)

○ 또한, 기획행정실은 국외출장에 따른 여비를 국외여비가 아닌 국내여비 예산에서 집행

* APG 연차총회 참석(인도)을 위한 국외여비 2,861,610원을 국내여비로 집행(7.15)

□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시 상대방 성명 등 기재 미비

○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지침 141p)

○ 그러나, 기획재정담당관실 등은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주된 상대방의 소속·성명 미기재*

* 기획재정담당관실('11.2.28 / 970,000원), 국제협력팀('11.6.8 / 954,800원),
정책홍보팀('11.8.11 / 568,000원)

⇒ 매월 교부받은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을 준수하고, 예산과목에 충실하여 집행하며,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집행시에는 반드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성명을 기재할 것 (주의 : 해당부서)

② 출납서류 편철·관리 및 지출증빙 처리 부적정

□ 출납 관련서류 편철·관리 부실

-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제31조 내지 제33조)에 따라 매월 출납업무 마감 후 출납계산서, 국고예금월계대사표 및 비목별 지출증빙서류를 편철·관리하여야 함

<관서운영경비 출납서류 편철방법>

① 출납계산서(규칙 제7호 서식)	• 월단위로 편철
② 국고예금월계대사표(00년 00월분)	
③ 세목별 간지(본월지출액: 00원, 건수: 00건)	• 세목별로 구분
④ 지급결의서	
⑤ 내부결재(품의서)	
⑥ 기타 증빙자료(영수증, 계약서, 청구서 등)	• 5년간 보관

- 그러나 금융정책과 등은 월별 출납서류에 출납계산서 등 일부 서식을 누락하여 편철

부서명	누락서류
■ 금융정책과	• 출납계산서, 세목별 간지, 지급결의서
■ 정책홍보팀, 기획행정실	• 국고예금월계대사표
■ 기획재정담당관실	• 세목별 간지

□ 사전품의 없이 관서운영경비 집행

- 「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24p)」은 예산 집행시 **정당한 결재권자의 결재를 통하여** 집행하도록 규정
- 그러나 자본시장과는 일반수용비 집행에 있어 일부 품의서 누락

부서명	품의서 누락 사례
■ 자본시장과	• 11.2.23(생수 1,101,100원), 3.16(복사기드럼 765,600원), 4.14(용지 2,127,000원), 5.19(사무용품 657,900원), 9.7(명패 283,800원), 11.30(토너 4,957,700원) 등

⇒ 예산집행 서류는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에 부합토록 편철·관리하고, 수용비 집행시 품의서 누락사례가 없도록 할 것 (주의 : 해당부서)

③ 건당 5천만원 이상 전용건에 대한 일상감사 미이행

- 「금융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은 건당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산전용에 대하여 일상감사 대상으로 규정

※ 일상감사대상(금융위 일상감사 실시지침)

- 예산이 5억원 이상인 사업
- 성과관리계획상 주요 정책과제 (집행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일정규모 초과 계약건 (종합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기타공사: 8천만원, 용역·물품의 제조·구매: 5천만원)
- 건당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산의 아전용 및 이월
- 주거대출 은행의 선정·변경
- 실·국 단위 이상에서 개최하는 워크숍, 연찬회 등 행사 및 외부 참석인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과단위 행사 포함)

- 그러나 기획행정실은 FIU 인건비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본부 인건비에서 8,000만원을 전용('11.12.23)하면서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아니함

<FIU 인건비 전용내역>

(단위 : 백만원)

일자	건명	세부사업명	'11예산현액	변경액	변경 후 금액
12.23	FIU 인건비 부족에 따른 예산 자체전용	FIU 인건비	2,926	80	3,006
		본부 인건비	12,745	△80	12,665

⇒ 향후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산전용건에 대하여 반드시 일상감사를 의뢰하는 등 「금융위 일상감사 실시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 (주의 : 기획행정실)

④ 성실한 업무처리로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모범사례)

□ ○○국은 '10년 자체감사시 예산집행 서류를 연간 목별로만 관리하는 등 계산증명규칙과 다르게 하여 출납계산서와 국고예금월계대사 및 지출증빙간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게 하였고,

○ 수용비, 공공요금 등을 결제권자의 결재를 득한 사전품의 없이 집행하였으며, 정부구매카드 사용시 사용영수증에 사용자의 실명이 아닌 부서명으로 서명한 사례가 빈번하여 지적(주의)을 받은 바 있음

□ 그러나, '11년 1월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 담당자가 아래와 같이 교체되면서 금번 감사일 현재 '10년도 감사 지적사항을 완전히 해소하는 한편 관서운영경비 집행과정에서 '예산집행지침'을 성실히 이행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크게 제고함

소 속	성 명	직 급	담당업무	담당기간
○○과	○○○	○○	○○국 관서운영경비 출납	'11.1월 ~ 현재

⇒ 각 과장은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 담당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동 모범사례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 행정인사과장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한 상기 담당자에게 포상 등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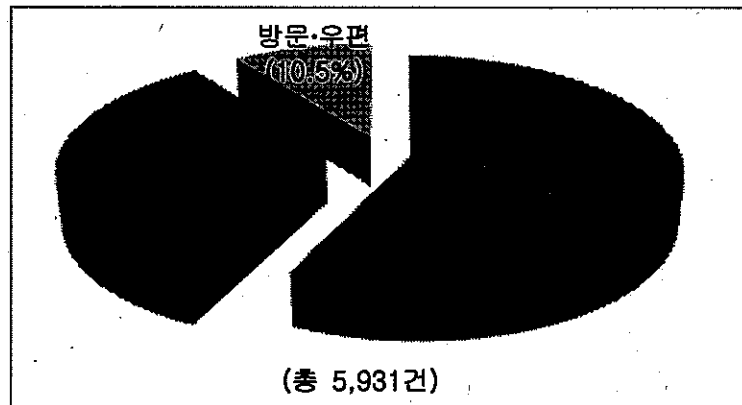
나. 민원업무 처리 관련

1 현황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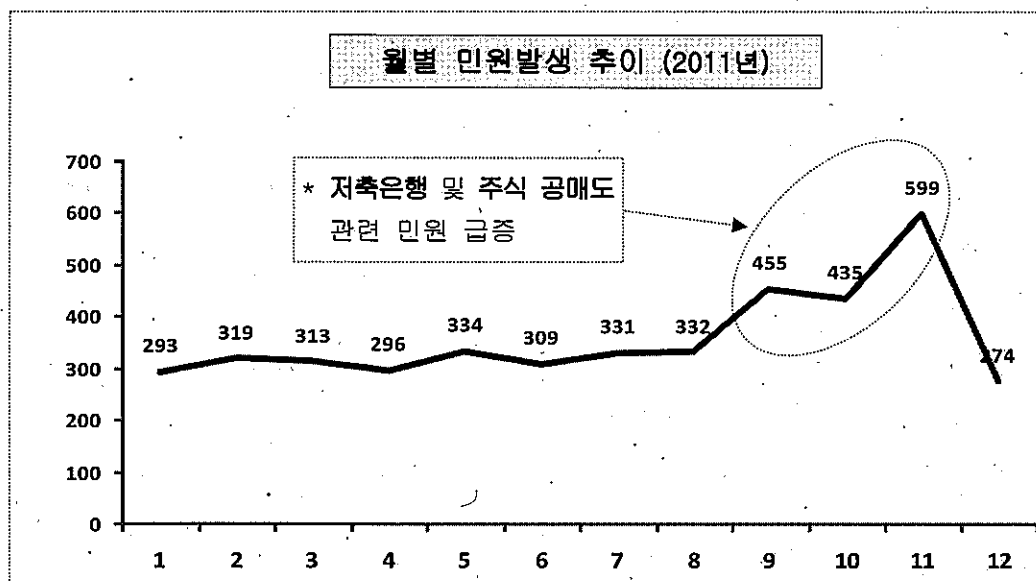
□ 점검대상기간('10.7.1 ~ '11.11.30)중 총 5,931건* 접수·처리

* 반복민원 433건 포함시 6,364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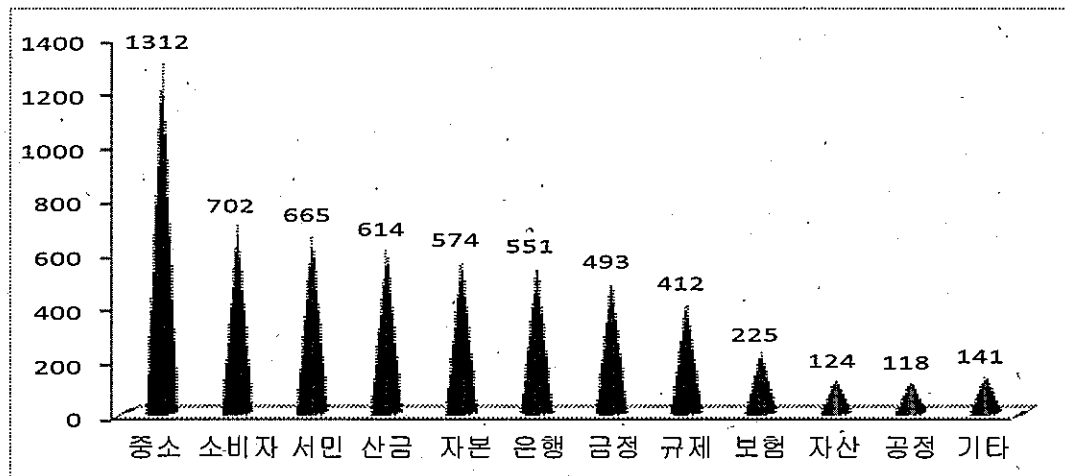
구 분	건 수
신 문 고	3,238
홈페이지	2,067
방문·우편	626
합 계	5,931



- 통상적으로 매월 3백건 내외의 민원이 발생하며, 저축은행 등 특정 사안 발생시 일시적으로 급증



□ 부서별 : 중소기업과 → 금융소비자과 → 서민금융과 순



○ 중소기업·소비자·서민등 3개 과의 민원은 모두 서민금융 관련 민원으로 총 2,679건으로 전체 민원의 45.2% 차지

- 이들 민원의 만족도*는 44.7%로 전체 만족도 49.0% 보다 4.3%p 낮게 나옴

* 중소기업(41.7%), 금융소비자(48.5%), 서민금융(49.2%)

○ 산업금융과 민원*은 대부분(91.8%) 신보, 기보, 캠프 민원으로 해당 기관에 이첩되었으며, 만족도는 42.9%로 나타남

산업금융과 민원(건)	신 보	기 보	캠 코	기 타	합 계
	311	98	155	50	614

□ 속성별 : 일반민원*(3,544)→ 법령질의(1,160) → 제도개선(592) → 진정(493) → 기타(231)의 순

* 일반민원 대부분도 현행제도 내에서 해소가 어려운 진정성 민원

* 법령질의 만족도는 83.3%로 전체 평균(45.2%)보다 월등히 높음

② 점검결과 지적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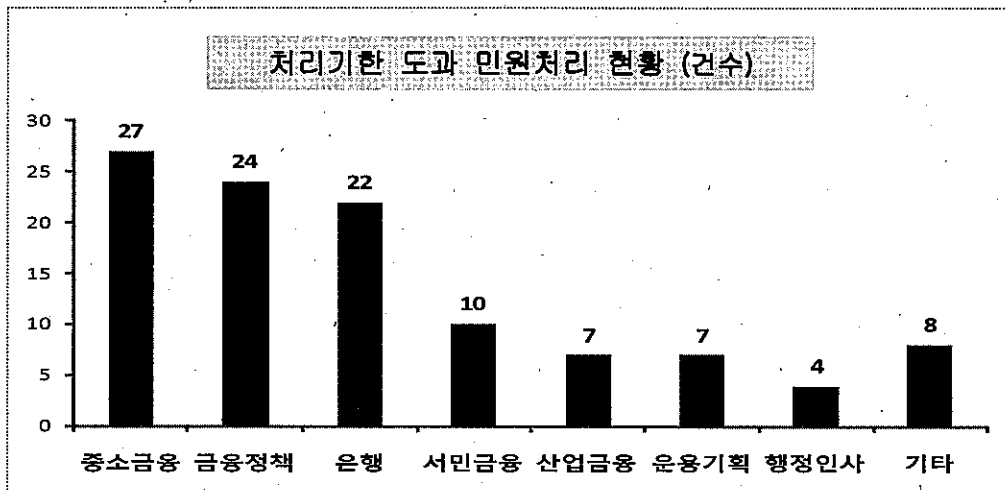
① 처리기한 미준수 및 연장처리 부적정

- 처리기한 준수율은 98.3%로 '10년 점검시의 95.8%보다는 개선되었으나, 중앙행정기관 평균 99.5%* 보다는 낮음

* 「2011년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만족도 평가(권익위)」에서 금융위의 처리기한 준수율은 '보통'으로 외통부, 교과부 등과 함께 최하위권

- 처리기한 연장 등의 조치 없이 처리기한*을 초과한 경우는 109건 (1.7%)으로 중소기업과, 금융정책과, 은행과에 집중됨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일반질의·상답은 7일, 법령질의는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함



-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연장사유 및 처리예정기한을 명확히 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및 시행규칙(제8조)

- 그러나, 일부 서신민원(방문·우편)의 경우 당해 민원인에게 처리기한 연장통보 없이 국민신문고상으로만 연장처리

* 서신민원의 경우 행정편의상 국민신문고에 등재·관리하더라도 처리기한 연장은 당해 민원인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서신으로 하여야 함

<사 례>

민원인	접수일	처리일	연장횟수	처리부서
김OO	'11.01.31.	'11.03.18.	3회	금융정책과
이OO	'10.07.16.	'10.08.17.	3회	산업금융과
강OO	'10.10.29.	'10.11.26.	3회	중소금융과
황OO	'11.05.20.	'11.06.22.	3회	서민금융팀
홍OO	'10.08.11.	'10.09.10.	3회	은행과
심OO	'11.10.17.	'11.11.17.	3회	보험과
김OO	'10.07.21.	'10.08.20	3회	운용기획팀

- 또한, 서신으로 연장통보 하는 경우 공문 또는 법정 서식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나 **임의양식***으로 처리

* 담당자, 시행일, 기관장직인 등 없이 A4 용지에 연장사유 및 예정처리 기한만을 임의로 작성하여 민원인에게 통보

<사 례>

관련 민원현황				처리부서
민원인	신청일	접수일	처리일	
박OO	'11.08.30	'11.08.30	'11.09.16	산업금융과

⇒ 법정 처리기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서신민원의 처리기한 연장 통보는 반드시 공문 또는 법정서식에 의할 것 (주의 : 해당부서)

② 이첩민원 해소노력 필요

- 산업금융과 민원 경우 대부분이 신보, 기보, 캠프 관련 민원으로 접수민원의 92% 가량을 해당 공공기관에 이첩



- 이는 해당 공공기관에 국민신문고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른 것으로 국민신문고 구축시 신속한 민원회신과 함께 이첩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감소시킬 것으로 판단
- * '10년 민원점검시 지적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국민신문고가 구축됨에 따라 자본시장과 민원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최근 예금보험공사의 신문고 구축으로 금융소비자와 민원도 상당수 감소
- * LH공사, 국민연금공단, 대한주택보증 등 상당수 공기업들 또한 국민신문고를 구축하여 소관 민원을 직접 처리

⇒ 신보 등에 국민신문고를 구축함으로써 신속한 민원회신과 함께 이첩에 따른 행정업무를 감소시킬 필요 (권고 : 산업금융과)

□ 지적사항 및 조치구분

분야	지 적 사 항	조치 구분
예산 집행 / 회계 처리	■ 출납서류 편철·관리 부실 및 지출증빙 처리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납계산서, 한국은행 월계대사, 세목별 간지, 지출결의서 및 지출증빙(품의서, 영수증 등) 등을 ‘감사원 계산증명 규칙’에 부합토록 철저히 관리할 것 (금융정책과, 정책홍보팀, 기획재정담당관실, 기획행정실) 일반수용비 집행시 품의서 누락사례가 없도록 할 것 (자본시장과) 	주의
	■ 관서운영경비 집행방법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별 교부받은 예산과목별 자금한도를 초과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할 것 (금융정책과, 자본시장과) 국외여비를 국내여비예산에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기획행정실)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집행시 증빙서류에 주된 상대방의 소속성명을 기재할 것 (기획재정담당관실, 국제협력팀, 정책홍보팀) 	주의
	■ 일상감사 미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당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산전용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일상 감사를 이행할 것 (기획행정실) 	주의
	■ 성실한 업무처리로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한 업무처리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 (모범사례) 	모범 사례
	■ 처리기한 미준수 및 연장처리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처리기한을 준수하며, 서신민원에 대한 처리기한 연장은 연장사유·예정처리기한을 명확히 한 공문 또는 법정서식에 의할 것 (행정인사과, 금융정책과, 산업금융과, 은행과, 보험과, 중소기업과, 서민금융과, 신용기획팀) 	주의
민원 처리	■ 이첩민원 해소노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보 등에 국민신문고를 구축함으로써 신속한 민원회신과 함께 이첩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일 필요 (산업금융과) 	권고

□ 향후 조치계획

- 감사결과 각부서 및 감사원에 통보

1. 처분요구 사항의 조치기한

가. 문책사항은 1월 이내

나. 변상사항은 3월 이내

다. 개선·개선통보·시정·권고사항은 2월 이내

2. 조치결과 보고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상기 조치기한 이내에 자체 조치한 후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함

3. 이의신청

소관부서는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의견서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10년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

지적사항명	조치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조치상황
출납관리 서류 편철·관리 부실 및 지출증빙 처리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제31조 내지 제33조)에 따라 매월 출납 업무 마감 후 출납계산서, 국고예금월계대사표 및 비목별 지출증빙서류를 편철·관리하여야 함 - 그러나 대변인실 등은 예산집행 서류를 연간 목별로만 관리하는 등 계산증명규칙과 다르게 관리 ○ 「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24p)」은 예산 집행시 결재권자의 결재를 통하여 집행하도록 규정 - 그러나 금융정책국 등은 공공요금 납부 등 일부건 품의서 누락하거나 부서장 서명이 아닌 일반도장 날인 ○ 「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24p)」은 정부 구매카드 사용시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토록 규정 - 지본시정국 등은 일부 사용영수증에 '부서명'으로 서명 ○ [조치요구사항] 감사원 계산증명규칙 부합토록 집행 관련 서류의 편철·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관서운영 경비는 지급간별로 결재권자의 직접 서명에 의한 품의서에 의해 집행하며, 정부구매카드 사용시에는 사용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할 것 	주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부서에 '주의' 조치 및 감사결과 전직원 공람 	조치완료

지적사항명	조치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조치상황
관서운영경비 집행방법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27조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러나 대변인실은 '09.9.29 김○○에게 통역료 80만원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미실시 ○ 「국고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전년도 발생 채무확정액을 다음연도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은 제한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러나, FIU는 '09년 12월 발생한 영문에디터 2명 비용 2,664,690원을 '10연도 예산에서 지급 ○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출납공무원은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에 내에서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러나, 기획조정관실은 '09년 3월 등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교부받은 자금을 초과하여 집행 ○ [조치요구사항] 원천징수의무를 철저히 하고, 연도 내 발생경비를 차년도 예산에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매월 교부받은 예산과목별 사용한도를 준수할 것 	주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 '주의' 조치하는 한편 감사결과 전직원 공람 	조치완료

지적사항명	조치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조치상황
출납업무 담당자 운용 개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금융정책국 등의 경우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를 1명이 담당하면서 국회업무 및 민원업무 등 다른 업무도 함께 수행하면서 보조인력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부서(FIU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납업무에 소홀 ○ [조치요구사항] 출납업무 담당을 1명으로 운용하고 있는 부서의 경우 보조인력을 지정하여 출납업무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 	권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관 또는 사무원을 보조인력 지정하여 출납업무를 보조토록 조치 	조치완료

< '11년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

지적사항명	조치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조치상황
출납관리 서류 편철·관리 등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제31조 내지 제33조)에 따라 매월 출납 업무 마감 후 출납계산서, 국고예금월계대사표 및 비목별 지출증빙서류를 편철·관리하여야 함 - 그러나 금융정책과 등은 월별 출납서류에 출납계산서 등 일부 서식을 누락하여 편철 ○ 「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24p)」은 예산 집행시 결재권자의 결재를 통하여 집행하도록 규정 - 그러나 자본시장과는 일반수용비 집행에 있어 생수 구입건 등 일부건 품의서 누락 ○ [조치요구사항] 예산집행 서류는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에 부합토록 편철·관리하고, 수용비 집행시 품의서 누락 시례가 없도록 할 것 	주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집행 서류의 편철·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당부서에 '주의' 조치하는 한편 감사결과 전직원 공람 	조치완료

지적사항명	조치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조치상황
관서운영경비 집행방법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국고금관리법시행령(제32조3항 및 제33조)에 따라 출납공무원은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에 내에서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러나 금융정책과 등은 업무추진비 등을 지급함에 있어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월별 자금을 초과하여 지급 ○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러나, 기획재정담당관실 등은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주된 상대방의 소속·성명 미기재 ○ [조치요구사항] 매월 교부받은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을 준수하고,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집행시에는 반드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성명을 기재할 것 	주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 '주의' 조치하는 한편 감사결과 전직원 공람 	조치완료

지적사항명	조치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조치상황
일상감사 의뢰 미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금융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은 건당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산전용에 대하여 일상감사 대상으로 규정 - 그러나 기획행정실은 FIU 인건비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본부 인건비에서 8,000만원을 전용('11.12.23) 하면서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음 ○ [조치요구사항] 향후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산전용건에 대하여 반드시 일상감사를 의뢰하는 등 「금융위 일상감사 실시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 	주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동일시폐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 '주의' 조치하는 한편 감사결과 전직원 공람 	조치완료

지적사항명	조치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조치상황
이첩민원 해소노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산업금융과 민원의 경우 대부분이 신보, 기보, 캠프 관련 민원으로 접수민원의 92% 가량을 해당 공공기관에 이첩. 이는 해당 공공기관에 국민신문고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른 것으로 국민신문고 구축시 신속한 민원회신과 함께 이첩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감소시킬 것으로 판단 ○ [조치요구사항] 산업금융과장은 신보 등에 국민신문고를 구축을 협의함으로써 신속한 민원회신과 함께 이첩에 따른 행정업무를 감소시킬 필요 	권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보등 당해 기관과 협의중 (산업금융과) 	추진중
민원처리기한 미준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처리기한 준수율은 98.3%로 '10년 점검시의 95.8%보다는 개선되었으나, 중앙행정기관 평균 99.5% 보다는 낮음. 또한 일부 서신민원(방문, 우편)의 경우 당해 민원인에게 처리기한 연장통보없이 국민신문고상으로만 연장처리 ○ [조치요구사항] 법정 처리기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서신민원의 처리기한 연장 통보는 반드시 공문 또는 법정 서식에 의한 것 	주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처리기한 등을 준수토록 해당부서에 '주의' 조치하는 한편 감사결과 전직원 공람 	조치완료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4. 최근 3년간, 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제기 현황 및 처리결과

□ 연도별 소송 현황('12.9.5. 기준)

연도	신규접수	종결 처리(확정)					계류 (차년이월)
		계	승소	패소	취하	기타	
2010	29*	13	10	0	3	0	16
2011	27	12	8	1	3	0	31
2012	33	12	7	0	5	0	52
계	89	37	25	1	11	0	-

* 2009년 이월 19건 포함

□ 패소 사건 상세 내역

종결 년도	사건명	심급별 판결 요지	심급별 결과
2011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연대, 서울행정 2007구합35166)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 등 관련 자료 정보공개 청구 거부를 취소 ○이 사건 정보는 진행 중 재판(형사사건)의 쟁점이 아니며, 제3자가 비공개 요청을 한 사유만으로 비공개 대상이 될 수는 없음	1심 : 일부 패
		○1심 판결 요지 원용 ○(추가) 금융위(금감원) 미보유 정보는 각하	2심 : 일부 패
		○2심 판결의 잘못이 없음	3심 : 일부 패

□ 종결 사건 내역('10 ~ '12.9.5)

원고	사건번호 (1심)	사건명	사건내용	소결과 및 종국일
○.○(주)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3961	시정조치처분 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 기재 등으로 제재발자 소제기	2010-04-15 승소
(주)○○에 너지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7855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 기재 등으로 제재발자 소제기	2010-04-15 승소
정○○ 외 4명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60600	손해배상(기)	국가의 '희망모아유동화전문회사' 에 부실감독 책임 주장	2011-01-11 승소
고○○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51066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유가증권신고서 제출하지 않고 투 자자를 모집하여 과징금을 부과받 자 본인이 투자자 모집을 실질적 으로 하지 않았음 주장	2010-07-01 승소
오○○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517	계약이전결정 제외 취소	○○상호저축은행의 5천만원 이상 예금자에 대해 계약이전을 제외하 는 결정은 불법이라고 주장	2010-04-15 승소
장○○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422	감리결과 조치 취소	회계 부실감사로 제재발자 소 제기	2010-02-18 승소
(주)○○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0076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 기재 등으로 제재발자 소제	2011-02-01 승소
박○○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6463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 기재 등으로 제재발자 소제	2011-01-11 승소
○○(주)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6316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 기재 등으로 제재발자 소제	2010-11-24 승소
○○회계 법인 외 3명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9865	감리결과 조치 취소	회계 부실감사로 제재발자 소 제기	2010-03-17 소취하
(주)○○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0858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 기재 등으로 제재발자 소제	2010-08-13 승소
곽○○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1424	금융행정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외 허○○에 대한 신용정보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소 제기	2010-04-22 승소
차○○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4673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주)○○에 대한 과징금부과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 하자 소 제기	2010-06-17 소취하
윤○○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8741	감사보고서감리결 과조치처분 취소	회계 부실감사로 제재발자 소 제기	2010-09-02 승소
김○○	용인지법원 2010차1764	구상금	보험모집인에 대한 국가의 보험업 무 감독소홀이 있었다고 주장	2010-07-16 소취하

원고	사건번호 (1심)	사건명	사건내용	소결과 및 종국일
(주)○○ 외 1명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6834	과징금부과처분취 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 기재 등으로 제제받자 소제	2010-10-08 승소
김○○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4743	조치처분취소	회계 부실감사로 제제받자 소 제기	2011-03-19 소취하
○○저축 은행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6806	부실금융기관지정 취소	유동성 위기를 피하기 위하여 임 의로 임시 휴업 등을 하여 부실금 용기관으로 결정받자 소제기	2011-06-08 승소
이○○ 외 2명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8518	손해배상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정의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을 주장	2011-06-24 소취하
(주)○○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3836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 기재 등으로 제제받자 소제	2011-06-23 승소
○○시멘 트(주)	서울중앙법원 2010가합8360	의결권 확인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 자산운용(주) 주식을 취득하여 의 결권 제한 통보를 하자 소제기	2011-07-28 승소
전국○○ 노동조합 ○○은행 지부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0225	비금융주력자의 한도초과보유지분 처분명령 거부처분 취소	○○펀드Ⅳ의 ○○은행 지분에 대 하여 비금융주력자임을 이유로 처 분을 명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거 부하자 소 제기	2011-07-28 소취하
이○○ 외 150명	서울중앙지법 2010가합56574	손해배상	(주)○○테크놀로지의 회계처리기 준 위반(주식매수청구권 관련) 및 상장폐지 과정에서 국가의 감독소 홀이 있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2011-08-06 승소
○○ 외 1명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2431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 기재 등으로 제제받자 소제	2011-09-06 승소
○○개혁 연대외1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5166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취득 승 인관련 금융비주력자 판단자료 제 공 거부의 취소를 요구	2011-11-24 일부 패소
허○○ 외 1명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8981	부작위위법확인	대주주 사후변경승인 절차가 없음 에도 불구하고 사후변경승인 신청 후 부작위 위법을 주장	2012-04-23 각하
○○시멘 트(주)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9049	대주주 변경승인 조치통보 취소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 ○자산운용(주) 주식을 취득한 데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자 소 제기	2012-04-20 승소
공○○ 외 2명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5001	감사보고서에대한 감리결과조치처분 취소	회계 부실감사로 제제받자 소 제기	2012-04-30 승소
이○○	대전지방법원 2011가단20949	손해배상(기)	민원사항을 지연시키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 다고 주장	2012-05-09 승소

원고	사건번호 (1심)	사건명	사건내용	소결과 및 종국일
백○○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7602	공인회계사직무정 지2년부과처분취소	회계 부실감사로 제제받자 소 제기	2012-04-30 승소
○○리츠 주식회사 외 1명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27689	손해배상(기)	원고에 대하여 주채권은행도 지정 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하지 않 아 원고들이 경영정상화할 기회를 잃게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	2012-05-24 소취하
○○회계 법인 외 3명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5831	감리결과조치통보 처분 취소	회계 부실감사로 제제받자 소 제기	2012-05-23 승소
주식회사 ○○	순천지원 2012가소9568	손해배상(기)	신용카드 상품의 부실한 인허가, 관리, 감독 소홀 등의 잘못이 있다 고 주장	2012-07-11 소취하
○○신용 정보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2970	업무정지처분취소 등	경영상태가 불건전하여 영업정지 받자 소 제기	2012-07-17 소취하
○○은행 우리사주 외 4명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0189	주식취득승인처분 무효확인등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임이 명백 하다고 주장	2012-06-28 승소
진○○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0844	제재처분취소	대주주 부당지원 등으로 퇴직자상 당 조치를 받자 소 제기	2012-08-07 소취하
○○변호 사모임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4191	정보비공개처분취 소	론스타 ISD 제기 의사 통보서 공 개 청구를 거부하자 소 제기	2012-08-20 소취하

□ 진행 사건 내역('12.9.5. 기준)

원고	사건번호 (1심)	사건명	사건내용	소결과 및 종국일
○○저축 은행 외 1명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5684	인가취소 및 해산통보처분 취소	자본잠식 등을 이유로 인가취 소되자 소 제기	파기환송심 진행중
황○○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4499	제재처분 취소	파생상품 리스크관리 소홀 등 으로 퇴직자 상당조치를 받자 소 제기	3심 진행중
○○저축 은행 외 76명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5428	부실금융기관결 정 및 경영개선명령 취소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 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조 치가 위법하다고 주장	2심 진행중
김○○ 외 23명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56779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 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1심 진행중

원고	사건번호 (1심)	사건명	사건내용	소결과 및 종국일
강○○ 외 80명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59563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 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1심 진행중
강○○ 외 123명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59075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 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1심 진행중
강○○ 외 18명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72108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 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1심 진행중
김○○ 외 9명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72771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 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1심 진행중
이○○	서울중앙지법 2011가단29240 0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 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1심 진행중
강○○ 외 192명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84705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 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1심 진행중
강○○ 외 93명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82969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 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1심 진행중
강○○ 외 140명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88295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 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1심 진행중
진○○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10622 3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 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1심 진행중
진○○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10625 4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 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1심 진행중
강○○ 외 31명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50189 4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 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1심 진행중
고○○ 외 11명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50094 5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 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1심 진행중
강○○ 외 26명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50190 0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 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1심 진행중
이○○ 외 9명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2241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 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1심 진행중
강○○ 외 42명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51787 5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 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1심 진행중
강○○ 외 38명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51609 4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 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1심 진행중

원고	사건번호 (1심)	사건명	사건내용	소결과 및 종국일
김○○ 외 12명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51610 0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 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1심 진행중
김○○ 외 133명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43596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 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1심 진행중
전○○ 외 5명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9877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 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1심 진행중
고○○ 외 105명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51790 5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 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1심 진행중
강○○ 외 125명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55247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 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1심 진행중
강○○ 외 54명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55254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 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1심 진행중
정○○	서울중앙지법 2012가소53442 15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 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1심 진행중
이○○	부천지원 2012가합4724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감독의무 위반으 로 5천만원 초과 예금의 일부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	1심 진행중
강○○ 외 189명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70222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 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1심 진행중
○○회계 법인 외 2명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3409	감사업무제한등 처분취소	회계 부실감사로 제제받자 소 제기	1심 진행중
○○회계 법인 외 3명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3416	감사업무제한등 처분취소	회계 부실감사로 제제받자 소 제기	1심 진행중
○○(주)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8878	과징금및가산금 부과처분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 기재 등으 로 제제받자 소 제기	3심 진행중
(주)중○○ ○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1109	과징금부과처분 등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 기재 등으 로 제제받자 소 제기	3심 진행중
○○주식 회사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5889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 기재 등으 로 제제받자 소 제기	2심 진행중
(주)○○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7261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 기재 등으 로 제제받자 소 제기	2심 진행중
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9635	보험설계사등록 취소처분취소	보험료 대납의 방법으로 가입 자에 대해 특별이익을 제공하 여 보험설계사등록이 취소되자 소 제기	2심 진행중
박○○ 외 1명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5237	징계처분취소	회계 부실감사로 제제받자 소 제기	1심 진행중

원고	사건번호 (1심)	사건명	사건내용	소결과 및 종국일
김○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6582	직무정처처분취 소	회계 부실감사로 제제발자 소 제기	1심 진행중
주식회사 ○○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8981	과징금부과처분 등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 기재 등으 로 제제발자 소 제기	1심 진행중
○○신용 정보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5057	신용정보업허가 취소처분취소등	자기자본이 법상 요건에 미달 하여 허가 취소를 받자 소 제 기	2심 진행중
○○생명 보험 주식회사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7305	과징금부과처분 등취소	대주주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과징금 등 제재를 받자 소제기	1심 진행중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8469	과징금부과처분 등취소	대주주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과징금 등 제재를 받자 소제기	1심 진행중
남○○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2423	정보공개거부처 분취소	은행입출금 내역 등 보험사기 와 관련한 입증자료의 정보공 개를 요청하였으나, 위원회 보 유·관리 정보가 아님을 이유 로 거부 처분을 받자 소제기	1심 진행중
여○○	서울중앙지법 2012가단50105 25	채무부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	보이스피싱에 대한 감독의무 위반을 주장	1심 진행중
○○ 노동조합 외 11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6091	법률안 공고 처분 취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의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 축하여 실시하자 행정철자법 위반 등을 주장	1심 진행중
○○회계 법인 외 1명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4996	회계감리결과제 재처분등취소	회계 부실감사로 제제발자 소 제기	1심 진행중
이○○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9236	대표자문책경고 처분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 기재 등으 로 제제발자 소 제기	1심 진행중
주식회사 ○○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0557	조사·감리결과조 치등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 기재 등으 로 제제발자 소 제기	1심 진행중
○○증권 주식회사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2638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 기재 등으 로 제제발자 소 제기	1심 진행중
장○○ 외 1명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2041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 기재 등으 로 제제발자 소 제기	1심 진행중
이○○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3129	제제처분취소	투자신탁 자산운용업무 중의 위 법·부당행위로 퇴직자상당조 치를 받자 소 제기	1심 진행중
○○회계 법인 외 2명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6906	감사업무제한등 처분취소	회계 부실감사로 제제발자 소 제기	1심 진행중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5. 최근 3년간 기관장 이하 임원단의 해외 출장,
교육 등에 대한 현황(사유 포함)

☐ 엑셀 파일 참조

최근 3년간(09.6-12.6)기관장 이하 고위공무원단 해외출장현황 및 사유

출장지 (출장기간)	출장기간		출장인		출장사유	
	출발일	종료일	직급	직명(직급)		
미국, 홍콩	2012.06.09-2012.06.13		대변인	대변인	한-미국 금융협력 MOU 체결	
싱가포르	2010.08.23-2010.08.27		국장	국장	제2차 국장급 금융협력(싱가포르) 방문 프로그램	
호주, 말레이시아	2011.01.26-2010.02.01		상무위원	상무위원	고위급 금융정책 협력자간 만남	
호주, 말레이시아	2011.12.6-2011.21		상무위원	상무위원	고위급 금융정책 협력자간 만남	
프랑크푸르트, 파리	2009.06.29-2009.07.04		국장	국장	선진국 주요 정책금융기관 방문 및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해외 대응방안 논의	
상하이	2010.10.15-2010.10.17		부위원	부위원	중국 국제금융포럼 참석	
			상무위원	상무위원		
영국 런던	2009.08.26-2009.08.29		상무위원	상무위원	FSB 운영위원회 참석	
프랑스 파리	2009.09.13-2009.09.15		위원	위원	FSB 회의 참석	
이탈리아 로마	2009.10.24-2009.10.28		상무위원	상무위원	FSB 운영위원회 참석	
일본 도쿄	2009.12.17-2009.12.18		상무위원	상무위원	한일 고위급 정책회담 참석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부엠티폴로프	2009.12.03-2009.12.12		상무위원	상무위원	제7회 동아시아인퍼런스 참석 및 주로 아시아 금융위기 대응	
스위스 바젤	2010.01.06-2010.01.11		위원	위원	FSB 회의 참석	
중국, 일본, 홍콩	2010.01.19-2010.01.22		상무위원	상무위원	아시아 지역 금융감독인스 참석	
스위스, 영국	2010.03.07-2010.03.11		상무위원	상무위원	FSB 운영위원회 및 제23차 한-영 경제인사회의 참석	
일본 도쿄	2010.03.16-2010.03.17		상무위원	상무위원	한중일 고위급 금융감독 회의 및 세미나 참석	
캐나다 워털루	2010.05.03-2010.05.07		상무위원	상무위원	G20(국제경제부조차신인사) 준비인스 참석	
이탈리아 로마	2010.05.15-2010.05.19		상무위원	상무위원	FSB 운영위원회 및 OECD 한국경제 정책회의 참석	
독일 베를린	2010.05.19-2010.05.21		위원	위원	독일 재무부 주관 국제인사회의 참석	
중국 베이징	2010.05.25-2010.05.27		상무위원	상무위원	아시아 선진국 은행규제 및 금융감독협력인스 참석	
미국 샌프란시스코	2010.06.06-2010.06.10		사무차장	사무차장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주관 아시아인퍼런스 및 은행감독지침의	
오스트리아 비엔나	2010.06.08-2010.06.12		상무위원	상무위원	IMF(국제금융연합회) 관계 회의 참석	
캐나다 오토노, 미국 워싱턴	2010.06.13-2010.06.17		위원	위원	FSB 회의 참석 및 미국금융감독 방문	
독일 프랑크푸르트, 이탈리아 로마, 프랑스 파리	2010.06.29-2010.09.02		상무위원	상무위원	FSB 회장 등 주요 최전방과의 주요 금융관계 회의	
일본 도쿄	2010.9.8		위원	위원	G20 서울정상회의의 금융규제개혁 분야 주요과제에 대한 의견 조율 및 협조회의	
			상무위원	상무위원		
스위스 바젤	2010.09.12-2010.09.15		상무위원	상무위원	FSB 운영위원회의 참석	
프랑스 파리	2010.09.25-2010.09.28		위원	위원	FSB 회의 및 운영위원회의 참석	
중국	2010.11.15-2010.11.17		상무위원	상무위원	아시아 퍼스트 인퍼런스 참석	
카자흐스탄 알마티	2010.12.06-2010.12.09		상무위원	상무위원	한-카자흐스탄 금융협력 심포지엄 참석	
중국	2011.01.16-2011.01.19		상무위원	상무위원	아시아 파이낸셜 포럼(AFP) 참석	
미국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2011.01.20-2011.01.25		상무위원	상무위원	한미재계회의 참석	

주요행사 (행사기간)	행사기간	행사장소	참석인원		주요내용	주요결과
			총인원	주요인원		
미국 워싱턴 아들러(Adler) 호텔	2011.04.09~2011.04.09	신재훈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FSB 회의 참석	FSB 회의 참석
미국 워싱턴	2011.04.16~2011.04.19	이상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가시건립성 결속 관련 국제 컨퍼런스 참석	
스위스 바젤	2011.05.05~2011.05.08	이상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FSB 정례회(금융위원회 회의) 참석	
프랑스 파리	2011.05.11~2011.05.14	김용현	중재위 사무국	국장	금융소비자보호 포럼 개최 참석	
독일 프랑크푸르트	2011.05.06~2011.05.09	이상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FSB 운영위원회 참석	
스위스 바젤	2011.05.19~2011.05.25 2011.05.21~2011.05.25	이상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FSB 정례회(금융위원회 및 신용위 관청의 금융위협회의 회의) 참석	
파리	2011.7.6~2011.7.9	이상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하는 G-20 워크숍 참석	
파리	2011.7.17~2011.7.20	신재훈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FSB 회의 참석	
중국	2011.8.1~2011.8.2	이상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이더링마켓 포럼 참석	
홍콩(비도르)	2011.9.1~2011.9.4	김석훈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홍콩 금융감독국과의 MOU 체결	
워싱턴	2011.9.25~2011.9.28	이상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안정위원회(FSB) 정례회(세계 운영그룹(ReSo) 회의) 참석	
멕시코	2011.9.29~2011.10.4	김용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 포럼 글로벌 파트너십(GPPI) 회의 참석	
취리히	2011.10.1~2011.10.4	추경호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안정위원회(FSB) 회의 참석	
타이완	2011.11.25~2011.11.29	김석훈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안정위원회(FSB) 회의 참석	
뉴욕	2011.11.30~2011.12.3	이상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안정위원회 운영위원회 참석	
하버드	2011.12.6~2011.12.10	이상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4차 안중립 고위급 회담 및 제6차 안중립 금융감독회의 세미나 참석	
바젤	2011.12.17~2011.12.11	이상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FSB 회의 참석	
중국	2012.1.15~2012.1.19	이상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아시아 금융포럼(AFP) 참석	
LA	2012.2.3~2012.2.6	이상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24차 한미 재계회의 참석	
베트남(호찌민)	2012.2.28~2012.3.4	김석훈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안정회의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간의 협력관계 구축 등	
뉴욕	2012.4.15~2012.4.18	이상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Global Financial Services Integration" 컨퍼런스 참석	
바젤	2012.4.25~2012.4.28	이상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안정위원회(FSB) ReSo 회의 참석	
바젤	2012.5.6~2012.5.10	이상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안정위원회(FSB Steering Committee) 및 신용위 리부 그룹 회의(BMDE Review Group Meeting) 참석	
독일 프랑크푸르트, 베이징	2012.5.13~2012.5.18	이상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안정위원회 회의 참석 및 FSC와 중국 은행감독위원회가 공동주최하는 녹색금융 포럼 참석	
베이징	2012.5.22~2012.5.24	이상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2012 중국금융포럼(China Financial Summit) 참석	
상하이(홍콩)	2012.5.27~2012.5.30	추경호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안정위원회(FSB) 회의 참석	
미국(뉴욕)	2012.6.9~2012.6.13	김석훈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대외홍보 활동	
싱가포르	2010.05.10~2010.05.12	권혁세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한국금융 IR	
호주(시드니)	2010.05.12~2010.05.15	최규원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미국(메리랜드)	2010.10.26~2010.10.29	최종구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IAS 연차총회 참석	

주요사업 (주요사업)	주요기간	주요인원	주요내용	주요결과	주요비고	주요비고
상기프로젝트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2011.11.27~2011.11.29	김수원	금융위원회	국무총리	상기프로젝트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상기프로젝트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2012.6.15~2012.6.23	정지영	금융위원회	국무총리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2009.09.07~2009.09.08	이창훈	금융위원회	국무총리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2009.09.07~2009.09.10	김주원	금융위원회	국무총리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2010.06.06~2010.06.13	최규원	금융위원회	국무총리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2010.09.08~2010.09.11	김주원	금융위원회	국무총리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2010.10.07~2010.10.11	최규원	금융위원회	국무총리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2011.09.27~2011.10.01	홍영민	금융위원회	국무총리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2011.10.17~2011.10.18	김주원	금융위원회	국무총리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2011.12.06~2011.12.07	김주원	금융위원회	국무총리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2012.04.17~2012.04.19	유재훈	금융위원회	국무총리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2012.05.13~2012.05.17	최규원	금융위원회	국무총리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2012.06.03~2012.06.06	유재훈	금융위원회	국무총리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2009.02.22~2009.03.01	김주원	금융위원회	국무총리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2009.05.28~2009.05.29	김주원	금융위원회	국무총리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2009.06.21~2009.06.26	김주원	금융위원회	국무총리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2009.10.12~2009.10.16	김주원	금융위원회	국무총리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2010.02.14~2010.02.20	최수원	금융위원회	국무총리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2010.02.28~2010.03.06	최수원	금융위원회	국무총리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2010.06.26~2010.07.04	최수원	금융위원회	국무총리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2010.07.11~2010.07.17	최수원	금융위원회	국무총리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2010.10.17~2010.10.22	최수원	금융위원회	국무총리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2010.11.08~2010.11.11	최수원	금융위원회	국무총리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2011.05.05~2011.05.13	김주원	금융위원회	국무총리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2012.02.13~2012.02.19	박재식	금융위원회	국무총리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2012.05.27~2012.05.31	박재식	금융위원회	국무총리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2012.06.17~2012.06.23	박재식	금융위원회	국무총리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2012.07.14~2012.07.21	박재식	금융위원회	국무총리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2012.12.27~2012.12.31	김주원	금융위원회	국무총리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글로벌 리얼리티(이론)

출장지 (출장기관)	출장기간	명 단			출 장 사 유
		출장자	소속	직위(직급)	
태국, 홍콩	12.06.09 ~12.06.13	이병래	대변인실	대변인	한-태국 금융당국 MOU 체결
싱가포르	2010.08.23 ~2010.08.27	정지원	기획조정관	국장	제3차 국장급 공무원 싱가포르 방문 프로그램
호주, 말레이시아	2011.01.26 ~2010.02.01	채희율 최명수	금융위원회 의사운영정보팀	상임위원 팀장	고위급 금융정책 당국자간 면담
호주, 말레이시아	11.1.26~2.1	채희율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고위급 금융정책 당국자간 면담
상하이	2010.10.15 ~2010.10.17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중국 국제금융포럼 참석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6. 최근 3년간 기관장 이하 고위공무원단의 일반 기업(금융기관 포함) 취업 현황

□ 최근 3년간 고위공무원단 이상 취업현황

연도	퇴직일	이름	직위/직급	재취업처 및 직위
2009	'09.01.20	전○○	위원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09.11.17	김○○	원장	한국증권금융 사장
	'09.11.19	이○○	부위원장	아시아개발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2010	'10.04.15	임○○	상임위원	금융통화위원
2011	'11.01.03	진○○	위원장	송실대 객원교수
	'11.02.16	최○○	원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11.03.27	권○○	부위원장	금융감독원장
	'11.03.28	이○○	상임위원	법무법인 변호사
	'11.05.02	김○○	고위공무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2012	'12.05.26	김○○	사무처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12.07.02	진○○	고위공무원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7. 최근 3년간, 국회에 보고했던 현안 관련 자료

☐ 별첨참고

우리금융지주 매각 관련 현안보고

2011. 5. 27



금융위원회

I. 추진배경 및 논의경과

1. 추진배경
2. 논의경과

II. 매각 재추진 방안 주요내용

1. 기본방향
2. 지주사 일괄매각 추진
3. 최소입찰규모 : 30%

III. 향후 추진계획

참고 1. 우리금융지주 현황

참고 2. 2010년 매각방안 주요 내용

I. 추진배경 및 논의경과

1 추진배경

- '10.12.17. 매각절차 중단 이후 우리금융지주 매각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감안, 조속히 매각절차를 재개할 필요
-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빠른 민영화에 대한 기대가 크며
- 중단된 매각절차를 신속히 재개함으로써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우리금융지주 매각 추진의 모멘텀을 이어갈 필요성이 큰 상황

2 논의경과

- 작년 12월 매각절차 중단 이후 공자위와 매각소위는 여러 차례의 간담회, 워크숍, 주관사 회의 등을 통해 작년에 추진했던 매각계획 전반에 대해 재검토
- 그동안 M&A 재추진 여건, 분산매각 가능성, 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폭넓고 심도 있게 검토
- 아울러, 매각주관사를 중심으로 M&A 시장여건 및 투자자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 '11.5.17.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민상기, 김석동)에서 「우리금융지주 매각 재추진 방안」 의결

Ⅱ. 매각 재추진 방안 주요내용

1 기본방향

- ◇ '10년 매각 추진시의 기본 원칙 등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 매각중단 이후 변화한 시장상황 및 그간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현 상황에 적합하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

1. 기본 원칙

- ☐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빠른 민영화,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각 추진

* 금융지주회사법 부칙(제6274호) 제6조 ('08.3.28. 전문개정)

-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을 추진함으로써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내외 투자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
- 예비입찰을 통해 최종입찰대상자를 선정한 후 최종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2단계 입찰방식으로 진행
- '10년과 동일하게 인수 또는 합병(인수 및 합병 포함) 허용

2. MOU 완화 또는 해지

- ☐ 예보지분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MOU 완화 또는 해지 추진
 - 합병 등의 결과 예보가 최대주주로 남게 되는 경우에도 필요시 공자위 의결을 거쳐 MOU 완화 또는 해지 추진

2 제주사 일괄매각 추진

< '10년 병행매각 추진에 대한 평가 >

□ 지주회사와 지방은행(경남·광주은행)의 매각을 병행 추진

- 지주회사 전체의 매수희망자와 지방은행 매수희망자의 제안을 받아본 후 공적자금회수 극대화가 될 경우 분리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그러나 병행매각을 추진해 본 결과

- ① 예상보다 매각절차가 복잡하였으며, 추진과정의 불확실성이 크게 나타남
- ② 지주회사 규모 축소에 따른 매각의 용이성 제고 및 유효경쟁 여건조성 등 긍정적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
- ③ 지주회사 입찰자의 경우 4가지 가격*을 제시해야 하는 부담

* 우리, 우리 1(경남 제외), 우리 2(광주 제외), 우리 3(경남 및 광주 제외)

< '11년 매각 재추진 방안 >

□ 지방은행을 분리하지 않고 지주회사 전체를 일괄매각

- 일괄매각 방식은 병행매각 방식에 비해 매각절차가 단순하고 추진과정의 불확실성도 낮아 실행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제도 개선 등으로 전략적 투자자들의 입찰 참가 유인이 증가될 경우 경쟁 증대를 통해 지주회사 전체에 대한 프리미엄 획득 가능 (매각주관사단 의견)

< '10년 최소입찰규모에 대한 평가 >

- '10년 매각시 경영권 매각을 목표로 하였으나, 입찰참가의
향서 접수단계에서는 입찰참가 대상 확대를 위해 최소
입찰규모를 4%로 설정하고,
 - 예비입찰 단계에서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해 경영권 매
각을 위한 지분을 인수토록 할 계획이었음
- '10.11월 입찰참가의향서 접수 결과, 경영권 인수 의
사가 없는 소수지분 입찰자들이 다수 참여
 - 컨소시엄 구성, 유효경쟁 여건 조성 등 당초 기대
했던 효과는 미미하였으며, 일부 투자자는 분산매
각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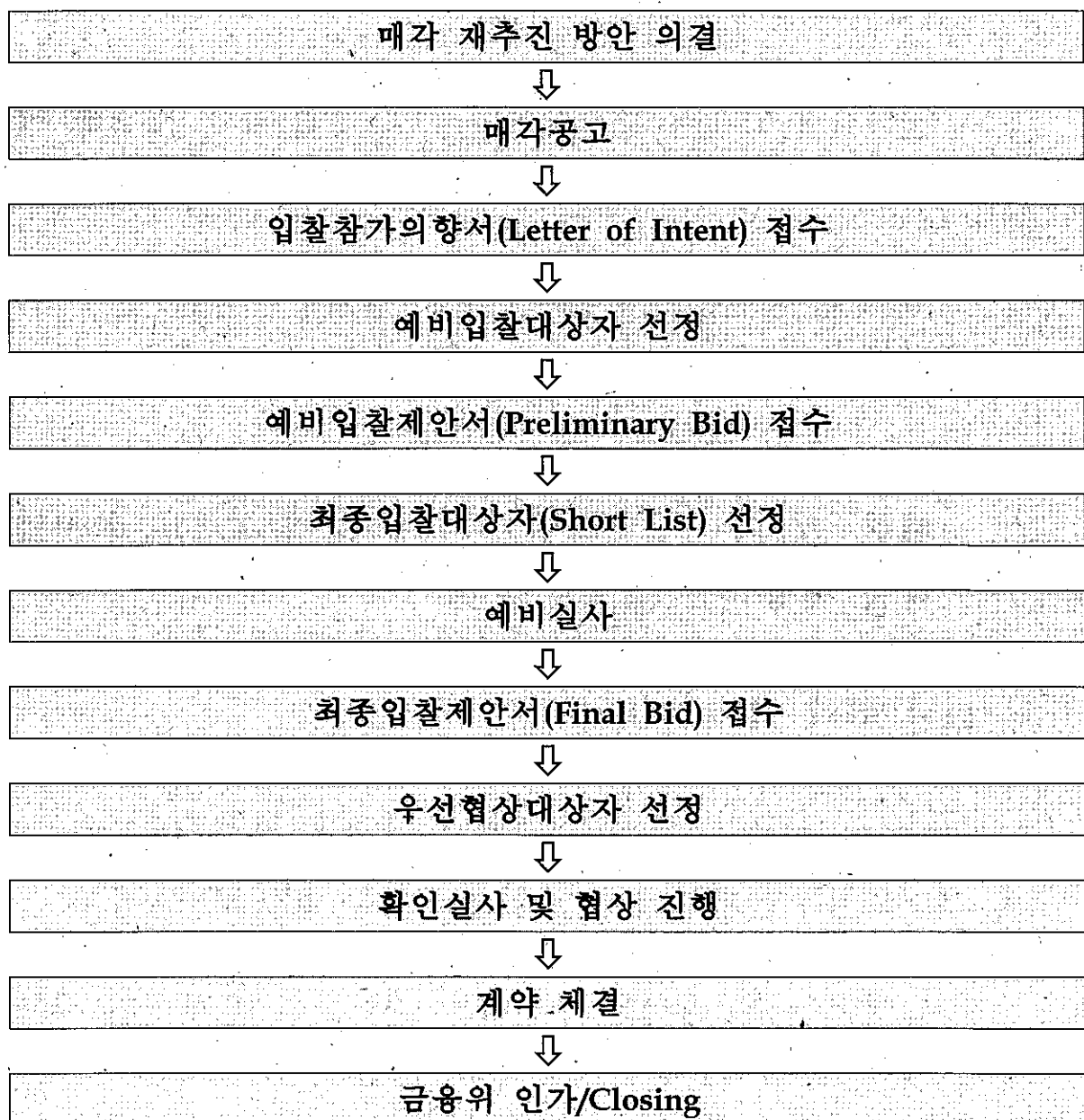
< '11년 매각 재추진 방안 >

- 경영권 지분 매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의
향서 접수단계부터 최소입찰규모를 30%로 설정
 - 경영권 지분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측면
에서 '10년 매각추진방식과 동일

Ⅲ. 향후 추진계획

- 5.18일 조간에 매각공고를 실시하였으며, 6주간(5.18~6.29) 입찰참가의향서(LOI)를 접수할 예정

< 향후 주요 추진절차 >



참고 1

우리금융지주 현황

1 일반 현황

- (설립 경과)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빛은행 등 5개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최초의 금융지주회사로 출범('01.4.2)

* 한빛 · 평화 · 경남 · 광주은행, 하나로증권(영남, 한스, 한국, 중앙증권)

- (경영 현황) '10년말 현재 총자산 291조원(국내 1위)

* '09년말 총자산 기준 세계 79위, 아시아 20위(자료: The Banker, '10.7월)

- (주주 현황) 예보 56.97%, 국민연금 4.69%, 미래에셋 3.04% 등

* ADR은 전체 지분의 1.08%('10년말 기준)로 NYSE에서 거래 중

- (자회사) 10개 자회사 및 46개 손자회사로 구성

우리금융지주 및 자회사 주요 현황

('10년말 기준, 단위 : 억원, %, 명, 개)

금융회사명	총자산	자기자본	지분율	임직원수	점포수	자회사수	비고
우리금융지주	2,914,276	169,188	-	22,491	1,398		상장
우리은행	2,426,048	141,839	100	14,376	917	7	
경남은행	246,171	15,304	99.99	1,940	149	-	
광주은행	181,982	10,640	99.99	1,321	140	-	
우리투자증권	170,095	25,879	34.96	2,943	128	18	상장
우리파이낸셜	27,767	2,355	52.52	332	15	-	상장
우리아비비생명보험	23,778	1,495	51.58	318	44	-	
우리F&I	10,355	1,929	100	20	1	19	
우리금융정보시스템	2,205	135	100	684	1	-	
우리자산운용	843	629	100	115	1	-	
우리PE	274	259	100	23	1	2	

※ 11.3.16 우리금융저축은행이 자회사로 신규 편입

2 | 우리금융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 현황

□ (지원) 약 12.8조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01.4월 우리금융지주 지분 100%를 취득

□ (회수) '10년말 현재 약 5.4조원을 회수(회수율 41.9%)

- 공모 및 4차례의 블록세일 등을 통해 일부 지분을 매각하고 현재 지분 56.97%* 보유

* '11.5.25 종가(13,150원) 기준 약 6.04조원(459백만주)

우리금융지주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현황

(‘10년말 현재, 단위 : 억원)

지 원				회 수	
회사	출자	출연	계		
한빛	60,286	18,772	79,058	국내 상장 공모 (‘02.6월, 주당 6,800원)	3,672
평화	4,930	3,386	8,316	1차 블록세일(‘04.9월, 주당 7,200원)	3,240
경남	2,590	938	3,528	2차 블록세일(‘07.6월, 주당 22,750원)	9,168
광주	1,704	2,714	4,418	3차 블록세일(‘09.11월, 주당 15,350원)	8,660
				4차 블록세일(‘10.4월, 주당 16,000원)	11,606
				소 계	36,347
하나로 종금	24,912	7,431	32,343	배 당 금	10,240
				파산배당금 등	6,946
합계	94,422	33,241	127,663	53,533(회수율 : 41.9%)	

참고 2

2010년 매각방안 주요 내용

① 기본원칙

-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빠른 민영화,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되, 2단계 입찰방식(예비입찰·최종입찰)으로 진행

② 지주회사-지방은행 매각 병행추진

- 지주회사와 지방은행(경남·광주은행)의 매각을 병행 추진

③ 매각입찰구조

- (우리금융지주) 4% 이상 매각 또는 합병
 - 민간의 책임경영이 가능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매각추진
- (경남·광주은행) 50%+1주 이상 매각 또는 합병

④ MOU 완화 또는 해지

- 공사 보유 지분 매각 진전추이에 따라 MOU 완화 또는 해지를 추진

저축은행 관련 현안보고

2011. 5. 27



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I. 저축은행 구조조정 추진 현황

II. 저축은행 제도개선 방향

1. 경영건전화를 위한 감독 강화
2. 저축은행의 경쟁력 제고

III. 기타 주요 현안

1. 예금 부당인출 관련
2. 저축은행에 대한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 유예
3. 저축은행 PF채권 자산관리공사(구조조정기금) 매각

I. 저축은행 구조조정 추진 현황

- 금년 1~2월 중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 중 1개사(삼화)는 매각 완료*, 7개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절차 진행 중

* 삼화저축은행(1.14일 영업정지)의 경우 우리금융저축은행(우리금융지주 회사)에 계약이전 방식으로 매각되었고 3.25일부터 영업재개

-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2.17~4.6) 결과 BIS 비율이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자본도 완전잠식

	부산	부산2	중앙부산	대전	전주	보해	도민
BIS비율(%)	△50.3	△43.4	△28.5	△25.39	△11.6	△91.4	△5.5
순자산(억원)	△16,800	△8,557	△1,120	△2,263	△432	△4,381	△135

- 이에 사전통지 절차, 경영개선계획 심의 등 적법절차를 거쳐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 부과*(4.29)

* 증자명령(6.14일까지 45일간), 영업정지, 임원 직무정지, 관리인 선임 등

- 자체 정상화 추진기간 중 예보를 중심으로 매각 절차 병행 추진

- 현재 7개 저축은행에 대한 매도자 실사를 진행 중(5.2~5.27 예정)

- 다만,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인원 40여명이 부산저축은행 본점을 무단 점거(5.9)하여 실사 중단

- 예보는 재무자문사 협의를 거쳐 입찰 참가자격, 일괄(Package) 매각 등에 대해 입찰 공고(5.24)

- 5월 중 인수의향서 접수, 6~7월 중 매수자 실사 및 입찰에 의한 인수자 선정 등을 거쳐 8월 중 계약이전 등 매각 마무리

- 저축은행이 건전한 서민금융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 방안 등 하반기 종합적 마스터플랜 마련 추진

II. 저축은행 제도개선 방향

1 경영건전화를 위한 감독 강화

☐ 대주주 私金庫化 방지

- 금융회사 임직원 이외에 대주주 및 관계자에 대한 직접 검사·조사제도 도입 및 대주주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강화
- 감독당국 퇴직자의 감사취업을 제한하고 감사 보고서 제출 의무화, 부실감사 제재 강화 등 감사 역할·책임을 대폭 강화

☐ 과도한 외형 확장 억제 및 건전 경영 유도

- 우량저축은행의 동일인 여신한도 우대조치 폐지
- 계열단위 유가증권 투자한도 신설 등 연결 감독 강화

☐ 회계투명성 제고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재무제표 공시주기 단축(반기→분기), PF대출 현황 등 공시 항목 확대 및 허위·지연 공시에 대한 제재 강화
- 자본력 등 적격 요건 충족시에 한해 공모 발행을 허용하는 등 과도한 후순위채 발행 억제

☐ 부실책임 규명 및 검사 역량 강화

- 금감원·예보 공동검사 지속 확대, 금감원 - 예보간 교차 검사 및 예보 단독 조사권 활성화 방안 검토

* 공동검사 대상 : ('08) 6회 → ('09) 12회 → ('10) 20회 → ('11) 24회

2 저축은행의 경쟁력 제고

☐ 서민대출 창구 확대,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확대 등을 통한 서민금융기능 활성화 및 여신심사능력 제고

※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방안 마련

Ⅲ. 기타 주요 현안

1 예금 부당인출 관련

- ☐ 금감원 검사 후 금융실명법, 저축은행법 등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해 엄중 제재 추진 중
- ☐ 예금자의 정당한 계약의 자유(예금계약 해지)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당인출 방지 방안 마련
 - 저축은행 임직원·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해 영업정지 예정사실 등 미공개정보 누설금지 규정 신설
 - 유동성 부족에 따른 영업정지 기준 해당여부 파악 등을 위해 예금인출 및 가용자금 현황 등 보고 의무 신설
- ☐ 한편, 예보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대주주·경영진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추가 재산환수 방안도 추진

2 저축은행에 대한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 유예

- ☐ 금융시장의 안정과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국제적인 IFRS 개정논의 등을 감안해 저축은행에 대한 IFRS 적용을 5년간 유예('11.7.1 → '16.7.1)
 - ※ 그 동안 건설·조선업의 특징을 감안하여 부채비율이 상승하지 않도록 적용지침 마련('10.7), 세부담 증가 방지를 위한 세법 개정('10.12) 등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기업들의 애로 해소
 - 저축은행에 대한 IFRS 적용일인 '11.7.1일 이전까지 외감법 시행령 개정 추진

3

저축은행 PF채권 자산관리공사(구조조정기금) 매각

- '08년 이후 2차례에 걸쳐 PF대출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 후 자산관리공사(고유계정 및 구조조정기금)에 부실채권 매각('11.3월 기준 매각 잔액 5.2조원)

* 1,2차 매각(1.5조원) : 실태조사('08.9~10월) → 매각('08.12월, '09.3월)
3차 매각(3.7조원) : 실태조사('10.4월) → 매각('10.6월)

- 금년에도 저축은행 PF대출('11.3월 기준 7조원)과 관련된 89개 저축은행 468개 PF사업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거쳐 조기(6월중) 매각 추진

- 전수조사는 금감원 PF상시감시시스템('11.1월부터 운영)을 활용한 점검과 현장 조사를 병행하여 보다 엄격하게 평가
- 매입재원으로는 국회 동의를 거쳐 조성한 구조조정기금 3.5조원을 활용

저축은행 PF대출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05말	'06말	'07말	'08말	'09말	'10.6말 ¹⁾	'10.12말
잔액	6.3	11.6	12.1	11.5	11.8	11.9	12.2
(매각 포함)				(11.8)	(13.3)	(17.2)	(17.4)
총 대출 비중	17.9	27.4	25.6	20.9	18.2	19.2	18.9
(매각 포함)				(21.4)	(20.1)	(25.5)	(27.0)

주 1) '10.6월중 PF성 일반대출 3.1조원이 PF대출로 재분류

2) ()내는 자산관리공사 매각분 포함('08.12월 0.3조원, '09.3월 1.2조원, '10.6월 3.7조원)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2011. 8. 9



금융위원회

I. 국제 금융시장 동향

II. 국내 금융시장 동향

<참고1>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III. '08년 위기이후 외환건전성 등 제고
노력 및 효과**

IV. 평가 및 전망

V. 대응방향

<참고2> 미국·유럽 경제상황 및 전망

<참고3> 주요국 신용등급 현황

I. 국제 금융시장 동향

1 최근 동향

◇ 8월 들어 글로벌 경기둔화 가능성, 유럽 재정위기 우려 등으로 글로벌 주가 급락 및 달러화 강세

① (주가) 美 더블딥 우려 등으로 美 주가는 8.2~8일 동안 10.9% 하락(8.2~8일간 변동률 : 英 Δ 12.2%, 獨 Δ 14.8%, 佛 Δ 12.9%)

* 美 Dow : (7월말)12,143 (8.2)11,867 (8.3)11,896 (8.4)11,384 (8.5)11,445 (8.8)10,809
獨 Dax : (7월말) 7,159 (8.2) 6,797 (8.3) 6,641 (8.4) 6,415 (8.5) 6,236 (8.8) 5,923

② (환율) 8월중 달러화는 글로벌 경기둔화 가능성 대두, 유럽 재정위기 우려 확산 등으로 전월 대비 소폭 강세

* 달러/유로 : (7월말)1.4399 (8.2)1.4203 (8.3)1.4323 (8.4)1.4092 (8.5)1.4282 (8.8)1.4179
엔 /달러 : (7월말) 76.8 (8.2) 77.2 (8.3) 77.1 (8.4) 78.9 (8.5) 78.4 (8.8) 77.8
달러Index: (7월말) 73.9 (8.2) 74.5 (8.3) 74.0 (8.4) 75.1 (8.5) 74.6 (8.8) 74.9

③ (금리) 8월중 美 국채금리(10년물)는 글로벌 경기둔화 전망 등으로 안전자산 매수세가 유입되며 하락세

* 美 국채금리(10년물, %) : (7월말)2.80 (8.2)2.61 (8.3)2.62 (8.4)2.40 (8.5)2.56 (8.8)2.32

○ 이탈리아·스페인 CDS 프리미엄*은 8.4일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뒤, ECB의 국채매입 발표(8.5) 이후 하락세

* CDS(bp) : <그 리 스> (7월말)1700 (8.2)1711 (8.3)1714 (8.4)1716 (8.5)1691 (8.8)1657
<이탈리아> (7월말) 316 (8.2) 360 (8.3) 366 (8.4) 390 (8.5) 387 (8.8) 344
<스 페 인> (7월말) 365 (8.2) 407 (8.3) 418 (8.4) 430 (8.5) 408 (8.8) 353

2 최근 변동성 확대 배경

◇ 최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美 더블딥 우려·유럽 재정불안·美 신용등급 강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① (美 신용등급 강등) 8.5일, S&P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AAA→AA+) 하향조정하며 부정적 전망을 유지

○ S&P는 미흡한 재정적자 감축안*(최대 24조달러), 정치과정의 비효율성 등을 이유로 美 신용등급을 강등

* S&P는 그동안 4조달러 이상의 재정지출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

② (美 더블딥 가능성) 최근 美 경제지표가 시장예상을 하회하면서, 美 더블딥 가능성이 대두

○ 2/4분기 성장률이 예상을 하회한 데다 1/4분기 성장률도 대폭 하향조정되고, 생산과 소비지수도 전월 대비 하락

* 성장률(전기비연율, %): (1/4분기) 1.9→0.4% 하향, (2/4분기) 1.8^e→1.3%

* ISM 제조업 활동지수(기준=50) : ('11.1/4)61.1 (5)53.5 (6)55.3 (7)50.9

* 소비심리지수 : ('11.1/4)73.1 (4) (5)71.9 (5)74.3 (6)71.5 (7)63.7

○ 다만, 고용사정은 7월중 취업자수 증가폭이 예상보다 확대되고, 실업률이 소폭 하락하는 등 다소 개선

* 취업자수(만명): (3월)19.4 → (4월)21.7 → (5월)5.3 → (6월)4.6 → (7월)11.7

실업률(%) : (3월)8.8 → (4월)9.0 → (5월)9.1 → (6월)9.2 → (7월)9.1

③ (유럽 재정위기) 그리스 2차 구제금융안이 합의*(7.21)되었지만, 스페인·이탈리아 등으로의 재정위기 확산 우려 제기

* 그리스 2차 구제금융 합의안: EU-IMF 1,090억유로, 민간참여 500억유로

○ 최근 이탈리아·스페인 국채금리(10년물)가 6%를 상회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

II. 국내 금융시장 동향

◇ 8월 들어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주식시장 등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

1. 주식시장

□ (주가) 8월 들어 KOSPI는 美 더블딥 우려, 유럽 재정불안, 美 신용등급 강등의 영향으로 급락

* 8.2일 이후 KOSPI 지수 $\Delta 302p$ 하락, 시가총액 약 $\Delta 171$ 조원 감소

○ 8.8일, 美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개인 투매로 인해 '09.11월($\Delta 4.69\%$, 두바이월드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최대 폭 하락($\Delta 3.82\%$)

* KOSPI: 매도 사이드캐(직전 '09.1.15), KOSDAQ: 서킷브레이커(직전 '08.10.24)

<참고> 8.2~8일간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8~15%대 급락을 보인 가운데, 한국($\Delta 13.9\%$)은 프랑스·독일* 등과 함께 하락폭이 큰 편

* 佛·獨(유로존 위기 증폭), 韓(자동차 및 IT 등 경기민감 업종 집중)

< 주요국 증시 지수 등락 현황(%) >

기간	미국		유로존			아시아			
	DOW	NASDAQ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8/2~8/8	$\Delta 10.9$	$\Delta 14.1$	$\Delta 12.2$	$\Delta 12.9$	$\Delta 14.8$	$\Delta 8.7$	$\Delta 13.2$	$\Delta 9.6$	$\Delta 10.3$

□ (외국인 동향) 외국인은 美 디폴트 우려 등이 제기된 7.12일 이후 지속적으로 순매도

* 국가별 국내주식 순매수액(조원, '11.1~7월):

(미국)+6.5 (영국) $\Delta 4.7$ (유럽-영국제외) $\Delta 3.1$ (아시아)+1.8 (중동)+0.3

○ 특히, 美 부채한도 합의(8.2일) 이후 집중 순매도

* 외국인 순매수(코스피+코스닥, 조원) : (7.12~8.8) $\Delta 4.1$ (8.2~8.8) $\Delta 2.3$

2

채권시장

□ (금리) 8월 들어 국고채 금리는 위험자산 기피현상 확대 등으로 국채 매수세가 지속 유입되면서 큰 폭 하락

* 8.1일 → 8.8일(%) : (국고 3년) 3.90 → 3.60, (국고10년) 4.24 → 4.06

□ (외국인 동향) 금년중 외국인은 국내채권을 지속 순투자

* 국가별 국내채권 순투자(조원, '11.1~7월):

(중국)+2.4 (룩셈부르크)+2.2 (미국)1.6 (카자흐스탄)1.2 (태국)△3.0 등

○ 8월에도 외국인은 9,854억원의 채권*을 순매수

* 외국인 현물채권 순매수 규모(억원) : (8.1~5일)2,523 (8일)7,331

3

외환시장

□ '11년중 원/달러 환율은 수출호조, 글로벌 달러 약세*, 외국인 채권자금 순유입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 美 QE2 종료 후 통화정책 완화 유지, 美 부채한도 증액 협상 난항 등에 기인

** 7.27일 장중 1,049원을 기록하며 '08.8.21일 이후 최저치 갱신

○ 8월 이후 美 더블딥 우려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달러 강세)되며 상승세 전환

* 원/달러 : (10말)1,135 (11.6말)1,068 (7말)1,058 (8.4)1,062 (8.5)1,067 (8.8)1,082

□ 원/엔 환율은 상승세를 보이다 8월초 日 정부 개입(8.4일) 등으로 하락하였으나,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으로 상승 전환

* 원/100엔 : (10말)1,398 (11.6말)1,325 (7말)1,374 (8.4)1,346 (8.5)1,361 (8.8)1,392

4 외화 자금시장

◇ '11년중 외화차입 여건은 대체적으로 안정적 유지

□ (국내은행 외화차입) 국내은행의 외화차입은 금년중 소폭 증가하였으나, '08년말 보다 △109억달러 감소

< 국내은행의 외화차입 규모(억달러) >

구 분	'08말(A)	'09말	'10말	'11.6말(B)	증감(B-A)
외화차입 계	1,277 (100%)	1,139 (100%)	1,141 (100%)	1,168 (100%)	△109 (-)
유럽	331 (26%)	350 (31%)	403 (35%)	421 (36%)	+90 (+10%p)
북미	308 (24%)	334 (29%)	316 (28%)	324 (28%)	+16 (△4%p)
아시아	626 (49%)	440 (39%)	416 (36%)	408 (35%)	△218 (△10%p)

* 외화차입(본점+국외점포) = 외화콜머니+외화차입금+외화채권+RP, ()내는 비중

□ (차환율) 7월중 국내은행의 단기차입금 중 상당부분이 장기로 전환되어 외화차입 구조가 개선

< 국내은행의 장·단기차입 차환율(기간중, %) >

	09년	10년	1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단기차입 차환율 ¹⁾	99.9	91.3	89.3	91.5	88.0	121.6	63.2	94.9	107.4	67.3
중장기차입 차환율 ²⁾	155.5	118.1	123.1	72.1	96.3	262.4	130.3	52.4	110.6	195.3

1) 약정만기 2일~1년 이내 차입금 2) 약정만기 1년 초과

□ (외환 건전성) 7월말 국내은행 외화유동성 비율은 101.4%로 규제비율(85%)을 상당폭 상회

< 국내은행의 외환건전성 비율 현황(기간말, %, %p) >

지도비율	09년말	10년말	11.5말	6말	7말 ^p	지도비율 대비
외화유동성비율(≥85%)	105.1	99.3	99.1	99.8	101.4	+16.4
7일갭 비율(≥△3%)	2.8	1.2	1.0	1.3	1.5	+4.5
1개월갭 비율(≥△10%)	1.1	-0.3	0.0	0.1	1.4	+11.4

참고 1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동향

◇ 금년 1~7월중 외국인은 국내주식은 순매도($\Delta 0.3$ 조원), 국내채권은 순투자(9.6조원)

□ (주식투자) 금년중 유럽 재정위기, 선진국 경기침체 우려 등의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외국인 주식 투자자금 순유출

○ 7월 중순 이후 유럽 재정 우려, 美 부채한도 증액 문제 등으로, 8월 들어서는 美 더블딥 우려 등으로 순유출 확대

○ 영국($\Delta 4.6$ 조원), 독일($\Delta 0.8$ 조원), 일본($\Delta 0.6$ 조원) 등은 순유출을 보인 반면, 미국(6.9조원), 중국(1.1조원) 등은 순유입

□ (채권투자) 금년중 외국인은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원화 절상 기대 등으로 국내채권에 지속적 순투자

○ 룩셈부르크(22조원), 미국(1.6조원), 독일(1.4조원) 등은 순유입을 보인 반면, 태국($\Delta 3.0$ 조원), 영국($\Delta 1.0$ 조원) 등은 순유출

○ 특히, 중국(2.4조원)이 외환 보유고 통화 다변화 등의 목적으로 국내 채권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 작년에는 국내 채권에 관심이 적었던 싱가포르('10년: $\Delta 1.2$ 조원, '11년: 2.3조원), 카자흐스탄('10년: 0원, '11년: 1.2조원) 등이 순유입 기록

<외국인 주식 순매수 및 채권 순투자 현황>

(단위: 조원, %)

	10년	1~7월	11년	상반기	7월	11.7월말 잔액(비중)
주식	22.9	8.8	$\Delta 0.3$	$\Delta 2.4$	2.2	399.3 (30.2)
채권	16.9	15.1	9.6	6.7	2.9	84.2 (7.2)
합계	39.8	23.9	9.3	4.3	5.1	483.5

* 금융감독원 기준 * 순투자 = 순매수 - 만기상환

Ⅲ. '08년 위기이후 외환건전성 등 제고 노력 및 효과

◇ '08년 위기이후 대외·은행부문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대외·은행부문 대응능력이 한층 제고

1 건전성 제고 노력

① 은행부문 외환건전성 규제 강화(1차: '10.1월, 2차: '10.7월)

-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 강화^①, 중장기 외화대출 조달비율 규제 강화^②, 외화안전자산 보유제도 도입^③ 등

* ① 자산유형별 유동화 가중치 적용, ② 비율(중장기재원/중장기대출) 상향조정 (80% → 100%) ③ 총외화자산의 2%이상 안전자산 보유 의무화 등

②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 도입('10.10월) 및 강화('11.7월)

- '11.7월, 자기자본대비 선물환포지션 규모를 국내은행의 경우 40%, 외은지점은 200%로 강화

③ 외환건전성부담금(은행제) 도입('11.8월 시행)

- 은행 비예금 외화부채에 대해 만기에 따라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차등 부과(1년 이내 20bp ~ 5년초과 2bp)

④ '원화용도' 김치본드 투자제한('11.7월), 여전사 외화차입 축소('11.7월) 등 불요불급한 외화차입 증가 억제 조치

* 김치본드 발행액 추이(억불) : ('09) 77.8, ('10) 61.9, ('11.3) 16.8, ('11.6) 1.2

* 여전사 외화부채(억불) : ('08말) 112.9, ('09말) 94.8 ('10말) 107.7, ('11.3) 132.3

⑤ 예대율 규제 도입('14.1월→'12.7월 시행시기 단축)

- 원화대출금이 2조원 이상인 은행을 대상으로 예대율(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을 100% 미만 유지

2 효과

- 그간의 조치 등으로 대외부문과 은행부문의 경우 '08년 위기직전에 비해 건전성과 대응능력이 한층 제고
- (대외부문)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07말 48%, '08.9월말 52%, '11.3월말 38% 수준으로 대폭 감소
- 은행부문 외채도 단기외채를 중심으로 큰 폭 감소

(단위 : 억불)

	07년말	08.9월말(A)	11.3월말(B)	증감(B-A)
총외채(a)	3,334	3,651	3,819	168
단기외채(b)	1,603	1,896	1,467	△429
단기외채 비율(b/a)	48.1%	51.9%	38.4%	△13.5%
외환보유액	2,622	2,397	2,986	589
단기외채/외환보유액	61.1%	79.1%	49.1%	△30.0%
은행부문외채	1,929	2,195	1,919	△276
국내은행	1,090	1,221	1,155	△66
- 단기	546	655	485	△170
(비중)	(50.1%)	(53.6%)	(42.0%)	(△11.6%)
외은지점	839	974	764	△210
- 단기	794	939	666	△273
(비중)	(94.5%)	(96.4%)	(87.2%)	(△9.2%)

* 외환보유고: ('08.8말) 2,432억불, ('11.7말) 3,110억불

- (은행부문) 예대율의 경우 규제수준인 100% 미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BIS비율 등도 대폭 상승
- 외화유동성 비율의 경우 지도기준인 85%를 지속 상회

	'08년 위기전 ('08.8말)	현재 상황 ('11.6말)	증감
예대율(CD 제외)	124.0%	97.8%	△26.2%
BIS 비율	11.36% ¹⁾	14.34% ²⁾	+2.98%
기본자기자본 비율	8.50% ¹⁾	11.28% ²⁾	+2.78%
외화유동성 비율	102.7% ³⁾	100.3%	△2.4%

1) '08.6말, 2) '11.3말, 3) '07.12말(유동화가중치 미적용)

IV. 평가 및 전망

- ① 최근 금융시장 불안은 국내요인 보다는 美·유럽 등 선진국 시장의 경기 하방리스크와 부채문제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
 - 최근 주식시장의 외국인 매도세 확대는 차익실현 목적과 더불어 글로벌 경기둔화를 대비한 유동성 확보 과정으로 관측
- ② '08년 금융위기와 다른 점은 '실물'부문 침체 우려가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에 투영된 결과라는 것
 - 최근 금융불안은 금융문제가 아니라, 국가부채나 성장동력 약화와 같은 경제 펀더멘탈에 관한 문제에서 야기
 - 또한, 해당 국가들의 정책 대응능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는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③ 양호한 재정건전성, 외환보유액 등을 감안할 때, 대외 불안요인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 97년 외환위기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할 때, 최근 우리 경제의 리스크 관리능력은 그 어느 때보다 향상

* 국가채무가 GDP대비 33.5%, '11.7말 외환보유고 3,110억불, 38% 수준의 낮은 단기 외채 비중, 100% 이하의 은행 예대율, 14%대의 은행 BIS비율 등
- ④ 다만, 우리 자본·외환시장의 개방도가 커서 대외 불안요인이 파급·확산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받는 것이 불가피
 - 우리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은 아직까지 양호한 상황이지만, 글로벌 신용경색이 발생될 경우 국내 금융기관의 차입여건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V. 대응방향

◇ 국내외 자금흐름, 주요지표 등 금융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위기 진행상황 별로 기 마련된 위기 대응 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대응

① 국내 금융시장 관련 모니터링 및 협조체계 강화

- 주식·채권·외화자금시장에서의 외국인 자금유출입 동향과 금융기관·기업의 자금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점검

* 이를 위해 종전 금융위·금감원 '금융합동점검회의'를 금융위 부위원장 중심으로 확대·개편(8.5일)하고, 산하에 3개팀(자금·외환·자본팀) 운영

- 재정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 움직임에 대한 정보와 인식을 공유하고 체계적 대응

② 위기상황에 대비한 은행별 외화조달·운용계획 마련

- 대외충격시 정부와 한국은행에 의존하기 보다는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위기대응 능력을 제고하도록 적극 독려

- 위기발생시 은행들이 스스로 최소 3개월을 견딜 수 있는 자금조달·운용계획 마련토록 stress test 실시중

* 금융기관 외화유동성, 외화차입 현황 등을 종합 점검하여, 대외 불안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

③ 위기대응 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대응

- 위기상황 발생시 기 마련된 '위기대응 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대응

- 필요시 위기대응 계획의 재점검 및 수정·보완도 병행

참고 2

미국·유럽 경제상황 및 전망

1. 미국 경제상황 및 전망

□ (경제상황) 미국경제는 상반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를 하회하고, 채무한도 협상과정에서 재정건전성 문제가 부각되는 등 미국 경제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

* GDP성장률(%): (10.1/4)3.9 (2/4)3.8 (3/4)2.5 (4/4)2.3 (11.1/4)0.4 (2/4)1.3

○ 금년 들어 경기회복세가 크게 약화된 것은 민간소비 둔화 및 정부지출 위축에 주로 기인

* 민간소비(%): (10.4/4)3.6 (11.1/4)2.1 (2/4)0.1 ['09.2/4 이후 최저치]

* 정부지출(%): (10.4/4)△2.8 (11.1/4)△5.9 (2/4)△1.1 [정부지출 감소세 지속]

○ 다만, 7월 들어 고용시장에서 취업자가 전월 대비 증가하였고, 실업률도 0.1%p 하락하는 등 우려가 다소 진정

* 비농업취업자증감(만명, 전월비): (5월)5.3 (6월)4.6 (7월)11.7 [시장예상 8.5]

□ (전망) 美 경제는 국제유가, 일본 대지진 등 경기둔화 요인이 상당부분 완화되어 앞으로 개선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다만, 재정지출 축소*에 따른 성장세 약화 가능성도 상존

* 8.2일 통과된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에 따라 10년간 최대 2,4조달러 재정지출 축소

○ 또한, 최근의 美 신용등급 하락은 차입비용 상승 등을 통해 경기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으나,

- 신용등급 하락(AAA→AA+)이 美 국채의 위험가중치와 대손충당금 적립 등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시장에서 평가

* 바젤 II·III 체계내에서 위험가중치 산정에 있어 AAA~AA-는 동일하게 취급, 예) 국채(AAA~AA-)의 위험가중치: 0%

2. 유럽 경제상황 및 전망

□ (경제상황) 유로지역은 1/4분기중 강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최근 들어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는 모습

○ 1/4분기 GDP 성장률이 0.8%(전기대비)이었으나, 2/4분기는 다소 둔화될 전망이 다수

○ 7월 유로지역의 제조업 PMI, 경기체감지수 등이 하락

* 제조업 PMI : (5월) 54.6 → (6월) 52.0 → (7월) 50.4

* 경기체감지수 : (5월) 105.5 → (6월) 105.4 → (7월) 103.2

□ (전망) 금년중 유로지역은 정부 재정불안으로 성장률*이 다소 영향을 받겠지만,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 Nomura(8.5일)는 2011년 유로 성장률 전망을 2.0%→1.9%로 하향조정

○ 그리스 구제금융 방안 합의(7.21)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스페인 등으로의 확산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 그리스 채무 축소효과 불충분, 위기관리기구(EFSF)의 규모 문제 등

* 이탈리아, 스페인 국채금리(10년물)가 6%를 상회하는 등 유로존 편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 ECB의 伊국채 매입 결정^①(8.8~), G7^② 및 G20^③의 국제공조 합의(8.8) 등을 감안할 때, 유럽 재정위기의 확산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

* ① 이탈리아가 균형예산 달성시기 조정('14년→'13년) 등 긴축 재정개혁을 약속하면서 ECB는 8.8일부터 伊국채 매입하기로 결정

②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8일 오전 전화회의를 통해 국제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 등 공조에 합의(8.8)

③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최근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간다는 공동 성명서 발표(8.8)

참고 3

주요국 신용등급 현황('11.8.7 현재)

구분	등급	S&P	Fitch	Moody's
투자 등급	AAA(Aaa)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싱가포르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AA+(Aa1)	미국, 벨기에	호주, 벨기에, <u>스페인</u>	벨기에
	AA(Aa2)	<u>스페인</u>	일본	일본, <u>이탈리아</u> , <u>스페인</u>
	AA-(Aa3)	중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u>이탈리아</u> ,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A+(A1)	<u>이탈리아</u>	<u>한국</u> , 중국	<u>한국</u>
	A(A2)	<u>한국</u>		
	A-(A3)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레이시아, 바레인
	BBB+(Baa1)	<u>아일랜드</u> ,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u>아일랜드</u> ,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멕시코, 태국
	BBB(Baa2)	러시아, 멕시코, 바레인	러시아, 멕시코, 태국, 브라질, 바레인	
	BBB-(Baa3)	브라질, 인도, <u>포르투갈</u>	인도, <u>포르투갈</u>	브라질, 인도,
투기 등급	BB+(Ba1)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터키,	인도네시아, <u>아일랜드</u>
	BB(Ba2)	터키, 필리핀, 리비아, 이집트	필리핀, 리비아, 이집트	터키, <u>포르투갈</u>
	BB-(Ba3)	베트남		필리핀, 이집트
	B+(B1)	캄보디아	베트남	베트남
	B(B2)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캄보디아
	B-(B3)			아르헨티나
	CCC+(Caa1)			
	CCC(Caa2)		<u>그리스</u>	
	CCC-(Caa3)			
	CC(Ca)	<u>그리스</u>		<u>그리스</u>

* 괄호안 등급은 Moody's 기준

제305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승인 관련 현안보고

2012. 2. 7.

금 융 위 원 회

I.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승인 관련 경과

II.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편입승인 요건

III. 하나금융지주의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결과

< 별첨 >

1. 하나금융지주 현황('11.9월말 현재)

2. 한국외환은행 현황('11.9월말 현재)

I.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승인 관련 경과

- '10.12.13.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편입승인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
- '11.11.18. 금융위는 상황변화 등으로 기존 신청서에 근거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
- '11.12.5.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승인 신청서를 금융위에 다시 제출
 - 금감원에 자회사 편입승인 요건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고, 공정위에도 관련시장의 경쟁제한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
- '12.1.27. 금융위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감원으로부터 론스타 펀드IV에 대한 정기 적격성 심사 결과*를 보고 받음

※ 금감원 심사결과의 주요내용

- 현 시점에서 론스타펀드IV는 비금융주력자로 볼 근거가 없으며 동 펀드에 대한 주식처분명령도 곤란함
- 다만, '10년말 기준으로는 론스타펀드IV의 비금융계열회사 자산합계가 2조원을 초과하므로 법문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입법취지, 신뢰보호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시 시점에서도 단순히 법문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주식 처분명령 등 조치는 부적절하였다고 판단됨

- 동 보고 이후,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승인과 관련하여 공정위 및 금감원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금융위원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를 승인하기로 결정

* '11.12.29. 공정위는 관련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심사결과를 보내왔고, '12.1.27. 금감원은 하나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승인신청이 금융지주회사법상 승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심사결과를 보내옴

II.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편입승인 요건

□ 금융지주회사법령상 자회사 편입승인 요건은 4가지로 구성

① 편입대상회사 사업계획의 타당성

②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관리상태의 건전성

③ 자금조달의 적정성

④ 관련시장의 경쟁제한 여부

□ 자회사 편입승인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 관련시장의 경쟁제한 여부에 관해서는 미리 공정위와 협의하여야 하고,

○ 기타 편입승인 요건은 금융지주회사법령에서 금감원이 심사토록 규정되어 있음

III. 하나금융지주의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결과

□ 공정위는 관련시장의 경쟁제한 여부 요건과 관련하여,

○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이 관련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심사결과를 금융위에 보내왔음
(11.12.29)

□ 금감원은 하나금융지주의 승인신청 내용이 금융지주회사법상

승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심사결과를 금융위에 보내왔음
(‘12.1.27)

○ 편입대상회사 사업계획의 타당성 관련

- 사업계획이 외환은행의 지속적인 영업의 영위와 하나금융지주 및 외환은행의 경영건전성 유지에 적합하는 등 타당

○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재무 및 경영관리상태의 건전성 관련

- 하나금융지주 및 외환은행의 재무상태 및 경영관리상태는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

	BIS 자기자본비율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	
	기 준	'11.9말 비율	기 준	최적근등급
하나금융지주	8% 이상	13.05%	2등급 이상	2등급
외환은행	8% 이상	13.98%	3등급 이상	3등급

○ 자금조달의 적정성 관련

-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주식 매입을 위해 일부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였으나, 하나금융지주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할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

1. 일반현황

- 설립일 : 2005. 12. 1.
- 대표이사 : 김승유, 김종열
- 본점소재지 :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101-1
- 임직원수 : 12,870명 (연결기준)

2. 재무현황 (연결기준)

- 총자산 : 183.5조원
- 자기자본 (납입자본금) : 14.9조원 (1.2조원)
- 당기순이익(1월~9월) : 1조 742억원
- BIS자기자본비율 : 13.05% (Basel I 기준)

3. 자회사등 현황 (자회사 8개, 손자회사등 14개)

자회사등	지배회사 지분율(%)
하나은행	100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100
PT Bank Hana	75.1
하나 Funding Ltd.	100
태산엘씨디	61.26
하나대투증권	100
Hana Asia Ltd.	100
하나제일호사모투자	18.93
KoFC하나동부프런티어챔프사모투자	29.17
하나다올신탁	58
다올자산운용	50.4
Daol Investments Inc.	100
하나SK카드	51
하나HSBC생명보험	50+1주
하나캐피탈	50.13
하나아이앤에스	100
하나금융경영연구소	100

* 태산광전(소주)유한공사 외 4개사 지배

1. 일반현황

- 설립일 : 1967. 1. 30.
- 대표이사 : Larry A. Klane
- 본점소재지 :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181
- 임직원수 : 7,626명

2. 재무현황

- 총자산 : 103.5조원
- 자기자본 (납입자본금) : 8.3조원 (3.2조원)
- 당기순이익(1월~9월) : 1조 4,177억원
- BIS자기자본비율 : 13.98% (Basel II 기준)

3. 자회사등 현황 (자회사 13개, 손자회사 1개)

자회사등	지분율 (%)	소재지
외환캐피탈	99.31	국내
외환선물	100	국내
외환펀드서비스	100	국내
외환뉴욕파이낸셜	100	미국
외환로스앤젤레스파이낸셜	100	미국
미주외환송금서비스	100	미국
캐나다외환은행	100	캐나다
KEB Australia (Holdings) Ltd	100	호주
환은호주금융	100	호주
인도네시아외환은행	99	인도네시아
독일외환은행	100	독일
브라질외환은행	100	브라질
외환은행(중국)유한공사	100	중국
환은아세아재무유한공사	100	홍콩

※ 자료 : DART 공시자료 및 하나금융지주가 제출한 자회사편입 승인신청 서류

제309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사무실 이전 관련 보고

2012. 7. 31.



금융위원회

1. 추진 배경

가. 그동안의 진행상황

- '08년 정부조직 개편시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국, 금융정보분석원(FIU) 조직과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합하여 금융위원회를 신설

*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으로 감독·검사 및 제재 등의 집행 업무 담당

- 정책과 집행기능의 분리 원칙에 따른 조직개편을 감안하여 금융위는 서울지방조달청 건물(서초동소재) 일부를 사용하고 금감원은 현 여의도 사무실 사용

* 당시 금융정보분석원은 서초동 청사의 공간 부족으로 과천 정부청사에 잔류

- 금융위 출범 초기부터 업무공간 부족과 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사무실 통합을 위해 내부적으로 이전을 검토

- 그러나, 금융위 직원 전체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 금감원과 업무협업의 편의성 및 공간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감원 건물로 임시 이전('09.1월)

- 금감원 청사로 이전 이후 서민금융 등 업무수요 확대로 금융위와 금감원의 인력이 증가하여 업무공간 부족이 지속되고 업무비효율이 증대

- 금융위는 금감원 건물(20층)의 5개 층을 분산 사용

* 현재 금융위는 3층 일부, 8층 일부 및 11~13층을 사용중

- 금감원은 약 160여명의 감독·검사 인력이 사무실 부족으로 인근 건물의 2개 층을 임대(임대료 25억원) 사용중

- 이에 따라 정책수립과 집행기능의 분리 원칙 확립, 업무공간 부족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사무실 이전을 추진

나. 이전 필요성

① 업무공간 부족 해소 및 금감원 부담 완화

- 금융위, 금감원의 인력이 지속 증가하여 금감원이 인근 건물
을 임차 사용하는 등 업무공간 부족이 심화
- 한편, 산하기관의 부담 가중 등의 우려로 정부기관이 산하기관
건물을 청사로 사용하는 사례가 없음

* 또한, 정부기관이 산하기관의 청사를 사용할 경우 산하기관에 대한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도 상존

② 금융정책의 책임성 제고

- 금융위와 금감원이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대외적으로 동
일한 기관으로 인식되는 등 정책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독립
성과 책임성 확보가 곤란
- 이에 따라 정책기관(금융위)과 집행기관(금감원)의 분리를 통해
대외적 독립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초적/실질적 여
건을 강화해 나갈 필요

③ 금융행정 역량 및 효율성 강화

- 금융중심지 추진 등을 고려할 때 여의도 지역으로 사무실 이
전이 바람직할 수 있으나, 광화문 인근 역시 금융산업 측면
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
- 광화문에는 시중은행 등 다수의 금융회사가 위치하고 있어 금융
소비자의 편리성이 제고되고 시장과의 소통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임

2.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 추진 경과

- 지난해 11월경부터 여의도 지역 중심으로 이전 후보지를 물색 하였으나 공간부족, 임대비용 등으로 적정건물 부재
- 금년 상반기중 광화문소재 프레스센터 측과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하여 최근 임차 조건 등에 대부분 합의

<참고 : 임차 조건 주요 합의사항>

- 3개층, 약 1,500평(3.3m²)을 임차
 - 금년중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제외한 금융위 본부 이전을 위해 약 1,300평을 제공
 - 내년중 FIU 이전시 약 200평을 추가로 제공
- 임대료는 금년중에는 현행 수준(연 18.5억원)을 유지하되 내년에는 주변 시세 등에 따라 상승(연 30억원 수준)

□ 향후 계획

- 8월초 프레스센터 측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
- 청사 면적, 예산 규모 및 사용 방안 등에 대해서는 행안부·기재부 등과 협의중이며, 8월중 협의를 마무리
- 9월중순에 금융위원회 본부를 우선 이전하고, 내년 4월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이전을 완료

*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주말 기간을 최대한 활용 예정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8. 최근 3년간 발주 연구용역 목록

□ 2009년

연번	과제명	계약기간	계약자 (책임연구원)	용역비 (백만원)
1	금융상품 판매제도 도입에 따른 불완전 판매 방지방안	09.04.13~ 09.08.14	자본시장연구원 (신보성)	30
2	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방안	09.03.16~ 09.12.16	한국금융연구원 (이상제)	45
3	국내 자본시장-외환시장 연계성 증가의 파급효과 분석	09.06.01~ 09.08.31	자본시장연구원 (이인형)	20.5
4	금융위기 이후(Post-Crisis) 대비 금융감독체제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09.06.10~ 09.08.15	연세대 산학협력단 (최홍식)	40
5	수도권 광역금융벨트 조성 방안	09.05.13~ 09.11.3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용협)	30
6	위탁보증 제도 개선방안 연구	09.05.28~ 09.11.11	한국금융연구원 (김동환)	28.8
7	자본시장 등 금융부문별 노동력 특성 분석 및 수급 전망	09.04.21~ 09.08.28	서울대 산학협력단 (김대일)	30
8	금융위기의 원인분석 및 시사점분석	09.07.09~ 09.11.30	한국금융연구원 (장민)	35
9	금융투자산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09.08.05~ 09.12.02	자본시장연구원 (신보성)	32
10	테러자금조달 방지 체제의 선진화·국제화 방안 연구	09.08.28~ 09.12.28	아주대 산학협력단 (이윤제)	35
1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국내 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09.10.07~ 09.12.06	한국금융연구원 (이병윤)	30
12	주요국에서의 금융변혁기에 대응한 금융정책사례 연구	09.10.15~ 09.12.17	한양대 산학협력단 (박대근)	40
1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금수취 비은행금융 회사 발전방안 등에 관한 연구	09.09.30~ 09.12.05	한국금융연구원 (정찬우)	20
1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09.09.18~ 09.12.17	(사)한국보험연구원 (유경원)	20
15	금융정보생산의 시스템 리스크 완화방안 연구	09.10.08~ 09.12.23	한국금융학회 (이인호)	20
16	마이크로크레딧 활성화 방안 연구	09.11.11~ 09.12.10	한국채권연구원 (박창균)	23
17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09.09.16~ 09.11.16	자본시장연구원 (김필규)	20

□ 2010년

연번	과 제 명	계약 기간	계약자 (책임연구원)	용역비 (백만원)
1	지역금융활성화 방안 연구	10.03.26~ 10.07.25	한국개발연구원 (손욱)	30
2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도입 방안	10.04.01~ 10.07.31	서울대 산학협력단 (정순섭)	30
3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10.04.19~ 10.08.31	한국개발연구원 (강동수)	40
4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방안 검토	10.05.28~ 10.07.31	법무법인 올촌 (김정수)	30
5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 연구	10.04.13~ 10.07.12	한국개발연구원 (연대훈)	45.5
6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 검토	10.06.09~ 10.7.30	한국금융연구원 (구본성)	30
7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자본시장 활용방안	10.04.09~ 10.09.03	자본시장연구원 (김재철)	30
8	국내외 조기경보 활동 동향 점검 및 금융시장 조기 경보모형 개선	10.05.01~ 10.10.31	한국금융연구원 (장민)	20
9	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검토	10.08.30~ 10.12.20	한국금융연구원 (정찬우)	30
10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와 평가	10.09.16~ 10.12.15	한양대 산학협력단 (박대근)	30
11	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10.09.20~ 10.12.20	한국금융연구원 (김정환)	25
12	신용정보 유통체계 개선방안	10.10.11~ 10.12.11	한국금융연구원 (이상제)	30
13	국내은행 해외 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 감독 방안	10.10.11~ 10.12.11	한국금융연구원 (서근우)	25
14	기업경영 안정 등을 위한 상품파생시장 제도 개선방안	10.10.15~ 10.12.14	서울대 산학협력단 (안동현)	30
15	회계감독제도 개편 등에 대응한 감리조치기준 개선안 연구	10.10.15~ 10.12.14	한국법제연구원 (이준호)	30
16	우리나라 특정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이행방안	10.04.20~ 10.11.30	한국금융연구원 (이상제)	30
17	금융회사 자금세탁 판단지표(Rule)의 유용성 연구	10.10.15~ 10.12.27	(주)데이터메이션 (한미혜)	27.7
18	한국의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 -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10.10.25~ 10.12.20	KAIST, 삼성경제연구원 (이병태)	47.5
19	미국 금융규제개혁법 중 자본시장 관련 규제내용 및 시사점	10.11.03~ 10.12.20	자본시장연구원 (정찬우)	10
20	미국 금융개혁과 보험규제에 대한 시사점 연구	10.11.03~ 10.12.20	보험연구원	3

□ 2011년

연번	과제명	계약기간	계약자 (책임연구원)	용역비 (백만원)
1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종합 대응 방안 마련	11.01.27~ 11.06.02	금융연구원 (이명활)	40
2	금감원장 및 감사 성과평가 개선방안	11.04.06~ 11.05.30	금융연구원 (이병윤)	20
3	회계산업 중장기발전 방안	11.05.02~ 11.06.30	한국회계학회 (이창우)	30
4	저축은행 경영부실 실상 및 원인 규명 백서	11.06.27~ 11.09.26	KDI (정찬우)	15
5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백서	11.07.01~ 11.12.30	KDI (고영선)	50
6	대형 IB 자기자본규제에 관한 연구	11.07.11~ 11.11.04	자본시장연구원 (장정모)	30
7	금융소비자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11.07.26~ 11.11.30	KDI (천규승)	25
8	금융회사의 금융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연구	11.08.19~ 11.10.31	법무법인 태평양 (정의종)	29
9	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계약간 규제 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11.09.23~ 11.12.15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30
10	법인설립과 신탁계약 등이 자금세탁 등 불법적 목적에 이용될 위험과 그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11.10.04~ 11.12.20	김&장법률사무소 (서문식)	39
11	비금융전문직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도 분석에 관한 연구	11.10.12~ 11.12.20	금융연구원 (이윤석)	44
12	금융회사간 단기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 프라 및 관리감독 개선 방안	11.10.19~ 11.12.16	금융연구원 (이규복)	30
13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 규제 도입방안	11.10.19~ 11.12.20	금융연구원 (김동환)	30
14	ETF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	11.10.25~ 11.12.15	금융연구원 (연태훈)	30
15	부동산개발금융 제도개선방안 연구	11.10.26~ 11.12.25	건국대산학협력단 (고성수)	30
16	외은지점 규율체계 정비관련 주요 검토사항	11.10.27~ 11.12.27	금융연구원 (서병호)	30
17	외환, 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11.07.15~ 12.02.2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덕용)	35
18	청년창업 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방안	11.12.22~ 12.04.21	금융연구원 (구본성)	30

□ 2012년

연번	과제명	계약기간	계약자 (책임연구원)	용역비 (백만원)
1	보이스피싱 근절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2.04.06~ 12.06.03	형사정책연구원 (윤해성)	20
2	ELS 및 DLS 투자자보호 강화 방안	12.04.24~ 12.09.23	자본시장연구원 (남길남)	26
3	고령화 대비 공·사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12.04.30~ 12.08.31	보험연구원 (김대환)	30
4	금융세제 현황 및 발전 방향	12.05.04~ 12.08.31	금융연구원 (연태훈)	30
5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12.05.18~ 12.10.31	한국채권연구원 (박창균)	39
6	기업공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2.05.25~ 12.09.24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35
7	대학생 고금리 대출 이용 실태조사	12.06.08~ 12.07.07	한국궤협연구소 (박병일)	10
8	주요 신흥국과의 전략적 금융 협력 강화 방안	12.06.25~ 12.10.31	대외경제연구원 (강대창)	26
9	금융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12.07.06~ 12.10.05	한국재정학회 연세대 산학협력단 서강대 산학협력단 (원윤희 외 3명)	20
10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12.07.17~ 12.11.20	금융보안연구원 (김영태)	40
1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향	12.07.26~ 12.11.26	한국연금학회 (신성환)	30
12	대부업 관리·감독 효율성 제고 방안	12.07.30~ 12.10.29	한국금융연구원 (서병호)	20
13	가계부채 미시분석	12.08.16~ 12.11.15	한국금융연구원 (서정호)	40
14	핵·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금지 국제기준 이행 방안	12.08.31~ 12.12.10	형사정책연구원 (박미숙)	35
15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상품정보 제공방안	12.09.10~ 12.11.30	서울대 산학협력단 (나종연)	34
16	新 FATF 국제규범 주요 내용과 대응전략(금융부문 중심)	12.09.13~ 12.12.30	한국금융연구원 (김자봉)	35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9. 최근 2년간 기관에서 발표한 보도/해명자료 목록

☐ 문제보도 기사 해명자료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1	조선일보(2012.8.23) (대형 저축은행 3곳 연내 추가퇴출) (A1면1단) 제하 기사 등 관련	20120823
2	서울신문(2012.8.22) 「병원 과잉진료, 보험사가 신고」 제하 가판 기사 관련	20120821
3	CBS(8.20일자 인터넷판)의 '담보권 신탁제' 추진 기사 관련	20120820
4	뉴시스 및 헤럴드뉴스(8.19일자 인터넷판)의 화보협회 이사장 선임 관련	20120819
5	'12.7.26일자 연합인포맥스 「CD, 예대율에 포함·단기 코픽스 개발 검토」 제하의 기사 등 관련	20120727
6	일부 언론사의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90만명 리콜 추진」 기사 관련	20120724
7	매일경제 「김석동 “KB-우리 합병 전폭지원”... 어운대 회장 막판 고심」 제하 보도 관련	20120708
8	연합뉴스(2012.7.8) 「국민 절반 가입 실손의료보'대수술'... 업계는 반발」 등 “실손” 제하 기사 관련	20120708
9	경향신문 (2012.7.2(월)) 「'개인정보, 미 수사기관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기사 관련	20120702
10	머니투데이(2012.6.27(수)) 「금융주 공매도 4년만에 허용」 기사 관련	20120627
11	한국경제(2012.5.31(수) 인터넷판 「준비 안 된 '청년창업재단' 출범」) 기사 관련	20120531
12	동아일보 「불법사금융 피해자 금융지원 0.5%도 안돼」 제하 보도 관련	20120530
13	서울경제(12.5.15) 「MB 정부의 은행은 '낙하산 왕국'이었네」 제하 보도 관련	20120515
14	머니투데이방송(12.5.11) 「정치인 테마타고 가격제한폭 급물살 제하 보도 관련	20120511

15	2012년 5월 9일자 문화일보 「저축銀, 다시 상호신용금고로」 제하 기사 관련	20120509
16	2012년 5월 10일자 가판 파이낸셜뉴스 「저축銀 예금보호한도 단계적 축소」 제하 기사 관련	20120509
17	서울경제가판(2012.5.8.) 「퇴직연금 가입후 6개월 대출 금지... 은행은 반발」 제하의 기사 관련	20120508
18	조선일보(2012.5.2.) 「불법 사채 신고해봤자.. 금융지원은 2.7%뿐」 제하의 기사 관련	20120502
19	연합인포맥스('12.4.16) 「외은지점 업무 범위 축소 추진」 제하의 기사 관련	20120416
20	아시아경제(2012.4.4) 「'老多'보험료 뜯어고친다」 제하 기사 관련 *老多 : 노인일수록 더 많이 내는 요금체계	20120404
21	조선비즈(2012.3.26)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접속 오류.. 해킹 루머」 제하 기사 관련	20120326
22	한국경제('12.3.5 인터넷판) 「헤지펀드 운용 진입장벽 낮춘다」 기사 관련	20120305
23	Wall Street Journal('12.2.10) 「Lone Star Lesson : 'More Precise Laws」 제하의 기사 관련	20120210
24	서울경제('12.2.8) 「농협·신협 등 LTV·총당금 강화한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20208
25	문화일보('12.2.6) 「가계부채 900兆 돌파. 제2금융 대출 억제 고강도 대책 나온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20206
26	이데일리('12.1.18) 「금융위, 금감원 공무원화 검토..감독 기구 개편 군불?」 제하의 기사 관련	20120118
27	문화일보(2012.1.16.) 「저축은행 권역제한 완화... 영업 '숨통」 제하의 기사 관련	20120116
28	서울경제(12.1.13) 「공모주 받은 기관, 상장후 보름간 못 팔아」 제하의 기사 관련	20120112
29	서울경제('12.1.11 가판) 「'농협 지원-산은 민영화' 패키지 추진」 제하의 기사 관련	20120110
30	서울경제신문('11.12.23 가판) 「체크카드 사용액 기준 낮춰 공제 늘린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11222
31	서울경제신문('11.12.20) 「신용카드에 '직불기능' 추가(당정, 수수료 인하안 연내 발표)」 제하의 기사 관련	20111220
32	연합뉴스('11.12.18) 「“불합리한 카드수수료... '정부가 직접 고친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11218
33	한국경제('11.12.18 인터넷판) 「카드수수료 '택시요금' 방식으로 바뀐다' 및 신용카드 수수료체계 어떻게 바뀌나...	20111218
34	문화일보('11.12.1일자) 「“저신용자 704만명 '카드론' 이용	20111201

	못하게 되나”] 제하의 기사 관련	
35	코리아헤럴드('11.11.29) 「론스타 단순명령, 금융위 내부 반발 드러나」 제하의 기사 관련	20111130
36	문화일보('11.11.25) 「저소득층 대출자 20% 돈줄 막혀」 제하의 기사 관련	20111125
37	조선일보('11.11.23) 「보험 해약 때 ‘쥐꼬리 환급금’개선 설계사 수당 선지급 관행 바꾸기로」 제하의 기사 관련	20111123
38	파이낸셜뉴스(2011.11.16일자(가판)) 「저축은행들 내년 대손충당금 비상」 제하의 기사 관련	20111115
39	한국경제(2011.11.14(월)) 「금융당국, ‘뺑뺑이’ 신용평가 대수술」 인터넷 기사 관련	20111114
40	서울신문('11.11.3), 서울경제('11.10.3), 파이낸셜뉴스('11.10.3) 등의 「‘중기지원 강화’ 정책금융기관 기능 재편」 제하의 기사 관련	20111103
41	연합인포맥스(2011.11.1(화)) 「금융위, 주식 공매도 허용」 기사 관련	20111101
42	매일경제(2011.10.21(금)) 「신용카드 포인트제 단계적 폐지」 제하의 기사 관련	20111021
43	연합뉴스(2011.10.18(화)) 「현금서비스수수료, 카드대란 후 최대 전망」 제하의 기사 관련	20111018
44	서울경제(2011.10.19일자(가판)) 「소비자보호한다더니…官治로 가는 금융소보원」 기사 관련	20111018
45	이데일리(2011.10.17(월)) 「체크카드, 비밀번호 결제방식 도입..수수료 확 낮춘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11017
46	서울신문(2011.10.18(화) 가판) 「체크카드도 1%로 내린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11017
47	연합뉴스(2011.10.16일자) “은행·카드사 ‘사상 최대’ 수수료 챙긴다” 기사 관련	20111016
48	연합뉴스 '11.10.16일 「금융위, 금융권 ‘급여·배당 탐욕’ 제동 건다」 보도 관련	20111016
49	매일경제·한국경제(2011.10.12(수), 인터넷판) 「금융위, ‘1만원 이하 카드결제 거부’ 없던 일로」 제하의 기사 관련	20111012
50	매일경제신문 '11.10.11자 A16 「저축銀 기본자본비율 △0.97%로 급락」 보도 관련	20111011
51	매일경제(2011.10.11(화)) 「보험료 카드납부 의무화 추진…수수료 ‘1%’ 관건」 제하의 기사 관련	20111011
52	헤럴드경제(2011.10.6일) 「MB예산은 ‘분식예산’」 기사 관련	20111006

53	이데일리('11.10.5), 서울경제('11.10.5) 「신용카드 1년 이상」	20111005
54	내일신문('11.9.30, 8면),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추진논란」 제하 기사 관련	20110930
55	동아일보('11.9.29.)“금융위원장, 론스타에 조건없이 지분매각 명령내릴 것”제하의 기사 관련	20110929
56	머니투데이(2011.9.23(금)) 「신용카드 발급에도 DTI 적용」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923
57	헤럴드경제 「저축은행 경영진단 결과 이르면 19일 공식 발표... 대형 저축은행 1곳 포함 6곳 영업정지 가닥」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916
58	경향신문(2011.9.16(금)) 「미소금융 대출 30% 고 신용자에게 갔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916
59	서울신문(2011.9.16(금)) 「햇살론 한도 내주부터 3,000만원 까지」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915
60	한국경제 「저축은행 영업정지 이르면 주말에 나온다」 및 매일경제 「저축은행 생사 주말께 결판날듯...자구노력따라 희비」 및 머니투데이	20110914
61	한국일보('11.9.7) 「저축은행 5곳 회생불능 판정」 기사 관련	20110907
62	조선일보('11.9.6) 「영업정지 저축은행 5~6곳 압축」 및 중앙일보 「저축은행 12곳 영업정지 대상」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906
63	머니투데이의 「구조조정 저축銀 16곳 확정」 보도 ('11.9.3.) 관련	20110905
64	한국경제('11.9.1) 「새마을금고, 영업구역외 대출 줄인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901
65	조선일보('11.8.31.), 「저축은행 15곳 不實」 및 매일경제 ('11.8.31.), 「저축銀 구조조정 3가지 시나리오로 진행」 제하 기사에 대한 해명	20110831
66	SBS뉴스(2011.8.26(금)) 「“거꾸로 가는 보안대책...선택권·자율성이 명분”기사 관련	20110829
67	연합뉴스('11.8.18)“일부 시중은행 가계대출 전면중단”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818
68	서울경제(2011.8.12(금)) 「증안펀드, 추가 대신 기존펀드 증액으로」 인터넷 기사 관련	20110812
69	중앙일보('11.8.6), 「김석동 “9월까지 없다” 해놓고... 울산 경은저축은행 영업정지」 제하 기사...	20110808
70	한국경제('11.8.8), 「9월까지 문 닫는 곳 없다는 말 믿고 예금 댔는데」 제하 기사 관련	20110808
71	파이낸셜뉴스('11.8.3, 14:44), 「저축은행 특별계정에 공적	20110803

	자금 5000억 투입」 제하 기사 관련	
72	한국경제('11.7.26.)“年30% 넘는 불법 사채이자 몰수 추진”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726
73	이투데이('11.7.22.)“저축은행 주범 8·8클럽 낙담만에 10·8로 부활”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722
74	연합뉴스(11.7.20) 「금융당국, 상장사 소액공모 폐지검토」, 「외국기업 상장심사 주먹구구... 소액공모 허점 많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721
75	머니투데이(11.7.14) 「'고정금리 대출 30%' 없던 일로」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714
76	문화일보('11.7.11) 「총자산 90조 새마을금고 가계부채 대책에서 빠졌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711
77	한국경제('11.7.7) 「농·수협 예금 비과세 한도 2천만원으로 축소」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707
78	중앙일보('11.7.5), 「부실저축은행 퇴출에 10조 투입」, 「20조원 쏟아부어 저축은행 불신 씻기」 제하 기사 및 한겨레('11.7.5), 「저축은행 구조조정 자금 25조원 추가조성」 제하 기사 관련	20110705
79	이데일리('11.7.5.)“지방저축銀, 수도권 대출 규제 완화”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705
80	매경('11.7.5) 「금융위 혼선...영업정지 조건 뒤늦게 수정」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705
81	연합뉴스('11.6.30) 「정부, 은행 예대율 90%대로 인하 추진」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630
82	서울경제(2011.6.29 가판) 「美 경제실세 서머스 김석동 만났는데...」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628
83	한겨레신문(11.6.21) 「DTI 규제, 지방대도시로 확대」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621
84	한국경제(2011.6.20(월) 인터넷판) 「증권사 빅5, 합병 안해도 '종합 IB' 할 수 있다」 기사 관련	20110620
85	서울경제('11.6.17. A01, A05면)“정책은 오락가락 시장은 갈팡질팡”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617
86	연합뉴스('11.6.16)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 제한 추진」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616
87	연합뉴스('11.6.12 06:15), 「저축銀 구조조정 대비 공적자금 조성 검토」 제하 기사에 대한 해명	20110612
88	연합뉴스('11.6.9 06:09), 「500만원 이하 금융분쟁 소송금지 추진」 제하 기사 및 「소액금융분쟁 소송금지, 과연 가능할까」 제하 기사 관련	20110609
89	경향신문('11.6.3. 3면)“삼화저축은행 인수 때 써낸 금액 금감원서	20110603

	하달” 제하의 기사 관련	
90	경향신문('11.6.2)“금융당국, 또 저축은행 부실 덮나”제하의 기사 관련	20110602
91	2011.6.1일 파이낸셜 뉴스 「수출입銀·무역보험公 통합 추진」 기사 관련	20110601
92	문화일보('11.6.1) 「카드대출 고배 친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601
93	매일경제('11.5.30)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해 은행별 대출 증가율 규제」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530
94	연합뉴스('11.5.26.)“저축은행 대출한도 3단계 차등화 추진”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526
95	한국경제 「‘산은+우리’ 정부지분 50%대로 낮춘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516
96	한국경제신문 「퇴직연금, 자사상품 운용 못한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516
97	서울경제 「우리금융 소유규제 풀어 일괄매각」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516
98	연합인포맥스(2011.5.11(수)) 「금융위, 금융주 공매도 허용 검토」 기사 관련	20110511
99	노컷뉴스('11.5.11.)“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방침‘20일 전에 이미 결정됐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511
100	한국경제 「정부, 우리금융 민영화 포기」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511
101	헤럴드경제(2011년 5월 9일자) 「과태료 부과자 ‘보험료 할증’ 물 건너가나」 기사 관련	20110509
102	헤럴드경제('11.5.6)의 「경제부처간 이견...외환銀 처리 장기 표류?」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506
103	이데일리“우리금융소유규제완화후재매각검토,산은입찰허용될듯” 기사 관련	20110505
104	서울경제('11.4.27일자 가판) 「미소금융 “울고 싶어라”」 제하 기사 관련	20110426
105	이데일리('11.4.25.)“상장 저축銀 IFRS 고민 풀린다..당국 해법 ‘가닥’”제하의 기사 관련	20110425
106	'11.4.21일 연합뉴스 「‘악마의 유혹’ELW시장에 금융당국 수수방관」 기사 관련	20110421
107	머니투데이('11.4.18) 「부실 PF채권 특화 ‘민간 배드뱅크’ 만든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418
108	'11.4.19일자(가판) 서울경제 a01면, 파이낸셜뉴스 001면 등의 「부실PF 처리 민간 배드뱅크 추진」에 관한 기사 관련	20110418
109	매일경제('11.4.12.)“해킹방어 금융공동망 추진”제하의 기사	20110412

	관련	
110	머니투데이(인터넷, '11.4.7.) "저축銀 먹거리 대책, 여신전문 출장소로 가닥"제하의 기사 관련	20110407
111	한국경제 ('11.4.4일자) "불법 사채업과 전쟁 ... 이자 연 6% 제한"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404
112	한국경제('11.3.24) 「발표. 이틀만에“ 강남3구 혜택 제외”시장 혼선」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324
113	매일경제(2011.3.20(일), 인터넷판) 「금융위“한국 거래소 문제 많다. 확 바꿀것”」 기사 관련	20110321
114	연합뉴스('11.3.18일자) 「미소금융 대출자격 완화 추진, 다음달 서민금융활성화종합대책에 포함」 제하 기사 관련	20110318
115	머니투데이('11.3.17) 「DTI 규제완화, 이달 말 종료」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317
116	쿠키뉴스(2011.3.10(목) 인터넷판) 「또 만수야? 강만수 靑특보 산은회장,연봉최고 수준」 기사 관련	20110310
117	매일경제(2011.3.9(수) 가판) 「금융당국 소직원 취업제한」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309
118	매일경제(2011.3.9(수)) 「예보법 수정안 국회통과 청신호」, 서울경제(2011.3.9(수)) 「예보법 개정안 타협점 찾나」 제하의 기사 등 관련	20110309
119	헤럴드경제('11.3.9)의 "론스타 적격성 심사 불가능... 당국 감독행위 포기?"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309
120	서울경제(2011년 3월 8일자) "가계부채 종합대책, 어떤내용이 담기나"제하의 기사 관련	20110307
121	(서울경제,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등) 저축은행 간 지분매입 한도 부활 검토 관련	20110304
122	연합인포맥스('11.3.2)의 「금융위, "론스타는 금융자본, 적격성 문제 없어" 결론」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302
123	연합뉴스('11.2.28) 「금융위, DTI 규제 원상복귀 결론」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228
124	연합뉴스('11.2.28)의 「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3월16일 승인 될 듯」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228
125	매일경제('11.2.28) 「금융위, 풀었던 DTI 규제 원래대로」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228
126	이데일리(2011.2.21일자) 김석동"중장기 과제로 저축銀 예금 보장한도 축소 검토"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221
127	매일경제 "대우증권·우리투자증권 합병 추진"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221
128	서울경제(2011년 2월 17일자(가판)) 「DTI 규제완화 연장 가닥	20110216

	잡았나」 제하의 기사 등 관련	
129	매일경제 ('11.2.9일자 인터넷판) ("4대은행, 저축銀에 2조 긴급지원")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210
130	매일경제(2011.2.10(목) 가판) 「옵션쇼크 도이치뱅크 제재 착수」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210
131	이데일리(2011.2.9(수) 인터넷) 「[단독] ‘옵션쇼크’ 도이치 서울지점 ‘6개월 영업정지」 제하의 기사 등 관련	20110209
132	동아일보(2011.2.7(월) A02면) 「도이체뱅크, 2004년 옵션거래로 200억대 이득」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207
133	연합인포맥스(2011.2.7(월) 인터넷) 「금감원, ‘도이치 獨본사 검찰 고발키로」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207
134	매일경제(2011년 2월 7일자(인터넷판)) 「전세난, 주택매매 활성화로 꾀다, DTI규제 완화 연장될듯」 기사 관련	20110207
135	파이낸셜 뉴스('11.1.31일 1면, 3면) ("기금마련후 부실 저축銀 일괄제재")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130
136	아시아경제(2011.1.27(목) 3면) 「부실증권사 퇴출 심사」 기사 관련	20110127
137	매일경제 「정부, 블록세일로 우리금융 연내 민영화」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126
138	한국경제 「경남, 광주은행, 우리금융과 묶어 판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125
139	MTN 뉴스('11.1.24) 「금융당국, 저축銀 공적자금 검토 구조조정‘세계」 제하 보도에 대한 해명	20110124
140	매일경제('11.1.19일 인터넷판) ("정부, 부실 저축은행 일괄 매각 추진")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119
141	조선일보(2011.1.17(월)B01면) 「금융株 공매도 다시 허용될 듯」 기사 관련	20110117
142	연합인포('11.1.17일 인터넷) ("상화 포함 부실 위험 저축은 10곳")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117
143	뉴시스('11.1.17일 인터넷) ("대형저축은행이 더 부실... 평균 BIS비율 9%")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117
144	머니투데이(2011년 1월 16일자(인터넷판)) 「DTI 규제유예, 3월말 종료될 듯」 기사 관련	20110116
145	서울경제(2011년 1월 13일자(가판)) 「DTI 규제완화 추가연장 검토」 기사 관련	20110112
146	조선일보(2011.1.11일자) 「차명계좌 실소유주 형사처벌」 기사 관련	20110111
147	헤럴드경제(2011년 1월 11일자) 「금융위 금감원, 자보료 인상 “담합 아니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111

148	서울경제('11.1.10일자)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내달부터 0.3~0.4%p 인하”)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110
149	이데일리('11.1.7일자 인터넷판) (김석동식 구조조정 저축은행 6곳..상장사 없어]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107
150	문화일보('11.1.6일자 17면) (“부실 저축은행 인수시 공적자금 투입하겠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106
151	한국경제(2011.1.5(수) A30면) 「김석동 금융위원장 “자본시장법 손질”」 기사 관련	20110105
152	매일경제(2011.1.5(수) A02면) 「공모주 개인물량 25~40% 까지 늘어날까」 기사 관련	20110105
153	서울경제신문('11.1.5일자 가판) 「자본시장통합법 전면 손질 하겠다」 기사 관련	20110104
154	한국경제(2011년 1월 4일자(가판)) 「변동금리 장기 주택대출 소득공제 제외」 기사 관련	20110104
155	연합뉴스(2010년 12월 28일자) 「무사고 18년 이상때 차보험료 70% 할인 추진」 기사 관련	20101228
156	서울경제(2010년 12월 27일자(가판)) 「장기 무사고 차보험료 할인 5~10% 확대」 기사 관련	20101226
157	한국경제 「우리금융 예비입찰 예정대로 실시」 제하의 기사 관련	20101215
158	매일경제 「현대건설 매각 원점으로 가나」 및 MBN 「진동수 “현대그룹 인수가격 터무니 없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01215
159	경향신문('10.12.10일자 17면) ('공정사회' 뜨자 '서민금융' 찬바람) 제하 기사 관련	20101210
160	매일경제(인터넷, '10.12.10. 17:28) “우량저축은행도 거액대출 못 해”제하의 기사 관련	20101210
161	서울경제(인터넷 '10.12.7 17:24), 「은행·증권·보험 유사상품 비교 한눈에」 제하 기사 관련	20101208
162	파이낸셜뉴스 옵션쇼크 대책, 실시간 관리는 말뿐 재발가능성 기사 관련	20101208
163	연합뉴스(2010년 12월 8일자) 「중고 소형차 보험료 인하.. 정비요금 공표제 폐지」 기사 관련	20101208
164	헤럴드경제('10.12.8일자 1면/6면) 부실 저축銀 8곳 파산위기 제하의 기사 관련	20101208
165	한국경제 「광주·경남銀, 우리금융서 분리매각」 제하의 기사 관련	20101206

166	파이낸셜뉴스('10.11.29일자 가판) (여신전문금융업법 전면 개편 추진] 제하의 기사 관련	20101128
167	서울경제('10.11.26자 가판) 「예금자 보호한도 차별화 최대 1억서 3,000만원까지」, 이데일리('10.11.25) 「예금자보호 한도 3천만원~1억원 차등화 추진」 기사관련	20101125
168	문화일보(2010년 11월 22일자) 「자기부담금 확대·법규 위반 차량 할증강화 자동차 보험요율 조정한다」 기사 관련	20101122
169	연합뉴스('10.11.22자)의 「불법 차명계좌 개설시 금융기관 처벌 강화」 기사관련	20101122
170	매일경제(차사고 자기부담금 늘린다」 [금융위가 마련한 차보험 개선안 살펴보니] 기사 관련	20101119
171	매일경제('10.11.19,15:35 인터넷판) (진동수 위원장"옵션쇼크 금감원도 책임크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01119
172	연합뉴스('10.11.18자)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인하추진」 제하의 기사 관련	20101118
173	서울경제('10.11.18자 가판)의 「상습사고 운전자 보험료 크게 오른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01117
174	매일경제"시장교란하는 외국銀지점 한국서 영업 못할 각오해야"	20101107
175	서울신문 가판(2010.11.3), 「1000만원 이하 거래도 불법의심뎌 보고 의무화」 제하 기사 관련	20101103
176	서울경제 가판(2010.11.1), 「은행 커버드본드 독자발행 어려워져」 제하 기사 관련	20101101
177	국민일보('10.10.29/가판) 「예보, 우리은행 지분 절반만 팔고 남을 것」 제하 기사 관련	20101029
178	서울경제('10.10.28) a10면 「금융위 상호금융사·대부업 공동검 사 추진」 제하 기사에 대한 해명	20101028
179	연합인포맥스의 「하나금융-골드만, 풋백옵션 진실공방」 보도 관련	20101022
180	이데일리의 「국제표준에 맞나 안맞나...'랩 규제안'논란 확산」 기사 관련	20101020
181	매일경제('10.10.18자 가판) 「예대율 100%규제 폐지 검토」 및 서울경제('10.10.18자 가판) 「은행 예대율 규제 사실상 폐지」 제하의 기사 관련	20101017
182	SBS 8시뉴스('10.10.15) 「폭발적 인기'햇살론, 3개월도 안돼 중단 위기?」 제하 기사에 대한 해명	20101015

183	연합뉴스 등의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 추진」 에 관한 기사 관련	20101014
184	머니투데이('10.10.11), 뉴시스('10.10.11), 이데일리('10.10.11), 아시아경제('10.10.11) 제하의 기사관련	20101012
185	한겨레('10.10.11) 「서민에겐 쌀쌀한'미소금융」 제하의 기사 관련	20101011
186	내일신문('10.10.11) 제11면 「금융감독기구 재편 논란 재점화」 제하의 기사 관련	20101011
187	조선일보('10.10.11) 「미소금융·햇살론, 9~10등급엔 냉랭」, 세계일보('10.10.11) 「햇살론·미소금융 최저신용층엔 그림의 떡」 제하의 기사관련	20101011
188	연합인포맥스 「외국인 채권 과세 검토」 제하의 기사 관련	20101011
189	서울경제('10.10.7), 「우량저축은행되기' 문턱 높아진다」 제하 기사 관련	20101007
190	매일경제('10.10.5), 「키코피해 中企 2차지원대책 나온다」 제하 기사 관련	20101005
191	머니투데이·노컷뉴스('10.10.3), 「서민금융'햇살론'... 조회만 해도 신용등급↓」 제하 기사 관련	20101004
192	「퇴직 고위공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제하의 기사 관련(한겨레, 경향, 한국일보/10.1조간)	20101001
193	연합인포맥스 「은행 후계자 계획, 내년 4월부터 공시」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920
194	연합뉴스('10.9.16, 14:18분 입력) 「금융위, 금융회사 CEO 연임 제한 검토」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916
195	연합뉴스('10.9.5 07:01입력) 「햇살론 조기소진 우려..보증재원 확충검토」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905
196	서울경제신문(8.27자 가판) 「캠코 '저금리로 전환대출' 대상 늘리기로」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827
197	연합뉴스('10.8.27 16:02 입력), 「DTI 풀 때 실수요자 연소득 기준도 완화 검토」	20100827
198	연합뉴스('10.8.25 15:40 입력), 「경제장관 긴급회동...DTI 부분완화 가닥」 제하 기사 관련	20100825
199	이데일리('10.8.22), MBC('10.8.21), 조선일보('10.8.21) 등의 DTI 규제완화 기사 보도 관련	20100822
200	서울경제('10.8.22 17:40 입력), 「헌집 사는 1주택자도 DTI 규제완화하기로, 고가주택 강남권 등 제외...부동산대책 이달내	20100822

	발표」 제하 기사 등 관련	
201	동아일보 「최저 신용등급자에도 서민금융 지원」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820
202	한국경제(10.8.20 18:32 입력),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부동산 활성화案. 월말께 나올 것"」 제하 기사 관련	20100820
203	서울신문 「이럴 바엔 만들지나 말지... 허울뿐인 中企정책 2제」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818
204	서울경제(10.8.11), 「입장누그러진금융위...DTI완화 저울질」 제하 기사 관련	20100811
205	서울경제(10.8.12 가판), 「시장조성제도 부활한다」 제하 기사 관련	20100811
206	헤럴드경제(10.8.10), 「금융소비자 보호업무 대폭 강화」 제하의 보도 관련	20100810
207	이데일리(10.8.9 11:19), 「예금보험대상 변액포함... CMA-ELS 제외」 제하 기사 관련	20100809
208	연합뉴스(10.8.8), '연소득 5천만원 넘으면 햇살론 제한검토' 제하의 기사관련 보도해명	20100808
209	국민일보(10.8.4) 「서민들 되레 사채시장 내몰린다」 관련 기사에 대한 설명	20100804
210	SBS 8시 뉴스(10.7.31) 「가문의 단비 '햇살론'...재원마련 문제없나?」 관련 기사에 대한 해명	20100731
211	연합뉴스(10.7.29) 「햇살론 연체이자율 제각각 '혼선」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20100729
212	연합인포맥스, 「DTI, 서울 60%, 인천·경기 70%로 완화 검토」 제하 기사 관련	20100719
213	내일신문 「금융위'행복잡이 프로젝트' 혼선」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715
214	헤럴드경제(10.7.9) 「보험연구원 분리 논란 심화...보개원' 부글부글」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709
215	한국경제(10.7.2) 「금감원 '펀드 시세조종 조사」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702
216	한국경제(10.6.30) 「금융위-금감원 또 충돌조짐」 제하 기사 등 관련	20100629
217	파이낸셜뉴스(10.6.30) 「금융위-금감원 또 제재권 신경전」 제하 기사 관련	20100629
218	연합인포맥스 「정부, 은행세 걷어 '환율안정펀드' 조성」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623

219	서울경제(10.6.23) 「금융위 '금융상품 백화점' 도입재추진」 제하 기사 관련	20100622
220	헤럴드경제(10.6.20) 「대부업체 고객정보 공개 반대 여전」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620
221	이데일리 「은행세 요율, 금융 재정거래 억제수준 부과 검토」 제하의 보도 관련	20100617
222	헤럴드 경제 「KB-우리지주 합병해도 독과점 문제없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616
223	한겨레신문 「은행세 20조원 부과 검토」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609
224	한국경제 「보험사에서 증권계좌 만들면 불법?」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608
225	서울신문 「은행세 내년 도입 확정」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601
226	동아일보 「대부업체 "고객정보 뭉뚱"… 10조원 규모 서민대출 무산 ?」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522
227	[보도해명]서울경제 「변호사·회계사도 '자금세탁 보고' 의무화, 이르면 내년부터」 제하 기사 (10.5.17 A01면, A06면) 관련	20100517
228	한국경제신문의 「세계단일 회계기준 2013년 새로 도입한다」 보도 관련	20100514
229	헤럴드경제 「보이스피싱 관련법 급조 … 피해자들 두 번 운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430
230	이데일리 「금감원 제재권한 축소 법안 기습제출」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420
231	문화일보의 「감사의견 거절 급증… 해당 상장폐지기업 감리 강화」 보도 관련	20100420
232	헤럴드경제 「은행권 외화차입 규제검토」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419
233	연합뉴스 등의 「지방미분양 문제 완화방안검토」 에 관한 기사 관련	20100414
234	뉴스핌, 「은행 사외이사제 석달만에 또 재수술」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412
235	연합뉴스 「서민금융사 보증부·대출금리 11%대」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411
236	이투데이 「금융위 "직접 징계의 칼을 들겠다"」 및 「금융위-금감원 제재권 놓고 '신경전」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408
237	헤럴드경제 「미소금융 금리 두자리수로 올려 모럴해저드	20100407

	막는다」 및 「모럴해저드 차단불구 지나친 고금리 도마에」 제하의 기사 관련	
238	헤럴드경제 「정부, 서민금융위해 저축은행에도 이익출연 강요」 및 이데일리 「금융위 서민금융TF, 개인프리워크아웃制 연장」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406
239	연합뉴스 「저신용자 신용대출 받기 쉬워진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401
240	경향신문, 「車요일제보험 할인 준비부족에 또 연기」 보도 관련	20100401
241	매일경제 「개인신용정보 종합DB 만든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328
242	연합뉴스 「저축銀 감독강화.. 자산운용 규제도 검토」 및 「대형 저축은행 매년 종합검사 받는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314
243	한국경제 「모든 스마트폰서 인터넷뱅킹 된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307
244	서울경제 「저축銀도 유동성비율 100%이상 맞춰야」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305
245	경향신문 등의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사전 적격성 심사제도」에 관한 기사 관련	20100303
246	서울경제 「금융안정을 위한 상시협의체 신설 검토」 및 「금융권 충당금체계 확 바뀐다」 제하기사 관련	20100301
247	연합뉴스 「금융사별 예금보호한도 차등화 검토」 제하기사 관련 보도해명	20100226
248	연합인포맥스 「금융당국, 외은지점 달러차입제한 강력규제 본격 검토」, 매경 「국민연금과 통화스왑 늘려 제2 외환보유액 확보한다」 제하 기사 관련 보도해명	20100226
249	헤럴드경제 「우리지주 자사주 차입매입 허용」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223
250	이데일리, 「금융당국, 증권사 신규인가 전면 재검토」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222
251	서울경제 「예보, 금융위로부터 독립해야」 제하기사 관련	20100216
252	한국경제 「우리금융 합병 설계'예보 MOU'뚫는다」 등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209
253	한국경제 「우리금융, 합병통해 민영화한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208
254	서울경제 인터넷판 「예금보장제 10여년만에 대수술」 제하기사 관련	20100126

255	서울경제 「2금융권 미소금융 출자'난색」 제하기사 관련	20100120
256	서울경제 "은행서도 '랩어카운트'판매한다	20100119
257	세계일보 「公자금 상환 부진 '혈세만 줄줄」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119
258	서울경제 「새 보험료 산출방식 의무도입 "유예"」 제하 기사 관련	20100113
259	연합뉴스 「KB회장, 사외이사제 개선후 뽑아야」 제하기사 관련	20100110
260	서울경제 등 「우리금융 등 은행간 M&A 빨라진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104
261	매일경제 「우리금융 민영화 일정 내주 발표」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103
262	한국경제신문, 「대우건설 産銀에 넘겨라」 기사에 대한 해명	20091228
263	연합뉴스, 서울신문의 「기업인수목적회사제도 허점투성이」 기사에 대한 해명	20091228
264	헤럴드경제 "금융회장 선출에 주주대표 참여"관련	20091204
265	연합뉴스의 「빅4 회계법인에 외부감사 몰아주기」 보도 관련	20091203
266	매일경제"부실보험판매대리점이배상..."(금융위 금융산업 중장기 비전)"관련	20091203
267	매일경제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의무화 (금융위 금융산업 중장기 비전)"관련	20091202
268	연합뉴스 "돈세탁 의심거래 무조건 신고추진"관련	20091127
269	동아일보의 「은행장 후보, 금융당국이 사전심사」 보도 관련	20091119
270	매일경제 「은행 美국채 보유 의무화 내년 7월 시행」 제하의 기사 관련	20091109
271	연합뉴스 「우리금융지분 7%, 11월내 매각」 제하의 기사 관련	20091027
272	10.21 연합인포맥스 「증권·자산운용사 콜시장 참여제한」, 「콜시장 제한·통안증권 국채전환 등 단기자금시장 대개편」 제하 기사 관련 보도해명	20091021

273	동아일보 「경영권 무관한 우리금융지주 지분 23% - 정부, 전량매각 미리 의결키로」 제하의 기사 관련 해명	20091005
274	헤럴드경제 「'미소금융' 불참...외국계銀 해도 너무하네」 관련 보도 해명	20090925
275	아시아투데이 「정부, 신용평가사 자회사 보유 금지 추진」 제하의 기사 관련	20090911
276	CBS 노컷뉴스 「정부, 금융공기업도 임금 5% 반납」 제하의 기사 관련	20090903
277	머니투데이 「우리금융, 조기 민영화 금융위에 요청」 제하의 기사 관련	20090813
278	연합뉴스 「금융당국 주택대출 확대 은행에 불이익」 제하의 기사 관련	20090811
279	위원장 기자간담회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20090720
280	OCI(주) 조사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	20090715
281	주택담보대출 LTV‧DTI 규제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20090618
282	"보험사기 합동조사팀"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20090604
283	"정부 유동성공급 지속 곤란"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20090527
284	한국경제 「車운행 많으면 보험료 더 낸다」 기사 관련	20090527
285	공매도 냉각기간제도 시행여부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20090524
286	매일경제 「주식 공매도 곧 재개」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20090513
287	파이낸셜뉴스, 「증권사'허술한 입단속'어쩌나」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511
288	서울경제, 「금융당국, "저축은행 합쳐라"」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417
289	이데일리 「상장중소 2011년 국제회계기준 적용 연기 검토」 제하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20090326
290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등 「주식 공매도 재허용 검토」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20090324
291	이데일리 「정부, 회사채 신속인수제 부활 검토」 제하 보도 관련 해명자료	20090320
292	연합뉴스 「금감원 "정상기업도 신용위험 재평가"」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309

293	파이낸셜뉴스 「정부, 해운사 배 100척 매입」 제하 보도 관련 해명자료	20090303
294	국내은행 외화차입금 현황(보도참고자료)	20090227
295	The Economist 「Domino theory」 (09.2.26일자)기사 관련	20090227
296	연합뉴스 「BIS비율 8% 이상 은행도 공적자금 투입」 제하 보도 관련 해명자료	20090219
297	서울경제 「올해 만기 중기대출 2금융권도 전액 연장」 관련 보도 해명	20090216
298	한국경제 「기업대출보증 모두 만기연장」 및 「파격적 보증 으로 中企 자금난 해소...수출보험도 무제한 지원」 (09.2.12)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211
299	연합뉴스, 「정부, 구조조정 속도 낸다」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209
300	한국일보, 「부실징후 대기업 자구안 내라」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206
301	한국경제 「자통법에 발목잡힌 국민연금」 기사 관련	20090205
302	매일경제 「은행 BIS비율 내달 완화한다」 가판 기사 관련	20090130
303	머니투데이 「건설·조선사 구조조정 미진 때 은행문책」 및 연합 뉴스 「금감원, AB등급 부도나면 은행문책」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119
304	연합뉴스 「은행들 건설·조선사 퇴출 없다」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116
305	한국경제 「금감원 건설·조선사 옥석가리기 직접 나설 것」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115
306	이데일리 「전광우"동부·두산 등 중견그룹 모니터링"」 제하 기사 관련	20090113
307	이데일리, 「금감원장'BIS10%'발언....금융위와 주도권선점용?」 기 사에 대한 해명	20090112
308	서울경제, 「부실 저축은행 내달중 속아낸다」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109
309	문화일보 제14면 「기업'차사株'담보펀드 나온다」 제하 기사 관련	20090107
310	내일신문 제1면 「모든 은행에 공적자금 투입」 제하 기사 관련	20090106

김 기 식 의원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

1. 2008년 이후 현재까지 기관별·부서별 법률 자문 계약

□ '08년 이후 법률 자문 계약

기관명 (부서명)	자문회사 (로펌)	계약 체결일	법인대표	법인 연락처	계약내용
금융위 (은행과)	Arnold & Porter LLP	2012.8.1	Jean Kalicki (담당파트너)	+1 202. 942.6155	한·벨 투자협정 분쟁 자문
금융위 (은행과)	법무법인 태평양	2012.6.29	오용석	02-3404 -0000	한·벨 투자협정 분쟁 자문
금융위 (은행과)	법무법인 태평양	2010.3.17	오용석	02-3404 -0000	은행법 법률자문
금융위 (은행과)	법무법인 태평양	2009.7.28	오용석	02-3404 -0000	은행법 법률자문
금융위 (은행과)	법무법인 태평양	2008.8.25	오용석	02-3404 -0000	은행법 법률자문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

**2. 2008년 이후 현재까지 기관별·부서별 법률
자문 내역**

□ 국제투자분쟁이 시작되었고 우리 정부는 이미 분쟁
대응체제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바,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향후 중재에서 사용될
증거자료 중 하나로서 공개될 경우 정부의 대응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 향후 중재 절차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출하여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

3. 금융위원회 소송현황

□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소송 현황 : 붙임 참조

붙임 금용위원회 소송현황

원고	사건번호 (1심)	사건명	사건내용	소 제기일	소결과 및 종국일	선임 대리인	선임비용(단위 : 만원)		
							계	착수금	성공 회수
권○○	서울중앙지법 2003가합45873	손해배상	소외 ○○회사에 대해 산업은행의 정리절차 개시가 위법하다고 주장	2003-06-21	2008-07-24 승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박○○ 외 73명	서울중앙지법 2004가합20475	손해배상	피고 ○○의 주금 가장납입 등을 감시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	2004-03-22	2008-07-10 승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김○○ 외 147명	서울중앙지법 2004가합29472	손해배상	피고 ○○의 주금 가장납입 등을 감시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	2004-04-21	2008-07-10 승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신○○ 외 169명	서울중앙지법 2004가합29649	손해배상	○○에 대한 유가증권 심사파실 로 이를 신뢰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	2004-04-21	2008-09-12 승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김○○ 외 17명	서울중앙지법 2004가합67368	손해배상	피고 ○○의 주금 가장납입 등을 감시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	2004-08-20	2008-07-10 승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강○○ 외 229명	서울남부지법 2004가합14957	손해배상	소외 ○○이 주금납입 없이 발행 한 주식을 취득하여 손해를 입자 금감원등이 유가증권신고서 심사 시 과실이 있다고 주장	2004-09-22	2008-08-29 승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공업 외 3명	서울중앙지법 2004가합91118	손해배상	피고 ○○의 주금 가장납입 등을 감시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	2004-11-09	2008-07-10 승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박○○ 외 1명	서울중앙지법 2004가합109408	손해배상	피고 ○○의 주금 가장납입 등을 감시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	2004-12-29	2008-07-10 승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원고	사건번호 (1심)	사건명	사건내용	소 제기일	소 결과 및 종국일	선임 대리인	선임비용(단위: 만원)		
							계	회수금	당사자 비용
○○회계 법인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40518	과징금부과취소	회계 부실감사로 제재받자 소 제기	2004-12-29	2008-05-14 승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회계 법인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6553	과징금부과취소	회계 부실감사로 제재받자 소 제기	2005-02-25	2008-05-14 승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주)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3961	시정조치처분 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등으로 제재받자 소제기	2006-04-11	2010-04-15 승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권○○	서울중앙지법 2006가합42509	부당이득금반환 등	회사정리절차 개시로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없었으므로 회사의 모 든 부실책임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	2006-05-18	2009-04-23 승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이○○ 외 1명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8522	영업인가취소 처분 취소	○○상호저축은행이 부실로 영업 인가취소 되자 소 제기	2006-05-23	2008-06-20 승소	세종	600	600	0
권○○	서울중앙지법 2006가합49593	손해배상	산업은행 등에 대한 국가의 감독 부실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2006-06-12	2009-10-15 승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회계 법인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9270	감리결과조치 처분취소	감리조서제출 거부로 벌점 등의 처분을 받자 처분 파종을 주장	2006-08-14	2009-04-07 승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상호 저축은행	서울중앙지법 2007가합42810	손실보전금 등 청구	원고가 부실화된 ○○금고를 인수 하였으나 자금지원을 하지 않아 손실을 입었으므로 손실보전 요구	2007-05-18	2009-05-14 승소	세종	900	900	0
○○건설 (주)	서울중앙지법 2007가합79195	손해배상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로 동 금융기관 예금자인 원 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2007-09-12	2009-02-12 승소	세종	500	500	0

원고	사건번호 (1심)	사건명	사건내용	소 제기일	소 결과 및 종국일	선임 대리인	선임비용(단위: 만원)		
							계	착수금	상공 보수
○○○칩스	서울중앙지법 2007가단353124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잘못 부과된 과징금 납부 후 원금 만을 반환받자 과징금 상당액에 대한 이자비용 청구	2007-10-01	2008-04-15 화해	태평양	300	300	0
권○○ 외 41명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8028	불합격처분 취소	공인회계사 2차시험 불합격 처분이 자의적임을 이유로 취소 요구	2007-10-09	2009-02-12 승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남○○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3228	정보공개거부처 분 취소	원고의 보험사기인지시스템 등록 여부 등에 대한 정보공개거부결 정 취소 요구	2007-11-22	2008-10-24 승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김○○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5408	불공정거래조치 처분 취소	주식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를 이유로 면직요구처분을 받자 소 제기	2007-12-06	2008-11-25 승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손○○ 외 1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156	해임요구처분 취소	금감원 퇴직자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조치를 받자 소 제기	2008-01-16	2008-11-14 패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송○○ 외 1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6561	해임요구처분 취소	금감원 퇴직자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조치를 받자 소 제기	2008-02-14	2009-12-01 패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주)○○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0383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 기재 등으로 제재받자 소 제기	2008-05-16	2009-11-12 승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김○○	서울등부지법 2008가단57563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신용정보업자에 대한 국가의 감 독부실을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	2008-08-18	2009-03-11 소취하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주)○○○에 너지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7855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 기재 등으로 제재받자 소 제기	2008-09-24	2010-04-15 승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정○○ 외 4명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60600	손해배상(기)	국가의 '희망모아유동화전문회사'에 부실감독 책임 주장	2008-12-08	2011-01-11 승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원고	사건번호 (1심)	사건명	사건내용	소 제기일	소 결과 및 종국일	선임 대리인	선임비용(단위 : 만원)		
							계	착수금	성공 보수
고○○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51066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유가증권신고서 제출하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과징금을 부 과받자 본인이 투자자 모집을 실 질적으로 하지 않았음 주장	2008-12-30	2010-07-01 승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오○○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517	계약이전결정 제외 취소	○○상호저축은행의 5천만원 이상 예금자에 대해 계약이전을 제외 하는 결정은 불법이라고 주장	2009-02-05	2010-04-15 승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장○○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422	감리결과 조치 취소	회계 부실감사로 제제발자 소 제기	2009-01-28	2010-02-18 승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최○○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5944	정직조치요구처 분 취소	불공정거래 주문수탁금지 및 일임 매매거래 제한위반으로 제제발자 소 제기	2009-04-27	2009-09-11 승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주)○○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0076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등으로 제제발자 소제	2009-05-27	2011-02-01 승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박○○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6463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등으로 제제발자 소제	2009-07-08	2011-01-11 승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주)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6316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등으로 제제발자 소제	2009-09-02	2010-11-24 승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회계 법인 외 3명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9865	감리결과 조치 취소	회계 부실감사로 제제발자 소 제기	2009-09-22	2010-03-17 소취하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주)○○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0858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등으로 제제발자 소제	2009-09-28	2010-08-13 승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원고	사건번호 (1심)	사건명	사건내용	소 제기일	소 결과 및 종국일	선임 대리인	선임비용(단위: 만원)		
							계	채우금	성공 보수
곽○○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1424	금융행정정보공 개 거부처분 취소	소외 허○○에 대한 신용정보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소 제기	2009-09-30	2010-04-22 승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차○○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4673	정보공개 거부처 분 취소	(주)○○에 대한 과징금부과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 하자 소 제기	2009-12-16	2010-06-17 소취하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윤○○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8741	감사보고서 감리 결과 조치처분 취소	회계 부실감사로 제제발자 소 제기	2010-04-23	2010-09-02 승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김○○	용인시법원 2010차1764	구상금	보험모집인에 대한 국가의 보험 업무 감독소홀이 있었다고 주장	2010-05-27	2010-07-16 소취하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주)○○ 외 1명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6834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 기재 등으로 제제발자 소제	2010-06-28	2010-10-08 승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김○○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4743	조치처분취소	회계 부실감사로 제제발자 소 제기	2010-09-01	2011-03-19 소취하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저축 은행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6806	부실금융기관지 정취소	유동성 위기를 피하기 위하여 암 의로 임시 휴업 등을 하여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발자 소제기	2011-02-28	2011-06-08 승소	태평양	1000	500	500
이○○ 외 2명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8518	손해배상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2011-04-27	2011-06-24 소취하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김○○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3958	주식에 대한 처분명령 취소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취득한 주 식에 대하여 주식처분 명령을 받 자 소 제기	2008-03-28	2008-05-19 소취하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원고	사건번호 (1심)	사건명	사건내용	소 제기일	소 결과 및 종국일	선임 대리인	선임비용(단위: 만원)		
							계	착수금	성공 보수
이○○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7028	해임요구처분 취소	금감원 퇴직자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조치를 받아 소제기	2008-04-21	2008-11-21 폐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파트 너스 외 1명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3276	주식처분 명령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 기재 등으로 제재 받자 소제	2008-06-05	2008-12-24 승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전○○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4453	보험설계사등록 취소처분 취소	보험료 유용 등으로 제재처분을 받자 소 제기	2008-06-16	2008-10-16 승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임○○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7018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 기재 등으로 제재 받자 소제	2008-07-03	2008-11-14 승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주)○○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3836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 기재 등으로 제재 받자 소제	2008-11-03	2011-06-23 승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시멘 트(주)	서울중앙법원 2010가합8360	의결권 확인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 자산운용(주) 주식을 취득한 데 대해 의결권 제한 통보를 하자 소제기	2010-01-26	2011-07-28 승소	정부법 무공단	500 400 400	500 400 400	0 0 0
전국○○ 노동조합 ○○은행 지부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0225	비금융주력자의 한도초과보유지 분 처분명령 거부처분 취소	○○펀드Ⅳ의 ○○은행 지분에 대하여 비금융주력자임을 이유로 처분을 명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거부하자 소 제기	2011-03-28	2011-07-28 소취하	화우	250	250	0
이○○ 외 150명	서울중앙지법 2010가합56574	손해배상	(주)○○테크놀로지사의 회계처리기 준 위반(주식매수청구권 관련) 및 상장폐지 과정에서 국가의 감독 소홀이 있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2010-06-03	2011-08-06 승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원고	사건번호 (1심)	사건명	사건내용	소 제기일	소 결과 및 종국일	선임 배리인	선임비용(단위 : 만원)		
							계	채수금	정공 보수
○○ 외 1명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2431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 기재 등으로 제재 받자 소제	2009-12-04	2011-09-06 승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개회 연대외1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5166	정보공개거부처 분 취소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취득 승 인관련 금융비주력자 판단자료 제공 거부의 취소를 요구	2007-09-12	2011-11-24 일부 패소	정부법 무공단	200	200	0
허○○ 외 1명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8981	부작위위법확인	대주주 사후변경승인 절차가 없 음에도 불구하고 사후변경승인 신청 후 부작위 위법을 주장	2011-09-02	2012-04-23 각하	정부법 무공단	400	400	0
○○시맨 트(주)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9049	대주주 변경승인 조치통보 취소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 자산운용(주) 주식을 취득한 데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자 소 제기	2009-09-17	2012-04-20 승소	정부법 무공단	450 300 400	450 300 400	0 0 0
공○○ 외 2명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5001	감사보고서에대 한감리결과조치 처분 취소	회계 부실감사로 제재받자 소 제기	2010-03-29	2012-04-30 승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이○○	대진지방법원 2011가단20949	손해배상(기)	민원사항을 지연시키는 등의 불 법행위를 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 았다고 주장	2011-04-12	2012-05-09 승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백○○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7602	공인회계사직무 정지2년부과처분 취소	회계 부실감사로 제재받자 소 제기	2011-11-08	2012-04-30 승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원고	사건번호 (1심)	사건명	사건내용	소 제기일	소 결과 및 종국일	선임 대리인	선임비용(단위: 만원)		
							계	착수금	성공 보수
○○리츠 주식회사 외 1명	서울행정법원 2011가합27689	손해배상(기)	원고에 대하여 주채권은행도 지정 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원고들이 경영정상화할 기회를 잃게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	2011-03-24	2012-05-24 소취하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회계 법인 외 3명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5831	감리결과조치통 보처분 취소	회계 부실감사로 제제받자 소 제기	2010-06-18	2012-05-23 승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주식회사 ○○	순천지원 2012가소9568	손해배상(기)	신용카드 상품의 부실한 인허가, 관리, 감독 소홀 등의 잘못이 있 다고 주장	2012-05-30	2012-07-11 소취하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신용 정보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2970	업무정지처분취 소등	경영상태가 불건전하여 영업정지 받자 소 제기	2011-12-16	2012-07-17 소취하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은행 우리사주 외 4명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0189	주식취득승인처 분무효확인등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임이 명백 하다고 주장	2011-11-25	2012-06-28 승소	화우	250	250	0
진○○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0844	제재처분취소	대주주 부당지원 등으로 퇴직자 상당 조치를 받자 소 제기	2011-11-30	2012-08-07 소취하	태평양	1000	500	500
○○저축 은행외 1명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5684	인가취소 및 해산통보처분 취소	지분잠식 등을 이유로 인가취소 되자 소 제기	2006-04-26	파기환송심 진행중	한빛	900	900	0
						세종	600	600	0
						세종	600	600	0
						세종	300	300	0

원고	사건번호 (정)	사건명	사건내용	소 제기일	소 결과 및 종국일	선임 대리인	선임비용(단위 : 만원)		
							계	착수금	성공 보수
황○○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4499	제제처분 취소	파생상품 리스크관리 소홀 등으로 퇴직자 상당조치를 받자소 제기	2009-12-16	3심 진행중	정부법 무공단,	1400,	700,	700,
						김용찬	1400	700	700
						변호사			
○○저축 은행 외 76명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5428	부실금융기관결 정 및 경영개선훈령 취소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 관 결정 및 경영개선훈령 조치가 위법하다고 주장	2011-05-17	2심 진행중	바른	2500	1000	1500
						바른	625	250	375
						태평양	600	200	400
김○○ 외 23명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56779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2011-06-07	1심 진행중	정부법 무공단	100	60	40
강○○ 외 80명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59563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2011-06-13	1심 진행중	정부법 무공단	100	60	40
강○○ 외 123명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59075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2011-06-13	1심 진행중	정부법 무공단	100	60	40
강○○ 외 18명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72108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2011-07-13	1심 진행중	정부법 무공단	60	36	24

원고	사건번호 (1심)	사건명	사건내용	소 제기일	소 결과 및 종국일	선인 대리인	선임비용(단위 : 만원)		
							계	착수금	성공 보수
김○○ 외 9명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72771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2011-07-15	1심 진행중	정부법 무공단	100	60	40
이○○	서울중앙지법 2011가단29240 0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2011-08-11	1심 진행중	정부법 무공단	150	90	60
강○○ 외 192명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84705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2011-08-16	1심 진행중	정부법 무공단	150	90	60
강○○ 외 93명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82969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2011-08-10	1심 진행중	정부법 무공단	150	90	60
강○○ 외 140명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88295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2011-08-24	1심 진행중	정부법 무공단	150	90	60
진○○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10622 3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2011-10-11	1심 진행중	정부법 무공단	150	90	60
진○○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10625 4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2011-10-11	1심 진행중	정부법 무공단	150	90	60
강○○ 외 31명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50189 4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2012-01-20	1심 진행중	정부법 무공단	60	36	24

원고	사건번호 (1심)	사건명	사건내용	소 제기일	소 결과 및 증거인	선임 배리인	선임비용(단위: 만원)		
							계	차수금	성공 보수
고○○ 외 11명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50094 5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2012-01-11	1심 진행중	정부법 무공단	60	36	24
강○○ 외 26명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50190 0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2012-01-20	1심 진행중	정부법 무공단	60	36	24
이○○ 외 9명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2241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2012-02-03	1심 진행중	정부법 무공단	60	36	24
강○○ 외 42명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51787 5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2012-06-11	1심 진행중	협의중	없음	없음	없음
강○○ 외 38명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51609 4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2012-05-25	1심 진행중	협의중	없음	없음	없음
김○○ 외 12명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51610 0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2012-05-25	1심 진행중	협의중	없음	없음	없음
김○○ 외 133명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43596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2012-05-24	1심 진행중	협의중	없음	없음	없음
전○○ 외 5명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9877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2012-06-05	1심 진행중	협의중	없음	없음	없음

원고	사건번호 (1심)	사건명	사건내용	소 제기일	소 결과 및 종국일	선임 대리인	선임비용(다위 : 만원)		
							계	최소금	성공수
고○○ 외 105명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51790 5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2012-06-11	1심 진행중	협의중	없음	없음	없음
강○○ 외 125명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55247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2012-06-29	1심 진행중	협의중	없음	없음	없음
강○○ 외 54명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55254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2012-06-29	1심 진행중	협의중	없음	없음	없음
정○○	서울중앙지법 2012가소53442 15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2012-05-27	1심 진행중	협의중	없음	없음	없음
이○○	부천시원 2012가합4724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감독의무 위반으로 5천만원 초과 예금의 일부 손실 이 발생했다고 주장	2012-06-28	1심 진행중	협의중	없음	없음	없음
○○회계 법인 외 2명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3409	감사업무제하등 처분취소	회계 부실감사로 제제받자 소 제기	2011-12-21	1심 진행중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회계 법인 외 3명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3416	감사업무제하등 처분취소	회계 부실감사로 제제받자 소 제기	2011-12-21	1심 진행중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주)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8878	과징금및가산금 부과처분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 기재 등으로 제제받자 소제	2010-07-14	3심 진행중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원고	사건번호 (1심)	사건명	사건내용	소 제기일	소 결과 및 종국일	심판 대리인	선임비용(단위: 만원)		
							계	차수금	성공 보수
원주양 ○○○○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1109	과징금부과처분 등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 기재 등으로 제재받자 소제	2010-10-27	3심 진행중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주식 회사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5889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 기재 등으로 제재받자 소제	2011-02-22	2심 진행중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주)○○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7261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 기재 등으로 제재받자 소제	2011-08-19	2심 진행중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9635	보험설계사등록 취소처분취소	보험료 대납의 방법으로 가입자에 대해 특별이익을 제공하여 보험 설계사등록이 취소되자 소 제기	2011-06-22	2심 진행중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박○○ 외 1명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5237	징계처분취소	회계 부실감사로 제재받자 소 제기	2012-02-14	1심 진행중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김○○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6582	직무정지처분취 소	회계 부실감사로 제재받자 소 제기	2012-02-23	1심 진행중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주식회사 ○○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8981	과징금부과처분 등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 기재 등으로 제재받자 소제	2012-06-14	1심 진행중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신용 정보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5057	신용정보업허가 취소처분취소등	자기자본이 법상 요건에 미달하 여 허가 취소를 받자 소 제기	2011-10-20	2심 진행중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생명 보험 주식회사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7305	과징금부과처분 등취소	대주주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과 징금 등 제재를 받자 소제기	2011-11-04	1심 진행중	태평양	1000	500	500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8469	과징금부과처분 등취소	대주주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과 징금 등 제재를 받자 소제기	2011-11-11	1심 진행중	태평양	1000	500	500

원고	사건번호 (1심)	사건명	사건내용	소 제기일	소 결과 및 종국일	선임 대리인	선임비용(단위 : 만원)		
							계	착수금	정공 보수
남○○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2423	정보공개거부처 분취소	은행입출금 내역 등 보호사기와 관련한 입증자료의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위원회 보유·관리 정보가 아님을 이유로 거부 처분 을 받자 소제기	2011-09-27	1심 진행중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여○○	서울중앙지법 2012가단50105 25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보이스피싱에 대한 감독의무 위 반을 주장	2012-01-27	1심 진행중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노동조합 외 11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6091	법률안 공고 처분 취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하 여 실시하자 행정처분 위반 등 을 주장	2012-05-18	1심 진행중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회계 법인 외 1명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4996	회계감리결과제 재처분등취소	회계 부실감사로 제제발자 소 제기	2012-05-09	1심 진행중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이○○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9236	대표자문책경고 처분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등으로 제제발자 소제	2012-06-18	1심 진행중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주식회사 ○○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0557	조사·감리결과조 치등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등으로 제제발자 소제	2012-06-27	1심 진행중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증권 주식회사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2638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등으로 제제발자 소제	2012-07-11	1심 진행중	협의중	없음	없음	없음
장○○ 외 1명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2041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등으로 제제발자 소제	2012-07-09	1심 진행중	협의중	없음	없음	없음

원고	사건번호 (1심)	사건명	사건내용	소 제기일	소 결과 및 중요인	선임 대리인	선임비용(타액·만원)		
							계	최소금	정액
이○○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3129	제제처분취소	투자신탁 자산운용업무 중의 위법· 부당행위로 퇴직자상당조치를 받 자 소 제기	2012-07-16	1심 진행중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변호 사모임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4191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론스타 ISD 제기 의사 통보서 공 개 청구를 거부하자 소 제기	2012-07-24	1심 진행중	협의중	없음	없음	없음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

4. 2008년 이후 현재까지 기관별 퇴직 인원 및 이직 상세내역(계약직 포함)

□ 퇴직 인원 및 이직 내역(금융위 출범('08.3)이후 ~ 현재)

성명	퇴직일	퇴직사유	재취업 기관
이○○	08.03.28	명예퇴직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전○○	08.04.30	명예퇴직	은행연합회 감사
김○○	08.05.15	명예퇴직	법무법인
윤○○	08.06.07	계약만료	-
하○○	08.08.01	의원면직	검사 특채
장○○	08.08.20	의원면직	-
김○○	08.10.07	의원면직	금융감독원
강○○	08.11.19	의원면직	법무법인 회계사
김○○	08.12.09	의원면직	금융감독원 부원장
정○○	09.01.05	명예퇴직	금융투자협회 부장
노○○	09.01.08	의원면직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이○○	09.01.09	의원면직	법무법인
전○○	09.01.20	의원면직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	09.03.17	의원면직	법무법인 변호사
양○○	09.03.26	명예퇴직	한국자금중개 전무
김○○	09.04.30	의원면직	금융투자협회
나○○	09.05.13	명예퇴직	산업은행 계약직
한○○	09.05.15	의원면직	신영증권 상무이사
박○○	09.09.11	명예퇴직	SK C&C 상무
김○○	09.10.12	의원면직	-
김○○	09.11.17	의원면직	한국증권금융 사장
이○○	09.11.19	의원면직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
김○○	10.02.17	의원면직	한국거래소 주임
나○○	10.03.02	의원면직	한국정책금융공사 팀장
임○○	10.04.15	의원면직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서○○	10.04.15	의원면직	한국정책금융공사 팀장
김○○	10.06.17	의원면직	-
김○○	10.08.23	의원면직	-
남○○	10.10.14	의원면직	한국정책금융공사 팀장
임○○	10.12.06	의원면직	파인트리 파트너스(자산운용사)

성명	퇴직일	퇴직사유	재취업기관
진○○	11.01.03	의원면직	송실대 객원교수
최○○	11.02.16	명예퇴직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권○○	11.03.26	의원면직	금융감독원장
이○○	11.03.27	임기만료	법무법인 변호사
김○○	11.05.02	명예퇴직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안○○	11.06.02	의원면직	-
공○○	11.09.23	명예퇴직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남○○	11.09.28	의원면직	KT 상무
김○○	11.12.28	파면	-
이○○	12.01.01	계약만료	-
박○○	12.02.27	의원면직	-
원○○	12.03.14	명예퇴직	금융결제원 감사
이○○	12.03.21	의원면직	두산그룹
김○○	12.05.18	의원면직	예금보험공사
이○○	12.05.21	명예퇴직	신용보증기금 이사
김○○	12.05.26	명예퇴직	예금보험공사 사장
진○○	12.07.02	명예퇴직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김○○	12.08.02	의원면직	법무법인 변호사
김○○	12.08.17	의원면직	한국증권금융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

5. 각 기관별 산하위원회 설치 현황

- 명칭, 설치이유, 법적근거, 주요활동사항, 구성원 인적사항, 2008년 이후 회의개최 실적 및 예산배정 내역, 예산 사용 내역

공정시장과

□ 공정시장과 소관 위원회 현황

명칭	법적근거	주요활동사항	인적구성	회의개최 실적*
감리위원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23, §25)	· 회계감리·조사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전 심의	당연직 4인 위촉직 5인	08년 6회 09년 9회 10년 13회 11년 11회 12년 9회
자본시장 조사 심의위원회	자본시장 조사업무규정 (§21, §22)	· 불공정 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심의, 이의신청·직권재심 등에 관한 사전 심의	당연직 4인 위촉직 3인	08년 13회 09년 13회 10년 13회 11년 11회 12년 7회
회계제도 심의위원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23, §24)	· 회계처리기준 수정요구, 회계감사기준 재개정 승인 등 회계제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사전 심의	당연직 4인 위촉직 7인	08년 4회 09년 4회 10년 4회 11년 3회 12년 1회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	공인 회계사법 (§48)	·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인 회계사에 대한 징계의결	당연직 5인 위촉직 2인	08년 0회 09년 2회 10년 1회 11년 1회 12년 1회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위원회	공인 회계사법 (§6조의2)	· 공인회계사 시험과목, 선발인원 등 시험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공인회계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중요 사항 심의	당연직 3인 위촉직 4인	08년 1회 09년 1회 10년 1회 11년 0회 12년 1회

* 정부조직 개편으로 금융위로 이관된 시점('08.2.29)부터 '12년 6월말 기준

□ 각 위원회 구성원 인적사항('12.6월말 기준)

위원회명	위원명	구분	소속/직위
감리위원회	유재훈	당연직	증선위 상임위원
	진웅섭	당연직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김호중	당연직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김광운	당연직	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장
	최성환	위촉직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
	정석우	위촉직	고려대 경영대 교수
	황이석	위촉직	서울대 경영대 교수
	지현미	위촉직	계명대 교수
	최호영	위촉직	법무법인 다담 변호사
자본시장 조사심의 위원회	유재훈	당연직	증선위 상임위원
	진웅섭	당연직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정연수	당연직	금감원 부원장보
	최성환	당연직	금융위 법률자문관
	박경호	위촉직	법무법인 원 변호사
	안동현	위촉직	서울대학교 교수
	김유니스	위촉직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회계제도 심의위원회	유재훈	당연직	증선위 상임위원
	진웅섭	당연직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김형돈	당연직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김호중	당연직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권현수	위촉직	삼덕회계법인 이사
	한종수	위촉직	이화여대 교수
	전규안	위촉직	숭실대 교수
	함중호	위촉직	안진회계법인 감사본부총괄대표
	이선중	위촉직	삼성전자 부사장
	정다미	위촉직	명지대 교수
	이영훈	위촉직	포스코 전무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	추경호	당연직	금융위 부위원장
	신민철	당연직	감사원 금융기금감사국장
	황상철	당연직	법제처 경제법제국장
	김형돈	당연직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진웅섭	당연직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정기영	위촉직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부회장
	손성규	위촉직	증선위 비상임위원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위원회	추경호	당연직	금융위 부위원장
	고승범	당연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진웅섭	당연직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이재일	위촉직	안진회계법인 부대표
	최현덕	위촉직	회계기준원 책임연구원
	이정치	위촉직	일동제약(주) 대표이사
	최관	위촉직	성균관대 교수

□ 각 위원회 예산배정 및 집행 현황('12.6월말 기준)

위원회명	예산현황	집행현황(천원)
감리위원회	금융위 운영비에서 지급: 안전검토비 (10만원) 및 참석수당(10만원) * 외부 위촉직에 한정하여 수당 지급 ** 회의수당 외 위원회 별도 예산 편성 없음	08년:3,740, 09년:7,990 10년:8,160, 11년:9,400 12년:6,500
자본시장조사 심의위원회		08년:5,910, 09년:4,930 10년:6,120, 11년:7,350 12년:4,500
회계제도 심의위원회		08년:3,400, 09년:3,400 10년:3,910, 11년:3,400 12년:1,100
공인회계사자격 제도심의위원회		10년:300 12년:400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		11년:500 12년:500

국제협력팀

☐ 위원회 명칭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 설치이유

- 금융중심지의 조성·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관계 행정기관 등의 의견조정, 법령·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함

□ 법적근거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6조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

제6조(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2.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의 수립
3.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의견 조정
4.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련된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5.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고 받은 경영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의 처리현황과 실적의 점검 및 법령·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6. 그 밖에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금융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금융 유관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제3항 각 호의 위원은 각각 10인 이내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성원 인적사항

구 분	성 명	현 직 위
민간위원 (10인)	황성호	우리투자증권 대표이사
	최석윤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 공동대표
	정상기	미래에셋자산운용 부회장
	Patrick Mange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부사장
	이장호	BS금융지주 회장
	Michael Hellbeck	한국SC금융지주 부사장
	모종린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태혁	부산대 경영학부 교수
	김유니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연희	보스턴컨설팅그룹 시니어 파트너
정부위원 (5인)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
	윤상직	지식경제부 차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유관기관 위원 (6인)	박병원	은행연합회장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
	김규복	생명보험협회장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최종석	한국투자공사장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실적 및 참석자 현황

회차	안건	참석률
1차 (대면) (‘08. 6. 30)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 -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안) -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안)	21/28
2차 (서면) (‘08. 7. 30)	-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안 -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안	서면
3차 (서면) (‘08.12. 3)	- 금융중심지 지정 평가단 구성·운영(안)	서면
4차 (대면) (‘09. 1.20)	- 금융중심지 지정(안)	28/24
5차 (서면) (‘09. 5.14)	- 금융중심지조성분과위원회 구성(안) - 금융전문인력분과위원회 구성운영(안) - 실무금융전문인력 연수원 지정 및 예산배정(안)	서면
6차 (대면) (‘09.12.21)	-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서울 여의도, 부산 문현) 확정 -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 평가계획 -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추진실적(보고)	17/28
7차 (서면) (‘10. 1.15)	- 녹색금융 특화MBA 선정·지원 기본계획(안)	서면
8차 (서면) (‘10. 2. 2)	- 녹색금융 특화MBA 심사·선정 계획(안) -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	서면
9차 (서면) (‘10. 3.11)	- 녹색금융 특화MBA 심사단 확정(안)	서면
10차 (대면) (‘10. 3.22)	- 녹색금융 특화MBA 심사결과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안) -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 ‘10년 교육계획	19/28
11차 (대면) (‘10. 9.10)	- 금융중심지정책 경과 및 평가 - 서울 여의도 금융중심지 조성 현황 및 발전계획 - 부산 문현 금융중심지 조성현황 및 발전계획 -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업무 지원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18/21
12차 (서면) (‘11. 3.18)	- 녹색금융 MBA 지원사업 ‘10년 결과 및 ‘11년 추진계획 - 2010년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 평가 결과 보고	서면
13차 (대면) (‘11. 6. 8)	-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자본시장 제도 개선 방안 - 서울 여의도 금융중심지 조성 현황 및 향후 계획 - 부산 문현 금융중심지 조성 현황 및 향후계획 -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업무 지원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17/20
14차 (대면) (‘11. 8.25)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 (2011~2013)	16/20
15차 (서면) (‘12. 3.28)	-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금 교부안 - 녹색금융특화MBA사업 2011년 실적 및 2012년 추진계획 보고	서면
16차 (서면) (‘12. 7.9)	-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안 -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운영규정 제정안	서면

□ 위원회 수당 예산배정 및 사용 내역

(단위 : 천원)

연도	예산배정	집행
2009	34,650	1,700
2010	25,200	10,800
2011	11,250	4,500

※ 2012년 예산배정 : 3,750천원

공적자금관리위원회사무국

□ 위원회 현황

명칭	법적근거	주요활동사항	인적구성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공적자금관리특별법(§3)	공적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당연직 2인 위촉직 6인
공적자금상환기금운용심의회	공적자금상환기금법(§10)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당연직 6인 위촉직 2인

□ 구성원 인적사항

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회	성명	구분	소속
공적자금 관리위원회	김석동	당연직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	당연직	기획재정부차관
	남상구	위촉직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
	오규택	위촉직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이재술	위촉직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대표
	박영석	위촉직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이기화	위촉직	다산회계법인 대표
	민병훈	위촉직	공감 법률사무소 대표

② 공적자금상환기금 운용심의회

위원회	성명	구분	소속
공적자금상환 기금운용심의회	추경호	당연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성대규	당연직	공적자금관리위원회사무국장
	노형욱	당연직	기획재정부 행정예산심의관
	강태수	당연직	한국은행 부총재보
	조현철	당연직	예금보험공사 이사
	강명석	당연직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사
	여은정	위촉직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홍명종	위촉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회의개최 실적

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연도	회의개최 회수	회의방식		안전수
		참석	서면	
2009	8	8	-	44
2010	22	22	-	83
2011	17	17	-	68
2012.7	13	12	1	46

② 공적자금상환기금 운용심의회

연도	회의개최 회수	회의방식		안전수
		참석	서면	
2009	3		3	3
2010	3		3	4
2011	3		3	4
2012.7	2		2	3

□ 회의록

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별도제출

- *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사록과 안건은 금융회사나 기업의 정보 보호와 금융시장의 혼란 방지 등을 위해 원칙적으로 의결 1년 후에(매각이 진행중인 안건은 매각이 종료된 후) 공개(인터넷 홈페이지 게재)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공적자금상환기금 운용심의회: 서면회의로 운영하여 별도의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지 않음

□ 예산배정 및 사용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항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2010	공자위사무국인건비 (총액인건비대상)	625	534	85.4
	공자위사무국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89	72	80.9
	공자위사무국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미대상)	370	315	85.1
	일반회계에서 공적자금 상환기금으로의 전출	3,000,000	3,000,000	100.0
2011	공자위사무국인건비 (총액인건비대상)	645	576	89.3
	공자위사무국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87	86	98.9
	공자위사무국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미대상)	402	318	79.1
	일반회계에서 공적자금 상환기금으로의 전출	1,449,353	1,449,353	100.0
2012.8	공자위사무국인건비 (총액인건비대상)	640	407	63.6
	공자위사무국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93	55	59.1
	공자위사무국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미대상)	379	212	55.9
	일반회계에서 공적자금 상환기금으로의 전출	338,537	338,537	100.0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

6. 각 기관별 과징금, 과태료 부과현황

연도	부과건수	부과총액	체납건수	체납총액	체납주요사유
'08	207	12,280	416	16,352	재력부족
'09	823	13,932	444	22,188	"
'10	1,127	14,701	417	25,883	"
'11	508	16,419	368	27,229	"
'12.7 월	741	13,741	438	29,878	"

※ 부과건수는 당해연도 기준

※ 체납건수 및 총액은 누적 체납건수 및 총액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

6-1. 세부현황

☐ 별도제출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

7. 금융위, 금감원 수발신 목록

☐ 별도제출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

8. 금융중심지 육성계획 추진계획 및 추진현황

- 기본 추진 계획 사본(추진 당시 계획서)
- 추진 계획 중 변경된 사항
- 금융중심지 추진 각 목표별 추진결과(성과, 실현여부, 미비 등 구체적으로)

☐ 별첨 참조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2011 ~ 2013)**

2011.9

금융위원회

I. 금융중심지 정책의 경과 및 평가

- 1. 금융중심지 정책의 경과**
- 2. 제1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II. 우리나라 금융산업 현황과 성장동력화

- 1. 우리나라 금융산업 현황**
- 2. 금융산업의 성장동력화**

III. 제2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추진방향

- 1.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 2. 추진과제의 주요내용**

IV. 제2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추진과제

- 1. 자본시장의 고도화**
- 2.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 3. 금융인프라 선진화**
- 4. 금융중심지 조성 가속화**

1. 금융중심지 정책의 경과

◇ 그동안 우리 정부는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동북아 금융허브 달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금융중심지의 기본 인프라를 구축

- '03.12월 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을 수립하고 로드맵 1단계 전략('04~'07년)에 따라 금융허브 기반 구축을 추진
 - 한국투자공사 출범('05.7), 금융전문대학원 (KAIST) 설립('06.3), 자본시장통합법 제정('07.8) 등 추진
- '07.12월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금융중심지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
- '08.8월 제1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08~'10)을 수립하고 '09.1월 서울·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등 금융중심지 구축작업 진행
 - ※ '10.1월 서울·부산 개발계획을 확정·고시
 -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따라 4대 영역별*로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 * 금융산업 선진화, 금융인프라 선진화, 자산운용시장 육성, 금융회사 집적여건 조성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구성('08.4)하여 주요 정책을 심의(총 13회 개최)
 - * 위원장(금융위원장) 및 정부위원 5인, 유관기관위원 6인, 민간위원 9인(총 20명)
 -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구축('08.9)하여 금융중심지 조성 및 금융회사 유치를 위한 포괄적 서비스 제공

2. 제1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가. 추진 실적

금융산업 선진화

- (금융산업 제도개선)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 한도를 상향 조정 (4%→9%)하고, 비(非)은행지주회사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의 제도개선 실시

*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를 허용하고, 해외진출시 지주회사 소속 자회사 등 사이의 공동출자·손자회사의 해외 증손회사 지배를 허용 ('09.12.)

- (수요자 중심의 금융 규제개혁) 금융규제 전수조사 및 민간 전문가 위주의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를 통해 과감한 규제완화

- (금융회사 자본확충 추진) 글로벌 금융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은행(총 31.0조원*), 보험권(총 4.2조원**)의 자본확충 진행

* '08.10-'10.12월 중 실적

** '08.10-'11.7월중 실적

-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인수·정리 추진) 구조조정기금 등을 통해 금융기관 부실자산을 신속하게 인수·정리하여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제고와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

* 기금설치('09.5) 이후 '11.6월까지 금융회사 구조조정 지원에 5.5조원, 기업 구조조정 지원에 0.4조원 등 총 6조원을 지원

- (금융감독의 전문성 제고) 외부 금융전문가의 적극적인 영업 등을 통해 금융감독조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연수제도 강화

- (보험회사 상품개발 자율성제고) 보험상품 심사제도를 소비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규제 보다 사후심사 위주로 운영

- (한국투자공사 투자 활성화) 전술적 자산배분, 외부자산운용사 활용, 투자인력 확충 등을 통하여 운용수익률 개선하고 투자대상 자산을 PEF, 부동산, 원자재 등으로 확대

금융인프라 선진화

- ☐ (상장·퇴출제도의 국제정합성 제고) 기업 및 산업별 맞춤형 상장요건을 도입('08.10 시행)하고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의 경우 이를 심사하여 상장폐지 결정
- ☐ (신용정보·평가제도 개선) 공공정보 확충의 일환으로 신용정보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고 신용정보 관련 규제를 개선
- ☐ (회계·공시제도 개선) 국제회계기준(IFRS) 및 연결중심 공시 제도가 원활히 정착되도록 외감법 개정 등 관계법령 정비
- ☐ (외환거래 자유화) 외환거래 사후 보고제를 도입('08.5)하고 기업 해외자금통합관리 한도를 확대(1천만달러 → 3천만달러)
- ☐ (우리스주제도 활성화) 우리스주 매수선택권 부여한도를 폐지하고 장기보유 세제감면 및 배당소득 비과세대상 상향 조정
- ☐ (원화 국제화의 단계적 추진) 외국인투자자의 원화수요확대를 점진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ICSD* 국제투자 통합계좌 개설 등 추진
 - * 국제에탁결제기구(International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 ☐ (퇴직연금의 활성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퇴직계좌(IRA**)에 대해 퇴직연금 예금보호를 5천만원 한도로 적용·시행
 - * Defined Contribution
 - **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 ☐ (금융전문인력 양성) 금융MBA 설립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있는 금융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

정부 지원에 따른 금융전문인력 양성 현황(명)

	'08년	'09년	'10년
금융MBA(KAIST) 졸업자 수	79	89	102

자산운용산업 육성

- (자본시장 국제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는 외국법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거래소와의 연계**를 통해 해외투자자의 시장참여를 활성화

* 상장 외국법인 수 : ('07말) 2社 → ('08말) 4社 → ('09말) 10社 → ('11.6) 19社

** 시카고상업거래소(CME)연계 코스피200 선물시장 개설('09.11) 및 Eurex 연계 코스피200 옵션시장 개설('10.8)

- (채권시장 국제화) 아시아 역내 채권시장의 예탁결제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QFI*(적격 외국금융기관)제도를 신설하여 외국인의 채권거래 활성화 기반 마련

* 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

- (전문자산운용회사 활성화) 증권펀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등 특화·전문화된 회사의 자산운용시장 우선진입 허용

- (펀드판매 채널의 확대) 펀드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펀드 시장 다변화를 위해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 새마을 금고, 우체국 등을 통한 펀드판매를 허용

- (헤지펀드 도입) 헤지펀드의 단계적 도입을 위해 「적격투자자 사모펀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구조조정 시장 활성화)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이 구조조정 시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 규제완화

- (동북아 개발 금융 참여 강화)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수출금융, EDCF·남북협력기금 지원, ADB 등과의 협조융자 등 추진

- (선박금융 지원 확대)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직접대출과 대외 채무보증의 혼합지원, 외항선박 구매자금 지원 등 지속 추진

금융중심지 집적여건 조성

-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확정) '09.1월 서울 여의도 지구·부산 문현 지구를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고 '10.1월 개발계획*을 확정

* 금융중심지 내 주요 기반시설 건설 계획 및 경영환경 조성 계획을 포함

- (국제금융업무센터 건설) 서울국제금융센터(SIFC)가 건설중이며,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도 착공('10.5)

국제금융센터 건설 현황

	서울국제금융센터 (Seoul International Finance Center)	부산국제금융센터 (Busan International Finance Center)
완공예정일	2012년 12월	2013년 6월
공정률('11.7월 기준)	70%	'10.5월 착공
주요 입주 사항	오피스, 호텔, 리테일몰	오피스, 호텔, 상업시설

- 서울 및 부산국제금융센터로 외국계 금융회사 및 주요 금융기관*들의 이전 및 입주를 추진 중

* (SIFC) 딜로이트, ING 자산운용 및 ING real estate 등이 입주 계약 체결
(BIFC) 한국거래소, 자산관리공사 등 9개 금융기관 입주 예정

- (금융중심지 홍보 및 금융회사 유치)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외 IR* 및 금융중심지 유치 설명회 등을 개최

* '09.11월 IR (서울시-맥쿼리그룹 간 지역본부 유치 MOU, 부산시-칼리온은행 간 선박금융 MOU), '10.11월 IR(서울시-NY은행·CLSA 간 SIFC 입주 MOU)

- (금융법령의 영문화) 외국 금융회사가 국내 금융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문화 작업* 추진

* '10년말 기준 금융관련 법률 39개, 시행령 39개, 시행규칙 16개, 감독규정 36개에 대한 영문화 작업 완료

- (출입국 편의 제공) 금융인력의 사증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국카드 발급

나. 평가

□ 금융산업의 체질 개선 및 성장 인프라 제고를 통한 전반적인 금융경쟁력 상승은 어느 정도 달성

- 은행·보험 분야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자본확충 등 글로벌 스탠다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다양한 금융상품의 출현과 직접금융의 활성화 등 자본시장 도약의 발판을 마련
- IMD 금융부문 경쟁력 순위* 및 금융자산 축적도를 나타내는 금융연관비율**(금융자산잔액/명목 GNI)이 전반적으로 상승

* 08년 : 40위 → 09년 : 33위 → 10년 : 30위 → 11년 : 28위 (홍콩 1위, 싱가포르 4위, 미국 20위)

** 07년 : 8.3 % → 08년 : 8.4 % → 09년 : 8.9 % → 10년 : 8.8 %

- 서울의 GFCI순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국내 금융중심지의 국제 경쟁력 및 인지도에 대한 해외의 평가 개선

* '09.9월 35위 → '10.3월 28위 → '10.9월 24위 → '11.3월 16위를 차지하였으며, '11.3월 평가에서는 '차기 유력금융허브 Top 3' 선정

□ 그러나 금융기관의 국제경쟁력과 글로벌화는 아직 미흡한 수준

- 국내 금융회사들은 국내시장에 집중하고 있으며 글로벌 네트워크 및 인력, 국제적인 사업수행능력 미비로 해외에서의 수익창출능력은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

□ 또한, 국내 대형투자은행의 부재, 헤지펀드 설립근거 미비 등 자본시장의 고도화 여건은 아직 마련되지 못함

〈참고〉 우리나라의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

- 실물경제 기반 대비 금융자산 창출 수준을 나타내는 금융연관비율* 및 대외 자본거래 규모를 나타내는 금융개방도**는 주요 경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

* 금융자산잔액/명목GNI('09년) : (한국) 8.87배 (미국) 10.17배 (일본) 12.9배

** 자본유출입 합계/명목GDP('09년) : (한국)162.1%, (대만)263%, (홍콩)2,071%

- 금융시장 규모도 아직 주요 금융중심지들에 비해 협소

주요국 금융시장 지표 비교 (2010년)

	한국	홍콩	싱가포르	일본	영국	미국	대만
주식시가총액 ¹⁾ (억불)	10,919*	27,113	6,472	40,996	36,131	172,835	8,185
자산운용수탁고 ²⁾ (억불)	2,665	8,184(07)	5,810(07)	7,855	8,544	118,207	590
채권발행잔액 ³⁾ (억불)	8,711	505	4,152	126,839	48,415	309,131	1,245

1) 세계거래소연맹(WFE)

2) 미국 투자회사협회(ICI)

3) 국제결제은행(BIS)

* 한국의 경우 '11.5월 기준으로 1.2조 달러

- (금융산업 경쟁력 평가) '11년 IMD 금융부문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28위를 기록하였으며('10년 30위), '10년 WEF 국가별 금융발달지수에서는 24위('09년 23위)를 기록

- 향후 경제규모(GDP 14위)에 걸맞는 수준으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우리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

-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11.3월 영국 「City of London」 이 발표한 Global Financial Centers Index*에서 서울은 조사대상 75개 도시 중 16위를 기록

* 전세계 금융기관 경영자 대상 설문조사와 다른 기관이 발표한 지수(노동생산성, MBA 랭킹, 삶의 질, 규제, 세율, 임대료 등)를 통해 산출

- '11.7월 발표된 신화-다우존스 국제금융중심 개발지수*(IFCD INDEX)에서는 전세계 45개 국제금융도시 중 서울이 24위를 차지

* 전세계 금융 및 공공부문 종사자에 대한 5개 부문(금융시장, 성장발전성, 산업기반, 서비스수준, 종합환경)의 설문조사를 통해 각 도시의 금융경쟁력을 평가

II

우리나라 금융산업 현황과 성장동력화

1. 우리나라 금융산업 현황

금융시장 일반

□ 우리 금융시장은 글로벌 위기 이후 빠른 속도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으며, 선진국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침체한 가운데 국제 자본흐름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할 기회

○ 주식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성장하고 있으나 증시 안정성은 선진국시장 수준에 못 미침

국내 주식시장(KRX)의 국제적 위상('11.5)

	시가총액	거래대금	상장기업수	조달금액
규모	1.2조달러	0.9조달러*	1,793사	14억달러
(세계 거래소순위)	(16)	(7)	(9)	(21)

* '11.1~5월 중

자료 : 세계거래소연맹(WFE)

** 주요국 주식시장 변동성(수익률 표준편차, 09년, %) :

(미국) 2.62, (호주) 2.64, (홍콩) 3.00, (영국) 3.07, (한국) 3.43

○ 채권시장의 경우 발행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에 의한 발행구조 고도화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

* 채권시장 금융채비중('10년, %) : (미국)44.6, (영국)18.3, (호주)63.2, (한국)23.0

연간 채권발행규모 추이

(단위 : 조원)

	'02말	'04말	'06말	'08말	'10말
전체채권	258	366	381	406	574

○ 외환시장은 금융위기 이후 안정성을 찾아가고 있으나, 원화의 낮은 위상 등으로 전반적인 시장규모는 미흡한 수준

* 외환시장 일일거래량('10년, 억불) : (영국)18,536 (일본)3,123 (홍콩)2,376, (한국)438

○ 파생상품시장은 양적 측면*에서 세계적인 시장으로 성장하였으며, 질적으로도 개인 비중이 감소하는 등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 파생상품시장 거래량 세계 1위('10), 코스피200 및 美달러 선물 거래량 세계6위

은행산업

- 은행산업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양적인 성장 ('99말 대비 총자산 222%증가)과 질적인 개선이 진행

* 은행 ROA(%) : ('00) Δ 0.59 \rightarrow ('10) 0.54

** 은행 BIS비율(%) : ('00) 10.58% \rightarrow ('10) 14.60%

- 그동안, 지주회사체제 개편, M&A를 통한 대형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美·英 등 선진국에 비하면 미흡

<주요국 10대 은행 현황>

(단위 : 억달러, %)

구분	미국	영국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폴	한국
총자산	100,926.9	100,988.0	71,315.8	68,326.5	10,660.2	5,084.2	13,143.7
BIS자기자본비율	14.91	18.52	10.91	13.78	12.55	17.37	14.20
ROA	-0.19	0.60	1.17	-0.38	0.87	1.26	0.56
NPL	6.88	4.56	1.42	2.18	0.81	2.30	1.21

* 각국의 2009 회계연도 기준(2010. 7 뱅커지)

- 또한, 우리나라 은행의 다양한 수익원 발굴능력은 부족하며, 적극적인 해외진출 보다는 국내 시장에 집중하는 경향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주요국 은행의 해외진출 전략 및 사례>

국가	해외진출 전략 및 사례
中國	- 공상은행 (ICBC) : 남아공 최대 Standard Bank 지분 20% 인수(56억불, 07.10), - 투자청(CIC) : 美國 Morgan Stanley 지분 9.86% 인수 (총 68억불, 09.6)
日本	- 미쓰비시 UFJ 그룹 : 美國 Morgan Stanley 지분 21% 인수(96억불, 08.10) - 노무라 홀딩스 : Lehman Brothers 아시아, 중동법인 인수 (4.25억불, 08.9)
스페인	- 싼탄테르 은행 : 英國 Alliance & Leicester 은행 인수(26억불, 08.7)
호주	- ANZ : 英國 로얄스코틀랜드 은행(RBS) 아시아네트워크 인수 (5.5억불, 09.5)

금융투자 및 자산운용산업

- 금융투자 및 자산운용업은 주식시장의 호황 및 투자저변 확대 등에 힘입어 제반 재무 지표가 개선

* 국내 증권사 ROE(%): ('01.3) Δ 3.32 \rightarrow ('05.3) 0.26 \rightarrow ('10.3) 8.43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 ('01.3) 378.0 \rightarrow ('05.3) 548.0 \rightarrow ('10) 511.9
 ** 자산운용사 ROA(%): ('04) 5.80 \rightarrow ('10.3) 15.40

- 그러나, 자본력 부족 등으로 IB업무 비중은 저조한 가운데 위탁매매업무 중심의 사업구조가 지속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별 수익 구조>

(단위: 억원, 2008년 기준)

구 분	IB	위탁매매	펀드판매	자산관리	정외파생상품	기타	전체
대형사	1,458	16,092	1,392	259	694	7,267	27,162
중형사	1,474	15,475	3,871	222	896	2,499	24,436
소형사	2,070	10,724	1,665	39	8	6,720	21,225
전 체	5,002	42,291	6,928	520	1,598	16,486	72,823

- 국내 자산운용시장 순자산가치 총액은 2,646억 달러수준이나,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산운용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

* 한국 비중 : 8.6%('00년) \rightarrow 7.4%('09년), 싱가포르 비중 : 12.32%('00년) \rightarrow 24.1%('09년)

- 국내 자산운용회사 운용규모도 글로벌 플레이어와 비교시 열세

<주요국 상위 5개 자산운용사별 순자산>

(단위 : 10억\$, '10.6월말 기준)

한국			미국	
1	미래에셋자산운용	36.7	벵가드 그룹	1,250.9
2	삼성자산운용	25.9	피델리티	1,194.9
3	신한 BNP Paribas 자산운용	18.6	캐피털 R&M	963.4
4	한국투신운용	16.0	핍코 펀드	393.8
5	KB 자산운용	15.9	JP모건 채이스	365.8
영국			일본	
1	인베스트 퍼페추얼	53.0	노무라	146.9
2	FIL	41.1	다이와	103.9
3	리절 앤 제너럴 매니저	38.7	닛코	66.9
4	M & G Securities	38.1	고쿠사이	58.5
5	SLTM	34.9	미쯔비시 UFJ	52.5

* 출처 : 미국투자회사협회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보험산업

□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실적 및 건전성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 생보사 ROA(%): ('01) Δ 0.53 \rightarrow ('10.3) 0.70

* 손보사 ROA(%): ('01) Δ 2.99 \rightarrow ('10.3) 1.92

□ 그러나, 가구당 보험가입률이 96%에 이르는 등 최근 국내 보험 시장은 포화상태에 이르러 지속적인 성장에 한계

○ 자본이 풍부한 대형사들을 중심으로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모색 중

* 가구당 보험가입률(%) : (03)93.4 (05)94.4 (07)95.6 (09)97.4 (10)96.4

※ 국내 보험회사는 26개의 해외 법인(19개) 및 지점(7개)을 기반으로 해외영업 중이나 해외부분이 보험회사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를 하회하는 등 국내영업에 치중

<세계보험시장 국가별·회사별 순위>

(단위 : 억달러, %)

순위 (전년)	국 가	'09년 수입보험료		순위	회사명	수입보험료	국가
			점 유 율				
1(1)	미국	11,397	28.0	1	Japan Post Holdings	2,022	일본
2(2)	일본	5,060	12.4	2	AXA	1,753	프랑스
3(3)	영국	3,092	7.6	3	Assicurazioni Generali	126,0	이탈리아
4(4)	프랑스	2,831	7.0	4	Allianz	1,260	독일
5(5)	독일	2,384	5.7	5	Berkshire Hathaway	112,5	미국
6(7)	이탈리아	1,694	4.2	6	AIG	103,2	미국
7(6)	중국	1,630	4.0			
8(8)	네덜란드	1,081	2.7	31	Samsung	258	한국
9(9)	캐나다	988	2.4			
10(10)	한국	920	2.3	39	Hanwha	235	한국
....						
세계 전체		40,661	100.0				

* 전세계 보험시장은 4조 달러 규모로 미국, 일본, 영국이 선두권이며, 우리의 보험산업은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10위(2009년 기준) 수준

금융산업 해외진출

- 국내 금융시장이 성숙단계로 진입하여 저성장 기조가 유지되고
진입규제완화 등으로 인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이 필요

* 외국계 금융기관 현황 : '07년말 137개 → '08년말 146개 → '09년말 150개 → '10년말 146개

<국내 금융기관 수익률 및 외국사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

구분		'04	'05	'06	'07	'08	'09	'10.9
수익률 ¹⁾	은행	0.9	1.3	1.1	1.1	0.5	0.4	-
	증권사	9.0	2.0	21.3	13.0	17.0	8.8	3.4
	생보사	6.9	7.1	6.1	5.9	6.0	5.5	5.4
외국계 점유율 ²⁾	은행	8.7	6.7	7.9	9.5	15.1	15.4	14.3
	증권사	8.0	9.1	10.8	13.8	12.7	13.0	21.4
	생보사	13.1	15.6	17.3	19.1	21.4	21.7	19.1

1) 은행(ROA) · 보험(운용자산이익률), 증권사(ROE),

2) 은행(총자산), 증권(주식위탁매매) 보험(수입보험료 기준)

-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해외진출을 꾸준히 추진해왔으나
실질적인 글로벌화 수준은 미흡

* 국내금융기관 해외 점포수(개) : ('00) 209 → ('06) 221 → ('10.12) 329
해외점포자산비중 : 국내은행 3.4%('08), HSBC 68.4%, Citigroup 44.5%, UBS 65.4%('06)

- 해외진출을 통해 해외시장을 활용한 수익다변화와 위험분산을
도모하여 금융기관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필요

- (점포 수 및 권역별 진출형태) '97년대 외환위기 이후 감소하였던
해외점포는 '06년 이후 금융투자업을 중심으로 다시 증가

* 해외 점포수 : ('97) 471개 → ('00) 209개 → ('06) 221개 → ('10.12) 329개

- (영업 현황) 현재 국내은행, 증권, 보험사 해외점포(사무소 제외)의
총자산은 586.6억 달러, 당기 순이익은 3.1억 달러

* 총자산(억달러) : 은행('10.12) 564.0, 증권('10.9) 12.5, 보험('10.9) 10.1

당기 순이익(억달러) : 은행('10년) +3.7, 증권(FY10) △0.6, 보험(FY10) +0.04

- (진출 지역) 국가별로는 중국 58개(18.3%), 미국 49개(15.3%), 베트남
38개(11.8%), 홍콩 37개(11.6%), 일본 25개(7.8%), 영국 22개(6.8%) 順

2. 금융산업의 성장동력화

□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성장동력

- 금융은 실물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뿐만 아니라 금융 자체의 부가가치율(부가가치액/총투입액)도 다른 산업보다 높은 수준
- 우리나라 금융업 부가가치/GDP비중* ('10년, 6.2%) 지속적으로 상승중이나, 美·英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아 앞으로 금융산업의 성장기여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

* 영국 (GDP비중 7.6%), 미국(GDP비중 7.9%), 호주(GDP 비중 7.9%), 스위스(GDP 비중 13.7%)

□ 실물경제와의 동반성장을 견인

-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성이 있는 사업부문에 금융이 원활히 자본을 조달해 주는 것이 필요
- 그동안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중 하나는 정책금융과 민간금융부문에서 실물경제에 대한 효과적인 자금 지원이 있었기 때문

□ 고용창출에 기여

- 금융산업의 취업자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등으로 하락하였다가 '06년 이후 다시 상승하는 추세

* 총취업자중 금융업 비중: '97년 3.7%→'05년 3.26%→ '06년 3.40%→ '10년 3.5%
미국 4.3%, 영국 3.6%, 일본 2.43%('10년)

- 금융과 실물부문의 견고한 성장과 함께 활발한 고용창출 가능

☞ 금융중심지는 경쟁의 증대, 비용의 감소 및 신뢰의 공유를 통해 금융산업 발전을 촉진하므로 금융중심지 추진은 금융산업의 성장동력화를 위한 유효한 정책

Ⅲ

제2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추진방향

1.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비 전

글로벌 금융시장을 리드하는 금융강국 건설

목 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금융중심지 기반 확립

추진과제

1

자본시장
고도화

2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3

금융
인프라
선진화

4

금융
중심지
조성
가속화

건실한
실물경제

혁신과 도전의식 있는
인재

2. 추진과제의 주요내용

(1) 자본시장의 고도화

- ◇ 대형 투자은행 (Investment Bank), 헤지펀드 (Hedge Fund) 도입 등을 통해 자본시장 시스템을 전면 개편
- ◇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및 금융상품의 혁신을 촉진하고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 (투자은행 활성화) 대형 투자은행 출범을 지원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통한 투·융자, IPO·M&A 주선 등 종합적인 Corporate Financing 역량의 강화를 추진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준을 설정하고 기업에 대한 포괄적 신용공여, 비상장주식 내부주문집행, 프라임브로커 등을 허용
- (헤지펀드 도입)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키고 금융산업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헤지펀드를 도입
 - 기존 적격투자자 사모펀드의 운용대상 제한, 금전차입·포지션 한도 등을 완화하고 헤지펀드 가입 기준 등 설정
- (자본시장의 신뢰성 제고)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각종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인수·공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자본시장 투명성·안정성을 강화
- (자산운용시장의 외연 확대) 국부펀드, 공적연기금, 퇴직연금 등의 규모 확대 및 운용방식 다양화를 통해 자산운용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
- (금융상품 고도화) 장기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확대 등을 통해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

[2]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 은행-금융투자-보험 등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고, 실물부문과의 광범위한 연계를 통하여 금융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

□ (업권별 경쟁력 강화) 대내외 환경변화를 주시하여 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업권별 상황에 맞는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

은행	글로벌 금융시장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 및 PB·퇴직연금 등 신사업 역량 강화
금융투자	투자은행·헤지펀드 도입을 비롯하여 발행가능 증권유형을 다양화하고 주주배정·IPO 제도를 보완하는 등 금융투자산업 여건을 혁신
보험	보험상품 및 판매채널을 다양화하는 한편, 설명·공시의무 등 강화
저축은행	신용평가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서민금융 중개기능을 강화

□ (신성장산업과 연계한 금융공급)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신성장산업에 대한 금융공급을 확대하고 투자회수장치도 강화하여 신생기업 지원 확대 및 고수익 투자상품 창출 효과를 달성

-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신성장동력산업 펀드 결성·출자 및 Primary-CBO 발행을 확대하고 민간 벤처투자를 활성화
- 거래소의 신성장기업에 대한 상장특례 도입을 계기로 우량중소기업 상장을 촉진하고, 지정자문사*를 통한 프리보드 시장 자금조달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

* 투자자의 프리보드 기업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프리보드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및 회계자료 등을 분석해 제반 정보를 제공

□ (금융산업의 글로벌화) 동북아 개발금융 확대 등 시장 상황 및 경쟁여건을 감안한 전략적 해외진출을 통해 금융회사의 신규 수입원 창출 및 해외네트워크 강화를 유도

(3) 금융인프라 선진화

◇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금융감독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 있는 금융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 확립

□ FSB 등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에 맞추어 금융감독제도를 정비

은행	Basel III 이행을 위해 은행 자본·유동성의 양과 질을 제고하도록 법령 정비
보험	위험기준지급여력제도(RBC)를 운영하여 리스크 관리 체계를 혁신
장외파생상품	장외거래 투명성제고를 위해 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도입
회계제도	국제회계기준(IFRS)의 성공적 정착 및 적용 확대를 추진
신용평가	외부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의존도 축소 위해 자체 신용평가 개발
대형금융회사(SIFI)	SIFI의 손실흡수능력 제고 및 강화된 감독 시행을 위한 제도정비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금융회사 경영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통해 사외이사·감사위원회의 감시기능 및 독립성을 제고하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기능을 강화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예금보험운영 효율화를 위한 차등보험료율제 도입을 준비

* (주요 내용) 유사 종류의 금융상품에 대해서 공통 판매행위 규제 적용, 불완전 판매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도높게 제재

□ (신용평가제도 개선) 소액·단기연체 등 부정적 신용정보의 활용기간을 단축하고 신용회복 성실이행 등 긍정적 요인의 반영비중을 강화

□ (금융인력 양성) 금융 MBA의 교육 품질 제고, 금융기관 종사자의 금융 전문성 강화, 금융 관련 지식·자료의 유기적 연계 등을 지원

[4] 금융중심지 조성 가속화

- ◇ 서울, 부산 금융중심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경영 및 생활 환경 개선을 가속화
- ◇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및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금융중심지 입지를 강화

- (조성 방향) 서울 (여의도)은 높은 금융회사 집적도, 경영인프라 수준 등을 고려하여 종합 금융중심지로 육성
 - 부산 (문현)은 해운 물류허브 기능과 한국거래소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양·파생금융에 특화된 금융중심지로 개발
- (금융회사 해외진출) 해외진출 금융회사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진출대상국 금융당국과 협력 강화
 - 중국·인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동구권 등 주요 진출대상국 금융제도 DB 구축, 지역별 전문가 pool 구성 및 금융회사 수요에 맞춘 자문 지원
- (외국금융회사 및 금융인력 유치) 해외 IR 및 유치설명회를 통해 금융중심지 정책과 조성 현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해외 금융인력 유치를 위한 금융회사 공동 Job Fair 등을 개최
 - 국내 진입을 희망하는 외국 금융회사에 대한 전담 도우미 운영 등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강화
- (외국회사 경영 및 생활환경 개선) 조세·법률 서비스 개선과 교육, 의료, 주거, 문화를 아우르는 전반적인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외국금융회사의 입주를 촉진

1. 자본시장의 고도화

가. 투자은행 활성화

□ 글로벌 경쟁력 있는 대형 투자은행 출범 유도를 위해 대형 투자은행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기준 및 업무범위 설정 (2012년)

- 투자은행으로서 신생기업을 위한 투·융자, M&A 등 종합적인 Corporate Financing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비상장 주식 등 내부주문집행, 프라임브로커 업무 관련 제도를 정비
 -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M&A 자문, 인수 (Underwriting), 신생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risk capital) 공급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비상장 주식 내부주문집행)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다수 고객의 주문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
 - (프라임브로커* 업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프라임브로커 업무 수행시 헤지펀드에 대한 신용공여 가능 범위를 확대 (현행은 '증권관련' 신용공여만 가능)

* 헤지펀드 등을 대상으로 증권대여, 자금지원 (Financing), 헤지펀드 재산의 보관·관리 (Custody), 매매체결·청산·결제 (Clearing), 펀드투자자에 대한 보고 (Reporting) 등 종합금융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업무

나. 헤지펀드 도입

□ 우리 금융시스템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하여 최고수준의 금융전문가와 혁신적 금융시스템의 결합체인 헤지펀드 (Hedge Fund) 도입 추진 (2011년)

- 주식·채권·파생상품 및 실물자산 등 다양한 금융관련 상품에 대하여 레버리지 거래, 차익 거래, 공매도 등을 통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헤지펀드 운용규제를 완화

* 例示 : 적격투자자 사모펀드의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의무투자 비율(펀드 재산의 50% 이상) 폐지

□ 헤지펀드 가입범위 확대 (2011년)

- 금융회사·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일정규모(5억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하는 개인 등 위험감수능력을 갖춘 전문적인 투자자의 헤지펀드 가입을 허용

□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2011년)

-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위해 G20, FSB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규제강화 논의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헤지펀드 도입으로 확대되는 금융시장 변동성을 적극적으로 관리
- 펀드 설립시 사전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자금차입 및 파생상품 거래 현황 등 레버리지 사용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
- 헤지펀드 관련 정보공유 차단 등 이해상충방지체계 강화

다. 자본시장의 신뢰성 제고

-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고빈도매매, 스캘핑 (scalping) 등에 따른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 (2012년)

* ① 시세조종 규제 범위 확대 : 비상장증권 (ELS 등), 장외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시세조종도 상장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제
②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 신설 : 시장의 신뢰, 안정성 등을 저해하는 과도한 호가관여행위(스캘핑), 2차 정보수령자의 정보이용 등도 행정제재의 대상으로 규제

-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하여 시장 건전성 저해 행위, 연계시세 조정 등 금융규제 대상 확장
- 과징금제도를 확대하여 형사처벌 대상행위에 비해 위법성이 낮은 시장질서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제재

□ 인수 및 공시제도의 합리적 개선 (2011년)

- 인수 과정에 증권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수업무 규정 개정
 - 모집주선인에 대해서도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에 대해 인수인과 동일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 다만, 인수 개념을 명확히 하여 증권회사가 증권 취득시 다른 투자자에 대한 분매 (distribution)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인수인으로서 규제된다는 점 등을 규정

라.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

□ 유통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 ATS, 거래소 허가제(2013년)

- 현행 거래소 법정설립주의를 대신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를 도입하여 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

* Alternative Trading System : 전자적 방법으로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여 상장주권 등의 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대리 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

- ATS를 인가가 필요한 금융투자업자의 한 형태로 정의하며, 인가시의 최소자기자본은 시행령으로 정함 (500억원 예상)
- ATS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은 우선은 상장주권으로 하면서,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채권 등으로 대상 확대를 검토

- ATS 제도는 법상 거래소 허가제를 전제로 하므로 거래소 허가제 도입도 검토

□ 장외파생상품 등 장외거래 중앙청산소 (CCP : Central Counterparty) 도입 (2013년)

- 향후 다양한 형태의 청산서비스 (장외파생상품, 증권대차, RP 등)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청산회사에 대한 인가제를 도입

※ 인가단위별 200억원 이상의 최소자기자본 요건 마련

- 청산의무거래 요건 마련

- G-20 합의 결과를 반영하여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해서는 청산회사를 통한 청산을 의무화

※ 자본시장통합법 개정 이후 IRS 등 청산의무거래 대상인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는 한국거래소에 인가할 예정

가.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 제고

□ 자산운용산업의 규제체계 선진화(2012년)

① 자산운용산업간 경계를 명확화

-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등 간접투자방식간 구분을 명확히 하고, 산업의 본질에 적합한 방식으로 정의 조항 정비

* (집합투자)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 → '수익자 수 2인 이상' 으로 개념 변경

** (투자일임) 투자자의 투자목적 등을 반영하여 운용 (맞춤성 요건)할 것을 명시

②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 집합투자업자가 충실의무 (Fiduciary Duty)에 따라 투자자 이익에 부합하게 펀드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유도
- 유사한 소규모 펀드간 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수익자총회 면제 등 절차를 간소화하되, 반대하는 투자자의 매수청구권을 보장
- 투자자문업의 경우에도 불건전영업행위에 선행매매를 추가하는 등 이해상충방지의무를 강화

③ 펀드 운용의 자율성 · 창의성을 제고

- 부동산 (특별자산)펀드는 설립일로부터 6개월내에 부동산 (특별자산)에 50%이상 투자해야 하나, 동 기간을 2년으로 합리화
- PEF의 투자요건인 '경영권 지배 목적'을 구체화하여 주식의 BW · CB 등 메짜닌증권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

④ 신탁업 관련 규제를 전반적으로 정비

- 금융환경 변화, 다양한 자산관리 수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수탁재산을 탄력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위임근거 마련

* 현행 수탁가능 재산은 법상 열거된 7종의 재산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으로 한정

□ 자산운용산업의 전문화 유도 (계속)

- 운용대상 자산별로 인허가 요건을 차등화*하고 특화·전문화된 회사의 인가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 진입 허용

* 혼합자산펀드 외에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금융상품 펀드 허용

□ 자산운용규제 합리화 등을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의 스펙트럼 다양화 (계속)

-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부동산, 실물 등 대체투자, 인덱스 펀드, ETF, ELF, 퇴직연금 등 다양한 맞춤형 투자기회 제공

□ 자산운용상품 판매채널 확대 (계속)

- 자산운용판매사 간 서비스 및 가격인하 경쟁 유도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판매사 진입 허용

다. 한국투자공사를 통한 국부펀드 운용의 선진화

☐ 한국투자공사 (KIC)를 '글로벌 키 플레이어'로 육성 (계속)

- KIC에 대한 자산 추가위탁 및 위탁운용기관 다양화를 통한 운용자산 규모 확대 추진

※ ① '10년말 기준 아랍에미리트 ADIA(6천3백억불), 노르웨이 NBIM(5천6백억불), 중국 CIC(3천3백억불) 등 11개의 국부펀드가 1천억불 이상 운용

② 현재 KIC는 458억\$ 운용 중(투자원금 410억\$, 나머지 48억\$은 투자이익)

- 아울러 리서치 기능 강화, 투자지역 및 대상별 전문화 등을 통해 투자역량을 강화

☐ 전술적 자산배분을 통한 운용수익률 개선 (계속)

- 적극적 투자운용, 위험관리·리서치 역량 강화 등을 토대로 운용수익률을 개선하고 운용자산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

☐ 한국투자공사 (KIC) 투자자산 다양화 (계속)

- 주식, 채권 뿐만 아니라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에 대한 대체투자(Alternative Investment)와 에너지·자원 등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투자자산 다양화

☐ 국내 자산운용업 발전 지원도 병행 (계속)

- 한국투자공사 (KIC)의 글로벌 투자 노하우 공유를 위하여 민간 운용사에 한국투자공사 (KIC) 자산 일부 위탁 등

다. 공적연기금의 투자활성화

① 국민연금

○ 국민연금의 국·내외 투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 (계속)

- 2012년에 국내외 금융시장에 약 30조원을 신규 투자

※ '10년말(잠정) 기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324조원으로 GDP의 27.6%, 국내 금융총자산의 3.2%에 해당

○ 국내시장의 협소성 극복, 기금운용수익률 제고 및 투자위험 분산을 위하여 국민연금 투자를 다변화하고 위험자산 운용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 (계속)

- 중장기적으로 주식 비중을 확대

- 해외 주식·채권의 직접투자 기반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우월한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비중 확대

* 해외투자(주식,채권) 비중 : ('09)8.6% → ('10)10.3% → ('16)20%이상

- 국내·외 대체투자를 확대하고 투자대상을 부동산, 사모펀드, 자원개발 등으로 다양화

* 대체투자 비중 : ('09)4.5% → ('10)5.8% → ('16)10%이상

○ 외부 운용사의 전문성 활용, 수익률 제고와 위험 분산을 위해 전략적으로 위탁운용을 실시하고 위탁 규모 확대 (계속)

* 위탁운용 비중 : ('08) 16.0% → ('09) 19.4% → ('10) 24.3% → ('11) 29.9%

② 사학연금

○ 사학연금의 국·내외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 (계속)

- 앞으로, 국내주식 비중은 27.7% ('10년말 19.0%), 대체투자 비중은 19.9% ('10년말 14.1%)까지 확대하는 등 점진적으로 위험자산 비중을 확대하여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에 노력

※ '10.11월에 수립한 중장기 전략적 자산배분을 토대로 안전자산인 국내채권형 비중은 60.0% (10년)에서 36.1% (15년)로 축소

- 2015년까지 해외주식 비중은 8.4% ('10년말 2.8%), 해외채권비중은 7.8% ('10년말 4.1%)로 확대하는 등 해외자산 투자 비중 확대
- 위험자산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투자지역 및 투자 대상 다변화를 통한 분산투자로 투자 위험 감소와 안정적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 '10년 현재 사학연금의 운용규모는 8.9조원 수준

○ 자산운용의 외부위탁 지속 추진 (계속)

- 공개모집에 의한 일괄 심사방식을 통한 자산운용사 선정

③ 공무원연금

○ 금융시장상황에 적합한 선제적·적극적 자산 배분 (계속)

- 공무원 연금*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금융상품 발굴등을 통한 수익구조 다각화

* '10년 현재 공무원 연금 운용규모는 4.8조원

○ 연금 운용방법의 다양화 (계속)

- 채 권 : 국·공채, 신용등급 BBB+ 이상의 우량 채권 투자
- 주 식 : 업종 대표주 및 저평가된 우량종목 선별 투자
- 대체투자 : 안정적 수익창출이 가능한 상품 투자

○ 해외 투자의 점진적 확대 (계속)

- 수익구조 다각화와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으로 운용사를 통한 간접 투자

○ 투명하고 공정한 위탁운용사 선정 (계속)

- 자산별 운용사선정위원회의 심사·평가를 통하여 위탁운용사 선정

4] 군인연금

○ 군인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노력 (계속)

○ 대체투자 및 해외투자 등 다양한 투자전략을 통하여 최대한 원리금을 회수하는 등 수익성 제고 (계속)

* '11.7월 현재 군인연금 운용규모는 5천2백억 규모

○ 연기금투자 Pool에 투자자금 위탁 운용 (중장기)

- 회수한 자금을 포함한 신규 투자자금 발생 시 전액 연기금투자 Pool에 위탁운용하며 既 투자상품 원리금이 모두 회수되는 경우 모든 투자자금을 연기금투자 Pool에 위탁운용

라. 사적연금시장의 정비

□ 사적연금보험 활성화를 통해 노후보장 준비 및 금융산업 성장 추진 (2011년)

- 사적연금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여 실효성 있는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
- 장단기 실천과제 선정 및 세부실행계획 수립하여, 국내 노후 소득보장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고령사회에 진입한 선진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 시사점 도출
 - 베이비부머 계층의 은퇴준비 실태 및 향후 국내 은퇴시장 등의 정확한 예측을 통해 노후대비 체계 보완방안 마련
- 도출방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및 노후대비 금융상품 개발 추진을 위한 관련 법규 정비

□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2012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시행(12.7.26)에 대비하여 퇴직연금 제도의 선진화 및 적용 확대를 위한 하위법령 정비 작업을 추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주요 내용 >

- ◇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강화) 퇴직연금의 중간정산 사유를 주택구입, 의료비 등 긴급 자금 수요시로 제한
- ◇ (개인형 퇴직계좌(IRP) 활성화) 퇴직연금가입자가 퇴직급여 수령시 이를 IRP로 옮기도록 의무화하고, 자영업자 등에게도 IRP 가입을 허용
- ◇ (가입자별 DB형/DC형 동시설정 가능) 개별 근로자의 확정급여형(DB) 및 확정기여형(DC) 동시 가입을 허용

마.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 우리사주 관련 세제지원 확대 (2013년)

- 우리사주 장기보유 세제감면 강화, 우리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대상 상향 추진 등 세제 개선방안 지속 검토

☐ 우리사주에 대한 인지도 제고 (계속)

- 우리사주 도입당사자 (사업주, 근로자, 노조 등), 인사노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우리사주 설명회 및 방문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인지도 제고

☐ 우리사주 외연확대 추진 (계속)

- 우리사주* 예탁조합수, 예탁지분을 증가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연 확대 추진

* '10년 우리사주 결성조합수 2,818개, 예탁조합수 1,001개 (상장·코스닥 기업의 경우 83%, 전체 0.64%)

- 무상출연 유인제공, 의무예탁기간 조정 등과 함께 우리사주 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및 연구용역 실시

가. 외국기업 상장유치 활성화

□ 외국기업의 한국거래소 상장을 적극적으로 지원 (계속)

- 글로벌 자본시장으로서의 위상 확보를 위한 국제 자금 조달 창구 기능 강화

□ 신규상장 외국기업의 질적수준을 제고 (계속)

- 글로벌 우량기업의 한국거래소 유치방안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증권업계 및 주요 기관과의 업무 협력 강화

□ 상장 외국기업의 국적 다변화 추진 (계속)

- 美國, 日本 등 주요 거점지역별 유치활동을 강화하고, 선진 거래소 상장기업의 2차상장 활성화 등 상장 외국기업 국적다변화 추진

□ 영문공시 거래소시스템 구축 (2011년)

- 외국기업 상장유치를 위하여 한국거래소의 수시공시 내용을 영문으로 자동변환하도록 시스템 개선 ('11.10월 시스템 개통)

나. 신흥국 거래소 설립 지원

- 라오스·캄보디아 증시개설 후 공동운영*을 통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투자설명회 및 상장유치활동 등을 통해 증시 활성화 지원

* 한국거래소는 라오스 및 캄보디아거래소의 지분을 49% 및 45% 보유

- 아시아 역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향후 IT인프라 수출 및 국내 금융투자업계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 아시아를 넘어 5개권역* 30개국 이상을 대상으로 증시설립 지원을 추진하고 신흥시장 증시인력과의 네트워크 강화

* 5개권역 :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동유럽

다. 해외거래소와 국내거래소의 연계 추진

☐ 시카고 선물거래소 (CME : Chicago Merchant Exchange)와의 연계거래 활성화 (계속)

- 대상상품 확대(원·달러선물) 및 규제 개선(국내 금융투자업자의 미국 FCM* 등록면제 등) 등 추진

* Futures Commission Merchant (선물중개회사)

☐ Eurex 연계거래 활성화 (계속)

- 시장참여 비용 인하 및 시세정보 직접분배 방안을 마련하고, 마케팅 및 홍보활동 강화

☐ 해외거래소와의 교차거래 방안 마련 (계속)

- 해외거래소 및 국내거래소 간에 상장상품을 상호 교차하여 거래하는 방안 마련

라. 동아시아 역내채권시장 형성참여

☐ 아시아 채권시장 인프라 구축 (계속)

- 역내 국가 간 채권거래시 예약·결제 업무를 전담하는 역내 증권결제기구 (RSI, Regional Settlement Intermediary) 설립 방안 마련
 - 현재 ASEAN+3 채권시장발전방안의 TF 4 (의장 : 우리나라, 필리핀) 산하에 실무워킹그룹을 두고 설립 작업 추진 중

☐ 신용보강을 통한 채권발행 추진 (계속)

- 역내 발행채권에 대해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신용보증투자기구 (CGIF, Credit Guarantee and Investment Facility) 설립 및 운영에 참여
 - 현재 ASEAN+3 채권시장발전방안의 TF 1 (의장 : 중국, 태국) 에서 설립 및 운영 작업 추진 중

가. 회사채시장 제도개선

□ 채권인수 제도개선 (2011년)

- 기업실사를 강화하고 수요예측을 도입하여 투자자보호 및 신뢰도를 제고

나. 자산유동화시장 활성화

□ MBS 발행 확대* 및 신용리스크 축소를 통한 유통시장 활성화 (계속)

- * ① '10년말 우리나라의 MBS 발행잔액은 26.4조원으로 GDP 대비 2.3%에 불과
- ② MBS 발행잔액(조원) : ('08말)16.8 → ('09말)22.9 → ('10말)26.4

-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금융회사의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유동화 확대

-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16년말까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 수준까지 상향될 수 있도록 지원

- 유동화자산의 연체관리 강화 등을 통한 자산건전성 제고

□ ABS 시장의 활성화와 건전성 확보 (2012년)

- 자산보유자 및 자산관리자 범위 확대, 포괄유동화 도입, SPC에 대한 이익준비금 적립요건 면제 등 추진

다. 파생상품시장 선진화

□ 다양한 파생상품 도입 (계속)

-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신상품 상장 및 활성화 추진
- 투자자의 필요에 부합하는 상품 개발을 위한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상품 설계능력 강화 유도

□ 파생상품시장의 리스크 완화 (2011년)

- 파생상품 결제리스크와 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해 사후증거금 및 매매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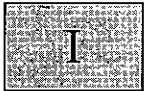
□ 파생상품 관련 투자자 보호 강화 (계속)

- ELS 등 파생결합증권의 투자설명서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등 관련제도 개선

※ (예시) 기초자산, 파생결합증권 고유의 위험요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영업현장에 대한 불시점검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 근절 등 판매관행 개선노력 강화

2.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금융산업의 실물경제 연계성 강화

가.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체계적 금융지원 (계속)

- (온렌딩 대출 강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On-lending) 대출* 확대

* 정책금융자금을 민간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

- (정책펀드 운용) 바이오·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하여 정책금융공사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펀드* 운용을 활성화

* 펀드결성액 : 3.1조원(정책금융공사 출자약정액 1.4조원)

□ 신성장분야 기업에 대한 Primary-CBO 지원 (2011년)

- 신성장분야 기업 대상 최대 3,000억원 규모 Primary-CBO 발행
 - 기술력이 우수한 녹색기업, 벤처·이노비즈 기업의 회사채, 전환사채(CB), 대출채권, 기업어음 등으로 기초자산 Pool 구성

□ 신성장동력 산업 기업 등에 대한 상장 활성화(계속)

- 한국거래소 규정 개정* ('11.3월)에 따른 신성장기업 상장특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량중소기업에 대한 방문컨설팅 및 제도설명 등을 강화

* 녹색기술산업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첨단융합산업 (IT융합, 로봇응용), 고부가서비스산업 (콘텐츠) 등 신성장동력·녹색 산업에 대해 코스닥 상장 요건을 완화

□ 우수 벤처캐피탈 중심의 벤처투자 활성화

- 벤처캐피탈 투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벤처캐피탈에 대한 공시, 관리·감독 및 제재 강화 방안 마련 (2012년)
- 연기금 등이 출자대상 벤처캐피탈 선정 시 '투자성과·평판'을 중점 평가 (계속)
 - * 주요 기관투자자 (각종 연기금, 정책금융공사 등)별로 출자대상 투자조합에 대한 우선순실충당제도 개선방안 마련

□ 프리보드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가 자금조달·기업공개 등을 지원하는 지정자문사* 제도를 도입·운용 (2012년)

- * 기업금융 자문, 투자유치 지원 등 유망기업의 프리보드 진입을 유도하고, 이후 공시 등 프리보드 규정준수 지도, 자금 조달 및 IPO상장 지원

나. 신성장동력산업 투자 회수장치 강화

□ 기업공개 前 투자 회수장치 강화 (계속)

- M&A 전용펀드를 확대*하고 M&A 희망기업에 대해 추진 타당성 및 방법에 대한 진단 서비스를 강화**

* 모태펀드(Fund of Fund) 출자를 통해 M&A전용펀드를 지속적으로 확대 ('11년 현재 8천억원)

** 기업실사 및 분석비용의 최대 85% 지원 (기업당 300만원 한도)

- 해산펀드의 투자금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위해 정책금융공사 출자를 통해 세컨더리펀드 (Secondary Fund)* 확충

* 비상장 벤처기업의 IPO 지연으로 인한 벤처투자자금 회수 지연시 투자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투자지분을 매입하는 펀드

※ 정책금융공사 세컨더리펀드 출자약정액(억원) : ('10) 560 → ('11^년) 1000

□ 기업공개 등을 통한 투자 회수장치 강화 (계속)

-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기업공개 (IPO)나 지분매각을 통해 회수할 수 있도록 신성장분야 코스닥 상장특례제도 ('11.3 도입)를 차질없이 운영
- 신성장기업부 신설 등 소속부 제도*의 활성화,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등 추진 (계속)

* (현행) 일반·벤처기업으로 구분

⇒ (개선) 우량기업부, 벤처기업부, 신성장기업부, 중견기업부제 도입

다. 녹색금융 인프라 확충

□ 녹색금융상품에 대한 세제지원 개선 (2011년)

- 녹색인증 범위확대* 등 녹색인증제도 개선 및 녹색금융인력양성 확대 등을 통해 세제지원 녹색금융상품** 활성화 유도

* (현행) 신재생에너지·첨단수자원·신소재 등 1,263개 핵심기술

⇒ (개선안) 저탄소화에 기여하는 지열에너지 등 추가 1745개 핵심기술

** 녹색인증분야와 관련한 예금·채권·펀드에 대해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비과세

- 先대출·後조달*을 인정하여 금융기관의 녹색금융상품 출시 촉진

* 금융기관이 일반자금으로 녹색기업을 지원한 경우에도 녹색조달을 통한 대출로 인정하고, 이후에 녹색금융상품 출시를 통한 자금조달 허용

□ 녹색경영 공시제도 도입 (2012년)

- 녹색기업에 대한 투자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사례 조사를 거쳐 녹색경영 공시제도를 도입

* 현재 자율공시중이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10.4.14일 시행)"에 의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녹색경영공시를 '12년부터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

가. 은행산업 발전: 新사업 발굴 및 글로벌화

□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국내 은행산업 발전의 계기로 활용 (계속)

○ PB·퇴직연금 등 新사업 역량 강화 및 자금조달·운용의 장기화 등을 통해 안정적 수익기반 확충 유도

○ 해외진출 규제 완화 (사전협의 → 사후보고)에 따라 현지 네트워크 구축 및 틈새시장 (Niche Market) 개척 등을 지원

○ 이사회·임원의 성과평가, 보수 등에 관한 공시 확대 등을 통해 은행 경영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

* 개정 은행법에 따라 '11.5.17일까지 「지배구조 내부규범」(이사회 운영 등에 관한 원칙·절차)을 제정·공시 완료함

□ 은행권 리스크 요인의 철저한 관리 (계속)

○ 은행간 외형경쟁 심화로 인한 특정 자산시장 대출 급증, 무리한 자금조달 등 리스크 요인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

○ 자산 건전성, 유동성 등 경영지도비율을 수시 점검하고, 부동산 등 취약부문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나. 보험산업 발전 : 판매채널 혁신 및 소비자주권 강화

□ 판매채널 다양화* 등에 대응하여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 확대 (2012년)

* TM (Tele-Marketing), 홈쇼핑 등 비대면채널 증가

- 보험상품별 가격비교 및 보험수수료 관련 공시를 확대
- 보험광고시 보장하는 위험, 보험료, 보험금 등을 명시토록 하여 소비자의 상품선택권 보장

※ 과장광고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엄중 제재

□ 소비자 중심으로 보험 모집수당체계 및 판매방식 개선 (2012년)

- 보험상품 판매 이후에도 사후 관리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판매수당체계 개선

※ 현재 판매수당의 초기집행방식을 분할 지급이 가능한 방식으로 개선

- 불완전판매 억제를 위해 보험판매자에 대한 전문교육 및 윤리·법규교육 강화

다. 금융투자산업 발전 : 기업의 직접금융 내실화

□ 기업공개 (IPO) 제도개선 추진 (2011년)

- 공모가 결정의 적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주관증권사 실사작업의 실질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기업공개(IPO)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금융 기능 강화

- 이를 통해, 추가출자에 참여하기 어려운 주주의 이익을 보장함과 동시에 기업의 실권 위험을 줄여 자금조달도 원활화

□ 자금조달수단 다양화 : 조건부자본증권 · 독립워런트 허용 (2012년)

- 상장기업에 대해 상법상의 사채 유형 (단순사채 · CB · BW · PB · EB · 파생결합사채 등 6종) 외에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추가 허용

* 조건부자본증권 : 해당 증권 발행 당시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 발생시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회사채

- 미리 정한 가액 등에 따라 신주의 발행 등을 상장기업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독립워런트*의 발행도 허용

* (현행) CB · BW 등과 같이 회사채에 부가되거나, 스톡옵션과 같이 특수한 자에게만 발행되는 형태로만 허용 → (개정) 주식+워런트 등도 발행 가능

- 부작용 방지를 위해 실물거래와 연계된 경우*로 독립워런트의 발행사유를 제한하고 행사가액 이외에 발행가액도 규제

* (i) 주식 등과 함께 발행 (ii)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면서 그 기관에 발행 (iii) 전략적 업무제휴, 합작투자의 유치를 위해 다른 기업·투자자에 대해 발행 등

- 독립워런트 도입과 병행하여 상장기업에 대해 분리형 BW의 발행을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시장관행을 유도

□ 상장기업의 주주총회 내실화를 지속 (계속)

- 경영진 등에 의해 주주총회 활성화의 장애요인이 되어 왔던 점을 감안하여 Shadow Voting (중립투표)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전자 · 서면 투표 활성화를 지속 유도

라. 서민금융 강화

□ 저축은행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확대 (2012년)

- 여신전문출장소 설치인가요건을 합리화하고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한 공동 여신전문출장소 설치를 유도

□ 저축은행 여신심사능력 제고 및 영업기반 확충 (2012년)

-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신용평가시스템을 기반으로 저축은행별 특성을 반영한 개인신용평가시스템 구축 유도
- 재무건전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대해 할부 금융업 허용

* BIS 비율 10%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 최직근 종합등급 2등급 이상

□ 신용협동조합의 서민금융 공급 확대 유도 (2013년)

- 단위신협과 중앙회간 연계대출 제한을 완화*하여 중앙회의 여유자금 대출을 활성화하고 신용리스크 분산을 유도

< (예시)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비회원 대출 한도 >

(현행) 단위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100% 초과분부터 중앙회 대출 가능

→(개선) 단위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50% 초과분부터 중앙회 대출 허용

마. 회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국제회계기준 (IFRS) 도입 등을 계기로 글로벌 회계주도권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응 (계속)

- 국제회계기준에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제회계기준 위원회 (IASB :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등 회계 기준제정기구와의 협조 강화

□ 국제회계기준 (IFRS)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

- IFRS의 적용상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IFRS와 미국회계기준과의 합치 등 국제회계제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계속)
- 국제회계감사기준 (New ISA) 도입 및 연결중심의 감리 확대 등 회계감독제도를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개선 (2012년)
- 수시공시 등 기타 공시제도 및 진입·퇴출 등 상장제도도 연결기준으로 전환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2012년)

* 상장·공시 연결기준 전환 관련 법규 정비 추진

□ 민간 주도, 수요자 중심으로 회계인프라를 혁신 (2013년)

*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민관합동위원회」 ('11.5.13일 발족)를 통해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i) 민간위원 : 학계 3인, 기업체 1인, 이용자 1인, 회계법인 2인, 유관기관 2인

ii) 금융당국 : 금융위 부위원장, 증선위 상임위원, 금감원 회계본부장

- (기업) 기업의 내부감시기구의 권한과 책임 강화, 내부회계 관리제도 개선 등
- (회계법인) 중소형 법인의 전문화·대형화 유도, 회계법인의 감사업무 관련 품질관리제도 개선 등
- (금융당국) 부실감사 회계법인의 제재 강화, 감리절차 개선 등

바. 구조조정금융 활성화

☐ 저축은행 PF 대출채권 등의 효율적 처리 (계속)

- 금융회사 부실자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자산관리공사(KAMCO)의 구조조정기금을 통하여 금융회사 및 기업 구조조정 지원

* '11.6월까지 은행 1.2조원, 저축은행 4.2조원, 해운사 선박 0.4조원 등 총 6.0조원 지원

☐ 기업재무안정 PEF를 적극 활용 (계속)

- 기업인수 (Buy-out) 뿐만 아니라 부실채권 정리,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 매입 등을 통해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

* 유암코 및 7개 은행이 참여하는 'PF 정상화 Bank'는 1.2조원 규모의 PEF

가.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등 글로벌화

□ 전략적인 해외진출 추진 (계속)

- 해외진출 지역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동일지역내 중복진출, 국내금융기관간의 과당경쟁 가능성, 지역별 수요 등을 감안하여 진출지역의 다변화 유도

□ 해외진출방식의 다양화 (계속)

- 사무소, 지점, 신규법인 설립 뿐만 아니라 현지 금융기관 인수 등 진출방식을 다양화
 - M&A, 지분인수, 합작회사 설립, 전략적 제휴 등 진출방식 다양화와 이를 기반으로 한 현지화를 통해 안정적인 영업 및 수익기반 마련 유도

□ 적극적인 현지화를 통한 리스크 감소 (계속)

- 현지에 적합한 경영전략 마련 및 현지 금융전문인력 적극 채용 등 현지화 노력 강화
 - 한편 국내 제조업 등과의 동반진출을 통해 해외 진출 초기의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현지화의 기반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

나. 동북아 개발금융 참여 확대

☐ 동북아 국가별로 특화된 개발금융으로 지원효과 강화 (계속)

- (극동러시아) 원유, 천연가스 및 각종 광물의 효율적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수출입 금융 (예 : 수은의 해외자원개발자금) 중점 지원
- (몽골) 한-몽골 EDCF 정책협약 ('11.5) 등을 통해 합의된 지원 규모 (향후 5년간 3억불*)를 적기에 지원하여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

* '11.5월말 현재 몽골 내 3대 민간은행에 총 5천만불 규모의 전대자금 라인을 설정하여 운영중

☐ 중장기적으로 극동 러시아, 중국, 몽고 지역의 자원·인프라 개발과 사막화 방지,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3. 금융인프라 선진화

가. 글로벌 금융규제 변화에 따른 감독제도 정비

□ 글로벌 금융규제 원칙에 맞추어 우리의 금융감독 시스템 정비 (계속)

※ G20정상회의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금융시스템의 개혁과 금융 위기 재발방지를 위하여 글로벌 금융규제 원칙에 합의

① 은행의 자본 · 유동성 규제방안(Basel III)관련 제도 정비

- 글로벌 은행시스템의 회복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은행 자본 · 유동성의 양과 질을 개선하고 국제적 일관성 제고

② 대형금융회사 (SIFI : Sy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에 대한 규제체계 정비

- (事前) 모든 SIFI에 보다 높은 수준의 손실흡수능력을 보유하도록 하는 한편, 글로벌 SIFI부터 우선 적용
- (事後) 각국은 납세자 부담없이 모든 SIFI를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SIFI에 대한 강화된 감독 실행

③ 장외 파생상품시장 관련 인프라 정비

-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은 중앙청산소를 통해 거래하고, 모든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

④ 신용평가시스템의 점진적 개선

- 외부 신용평가등급 (CRA ratings)에 대한 의존도 축소를 위해 은행과 시장참가자는 자체 신용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

☐ 글로벌 금융규제시스템 정비 논의에 적극 참여 (계속)

- G20 금융규제분야를 총괄하는 금융안정위원회 (FSB) 등 관련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

☐ 국내 금융시스템의 정비 (계속)

- 「G20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 (단장) 금융위 부위원장 / (참석기관) 금융위, 금감원, 한은, 예보, 연구원

나. 수요자 중심의 금융 규제개혁

☐ 금융규제 전수조사* 및 규제개혁과제 개선**을 지속 (계속)

* 비명시적 규제를 포함하여 약 1,400여건의 규제를 전수조사 ('08.3~5월)

** '10.6월말 기준, 300여건의 규제개혁과제 중 247건의 과제를 완료

☐ 금융규제개혁의 체계적인 관리 (계속)

- 모든 금융규제를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정보화시스템」에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자체 점검을 지속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규제개혁 과제별 추진실적을 공개하여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

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 금융회사 건전경영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선진화 추진 (2012년)

- “(가칭) 금융회사 경영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하여 사외이사·감사위원회의 감시기능 및 독립성 제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기능 강화

〈 금융회사 경영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가칭) 개정안 주요내용〉

☐ 이사회 기능 강화

- 주요 사항을 이사회가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권한 명시
- 업무집행임원(현행 부행장 등 미등기 임원) 임면시 이사회 의결
- 이사회의 사외이사 과반수 의무화

☐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 상근임직원이 사외이사로 임명될 수 있는 냉각기간 확대(2년 → 3년)
- 사내이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 참여 금지 및 후보추천위원의 자기 투표 금지

☐ 감사위원회 및 내부통제 개선

-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제고 및 경영진 감시기능 강화
- 내부통제책임자(현행 준법감시인)의 기능 및 역할 강화

☐ 위험관리 및 보상체계 개선

- 위험관리위원회와 위험관리책임자를 두어 위험관리 강화

☐ 임원자격 제한제도

- 금융관계법령 위반시, 위반내용 등을 감안하여 임원자격을 제한

라. 자금세탁 방지제도의 글로벌화

□ 자금세탁방지 국제규범의 충실한 이행 및 투명성 강화 (2011년)

※ '10년말 특정금융거래보고법/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하였으며, '11.8월 현재 관련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

○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에 대한 기관제재 도입 및 전신 송금시 송금자정보 제공 근거 신설 등 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

○ 테러자금조달금지제도 (Counter Financing of Terrorism)를 국제 기준에 맞춰 선진화

－ 테러자금조달 관련자에 대한 자금조달도 처벌*하고, 테러 자금조달 관련자에 대한 금융거래제한제도를 동산·부동산 등 일체의 재산을 포함하는 '거래제한제도'로 확대

* 현재는 '테러(공중협박)행위를 위한 자금조달'만을 '테러자금조달'로 처벌

□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인 OECD 산하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36개 회원국)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제규범 제·개정 등 다자간 국제협력을 강화 (계속)

□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차단을 위해 美·英·日 주요국 금융정보분석기구 (FIU)와의 국제공조 강화 (계속)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관련 금융정보의 효과적 공유를 위한 국제 기구인 Egmont Group (127개 회원국)에 적극적으로 협력

○ 전세계 각국의 금융정보분석기구 (FIU : Financial Information Unit)와의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MOU를 확대 추진 (계속)

* '11.8월 현재 美·英·日 등 주요국을 포함하여 48개국과 MOU 체결 완료

가.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가칭)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추진 (2012년)

○ (판매규제 일원화) 금융업종에 상관없이 유사 종류의 금융 상품에 대해서는 공통 판매행위 규제*를 적용

* 설명의무,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구속성계약체결금지, 광고규제 등

○ (제재 강화) 판매행위 규제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금융기관의 불완전 판매행위에 대해 강도 높게 제재

○ (분쟁조정제도)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분쟁 조정제도 개선방안 마련

나. 금융교육 강화

□ 종합적인 소비자 실태조사*를 토대로 연령대별로 소비자가 실제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교육 콘텐츠와 방식을 개발 (2012년)

* KDI를 통해 금융능력 및 이해도 관련 현황조사를 실시('11.8월 완료)

□ 금융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 역량강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 (2012년)

* 로드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중(KDI, '11년중 완료) : 금융교육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전문가·시민단체 등의 참여 확대

다. 예금보험제도 강화

- 금융시장 불안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목표기금제를 안정적으로 운영 (계속)
 - 목표기금 적립률 현황 및 추이를 분석하고 목표규모 도달, 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도개선 검토
 -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목표기금 적립률 추이를 분석하고 목표규모 도달 시 보험료를 조정방안 등을 검토
- 부보금융회사의 위험 수준별로 예금보험료를 차등부과하는 차등보험료율제 도입 준비 (계속)
 -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차등평가모형 내부안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 및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 2014년 차등보험료율제 시행을 위한 관련 시스템 수정 등 준비

라. 개인 신용평가제도 개선

- 신용평가시 부정적 정보의 반영을 축소 (2011년)
 - 신용조회기록정보 및 10만원 미만의 연체정보 미반영
 - * 신용조회기록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 : 약 307만명
 - * 10만원 미만의 연체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 : 약 749만명
 - 90일 미만의 단기 연체정보 반영기간 축소 : 5년 → 3년

가. 글로벌 금융인력 양성

□ 금융전문대학원 및 경영대학(원)의 금융교육 강화 (계속)

- MBA 등의 금융 커리큘럼 강화하고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실무 전문인력들이 경영대학(원)에서 금융 실무를 강의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유도 (교과부, 금융유관협회, 주요 경영대학 등과 협의)

* 선박금융 특화금융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해양대에 선박금융전문대학원 (MBA 과정) 설립을 추진

□ 금융 교육 및 자료의 유기적 연계 추진 (계속)

- 현재 통합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금융협회, 금융공기업, 금융기관의 자료실과 교육프로그램을 유기적 연계
 - 금융인력 교육을 위한 자료·교수진·프로그램의 연계 및 공동활용을 확대하면서 시너지 효과 제고

□ 금융회사들의 자체적인 금융교육 장려 (계속)

- 금융인력의 금융관련 자격증 (CPA, CFA, FRM 등) 취득과 금융 교육을 위해 학습휴가 및 휴직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 도입 (금융협회, 금융기관 등과 협의 추진)

□ 금융인력 D/B의 체계적 관리 (계속)

- 해외에서 활동 중인 한국 금융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인력 네트워크 센터”를 통하여 금융인력 D/B 구축·관리

나. 녹색금융 특화 MBA 지원

□ 녹색금융특화 MBA의 지원 (계속)

- 신성장 분야인 녹색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녹색금융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녹색금융 특화 MBA’를 지속 지원
- 녹색금융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지원
 - 2년간 ('10~'11년)의 녹색금융 MBA 교육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평가를 실시('11년말)

4. 금융중심지 조성 가속화

가. 금융중심지의 성공적 조성

□ 서울(여의도)와 부산(문현) 금융중심지의 성공적 운영 (계속)

- (서울 여의도 지구) 높은 금융회사 집적도, 경영인프라 수준 등을 고려하여 종합 금융중심지로 육성
 - 외국 금융회사의 SIFC 입주 촉진 및 금융중심지 위상 강화 노력 지속
- (부산 문현 지구) 한국거래소의 인프라와 해운 물류허브 기능을 기반으로 선박금융·파생금융에 특화된 금융중심지로 개발
 - (파생상품 R&D 센터 설립) 부산 소재 KRX 본사 내에 파생상품 R&D센터를 설립하여 파생상품 취급 인프라를 강화
 - (파생상품 시스템 접속 장비 부산 설치) '11년 중 KRX의 파생상품시스템 접속 장비(라우터)를 부산에 추가 설치
 - (선박운용회사 설립) 한국선박금융, 캠퍼선박운용 등 선박운용 회사의 부산 이전 및 신설을 추진
- 금융중심지의 경영·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필요시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추진
- 지속적인 해외 IR 및 설명회 개최를 통해 금융중심지 정책 및 금융중심지 조성 현황을 글로벌 금융회사들에게 홍보
- 주요 해외 금융중심지에 대한 사례 조사를 통해 우리 금융중심지의 발전 방향을 검토하고 세부 추진전략을 제고

나. 외국금융회사 및 외국금융인력 유치를 위한 홍보강화

□ 서울 및 부산 금융중심지에 대한 인지도 제고 (계속)

- 외국계 금융회사 유치를 위해 해외 IR 및 유치설명회 등을 실시
 - 서울시·부산시·금융중심지지원센터가 공동으로 해외 IR 추진 (매년 1회 이상, '11.11월 뉴욕 IR 예정)
- SIFC, BIFC로의 조기집적을 유도하기 위한 국내에 이미 진입한 외국계 금융회사 대상 유치 설명회 등 개최(연중)
 - * 부산시 : 국제선박금융포럼, 국제탄소금융포럼, 국제금융박람회 등 개최

□ 해외 금융인력 유치를 위한 Job Fair 개최 (계속)

- 해외 금융인력에 대한 국내 유치활동 강화를 위해 국내 금융회사들과 공동으로 해외 Job Fair 개최(매년 1회)
 - * '11.9월 뉴욕, LA Job Fair 추진 예정
- 해외 금융전문인력 채용 지원시스템을 통해 국내 금융회사에 해외 전문인력 채용 정보를 상시적으로 제공

다. 금융중심지 지원센터기능 활성화

□ 외국계 금융회사 대상 One-stop 서비스 제공 활성화 (계속)

-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영업 및 진입관련 인허가 및 애로·건의 사항에 대한 접수 및 처리 과정을 총체적으로 지원
- 지원센터가 금융회사 민원처리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업권별 소관부서에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건의하는 등 금융당국내 움부즈만 역할을 수행

- 금융중심지 지원센터의 업무 연속성 및 전문성 강화 (2012년)
 - 지원센터 인력을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고, 금융회사 직원의 파견기간의 확대 (1→2년) 추진

라.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

□ 금융외교 강화 (계속)

- 중국·베트남 등 해외진출 수요가 높은 이머징마켓 및 美國, 日本, 유럽 등 주요국 금융당국과 긴밀한 업무협약, MOU 체결, 정보 교류 확대를 추진하고 G-20, FSB 등 다자 차원의 금융협력도 강화

□ 해외 진출 애로·건의사항 관리 (계속)

- 해외진출 금융회사의 애로·건의사항을 상시 수렴하고, 국가별로 진출 금융회사의 Wish-List를 작성하여 금융외교를 통해 해결

□ 국내금융사 현지화 지원 (계속)

- 중국·인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동구권 등 지역별 전문가 pool을 구성하고 금융회사 수요에 맞춘 자문 지원

□ 해외진출 관련 정보제공 확대 (계속)

- 외국 금융감독 법규DB 등 진출대상국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국내 금융회사에 제공

가. 조세 관련 애로 해소

☐ 애로 청취 및 국내 조세체계 홍보 (계속)

- 국내외 투자자의 세법개정 건의사항과 애로사항 청취·검토를 위해 각 경제단체 및 외국 상공회의소와의 간담회 개최
- 세법개요 및 각종 조세감면 사항*을 알기 쉽게 해설·홍보

* Korean Taxation(세법개요), 2011년도 주요 세제개편 등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영문책자 발간('11.12월)

☐ 조세관련 국제기준 모니터링 (계속)

- 국제적으로 확립된 국제기준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법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실시

* '10년도 세제개편시에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법인세법 등 세법에 반영

나. 외국 금융기관 신규진입 편의 제공

☐ 외국 금융기관의 애로사항 해소 (계속)

- 금감원의 FSS SPEAKS, Working Group, 실무자·CEO 간담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의사소통채널을 활용해 애로·건의사항 수렴

*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월례회의, AMCHARM·EUCCK 간담회 등도 활용

- 외국계 금융회사 전담도우미를 통한 금융관련 제도설명, 각종 인허가 신청서 작성 안내 등 지원 서비스 강화
- 외국계 금융회사의 애로·건의 사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금감원에 외국계 금융회사 건의·제안 사항 DB화 작업 추진 ('11년중)

다. 법률서비스 개선 및 법률시장 글로벌화 추진

□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계속)

- 「외국법자문사법」('09.9월 시행)에 의거하여 FTA를 통해 외국법자문사 관련 협의가 이루어진 국가 소속 변호사에 대한 외국법자문사 인가를 허용

- 한-EU FTA 발효('11.7.1)에 따라 EU* 소속 변호사에 대한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개시하고 합법적 국내활동을 보장

* 국내법 사무와 외국법 사무가 혼재된 법률사건에 대한 국내 로펌과의 공동사건 처리 허용('11년)→외국법자문사의 국내변호사 고용 허용('16년)

라. 금융법령 및 업무규정의 영문화

□ 금융법령 등 영문화 및 업데이트 (계속)

- 금융관련 법령 및 감독규정 제·개정 사항에 대한 영문화 업데이트를 상시적으로 추진 (Fn Hub Korea 홈페이지)
- 외국계 금융회사를 위한 영문 인허가 업무편람을 관련 규정 제·개정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가. 외국인의 업무·생활환경 관련 정보 제공

□ 금융중심지내 행정사무의 외국어 서비스 제공 (2013년)

- 제주특별자치도법 사례 등을 준용하여 금융중심지 내 행정사무의 일정 범위를 외국어 서비스로 제공하는 방안 추진
- 공문서의 외국어 발급 및 접수·처리, 외국어 민원서식 및 사무관리 매뉴얼 보급 등 검토

□ 외국인 대상 지원서비스 홍보 강화 (계속)

- 외국인에 대한 업무·생활 환경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개선방안 마련
- Fn Hub Korea 홈페이지와 Fn Hub News Letter 등을 통해 금융·생활환경 관련 영문 정보 제공을 강화
- 외국계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발송되는 Fn Hub News Letter의 발송대상 및 발간횟수 확대

나. 외국인의 금융거래 편의 제공

□ 금융거래 영문 가이드북 발간 (2011년)

- 국내 거주 외국인의 보험거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국내 보험상품 소개 및 가입절차 안내 등을 제공하는 영문 가이드북* 발간

* 은행('09.12월 금융거래가이드북 발간), 금융투자('10.6월 금융투자가이드북 발간)의 경우 이미 영문 안내자료 발간

□ 외국인 전용 금융상담 데스크 활성화 (계속)

-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업권별 협회 및 개별 회사 공동으로 금융회사의 외국인 전용 금융상담 데스크 활성화 및 홍보강화 추진

다. 금융중심지 외국어 서비스 제공 강화

□ (서울시) SIFC 내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센터 설치 (2011년)

- 교육, 주거, 의료, 소비, 비즈니스 등 외국인의 생활 환경 전반에 대한 다국어 상담 서비스 제공
- 서울국제금융센터 (SIFC I) 준공 ('11.10월)에 맞추어 설치하여 외국계금융사의 금융중심지 진입을 촉진

□ (부산시) 부산 e-FM 90.5 영어 라디오 방송 운영 활성화 및 대중교통기관 영어 안내방송 실시 (2011년)

- 실시간 생방송 청취가 가능한 스마트폰 앱 개발 ('11.7월)
- 외국인의 청취 현황을 조사하여 인지도 제고를 위한 특집방송 실시
- 영어 안내방송이 송출되는 정류소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라. 외국인의 출입국 관련 편의 확충

□ 비자발급 등 출입국 편의 확충 (계속)

- 출입국, 체류 관련 외국인에 대한 편의제공 및 애로 해소 등을 위해 법무부, 지자체 등과의 협조체제를 보다 강화
- 금융투자자 출입국카드의 발급대상 확대 (외국계 금융회사 임원→ 추천 임직원) 등을 통해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출입국 편의 제공을 강화

마. 외국 금융종사자가 생활하기 편리한 환경 조성

□ 외국인 학교 건립 등 외국인 교육여건의 개선 (계속)

- (서울시) 외국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외국인 학교 건립 확대
 - ('12.9월) 상암동 DMC 지구에 영어권 외국인학교 개교 추진 (정원 540명)
 - ('13.9월) 개포동에 영어권 외국인학교 개교 추진 (정원 800여명)
- (부산시) 외국인학교 운영 규모 (현재 5개 학교 800여명 재학)를 확대 하고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IR 및 MOU 체결 활성화
 - * 현재 FAU 대학원 개교('11.3월), K-12 과정 유치 MOU 체결 등 달성

□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설립 등 추진 (계속)

- (서울시) 금융중심지 내 외국인을 위한 전담진료소 운영* 및 응급의료 지원 시스템 구축
 - * 여의도 성모병원과 국제의료분야 협력을 위한 MOU 체결 ('11.7월)
- (부산시)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조성
 - * 종합안내센터 운영, 외국어 병기 안내 확대, 가로경관 조성 등

□ 외국인 주거단지 조성 및 생활안내 서비스 확대 (계속)

○ (서울시) 외국인 임대아파트 건립 및 외국어 지원이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 운영 및 확대

- 서초구 우면 지구에 178세대 규모의 외국인 임대아파트 건립 ('12.6월)

* 현재 마포구 상암동에 외국인 임대아파트인 DMC Ville 운영중

- 글로벌 부동산중개소의 지속적인 확대('11년 158개→'13년 180개)

○ (부산시) 부산경제자유구역 내 명지주거단지 건설*, 부산글로벌 센터('11.4월 개소) 운영 활성화**, 외국인 생활안내 영문책자 제작 및 배부('11년 하반기)

* 임대주택 1,100세대(개별, 공동) : 착공('10.5월) →준공('14.7월)

** 종합상담실, 라운지, 세미나실, 강의실, 사무실 등 운영

□ 문화 환경 개선 (계속)

○ (서울시) 여의도 시민요트나루 · 플로팅 스테이지 · 한강변 자전거도로 등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외국인의 문화생활을 위한 인프라 강화

○ (부산시) 부산국제영화제 · 부산비엔날레 등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외국인의 문화생활을 위한 인프라 강화

I. 자본시장의 고도화

가. 자본시장의 선진화

추진 과제 및 주요 실천 과제	추진 일정			소관
	11	12	13	
1. 투자은행 활성화				금융위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기준 및 업무범위 설정				
2. 헤지펀드 도입				금융위
- 적격투자자 사모펀드 운용규제 완화				
- 非 기관 전문투자자의 헤지펀드 가입범위 확대				
3. 자본시장의 신뢰성 제고				금융위
- 시세조종 및 시장교란행위 규제 범위 확대				
- 금융투자협회 인수업무규정 개정				
4.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				금융위
- 다자간 매매체결회사(ATS) 도입				
- 파생상품 장외거래 중앙청산소(CCP) 도입				

나. 자본시장의 외연 확대

추진 과제 및 주요 실천 과제	추진 일정			소관
	11	12	13	
1.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 제고				금융위
- 자산운용산업 규제체계 선진화				
- 운용상품 다양화 및 판매채널 확대				
2. KIC를 통한 국부펀드 운용 활성화				기재부
- 자산규모 확충 및 투자자산 다양화, 위탁운용 확대				
3. 공적연기금 투자활성화				복지부 행안부 교육부 국방부
- 국민/사학/군인/공무원 연금 투자 활성화				

4. 사적연금시장의 정비				금융위
- 세제적격 연금보험 개발기준 마련				
- 위험자산 편입 규제 완화 등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시행				고용부
5.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고용부
- 우리사주 세제지원 및 외연 확대				

다. 자본시장의 글로벌화

추진 과제 및 주요 실천 과제	추진 일정			소관
	11	12	13	
1. 외국기업 상장유치 활성화				금융위
- 영문공시 거래소시스템 구축				
- 글로벌 우량기업 유치활동 및 유치방안 수립·실행				
2. 신흥국 거래소 설립 지원				금융위
- 라오스, 캄보디아 거래소 설립·운용 지원				
3. 해외거래소와 국내거래소의 연계 추진				금융위
- CME, Eurex 연계 거래 활성화				
4. 동아시아 역내 채권시장 형성 참여				기재부
- 역내 증권결제기구 및 신용보증투자기구 설립 참여				

라. 금융상품시장의 고도화

추진 과제 및 주요 실천 과제	추진 일정			소관
	11	12	13	
1. 회사채시장 제도개선				금융위
- 기업실사 강화 및 수요예측 도입				
2. 자산유동화시장 활성화				금융위
- 주택금융공사의 MBS 발행 확대				
- 자산보유자 및 자산관리자 범위 확대 등 제도 개정				
3. 파생상품시장 선진화				금융위
- 파생상품 다양화 및 투자자보호 강화				
- 사후증거금 및 매매제도 개선				

II.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가. 금융산업의 실물경제 연계성 강화

추진 과제 및 주요 실천 과제	추진 일정			소관
	11	12	13	
1.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금융위
-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대출 및 정책펀드 운용				
- 신성장분야 기업을 위한 Primary-CBO 발행				
- 벤처캐피탈 공시·감독 강화 방안 마련				중기청
2. 신성장동력산업 투자 회수장치 강화				중기청
- M&A 전용펀드 확대				금융위
- 세컨더리 펀드 확충				
- 신성장기업 신설 등 상장기업 소속부 제도 활성화				
3. 녹색금융 인프라 확충				지경부, 금융위
- 녹색금융상품 세제지원 개선				
- 녹색경영 공시제도 도입				

나. 금융산업 선진화 지원

추진 과제 및 주요 실천 과제	추진 일정			소관
	11	12	13	
1. 은행산업 발전 : 신사업 발굴 및 글로벌화				금융위
- PB·퇴직연금 등 역량 강화, 경영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 리스크 요인의 철저한 관리				
2. 보험산업 발전 : 판매채널 혁신 및 소비자주권 강화				금융위
- 보험상품 정보공개 확대, 판매방식 개선 등				
3. 금융투자산업 발전 : 기업의 직접금융 내실화				금융위
- 기업공개 제도 개선				
- 조건부자본증권, 독립워런트 허용				
4. 저축은행산업 발전 : 서민금융 강화				금융위
-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확대				
- 저축은행별·개인신용평가시스템 구축 유도				
- 단위신협과 중앙회 간 연계대출 제한 완화				

5. 회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금융위
- 국제회계감사기준 도입 및 연결중심의 감리 확대				
-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				
6. 구조조정금융 활성화				금융위
- KAMCO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 기업재무안정 PEF의 구조조정 지원 제도 개선				

다. 금융산업의 글로벌화

추진 과제 및 주요 실천 과제	추진 일정			소관
	11	12	13	
1. 금융회사 해외진출 등 글로벌화				금융위
- 진출지역 다변화, M&A 진출 확대, 현지화 개선 등				
2. 동북아 개발금융 참여 확대				기재부
- 러시아 자원개발, 몽골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 참여 등				

Ⅲ. 금융인프라 선진화

가. 금융감독 시스템의 개선·발전

추진 과제 및 주요 실천 과제	추진 일정			소관
	11	12	13	
1. 글로벌 금융규제 변화에 따른 감독제도 정비				금융위
-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방안 (Basel III) 관련 제도 정비				
- SIFI 관련 규제체계 정비				
- 신용평가시스템의 점진적 개선				
2. 수요자 중심의 금융 규제개혁				금융위
- 금융규제개혁과제의 체계적 관리				
3.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금융위
- 「금융회사 경영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4. 자금세탁 방지제도의 글로벌화				금융위

- 자금세탁방지업무 위반 기관제재, 전신. 송금자정보 제공 근거 신설			
- 전세계 금융정보분석기구 간 MOU 확대 추진			

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추진 과제 및 주요 실천 과제	추진 일정			소관
	11	12	13	
1.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금융위
- 금융상품 판매규제 정비, 분쟁조정제도 개선 등				
2. 금융교육 강화				금융위
-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등				
3. 예금보험제도 강화				금융위
- 목표기금제의 안정적 운영 및 차등보험요율제 도입 준비				
4. 개인 신용평가제도 개선				금융위
- 신용평가시 부정적 정보의 반영 축소				
- 신용평가시 긍정적 정보의 적극 반영				

다. 금융인력 양성

추진 과제 및 주요 실천 과제	추진 일정			소관
	11	12	13	
1. 글로벌 금융인력 양성				금융위
- 금융전문대학원 및 경영대학(원)의 금융교육 강화				
- 금융 교육 및 자료의 유기적 연계 추진				
- 금융회사들의 자체적인 금융교육 장려				
- 해외 한국 금융인력 D/B 구축				
2. 녹색금융특화 MBA 지원				금융위
- 녹색금융특화 MBA 지속 지원				

IV. 금융중심지 조성 가속화

가. 국내외 금융회사 금융중심지 집적 및 해외진출 지원

추진 과제 및 주요 실천 과제	추진 일정			소관
	11	12	13	
1. 금융중심지의 성공적 조성				서울시, 부산시
- 서울(여의도)과 부산(문현) 금융중심지의 성공적 운영				
2.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				금융위
- 해외 금융당국과의 협력 등 금융외교 강화				
- 애로·건의사항 상시 수렴 및 관계부처 공동 대응				
- 협의회·간담회를 통한 국내금융사 현지화 지원				
- 외국 금융감독 법규 DB 등 해외진출 관련 정보제공 확대				
3. 외국금융회사 및 외국금융인력 유치를 위한 홍보강화				서울시, 부산시
- 해외 IR 및 유치설명회 등을 통한 금융중심지 인지도 제고				
- 해외 금융인력 유치를 위한 Job Fair 개최				
4.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기능 활성화				금융위
- 외국계 금융회사 대상 One-stop 서비스 제공 활성화				
-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업무 연속성 및 전문성 강화				

나. 금융회사 경영환경 개선

추진 과제 및 주요 실천 과제	추진 일정			소관
	11	12	13	
1. 조세 관련 애로 해소				국세청
- 애로 청취 및 국내 조세체계 홍보 및 국제기준 모니터링				
2. 외국 금융기관 신규진입 편의 제공				금융위
- 애로·건의사항 상시 수렴 및 전담도우미를 통한 지원 강화				
- 외국계 금융회사 건의·제안 사항 DB화 추진				
3. 법률서비스 개선 및 법률시장 글로벌화 추진				법무부
-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4. 금융법규 및 업무규정의 영문화				금융위
- 금융관련 법규 및 인허가 업무편람 영문화 지속 추진				

다. 금융종사자 생활환경 개선

추진 과제 및 주요 실천 과제	추진 일정			소관
	11	12	13	
1. 외국인의 업무·생활환경 관련 정보 제공				서울시, 부산시
- 금융중심지내 행정사무의 외국어 서비스 제공				
- 금융·생활환경 관련 영문 정보 제공 강화				
2. 외국인의 금융거래 편의 제공				금융위
- 금융거래 영문 가이드북 발간				
- 외국인 전용 금융상담 데스크 활성화				
3. 금융중심지 외국어 서비스 제공 강화				서울시, 부산시
- (서울) SIFC 내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센터 설치				
- (부산) 영어 라디오 활성화, 대중교통 영어 안내방송				
3. 외국인의 출입국 관련 편의 확충				금융위
- 비자 발급 등 금융투자자 출입국 편의 제공 강화				
4. 외국 금융종사자가 생활하기 편리한 환경 조성				서울시, 부산시
- 외국인 학교 건립 등 외국인 교육여건의 개선				
-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설립 등 추진				
- 외국인 주거단지 조성 및 생활안내 서비스 확대				
- 외국인의 문화생활을 위한 인프라 강화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

2012. 8.

금 융 위 원 회

본 자료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을 2012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자료입니다.

I. 금융중심지 정책의 추진 경과 및 평가

1. 경과

2. 평가

II.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 현황 및 실적

1. 제2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개요

2. 제2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 실적

[1] 자본시장의 고도화

[2]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3] 금융 인프라 선진화

[4] 금융중심지 조성 가속화

[참고] 제1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주요 추진 실적

I. 금융중심지 정책의 추진 경과 및 평가

1. 경과

◇ 정부는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동북아 금융허브 달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금융중심지의 기본 인프라를 구축중

□ '03.12월 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을 수립하고 로드맵 1단계 전략('04~'07년)에 따라 금융허브 기반 구축을 추진

○ 한국투자공사 출범('05.7), 금융전문대학원(KAIST) 설립('06.3), 자본시장통합법 제정('07.8) 등 추진

□ '07.12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금융중심지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

□ '08.4월,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정책을 심의

* 위원장(금융위원장) 및 정부위원 5인, 유관기관위원 6인, 민간위원 10인(총 21명)

□ '08.8월, 제1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08~'10)을 수립

□ '08.9월,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구축('08.9)하여 금융중심지 조성 및 금융회사 유치를 위한 포괄적 서비스 제공

* 부산에 부산금융중심지 지원센터 설치('09.5.15)

□ '09.1월 서울·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하여 금융회사 집적을 통한 금융클러스터 형성을 추진

□ '11.9월, 제2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11~'13)을 수립

2. 평가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심화에도 불구하고 금융중심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정한 성과 달성

○ 은행·보험 분야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자본확충 등 글로벌 스탠다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 은행 BIS 비율: '07말 12.31% → '08말 12.31% → '12.3월 13.88%

**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08.3말 250.4% → '09.3말 230.7% → '12.3월 298.4%

○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다양한 금융상품의 출현과 직접금융의 활성화 등 자본시장 도약의 발판을 마련

□ 국제적인 평가도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

○ IMD 금융부문 경쟁력 순위가 전반적으로 상승

* '08년 40위 → '09년 33위 → '10년 30위 → '11년 28위 → '12년 25위

○ 서울의 국제금융센터 지수(GFCI) 순위도 지속적으로 상승

* '09.9월 35위 → '10.9월 24위 → '11.3월 16위 → '12.3월 9위

□ 그러나 국내 대형 투자회사의 부재 등 국내 금융기관의 국제 경쟁력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고,

○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지속 등으로 외국 금융기관 유치도 부진한 실정

□ 향후의 금융환경 변화 및 각국의 금융중심지 정책을 모니터링 하면서 금융중심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

Ⅱ.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 현황

1. 제2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개요

가 비전 · 목표 · 추진과제

비 전

글로벌 금융시장을 리드하는 금융강국 건설

목 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금융중심지 기반 확립

추진과제

1

자본시장
고도화

2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3

금융
인프라
선진화

4

금융
중심지
조성
가속화

건실한
실물경제

혁신과 도전의식 있는
인재

나 주요내용

(1) 자본시장의 고도화

- ◇ 대형 투자은행(Investment Bank), 헤지펀드(Hedge Fund) 도입 등을 통해 자본시장 시스템을 전면 개편
- ◇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및 금융상품의 혁신을 촉진하고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 (투자은행 활성화) 대형 투자은행 출범을 지원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통한 투·융자, IPO·M&A 주선 등 종합적인 Corporate Financing 역량의 강화를 추진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준을 설정하고 기업에 대한 포괄적 신용공여, 비상장주식 내부주문집행, 프라임브로커 등을 허용
- (헤지펀드 도입)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키고 금융산업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헤지펀드를 도입
 - 기존 적격투자자 사모펀드의 운용대상 제한, 금전차입·포지션 한도 등을 완화하고 헤지펀드 가입 기준 등 설정
- (자본시장의 신뢰성 제고)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각종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인수·공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자본시장 투명성·안정성을 강화
- (자산운용시장의 외연 확대) 국부펀드, 공적연기금, 퇴직연금 등의 규모 확대 및 운용방식 다양화를 통해 자산운용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
- (금융상품 고도화) 장기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확대 등을 통해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

[2]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 은행·금융투자·보험 등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고, 실물부문과의 광범위한 연계를 통하여 금융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

□ (업권별 경쟁력 강화) 대내외 환경변화를 주시하여 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업권별 상황에 맞는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

은행	글로벌 금융시장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 및 PB·퇴직연금 등 신사업 역량 강화
금융투자	투자은행·헤지펀드 도입을 비롯하여 발행가능 증권유형을 다양화하고 주주배정·IPO 제도를 보완하는 등 금융투자산업 여건을 혁신
보험	보험상품 및 판매채널을 다양화하는 한편, 설명·공시의무 등 강화
저축은행	신용평가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서민금융 중개기능을 강화

□ (신성장산업과 연계한 금융공급)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신성장산업에 대한 금융공급을 확대하고 투자회수장치도 강화하여 신생기업 지원 확대 및 고수익 투자상품 창출 효과를 달성

-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신성장동력산업 펀드 결성·출자 및 Primary-CBO 발행을 확대하고 민간 벤처투자를 활성화
- 거래소의 신성장기업에 대한 상장특례 도입을 계기로 우량 중소기업 상장을 촉진하고, 지정자문사를 통한 프리보드 시장 자금조달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

* 투자자의 프리보드 기업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프리보드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및 회계자료 등을 분석해 제반 정보를 제공

□ (금융산업의 글로벌화) 동북아 개발금융 확대 등 시장 상황 및 경쟁여건을 감안한 전략적 해외진출을 통해 금융회사의 신규 수입원 창출 및 해외네트워크 강화를 유도

(3) 금융인프라 선진화

◆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금융감독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 있는 금융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 확립

□ FSB 등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에 맞추어 금융감독제도를 정비

은행	Basel III 이행을 위해 은행 자본·유동성의 양과 질을 제고하도록 법령 정비
보험	위험기준지급여력제도(RBC)를 운영하여 리스크 관리 체계를 혁신
장외파생상품	장외거래 투명성제고를 위해 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도입
회계제도	국제회계기준(IFRS)의 성공적 정착 및 적용 확대를 추진
신용평가	외부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의존도 축소 위해 자체 신용평가 개발
대형금융회사(SIFI)	SIFI의 손실흡수능력 제고 및 강화된 감독 시행을 위한 제도정비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금융회사 경영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통해 사외이사·감사위원회의 감시기능 및 독립성을 제고하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기능을 강화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예금보험운영 효율화를 위한 차등보험료율제 도입을 준비

* (주요 내용) 유사 종류의 금융상품에 대해서 공통 판매행위 규제 적용, 불완전 판매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도높게 제재

□ (신용평가제도 개선) 소액·단기연체 등 부정적 신용정보의 활용기간을 단축하고 신용회복 성실히행 등 긍정적 요인의 반영비중을 강화

□ (금융인력 양성) 금융 MBA의 교육 품질 제고, 금융기관 종사자의 금융 전문성 강화, 금융 관련 지식·자료의 유기적 연계 등을 지원

[4] 금융중심지 조성 가속화

- ◇ 서울, 부산 금융중심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경영 및 생활환경 개선을 가속화
- ◇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및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금융중심지 입지를 강화

□ (조성 방향) 서울(여의도)은 높은 금융회사 집적도, 경영 인프라 수준 등을 고려하여 종합 금융중심지로 육성

- 부산(문현)은 해운 물류허브 기능과 한국거래소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양·파생금융에 특화된 금융중심지로 개발

□ (금융회사 해외진출) 해외진출 금융회사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진출대상국 금융당국과 협력 강화

- 중국·인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동구권 등 주요 진출대상국 금융제도 DB 구축, 지역별 전문가 pool 구성 및 금융회사 수요에 맞춘 자문 지원

□ (외국금융회사 및 금융인력 유치) 해외 IR 및 유치설명회를 통해 금융중심지 정책과 조성 현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해외 금융인력 유치를 위한 금융회사 공동 Job Fair 등을 개최

- 국내 진입을 희망하는 외국 금융회사에 대한 전담 도우미 운영 등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강화

□ (외국회사 경영 및 생활환경 개선) 조세·법률 서비스 개선과 교육, 의료, 주거, 문화를 아우르는 전반적인 생활 환경 개선을 통해 외국금융회사의 입주를 촉진

2. 제2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세부과제별 주요 추진 실적

[1] 자본시장의 고도화

I 자본시장의 선진화

가. 투자은행 활성화

- 국내 대형 투자은행(종합금융투자사업자)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12.6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M&A 자문, 인수(Underwriting), 신생기업에 대한 모험자본(risk capital) 공급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 (비상장 주식 내부주문집행)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다수 고객의 주문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
- ◇ (프라임브로커* 업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프라임브로커 업무 수행시 헤지펀드에 대한 신용공여 가능 범위를 확대(현행은 '증권관련' 신용공여만 가능)

* 헤지펀드 등을 대상으로 증권대여, 자금지원 (Financing), 헤지펀드 재산의 보관·관리 (Custody), 매매체결·청산·결제 (Clearing), 펀드투자자에 대한 보고 (Reporting) 등 종합금융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업무

나. 헤지펀드 도입

- '11.12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헤지펀드 제도 도입

- 7개월이 지난 현재 헤지펀드 시장은 약 7,179억원 규모로 급격히 성장(출범 당시 1,490억원에 비해 약 5배 증가)

* '11년 헤지펀드 운용사 인가를 받은 11개 자산운용사가 모두 참여하여 총 19개의 헤지펀드를 설립·운용 중('12.7월말)

- 초기 시장의 '성장 모멘텀'이 지속되는 가운데, 헤지펀드 운용사간 **운용경력(Track Record)**이 점차 형성되는 단계로 진입

* 투자자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일정하게 꾸준한 수익을 내는 평판 선두 그룹이 시장 자체적으로 형성되고 있음

- 향후 신규 진입 운용사의 초기자금 투자(Seed Funding),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참여 증가 등으로 양적인 확대 지속 예상

다. 자본시장의 신뢰성 제고

□ 불공정 거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

-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규제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12.6월)

- 비상장증권,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시세조종의 근거를 명확히하고, 우회상장하려는 기업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도 규제대상에 포함

□ 인수 및 공시제도의 합리적 개선

- 모집주선인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강화를 포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12.6월)

- 모집주선인도 인수인과 마찬가지로 증권신고서의 허위·부실기재에 대하여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부담

라.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

-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거래소 허가제 및 장외거래 중앙청산소(CCP)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12.6월)

* Alternative Trading System 전자적 방법으로 다수의 지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여 상장주권 등의 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대리 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

II

자본시장의 외연 확대

가.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 제고

□ 자산운용산업의 규제체계 선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12.6월)

① 자산운용산업간 경계를 명확화

-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등 간접투자방식간 구분을 명확히 하고, 산업의 본질에 적합한 방식으로 정의 조항 정비

* (집합투자)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 → '2인 이상의 투자자'로 개념 변경

** (투자일임)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운용(맞춤성 요건) 할 것을 명시

②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 집합투자업자가 충실의무(Fiduciary Duty)에 따라 투자자 이익에 부합하게 펀드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유도
- 유사한 소규모 펀드간 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수익자총회 면제 등 절차를 간소화하되 반대하는 투자자의 매수청구권을 보장
- 투자자문업의 경우에도 불건전영업행위에 선행매매를 추가 하는 등 이해상충방지의무를 강화

③ 펀드 운용의 자율성 · 창의성을 제고

- 부동산(특별자산)펀드는 설립일로부터 6개월내에 부동산(특별자산)에 50%이상 투자해야 하나, 동 기간을 2년으로 합리화
- PEF의 투자요건인 '경영권 지배 목적'을 구체화하여 주식외 BW·CB 등 메짜닌증권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

④ 신탁업 관련 규제를 전반적으로 정비

- 금융환경 변화 다양한 자산관리 수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수탁재산을 탄력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위임근거 마련

* 현행 수탁가능 재산은 법상 열거된 7종의 재산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으로 한정

□ 자산운용산업의 전문화 유도

- 투자자 보호 문제가 크지 않은 전문투자자 대상의 자산 운용사 신설은 허용하는 등 자산운용사 인가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

나. 한국투자공사(KIC)를 통한 국부펀드 운용의 선진화

- '12년 상반기에 외평기금에서 50억불을 추가 위탁하여 계약금액 기준 KIC 운용자산을 477억불로 증대

- 대체투자자과 전략적투자(SI) 비중을 늘려 종래 15% 수준이던 非전통투자 비중을 18.6%까지 끌어올림

- 중동순방(12.24~11일)과 연계하여 Qatar Investment Authority /Qatar Holding과 MOU 체결(12.2.9)

- 카타르홀딩스와 상호 공동투자 등 전략적 제휴를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 체결

- 투자의 체계적 집행·관리를 위해 기존 부서를 자산군으로 단일화하여 전문성을 강화

- Public Market Group에 통합되어 있던 직접주식과 직접채권을 각각 팀으로 승격하여 독립시킴

다. 공적연기금의 투자 활성화

【 국민연금 】

- ☐ '12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11.6월), 투자 다변화 방향에 따라 대체투자(7.8%→9.2%)와 해외투자 비중* 확대(10.7%→12.2%)

* 해외주식 + 해외채권 (해외 대체투자 제외)

<2012년도 자산별 목표비중>

(단위 : %)

구 분		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채권	해외채권	대체투자
목표비중	'12년	19.3	8.1	59.3	4.1	9.2
	'11년	18.0	6.6	63.5	4.1	7.8

* 2012년말 목표비중 달성시 주식 108조 6,887억원, 채권 251조 2,869억원, 대체투자 36조 4,633억원으로 전망

- ☐ 국민연금 해외투자 효율화를 위한 외화계정설치 검토

- 외화계정 설치의 기대효과, 운용방법, 규모 및 한도 등 세부사항 검토·협의 후 설치 추진

- ☐ 해외대체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전문기관 선정('12.4월)

- ☐ 해외대체투자 주요위험지표(KRI) 마련 및 운용('12.6월)

【 공무원연금 】

- ☐ 적극적 자산운용 및 운용방식의 다양화

- 채권 : 장기 우량채 및 주가연계증권 중심의 투자, 성과 우수 연기금투자펀드 등 수익구조 다각화

- 주식 : 업종 대표주 및 저 평가된 우량종목 선별 투자 등 주식비중 확대('11년말 23.7% → '12.6월말 26.2%)

- 대체 : 고수익 신상품 발굴 투자 저수익 펀드 정비

* 정책적 배분비중 유지 : '11말(16.4%) → '12.6말(16.4%)

☐ 투명하고 공정한 위탁운용사 선정

- 자산별 운용사 선정위원회의 심사·평가를 통하여 위탁 운용사 선정

【 사학연금 】

- ☐ '12년 자금운용계획 수립('11.12월), 중장기적으로 해외투자 (8.4%→8.6%) 및 주식투자(21.0%→22.0%) 등 위험자산 비중 확대를 통한 투자다변화 추진

<2012년도 자산별 목표비중>

(단위 : %)

구 분		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채권	해외채권	대체투자
목표비중	'12년	22.0	3.6	52.4	5.0	17.0
	'11년	21.0	3.5	55.2	4.9	15.4

- ☐ 주식 투자비중 확대('11년말 국내주식 18.6%→'12.6월말 19.6%, '11년말 국내채권 59.8%→'12.6월말 61.2%)

- ☐ 기금운용수익률 극대화를 위한 자금운용인력 전문성 강화

- 자금운용 조직진단 연구용역 실시('12.3월)
- 운용인력 확대, 보수체계 개선, 운용조직 확대·강화

- ☐ 외부 투자전문기관의 역량 활용, 유형별 분산투자를 통한 위험관리 등을 위해 위탁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

【 군인연금 】

- ☐ 대체투자 관리 강화 및 연기금투자폴 위탁운용 증대

- 군인연금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충당을 위한 안정적 수익률 확보를 위해 대체투자 원금 지속적 회수

* 전체자금 대비 대체투자 비중 : ('11.8월) 12.7% → ('12.6월) 10.0%

- 기금자산의 안정적인 운용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既투자 상품 원리금 회수시 모두 연기금투자자에 위탁운용

* 연기금투자자 운용 잔액 : ('11.8월) 1,497억원 → ('12.6월) 3,036억원
(단기자금 제외)

라. 사적연금시장의 정비

□ 사적연금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 사적연금보험의 관리강화 및 금융권간 연금저축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12.7.16)
 - 수익률, 수수료율, 유지율 등에 대하여 알기 쉽게 공시
 - 금융기관별 사적연금보험을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공시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 퇴직급여제도 개선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11.7월) 및 시행령 개정('12.7.26)
 -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강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활성화, DB·DC 혼합형 도입, DC·IRP 적립금 운용규제 완화 등
 -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규제 완화를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12.7월)
 -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주식형·혼합형 펀드 투자를 적립금의 40%까지 허용
- * (기존) 운용방법(상품별) 규제 → (개선) 총량규제방식으로 전환

마.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등 실시

- 우리사주 관련 노사정 및 학계 전문가 세미나 개최(11.12월)
- 우리사주제도 실무자 교육(월 2회, 한국증권금융)
- 기본 및 심화컨설팅 기업방문 컨설팅(한국증권금융 연간 30여회, 근로복지공단 수시)
- 원금보장형 우리사주 및 우리사주 대여 제도 등 연구용역 추진('12.7~9월, 한국증권금융)

Ⅲ 자본시장의 글로벌화

가. 외국기업의 상장유치 활성화

☐ 외국기업의 한국거래소 상장을 위한 유치활동 전개

- 일본, 미국, 중국, 터키, 그리스 및 카자흐스탄 등 다양한 국가의 기업을 대상으로 상장설명회 개최 및 기업방문 활동 등 전개

* 외국기업 신규상장 1사, 심사청구 6사, 대표주관계약 체결 6사

☐ 신규상장 외국기업의 질적수준 제고

- 외국기업 상장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 제출을 의무화('11.11월)

☐ 상장 외국기업의 국적 다변화 추진

- 상장유치 대상국가를 미국 일본 뿐만 아니라 그리스, 터키 및 카자흐스탄 등으로 확대

* 「그리스 국영기업 민영화 포럼('11.11월)」 참석, 아테네거래소와의 MOU 체결('12.5월), 「터키 우량기업 초청 행사('12.4월)」 및 「카자흐스탄 자원기업 대상 상장설명회('12.6월)」 개최 등

☐ 영문공시 거래소시스템 구축

- 수시공시 서식 중 레이블(Label) 및 정형화된 표현을 자동으로 영문 전환하도록 시스템 개선('11.10월)

* 261개 서식을 대상으로 시행

나. 신흥국 거래소 설립 지원

☐ 캄보디아 합작거래소 개장('12.4월)

* 라오스거래소는 '11.1월 개장하여 운영 중

☐ 우즈베키스탄 국유자산위원회와 증시현대화 사업을 위한 계약 체결('11.8월)

☐ 벨라루스 재무부와 증시현대화 사업을 위한 MOU 체결('12.6월)

다. 해외거래소와 국내거래소의 연계 추진

☐ 시카고 상업거래소(CME) · 유럽 파생상품거래소(EUREX) 연계거래 거래규모 2배 이상 증가

* CME 연계거래(코스피200선물) 일평균 거래대금 : 1.9조('11년) → 3.8조('12상반기)

* EUREX 연계거래(코스피200옵션) 일평균 거래대금 : 117억('11년) → 254억('12상반기)

☐ 일본 도쿄증권거래소(TSE)와 연계를 위한 기초조사 및 연계추진 합의('11.3~12)

- 한국거래소(KRX)-도쿄증권거래소(TSE)간 공동조사보고서 채택 및 연계추진 협약 체결('11.12월)

☐ 일본 TSE와 교차거래 실무 워킹그룹 운영('12.1~계속)

- 양 거래소간 교차거래 실현방안 마련 논의(진행 중)

라. 동아시아 역내채권시장 형성·참여

☐ 신용보강을 통한 채권발행 추진

- 신용보증투자기구 경영진 선임(CEO, CFO 등), 신용등급 획득(S&P AA+) 등 운영기반 마련

IV. 금융상품시장 고도화

가. 회사채 시장 제도 개선

☐ 채권인수제도 개선

- (기업실사 의무화) 기업실사 표준절차를 제시하는 「기업실사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12.2월부터 시행

* 회사채 발행시 대표주관회사와 발행사의 “대표주관계약 체결” 및 “대표주관사의 기업실사”를 의무화

- (수요예측 의무화) 「수요예측 모범규준」 마련, 시스템 정비 등 준비작업 완료 '12.4월부터 시행

*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 의무화, 회사채 공모금리 결정시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고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제재

나. 자산유동화시장 활성화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 유동화 방식*을 통해 민간 금융회사의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을 지원중

* 민간 금융회사가 공사가 제시한 양수조건에 부합하는 대출을 취급할 경우 양수하여 유동화

- '12.3~6월중 6개 은행에서 적격대출 유동화 방식을 통해 2.1조원의 고정금리대출을 지원

다. 파생상품시장 선진화

□ 파생상품 관련 투자자보호 강화

○ 파생상품시장 건전화 방안 마련('11.12월)

- * 코스피200옵션 거래승수 상향, ELW LP 호가제출 제한, FX마진거래 증거금을 인상 등

○ 파생결합증권 공시제도 개선('12.3월)

- * 투자위험요소 기재 구체화,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등

○ 파생결합증권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미스터리 쇼핑 실시('12.6월)

[2]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I 금융산업의 실물경제 연계성 강화

가.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체계적 금융지원

-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On-lending) 대출 확대

- 중개금융기관 확대 : '09년(8개) → '11년(15개) → '12년(17개*)

* '12년 하반기 SC은행, 씨티은행 추가 예정

<녹색·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온렌딩대출 공급액>

(단위 : 억원)

구 분	'11.8월~'11.12월	'12.1월~'12.6월	합 계
공급액	4,750	7,327	12,077

- 정책금융공사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펀드 운용 및 펀드 추가 결성

- '10년부터 3.1조원 규모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펀드」를 조성하여 운용중*

* '12.6월말 현재 투자실적은 1조 1,397억원

- 지속적인 신성장동력산업 지원을 위하여 '12.5월 「'11년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펀드」 추가결성* 완료

* 총 4개 펀드, 6,750억원 규모로 결성 완료

□ 신성장 분야 기업에 대한 Primary-CBO 지원

- '11년중 벤처·이노비즈, 녹색분야 등 신성장분야기업 총 219개 업체를 대상으로 총 0.3조원 규모의 P-CBO를 발행

□ 신성장동력산업 등의 상장 활성화

- 총 4개사에 상장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19개사를 방문하여 코스닥 상장 유치 활동 전개
- 초기 성장형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공급 시장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전용주식시장(KONEX) 개설 추진

나. 신성장동력산업 투자 회수 장치 강화

□ 기업공개 前 투자 회수장치 강화

- 인수자금 매칭 투자를 통해 성공기업의 창업기업 인수를 지원하는 'M&A 매칭펀드'를 300억원 규모로 신설('12.6월)
 - * 'M&A 매칭펀드' : 중소기업간 M&A 시 인수자금의 50%를 매칭투자
- 전문딜러 및 부띠끄 등 전문 중개기관간 M&A 정보망인 'M&A 인포마켓'을 구축('12.7월)
 - * 'M&A 인포마켓' : 매물기업 정보제공, M&A 성사시 평가·진단 비용 지원
- 정책금융공사가 1,000억원을 출자 약정하여 '11.12월말 총 1905억원의 세컨더리 펀드(Secondary Fund)를 조성

□ 기업공개 등을 통한 투자 회수장치 강화

- 신성장동력기업 상장 및 신성장기업부 신설·운영
 - '12.6월말 현재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신성장기업부 소속 기업은 9개사이며, 이 중 2개* 기업은 신성장 동력기업 상장특례제도 도입('11.3월) 이후에 상장

* 나이백('11.7월), DNA링크('11.12월) 상장

다. 녹색금융 인프라 확충

□ 녹색금융상품에 대한 세제지원 개선

- 금융기관이 일반자금으로 녹색기업을 지원한 경우에도 녹색조달을 통한 대출로 인정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11.8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 : "녹색산업 관련 자산에 투자(대출을 포함한다)한 자산 또는 자금"은 녹색저축 설정일 또는 판매개시일 전에 녹색산업 관련 자산에 투자(대출을 포함한다)한 자산 또는 자금을 포함한다.

□ 녹색인증제도 개선

-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고시개정 추진('12.3.30)

- (인증대상 확대) 산업계 환경변화 및 수요의견을 바탕으로 5개 핵심기술을 신규 추가하고 7개 기술수준 개선

* (기존) 10대 분야 1,745개 기술 → (개선)10대 분야 1,750개 기술로 확대

- (인증절차 개선) 녹색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연장절차 간소화·수수료 인하, 신청서 간소화 및 전문기업 확인 절차 완화 등 신청기업의 편의성 도모

* '12.7.30 현재 녹색인증 건수는 기술 687건, 사업 19건, 기업 77건

□ 녹색경영 공시제도 도입

- 녹색경영정보 관련 거래소 자율공시는 '11년 도입 이후 '12년 6월말까지 총 102건의 정보를 공시

- '12.1월부터는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녹색기술·산업 인증에 관한 사항 등을 사업보고서 의무 기재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반영(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12.1.3시행)

II 금융산업 선진화 지원

가. 보험산업 발전 : 판매채널 혁신 및 소비자주권 강화

☐ 보험상품 공시내용 확대* 및 비교공시 강화하는 내용으로
상품정보 제공 확대 추진

- * ①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비교가능성 확대 (감독규정 개정 '12.4.1)
- ② 변액보험의 펀드 분류체계 개선 (상품공시기준 개정 '12.6월)
- ③ 소비자맞춤형 자동차보험료 조회시스템 구축 (비교공시시스템 변경 '11.12월)
- ④ 상품 공시내용의 정확성 제고 (공시담당자 교육 강화, '11.12월)

☐ 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계약을 권유받을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을 추진

- * ① 저축성 보험의 판매수수료를 판매보수와 유지보수로 이원화하고, 해지시
공제대상 금액을 현행 70%수준으로 축소 (감독규정 개정 '12.4.1)
- ② 판매수수료 이연한도 50%로 축소 (감독규정 개정 '12.4.1)

나. 금융투자산업 발전: 기업의 직접금융 내실화

☐ 기업공개(IPO)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시행('11.12.28)

- 공모가 산정절차 전반에 걸친 제도를 정비하고 기관
투자자에 대한 규율 및 감독 강화

☐ 자금조달수단 다양화

- 조건부자본증권 및 독립워런트 허용을 포함하는 자본
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12.6월)

< 자본시장법 개정안 해당 내용 >

- 발행 당시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i) 주식으로의 전환이나 (ii) 상각(Written-Off, 원본상환의무
감축) 조건이 붙은 사채 발행을 상장기업에게 허용
- 일정 기간 내에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 발행 또는 자기주식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 신주인수선택증권(일명 독립워런트)의 발행을
상장기업에게 허용

□ 상장기업의 주주총회 내실화

- 예탁결제원의 중립적 의결권 행사 폐지를 포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12.6월)

< 자본시장법 개정안 해당 내용 >

- 예탁결제원의 중립적 의결권 행사제도를 폐지

다. 서민금융 강화

□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11.11월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3개 이하의 여신전문출장소는 사전신고만으로 설치 허용
- '12.7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이 할부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저축은행 여신심사능력 제고

- '12.7월 일정 규모 이상의 저축은행은 독립된 여신심사위원회와 감리부서를 설치·운영할 것을 의무화하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
- 저축은행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구축을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11.12월말 기준 93개 저축은행중 59개 저축은행(63%)이 CSS 구축 완료

* '10.12월말 CSS 구축 저축은행은 105개 중 39개(37%)

라. 회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글로벌 회계주도권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응

- 서정우 전 회계기준원장이 IASB의 위원으로 참여('12.7월)함에 따라 IFRS의 제·개정에 한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기대

☐ IFRS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노력 지속

- 상장폐지 예상되는 1개사를 제외한 모든 상장기업이 IFRS로 작성된 연차 결산재무제표를 공시완료('12.3월)
- 新국제감사기준 도입을 위해 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서 회계 감사기준 개정안 심의('12.5월)

마. 구조조정금융 활성화

☐ 저축은행 PF 대출채권 등의 효율적 처리

- '12.6월말까지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저축은행(PF채권 인수 등) 4.3조원, 은행 1.2조원, 해운사 0.5조원 등 총 6.2조원을 지원

☐ 기업재무안정 PEF를 적극 활용

- '12.6월까지 총 11개*의 기업재무안정 PEF가 설립·운영중이며, 출자약정액은 약 2.1조원(출자이행액: 약 1.3조원) 수준

* 연도별 설립추이 : ('10년) 3개 → ('11년) 4개 → ('12.6월) 4개

[3] 금융인프라 선진화

I 금융감독 시스템의 개선·발전

가. 글로벌 금융규제 변화에 따른 감독제도 정비

☐ 바젤Ⅲ 자본규제의 도입을 위한 법령 정비

- 자기자본의 개념*을 바젤Ⅲ 기준에 따라 분류하도록 은행법 시행령 개정 완료('11.12.28 공포, '13.1.1 시행예정)

* (기존) 기본자본 + 보완자본 → (개정) 보통주자본 + 기타기본자본 + 보완자본

☐ 신용평가시스템 개선

- 신용평가사의 신뢰도 제고 및 투명성 강화를 제고하기 위한 종합대응방안을 마련('12.3월)

☐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 적극 참여

- FSB 정례회의인 총회(3회), 규제·감독상임위(3회), 운영위(3회) 회의 및 컨퍼런스 콜에 모두 참여하여 야국 입장 개진

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12.6.18)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 >

◇ 지배구조에 관한 자체적인 내부규범 마련 의무화

- * CEO 승계, 임원선임, 이사회 운영 등 지배구조에 관한 자체적인 내부 규범을 마련·공시

◇ 이사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의 기능 강화

- * 이사회의 사외이사 과반수 의무화,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 및 사외이사 과반수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 구성, 감사위원 선임시 3% 초과 의결권 제한

◇ 리스크 관리 강화

- * 위험관리기준 마련 및 위험관리위원회·위험관리책임자 도입

다. 자금세탁 방지제도의 글로벌화

☐ 테러자금조달금지제도(Counter Financing of Terrorism) 선진화

- 지정된 테러관련자에게 자금을 모집제공하는 행위까지 처벌범위를 확대하고 동산부동산에 대해서도 거래제한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공협법 국회통과('11.8월)

☐ 자금세탁방지제도(Anti-Money Laundering) 선진화

- 금융회사 임직원의 자금세탁방지 직무수행 기준 명확화 기관 제재 신설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구체화하는 내용 등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이 개정되어 공포(12.3월)
- 또한 의심거래보고(STR) 기준금액 폐지, 전신송금시 송금인 정보 제공근거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12.6월)

☐ 국제협력 강화

- FATF 총회('11.10월, '12.2월, '12.6월), APG 총회('12.7월), 에그몽 그룹 총회('12.7월)에 참석하여 국제협력 지속
- 미국 FinCEN과의 정보교환 프로젝트 합의('12.6월), 브루나이 FIU와 정보교환 MOU 체결('12.7월)

II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가.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12.7.6)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 >

- ◇ 소비자 관점에서 동일한 상품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현재는 업권별로 달리 규제)
- ◇ 과징금 확대 등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보다 쉽게 피해구제를 받도록 규정
- ◇ 금감원 내 준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나. 금융교육 강화

☐ 성인을 위한 금융교육 표준 콘텐츠 개발

- 금융능력 및 이해도 관련 현황조사(KDI수행)를 토대로 실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 파악('11.8월)
- 지난해부터 KDI와 공동으로 금융소비자가 꼭 알아 두어야 할 내용을 담은 "똑똑한 금융 내비게이션"(금융교육 표준 콘텐츠) 개발 용역 완료('11.12월)
- 생활금융 내용을 일반 성인의 눈높이에 맞춰 온라인 교재(e_book)로 제작하여 금융위 홈페이지 게시('12.5월)
 - *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꼭 알아두어야 할 총 6개 분야(금융회사 이용 및 저축하기, 알면 유익한 금융제도, 신용관리 및 대출과 상환, 금융투자 및 연금, 보험, 재무설계)로 구성

☐ 금융소비자 역량강화를 위한 로드맵(국가 전략) 마련 추진

-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용역 수행 완료('11.12월)
- 이를 바탕으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로드맵 검토중

다. 예금보험제도 강화

☐ 목표기금제를 안정적으로 운영

- 목표규모에 도달한 계정에 대하여 '12년도 보험료 감면 ('12.5월, 예보위 의결)
 - 상한 초과 : 면제(금투·생보) / 하한 초과 : 15%감액(손보)

☐ 차등보험료율제* 도입 준비

* 부보금융회사의 위험수준별로 예금보험료를 차등 부과

- 예보, 금융회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TF를 운영하여 업계의 의견을 수렴(전체회의 4회)하고,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청회를 개최('11.12월)
- 「차등보험료율제 시행에 관한 기본방안」을 수립하여 평가모형, 평가지표 등을 확정('12.3월, 예보위 의결)

라. 개인 신용평가제도 개선

☐ 신용평가지 부정적 정보 반영 축소 및 긍정적 요인의 반영 강화 시행('11.10월)

- 신용조회기록정보 및 10만원 미만 소액연체 신용평가 미반영, 90일미만 단기 연체정보 반영기간 축소(5→3년), 개인워크아웃 성실히행정보 반영 등

Ⅲ 금융인력 양성

가. 글로벌 금융인력 양성

☐ 금융전문대학원 및 경영대학(원)의 금융교육 강화

- 녹색금융특화 MBA 사업을 추진하여 녹색금융 강의 개발 및 수강 지원('11.8~'12.7월중 82명 교육)

- 실무인력의 강의 참여를 녹색금융특화 MBA 사업의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산학협력 유도

□ 금융 교육 및 자료의 유기적 연계 추진

- 금융투자협회는 KAIST, 서울대 등과 MOU를 체결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연계 추진 중(금융공학 전문가과정 준법감시 전문가 인증프로그램 등)

나. 녹색금융 특화 MBA 지원

□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외부기관을 통한 중간평가 실시('11.12월)

- 평가 결과를 토대로 '12년 KAIST 및 고려대 예산 배분

□ 녹색금융 특화 MBA 82명(KAIST 58명, 고려대 24명) 교육 중

[4] 금융중심지 조성 가속화

I 국내외 금융회사 금융중심지 집적 및 해외진출 지원

가. 금융중심지의 성공적 조성

☐ 차질 없는 서울 국제금융센터(IFC Seoul) 건립 추진

(‘12.11월말 전면개장 예정)

- 오피스 I 완공 및 개장식 개최(‘11.11월)
- 지하주차장 및 지하공공보도 완공(‘11.10월)
- 건축공사 : 전체공정 92.5%(‘12.6월말)

구 분	완공시기	구 분	완공시기
오피스III(55층)	‘12.11월	쇼핑몰(지하3층)	‘12.9월
오피스II(29층)	‘12.11월	지하주차장(4~7층)	완공
오피스 I (32층)	완공	지하공공보도	완공
호 텔 (38층)	‘12.11월	(여의도역~IFC)	

☐ KRX 파생상품시장본부내 파생상품 R&D센터 설립(‘12.2.8)

- (주요임무) 장내·외 파생상품 등 금융중심지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연구

☐ 파생상품 시스템 접속장비(라우터) 부산 설치(‘12.6월 가동)

- (제공 서비스) 전산실, 트레이딩, 시세, 보안, 관제, 네트워크, 회선, 딜링룸 등 복합서비스 제공

☐ 금융회사의 금융중심지 유치·집적 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금 지원* 근거 마련(‘11.9월 법 개정)

* 사업용 설비 설치·비용, 고용 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나. 외국금융회사 및 외국금융인력 유치를 위한 홍보 강화

□ 서울 및 부산 금융중심지에 대한 인지도 제고

○ 국내 진출 외국계 금융사 대상 설명회 개최 및 방문 면담(서울시)

- 국내 진출 외국계 금융사·유관기관 방문면담

* '11년 51개사 방문, '12. 1월~7월 : 23개사 방문

- 2011년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현장 홍보('11.9월)

○ 금융허브 서울 컨퍼런스 개최('11.11월, 뉴욕) 및 해외IR(서울시)

- 40개 글로벌 금융회사의 고위급 임직원 120여명 참석

- 외국 금융사 간담회 및 MOU체결

* Pyramis Global Advisors(PGA), Aladding Capital Holdings(ACH), Legal and General Investment Management(LGIM) 등 3개사

- 홍콩 개별기업 IR('11.11월) : Natixis은행 등 4개 기업

○ IFC Seoul 입주유도를 위한 외국 금융사 홍보(서울시)

- 중국계 금융인사 IFC Seoul 초청 설명회('12.6.26)

* 중국농업은행, 공상은행, 중국은행 등 중국 주요금융기관 인사 23명

- 외국 금융사 사무소의 지점전환을 위한 간담회 개최('12.7월)

* 외국계 은행·자산운용사 사무소 대상 2회(도하은행, بانک 오브 브라질, 골든트리 자산운용, 인베스코 등 14개사)

○ 외국계 금융회사 유치를 위한 뉴욕지역IR 및 설명회 개최 ('11.11.8~11, 부산시·금융중심지지원센터 합동)

* 뉴욕 소재 금융기관 초청 설명회(40여기관) 및 개별방문 면담 (Bank of America Securities, JP Morgan Securities, Marine Money사)

* 뉴욕한인경제인협회와 경제교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 국내 진입 외국계 금융회사 대상 유치 홍보(부산시)

- 한국선박금융포럼, 국제탄소금융포럼 및 국제금융박람회 개최 등('11.11월)

□ 해외 금융인력 유치를 위한 Job Fair 개최

○ 해외 금융인력의 국내 유치를 위해 금융중심지지원센터가 국내 금융회사들과 공동으로 해외 Job Fair 개최('11.9월)

* 총 543명의 지원자가 참석하여 이중 73명 채용

다. 금융중심지지원센터 기능 활성화

□ 외국계 금융회사의 애로·건의사항, 질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One-stop 서비스 제공

* '11.8월~'12.7월 기간 중 71건 종합상담 서비스 제공

라.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

□ 금융외교 강화

○ FSB 회의체인 총회(3회), 규제·감독상임위(3회), 운영위(3회) 참석을 통해 G-20 국가간 금융협력을 강화

○ 해외 금융당국과의 MOU 체결

- '12.7월 현재, 금융위원회는 20개국 34개 금융당국 및 1개의 국제기구와 총 31건의 MOU를 체결

- '11.8월 이후 현재까지 7개국 10개 금융당국과 총 9건의 MOU* 체결

* ①호주 건전성감독청, ②몽골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위원회, ③터키 은행감독청, ④터키 자본시장위원회, ⑤영국 금융청, ⑥베트남 재무부, ⑦인도네시아 중앙은행, ⑧태국 보험위원회, ⑨태국 증권거래위원회

- 한국거래소, 금융결제원 등 금융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해외금융협력협의회 구성(11.10월)

□ 해외 진출 애로·건의사항 처리

-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수요·애로사항 수집을 위한 정기 간담회 개최(6회), 수집된 애로사항을 금융위·외교통상부 등과 협력하여 해소 노력
-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일본,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 중국 감독당국을 방문하여 대화채널 구축 상호 협력방안 및 애로사항 해소방안 모색(11.11~12.3월)

□ 국내 금융사 현지화 지원

- 권역별 글로벌 경영사례 세미나를 개최(12.6~7월)하여 캄보디아, 브라질 등 신규 진출수요가 높은 국가에 既 진출한 국내 금융회사의 진출경험을 공유

□ 해외 진출 관련 정보제공 확대

- 진출 수요가 많은 7개국의 31개 금융법규(영문)를 제공하고 인도네시아 금융업 인허가 업무편람 발간(11.12월)

Ⅱ 금융회사 경영환경 개선

가. 조세 관련 애로 해소

□ 애로 청취 및 국내 조세체계 홍보

- 외국계기업의 세무상 애로사항 파악과 세정운영방안 설명에 대한 간담회 개최 및 건의사항에 대한 현장답변 실시(12.3월)

- 외국인 신고안내책자 등 납세안내책자 4종을 외국인이 이용하기 쉽도록 한·영 대조식으로 발간('11.12월~)
- 외국인전담창구를 확대 운영(45개→57개)하고, 외국인전담창구 지정 직원에 대해 직무 교육 및 전화영어 등 외국어 교육 실시('10.4월~)
 - 외국인전용상담창구 직원 직무교육 실시 : '12.4.27
 - 전화영어 등 외국어 교육 실시 : '12.6월~
-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및 상호합의(APA) 제도 운영
 -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252건 회신('11년)
 - 상호합의(APA) 45건 신청('11년)

□ 조세관련 국제기준 모니터링

- 매년 OECD 재정위원회 총회에 참석하여 국제조세 및 조세 조약 등과 관련한 세계 각국의 동향 파악 및 의견 교환
 - '11.8 ~ '12.7월까지 총 27회 참석

나. 외국 금융기관 신규진입 편의 제공

□ 외국 금융기관의 애로사항 해소

- FSS Speaks('12.3월) 및 CEO간담회('12.6월) 등 외국계 금융 회사의 애로·건의사항 상시청취 및 피드백 제공
- 중국 자오상 증권 사무소 설치('11.8월) 지원 등 외국계 금융 회사를 대상으로 국내 인허가 절차 및 관련제도 안내 실시
- 외국계 금융회사의 애로·건의사항을 DB화하여 관리
 - * '11.8~'12.7월 기간 중 71건

다. 법률서비스 개선 및 법률시장 글로벌화 추진

□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심사 및 자격승인 통과(~'12.8월)

- 영국, 미국로펌 변호사들의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접수 개시 및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들에 자격승인 부여 국내활동 보장

* '12.8.20 현재 미국 변호사 13명, 영국 변호사 1명 자격 승인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 심사(~'12.8월)

- 영국, 미국로펌들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 신청 접수 개시 및 심사 진행

* '12.8.20 현재 미국 로펌 2곳, 영국 로펌 1곳 설립 인가

라. 금융법령 및 업무규정의 영문화

□ 금융관련 법령* 영문번역 완료('11.12월)

* 94개 법·시행령·시행규칙, 41개 감독규정 및 19개 시행세칙

□ 외국계 금융회사 대상 영문 「금융회사 인허가 핸드북」 개정판* 발간('12.7월)

Ⅲ 금융종사자 생활환경 개선

가. 외국인의 업무·생활환경 관련 정보 제공

□ 금융중심지내 행정사무의 외국어 서비스 제공

○ 서울 국제금융센터(IFC) 내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설치('12.1월)

- 외국인 생활 서비스, 창업 인큐베이팅 등 비즈니스 지원

○ 120다산콜센터 외국어상담서비스 운영(10.3월~)

- 교통, 생활정보, 노동 등 서울 정보의 외국어 안내·상담, 통역 등 서비스 제공

* 5개 외국어로 서비스 제공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몽골어

○ 부산 국제교류재단내 외국인 콜센터(1577-7716) 운영('09.3월~)

- 전화·방문 등을 통해 외국인의 생활, 법률 등 각종 애로 사항 상담

□ 외국인 대상 지원서비스 홍보 강화

○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Fn Hub Korea News Letter를 통한 외국인의 업무·생활환경 관련 정보제공(매월)

* Newsletter 개선방안을 마련('11.12월)하여 발행횟수(격월→매월) 및 발송 대상(외국계 금융사 임직원→재외공관 및 대사관) 확대

나. 외국인의 금융거래 편의 제공

- 국내 거주 외국인의 보험거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국내 보험상품 소개 및 가입절차 안내 등을 제공하는 영문 가이드북 발간('11.11월)

□ 외국인 금융상담 데스크 홍보 강화방안 마련(11.12월)

○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구축·운영중인 외국인 금융상담 데스크*의 존재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는 방안 마련

*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 등

다. 외국인의 출입국 관련 편의 확충

- 외국인 금융투자자 출입국카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카드발급 대상 확대 및 발급기간 단축 등을 통해 외국계 금융회사 외국인 임직원의 출입국 편의 강화('12.6월)

* '11.8월~'12.7월 기간 중 34장 발급

- 금융전문인력에 대한 출입국·체류 지원서비스 제공

* '12.7월말 현재 35건의 비자발급 지원 및 질의·응답

라. 외국 금융종사자가 생활하기 편리한 환경 조성

- DMC 외국인 학교(DMC 드와이트 스쿨) 건립 추진

○ 학교 인가('12.3.30), 학교 설명회('12.4.9)

- 서울시-여의도성모병원 간 MOU 체결('11.7월)

○ 외국인 전담진료소 확대 등 외국인들을 위한 의료서비스 환경개선

- 외국인 주거단지 조성 및 생활안내 서비스 확대

○ 서초구 우면 지구 외국인 임대아파트 건립 추진('12.8월 완공 예정)

* 외국인 임대를 위한 주택공급규칙 개정 추진중

○ 글로벌 부동산중개소 추가 지정('12.6월)

* '11년 158개소 → '12년 170개소

○ 서울응급의료정보센터(1339)의 의료통역서비스 확대('11.8월)

* 3개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 5개국어(베트남어, 몽골어 추가)

- 외국인 문화 생활 인프라 강화

○ 한강 자전거도로 종합 개선계획 수립·추진('11.9월)

* 2013년까지 안전성, 편의성 등 고려 자전거도로 시설 보완

금융산업 선진화

- (금융산업 제도개선)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를 상향 조정(4%→9%)하고, 비(非)은행지주회사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의 제도개선 실시

*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를 허용하고, 해외진출시 지주회사 소속 자회사 등 사이의 공동출자·손자회사의 해외 증손회사 지배를 허용 ('09.12.)

- (수요자 중심의 금융 규제개혁) 금융규제 전수조사 및 민간 전문가 위주의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를 통해 과감한 규제완화

- (금융회사 자본확충 추진) 글로벌 금융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은행 (총 31.0조원), 보험권 (총 42조원)의 자본확충 진행

* '08.10~'10.12월 중 실적

** '08.10~'11.7월중 실적

-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인수·정리 추진) 구조조정기금 등을 통해 금융기관 부실자산을 신속하게 인수·정리하여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제고와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

* 기금설치('09.5) 이후 '11.6월까지 금융회사 구조조정 지원에 5.5조원, 기업구조조정 지원에 0.4조원 등 총 6조원을 지원

- (금융감독의 전문성 제고) 외부 금융전문가의 적극적인 영입 등을 통해 금융감독조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연수제도 강화

- (보험회사 상품개발 자율성제고) 보험상품 심사제도를 소비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규제 보다 사후심사 위주로 운영

- (한국투자공사 투자 활성화) 전술적 자산배분, 외부자산운용사 활용, 투자인력 확충 등을 통하여 운용수익률 개선하고 투자대상 자산을 PEF, 부동산, 원자재 등으로 확대

금융인프라 선진화

- ☐ (상장·퇴출제도의 국제정합성 제고) 기업 및 산업별 맞춤형 상장요건을 도입('08.10 시행)하고 횡령·배임, 분식 회계 등의 경우 이를 심사하여 상장폐지 결정
- ☐ (신용정보·평가제도 개선) 공공정보 확충의 일환으로 신용 정보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고 신용정보 관련 규제를 개선
- ☐ (회계·공시제도 개선) 국제회계기준(IFRS) 및 연결중심 공시 제도가 원활히 정착되도록 외감법 개정 등 관계법령 정비
- ☐ (외환거래 자유화) 외환거래 사후 보고제를 도입('08.5)하고 기업 해외자금통합관리 한도를 확대(1천만달러→3천만달러)
- ☐ (우리스주제도 활성화) 우리스주 매수선택권 부여한도를 폐지 하고 장기보유 세제감면 및 배당소득 비과세대상 상향 조정
- ☐ (원화 국제화의 단계적 추진) 외국인투자자의 원화수요확대를 점진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ICSD* 국제투자 통합계좌 개설 등 추진
 - * 국제예탁결제기구 (International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 ☐ (퇴직연금의 활성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퇴직계좌(IRA**)에 대해 퇴직연금 예금보호를 5천만원 한도로 적용·시행
 - * Defined Contribution **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 ☐ (금융전문인력 양성) 금융MBA 설립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있는 금융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

정부 지원에 따른 금융전문인력 양성 현황(명)

	'08년	'09년	'10년
금융MBA(KAIST) 졸업자 수	79	89	102

자산운용산업 육성

- (자본시장 국제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는 외국법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거래소와의 연계**를 통해 해외 투자자의 시장참여를 활성화

* 상장 외국법인 수 : ('07말) 2社 → ('08말) 4社 → ('09말) 10社 → ('11.6) 19社

** 시카고상업거래소(CME)연계 코스피200 선물시장 개설('09.11) 및 Eurex 연계 코스피200 옵션시장 개설('10.8)

- (채권시장 국제화) 아시아 역내 채권시장의 예탁결제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QFI*(적격 외국금융기관)제도를 신설하여 외국인의 채권거래 활성화 기반 마련

* 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

- (전문자산운용회사 활성화) 증권펀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등 특화·전문화된 회사의 자산운용시장 우선진입 허용

- (펀드판매 채널의 확대) 펀드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펀드 시장 다변화를 위해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 새마을 금고, 우체국 등을 통한 펀드판매를 허용

- (헤지펀드 도입) 헤지펀드의 단계적 도입을 위해 「적격투자자 사모펀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구조조정 시장 활성화)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이 구조조정 시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 규제완화

- (동북아 개발 금융 참여 강화)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수출금융, EDCF·남북협력기금 지원, ADB 등과의 협조융자 등 추진

- (선박금융 지원 확대)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직접대출과 대외 채무보증의 혼합지원 외항선박 구매자금 지원 등 지속 추진

금융중심지 집적여건 조성

-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확정) '09.1월 서울 여의도 지구·부산 문현 지구를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고 '10.1월 개발계획*을 확정

* 금융중심지 내 주요 기반시설 건설 계획 및 경영환경 조성 계획을 포함

- (국제금융업무센터 건설) 서울국제금융센터(SIFC)가 건설 중이며,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도 착공('10.5)

국제금융센터 건설 현황

	서울국제금융센터 (Seoul International Finance Center)	부산국제금융센터 (Busan International Finance Center)
완공예정일	2012년 12월	2014년 6월
공정률('11.7월 기준)	70%	'10.5월 착공
주요 입주 사항	오피스, 호텔, 리테일몰	오피스, 호텔, 상업시설

- 서울 및 부산국제금융센터로 외국계 금융회사 및 주요 금융기관*들의 이전 및 입주를 추진 중

* (SIFC) 딜로이트, ING 자산운용 및 ING real estate 등이 입주 계약 체결(BIFC) 한국거래소, 자산관리공사 등 9개 금융기관 입주 예정

- (금융중심지 홍보 및 금융회사 유치)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외IR* 및 금융중심지 유치 설명회 등을 개최

* '09.11월 IR (서울시-맥쿼리그룹 간 지역본부 유치 MOU, 부산시-칼리온은행 간 선박금융 MOU), '10.11월 IR(서울시-NY은행·CLSA 간 SIFC 입주 MOU)

- (금융법령의 영문화) 외국 금융회사가 국내 금융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문화 작업* 추진

* '10년말 기준 금융관련 법률 39개, 시행령 39개, 시행규칙 16개, 감독규정 36개에 대한 영문화 작업 완료

- (출입국 편의 제공) 금융인력의 사증발급절차를 간소화 하고,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국카드 발급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

9. 서민금융 제도(미소금융,햇살론)에 대한 설명 및 추진계획 및 세부사업 추진 실적

① 미소금융

□ 미소금융 설명 및 추진계획

○ '미소금융'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 등에게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Microcredit)

○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지원하고 있던 '소액서민금융재단('08.3월 출범)'을 마이크로크레딧의 중추적 기관('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 개편('09.9월)하고,

- 기업 및 은행재단·지역지점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업 수행
- 청년 자원봉사자·금융회사 퇴직자 등을 운영인력으로 활용하여 민간 자원봉사 주도로 마이크로 크레딧의 저변을 확대

○ (대출규모) 2010년부터 향후 10년간 약 2.2조원

○ (대출대상)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이자율) 연 2~4.5%

○ (자금용도) 사업운영자금(최고 2천만원), 창업자금(최고 7천만원), 무등록사업자(최고 5백만원)

□ 세부사업 추진 실적

- 재원조성 ('12.7.31. 기준) : 14,711억원 (휴면예금 6,309억원, 기부금 8,402억원)
 - 사업실적 ('12.7.31. 누계) : 총 대출취급 건수 74,776건, 총 대출취급액 6,464억원
 - 미소금융(지점) : 34,038건, 4,647억원 대출
 - 소액금융(기존 복지사업자) : 40,738건, 1,817억원 대출*
- * 소액보험 168억원 제외
- 지점 설립('12.9.4. 기준) : 전국 161개 지점 설립(출장소 29개 포함)

② 햇살론

□ 햇살론 설명 및 추진계획

- 2010년 4월 정부는 비상경제대책회의(4.1), 당·정협의(4.7)를 거쳐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
 - 그 이후 관계부처, 서민금융회사 중앙회, 지역신보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보증부대출(햇살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
- 10.7.26일부터 서민전용 대출상품 “햇살론” 본격출시
 - 대부업 등에서 30~40%대의 고금리를 부담하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10%대의 저금리 ‘햇살론’을 대출하여 금리상승기의 서민가계부담을 완화
- * “서민에게 따뜻한 햇살 같은 금융”이라는 의미의 보증부 서민대출 공동브랜드

- (대출규모) 2010년 7월말부터 향후 5년간 약 10조원

* 취급기관: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

- (대출대상)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2천6백만원 이하인 저소득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 포함), 농림어업인, 근로자(일용직·임시직 포함)

- (대출금리) 금리상한이내에서 서민금융회사가 금리를 자율결정
 - 금리상한은 조달금리(1년만기 정기예금) 변동에 따라 변동 가능

- (자금용도) 사업운영자금(최고 2천만원), 창업자금(최고 5천만원), 긴급생계자금(최고 1천만원), 대환자금(최고 3천만원)

□ 세부사업 추진 실적

- 대출실적 : 총 대출취급 건수 235,390건, 총 대출취급액 20,908억원

* '10.7.26 ~ '12.7.30까지 대출 누계 실적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

10-1. 설립이후 각 연도별 미소금융재단 기부금 모금내역

□ 연도별 기부금 모금내역 (‘12.7.31.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지정 기부금	기업권(6개)	1,050	1,000	1,000	100	3,150
	은행권(5개)	440	490	830	190	1,950
	청년고금리전 환대출용도	-	-	-	100	100
	소 계	1,490	1,490	1,830	390	5,200
일반 기부금	부실채권 정리기금	534	1,385	475	127	2,521
	기타 (기업·단체·개인 등)	275	302	77	26	680
	소 계	809	1,687	552	153	3,201
총 계		2,299	3,177	2,382	543	8,401

10-2. 전경련 회원기업별 미소금융재단 약정 내용 및 연도별 기부내역(명단 및 금액)

□ 기업별, 연도별 약정내용 및 기부내역 ('12.7.31.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기부약정 내용 (10년간)	기부 내역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삼성	3,000	300	300	400	0	1,000
현대기아차	2,000	200	200	200	0	600
SK	2,000	200	200	200	0	600
LG	2,000	200	200	200	0	600
롯데	500	50	100	0	0	150
포스코	500	100	0	0	100	200
계	10,000	1,050	1,000	1,000	100	3,150

10-3. 기타 미소금융재단 기부금 모금 내역 (기부자, 기부액)

□ 기타 기부금 모금 내역 ('12.7.31. 기준)

(단위 : 억원)

기부자	기부액	비고
지정기부금 (5개 은행*)	1,950	
청년고금리전환대출용도 (시중 17개 은행)	100	
부실채권정리기금 (시중 18개 은행)	2,521	
증권유관기관**	500	
기업·단체***	178	
개인	2	
계	5,251	

* KB, 우리, 신한, 하나, IBK

**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 금융결제원, 생명보험협회, KT 등

10-4. 연도별 지역지점 설립 내역(이름, 소재지, 대기업/금융기관) 관련

□ 연도별 지점 설립내역 : 총 161개 ('12.9.4. 현재)

○ 기업재단 (75개)

재단명	주소	설립 연도
삼성미소금융 (17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2009년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009년
	충남 아산시 온천동	2010년
	전남 목포시 석현동	2010년
	경북 경산시 중방동	2010년
	전북 전주시 덕진구	2010년
	경남 김해시 삼정동	2010년
	강원 원주시 우산동	2010년
	대구시 동구 입석동(출장소)	2010년
	부산시 금정구 서동(출장소)	2010년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출장소)	2010년
	인천 계양구 계산동	2010년
	서울 성동구 마장동	2010년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2011년
	광주 남구 백운동(출장소)	2011년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출장소)	2012년
	대전 서구 관저동(출장소)	2012년
현대차미소금융 (13개)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2009년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2010년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2010년
	광주시 서구 농성동	2010년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2010년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2010년
	경남 진주시 동성동	2010년
	대전 대덕구 오정동	2010년
	부산 북구 구포2동	2011년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출장소)	2011년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2011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출장소)	2011년
	강원도 속초시 교동	2011년

LG미소금융 (15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2009년
	서울시 강동구 천호3동	2010년
	경남 창원시 상남동	2010년
	부산 진구 부전동	2010년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2010년
	대구 북구 칠성1가	2010년
	광주 북구 두암동	2010년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010년
	서울 종로구 인의동	2010년
	경북 구미시 원평동	2010년
	부산 영도구 영선동2가(출장소)	2011년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출장소)	2011년
	대전 대덕구 대화동	2011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1가(출장소)	2012년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출장소)	2012년
포스코미소금융 (6개)	서울시 강서구 화곡8동	2009년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2010년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2010년
	인천시 동구 송림6동	2010년
	전남 광양시 시청로(출장소)	2011년
	경북 울릉군 울릉읍(출장소)	2012년
SK미소금융 (19개)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2009년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출장소)	2010년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010년
	인천시 남구 주안1동	2010년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2010년
	대전시 서구 괴정동	2010년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2010년
	경기도 광명시 광명3동	2010년
	서울 강북구 번1동	2010년
	전북 군산시 중앙로2가	2010년
	경남 통영시 북신동	2010년
	강원 동해시 발현동	2011년
	제주 제주시 이도1동	2011년
	경북 울진군 후포면	2011년
	경북 울진군 울진읍(출장소)	2011년
	충남 서산시 고운로	2011년
	경북 영덕군 영덕읍(출장소)	2011년
	부산 동래구 낙민동	2012년
	강원 삼척시 남양동(출장소)	2012년
롯데미소금융 (5개)	서울 중구 남창동	2009년
	부산시 사상구 폐법동	2010년
	전남 순천시 장천동	2010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2010년
	전남 순천시 장명로(출장소)	2012년

○ 은행재단 (53개)

재단명	주소	설립 연도
하나미소금융 (7개)	서울시 종로구 관수동	2009년
	충북 충주시 으뜸로	2010년
	대전 유성구 장대동	2010년
	경기 평택시 평택동	2010년
	충남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2010년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2010년
	충남 당진군 당진읍	2011년
KB미소금융 (7개)	대전시 중구 은행동	2009년
	서울시 도봉구 창4동	2010년
	부산시 부산진구 개금동	2010년
	인천 중구 해안동 3가	2010년
	대구 북구 관음동	2010년
	광주 동구 금남로 4가	2010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역(출장소)	2010년
우리미소금융 (9개)	서울시 중구 을지로3가	2009년
	경남 마산시 오동동	2010년
	광주시 동구 학동	2010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호동	2010년
	대구시 남구 대명4동	2010년
	부산 동구 초량3동	2010년
	서울 중랑구 신내동(출장소)	2011년
	경기 용인시 처인동	2011년
	서울 도봉구 방학동(출장소)	2012년
IBK미소금융 (21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2009년
	부천시 원미구 중동	2010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2010년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2010년
	경기 시흥시 장현동(출장소)	2010년
	서울 은평구 대조동	2011년
	부산 중구 부평동3가	2011년
	전남 여수시 중앙동	2011년
	서울 광진구 중곡동	2011년
	서울 구로구 개봉동	2011년

	대전 동구 원동	2011년
	서울 관악구 봉천동	2011년
	대구 서구 비산동	2011년
	경남 양산시 북부동	2011년
	전북 익산시 창인동	2011년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2011년
	서울 양천구 신월동	2011년
	대구 동구 방촌동	2011년
	제주 제주시 일도1동	2012년
	서울 강서구 방화동	2012년
	강원 춘천시 요선동	2012년
신한미소금융 (9개)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2009년
	부산 해운대구 재송1동	2010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2010년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2010년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가	2010년
	경남 창원시 마산 산호동	2010년
	경북 영천시 완산동	2010년
	광주 광산구 우산동	2010년
	서울 양천구 신정동(출장소)	2011년

○ 지역지점 (33개)

재단명	주소	설립 연도
충북청주지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2009년
서울은평구지점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2009년
광주서구지점	광주시 서구 양동	2009년
대구서구지점	대구시 서구 내당동	2009년
강원춘천지점	강원도 춘천시 효자1동	2009년
부산중구지점	부산시 중구 부평동	2010년
대전동구지점	대전 동구 중동	2009년
경기화성지점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2010년
대구중구지점	대구 중구 서문로2가	2010년
대구동구출장소	대구 동구 아양로	2011년
충남천안지점	충남 천안시 쌍용동	2010년
경기성남지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2010년
서울관악구지점	서울 관악구 신림2동	2010년
경북안동지점	경북 안동시 옥동	2010년
경북영주출장소	경북 영주시 영주2동	2011년
경기구리지점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2010년
부산연제구지점	부산 수영구 수영동	2010년
부산동래구출장소	부산 동래구 복천동	2012년
경남거제지점	경남 거제시 고현동	2010년
경남고성출장소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2010년
전북전주지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	2010년
서울노원구지점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2010년
경기의정부지점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2010년
경북경주지점	경북 경주시 황오동	2010년
경기광주지점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2010년
경기하남출장소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2012년
인천서구지점	인천시 서구 가정동	2010년
전북익산지점	전북 익산시 창인동1가	2010년
서울동작구지점	서울 동작구 사당동	2011년
서울성북구지점	서울 동대문구 동소문로3가	2012년
강원태백지점	강원 태백시 황지동	2012년
경기동두천지점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2012년
서울성동구지점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2012년

10-5. 연도별 미소금융 대출 현황 (대출금, 대출인원, 1인당 평균 대출금, 평균 대출 수수료)

□ 연도별 미소금융* 대출 현황

* 미소금융지점을 통한 미소금융

(‘12.7.31. 기준, 단위 : 건, 억원)

구분	대출건수	대출금액	1인당 평균대출액
2010년	7,770	795	0.10
2011년	16,489	2,548	0.15
2012년	9,779	1,304	0.13
계	34,038	4,647	0.14

※ 대출 수수료는 해당사항 없음

10-6. 연도별 미소금융 대출금, 상환(금액, 율) 및 손실(율)현황, 기금 손실내역

10-7. 연도별, 시도별, 지점별 대출 현황, 상환(금액, 율) 및 손실(율) 현황, 기금손실 내역

□ 연도별, 지점별 대출현황, 상환(금액, 율) 및 손실(율) 현황, 기금 손실내역

○ 대출 현황

(‘12.7.31. 기준, 단위 : 건, 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누계	
	대출건수	대출액	대출건수	대출액	대출건수	대출액	대출건수	대출액
기업재단	4,133	466	9,924	1,513	5,552	733	19,609	2,712
은행재단	2,719	259	5,137	894	2,898	439	10,754	1,592
지역지점	918	70	1,428	141	1,329	132	3,675	343
계	7,770	795	16,489	2,548	9,779	1,304	34,038	4,647

○ 상환(금액, 율) : 상환금액 및 상환율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연체율*만 관리함

* 아래 ‘7-10’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참조

○ 손실(율), 기금손실 내역 : 대출금에 대한 대손상각 처리는 없으며, 운영비는 기금의 이자수익 범위 내에서 충당

→ 기금손실 내역은 없음

※ 시도별로는 별도 관리하지 않음

10-8. 각 지점별 대출서류 목록 및 대출서류 평가(매뉴얼)

□ 대출(징구) 서류

※ 전체 징구 서류 중 대출 종류 및 신청인 상황에 맞는 서류만 징구

구분		구비서류
기본서류		<input type="checkbox"/> 대출상담 및 차입신청서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input type="checkbox"/> 신분증 <input type="checkbox"/> 소득증빙서류 <input type="checkbox"/> 재산관련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상가·주택 임대차계약서 ○ 자동차등록증 등 <input type="checkbox"/>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활용 동의서 <input type="checkbox"/> 신용정보회사의 신용보고서(필요시) <input type="checkbox"/> 금융거래확인서(필요시) <input type="checkbox"/>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필요시) <input type="checkbox"/> 기타 필요서류
추가서류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및 창업임차자금	<input type="checkbox"/> 컨설팅결과보고서(최근 3월이내 발급분) <input type="checkbox"/> 창업교육수료증(최근 3월이내 발급분)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input type="checkbox"/> 사업장임대차계약서(현재·재계약) <input type="checkbox"/> 사업장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input type="checkbox"/> 프랜차이즈가맹계약서
	운영자금 및 시설개선자금	<input type="checkbox"/> 컨설팅결과보고서(최근 3월이내 발급분)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종 1년간/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input type="checkbox"/> 사업장임대차계약서(현재·재계약) <input type="checkbox"/> 자금용도 및 활용 계획서(필요시)
	무등록사업자 지원자금	<input type="checkbox"/> 무등록사업자확인(진술)서

□ 대출 프로세스 (대출서류 평가 관련)

대출상담	미소금융지점 ◦상담, 소요자금 등 1차 심사
↓	
지원적격검토	미소금융지점 ◦신용등급, 연체여부, 중복지원여부
↓	
컨설팅 상담·신청	소상공인진흥원 ◦컨설팅 상담신청, 컨설팅결과보고서 발급
↓	
차입신청	미소금융지점 ◦신청접수
↓	
심사	미소금융지점 ◦적격여부 검토, 심사, 전산등록
↓	
지원결정	미소금융지점 ◦자금지원여부 결정(융자위원회)
↓	
약정체결	미소금융지점 ◦약정서 및 계약서 체결, 대출금 지급 신청 접수
↓	
대출실행	미소금융지점 / 미소금융중앙재단, 기업·은행재단 사무국 ◦대출금 지급 신청(미소금융지점) ◦대출금 지급(미소금융중앙재단(지역지점 대출 시), 기업·은행재단 사무국)
↓	
사후관리	미소금융지점 ◦원리금 청구 및 회수, 연체관리 ◦자금관리, 회계처리

10-9. 연도별 복지사업자 지정현황(자체설립 지역지점, 기업 및 은행 설립지점, 민간사업자 구분(각 지점의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미소금융지점 ('12.9.4. 현재)

○ 기업 및 은행재단 복지사업자 (11개)

구분	복지사업자명	복지사업자 선정연도	대표자	주소(사무국)	전화번호
기업 재단 (6개)	삼성미소 금융재단	2009년	김상항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02-522-8762
	현대차미소 금융재단	2009년	정태영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가	02-361-6030
	LG미소 금융재단	2009년	조명재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02-6929-0522
	포스코미소 금융재단	2009년	박기홍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02-553-3593
	SK미소 금융재단	2009년	신현철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070-7606-1142
	롯데미소 금융재단	2009년	박상훈	서울시 중구 남창동	02-757-3645
은행 재단 (5개)	하나미소 금융재단	2009년	김종준	서울시 종로구 환수동	02-2267-0191
	KB미소 금융재단	2009년	민병덕	서울시 도봉구 창동	02-3297-3745
	우리미소 금융재단	2009년	이순우	서울시 중구 을지로가	02-2275-1752
	IBK미소 금융재단	2009년	조준희	경기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031-485-4690
	신한미소 금융재단	2009년	서진원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032-508-5095

○ 지역지점 복지사업자 (28개)

복지사업자명	복지사업자 선정연도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충북청주지점	2009년	박노성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043-225-0043
서울은평구지점	2009년	박영제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02-352-0021
광주서구지점	2009년	김재철	광주시 서구 양동	062-352-1551
대구서구지점	2009년	박성동	대구시 서구 내당동	053-522-0032
강원춘천지점	2009년	박의범	강원도 춘천시 효자1동	033-255-0046
부산중구지점	2010년	정진욱	부산시 중구 부평동	051-255-0005
대전동구지점	2009년	이홍근	대전 동구 중동	042-242-0381
경기화성지점	2010년	장동호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031-267-0581
대구중구지점	2010년	김석동	대구 중구 서문로2가	053-252-6408
충남천안지점	2010년	정낙철	충남 천안시 쌍용동	041-571-2713
경기성남지점	2010년	김영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031-721-2104
서울관악구지점	2010년	남상만	서울 관악구 신림2동	02-884-1040
경북안동지점	2010년	박병섭	경북 안동시 옥동	054-855-3022
경기구리지점	2010년	김동주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031-552-2155
부산연제구지점	2010년	이정우	부산 연제구 연산동	051-852-3445
경남거제지점	2010년	오정림	경남 거제시 고현동	055-632-6137
전북전주지점	2010년	진대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	063-285-4031
서울노원구지점	2010년	김천정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02-936-1008
경기의정부지점	2010년	신정균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031-837-2194
경북경주지점	2010년	홍우표	경북 경주시 황오동	054-748-3084
경기광주지점	2010년	김홍규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031-763-2087
인천서구지점	2010년	신덕균	인천시 서구 가정동	032-573-5013
전북익산시점	2010년	이재갑	전북 익산시 창인동1가	063-852-4044
서울동작구지점	2011년	홍준식	서울 동작구 사당동	02-592-1674
서울성북구지점	2012년	박한철	서울 동대문구 동소문동3가	02-924-1425
강원태백지점	2012년	심재영	강원 태백시 황지동	033-553-3744
경기동두천지점	2012년	김관목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031-858-2066
서울성동구지점	2012년	성배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02-461-1783

□ 민간 복지지사업자 (‘12.9.4. 현재)

구분	복지 사업자명	복지사업자 선정연도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창업 지원	사회연대은행	2008년	김성수	서울 중구 충무로 2가	02-2274-9637
	신나는조합	2008년	정명기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02-365-0220
	해피월드 복지재단	2009년	정성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031-924-8815
	나눔과기쁨	2010년	서경석	서울시 중구 신당3동	070-7585-7931
	함께일하는 사람들	2010년	김대성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4가	02-716-5055
	부산복지개발원	2010년	김수영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051-868-5866
사회적 기업 지원	함께일하는재단	2008년	송현섭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02-330-0752
	열매나눔재단	2009년	김동호	서울시 중구 남산동2가	02-2265-0718
	민생경제정책 연구소	2009년	김진홍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02-734-6503

10-10. 연도별, 시도별, 지점별 월별 연체율 현황

□ 연도별, 지점별 월별 연체율*

* 납입대상자 중 원금 또는 이자를 30일 이상 연체한 자의 연체금액 기준

(단위 : %)

구분	2010년도				2011년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기업	0.5	0.5	0.5	0.7	0.9	1.4	1.7	1.7	1.6	1.9	2.1	2.4
재단	2.6	2.4	1.9	2.2	2.3	2.9	3.5	2.9	3.0	3.3	3.1	3.7
은행	2.6	2.4	1.9	2.2	2.3	2.9	3.5	2.9	3.0	3.3	3.1	3.7
지역	1.4	1.7	3.1	5.2	6.3	5.4	7.0	6.6	6.5	6.3	6.2	5.8
지점	1.4	1.7	3.1	5.2	6.3	5.4	7.0	6.6	6.5	6.3	6.2	5.8
전체	1.4	1.2	1.2	1.6	1.8	2.1	2.7	2.4	2.4	2.6	2.6	3.0

구분	2011년도				2012년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기업	2.5	2.7	2.8	2.8	3.0	3.3	3.5	3.6	3.7	3.8	4.1
재단	2.5	2.7	2.8	2.8	3.0	3.3	3.5	3.6	3.7	3.8	4.1
은행	3.7	3.9	3.5	3.3	3.8	4.0	4.3	4.4	4.6	4.3	4.7
재단	3.7	3.9	3.5	3.3	3.8	4.0	4.3	4.4	4.6	4.3	4.7
지역	5.6	5.8	5.7	5.6	7.0	7.1	7.4	8.3	9.1	8.9	8.9
지점	5.6	5.8	5.7	5.6	7.0	7.1	7.4	8.3	9.1	8.9	8.9
전체	3.1	3.3	3.3	3.1	3.6	3.8	4.0	4.2	4.4	4.4	4.7

※ 시도별로는 별도 관리하지 않음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

11. 국내금융자격증 제도 현황(은행)

은 행 과

□ 금융연수원 주관 금융자격증 제도 현황

구분	법적 근거	시험 실시 횟수	응시자수 (명)	합격자수 (명)	등록자수
신용분석사	- 자격기본법 제19조(민간 자격의 공인) - 한국금융연수원 내부규정	연3회	1차:295	1차:39	1,969명
			2차:509	2차:166	
			3차:497	3차:125	
여신심사역	"	연2회	1차:69	1차:26	260명
			2차:78	2차:31	
국제금융역	"	연2회	1차:85	1차:24	376명
			2차:84	2차:33	
자산관리사 (FP)	"	연3회	1차:4,160	1차:1,005	18,316명
			2차:4,561	2차:873	
			3차:4,026	3차:739	
CRA(신용 위험분석사)	"	연1회	1차:207	1차:26	222명

※ 응시자수 · 합격자수는 '11년 기준, 등록자수는 '12.6월 기준 현황임

구분	법적 근거	시험 실시횟수	응시자수 (명)	합격자수 (명)	등록자수
외환전문역 I종	- 자격기본법 제19조(민간 자격의 공인) - 한국금융연수원 내부규정	연3회	1차:886	1차:334	3,850명
			2차:766	2차:212	
			3차:1,354	3차:289	
외환전문역 II종	"	연3회	1차:517	1차:133	3,151명
			2차:473	2차:142	
			3차:715	3차:272	
은행텔러	- 한국금융연수원 내부규 정	연3회	1차:993	1차:312	11,732명
			2차:1,032	2차:314	
			3차:1,377	3차:277	
영업점컴플라 이언스오피서 (은행)(증권) (보험)	"	연2회	1차:625	1차:506	6,728명
			2차:445	2차:313	

※ 응시자수·합격자수는 '11년 기준, 등록자수는 '12.6월 기준 현황임

보 험 과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국내금융자격증 제도 현황(보험)>

구분	법적 근거	실시 기관	시험 실시횟수	응시자수 (명)	합격자수 (명)	등록수
보 험 계리사	보험업법 제182조 보험업법시행령 제101조제2항 보험업감독업무시행 세칙 제7-1조제1항	보 험 개발원	연 1회	1차:1,563	1차:716	1,007명
				2차:937	2차:120	
손 해 사정사	보험업법 제186조 보험업법시행령 제101조제2항 보험업감독업무시행 세칙제7-1조제1항		연 1회	1차:5,325	1차:1,317	7,111명
				2차:2,269	2차:428	
보 험 중개사	보험업법 제89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 세칙제7-1조제2항		연 1회	1,023	247	99개사

※ 응시자수 · 합격자수는 '11년 기준, 등록자수는 '12.6월 기준 현황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자격제도>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관련 자격제도(주요직무종사자의 등록·관리)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중

※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별첨

<별첨 : 금융투자협회 제출자료>

금융투자업 자격제도 현황 : 총 자격 7종, 시험 7종(12.9.3 현재)

가. (필수자격: 자격 7종, 시험 5종)

- ① (펀드투자상담사) 투자자를 상대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펀드)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

○ 펀드투자상담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② (증권투자상담사) 투자자를 상대로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제외), MMF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증권투자상담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③ (파생상품투자상담사) 투자자를 상대로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

○ 파생상품투자상담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④ (투자상담관리인력) 금융투자회사의 지점 또는 영업소 등에서 해당 지점 또는 영업소 등에 소속된 투자상담사 및 투자권유대행인을 관리·감독하는 자

- ⑤ (투자자산운용사) 집합투자재산, 신탁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자

○ 투자자산운용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⑥ (금융투자분석사)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거나 이를 심사·승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 금융투자분석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⑦ (위험관리인력) 재무위험 등을 일정한 방법에 의해 측정, 평가 및 통제하여 해당 회사의 재무위험 등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자

나. (자율자격: 시험 2종)

- ① (재무위험관리사) 금융투자회사에서 금융투자상품 등의 운용과 관련된 재무위험을 측정·평가·통제하여 관리하는 자
- ② (증권분석사) 전문적인 기업가치의 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유용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자

【전문인력별 업무범위·시험 현황】

주요직무종사자	업무범위	자격시험
①펀드투자상담사	펀드의 투자권유·자문	i.펀드투자상담사시험
②증권투자상담사	증권, MMF의 권유·자문	ii.증권투자상담사시험
③파생상품투자상담사	파생상품 등의 권유·자문	iii.파생상품투자상담사시험
④투자상담관리인력	권유인력 관리·감독	-
⑤투자자산운용사	집합·일임·신탁재산 운용	iv.투자자산운용사시험
⑥위험관리인력	재무위험 관리	-
⑦금융투자분석사	조사분석자료 작성	v.금융투자분석사시험
(자율자격시험)		vi.재무위험관리사시험
		vii.증권분석사시험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

12. 인터넷 뱅크 제도 도입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금융위는 '08.12.29일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내용을 포함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하였으나,

* 소수의 영업점 또는 영업점 없이 은행업무의 대부분을 인터넷, CD, ATM 등의 전자매체를 통해 영위하는 은행으로서, 개정법률안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운영하는 은행”으로 규정

- 국회 논의과정에서 금융위기 상황,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 증대 문제, 소비자보호 등의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되어,

* 이외에도 은행 거래 중 온라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82.5%, '08년 기준) 고려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가능성, 금융실명법에 따른 법적제약 등의 문제 제기

- '10.4.23일 정무위가 동 내용을 삭제한 「은행법」 개정안 수정대안을 의결함에 따라 도입 추진 중단

- 향후 재추진을 위해서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등 제반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김 기 준 의원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

1. 금융위원회와 서울신문사(프레스센터)간의
사무실 임대 계약서 사본(계약 미체결일 경우,
현재까지 작성된 계약서 안 사본)
2. 현재 금융위원회 사무실(금융감독원 건물)임대
계약서 사본

☐ 별도 열람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

3. 금융위원회 사무실 이전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 발송한 예비비 편성 요청 공문 사본

☐ 별도제출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

4. 서민금융정책(미소금융, 햇살론)과 관련, 현재 지원대상자의 자격 및 제도 시행이후 자격 변동내역

□ 미소금융 지원대상 변동내역

- 미소금융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

시기	지원대상	비고
'09.12~ '10.6.	○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소득·저신용 계층	
'10.7	○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계층 ○ <u>대출신청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자</u>	
'10.8 ~ 현재	○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계층 - <u>다만, 신용등급 5~6등급에 해당(코리아크레딧뷰로 기준)되더라도 재평가하여 7등급 이하면 지원대상에 포함</u>	

□ 햇살론 지원대상 변동내역

시기	지원대상*	비고
'10.7.~ '10.9.	○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 포함), 농림어업인, 근로자(일용직·임시직 포함)	
'10.9	○ 신용 6등급 이하라도 연소득 4천만원이하만 대출가능하도록 제한	
'10.11	○ 근로자 지원요건 중 '3개월이상 계속근로'를 '최근 3개월간 매달 10일 이상 근로'인 경우로 명확화 하여 이직 등 단기간 근로 공백자 지원, 90일 이내의 출산휴가는 근로기간으로 인정	
'11.2	○ 저소득자 범위를 '연소득 2천6백만원'으로 상향 조정	
'11.9~현재	○ 대환대출 실시 - 추진내용 : 대부업체, 캐피탈사 등에서 대출한 연이율 20% 이상 고금리채무를 저금리의 햇살론으로 전환 - 대출대상 : 고금리 채무를 6개월이상 정상상환 중인 자 - 대출한도 : 3,000만원 이내에서 고금리채무 해당액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

5. 서민금융정책(미소금융, 햇살론)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의 분기별 대출금액 - 취급금융기관, 사업자별 대출금액 별도 제출

□ 미소금융 재단별, 분기별 대출금액

(단위 : 억원)

구분	'10.1분기	'10.2분기	'10.3분기	'10.4분기	'11.1분기	'11.2분기	'11.3분기	'11.4분기	'12.1분기	'12.2분기	계
기업재단	14	27	127	297	330	510	318	355	330	282	2,590
은행재단	17	23	62	159	137	222	267	269	196	186	1,538
지역지점	16	12	22	19	23	31	41	46	54	58	322
계	47	62	211	475	490	763	626	670	580	526	4,450

※ '10. 1. 5, 미소금융 지점 첫 대출

□ 미소금융 재단별, 분기별 대출금액

(단위 : 억원)

구분	'10.1분기	'10.2분기	'10.3분기	'10.4분기	'11.1분기	'11.2분기	'11.3분기	'11.4분기	'12.1분기	'12.2분기	계
기업재단	14	27	127	297	330	510	318	355	330	282	2,590
은행재단	17	23	62	159	137	222	267	269	196	186	1,538
지역지점	16	12	22	19	23	31	41	46	54	58	322
계	47	62	211	475	490	763	626	670	580	526	4,450

※ '10. 1. 5, 미소금융 지점 첫 대출

□ 햇살론 취급기관별 대출금액

(단위 : 억원)

구분	'10. 3/4	4/4	'11. 1/4	2/4	3/4	4/4	'12. 1/4	'12. 2/4	계
새마을금고	3,541	1,494	525	458	435	253	206	295	7,207
농협	3,581	1,247	337	239	198	160	117	158	6,037
신협	1,919	962	389	354	351	312	252	274	4,813
저축은행	516	296	122	174	227	214	236	273	2,058
수협	160	77	20	14	10	7	3	3	294
산림조합	39	27	9	9	10	8	6	4	112
계	9,756	4,103	1,402	1,248	1,231	954	820	1,007	20,520

※ '10. 7. 26, 햇살론 출시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

6. 서민금융정책(미소금융, 햇살론)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의 분기별 연체율 및 연체금액 - 취급금융기관, 사업자별 현황 별도 제출

□ 미소금융 재단별, 분기별 연체율

(단위 : %)

구분	'10.3분기	'10.4분기	'11.1분기	'11.2분기	'11.3분기	'11.4분기	'12.1분기	'12.2분기
기업재단	0.0	0.0	0.4	0.7	1.3	1.7	2.2	2.7
은행재단	0.5	0.7	1.0	1.4	1.9	2.0	2.6	3.2
지역지점	0.0	1.1	2.7	3.8	4.4	3.9	4.3	5.5

□ 미소금융 재단별, 분기별 연체금액

(단위 : 억원)

구분	'10.3분기	'10.4분기	'11.1분기	'11.2분기	'11.3분기	'11.4분기	'12.1분기	'12.2분기
기업재단	-	0.1	2.3	7.4	17.1	25.3	36.8	48.0
은행재단	0.3	1.2	2.9	6.3	13.2	18.2	26.4	35.2
지역지점	-	0.5	1.9	3.8	5.7	6.3	8.0	12.5
계	0.3	1.8	7.1	17.5	36	49.8	71.2	95.7

□ 미소금융 재단별, 분기별 연체율

(단위 : %)

구분	'10.3분기	'10.4분기	'11.1분기	'11.2분기	'11.3분기	'11.4분기	'12.1분기	'12.2분기
기업재단	0.0	0.0	0.4	0.7	1.3	1.7	2.2	2.7
은행재단	0.5	0.7	1.0	1.4	1.9	2.0	2.6	3.2
지역지점	0.0	1.1	2.7	3.8	4.4	3.9	4.3	5.5

□ 미소금융 재단별, 분기별 연체금액

(단위 : 억원)

구분	'10.3분기	'10.4분기	'11.1분기	'11.2분기	'11.3분기	'11.4분기	'12.1분기	'12.2분기
기업재단	-	0.1	2.3	7.4	17.1	25.3	36.8	48.0
은행재단	0.3	1.2	2.9	6.3	13.2	18.2	26.4	35.2
지역지점	-	0.5	1.9	3.8	5.7	6.3	8.0	12.5
계	0.3	1.8	7.1	17.5	36	49.8	71.2	95.7

☐ 헷살론 분기별 대위변제율

(단위 : %)

구분	' 11년			' 12년	
	1분기	2분기	3분기	1분기	2분기
대위변제율	0.2	1.7	3.0	4.8	6.8
					8.4

※ 취급기관별 대위변제율은 지표로 별도 집계하고 있지 않음

☐ 헷살론 분기별 대위변제금액

(단위 : 억원)

구분	' 11년			' 12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대위변제금액	61	232	449	760	1,133
					1,473

※ 취급기관별 대위변제금액은 지표로 별도 집계하고 있지 않음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

7. 서민금융정책(미소금융,햇살론)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분기별 상환율 및 상환금액
- 취급금융기관, 사업자별 현황 별도 제출

- 미소금융, 햇살론은 연체율 외에 상환실적(상환율, 상환금액)을
지표로 별도 관리하지 않음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

8. 서민금융(미소금융,햇살론) 취급 금융기관, 사업자 현황 및 취급자격

① 미소금융 취급 사업자 현황 및 취급자격

□ 미소금융 복지사업자 현황 (12.6월말 현재)

- 미소금융 지점 : 기업재단 6개 (삼성·현대차·LG·SK·포스코·롯데 미소금융재단), 은행재단 5개 (KB·우리·신한·하나·IBK 미소금융재단), 지역지점 24개* (서울관악구지점, 경북안동지점, 경기구리지점, 부산연제구지점, 경남거제지점, 전북전주지점, 서울노원구지점, 경기의정부지점, 경북경주지점, 경기광주지점, 인천서구지점, 전북익산지점, 서울동작구지점)

* 출장소 제외

- 기존 복지사업자 (소액금융) : 창업지원 분야 8개 (해피월드복지재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소상공인진흥원, 사회연대은행, 신나는조합, 나눔과기쁨, 함께일하는사람들, 부산복지개발원), 사회적기업지원 분야 3개 (열매나눔재단, 민생경제정책연구소, 함께일하는재단), 신용회복지원 분야 2개 (신용회복위원회, 한마음금융), 전통시장 소액대출 전국 115개 기초자치단체 (16개 시도 內)

- 기존 복지사업자 (소액보험) : 생명보험사 6개사 (교보생명보험(주), 대한생명보험(주), 삼성생명보험(주), 신한생명보험(주), 알리안츠생명보험(주), 우리아비바생명(주)), 손해보험사 7개사 (동부화재해상보험(주), 롯데손해보험(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삼성화재해상보험(주), 한화손해보험(주), 현대해상화재보험(주), LIG손해보험(주))

□ 복지사업자 자격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 ①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 ②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③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을 정관의 사업목적에 포함하고 있는 자
-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햇살론 취급 금융기관

- 단위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

9. 서민금융정책 제도 시행 이후 법률, 규칙 위반 등으로 징계 조치된 금융기관, 사업자명 및 징계 사유, 징계조치내역

□ 복지사업자명 : 민생포럼대부, (사)사람사랑 (이상 '사회적기업지원 분야')

□ 징계사유

- 복지사업자 대표(현재, 구속기소)가 재단의 지원금 중 일부를 횡령하여 개인용으로 활용하는 한편, 거짓신청으로 재단 지원금을 수령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사문서 위조), 휴면예금관리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위반(복지사업자의 '지원금 용도의 사용' 및 '지원금 거짓신청')

□ 징계조치

- 채권보전 및 지원금 회수조치 : 사고 복지사업자(민생포럼대부, (사)사람사랑)에 대한 “복지사업자 지원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요청” 시행 (‘11.12.)
- 사고 복지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금융위원회, 복지사업자당 각 500만원, ‘12.7.)

※ 참고 -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복지사업자의 의무) ① 복지사업자는 그 지원금을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을 수행하는 용도 외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에 의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중략)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생략)

2. 제25조 제1항 위반하여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에 의하여 지원금의 교부를 받은 복지사업자

3.~4.(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 징수한다.

(이하생략)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

10. 미소금융재단 설립 이후 금융기관별 휴면예금 출연 현황

- 금융기관별 출연일시, 출연금, 출연한 휴면예금 계좌수

(단위 : 천건, 억원)

□ 휴면에·보험금 출연 현황 ('12.6월말 현재)

구분	기관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진수	금원	진수	금원	진수	금원	진수	금원	진수	금원	진수	금원
휴면 예금	한국산업은행	15		7	6	2		2		3		1	32
	기업은행	218	115	276	48	56	266	61	260	57	1,277	337	
	국민은행	991	338	479	264	482	158	283	89	222	81	2,428	950
	한국외환은행	341	129	420	53	595	54	360	109	255	62	1,971	407
	수협중앙회	24	22	20	4	14	5	11	5	66	12	134	48
	농협중앙회	896	272	543	201	424	121	400	100	343	91	2,606	785
	우리은행	317	166	308	65	239	61	246	60	176	51	1,307	402
	SC제일은행	148	96	546	74	165	37	150	37	181	45	1,191	289
	한국씨티은행	137	40	253	23	224	39	186	31	147	49	947	182
	대구은행	125	46	89	10	53	16	612	45	185	28	1,063	146
	부산은행	99	30	114	20	126	22	148	21	64	19	552	113
	광주은행	45	5	114	5	69	8	470	20	0	0	689	39
	제주은행	8	1	3	0	3	0	3	0	2	0	19	2
	전북은행	58	20	35	5	32	4	32	4	54	7	212	40
	경남은행	61	12	55	6	34	3	29	3	20	2	199	26
	HSBC	0	1	1	1	1	1	1	1	2	1	6	4
	하나은행	396	202	220	39	162	26	144	19	154	27	1,077	316
	신한은행	370	242	508	74	286	42	204	35	203	35	1,570	428
	소계	4,249	1,765	3,931	894	3,164	657	3,549	641	2,339	570	17,291	4,590
	계	1,187	19	25	31	20	12	18	1	25	1	189	28
	총계	4,336	1,785	4,016	925	3,184	669	3,567	642	2,364	571	17,480	4,618

(단위 : 천건, 억원)

구분	기안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체	
		진수	금인	진수	금인	진수	금인	진수	금인	진수	금인	진수	금인
유형별 보험 금	우체국보험	0	0	11	11	2	2	6	6	15	7	31	31
	대한생명	35	106	5	26	28	26	17	36	7	32	92	227
	알리안츠생명	50	64	21	19	10	17	7	19	0	0	88	118
	삼성생명	55	165	8	40	35	42	29	60	34	62	160	370
	흥국생명	20	39	5	9	24	15	23	23	0	0	72	86
	교보생명	84	105	6	32	46	63	32	71	28	89	196	359
	신한생명	33	51	24	17	33	20	38	19	0	0	127	108
	독심자생명	2	6	0	1	1	1	1	1	0	0	4	10
	KB생명	0	0	0	1	0	1	0	1	0	2	0	6
	우리아미바생명	3	7	0	1	5	6	3	7	3	8	15	29
	금호생명	19	31	10	13	36	23	2	28	0	0	66	94
	미래에셋생명	22	52	36	31	34	28	26	38	31	58	150	207
	라이나생명	22	13	7	6	66	18	23	12	18	14	136	63
	AIA생명	8	7	5	5	50	9	42	13	26	16	131	50
	푸르덴셜생명	1	1	0	1	2	2	1	2	0	0	4	7
	ING생명	3	15	2	12	19	14	21	26	29	20	73	87
	하나HBC생명	0	0	0	1	0	1	1	2	0	0	1	4
	동부생명	3	12	1	4	9	12	8	15	0	0	21	43
	메트라이프생명	3	6	1	4	6	7	6	8	12	11	29	36
	중앙생명	24	22	4	7	37	15	21	20	0	0	86	64
	PCA생명	0	1	0	1	0	0	0	1	0	0	0	3
	뉴욕생명	0	0	0	0	0	1	0	1	0	0	1	2
	SH&C생명	0	0	0	4	1	3	1	3	1	4	3	14
손해 보상	소계	387	705	147	247	445	329	303	412	205	324	1,488	2,018
	메리츠화재	6	33	2	5	29	7	32	14	40	16	108	74
	한화손해보험	8	30	2	6	11	13	13	9	15	8	49	66
	롯데손해보험	3	13	0	1	1	2	2	5	0	0	7	21
	그린손해보험	2	11	0	3	1	2	4	2	0	0	8	18
	흥국생명화재	4	10	2	6	16	6	38	10	0	0	59	32
	삼성화재	15	49	18	35	12	10	12	13	18	17	75	124
	현대해상	7	20	3	13	28	12	33	15	35	15	105	74
손해 보상	LIG손해보험	4	28	6	13	20	26	27	28	31	17	88	111
	동부화재	3	20	19	14	37	11	30	13	27	18	115	77
소계		4,775	2,704	1,421	1,240	3,783	1,076	4,055	1,162	2,734	988	19,563	7,170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

11. 미소금융재단 설립 이후 임원변동 현황

- 성명, 직책, 나이, 주요 학력 및 경력, 추천자

□ 중앙재단 임원 현황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 이사장을 포함한 12명의 이사와 감사 1인으로 구성

- 이사장(1) :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
- 이사(11) :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은행연합회·생보협회·손보협회 회장(이상 당연직 이사), 금융위 추천 1인, 보건복지부 추천 2인, 노동부 추천 1인 (이상 임명직 이사)
- 감사(1) : 금융위원회에서 임명

□ 중앙재단 임원변동 현황

- 당연직이사를 제외하고, 재단 설립 이후 이사장만 변동사항 있음 (김병주 前 이사장* → 김승유 現 이사장, 2009.2.11.)

* 주요 약력 : 1939년생, 경북고·서울대·프린스턴대 수학,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등 역임

※ <참고> 미소금융중앙재단 임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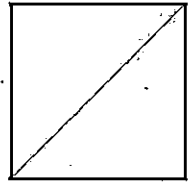
구분	성명	직책(유형)	주요 학력 및 경력	추천자(임명자)
이사장	김승유 (만68세)	임명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고, 고려대 전)하나금융지주 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위원장 제청 (대통령 임명)
이사	신제운 (만54세)	당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휘문고, 서울대 전)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 현)기획재정부 1차관 	(해당사항 없음)
이사	손건익 (만56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창고, 국민대 전)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현) 보건복지부 차관 	
이사	이재갑 (만54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창고, 고려대 전)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현) 고용노동부 차관 	
이사	추경호 (만52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성고, 고려대 전)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현)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사	박병원 (만60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고, 서울대 전)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현)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이사	김규복 (만61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고, 서울대 전)재경부 기획관리실장 현) 생명보험협회 회장 	
이사	문재우 (만56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성고, 원광대 전)금융감독원 감사 현) 손해보험협회 회장 	

구분	성명	직책(유형)	주요 학력 및 경력	추천자(임명자)
이사	김공진 (만65세)	임명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주고, 성균관대 전)전국은행연합회 부회장 전)휴먼예금관리재단 설립위원장 	· 금융위원회 임명
이사	이성규 (만50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려대, 런던대학원 정치경제학 박사 전)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현)서울시립대사회복지학과 교수 현)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 보건복지부 장관 추천 (금융위원회 임명)
이사	최균 (만49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대 사회복지학 서울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전)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회 의원 현)한림대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 	· 보건복지부 장관 추천 (금융위원회 임명)
이사	조영복 (만54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대 경영학 계명대학원 경영학 박사 현)부산대 경영학부 교수 	· 고용노동부 장관 추천 (금융위원회 임명)
감사	황덕남 (만54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여고 서울대 법학과 전)서울고등법원 판사 전)세계법무법인 변호사 현)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 금융위원회 임명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

12. 미소금융재단 2008~2012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붙임'자료 참조



의안번호	08-01-01
의결 연월일	2008. 5. 2. (제 1 차)

의결사항

2008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제출자	후면예금관리재단 이사장
제출연월일	2008. 5. 2.

1. 의결주문

“2008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휴면예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 및 운용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금자 보호, 서민생활의 안정 및 복지 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사업계획안

1) 복지사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및 감독

☐ 저소득층 창업·취업 지원

- NGO형 대안금융기관 등의 사업성과와 사업수행능력 등을 공정·투명하게 검토하여 선정·지원
- 재단은 복지사업자에게 무이자로 대출하고 복지사업자는 수수료 수준의 이자를 부과하여 대출(1인당 대출한도 : 50백만원)

☐ 저소득층 교육·의료비 등 생활안정자금 지원

- 서민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방식과 신용보증제도 활용 방식 등을 병행(1인당 대출한도 : 5백만원)
- 서민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의 경우 은행 신용대출 금리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금리 부과

- 신용보증제도 활용 방식의 경우 20%의 금리상한을 설정하되 신용등급별로 보증비율을 달리 적용

☐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 채무재조정 기관 등의 소액신용대출 프로그램에 재원 지원
- 재단은 신용회복지원 사업자에게 무이자로 지원하고, 신용회복지원 사업자는 수수료 수준의 이자를 부과하여 대출 (1인당 대출한도 : 5백만원)

☐ 저소득층 보험계약 체결·유지 지원

-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지원
- 보험료 지원은 그 특성상 무상성격인 점을 감안, 보험권 출연액의 이자수익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 복지사업자 감독(공통)

- 복지사업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도덕적 해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감독

2) 원권리자 보호에 충실

☐ 휴면예금 출연정보 조회 및 지급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085월말까지)

☐ 원권리자 지급청구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급유보금을 확보(사업초기인 금년에는 출연금의 75% 정도를 유보)

3) 자산운용 및 관리

- ☐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을 종합 고려하여 운용하되, 사업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외부자산운용기관에 위탁하여 운용

4) 홍보활동 강화

- ☐ 금융기관 등의 자발적인 출연·기부를 지속적으로 유지·확대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 등 제반 분위기 조성
- ☐ 출연기관, 복지사업자,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 연구용역 등을 통해 사업 결과를 점검하고 보완·발전방안 모색

5) 재원조달 규모 및 사업별 배분방안

- ☐ 휴면예금 출연규모(추정)

- 은행권 : 약 1,400억원

- 보험권 : 약 600억원

- 계 : 약 2,000억원

※ '08. 12월말까지 원권리자에 대한 예상지급액(600억원 수준)을 감안한 잔액
규모 추정 : 약 1,400억원

- ☐ 은행권 출연금은 소액금융지원 사업, 보험권 출연금은 소액보험지원 사업에 배정(재단법에 구분계리토록 규정)

- '08년(하반기) 배분안

- 소액금융지원 사업 : 180억원

- 소액보험지원 사업 : 30억원

※ 사업별 배분액은 실제 출연규모 및 사업추진 추이를 보아가며 적의 대응

나 예산안

1) 예산 편성 기준

☐ 예산편성은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 등을 참고함

- 예산총칙에 수입예산은 은행출연금, 보험출연금으로 구분하고, 지출예산은 은행사업비(소액금융지원사업), 보험사업비(소액보험지원사업), 재단운영비로 구분하여 예산운용원칙을 규정

※ 「휴면예금관리재단의설립등에관한법률」에 휴면예금중 은행출연금과 보험출연금은 구분계리토록 규정

2) 예산 편성 내용

☐ 수입 예산 : 200,000,000천원

- 은행출연금 : 140,000,000천원
- 보험출연금 : 60,000,000천원

☐ 지출 예산 : 22,991,766천원

○ 사업비

- 은행사업비 : 18,000,000천원
- 보험사업비 : 3,000,000천원

계 : 21,000,000천원

- 재단운영비 : 1,991,766천원

※ 세부내역은 별지2(P.25) 참조

3) 예산 집행 기간 : '08. 4. 22 ~ '08. 12. 31

< 별지1 >

사 업 계 획 안

2008. 5. 2

휴면예금관리재단

I. 사업 환경 및 재단 설립 배경

□ 외환위기 이후 서민층 확대 및 금융수요 증가에 비해 제도권 금융기관의 서민금융 공급은 오히려 감소

○ 이로 인해 금융소외계층이 확대되고 사금융시장이 과도하게 성장하여 고금리·불법추심 등에 따른 서민 피해가 증가

* 전체 사금융시장 규모 : 12~18조원, 이용자 : 200~300만명 추정

□ 이자제한법 시행*과 대부업법상 이자율 인하**로 사금융 시장에서마저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는 요인 증가

* 최고이자율 : 30% ('07.6.30일 시행)

** 최고이자율 : 66% → 49% ('07.10.4일 시행)

□ 기존 국내 대안금융기관*들은 사업내용, 규모, 조직 등의 한계**로 금융소외계층***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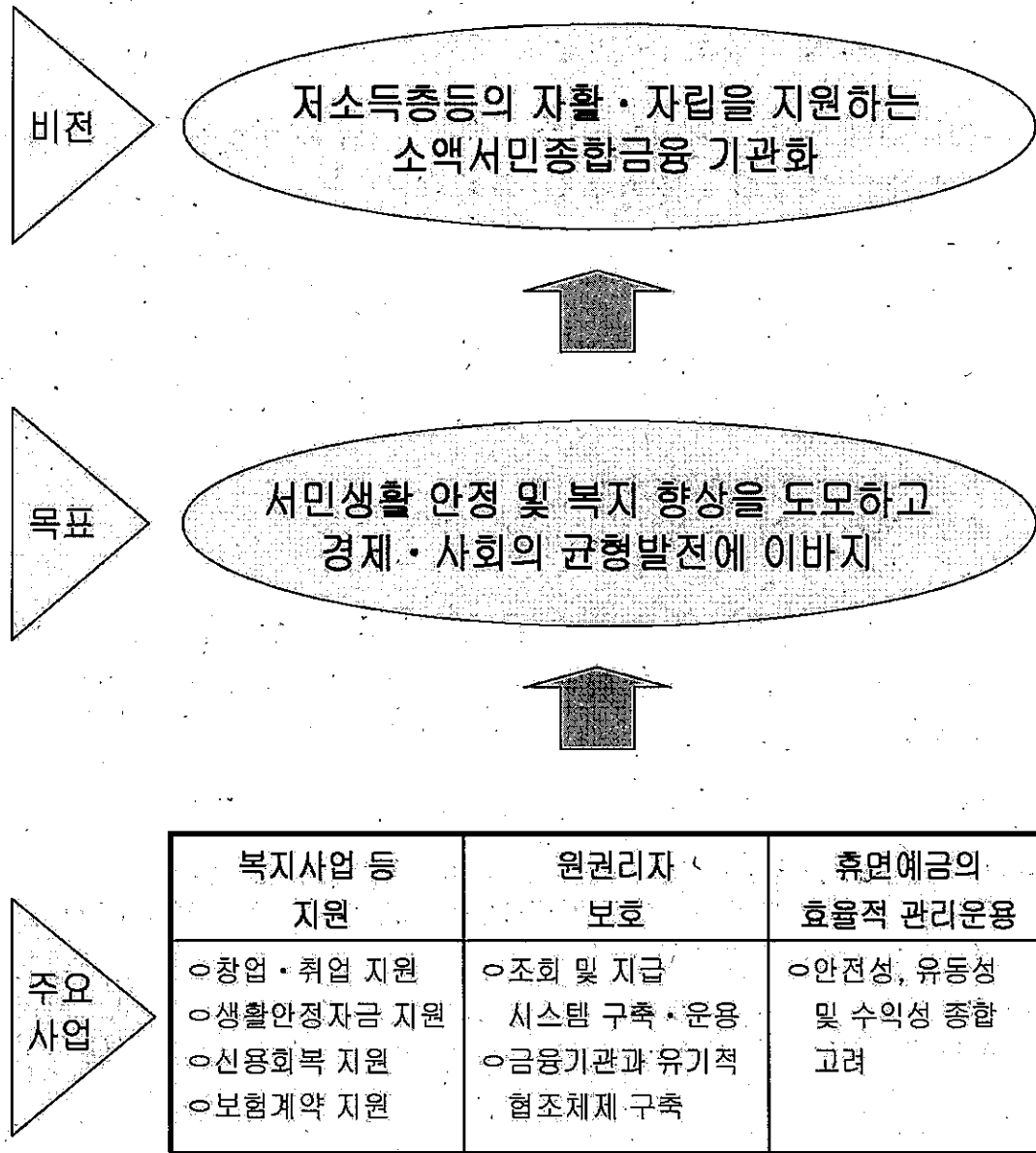
* 사회연대은행, 신나는조합, 아름다운세상기금, 참원지역사회복지은행 등

** (사업내용) 창업자금 대출 위주로 운영되어 교육·의료비 등 생활자금 대출 미흡
(규모 '07.11. 기준) 4대 대안금융기관 기금규모 총 330억원, 134억원(683건) 지원
(조직) 전국단위 네트워크 부족

***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신용등급별로 구분할 경우 제1금융권에서 소외된 7등급 이하가 700만명에 달함 (한신평정, 07.9월)

휴면예금을 활용하여 저소득층·금융소외자에게 적절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자활·자립을 촉진할 필요
⇒ 소액금융재단이 설립

II. 사업 목표 및 비전



공익성과 재정적 지속성을 기반

III. 사업추진의 기본 방향 및 방법

1 기본 방향

① (공익성과 지속가능성의 조화 도모)

- 복지사업 지원이라는 공익성과 원권리자 보호라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조화 필요

② (소모형 복지 보다는 생산적 복지 추구)

- 자활·자립의지가 강한 저소득층을 우선 선정·지원

③ (사업의 투명성 확보)

- 복지사업자 선정·지원·관리·감독 등 전 과정을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2 추진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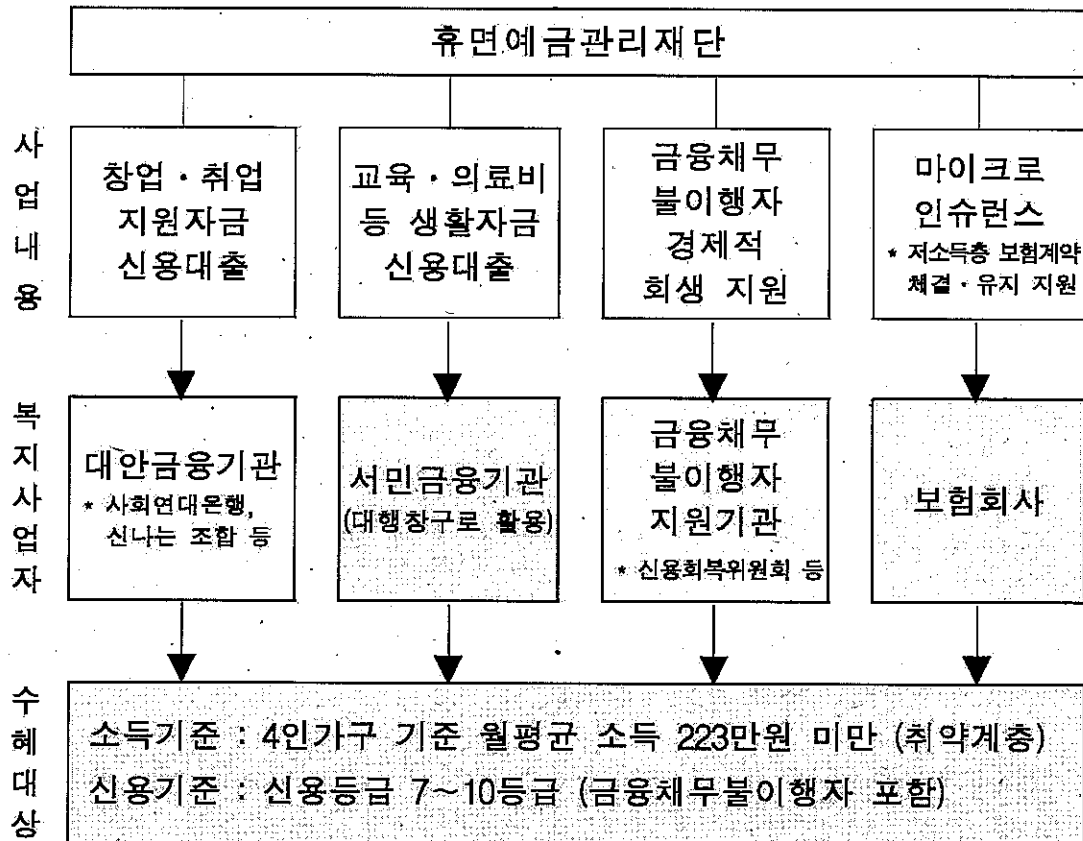
□ (점진적·단계별 사업 추진) 출범초기, 안정·정착기, 사업 확대기 등 단계별로 추진하여 사업의 내실화 도모

- 출범초기: 복지사업자의 사업능력, 원권리자의 지급청구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시범 수준으로 추진
- 안정·정착기: 사업성과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본격적인 사업 활성화 추진
- 사업 확대기: 지원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직접 사업 위주 추진

IV. 사업 추진 계획

1 복지사업자 지원 및 감독

< 개 요 >



- 복지사업자는 지원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재정적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수혜대상은 소득수준(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취약계층”)과 신용등급(7~10등급의 저신용계층)을 기준으로 설정
- * 개념상 저신용계층과 저소득층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양자의 규모가 공히 700만명 수준이라는 점 등에서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

가. 저소득층의 창업·취업 지원 사업

□ 사업목적

- 자활능력과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의 창업·취업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자활·자립을 촉진

□ 운용방향

- 창업지원은 사회연대은행 등 NGO형 대안금융기관의 노하우 및 전문가 네트워크 등 인프라 활용
 - 교육 및 컨설팅서비스 등 철저한 사전·사후관리를 통해 성공적 창업을 극대화하고 원금 훼손을 최소화
- 취업지원은 실업극복국민재단 등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
 - 저소득층이 취업을 위해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중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생활자금지원과 연계)

□ 지원 방식

- 활동 중인 NGO형 대안금융기관의 객관적인 사업성과와 사업 수행능력 등을 검토하여 선정·지원
 - 무자격자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 신청시 보건복지가족부(창업지원), 노동부(취업지원) 등 주무부처의 추천을 첨부하도록 요구

□ 지원 규모

- 창업 지원 효과를 높이는데 충분한 수준으로 지원
(1인당 5천만원 한도)
- 다만, 복지사업자별 지원 수준은 개별 복지사업자가 신규
인력·조직의 확대 없이 운용 가능한 범위내로 한정
- 창업·취업자금 이외의 복지사업자 자체의 인건비·운영비
별도 무상지원은 배제

□ 지원 금리

- 재단은 복지사업자에게 무이자로 대출하고 복지사업자는
동 재원에 수수료(운영비) 수준의 이자를 부과하여 대출
- * 현재 복지사업자(NGO형 대안금융기관)의 창업자금 대출금리는 0~
6% 수준

나. 저소득층의 교육·의료비 등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교육, 의료, 기타 경제적 요인에 의한 저소득층의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함으로써 불법 사금융 이용자 흡수

□ 운용방향

- 서민금융기관을 대행기관으로 활용하여 일정액 이하의 표준화된 소액신용대출상품을 공급
- 대행기관 및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 병행

□ 지원 방식

① 서민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방식

- 저소득층 대상 여신에 전문성을 지닌 서민금융기관을 재단의 지원 자금 대출창구로 활용
- 대행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재단 자금을 무조건 지급하기 보다는 대행기관이 시행한 대출 포트폴리오의 일정부분을 매입하는 방식 채택
 - * 재단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서민금융기관이 대출하도록 하고 재단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채권일부를 선별 매입

② 신용보증제도 활용 방식

- 서민금융기관의 저소득층 대상 여신에 부분보증을 제공
 - 신용보증기금 등 공적 신용보증기관에 준하는 보증 수수료를 부과하고 서울보증보험,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에 보증기금을 위탁하여 운용

※ 신용보증제도 활용시 직접대출에 비해 보증운용 배수에 비례하여 수혜대상과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보증수수료에 따라 추가 이자부담 발생

⇒ 수혜대상 확대, 이용자의 편의성, 서민금융기관과 보증기관 등과의 계약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 방식을 병행

□ 지원 규모

○ 보다 많은 금융소외계층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1인당 대출 규모를 500만원 이하로 제한

* 대부시장 이용자 1인당 평균 대부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금융연구원 조사결과)

□ 지원 금리

○ 서민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의 경우 은행 신용대출금리 수준(10% 내외)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금리 부과

○ 신용보증제도 활용 방식의 경우 20%의 금리상한을 설정 하되 신용등급별로 보증비율을 달리 적용

* 이 경우 대출금리가 높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신용등급 7~10등급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대형 대부시장 금리가 49%에서 형성됨을 감안할 필요

□ (기타) 기존 정부 사업 수혜자*, 제도 금융권에서 기 대출 받은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최소화

* 기존 정부지원 대출사업: 복지부의 응급의료대불제도, 교육부의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대출사업 등

** 사금융 이용자의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은 인정

다.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사업

□ 사업목적

- 신용회복 지원자의 예상치 못한 급전 수요에 대해 저리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재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회생을 촉진

□ 운용방향

- 신용회복 지원자의 병원비, 학자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1~5년에 걸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 신용회복 지원자가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창업·취업 지원 방안도 NGO형 대안금융기관과 연계 하여 추진

□ 지원 방식

- 신용회복위원회 등 채무재조정 기관*의 소액신용대출 프로그램에 재원 지원

* '07년말 현재 신용회복지원자에 대한 소액대출사업 담당기관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유일하나 자산관리공사가 운영중인 한마음금융(주)도 유사 사업 추진 예정

- 한정된 재원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자를 최우선 대상으로 선정·지원하도록 하고 재원 여력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대상자 확대

□ 지원 규모

-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수혜대상 확대를 위해 500만원 이하로 한정
- 창업 지원은 실질적 창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결정하되 재원의 여력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사업수행시 대안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창업자에 대한 교육·컨설팅 등 밀착 지원을 병행
- * 상시적 채무재조정기관이 자활의지가 강한 신용회복지원자 중 선별하여 사회연대은행 등 대안금융기관에 추천→ 대안금융기관의 자체 심사 후 창업·취업 지원

□ 지원 금리

- 재단은 신용회복지원 사업자에게 무이자로 대출
- 신용회복지원 사업자는 수용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낮게 책정

라. 저소득층 보험계약 체결·유지 지원 사업

□ 사업목적

-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저소득층에 대해 보험계약의 체결 및 유지를 지원

□ 운용방향

- 보험회사가 재단의 수혜대상자 중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Microinsurance)을 개발하여 사업지원 신청 → 재단은 사업 타당성 심사 후 재원을 배분

* 장애인, 여성, 소년·소녀 가장, 신생아 등 개인 뿐만 아니라, 보육원, 장애인복지단체 등 법인·단체 포함

□ 수혜대상자 선정 및 지원 방법·규모 등

- 수혜대상을 최대한 확대하고 지급의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단기 보장성 상품을 우선적으로 지원
-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의 전부 지원보다는 일부만 지원하는 방식 고려

* 지원금액은 개인의 경우 최대 월5만원 미만으로, 지원기간은 개인은 최대 3년, 단체는 최대 5년까지로 제한

- 보험회사의 자의적 가입자 선정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또는 대안금융기관 등 공익 단체의 추천을 요건으로 부과
- 지원 규모는 보험권 출연액(기부금 포함)의 이자 수준을 한도*로 보험회사별 출연실적과 연계하여 배분하고 휴면 예금과 구분계리

* 마이크로인슈어런스는 신용대출사업과 달리 자금의 회수가 전제되지 않은 무상 지원방식(가입자 보험료 대납 내지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 체결)이므로 원금보전을 위해서는 이자수익만으로 사업수행이 불가피

마. 복지사업자 감독 (공통사업)

□ 기본원칙

- 복지사업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 (감독 기준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 주무관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 (사업의 중복성, 비효율성 방지)
- 사후처벌적 감독보다 사전예방적 감독에 중점

□ 감독방법

- 모니터링 : 복지사업자에게 분기별 지원실적 및 상환실적 (연체 등 포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된 자료 위주로 감독
- 정기감독 : 복지사업자의 주무관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방문감독 (연1회)
- 특별감독 : 복지사업자의 자료 요청 거부 등 특별감독을 시행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방문감독 (수시)

※ 재단은 복지사업자에게 교부된 지원금이 정하여진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및 복지사업자가 거짓 신청에 의해 지원금을 교부받았는지 여부를 복지사업자의 자료나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휴면예금관리재단법 시행령 제9조)

□ 지원금의 반환

- 복지사업자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에 의해 교부 받은 경우 지원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청구(법 제26조)

2 원권리자 보호

가. 휴면예금 출연정보 조회의 신속·편의성 추구

☐ 휴면예금 출연 정보 조회시스템 마련

- 재단의 출연정보 DB와 현행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을 서로 연계하여 출연되기 전·후의 휴면예금을 동시에 일괄 조회토록 하여 편의성 제고
- 인터넷을 통한 신속한 조회와 함께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조회하는 방식을 병행

나. 휴면예금 지급의 원활화

☐ 원권리자 지급 유보금

- 원권리자 지급청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출연된 휴면예금의 일정비율을 지급 유보금으로 확보
- 사업초기인 금년에는 출연금의 75% 수준을 유보하고, 이후 신규 휴면예금 출연 수준, 운용 수익금, 원권리자 상환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유보비율 조정

☐ 원권리자 요청시 신속·정확하게 지급

- 해당 금융기관(영업점)에서 철저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원권리자 보호에 충실

- 금융기관은 인트라넷을 이용한 web방식(또는 온라인전문 방식)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급요청자료를 재단에 송부

○ 지급대행기관(주거래은행*)을 선정하여 원권리자에 대한 지급업무 수행

* 적절한 절차를 통해 출연 은행 중에서 선정 (이사회 결의)

<원권리자 지급 절차>

원권리자가 원 거래 금융기관에 휴면예금 지급 요청 → 금융기관이 원권리자 확인 후 재단에 통보 → 재단(주거래은행)이 원권리자 계좌로 휴면예금 상당액 이체

3 자산운용 및 관리

□ 자산운용의 목적

- 재단은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지급청구에 대비하여 유보해 놓은 자금을 적절히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복지사업 지원의 재원등으로 활용

□ 기본원칙

- ① 안정성 위주 : 원권리자의 보호를 위해 안정자산에 투자
- ② 유동성 추구 : 원권리자의 지급청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 추구
- ③ 수익성 감안 :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수익성 제고

□ 운용방법 및 운용기관 선정 기준

- (운용방법) 자산운용 기술과 경험이 축적될 때까지 안전성 위주로 외부자산운용기관에 위탁 운용
- (운용절차) 구체적 운용방법 및 절차는 재단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수행(이사회 보고)

□ 재단 사업성과의 투명한 공개

- 재단의 사업재원과 이를 통한 복지사업 지원성과*를 투명하게 공개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및 연보 발간)

* 복지사업자별 지원 대상·규모, 상환율, 창업성공율 등을 포함하되 개인신용정보 등은 배제. 특기할 사례는 별도로 상세 소개

- 재단에 대한 출연기관 list 및 각각의 출연규모 등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출연 인센티브 제고

* 금융기관외에 법인·단체·개인의 기부 실적도 포함

□ 원활한 재원 확충 (출연 및 기부금 모집 활동)

- 금융기관 등의 자발적인 출연·기부를 지속적으로 유지·확대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 등 제반 분위기 조성

□ 재단사업의 지속적인 발전방안 모색

- 출연기관, 복지사업자,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 공청회,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사업의 결과를 점검하고 추가·보완 발전방안 모색

- 해외 유사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성공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성공요인 및 Best Practice 도출

* 방글라데시(그라민뱅크), 미국, 아일랜드 등

5 정보화 사업

□ 필요성

- 재단업무의 효율적 수행(관리·감독의 효율성) 및 원권리자 보호 증진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화시스템 구축이 필요
 - * 특히 재단의 핵심 사업은 기존 정보축적이 부족한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대한 마이크로파이낸싱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D/B 및 상시적 모니터링이 가능한 정보화시스템 구축 필요

□ 단계별 추진 방안

- (1단계) 출범초기에는 기본적인 재단 관리업무 및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시스템만 구축하여 운용
 - * 휴면예금 조회·지급 업무 시스템 위주로 구축하되 2단계 통합정보화 사업과의 연계성·확장성을 고려
- (2단계) 조직 및 사업운영의 안정화 단계에서 업무별* 정보화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 기본관리(예산/회계/인사/급여/전자결재), 복지사업자 지원 및 감독(창업·취업 지원/생활안정자금 지원/신용회복 지원/보험계약 지원), 자산운용, 원권리자 보호(조회/지급), 정부 재정사업과의 중복지원 방지 등

□ 추진시기

- (1단계) 재단 출범초기에 구축 완료 ('08. 5월)
- (2단계) 재단 출범 후 재단의 조직, 사업내용 분석 및 업무재설계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추진('09년도)

V. 재원조달 규모 및 사업별 배분방안

- ◇ 재단은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금, 기부금, 기타 수익금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휴면예금관리재단법 제22조)
- 설립초기에는 휴면예금 출연금만으로 운영될 전망

1 휴면예금 출연규모 (추정치)

- 은행권 : 약 1,400억원
- 보험권 : 약 600억원
- 계 : 약 2,000억원

※ 재단에 출연된 후 '08.12월말까지 원권리자에 대한 예상지급액(600억원 추정)을 감안한 잔액 규모 추정

- 은행권 : 약 1,000억원
- 보험권 : 약 400억원
- 계 : 약 1,400억원

2 사업별 재원 배분방안

□ (구분계리) 은행권 출연금은 소액금융지원 사업, 보험권 출연금은 소액보험지원 사업에 배정

□ (배분규모) 복지사업자의 사업계획 및 자금신청 규모, 재단의 차년도 예상 운용수익 및 원권리자 상환 예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

- '08년(하반기) 배분안
 - 소액금융지원 사업 : 180억원
 - 소액보험지원 사업 : 30억원

※ 사업별 배분액은 실제 출연규모 및 사업추진 추이를 보아가며 적의 대응

VI. 추진 일정

사 업 명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이사회 의결 및 금융위 승인)												
2. 복지사업자 지원 및 감독												
○ 복지사업자 지원 규정 등 제정 (기준, 절차 등)												
○ 복지사업자 자격심사 및 지원계획 수립 (심사기준 및 지원계획안)												
○ 복지사업자 신청 접수·심사												
○ 복지사업자 지원												
○ 감독 규정 등 제정												
○ 복지사업자 감독												
3. 원권리자 보호 및 정보화 사업												
○ 조회 및 지급시스템 구축												
○ 휴면예금 지급												
4. 자산운용 및 관리												
○ 운용기관 선정 및 계약												
○ 자금운용												
5. 홍보												
○ 휴면예금 출연 및 지원 실적 보도												
○ 출연기관 등 대상 설명회 개최												

< 별지2 >

예 산 안

2008. 5. 2

휴면예금관리재단

I. 예산 총칙

제1조 휴면예금관리재단(이하 “재단”이라고 한다)의 2008년도 예산 중 수입예산은 은행출연금과 보험출연금으로 구분하고, 지출예산은 재단사업비[은행사업비(소액금융지원사업), 보험사업비(소액보험지원사업)]와 재단운영비로 구분한다.

제2조 재단 예산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예산

- 금융기관 출연액 : 200,000,000천원

2. 지출예산(22,991,766천원)

- 은행사업비 : 18,000,000천원
- 보험사업비 : 3,000,000천원
- 재단운영비 : 1,991,766천원

제3조 예산 중 은행사업비와 보험사업비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등에관한법률」 제23조에 따라 구분계리하되, 재단운영비는 은행출연금과 보험출연금의 수입예산액 비율에 따라 각각 충당한다.

제4조 2008년도 예산의 집행기간은 2008. 4. 22부터 2008. 12. 31 까지로 한다.

II. 수지 예산

1. 수입 예산

(단위 : 천원)

관 항 목	'08년도 예산액	비 고
은행출연금	140,000,000	
보험출연금	60,000,000	
계	200,000,000	

2. 지출예산

가. 총괄표

(단위 : 천원)

관 항 목	'08년도 예산액	비 고
재단사업비	21,000,000	
(은행사업비)	(18,000,000)	
(보험사업비)	(3,000,000)	
재단운영비*	1,991,766	
(자산취득비)	89,000	
(인건비)	922,604	
(일반관리비)	885,316	
(예비비)	94,846	
계	22,991,766	

* 재단운영비는 은행출연금과 보험출연금의 수입예산액 비율에 따라 각각 총당
(은행 13.9억원, 보험 6.0억원)

나. 지출예산 세부내역

1) 재단사업비

(단위 : 천원)

항 목	08년도 예산액	구성비(%)	세부내역
은행사업비	18,000,000	85.7	- 저소득층 창업, 취업 신용대출 - 신용회복지원사업 -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보험사업비	3,000,000	14.3	- 저소득층 보험계약체결 및 유지 지원사업
계	21,000,000	100.0	

2) 재단운영비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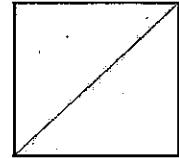
항 목	08년도 예산액	구성비(%)	세부내역
I. 자산취득비	89,000	4.47	
비품	89,000	4.47	- 전산방화벽 구축, 냉난방기, 금고, 사무실 집기부품 등
II. 인건비	922,604	46.32	
급 여	671,250	33.70	- 직원 23명 기준 (직원평균연봉 38,913천원)
제 수 당	154,004	7.73	-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시간외 수당, 전산·회계수당
성과상여금	20,250	1.02	- 성과급
잡 급 여	77,100	3.87	- 비서·운전원 급여, 파견수당, 이사장 등 업무활동비

(단위 : 천원)

항 목	08년도 예산액	구성비(%)	세부내역
III. 일반관리비	885,316	44.45	
소모품비	18,113	0.91	- 사무용품, 복사기·전산·기타 소모품
인쇄비	29,500	1.48	- 규정집, 보고서, 봉투 인쇄 등
도서신문비	8,820	0.44	- 도서구입, 정기간행물, 신문구독료
수선비	5,000	0.25	- 사무실 보수공사 등
통신비	39,911	2.00	- 전화료, TV·인터넷 이용료
보험료	1,520	0.08	- 신원보증보험료, 동산(전산시스템, 전산기기)종합보험료
수수료	11,700	0.59	- 법률·세제자문수수료, 물품운송비 등
용역비	10,300	0.52	- 공인회계감사 및 세무조정감사
홍보비	80,500	4.04	- 출연현황, 사업안내 등
세금과공과	74,303	3.73	-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급식비	28,980	1.45	- 야근, 휴일근무 식대
지급임차료	141,741	7.12	- 사옥 임차관리비(17,717천원×8월)
전산업무비	46,500	2.33	- 전산유지보수료, 업무용S/W구매

(단위 : 천원)

항 목	08년도 예산액	구성비(%)	세부내역
차 량 비	30,998	1.56	- 이사장 및 업무용 차량리스비, 유류대 등
복리후생비	46,650	2.34	- 직원 건강진단비, 출퇴근비 보조, 중·고 자녀학비보조 등
사무차운영비	9,900	0.50	- 생수, 차 등
여비교통비	64,300	3.23	- 시내교통비, 출장여비, 해외출장비
업무추진비	72,000	3.61	- 유관기관 업무협의비 등 (8,000천원×9월)
조사연구비	50,000	2.51	- 소액금융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회의운영비	80,200	4.03	- 이사회, 자문위원회, 실무회의 등 (이사회 400천원×13인×8회, 자문위원 200천원×5인×8회)
행 사 비	780	0.04	- 종무식 행사
체육진흥비	11,000	0.55	- 임직원 체육행사 (식음료대, 체육복비, 장소임차료)
교육훈련비	13,600	0.68	- 임직원 워크샵 (전체 및 각 팀별워크샵 1회)
잡 비	9,000	0.45	- 수도광열비, 정수기, 환경정리원 등
IV. 예비비	94,846	4.76	- 지출예산의 약 5%
합 계	1,991,766	100.0	



의안번호	08-06-04
의 결 연 월 일	2008. 12. 23. (제 6 차)

의
결
사
항

2009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제 출 자	휴면예금관리재단 이사장
제출연월일	2008. 12. 23.

1. 의결주문

“2009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휴면예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 및 운용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금자 보호, 서민생활의 안정 및 복지 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사업계획안

1) 복지사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및 감독

☐ 저소득층 창업·취업 지원

- 기존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수혜자 범위를 확대
- 창업·취업 분야의 신규 복지사업자를 발굴하여 지원

☐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사회적 기업 지원

- 사업지원의 확대를 통한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
- 유망기업이 선정·지원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 개선·강화

☐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 복지사업자가 수행하는 소액대출 프로그램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
- 소액금융 수혜 대상자의 범위 확대

☐ 전통시장 영세상인을 위한 소액대출 지원

- 서울시 시범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지원 강화
-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전국 광역자치제로의 사업 확대 추진

☐ 저소득층 보험계약 체결·유지 지원

- 지원금의 증액을 통한 소액보험 사업의 확대
- 사업규모 및 내용을 고려한 최적의 수혜자 그룹 선정
- 수혜자 선호도를 파악하여 보험 상품을 개선

☐ 복지사업자 감독

- 복지사업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도덕적 해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감독

2) 원권리자 보호 및 정보화 사업

☐ 출연자료 등의 보완 및 철저한 관리를 통해 원권리자에 대한 휴면예금의 안정적 지급을 도모

☐ 출연·지급정보 등 관련 데이터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통합 업무지원 및 복지사업 지원 시스템 구축을 추진

4) 홍보활동 강화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재단의 활동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연간 활동보고서를 발간하여 홍보 자료로 이용

☐ 복지사업 관련 워크숍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재단의 역할 및 발전방안 모색

5) 재원조달 규모 및 사업별 배분방안

☐ '09년도 휴면예금 출연 예상금액 : 약 700억원

○ 은행권 : 약 350억원

○ 보험권 : 약 350억원

☐ '09년도 사업비 : 총 440억원

○ 소액금융사업비 : 400억원 (가용재원 약1,600억원*의 25%)

* '08년도 예상잔액, '09년도 출연예상액 및 원권리자 지급 예상액 감안

○ 소액보험사업비 : 40억원 (휴면보험금 예상수익금 이용)

※ (구분계리) 은행권 출연금은 소액금융사업, 보험권 출연금은 소액보험사업에 배정 (재단 법 제23조)

나 예산안

1) 예산 편성 기준

☐ 예산편성은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 등을 참고함

○ 예산총칙에 수입예산은 은행 및 보험사의 출연금 및 동 출연금 운영 수익금으로 편성하고, 지출예산은 재단사업비(소액금융사업비 및 소액보험사업비)와 재단운영비로 구분하여 예산운용 원칙을 규정

□ 지출예산 편성 기본방향

-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사업을 확대 지원
- 정부예산 절감 시책에 부응하여 운영비 예산을 긴축 편성

2) 예산 편성 내용

□ 수입예산 : 47,665,202천원

- 기본재산전입금(은행출연금 전입금) : 40,000,000천원
- 이자수입 - 은행출연금 이자수입 : 2,822,206천원
- 보험출연금 이자수입 : 4,842,996천원

□ 지출예산 : 47,665,202천원

- 사업비 : 44,000,000천원
 - 소액금융사업비 : 40,000,000천원
 - 소액보험사업비 : 4,000,000천원
- 재단운영비 : 3,665,202천원

※ 세부내역은 별지2 참조

3) 예산 집행 기간 : '09. 1. 1 ~ '09. 12. 31

< 별지1 >

2009년도 사업계획(안)

2008. 12

휴면예금관리재단

I. 2008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

1 휴면예금 출연 및 지급

가 출연

□ '08년도 출연금액 ('08.11월말) : 2,702억원

○ 은행권 : 18개 은행, 1,766억원 ('08.6월 출연완료)

52개 저축은행, 19억원 (3개사 미출연)

○ 보험권 : 32개 보험회사, 917억원 ('08.10월 출연완료)

● 일부 금융기관의 소극적 태도로 출연시기가 다소 지연되었으나,
재단 설립 후 첫번째 출연이 성공적으로 추진

나 지급

□ '08년도 지급금액 ('08.11월말) : 72억원

구 분	지급인원	지급금액	비 고
은행권	6,209명	39억원	1인당 평균지급액 : 622천원
보험권	3,059명	33억원	1인당 평균지급액 : 1,096천원
계	9,268명	72억원	

2 복지사업의 지원

가 지원금 배정

□ '08년도 지원금 배정금액 : 총 280억원

- 소액금융사업 : 250억원
- 소액보험사업 : 30억원

나 지원금 교부

□ '08년도 지원금 교부금액 : 총 271억원

- 소액금융사업 : 241억원
- 소액보험사업 : 30억원

□ 복지사업자별 지원금 교부현황

구분	분야	복지사업자명	지원금		비고
			배정	교부	
소액 금융 사업	창업·취업	사회연대은행	25억원	25억원	
		신나는조합	6억원	6억원	3억원 추가배정
		근로복지공단	(32억원)*	-	공단 내부사정으로 '08년도 사업포기
	신용회복	신용회복위원회	120억원	120억원	60억원 추가 배정
		한마음금융	60억원	60억원	
	사회적기업	함께일하는재단	20억원	20억원	
	전통시장 소액대출	서울시자치구	10억원	10억원	12월중 교부예정
	예비사업비		9억원*	-	
	소 계		250억원	241억원	
소액보험사업		보험회사	30억원	30억원	보험증권발급에 따라 순차적 지급예정
합 계			280억원	271억원	

* 당초 예비사업비 40억원과 근로복지공단 배정액 32억원의 합 72억원 중 63억원을 신용회복위원회(60억원) 및 신나는조합(3억원)에 추가배정

Ⅱ. 2009년 사업추진 방향

1 사업 환경

①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서민생활 어려움 가중

- ☐ 산업 활동의 부진으로 인한 고용사정 악화와 고환율 등 물가상승 압박에 따른 소득감소
- ☐ 지속적인 내수침체로 영세 자영업 타격 심화
- ☐ 서민경제 악순환(소득감소-생활고 증대)의 구조화 우려

② 금융채무 불이행의 증가와 금융소의 계층 확대 예상

- ☐ 금융채무 불이행의 증가로 소비자 금융 위축 ⇒ 금융소외계층 증가
- ☐ 고금리 사채 등 불법 대부업의 기승으로 서민 피해 확대
- ☐ 신용회복 중인 자들의 중도탈락(금융채무불이행자로 재전락) 위험 증가

③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수요의 증가

- ☐ 경제 불황의 여파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수요 증가 예상
- ☐ 정부의 예산투입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은 제한적
- ☐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민간부문의 저소득층 지원 감소 예상

⇒ 서민생활의 안정과 저소득층 복지향상을 위한
재단의 역할 증대가 요구됨

2

사업목표

▣ 소액서민종합금융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

▣ 저소득층 복지사업의 중심기구로서의 역할 강화



공익성과 재정적 지속성 확보

3

사업추진 방향

Ⅰ 재단 운영재원의 안정적 확보

□ 재단 사업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휴면예금의 안정적 출연 등 운영재원 확보 노력

○ 금융기관의 지속적인 출연을 위해 재단사업의 홍보활동 강화

○ 휴면예금 외 기부금 등 운영재원의 다양화 모색

* 금융기관의 유동성 악화로 휴면예금 출연에 대한 소극적 입장을 보일 가능성에 대비

②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위한 지원을 활성화

☐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생활 안정 정책에 적극 부응

○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 ▶ 마이크로 크레딧의 활성화

○ 생활공감정책 10대 과제 ▶ 영세상인을 위한 소액대출 확대 추진

③ 복지사업자 지원사업의 확대

☐ (현행 지원사업의 확대 강화) 현행 지원사업의 연속성을 강화하고, 역량 있는 복지사업자에 대한 지원규모 확대

☐ (신규 복지사업자 발굴) 복지 사각시대 등 취약부문을 담당할 복지사업자 발굴 및 육성

☐ (철저한 사후관리) 지원금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원금 훼손을 최소화하고 향후 복지사업의 추진 방향을 계도

④ 원권리자 보호 등을 위한 정보화 사업 확충

☐ (원권리자 보호 체계 강화) 휴면예금 데이터 보안 시스템 등의 완비를 통해 원권리자 보호 및 안정적 지급업무 체계를 강화

☐ (통합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해 복지사업통합관리시스템 및 통합업무지원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

Ⅲ. 사업별 추진 계획

1 복지사업의 지원

소액금융사업

가 저소득층 창업·취업 지원

① 추진 방향

- ☐ 기존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수혜자 범위를 확대
- ☐ 창업·취업 분야의 신규 복지사업자를 발굴하여 지원
 - * 전국적 규모의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복지사업자가 많지 않아 지역기반이 있는 신규 사업자의 발굴 필요성이 대두

② 세부 추진 내용

- ☐ 사업지원 강화
 - 창업지원 분야 지원금 증액
 - * '08년도 지원규모 : 사회연대은행 25억원, 신나는 조합 6억원
- ☐ 복지사업자 신규 발굴 등
 - 주무관청·학계·유관기관 등과의 협조를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활동하는 유망 복지사업자를 발굴
 - 신규 발굴한 복지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업무지원을 통해 조기 정착을 도모

나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사회적기업 지원

① 추진 방향

- ☐ 사업지원의 확대를 통한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
- ☐ 유망기업이 선정·지원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 개선·강화

② 세부 추진 내용

☐ 사업지원 확대

- 지원금 증액을 통한 수혜기업 확대

* '08년도 지원규모 : 함께일하는재단 20억원

- 역량 있는 신규 복지사업자를 발굴하여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저변을 확대

* 주무관청, 학계, 동종업계 및 유관기관의 추천 등을 통해 유망 복지사업자 발굴

☐ 지원기업 선정 심사기준 강화

- 복지사업자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심사 기준에 재단 의견을 적극 반영

- 유망기업 위주로 지원금이 투입되어 향후 대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유도

* 사회적 기업의 경우 건당 대출규모(2억 이내)가 크므로 동 장치의 마련이 필요

다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① 추진 방향

- ☐ 복지사업자가 수행하는 소액대출 프로그램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
- ☐ 소액금융 수혜 대상자의 범위 확대

② 세부 추진 내용

- ☐ 소액대출 프로그램의 안정적 성장
 - 사업능력을 고려한 적절한 지원으로 복지사업자의 사업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소액대출사업의 지속성을 확보
- * '08년도 지원규모 : 180억원(신복위 120억원, 한마음금융 60억원)

☐ 수혜 대상자 확대

- 신용회복 프로그램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

- (예)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소액대출 시행방안 강구
- 개인회생제도 이용자는 신용회복기구의 부채로 소액금융의 혜택을 못 받고 있음 ('08년 7월 현재 133,519명)
 - 기존 복지사업자 중 적합한 곳을 택하여 사업 시행을 고려

☐ 철저한 사후 관리

- 수혜자가 다수인 특성을 감안, 대출관련 전산자료의 공유를 통한 일일 모니터링 체제의 구축
 - 복지사업자의 신용대출 보증보험 전면 가입 추진
- * 신복위는 2008년 서울보증보험(주)과 200억 대출금액을 한도로 신용대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대출재원 보전책 마련

라 전통시장 영세상인을 위한 소액대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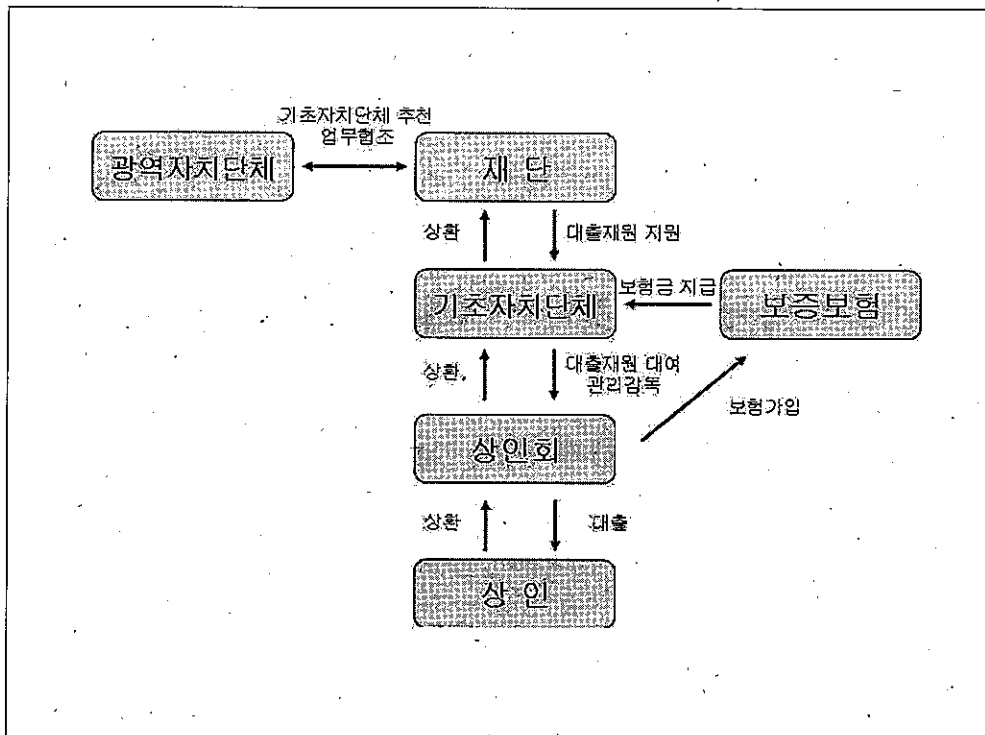
1 추진 방향

- ☐ 서울시 시범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지원 강화
- ☐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전국 광역자치체로의 사업 확대 추진

2 세부 추진 내용

- ☐ 서울시 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 및 점검·분석
 - 자치구와 협조하여 상인회의 사업운영 실태 파악
 -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점검하여 사업내용을 개선
 - * 14개 자치구의 24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시장 당 3천~5천만원 지원
 - 지원조건 - 무이자, 지원기간 2년, 만기일시상환
 - 대출재원 보존을 위해 보증보험 가입 (보험료는 재단·서울시·상인회 분담)
 - (상인회의 대출조건 - 점포당 3백만원 이하, 이자율 연4.5%이내, 6개월 이내)
- ☐ 이 사업을 전국 광역자치단체로 확대
 - 서울시 시범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
 -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경우 지원대상 자치단체 및 전통시장을 광역시도별로 균형 있게 선정

□ 사업구조 및 내용



- 기초자치단체는 복지사업자로서 전통시장의 소액대출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담당하고, 대출사업은 해당 시장의 상인회가 주체가 되어 수행
- 지원금 보전을 위해 지원금에 대하여 전액 보증보험 가입 추진

소액보험사업

마 저소득층의 보험 계약 체결 · 유지 지원

① 추진 방향

- ☐ 지원금의 증액을 통한 소액보험 사업의 확대
- ☐ 사업규모 및 내용을 고려한 최적의 수혜자 그룹 선정
- ☐ 수혜자 선호도를 파악하여 보험 상품을 개선

② 세부 추진 내용

- ☐ 사업규모 및 수혜대상 확대
 - 사업비 규모의 증액을 통해 수혜대상 확대
 - * '08년도 사업비 30억원, 수혜대상 1,500명
- ☐ 최적의 수혜 대상 발굴 선정
 - 정부 또는 지자체 및 민간단체 등 공익단체로부터 수혜대상을 발굴 · 추천 받아 선정
 - * 차상위계층의 빈곤아동 (조손가정 · 한부모가정의 아동 · 장애아 등) 우선 지원
- ☐ 보험상품 내용의 보완 · 발전
 - '08년도 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보험상품의 내용을 보완 · 발전
 - 보장성 급부금을 증액하고 중도급부금을 축소하는 등 보험상품을 다양화
 - * 수혜대상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2

복지사업자 감독

① 추진 방향

- ☐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방지
- ☐ 복지사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원금 사용의 효율성 제고
- ☐ 향후 복지사업 추진방향을 정립

② 주요 감독사항

- ☐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을 수행하는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는지 여부
- ☐ 거짓신청에 의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았는지 여부
- ☐ 지원금 교부신청 시 제출한 사업 및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
- ☐ 복지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이 충분히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등

③ 감독의 실시

- ☐ (모니터링) 복지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대출 및 상환 실적 등)를 통하여 월 2회 이상 실시
- ☐ (정기감독) 복지사업자 주무관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연 1회 방문감독 실시
- ☐ (특별감독) 복지사업자의 자료제출 거부 등 특별 사유 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방문감독 (수시실시)

① 추진 방향

- ☐ 원권리자에 대한 휴면예금의 안정적 지급
- ☐ 출연·지급정보 및 복지사업 관련 데이터의 안전한 관리
- ☐ 통합 업무지원 및 복지사업 지원 시스템 구축

② 세부 추진 내용

☐ 원권리자 보호

- 철저한 본인확인 절차의 이행 및 정확한 출연 자료 제출에 대한 중점 관리를 통해 휴면예금 지급의 신속성·정확성을 유지
- 출연정보 설계서의 보완과 다양한 통계지표의 개발·분석으로 휴면예금 지급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 정보화 사업

- 정보시스템의 장애 및 파괴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데이터 복구를 위한 백업장비의 도입 및 테이프 원격지 소산 실시
- 복지사업 지원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수혜자 중복 지원의 방지 등을 위한 복지사업 통합관리 정보시스템을 개발

① 추진 방향

- ☐ 재단 사업추진 내용에 대한 홍보활동 적극 추진
- ☐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강화

② 세부 추진 내용

- ☐ 다양한 매체의 적극 활용
 -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휴면예금 출연현황과 이를 통한 복지사업 지원성과를 수시로 알림으로써 재단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
 - 언론사 인터뷰, 방송출연, 기고 및 간담회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적극 강화
- ☐ 연간 활동보고서의 발간
 - 사업활동 및 실적 등을 담은 연간 활동보고서를 발간하여 홍보자료로 활용
 - * 사업추진 내용 및 효과, 임직원 활동사항, 복지사업 지원 우수사례 등 수록
- ☐ 유관기관과의 유대·협력 강화
 - 출연기관, 복지사업자, 정부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를 구축
 - 복지사업 관련 워크숍 및 세미나 등을 통하여 재단의 역할 및 발전방안 모색

IV. 재원 조달 및 사업별 배분 방안

1 휴면예금 출연

□ '09년 출연 예상금액 : 약 700억원

○ 은행권 : 약 350억원

○ 보험권 : 약 350억원

2 사업비 배분(안)

□ '09년도 사업비 : 총 440억원

○ 소액금융사업비 : 400억원 (가용재원 약1,600억원*의 25%)

* '08년도 예상잔액, '09년도 출연예상액 및 원권리자 지급 예상액 감산

○ 소액보험사업비 : 40억원 (휴면보험금 예상수익금 이용)

※ (구분계리) 은행권 출연금은 소액금융사업, 보험권 출연금은 소액보험사업에 배정 (재단 법 제23조)

V. 추진 일정

사 업 명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이사회 의결 및 금융위 승인)												
2. 복지사업자 지원 및 감독												
○ 복지사업자 자격심사 및 지원계획 수립												
○ 복지사업자 신청 접수·심사												
○ 복지사업자 지원												
○ 복지사업자 감독												
3. 원권리자 보호 및 정보화 사업												
○ 보안 강화 및 복지사업 지원시스템 등 구축												
○ 휴면예금 지급												
4. 홍보												
○ 연간 활동보고서 발간												
○ 휴면예금 출연 및 지원 실적 보도												
○ 출연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별지 1>

2010년도 사업계획(안)

2009. 12

미소금융중앙재단
(휴면예금관리재단)

I. 2009년 업무추진 실적

1 업무 추진 실적

① 휴면예금의 안정적 출연 확보

○ 출연

- '09년도 출연금액 : 1,240억원 (누계 3,944억원)

┌ 은행권 : 897억원 (누계 2,682억원)

└ 보험권 : 343억원 (누계 1,262억원)

○ 지급

- '09년도 지급액 : 38,818건, 149억원 (누계 47,661건, 233억원)

┌ 은행권 : 29,514건, 83억원 (누계 36,813건, 127억원)

└ 보험권 : 7,304건, 66억원 (누계 10,848건, 106억원)

※ '09.11월말 현재

② 복지사업자 신규발굴 등 지원사업의 확대

○ 창업 및 사회적 기업 지원 분야 복지사업자 6개를 신규 지정 ('08년도 5개에서 11개로 증가)

○ 지원규모도 440억원으로 확대('08년도 271억원)하여 이 중 430억원을 배정

* 사업자별 추진 현황 : 별지

○ 지원금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복지사업자 간담회, 현장 감독 실시 등)

③ 원권리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안정적 시스템 운영

- (지급절차 개선) 출연 및 지급 세부기준을 수정·보완하여 원권리자 보호 기능 강화
- (안정적 시스템 운영) 홈페이지 및 지급 시스템을 업무현황에 맞추어 개선하였고, 유지보수 체계 확립을 통해 DDOS 사태 등에도 안정적으로 원권리자 지급 체계 유지

④ 미소금융사업 확대

-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소액서민금융재단을 휴면예금과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 개편(제3차 이사회 의결, '09.9.24)

주요 내용

- 민간 기부 활성화를 통해 향후 10년간 총 2조원의 기금을 조성
- 청년 자원봉사자·금융회사 퇴직자 등을 운영인력으로 활용
- 1단계 : 지역별 미소금융법인 20~30개 설립('09.12~'10.5월)
- 2단계 : 단계적으로 미소금융네트워크를 전국 200~300개로 확대('10.6월~)

추진 현황

- 기업·은행 미소금융법인 설립·개소
 - 6개 기업(롯데, 삼성, SK, 엘지, 포스코, 현대·기아차) 및 5개 은행(국민, 우리, 신한, 기업, 하나은행) 설립·개소 완료(롯데는 '09.12.30 개소)
- 지역법인 설립·개소
 - 서초구('09.12.24) 및 청주시('09.12.28) 지역법인 개소에 이어 연말까지 은평구 및 광주시 지역법인 개소 예정

기부금 접수 현황('09.12.24 현재)

- 일반 기부금 : 1,039.5억원
 - 은행권 : 534억원 (18개 중 15개 은행)
 - * 18개 은행 2,555억원 중 '09년도 기부예정액은 746억원이며 아직 기부하지 않은 3개 은행(신한, 우리, 수협)은 12월말~'10년 1월중 기부 예정
 - 증권 유관기관 : 500억원* (거래소 250, 예결원 200, 금투협 50)
 - * '09.12.31까지 기부 예정
 - 기타 : 5.5억원 (법인 2개, 단체 1개, 개인 10명)
- 기업·은행 재단 기부금 : 1,490억원
 - 6개 기업 : 1,050억원
 - * 6개 기업의 '09년도 기부예정액은 1,000억원이었으나, 포스코가 '10년분(50억원)까지 기부하여 1,050억원
 - 5개 은행 : 440억원
 - * 국민(500억), 신한(500억), 우리(500억), 하나(200억)은행은 5년으로 나누어 기부하고 기업은행(300억)은 100억원씩 3년간 기부
- 계 : 2,529.5억원

(별지)

복지사업 추진 현황 요약

('09년 12월 18일 기준)

(단위 : 건, 억원)

구 분	분야	복지 사업자명	'08년도 사업			'09년도 사업			누계		
			지원금	대출		지원금	대출		지원금	대출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소 액 금 용	창업	해피월드 복지재단				15	71	13.2	15	71	13.2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				10	16	4.9	10	16	4.9
		소상공인 진흥원				40	106	19.3	40	106	19.3
		사회연대 은행	25	148	25	10	-	-	35	148	25
		신나는조합	6	28	6	5	-	-	11	28	6
		소계	31	176	31	80	193	37.4	111	369	68.4
	신용 회복	신용회복 위원회	120	4,093	120	140	4,820	139.6	260	8,913	259.6
		한마음금융	60	2,594	60	20	847	20	80	3,441	80
		소계	180	6,687	180	160	5,667	159.6	340	12,354	339.6
	사회적 기업	열매나눔재단				10	6	5	10	6	5
		민생포럼				10	3	1.3	10	3	1.3
		민생경제정책 연구소				20	5	5	20	5	5
		함께일하는 재단	20	15	19.4	-	-	-	20	15	19.4
		소계	20	15	19.4	40	14	11.3	60	29	30.7
	전통 시장	지방자치 단체	10	627	10	110	1,836	84.4	120	2,463	94.4
		예비사업비				10	-	-	10	-	-
		합 계	241	7,505	240.4	400	7,710	292.7	641	15,215	533.1
	소액보험	보험회사	30	3,323	30	40	6,838	33.2	70	10,161	63.2
		총 계	271	10,828	270.4	440	14,548	325.9	711	25,376	596.3

2

업무 성과

① 성과

- 재원의 안정적 확보 체계를 구축하고 신규 복지사업자 발굴·육성 및 지원규모 확대를 통한 마이크로크레딧의 중추기구로서의 기반을 마련
 - 휴면예금 출연이 당초 계획(700억원) 보다 540억원이 많은 1,240억원 실현
 - 복지사업자 수가 기존의 5개에서 6개 추가된 11개로 증가되었고, 사업비도 배정액 430억원이 대부분 교부(415억원)
- 특히, 미소금융사업 확대는 사업규모 및 접근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
 - 기업과 금융권의 적극 참여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나눔과 봉사 문화 확산 등으로 연계

② 보완할 점

- 전통시장 영세상인 지원사업의 경우 대상 상인회의 추천 등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고, 상인회의 대출 관련 계약·회계 등의 표준적인 업무매뉴얼 지원 등이 필요
-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감독 시스템 구축이 필요
- 사회적 기업 지원 분야 실적이 다소 저조
⇒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 필요

Ⅱ. 2010년 사업추진 방향

1 사업 환경

① 금융불안 해소 지연으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지속

- 금융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경기회복세가 경제 전체로 확산되지 못하는 가운데 고용이 실물경기보다 느리게 개선됨에 따라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완화되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

② 미소금융사업의 확대 시행으로 국민적 관심 및 지원 수요의 증가

- 자활 의지는 있으나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층의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요구 급증이 예상
- 정부 재정지원 축소로 재단에 기존 복지사업자의 지원금 확대 요청이 예상

③ 저소득층의 성공적인 자활을 위해서는 자금지원 뿐만 아니라 컨설팅 및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필요

⇒ 성공적인 서민의 자활지원을 위해 재단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을 대폭 확대할 필요

비전

저소득·저신용층의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마이크로크레딧의 중추적 기관으로 자리 매김

사업
목표

미소금융사업의 성공

서민금융을 활성화하여 저소득·저신용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여 서민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도모

전략
과제

전국네트워크
(70개)

자원조달
(10년 동안
연간 2천억원)

통합정보
시스템구축

미소금융중앙재단
SMICE MICROCREDIT BANK



저소득층의
자활지원 확산

기업의
사회적 책임

나눔·봉사
문화 확산

① 미소금융사업의 성공적 자리매김

- 저소득·저신용층의 자립 지원을 위해 미소금융사업을 대폭 확대
 - * 내실 있고 지속 가능한 전국 네트워크 구축(향후 200~300개 목표)
- 상담, 금융지원, 교육·컨설팅, 사후관리 시스템 제공 등을 통해 수요자의 자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
- 미소금융 사업자간 정보연계 강화 및 운영시스템 공유 등 인프라를 개선하여 자금 운용의 효율성·건전성 제고
-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심사·평가시스템 강화
 - * 서류심사, 면접, 현장심사 등 밀착형 대출심사와 주기적인 사업장 방문을 통한 사후관리

② 재단 사업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운용

- '10년도 재원조달 조성목표 달성 : 약 3,000억원
- 다양한 금융상품에 연계한 운영재원 수익의 극대화

③ 미소금융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미소금융사업 지원 정보 통합 네트워크 구축
- 지역법인 지원 및 중앙재단 업무확충 시스템 구축 등

④ 미소금융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및 성과평가

-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복지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방안 마련
- 미소금융사업자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

⑤ 교육·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 분야별 표준 교육체계 마련을 통한 「교육·훈련 운영계획」 수립 시행
- 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하는 컨설팅 교육실시

⑥ 기존 복지사업자 지원사업의 탄력적 운영

- 창업 및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지속 지원
- 전통시장 소액대출은 건실한 상인회 중심으로 지원하고 사후 관리 체계 강화
- 소액보험사업은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장애인 및 다문화가정 등 수혜대상을 다양화

⑦ 원권리자 보호 체계 강화

- 휴면예금 출연 정보 확인 및 지급절차 제도 개선
- 원권리자 보호를 위한 백업 시스템 강화

⑧ 미소금융사업 홍보

- 초기에 홍보·광고를 집중하여 미소금융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
- 다양한 미디어·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홍보효과 극대화

Ⅲ. 사업별 세부 추진 계획

1 미소금융사업의 성공적 자리매김

가 전국 네트워크 구축 (지역·기업법인 설립)

① 세부 추진 내용

- 지역별 안분과 공정한 심사기준에 의한 지역법인 설립
 - * 복지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한 선발 → 서류·면접전형, 현장실사 등
- '09.12월~'10.2월 중, 1차 지역·기업법인 설립 : 총 22개
 - 지역법인 총11개, 기업법인 총11개 설립
- 지역법인 추가 모집 및 선정
 - 상반기: 20~30개
 - 하반기: 30~40개

나 미소금융사업(기부금) 지원 활성화

- ◇ 지원대상·조건 및 지원내용을 모델화 하여 전체 미소금융사업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수혜자의 수요에 맞는 상품의 지속개발 추진

① 창업임차자금 대출

- 사업자등록 영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자립기반 확립을 위한 창업임차자금(사업장임차보증금) 대출

②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대출

- 성공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업체의 기술·브랜드 등을 창업희망자가 활용하여 창업 시, 사업장임차자금·권리금·시설비 등을 지원

③ 운영자금 대출

- 사업자등록 영세사업자의 제품, 반제품, 재료 등의 구입을 위한 운영자금 대출

④ 시설개선자금 대출

- 사업자등록 영세자영업자의 생계형차량, 집기·비품 구입 등을 위한 시설개선자금

⑤ 무등록사업자 대출

- 사업자를 등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세자영업자의 창업에 소요되는 자금 및 제품, 생계형차량, 집기·비품 구입 등을 위한 무등록사업자 지원

< 대출 종류 및 조건 >

구분	지원 한도	대출기간		이율(연)	
		거치기간	상환기간	거치기간	상환기간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50백만원	1년 이내	5년 이내	4.5% 이내	4.5% 이내
창업임차자금	50백만원	1년 이내	5년 이내		
운영자금	10백만원	6개월 이내	5년 이내		
시설개선자금	10백만원	6개월 이내	5년 이내	20% 이내	20% 이내
무등록사업자 지원자금	5백만원	6개월 이내	5년 이내		

2

재단 사업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운용

□ '10년도 재원조달 조성목표 달성 : 3,000억원

○ 휴면예금 출연 예상액 : 700억원

○ 기부금 예상액 : 2,300억원

- 재계(6개 기업*) 기부금 : 950억원

* 삼성(300억), 현대·기아차(200억), LG(200억), SK(200억), 롯데(50억)

- 5개 은행 기부금 : 440억원

* 국민(100억), 신한(100억), 우리(100억), 기업(100억), 하나(40억)

- 일반 기부금(은행 등) : 910억원

□ 다양한 금융상품에 연계한 운영재원 수익의 극대화

○ 금융 전문가로 구성된 자산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부금 등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

* 안정성을 우선으로 하면서 유동성과 수익성을 함께 추구

3

미소금융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가

미소금융사업 지원 정보 통합 네트워크 구축

□ 미소금융사업자의 지원정보 집중·통합관리

○ 부적정·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수혜대상자 신용정보 조회 및 MC통합 네트워크를 통한 중복확인 서비스 개발

- 복지부, 중소기업청, 서울시 및 은행권 등의 수혜자 정보를 전용선으로 연계
- 미소금융 복지사업자간 수혜자 면담 및 지원 정보교류

나 지역법인 지원 및 중앙재단 업무확충 시스템 구축

- ☐ 수혜대상자에 대한 상담·심사·대출·상환 등 미소금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시스템 개발
- ☐ 컨설팅, 사후교육, 채권관리, 회계 등 다양한 사후관리 활동을 지원

4 미소금융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및 성과 평가

가 미소금융사업자 관리

- ☐ 채권서류·서식의 표준화 및 효율적 관리
 - 채권서류·서식의 법률적 요건 충족을 위한 표준화
 - 분실, 손·망실, 채권확보의 일환으로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활용한 문서관리
- ☐ 정기적인 업무보고 체계 구축
 - 복지사업자의 사업계획, 사업실적, 결산보고 등의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업무보고 체계 구축

□ 전문가 그룹을 통한 업무지원 서비스체제 강화

- 중앙재단이 보유한 전문가그룹(법률, 회계, 금융)을 통해 각 복지사업자의 업무지원 서비스 강화

나 미소금융사업자 감독

- ◇ 미소금융사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원금 사용의 효율성 제고
- ◇ 사후 처벌적 감독보다 사전 예방적 감독에 중점을 둠

① 주요 감독사항

- 복지사업 등을 수행하는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는지 여부
- 지원금 교부신청 시 제출한 사업의 이행여부 및 거짓신청 점검
- 복지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이 충분히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 지원기준 및 세부업무처리절차의 준수 여부

② 감독방법

- (모니터링) 복지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대출 및 상환 실적 등)를 통하여 월 2회 이상 실시
- (정기점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연 2회 방문점검 실시
- (특별점검) 복지사업자의 자료제출 거부, 중대한 고객민원 등 특별 사유 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방문점검 (수시실시)

다 미소금융사업자 평가

◇ 미소금융사업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과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중요

□ 성과평가 지표개발

○ 재무적 성과지표 : 수익성, 성장성, 건전성 측면고려

* ROA, ROE, 당기순이익, 회수율, 연체율,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 사회적 성과지표 : 고객과의 관계, 지역영향 측면고려

* 대출실적, 서비스의 질, 고객 불만건수, 지역 실업률, 신규 자영업자 수 등

** 성과지표예시 : 재무적성과(수익성, 건전성 지표 등), 사회적성과(고객과의 관계, 사회적 책임, 사회적 통합 등)

□ 미소금융 사업자에 대한 성과평가 시행

○ 사업추진 전, 기관평가 기준 및 시행방안을 사전 고지

○ 년1회(결산일 기준), 복지사업자에 대한 성과평가 시행

□ 성과평가의 활용

○ 복지사업자·수혜자에 대한 분석을 통한 주요정책을 개발하고,

○ 연도별 사업계획수립과 복지사업자 선정 및 운영에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

- ◇ 체계화된 교육을 통해 미소금융 지원효과를 극대화 할 전문가 양성
- ◇ 교육대상(대표자, 기간요원, 자원봉사자 등)의 요구 역량에 따른 「교육·훈련 운영계획」 마련 후 시행

- 사업초기 인 점을 고려하여 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하여 교육추진
 - 컨설팅·창업·경영관련 교육은 소상공인진흥원 등에 위탁
 - 기타, 금융관련 교육은 금융연수원 및 금융기업재단 등에 위탁
- 향후, 자체 교육실시를 위한 Infra구축 → “마이크로크레딧 전문 교육기관화”
 - 「교육·훈련 운영계획」 수립
 - * 교육운영방향, 교육운영계획, 과정별 세부운영계획, 실행계획, 교육훈련비 등 반영
 - 기존 마이크로크레딧 교육프로그램, 자활 컨설팅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한 자체 교육프로그램 개발 추진
 - 지역법인 뿐만 아니라, 기존 복지사업자에게도 체계적인 교육·컨설팅·사후관리 시스템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
 - 기 양성된 마이크로크레딧 전문인력(RM) D/B를 활용한 향후 인력운영 및 교육운영체계 마련

가 소액금융사업

☐ 저소득층 창업지원

- 기존 및 신규 사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 정립

☐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사회적기업 지원

-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토록 지속 지원

-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

- 대출금 상환능력 제고와 저소득층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자금지원 외에 교육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

* 노동부 등의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지원방안 모색(홍보, 컨설팅 등)

☐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 전체 지원금 대비 신용회복 부문에 대한 지원금 재조정 필요

- 창업분야 지원 중점 추진 방향에 맞추어 지원규모를 다소 축소

☐ 전통시장 영세상인을 위한 소액대출 지원

- 건실한 상인회를 중심으로 지원

○ 사후관리 체계 강화

- 대출업무에 필요한 회계장부, 계약서 및 각종 서식 등을 표준화하여 일선 상인회에 보급

* PC용 기장 프로그램 및 장부책자를 배포 및 교육하여 실질적인 사용을 유도

-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관리감독 매뉴얼 작성 및 동 내용에 대한 설명서, 지침 등 배부
- 현장방문을 강화하여 대출운영, 연체관리 등의 업무지원

나 **소액보험사업**

□ 지원금의 증액을 통한 사업 확대

○ 사업규모 및 수혜대상 확대

- '09년도 40억원 규모 → 50억원 규모로 확대
- 저소득 빈곤아동,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수혜대상 다양화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익기관과 협력하여 수혜대상을 폭넓게 발굴·추천받아 선정

□ 보험상품의 보완 및 신규개발

- 빈곤아동 보험은 보장성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완
- 장애인 및 다문화가정 등의 수혜대상 다양화에 따른 신규 상품 개발

7

원권리자 보호 체계 강화

- ☐ 휴면예금 출연 정보 확인 및 지급절차 제도 개선
 - 철저한 본인확인 절차의 이행 및 정확한 출연 자료 제출에 대한 확인 절차 강화를 통해 휴면예금 지급의 적합성을 유지
 - 출연자료의 신속하고 정확한 제출을 위한 전송시스템 구축
- ☐ 원권리자 보호를 위한 백업 시스템 강화

8

미소금융사업 홍보

- ☐ 효과적 홍보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홍보전문가 채용 및 전문 홍보대행사 선정
 - 사업성격에 적합한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각종 행사 참여 및 광고에 활용
- ☐ 홍보방법을 최대한 다양화하여 서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소통창구 확보
 - (언론 홍보) 사업이슈별 보도자료 배포, 인터뷰 등 언론 활동 확대
 - (광고 홍보) TV·라디오 캠페인, 신문광고(무가지 포함) 등 전국권 매체를 활용한 광고 홍보
 - (기타 광고 및 홍보) 교통광고, 옥외매체 등을 활용한 광고 홍보, 인터넷 배너, 공중파TV 프로그램 협찬 등
- ☐ 콜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수혜대상 고객만족 제고
 - 현재 6명을 20명 수준으로 확대
 - 전화응대 비율을 일반 콜센터 수준으로 제고

IV. 자원 조달 규모 및 사업별 배분 방안

1 자원 조달 규모('10년도 추정치)

- ◇ '10년도 자원 조달 규모 : 3,000억원
- 휴면예금 : 700억원
 - 기부금 : 2,300억원

- 휴면예금 출연 예상액 : 700억원
- 은행권 : 500억원
 - 보험권 : 200억원

- 기부금 모금 예상액 : 2,300억원
- 6개 기업 기부금 : 950억원
 - 5개 은행 기부금 : 440억원
 - 일반기부금(은행 등) : 910억원

※ 누계

(단위 : 억원)

구분			2009년말 누계	2010년 추정치	누계
휴면 예금	은행권		2,682	500	3,182
	보험권		1,262	200	1,462
	소계		3,944	700	4,644
기부금	지정 기부금	6개 기업	1,050	950	2,000
		5개 은행	440	440	880
	일반 기부금	18개 은행	746	859	1,605
		증권유관기관	500	-	500
		기타 개인 등	6	51	57
		소계		2,742	2,300
	합계		6,686	3,000	9,686

2

사업비 배분(안)

□ '10년도 사업비 : 2,228억원

○ 미소금융사업비 : 1,778억원

- 지정기부금사업비 : 6개 기업 1,050억원

5개 은행 440억원

- 일반기부금사업비 : 지역법인 288억원 (70개 법인)

○ 기존 소액금융사업비 : 400억원

○ 소액보험사업비 : 50억원

V. 추진 일정

사업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미소금융사업의 성공적 자리매김	<input type="checkbox"/> 1단계 네트워크 구축(20~30개) <input type="checkbox"/> 2단계 네트워크 구축(30~40개) <input type="checkbox"/> 기부금(미소금융)사업: 지원금신청/교부 <input type="checkbox"/> 기존복지사업(소액금융): 신청,심사,선정,교부 <input type="checkbox"/> 소액보험: 수혜자선정, 지원금 교부	'09.12월~'10.5월 6~12월 1~12월 1~3월 7~9월
재단 사업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운용	<input type="checkbox"/> 지속 가능한 모금활동 추진 <input type="checkbox"/> 다양한 금융상품에 연계한 운영재원 수익의 극대화	1~12월 1~12월
미소금융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input type="checkbox"/> 미소금융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input type="checkbox"/> 지역법인 지원 및 중앙재단 업무확충 시스템 구축	1~7월 1~12월
미소금융사업자 관리·감독·평가	<input type="checkbox"/> 관리: 관리체계 및 세부추진방안 마련 (채권서류표준화, "공전소", 정기보고체계 등) <input type="checkbox"/> 감독: 복지사업자 감독방안 재구축 <input type="checkbox"/> 평가 지표개발 및 평가체계 재구축 <input type="checkbox"/> 복지사업자 관리,감독,평가 방안 교육/시행	1~2월 1~2월 1~2월 1~12월
원권리자보호 체계 강화	<input type="checkbox"/> 원권리자 보호를 위한 지급절차 개선 및 시행 <input type="checkbox"/> 백업시스템 강화 및 다양한 통계 정보 개발	1~12월 1~12월
미소금융사업 홍보	<input type="checkbox"/> 홍보대사 및 홍보대행사 선정 <input type="checkbox"/> 매체별 홍보실시	1~2월 1~12월

<별지 2>

2010년도 예산(안)

2009. 12

미소금융중앙재단
(휴면예금관리재단)

I. 예산 총칙

제1조 휴면예금관리재단(이하 “재단”이라고 한다)의 2010년도 예산 중 수입예산은 은행 및 보험사의 출연금과 그 운영수익금, 기부금과 그 운영수익금 등으로 편성하고, 지출예산은 재단사업비와 재단운영비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제2조 ① 재단사업비는 소액금융사업비, 소액보험사업비 및 기부금사업비로 구분계리하며, 소액금융사업비는 은행 출연금 및 그 운영수익금에서 전입하여 편성하고, 소액보험사업비는 보험사 출연금의 운영수익금으로 편성하며, 기부금사업비는 기부금 및 그 운영수익금에서 전입하여 편성한다.

② 소액금융사업비 중 소액금융 복지사업자의 운영비는 은행 출연금의 운영수익금에서 충당하고, 기부금사업비 중 지역지점 운영비는 기부금 및 그 운영수익금에서 충당한다.

제3조 재단운영비는 은행 및 보험사 출연금의 운영수익금과 기부금의 운영수익금으로 편성하되, 각각의 출연금 및 기부금의 비율과 사업비의 비율을 50%씩 반영하여 충당한다.

제4조 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기부금사업비는 이사장이 집행한 후 차기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5조 2010년도 예산의 집행기간은 2010.1.1부터 2010. 12. 31까지로 한다.

< 지출예산 편성지침 >

기 본 방 향

- ◆ 서민 자활 지원을 위한 미소금융사업 확대
- ◆ 사업 확대에 따른 인력 증원, 사업 지원비 등을 운영비에 반영

① 미소금융사업 지원

- 기업·은행 재단에는 기업·은행이 출연하는 금액(1,490억원) 전액 지원
- 지역지점(약 70개)은 1개 지점당 5억원 수준 지원

② 기존 복지사업 지원 지속

- 소액금융사업비 : '09년 400억원과 동일
- 소액보험사업비 : '09년 40억원 → '10년 50억원

③ 재단운영비는 사업 확대에 따른 인력 증원분 및 통합시스템 구축비 등 반영

- 급여 및 제 수당 동결
 - 다만, 사업 확대에 따른 신규 인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반영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비 및 네트워크 추진에 따른 통신비, 콜센터 운영에 따른 용역비, 홍보강화에 따른 홍보비, 전국 지역지점 설치에 따른 행사비 등은 증액
- 예비비는 전년도와 같이 총 예산의 2%로 유지

II. 수입 · 지출예산

1. 수입 예산

(단위 : 천원)

관	항	목	'10년도 예산액	비 고
기본재산 전입금	기본재산 전입금	은행출연금 전입금	40,000,000	소액금융사업비
		기부금 전입금	174,000,000	기부금사업비
이자수입	이자수입	은행출연금 이자수입	3,790,462	재단운영비
		보험출연금 이자수입	6,194,876	소액보험사업비 : 5,000,000 재단운영비: 1,194,876
		기부금 이자수입	4,950,000	재단운영비 등
계			228,935,338	

2. 지출예산

가. 총괄표

(단위 : 천원)

관 항 목	'10년도 예산액	'09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재단사업비	222,800,000	44,000,000	178,800,000	406.4
소액금융사업비	40,000,000	40,000,000	-	-
소액보험사업비	5,000,000	4,000,000	1,000,000	25.0
기부금사업비	177,800,000	-	177,800,000	-
재단운영비	6,135,338	4,066,576	2,068,762	50.9
자산취득비	304,989	832,525	△527,536	△63.4
인건비	1,246,400	1,169,457	76,943	6.6
일반관리비	4,441,619	1,981,219	2,460,400	124.2
예비비	120,301	70,541	49,760	70.5
퇴직급여충당금	22,029	12,834	9,195	71.6
계	228,935,338	48,066,576	180,868,762	376.3

나. 지출예산 세부내역

1) 재단사업비

(단위 : 천원)

항 목	'10년도 예산액	'09년도 예산액	증가액	증가율 (%)	세부내역
소액금융사업비	40,000,000	40,000,000	-	-	- 저소득층 창업 신용대출 - 신용회복지원사업 - 사회적기업 지원 - 전통시장 영세상인 지원
소액보험사업비	5,000,000	4,000,000	1,000,000	25.0	- 저소득층 보험계약체결 및 유지 지원사업
기부금사업비	177,800,000	-	177,800,000	-	- 미소금융사업
계	222,800,000	44,000,000	178,800,000	406.4	

2) 재단운영비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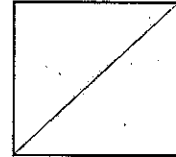
항 목	'10년도 예산액	'09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	세부내역
I. 자산취득비	304,989	832,525	△527,536	△63.4	
비 품	294,900	828,258	△533,358	△64.4	- 전산시스템 구축비용 - 기타 집기비품 등
보 증 금	10,089	4,267	5,822	136.4	- 차량리스에 따른 보증금
II. 인건비	1,246,400	1,169,457	76,943	6.6	
급 여	911,100	911,100	0	0.0	- '10년 23인 기준('09년 23인)
잡 급 여	152,400	107,616	44,784	41.6	- 파견수당, 이사장 및 고문 활 동비, 계약직 급여 등
제 수 당	155,900	123,741	32,159	26.0	- 가족수당, 연차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전산회계수당
성과상여금	27,000	27,000	-	-	- 성과상여금

(단위 : 천원)

항 목	'10년도 예산액	'09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	세부내역
III. 일반관리비	4,441,619	1,981,219	2,460,400	124.2	
소모품비	29,100	19,770	9,330	47.2	- 사무용품, 복사기 및 팩스 소 모품비
인 쇄 비	37,800	26,600	11,200	42.1	- 사업설명자료, 회의자료 및 보 고서, 봉투 등 인쇄비
도서신문비	8,340	8,160	180	2.2	- 도서자료구입, 신문구독료
수 선 비	7,600	3,152	4,448	141.1	- 사무실 전기 및 전화공사 등
통 신 비	303,914	49,074	254,840	519.3	- 전화료, 인터넷이용료, MC지원 정보 네트워크 전용회선료 등
보 험 료	8,134	1,880	6,254	332.6	- 전산시스템 동산보험료 등
수 수 료	6,000	1,800	4,200	233.3	- 은행수수료, 증명서발급 등
용 역 비	548,600	30,000	518,600	1728.7	- 공인회계감사, 법률자문료, 콜 센터 용역비 등
홍 보 비	1,388,000	543,500	844,500	155.4	- TV/RADIO/신문매체 광고비 등
세금과공과	117,224	116,787	437	0.4	- 사업소세, 4대보험료
급 식 비	34,776	33,264	1,512	4.5	- 야근, 휴일근무 식대
지급임차료	296,824	212,612	84,212	39.6	- 사무실 임차관리비 등
전산업무비	751,831	279,436	472,395	169.1	- MC통합정보시스템 개발비용, 신 용정보조회서비스 등
차 량 비	66,266	31,750	34,516	108.7	- 이사장 및 업무용차량 리스비, 유류대 등
복리후생비	131,500	104,100	27,400	26.3	- 직원 건강진단비, 출퇴근비보조, 정액급식비 등
사무차운영비	5,520	5,520	-	-	- 사무실 생수, 내방객용 음료 등
직무수행경비	94,800	94,800	-	-	- 직급보조비 및 월정직책급
여비교통비	85,850	82,354	3,496	4.2	- 시내교통비, 국내외출장비

(단위 : 천원)

항 목	10년도 예산액	09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	세부내역
업무추진비	138,000	120,000	18,000	15.0	- 사업추진관련 업무협의비
조사연구비	50,000	30,000	20,000	66.7	- 연구용역비
수도광열비	30,000	30,000	-	-	- 전산실 전기요금
회의운영비	143,020	98,200	44,820	45.6	- 이사회, 자문위원회, 복지사업 자 선정위원회 등
행 사 비	54,790	8,810	45,980	521.9	- 미소금융지역법인 개소식행사, 복지사업자 지원금교부식 등
체육진흥비	12,800	12,800	-	-	- 임직원 체육행사
교육훈련비	81,330	27,250	54,080	198.5	- 지역계단 대표자 및 자원봉사자 교육, 복지사업자 워크샵 등
잡 비	9,600	9,600	0	-	- 내방객주차료, 사진인화료 등
IV. 예비비	120,301	70,541	49,760	71.6	- 지출예산의 2%
예 비 비	120,301	70,541	49,760	70.5	
V. 퇴직급여충당금	22,029	12,834	9,195	71.6	
퇴 직 금	22,029	12,834	9,195	71.6	
합 계	6,135,338	4,066,576	2,068,762	50.9	



의안번호	10-13-09
의결 연월일	2010. 12. 29. (제 13 차)

의결
사항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출자	휴면예금관리재단 이사장
제출연월일	2010. 12. 29.

1. 의결주문

“2011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미소금융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활성화 추진을 통하여 금융 소외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서민생활의 안정 및 복지 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사업계획안
---	-------

(1) 사업의 영속성 확보

- ☐ '11년도 재원조달 조성목표 달성 : 약 2,900억원
- ☐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운영수익률의 개선
- ☐ 사전·사후관리를 통한 연체율 최소화 및 재원고갈 방지
- ☐ 외부경영공시를 통한 경영의 투명성 제고

(2) 제도적 인프라 재정비

- ☐ 고객 접근성 제고
- ☐ 정보관리시스템의 안정성 강화 및 확장

(3) 사업의 안정적 운영

- ☐ 미소금융사업의 활성화
- ☐ 특성화된 사업모델의 구축
- ☐ 각종 제도의 개선

(4) 전문인력 양성 및 사후관리 강화

- ☐ 교육·훈련을 통한 미소금융 전문인력 양성
- ☐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5) 외부협력 및 홍보 강화

- ☐ 사회적 네트워킹 강화
- ☐ 해외협력을 통한 국제화
- ☐ 제도 및 성공사례 홍보

(6) 재원조달 규모 및 사업별 배분방안

- ☐ 재원조달 규모 : 2,900억원
 - 휴면예금 출연 예상금액 : 약 700억원
 - 기업·은행권 기부금 : 1,440억원
 - 일반기부금(은행 등) : 760억원

□ 사업 목표액 : 2,052억원

○ 미소금융사업 : 1,602억원

- 지정기부금사업 : 1,440억원

- 일반기부금사업 : 162억원

○ 기존 소액금융사업 : 400억원

○ 소액보험사업 : 50억원

나 예산안

(1) 예산 편성 기준

□ 예산편성은 자본예산과 경상예산으로 구분하여 편성

○ 자본예산

- 수입예산은 은행·보험사의 출연금 및 기부금 등으로 편성하고, 지출예산은 소액금융사업 및 기부금사업을 위한 대출재원과 자산투자금 등으로 구성

○ 경상예산

- 수익예산은 은행·보험사의 출연금 및 기부금에서 발생한 운영 수익금으로 하고, 비용예산은 운영비와 사업비로 구분하여 편성

□ 예산 편성 기본방향

○ 서민 자활 지원을 위한 미소금융사업 확대

○ 사업확대에 따른 인력증원, 사업지원비 등을 운영비에 반영

(2) 자본예산 편성 내용

□ 수입예산 : 310,000백만원

- 출연금 : 70,000백만원
- 지정기부금 : 144,000백만원
- 일반기부금 : 76,000백만원
- 대출금회수 : 20,000백만원

□ 지출예산 : 221,303백만원

- 재단사업비 : 200,200백만원
 - 소액금융사업비 : 40,000백만원
 - 기부금사업비 : 160,200백만원
- 자산취득비 : 1,103백만원
- 원권리자지급 : 20,000백만원

(3) 경상예산 편성 내용

□ 수익예산 : 19,940백만원

- 이자수익 : 19,940백만원

□ 비용예산 : 15,071백만원

- 재단사업비 : 6,826백만원
 - 소액보험사업비 : 5,000백만원
 - 지점운영비 : 1,826백만원

- 재단운영비 : 8,245백만원
 - 인건비 : 1,595백만원
 - 일반관리비 : 5,970백만원
 - 예비비 : 680백만원

※ 세부내역은 별지 참조

(4) 예산 집행 기간 : 2011.1.1 ~ 2011.12.31

< 별지 1 > 2011년도 사업계획안

< 별지 2 > 2011년도 예산안

< 별지 1 >

2011년도 사업계획(안)

2010. 12.



목 차

I. 2010년 업무추진 실적

II. 2011년 사업추진 기본 방향

III. 2011년 사업추진 세부 계획

IV. 2011년 사업추진 일정

I**2010년 업무추진 실적****1****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원권리자 보호****가****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운영** ('10.12월말 예상)

< 2010년 재원 조성 >

◇ 3,567억 원(누계 1조122억 원)의 재원을 조성

○ 휴면예금 : 1,076억 원*(누계 5,020억 원)

* 은행권 660억(3,342억), 보험권 416억(1,678억)

○ 기부금 : 2,491억 원*(누계 5,102억 원)

* 6개기업 1,050억(2,100억), 5개은행 440억(980억), 은행등 1,001억(2,022억)

□ 214억 원의 자금운용 수익 발생

○ 운용금액 : 6,415억 원(정기예금 및 MMDA)

○ 운용수익 : 214억 원*

* 정기예금 186억 원, MMDA 28억 원

□ 대출자금 회수액 : 180억 원

나**원권리자 보호** ('10.12월말 예상)

□ 200억 원(67,000건)의 휴면예금·보험금을 원권리자에게 지급

○ 은행권 110억 원(48,000건), 보험권 90억 원(19,000건)

* '08~'10년 누계 : 은행권 244억 원(87,524건), 보험권 201억 원(30,481건)

2

미소금융사업의 성공적 자리매김

가

전국 네트워크 구축 (‘10.12월말 예상)

□ 106개의 지점을 설립

- 기업·은행재단 81개, 지역지점 25개
- 수도권 48개, 지방 58개

나

미소금융사업의 활성화 (‘10.12월말 예상)

< 2010년 사업 지원 >

◇ 1,614억원의 사업자금을 지원

- 기업·은행재단 1,499억원, 지역지점 115억원
- 재단·지점을 통하여 739억원을 대출
 - 기업·은행재단 669억원, 지역지점 70억원

◇ 지원 활성화를 위한 노력

- 미소금융 신용평가시스템(CSS) 개발을 통한 수혜대상자 확대
- 수혜자에 맞는 다양한 신규상품 개발을 통한 지원

다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 중복수혜 방지 등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 미소금융지점 업무지원 및 효율적인 정보연계 체계 구축

- 지점 ‘예산회계시스템’ 및 외부출장 ‘모바일 시스템’ 구축 등

라 교육·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10.12.17일·현재)

- ☐ 수혜자 사전·사후관리 교육(수료 1,308명) 및 컨설팅(2,087명)
- ☐ 지점 자원봉사자에 대한 전문화 교육(총 9회)
- ☐ 자체 교육 실시를 위한 인프라 구축
 - 「미소금융 전문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한국금융연수원)
 - 「미소금융중앙재단 교육훈련 계획(안)」 수립
- ☐ 미소희망봉사단을 통한 미소금융수혜자 지원
 - 자원봉사자 1,719명
 - 전문지식 554명, 재능나눔 32명, 일손지원 1,133명

마 미소금융사업 적극 안내

- ☐ 미소금융 상담창구의 다양화, 편의성 제고
 - 「찾아가는 미소금융」 서비스 개시(홍보버스 등)
 - 서민금융 통합 서비스(One-stop)의 제공
 - 미소금융 신문고 개설 운영
- ☐ 미소금융 홍보 확대 및 대내외 네트워크 구성
 - 주요 대학(연세대, 고려대, 부산대 등) 내 마이크로파이낸스 과목 개설
 - 미소금융 국제컨퍼런스 공동 개최
 - 우수 종사자, 자원봉사자, 유관단체 포상 기념행사 개최
 - 「건강한 가계경제 캠페인」 공동 주최(KCB)
 - 전시회·포럼·온라인 등을 통한 홍보활동 강화

3

기존 복지사업에 대한 지속 지원

가 소액금융 지원

< 2010년 사업 지원 >

◇ 지원 금액 : 400억원

- 창업·취업 68억, 사회적기업 75억, 신용회복 145억, 전통시장 112억

* 신용회복 15억원은 이사회를 거쳐 추가 교부 계획

□ 분야별 신규 복지사업자를 발굴하여 지원

- 창업·취업분야 : 5개 복지사업자 → 8개 복지사업자
- 사회적기업분야 : 4개 복지사업자 → 5개 복지사업자
- 전통시장소액대출 : 39개 전통시장 → 226개 전통시장

□ 사후관리체계 강화

- 복지사업자에 대하여 상환목표를 설정 및 인센티브제 도입
- 자금관리시스템 도입 및 각종 서식의 표준화

나 소액보험 지원

< 2010년 사업 지원 >

◇ 지급 금액 : 50억원

- 저소득층아동 보험 42억원, 장애인복지이용시설 보험 8억원

□ 수혜대상 확대 등

- 다문화가족 등 신규 수혜대상 발굴 및 지원 확대
- 소액대출자를 위한 단체신용상해보험 도입

참고

'10년 복지사업 추진현황 요약 ('10.12.15일 기준)

(단위:건,억원)

구분	분야	복지 사업자명	'08년			'09년			'10년			누계			
			지원 금	대출		지원 금	대출		지원 금	대출		지원 금	대출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소액 금융	창 업	사회연대은행	25.0	148	25.0	10.0	55	10.0	-	-	-	35.0	203	35.0	
		신나는조합	6.0	28	6.0	5.0	-	-	-	5	0.8	11.0	33	6.8	
		소상공인 진흥원	-	-	-	40.0	212	40.0	-	-	-	40.0	212	40.0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	-	-	-	10.0	30	10.0	20.0	25	11.0	30.0	55	21.0	
		해피월드 복지재단	-	-	-	15.0	82	15.0	28.0	102	18.5	43.0	184	33.5	
		나눔과기쁨	-	-	-	-	-	-	5.0	7	1.4	5.0	7	1.4	
		함께일하는 사람들	-	-	-	-	-	-	10.0	12	4.7	10.0	12	4.7	
		부산복지 개발원	-	-	-	-	-	-	5.0	3	0.6	5.0	3	0.6	
		소계	31.0	176	31.0	80.0	379	75.0	68.0	154	37.0	179.0	709	143.0	
	사 회 적 기 업	함께일하는 재단	20.0	15	20.0	-	-	-	10.0	9	10.0	30.0	24	30.0	
		열매나눔재단	-	-	-	10.0	12	10.0	20.0	23	17.7	30.0	35	27.7	
		민생경제 정책연구소	-	-	-	20.0	15	18.3	10.0	10	11.7	30.0	25	30.0	
		민생포럼	-	-	-	10.0	10	10.0	25.0	8	12.1	35.0	18	22.1	
		사람사랑	-	-	-	-	-	-	10.0	4	4.0	10.0	4	4.0	
		소계	20.0	15	20.0	40.0	37	38.3	75.0	54	55.5	135.0	106	113.8	
	신용 회복	신용회복위	120.0	4,093	120.0	140.0	4,834	140.0	117.0	3,764	117.0	377.0	12,691	377.0	
		한마음금융	60.0	2,594	60.0	20.0	847	20.0	13.0	497	13.0	93.0	3,938	93.0	
		소계	180.0	6,687	180.0	160.0	5,681	160.0	130.0	4,261	130.0	470.0	16,629	470.0	
	전통 시장	지방자치 단체	10.0	627	10.0	118.7	2,213	103.2	112.0	1,593	74.4	240.7	4,433	187.6	
	합 계		241.0	7,505	241.0	398.7	8,310	376.5	385.0	6,062	296.9	1,024.7	21,877	914.4	
소액보험		보험회사		30.0	3,279	28.8	40.0	12,607	36.4	50.0	8,398	41.3	120.0	24,244	106.5
총 계			271.0	10,784	269.8	438.7	20,917	412.9	435.0	14,420	338.2	1,144.7	46,121	1,020.9	

4

업무성과 및 보완사항

가 긍정적 성과

- 미소금융사업 추진의 안정적 기반을 확보
 - 미소금융사업의 기반이 되는 재원을 지속 조성
 - 미소금융사업 수행기관의 증가로 접근성을 대폭 확대
- 미소금융에 대한 인식 및 저변을 확대
 - 금융과 복지를 결합한 미소금융의 인식을 확대
 - 비제도권의 대표적인 서민금융으로 정착

나 보완 사항

- 사업초기 대출실적이 당초 기대에 미흡
 - 사업초기 인프라구축에 대한 집중으로 대출실적이 다소 부진
 - 대출실적은 지점확대, 상품다양화 등으로 점차 증가 추세
 - * 최초 100억원 돌파에 6개월 소요
 - 10월 및 11월에는 한달에 각각 130억원, 159억원 대출 달성
- 사전·사후관리체계 운영의 전문성 부족
 - 사전 적격성 심사의 운영효율성 저하
 - 사업추진 인력 부족 및 전문성확보 미흡
 - 수혜자에 대한 컨설팅 및 사후관리 지원 미흡
 - 자금상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족

Ⅲ

2011년 사업추진 기본 방향

1

2011년 사업 환경

가

경제 환경

- ☐ 경제지표 악화로 미소금융 수요 증가 예상
 - 경제성장세 둔화로 기업 구조조정 지속 예상
 - 소비자물가 상승,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 예상
- ☐ 사업재원 마련 여건 악화
 - 경기둔화로 기업·개인의 기부 축소
 - 일부 사회복지단체의 도덕적해이 부각

나

대외 환경

- ☐ 국회·정부 중심의 제도개선 요구
 - 실적 부진, 상환율 저조에 따라 사업의 지속가능성 우려
 - 교육·훈련, 사전·사후컨설팅 등에 대한 전문성 제고 요구
 - 제도의 개선 및 상품의 다양화에 대한 요구
- ☐ 기존 복지사업자의 요구 증대
 - 운영비 지원을 지속 요구
 - 사업 참여에 따른 제반조건 완화를 요구



그간의 성과에 기반한 안정적인 대출 확대와 질적
내실화를 통한 미소금융의 토대를 확고히 구축할 필요

VISION

금융소외계층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사업목표

미소금융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활성화 추진

전략과제

1. 사업의 영속성 확보

2. 제도적 인프라 재정비

3. 사업의 안정적 운영

4. 전문인력 양성 및 사후관리 강화

5. 외부협력 및 홍보 확대

5개 부문 14대 중점 사업

① 사업의 영속성 확보

1. 재원의 안정적 확보 : 2,900억원
2. 재원의 효율적 운용 : 자금운용수익률 개선
3. 사전·사후관리를 통한 재원고갈 방지 : 연체율 최소화
4. 외부 경영공시를 통한 경영의 투명성 제고

② 제도적 인프라 재정비

5. 고객 접근성 제고 : 130개의 지점 운영
6. 정보관리시스템의 안정성 강화 및 확장

③ 사업의 안정적 운영

7. 사업의 활성화 : 2,052억원
8. 특성화된 사업모델 구축
9. 각종 제도의 개선

④ 전문인력 양성 및 사후관리 강화

10. 교육·훈련을 통한 미소금융 전문인력 양성
11.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⑤ 외부협력 및 홍보 확대

12. 사회적 네트워킹 강화
13. 해외협력을 통한 국제화
14. 제도 및 성공사례 홍보

1

사업의 영속성 확보

①

재원의 안정적 확보

< 2011년 재원조성 목표 >

◇ 2,900억원의 재원조성을 목표

- 휴면예금 : 700억원(은행권 500억원, 보험권 200억원)
- 기부금 : 2,200억원
 - 6개기업 : 1,000억원(삼성 300억, 현대·LG·SK 각 200억, 롯데 50억, PCSCO 50억)
 - 5개은행 : 440억원(KB·우리·기업 각 100억, 신한 100억, 하나 40억)
 - 은행 등 : 760억원(부실채권정리기금 700억, 기타 60억)

□ 휴면예금 출연의 실효성 확보 및 기부 활성화

- 휴면예금의 안정적 출연과 확대를 위한 방안 강구
- 개인 및 기업의 기부 활성화를 통하여 재원을 확대·다양화

②

재원의 효율적 운용

□ 운용수익률 개선

-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운용 검토
 - 정기예금 이외의 다양한 상품 운용을 통한 수익확대 추구
- 휴면예금·보험금의 적기 출연을 유도하여 기간수익률을 제고

□ 안정성을 우선으로, 유동성과 수익성을 동시 추구

③ 사전·사후관리를 통한 재원고갈 방지

☐ 연체율 최소화

- 상환율 제고를 위한 사전·사후관리 강화
 - 대출심사의 전문성 및 컨설팅 능력의 제고
 - 사후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실행
 - * Risk관리부서 신설, 성실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제(소액저축제도 등) 도입 등
- 복지사업자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상환율 제고
 - 복지사업자에 대한 상시 감독체계 도입
 - 복지사업자·수혜자 분석을 통하여 사업의 내실화 도모

☐ 대출 이자율의 현실화 방안 검토

- 자금조달비용, 사업운영비용, 대손비용, 시장금리, 물가상승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 등을 고려한 적정금리 반영

☐ 운영경비 절감을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확보

- 긴축재정의 수립·실천을 통하여 운영의 내실화 도모
- 회계·자금관리를 표준화하여 지역지점의 자금관리를 강화

④ 외부 경영공시를 통한 경영의 투명성 제고

☐ 홈페이지를 통하여 재단의 주요경영사항을 분기별로 공시

- 주요 경영정보를 대외적으로 제공하여 경영 투명성을 제고
- 이해관계자의 알권리와 참여기회를 확대

2

제도적 인프라 재정비

⑤

고객 접근성 제고

☐ 지점 운영 : 130개

- 전통시장, 군소도시, 상대적 원격지 등에 출장소 추가 개소*

* 공공기관 또는 전통시장 상인회 내 사무실 설치 추진

- 기설립지점의 네트워킹 강화*를 통한 대고객서비스 제고

* 지점 상호간 정보교환 및 업무협력 강화, 지점별 심사기준 표준화

☐ 「찾아가는 미소금융」 활동 강화

- 이동상담차량 상시 운영(3대, 예산 7,500만원 반영)
- 기업·은행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대출신청 확대
- 미소희망봉사단을 통한 적극적인 미소금융 홍보활동 전개

⑥

정보관리시스템의 안정성 강화 및 확장

☐ 통신장비 이중화를 통한 안정성 강화(예산 약 1억7,700만원 반영)☐ 정보의 다차원 분석 시스템 구축(예산 약 2억8,000만원 반영)

- 개별기준에서 생성되는 사업정보를 전사적으로 통합관리

☐ 업무시스템의 신규·추가 개발 등(예산 약 5억6,600만원 반영)

- 신규 개발 : 미소희망봉사단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 등
- 고도화 작업 : 미소금융 사후관리시스템 개발 등
- 기능 추가 : 미소금융 모바일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 2011년 사업 규모 >

◇ 총 2,052억원의 사업규모를 목표

- 미소금융사업 : 1,602억원
 - 기업·은행재단 : 1,440억원
 - 지역지점 : 162억원(26개 지점, 5개 출장소)
- 소액금융사업 : 400억원
- 소액보험사업 : 50억원

□ 미소금융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

- 「찾아가는 미소금융」의 범위 확대
- 다양한 특성화 상품의 지속 개발·보급
-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한 적극적 미소금융의 구현

□ 소액금융사업의 안정적 추진

- 기존 복지사업자에 대한 지원규모는 전년수준을 유지
 - 지원금을 최대한 대출할 수 있도록 사업자별로 탄력 지원
- 소외계층 중심의 복지사업자를 신규 발굴하여 수혜자 확대
- 전통시장의 경우 사업참여가 부진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참여 활동을 개진

⑧ 특성화된 사업모델 구축

- 사업목적과 대상의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모델 구축
 - 미소금융 사각지대의 신청자를 위한 심사절차 및 기준 마련
 - 소득기준을 다양화하고 신청자의 사업경험 및 자격증 보유 등의 정성적인 내용을 심사절차에 추가
 - 미소금융 특성에 부합하는 CB(Credit Bureau)모형의 지속 개발
-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대출상품 적극 개발
 - 사회적공감대가 형성된 계층에 맞춤형 대출상품을 개발·보급
 - 해당지역 자치단체 등과의 업무제휴를 통한 상품 개발
- 전통시장 고리일수 근절을 위한 신규 대출상품 도입
 - 명절물품 구매자금 대출 등 상인들의 대출 요구를 충족

⑨ 각종 제도의 개선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등 변경 적용
 - 미소금융상품의 일률적 거치기간,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을 차등 적용
 - 전통시장 소액대출 상환방식의 변경 검토
-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
 - 중앙재단 자문위원회 및 외부전문가를 통한 의견 적극 수렴
 - 기업·은행재단 및 지역지점 실무자들로 구성된 제도 개선 TF팀 회의를 정례화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

4

전문인력 양성 및 사후관리 강화

⑩

교육·훈련을 통한 미소금융 전문인력 양성

□ 「미소금융중앙재단 부설 교육센터」 설치

- 지점대표 및 기간요원을 대상으로 미소금융 전문인력 양성
- 미소금융 수혜자를 대상으로 자활·자립 지원 교육
- 실효성 있는 사전·사후 컨설팅 체계* 구축
 - * 전국 광역거점별 교육 추진, 광역시·도별 전문 컨설턴트 인력 확보 및 운영
-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한 자격인증제도 운영
- 미소금융 전문도서(연수교재, 전문서적, 정기간행물 등) 발간·보급

※ '11년 예산에 7억9,143만원* 반영

- * 교육훈련비 4억4,023만원, 자격인증제도 및 전문도서 발간 1억6,120만원, 컨설턴트 운영 1억9,000만원(기존 인력 16명을 대체, 16명×100만원/월 추가 소요)

⑪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역별·분야별 매칭 활성화

- 지역사회 내 그룹을 생성하고, 그룹별로 Mentor를 선정

□ 봉사활동의 질적 심화

- 업종별·분야별 전문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
- 성공사업자의 재능 기부를 통하여 창업·운영매뉴얼을 제작

□ 사후관리 지원 RA(RM Assistant)제도 도입 검토

- 금융출신 은퇴자를 활용하여 사후관리 모니터링 지원
- 대학생 인턴십을 통하여 수혜자 방문과 수혜자 발굴을 지원

※ '11년 예산에 2억4,022만원* 반영

- * 교통비 1억964만원, 교육훈련비 5,100만원, 보험료·인쇄비 등 7,958만원

5**외부협력 및 홍보 강화****⑫****사회적 네트워킹 강화**☐ 기존 복지사업자와의 협력

- 상호교류 및 협력관계를 위한 상시채널 구축
- 부설교육센터를 통하여 담당자 정기 보수교육 실시

☐ MF과목 개설 확대를 통한 인식의 전환

- 주요대학을 대상으로 MF과목 개설 지속 확대
 - 대학별 연계 프로그램의 하나로 사회공헌 봉사활동 진행
- 대학생 인턴십 등을 통하여 현장경험 공유

⑬**해외협력을 통한 국제화**☐ 국내외 기관과의 정보 교류

- 마이크로크레딧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유용한 정보 등 공유
- 창업 관련기관과의 교류 정례화 검토

☐ 국제회의 및 행사에 지속 참여

- 한국형 미소금융을 홍보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증대

☐ 미소금융사업의 글로벌 파트너십 참여 검토

- GPFI(Global Partner for Financial Inclusion)와 미소금융의 협력방안과 연계 (G20 서울정상회의 합의)

☐ 기부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대중홍보 강화

- 성공사례 전파 등을 통한 대중의 긍정적 관심 유도
- 기부·참여방법 및 기대효과 안내

☐ “찾아가는 미소금융”의 활성화

- 홍보버스, 미소금융 자전거 등으로 현장방문 일상화
- 홍보물품 및 전단지 배포 등으로 대면홍보 강화

☐ 커뮤니티의 활성화

- 재단 및 봉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양한 계층 활동을 지원
- 대학생기자단 등의 블로그를 통하여 미소금융 대출 체험기, 사례 소개, 수혜자 미담 등을 지속 소개

☐ 미소금융 수혜자 성공사례의 확산

Ⅳ
2011년 사업추진 일정

사업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사업의 영속성 확보	1. 재원의 안정적 확보 2. 재원의 효율적 운용 3. 사전·사후관리를 통한 재원고갈 방지 4. 외부 경영공시	1~12월 " " 3~12월
제도적 인프라 재정비	5. 고객 접근성 제고 - 이동상담 차량 운영 6. 정보관리시스템의 안정성 강화 등	1~12월 3~12월 1~12월
사업의 안정적 운영	7. 사업규모의 확대 8. 특성화된 사업모델 구축 9. 각종 제도의 개선	1~12월 " "
전문인력 양성 및 사후관리 강화	10. 부설 교육센터 설치 11.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3월 1~12월
외부 협력 및 홍보 확대	12. 사회적 네트워킹 강화 13. 해외협력을 통한 국제화 14. 제도 및 성공사례 홍보	1~12월 " "

< 별지 2 >

2011년도 예산(안)

2010. 12.



미소금융중앙재단
SMILE MICROCREDIT BANK

제1조(총칙) 2011년도 미소금융중앙재단의 예산은 자본예산과 경상예산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편성한다.

제2조(자본예산) ① 수입예산은 은행·보험사의 출연금 및 기부금 등으로 한다.

② 지출예산은 소액금융사업 및 기부금사업을 위한 대출채원과 자산투자금 등으로 구성하되, 당해연도 은행·보험사의 출연금 및 기부금의 발생 범위 내에서 편성한다.

제3조(경상예산) ① 수익예산은 은행·보험사의 출연금 및 기부금에서 발생한 운영수익금으로 한다.

② 비용예산은 운영비와 사업비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③ 운영비는 은행·보험사의 출연금 및 기부금에서 발생한 운영수익금으로 편성하되, 각각의 출연금 및 기부금의 비율과 사업비의 비율을 50%씩 반영하여 배분한다.

제4조(구분계리) ① 사업비는 소액금융사업비, 소액보험사업비 및 기부금사업비로 구분계리한다.

② 소액금융사업비는 은행출연금 및 그 운영수익금으로 편성하며, 기부금사업비는 기부금 및 그 운영수익금으로 편성한다.

③ 소액보험사업비는 보험출연금의 운영수익금으로 편성하되, 필요한 경우 출연금을 포함하여 편성할 수 있다.

제5조(보고) ① 예산편성 이후 발생한 기부금사업 대출 재원은 이사장이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원 집행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예비비는 이사장이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 집행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집행내역을 첨부하여 보고한다.

제6조(집행기간) 2011년도 예산의 집행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011년 예산편성 기본방향

□ 미소금융사업 지원

- 기업·은행재단에는 기업·은행이 출연하는 금액 전액을 지원
- 지역지점*은 1개 지점당 6억원을 한도로 하여 지원
 - * 출장소의 사업비 지원은 별도

□ 기존 복지사업 지원 지속

- 소액금융사업비 : '10년 400억원과 동일
- 소액보험사업비 : '10년 50억원과 동일

□ 전문인력 양성 및 사후관리 강화, 정보시스템 확장 등

- 전문인력 양성, 사후관리 강화, 미소희망봉사단 활동 강화에 따른 예산 증액
- 정보시스템 확장(10억원), 상담차량 구입 등(1억원)
- 임금 동결, 현원 25명 기준으로 예산 편성
- 예비비는 재단운영비의 2%와, 정원과 현원 차이 해당 인건비를 반영

1

자본 예산(안)

가

수입 예산

□ 총수입은 '10년 추정실적 대비 17.3% 감소한 3,100억원 전망

- 휴면예금 출연금 : 700억원('10년도 실적대비 34.9% 감소)
- 기업·은행 지정기부금은 3.4%(50억원) 감소한 1,440억원
- 일반기부금은 24.1%(241억원) 감소한 760억원
- 대출금 회수는 11.1%(20억원) 증가한 200억원

(단위:백만원)

계정별	'11년도 예산(안)	'10년도 추정실적	증감	
			금액	비율
수입	310,000	374,700	△64,700	△17.3%
출연금	70,000	107,600	△37,600	△34.9%
휴면예금	50,000	66,000	△16,000	△24.2%
휴면보험금	20,000	41,600	△21,600	△51.9%
지정기부금	144,000	149,000	△5,000	△3.4%
6개 기업	100,000	105,000	△5,000	△4.8%
5개 은행	44,000	44,000	0	0.0%
일반기부금	76,000	100,100	△24,100	△24.1%
은행권	70,000	70,000	0	0.0%
기타	6,000	30,100	△24,100	△80.1%
대출금 회수	20,000	18,000	2,000	11.1%

나 지출 예산

□ 총지출은 '10년 추정실적 대비 0.2% 감소한 2,213억원

○ 사업비는 '10년 실적대비 0.6% 감소한 2,002억원

- 기존 복지사업자에 대한 지원규모는 '10년 수준을 유지
- 기업·은행권의 지정기부금은 전액 사업비로 사용
- 일반기부금은 40.8% 증가한 162억원

○ 자산취득비는 '10년 실적대비 8억원 증가한 11억원

- 정보관리시스템의 안정성 강화 및 확장 예산 10억원
- 이동상담차량 상시 운영(3대) 예산 0.75억원

(단위:백만원)

계정별		'11년도 예산(안)	'10년도 추정실적	증감	
				금액	비율
지출		221,303	221,703	△400	△0.2%
재단사업비		200,200	201,400	△1,200	△0.6%
	소액금융	40,000	40,000	0	0.0%
	기부금사업	160,200	161,400	△1,200	△0.7%
	지정기부금	144,000	149,900	△5,900	△3.9%
	일반기부금	16,200	11,500	4,700	40.8%
자산취득비		1,103	303	800	264.0%
	비품	1,023	273	750	274.7%
	보증금	5	25	△20	△80.0%
	차량운반구	75	5	70	1,400.0%
원권리자 지급		20,000	20,000	0	0.0%

다 자본 수지

□ 자본수지는 886억원으로 '10년 추정실적 대비 42.0% 감소 전망

○ '10년 추정실적(1,529억원) 대비 643억원 감소

- 수입 감소(647억원) : 출연금 △376억원, 기부금 △291억원
대출금회수 20억원

- 지출 감소(4억원) : 사업비 △12억원, 자산취득비 8억원

○ 자본수지는 자금운영을 통하여 경상예산으로 사용

(단위:백만원)

계정별	'11년도 예산(안)	'10년도 추정실적	증감	
			금액	비율
수지	88,697	152,997	△64,300	△42.0%
수입	310,000	374,700	△64,700	△17.3%
지출	221,303	221,703	△400	△0.2%

2

경상 예산(안)

가

수익 예산

□ 수익 199.4억원 전망

○ 자금운용 수익은 '10년 실적대비 6.8% 감소한 199.4억원으로
전망

○ 자금운용 수익률은 3.3%*를 목표

* 국고채수익률(3년) 3.37%(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10.12.28 고시) 기준

- '11년 운용가능재원은 약 6,553억원*으로 예상

* 정기예금 등 5,830억원, MMDA 723억원

(단위: 백만원)

계정별		'11년도 예산(안)	'10년도 추정실적	증감	
				금액	비율
수익		19,940	21,396	△1,456	△6.8%
	이자수익	19,940	21,396	△1,456	△6.8%
	은행출연금	9,324	10,487	△1,163	△11.1%
	보험출연금	4,543	4,133	410	9.9%
	기부금	6,073	6,776	△703	△10.4%

나 비용 예산

□ 총비용은 '10년 추정실적 대비 22.1% 증가한 150.7억원

○ 사업비는 '10년 실적대비 7.2% 증가한 68.3억원

- 소액보험 지원규모는 '10년 수준을 유지
- 지점운영비는 33.3% 증가한 18.3억원*

* 지역지점은 '11년도에 지점 1곳당 대출재원 6억원, 사업운영재원 6,000만원을 지원금으로 배정. 단, 신규설립 지점의 경우 사업운영재원으로 7,500만원을 배정하며, '10년 12월 중 개소하는 지점은 '10년 중 업무일수를 일할 계산해 추가로 지원

(지원금의 교부방법 및 시기 등은 이사장이 결정함)

○ 운영비는 '10년 실적대비 38.0% 증가한 82.4억원

- 재단 직원의 인건비 상승 억제, 교육센터 인건비 반영
- 일반관리비는 27.1% 증가한 59.7억원(교육센터 설치 등)
- 예비비는 6.8억원* 설정

* 정현원차 예비비 : 현원(25명)에서 T/O(34명) 내 증원을 고려
일반 예비비 : 재단 운영경비의 2% 편성

(단위:백만원)

계정별	'11년도 예산(안)	'10년도 추정실적	증감	
			금액	비율
비용	15,071	12,344	2,727	22.1%
재단사업비	6,826	6,370	456	7.2%
소액보험	5,000	5,000	0	0.0%
기부금사업*	1,826	1,370	456	33.3%
재단운영비	8,245	5,974	2,271	38.0%
인건비	1,595	1,277	318	24.9%
일반관리비	5,970	4,697	1,273	27.1%
예비비	680	0	680	-

* 지점 운영비

다 차기 이월

□ 잉여금은 48.7억원으로 '10년 추정실적 대비 46.2% 감소 전망

○ '11년 잉여금은 48.7억원 발생 전망

- 수익(199.4억원) : 이자수익 199.4억원

- 비용(150.7억원)

· 사업비 68.3억원(소액보험 50억원, 지점운영비 18.3억원)

· 운영비 82.4억원(인건비 15.9억원, 일반관리비 59.7억원, 예비비 6.8억원)

○ 잉여금은 차기 이월

(단위:백만원)

계정별		'11년도 예산(안)	'10년도 추정실적	증감	
				금액	비율
차기이월 잉여금		4,869	9,052	△4,183	△46.2%
	수익	19,940	21,396	△1,456	△6.8%
	비용	15,071	12,344	2,727	22.1%

참고

2011년 재단운영비 세부내역

- 재단운영비는 '10년 추정실적 대비 38.0% 증가한 82.4억원
- ※ '10년 예산대비 9.8%(7.3억원) 증가(세부내역은 불입 참조)
- ※ 예비비 포함 : 인건비 5.3억원, 일반 1.5억원
- 재단 직원의 인건비 상승 억제, 교육센터 인건비 반영
- 현원 25인 기준으로 예산 편성(임금은 동결)
 - 교육센터 RM 인건비(16명, 1.9억원) 반영
 - '10년 입사자(10명)에 퇴직급여충당금 0.5억원 증가
- 일반관리비는 '10년 실적대비 27.1%(12.7억원) 증가한 59.7억원
- 교육센터 운영비 7.9억원 신규 편성
 - 미소희망봉사단 운영비 1.5억원 증가
 - 감가상각비 및 대손상각비 4.2억원 증가
 - 기타 부대경비 0.9억원 절감
- 예비비 6.8억원* 편성
- * 정현원차 예비비 : 현원(25명)에서 T/O(34명) 내 증원을 고려
일반 예비비 : 재단 운영경비의 2% 편성

(단위:천원)

계정별	'11년도 예산(안)	'10년도 추정실적	증감		비고
			금액	비율	
재단운영비	8,245,064	5,973,574	2,271,490	38.0%	
인건비	1,594,617	1,276,823	317,794	24.9%	
급여	1,017,700	998,006	19,694	2.0%	- 25명 기준
제수당	170,125	165,611	4,514	2.7%	
잡급여	288,000	40,571	247,429	609.9%	- 계약직 급여, RM(16명), 파견수당 등
퇴직급여충당금	118,792	72,635	46,157	63.5%	- 27명×1개월분

계정별	'11년도 예산(안)	'10년도 추정실적	증감		비고
			금액	비율	
일반관리비	5,970,468	4,696,751	1,273,717	27.1%	
소모품비	34,280	31,785	2,495	7.8%	- 사무용품 - 복사기,팩스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271,106	18,616	252,490	1,356.3%	- 회의·교육자료 인쇄 - 매뉴얼 인쇄 - 교육센터 도서발간 등 - 신문 및 간행물 구독
수선비	14,920	4,562	10,358	227.0%	- OA기기 유지보수 - 전기,전화,LAN 공사
통신비	121,027	124,411	△3,384	△2.7%	- 회선이용료, 전화료 등
보험료	30,135	28,534	1,601	5.6%	- 화재보험, 중산보험 - 직원봉사단 단체보험
수수료	5,700	2,852	2,848	99.9%	- 은행등 송금수수료 - 증명서 발급 등 수수료 - 도매인 등록 수수료
용역수수료	337,486	239,543	97,943	40.9%	- 아르바이트 직원 급여 - 법률자문 및 회계감사 - 공전소 문서 위탁발송비 - 사무실개선, 유지보수 등 - 콜센터 용역비
홍보비	484,800	635,970	△151,170	△23.8%	- TV, 라디오 홍보광고 - 홍보용품 구매 - 봉사단 홍보활동
업무안내비	465,000	416,520	48,480	11.6%	- 신문광고 - 인터넷·옥외광고 등
세금과공과	98,639	97,115	1,524	1.6%	- 사업소세, 4대보험료
지급임차료	422,440	363,521	58,919	16.2%	- 사무실 임차관리비 - 차량 렌트비
전산업무비	518,194	745,391	△227,197	△30.5%	-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차량비	22,320	12,870	9,450	73.4%	- 업무용차량 유류대 등
복리후생비	157,360	153,410	3,950	2.6%	- 직원 건강진전, 임직원 경조사비 등
직무수행경비	156,000	170,920	△14,920	△8.7%	- 월정 직책급 등
사무실운영비	9,000	5,334	3,666	68.7%	- 사무실 생수 - 내방객용 음료 등
여비교통비	282,460	88,004	194,456	220.9%	- 시내교통비 - 국내외 출장비
업무추진비	152,400	116,394	36,006	30.9%	- 사업추진 업무협의비
조사연구비	23,400	19,800	3,600	18.2%	- 연구조사비
수도광열비	25,000	20,735	4,265	20.6%	- 전산실 전기요금
회의운영비	131,790	90,613	41,177	45.4%	- 이사회, 자문위원회 - 복지사업자선정심사위원회 - 지적재산관계자 회의 등
행사비	65,950	83,951	△18,001	△21.4%	- 미소금융지역별인 개소식 - 장립기념행사 등
교육훈련비	593,860	102,475	491,385	479.5%	- 교육센터 전문인력 양성 - 체육행사 및 워크숍 등
잡비	12,088	10,170	1,918	18.9%	- 내방객 주차료 - 기타 소액물품 등
감가상각비	817,113	571,637	245,476	42.9%	- 정물법
대손상각비	718,000	541,618	176,382	32.6%	- '11년 대손잔액의 2%

계정별	'11년도 예산(안)	'10년도 추정실적	증감		비고
			금액	비율	
예비비	679,979	0	679,979	-	
예비비(인건비)	529,541	0	529,541	-	- 9인 채용
예비비(일반)	150,438	0	150,438	-	- 재단운영비의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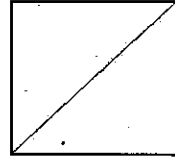
18

(붙임)

재단운영비 세부내역 ('10년도 예산 대비)

(단위: 천원)

계정별	'11년도 예산(안)	'10년도 예산	증감		비고
			금액	비율	
재단운영비	8,245,064	7,511,872	733,192	9.8%	
인건비	1,594,617	1,649,346	△54,729	△3.3%	
급여	1,017,700	1,287,000	△269,300	△20.9%	
제수당	170,125	187,917	△17,792	△9.5%	
잡급여	288,000	152,400	135,600	88.9%	
퇴직급여충당금	118,792	22,029	96,763	439.3%	
일반관리비	5,970,468	5,730,895	239,573	4.2%	
소모품비	34,280	42,300	△8,020	△19.0%	
도서인쇄비	271,106	32,940	238,166	723.0%	
수선비	14,920	7,600	7,320	96.3%	
통신비	121,027	305,474	△184,447	△60.4%	
보험료	30,135	9,334	20,801	222.8%	
수수료	5,700	6,000	△300	△5.0%	
용역수수료	337,486	548,600	△211,114	△38.5%	
홍보비	484,800	662,500	△177,700	△26.8%	
업무안내비	465,000	725,500	△260,500	△35.9%	
세금과공과	98,639	156,528	△57,889	△37.0%	
지급임차료	422,440	367,874	54,566	14.8%	
전산업무비	518,194	751,831	△233,637	△31.1%	
차량비	22,320	22,320	0	0.0%	
복리후생비	157,360	181,368	△24,008	△13.2%	
직무수행경비	156,000	129,600	△26,400	△20.4%	
사무실운영비	9,000	10,440	△1,440	△13.8%	
여비교통비	282,460	91,610	190,850	208.3%	
업무추진비	152,400	169,200	△16,800	△9.9%	
조사연구비	23,400	50,000	△26,600	△53.2%	
수도광열비	25,000	30,000	△5,000	△16.7%	
회의운영비	131,790	144,580	△12,790	△8.8%	
행사비	65,950	55,510	10,440	18.8%	
교육훈련비	593,860	96,230	497,630	517.1%	
잡비	12,088	9,600	2,488	25.9%	
감가상각비	817,113	582,338	234,775	40.3%	
대손상각비	718,000	541,618	176,382	32.6%	
예비비	679,979	131,631	548,348	416.6%	
정원원차	529,541	0	529,541	-	
일반	150,438	131,631	18,807	14.3%	



의안번호	11-09-06
의결 연월일	2011. 12. 28. (제 9 차)

의결사항

2012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제출자	휴면예금관리재단 이사장
제출연월일	2011. 12. 28.

1. 의결주문

“2012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미소금융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관리시스템 강화 등을 통한 사업의 내실화를 확고히 추진하여 금융소외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서민생활의 안정 및 복지 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사업계획(안)

가. 추진 과제

(1) 사업의 영속성 확보

- '12년도 재원조달 조성목표 달성
-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운영수익률의 개선
- 사전·사후관리를 통한 재원고갈 방지
- 재단 운영의 투명성 제고

(2) 안정적 사업운영 및 내실화

- 사업의 활성화
- 특성화된 사업모델 구축
- 미소금융 사업의 제도개선
- 기존 복지사업자 관련 제도개선

※ '12년 사업 목표 : 2,840억원

- 미소금융사업 : 2,540억원
 - 지정기부금사업 2,373억원, 일반기부금사업 167억원
- 소액금융사업 : 250억원
- 소액보험사업 : 50억원

(3) 사업 인프라 재정비

- 복지사업자에 대한 검사 체계 보완
- 다양한 경로를 통한 고객 접근성 제고
-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강화
- 개인정보보호 체계 확립

(4) 미소아카데미의 효율적 운영

- 미소금융 고객 대상자별 체계화된 교육
- 지역법인 실무자 및 자원봉사자 교육

(5) 미소희망봉사단 활성화

- 자원봉사 인력확충 및 전문성 강화
- 미소금융 이용자 지원 및 홍보활성화

(6) 외부협력 및 홍보강화

- 사회적 네트워킹 강화
- 해외협력을 통한 국제화
- 제도 및 성공사례의 지속 홍보

재무계획(안)

□ 기금 유입 : 178,260백만원

○ 기금 조달 : 161,300백만원

- 휴면예금 : 59,400백만원
- 휴면보험금 : 52,900백만원
- 일반기부금 : 25,000백만원
- 대출금회수 : 24,000백만원

* 기업·은행 지정기부금 1,200억원은 미포함

○ '12년 이월잉여 : 16,960백만원

□ 기금 운영 : 79,560백만원

○ 원권리자 지급 : 36,300백만원

- 휴면예금 : 19,700백만원
- 휴면보험금 : 16,600백만원

○ 대출 지원 : 41,700백만원

- 미소금융 지역재단 : 16,700백만원
- 기존 복지사업자 : 25,000백만원

* 기업·은행재단 사업비 1,200억원은 미포함

○ 유형자산(전산비품) 취득 : 1,560백만원

운영예산(안)

(1) 예산편성 기준 및 방향

☐ 예산편성 기준

- 수익예산은 은행·보험사의 출연금 및 기부금에서 발생한 운영 수익금으로 편성
- 비용예산은 사업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편성

☐ 예산편성 방향

- '11년도 예산규모 유지

(2) 예산편성 내용

☐ 수익예산 : 32,450백만원

- 이자수익 : 32,450백만원

☐ 비용예산 : 15,494백만원

- 재단사업비 : 6,940백만원
 - 소액보험사업비 : 5,000백만원
 - 지점운영비 : 1,940백만원
- 재단운영비 : 8,554백만원
 - 인건비 : 2,134백만원
 - 일반관리비 : 6,212백만원
 - 예비비 : 208백만원

※ 세부내역은 별지 참조

(4) 예산 집행 기간 : 2012.1.1 ~ 2012.12.31

< 별지 1 > 2012년도 사업계획(안)

< 별지 2 > 2012년도 예산(안)

< 별지 1 >

2012년도 사업계획(안)

2011. 12.



목 차

I. 2011년 업무추진 실적	8
II. 2012년 사업추진 기본 방향	16
III. 2012년 사업추진 세부 계획	18
IV. 2012년 사업추진 일정	30

I**2011년 업무추진 실적****1****사업의 연속성 확보****가****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운영** (‘11.12월말 예상)

- ☐ 3,393억원(누계 1조3,643억원)의 재원을 조성
 - 휴면예금·휴면보험금 : 1,162억원*(누계 6,183억원)
 - * 은행권 642억(3,984억), 보험권 520억(2,199억)
 - 기부금 : 2,231억원*(누계 7,460억원)
 - * 6개기업 950억(3,000억), 5개은행 730억(1,660억), 은행등 551억(2,800억)
- ☐ 301억원*의 자금운용 수익 발생
 - * 정기예금 이자 등 291억원, MMDA 10억원
- ☐ 233억원(80,428건)의 휴면예금·보험금을 원권리자에게 지급
 - 은행권 121억원(57,641건), 보험권 112억원(22,787건)
 - * '08~'11년 누계(685억원) : 은행권 366억원(148,303건), 보험권 319억원(54,416건)
- ☐ 대출자금 회수액 : 229억원

나**경영의 투명성 제고**

- ☐ 경영공시 계획안 마련
 - 2011년도 결산부터 분기별 경영공시 계획('11-05차 이사회 보고)

2

사업의 안정적 운영

가

고객 접근성 제고 ('11.12월말)

□ 전국에 39개의 지점을 설립 (출장소 13개 포함)

○ 총 145개 지점(출장소 19개 포함) 설립

- 기업·은행재단 116개(출장소 16개), 지역지점 29개(출장소 3개)

- 수도권 63개(출장소 8개), 지방 82개(출장소 11개)

나

미소금융사업의 활성화 ('11.12월말 예상)

□ 사업 활성화에 따라 사업추진 목표를 당초 1,602억원*에서 398억원 증액한 2,000억원**으로 확대 (제5차 이사회 의결, '11.7.13.)

* 기업·은행재단 : 1,440억원, 지역지점 : 162억원

** 기업·은행재단 : 1,838억원, 지역지점 : 162억원

※ 확대된 사업목표액은 당초목표액 대비 125% 수준

□ 2,539억원*을 대출하여, 사업목표액 대비 127% 수준 달성
(당초목표액 대비 158%)

* 기업·은행재단 2,390억원, 지역지점 149억원

다 소액금융사업 지원 ("11.12월말 예상)

☐ 지원 실적

○ 배정 금액 : 485억원*

* 창업 48억, 사회적기업 100억, 신용회복 100억, 전통시장 237억

○ 지원 금액 : 382.2억원*

* 창업 26억, 사회적기업 67.5억, 신용회복 100억, 전통시장 188.7억

※ 총 지원금액은 총 배정금액 대비 79% 수준

○ 대출 금액 : 414.5억원*

* 창업 47.2억, 사회적기업 63.6억, 신용회복 115억, 전통시장 188.7억

☐ 전통시장 분야 신규 시장 129개소를 발굴하여 지원

○ 전통시장 소액대출 : 200개 전통시장 → 329개 전통시장

라 소액보험사업 지원 ("11.12월말 예상)

☐ 지원 실적 : 49.9억원

○ 저소득층아동 보험 42.7억원, 장애인복지이용시설 보험 5억원, 단체신용상해 보험 0.3억원, 지역아동센터 보험 1.9억원

※ 저소득층 아동 및 부양자 13,229명과 1,718개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지원

☐ 보험가입 대상자 및 지원 시설의 확대를 통한 사업내실화

○ '실손의료비 보장'을 추가하고 '생활자금'축소로 보험가입 대상자 확대 ○ 장애인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에도 지원확대

※ 보험금 지급현황('11년 현재 누계) : 총 12,019건, 43.3억원

참고

'11년 소액금융 및 소액보험사업 추진 현황 ('11.11.30일 기준)

(단위 : 건, 억원)

구분	분야	복지사업자명	'10년(누계)			'11년				누계		
			지원금	대출		배정금	지원금	대출		지원금	대출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소액금융	창업	사회연대은행	35.0	203	35.0	10.0	-	-	-	35.0	203	35.0
		신나는조합	11.0	34	7.0	1.0	1.0	5	1.0	12.0	39	8.0
		소상공인진흥원	40.0	212	40.0	-	-	-	-	40.0	212	40.0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30.0	57	22.2	14.0	14.0	36	15.4	44.0	93	37.6
		해피월드복지재단	43.0	184	33.5	11.0	-	56	9.5	43.0	240	43.0
		나눔과기쁨	2.5	8	1.6	3.0	3.0	16	3.3	5.5	24	4.9
		함께일하는사람들	10.0	12	4.7	8.0	8.0	26	12.8	18.0	38	17.5
		부산복지개발원	2.5	3	0.5	1.0	-	8	1.8	2.5	11	2.3
		소계	174.0	713	144.5	48.0	26.0	147	43.8	200	860	188.3
	사회적기업	함께일하는재단	30.0	25	30.0	15.0	15.0	13	11.8	45.0	38	41.8
		열매나눔재단	30.0	30	27.7	15.0	15.0	13	15.3	45.0	43	43.0
		민생경제정책연구소	25.0	23	30.0	15.0	12.5*	3	5.0	37.5	26	35.0
		민생포럼	35.0	18	22.1	30.0	30.0	14	27.0	65.0	32	49.1
		사람사랑	5.0	3	4.0	-	5.0**	1	2.0	10.0	4	6.0
		미배정	-	-	-	25.0	-	-	-	-	-	-
		소계	125.0	99	113.8	100.0	77.5	44	61.1	202.5	143	174.9
	신용회복	신용회복위	392.0	12,691	377.0	100.0	100.0	3,592	115.0	492.0	16,283	492.0
		한마음금융	93.0	3,940	93.0	-	-	-	-	93.0	3,940	93.0
		소계	485.0	16,631	470.0	100.0	100.0	3,592	115.0	585.0	20,223	585.0
	전통시장	지방자치단체	181.8	5,796	246.7	220.0	162.7	6,324	287.4	344.5	12,120	534.1**
		시장경영진흥원	-	-	-	17.0	8.5	-	-	8.5	-	-
		소계	181.8	5,796	246.7	237.0	171.2	6,324	287.4	353.0	12,120	534.1
	합계		965.8	23,239	975.0	485.0	374.7	10,107	507.3	1,340.5	33,346	1,482.3
소액보험		보험회사	119.4	26,150	114.6	50.0	3.0	858	1.9	122.4	27,008	116.5
총계			1,085.2	49,389	1,089.6	535.0	377.7	10,965	509.2	1,462.9	60,354	1,598.8

* 신나는조합의 경우 지원금 12억원 중 4억원은 조기상환

** '10년도 미지원금의 '11년으로 이월된 금액(민생경제정책연구소 5억원, 사람사랑 5억원)

*** 전통시장은 Revolving이 포함되어진 대출금액이며, '11년도 지원금은 1223. 현재기준일

3

제도적 인프라 재정비, 전문인력 양성 및 사후관리 강화

가 정보관리시스템의 안정성 강화

- 정보관리시스템의 강화 및 확장
 - 미소금융 확장 개발, 업무시스템 추가 개발 등
 - * 다차원정보시스템, 휴먼예금 시스템, 지출결의 개선 등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나 각종 제도의 개선 및 특성화 사업모델 구축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등 변경 적용
 - * 기존사업자(폐지)와 신규사업자(최대 3개월)에 대한 거치기간의 차등 적용 등
-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대출상품 개발 : 서민생활 밀착형 18종 상품 개발

다 미소금융 전문인력 양성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 미소금융 전문인력 양성 (미소아카데미)
 - 교육대상 : 지역법인 대표자·실무자, RM, 봉사자, 미소금융 이용자 등
 - 전국 각지에서 55회의 교육 실시, 연인원 2,140명 교육 수료
 - 미소아카데미 교육교재 발간·보급 (통권 9호)
- 1,940명의 자원봉사자가 4,700건의 맞춤형 봉사활동을 수행
 - 미소금융 이용자 178명을 대상으로 전문봉사자 사후관리 매칭
 - 대학생 참여 활성화 : 사후컨설팅팀, 인턴십, 기자단, 동아리, 학회 등 운영

4

외부협력 및 홍보 강화

가

사회적 네트워킹 강화

- ☐ 기존 복지사업자와의 파트너십 강화
 - 복지사업자 간담회 2회 , 복지사업자 워크숍 2회 개최
- ☐ 대학 MF강의 개설 확대
 - 5개 대학*에 MF강의 추가 개설 ('10년 4개 → '11년 9개)
 - * KASIT, 한양대, 덕성여대, 영남대, 경민대
- ☐ 지역협의체를 통한 지역사회와의 연대 강화
 - 5개 시범사업 지역지점 지역협의체 구성

나

해외협력을 통한 국제화

- ☐ 서민금융 국제 컨퍼런스 후원
- ☐ 미소금융 국제협력사업 추진
 -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통해 아프리카(에티오피아)에서 미소금융 사업을 수행하는 방안 검토
 - ※ 제5차 아프리카 마이크로파이낸스 컨퍼런스 참석 및 현지조사
- ☐ 아시아 -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공무원 미소금융 설명회 개최
- ☐ 2011 글로벌 MC Summit 참석 ('11.11.14.~17. Spain)
- ☐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참석 ('11.11.29.~12.1.)

다 제도와 성공사례의 홍보 (11.12월말)

☐ 기부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대중홍보의 강화

- 서민밀집지역에 대한 마을버스광고 시행 (3개월간, 전국64개노선)
- 법정기부금단체 지정 (11.7.18.)
- “신규사업모델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23편 접수, 12팀시상)

☐ 커뮤니티의 활성화

- 대학생기자단의 블로그를 통하여 미소금융 고객의 가게 및 봉사자 활동, 미소금융사업 소개 등의 홍보활동을 소개
- 봉사자 커뮤니티를 운영, 봉사자 및 미소금융 이용자 간 자발적 봉사 매칭을 유도

☐ 신규 미소금융 이용자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미소금융”의 활성화

- 전국 167개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1,227명을 상담
- 적격고객 106명을 대상으로 8억4,570만원을 대출

☐ 미소금융 이용자 성공사례의 확산

- 미소금융 이용 수기공모 및 수기집 발간 (71편 접수, 14팀시상)
 - * 국회, 관공서, 기부 및 출연기관, 사회단체, 전 지점에 배포
- 미소금융사업 유공자에 대한 포상 격려

5

업무성과 및 보완사항

가 긍정적 성과

□ 재원조성 및 사업목표 초과달성

- 당초 계획 대비 약 500억 원의 재원조성 목표 초과달성*

* 기업·은행권의 지정기부금 조기출연

- 사업계획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대출실적 (당초 목표대비 158%)

□ 미소금융에 대한 인식전환 및 저변을 확대

- 미소아카데미를 통한 전문 인력양성 및 “찾아기는 미소금융”의 추진
- 미소금융 이용자 성공사례의 확산과 대중 홍보의 강화를 통해 대표적인 서민금융제도로 안착

나 보완 사항

□ 대출의 쏠림 현상과 일부 상품 운영의 부적절한 운영개선

- 기업·은행재단의 특성화 상품에 쏠림 현상
- 일부 대출상품(차량대출)에 대한 담보 설정에 따른 문제*

* '11년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

□ 기존 복지사업자 선정·지원금배정·관리 감독 체계의 보완

-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복지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관련 보완책을 마련하여 현장실사와 모니터링을 강화

Ⅲ

2012년 사업추진 기본 방향

1

2012년 사업 환경

가 경제 환경

- ☐ 경제지표 악화 전망으로 미소금융 수요 증가 예상
 - 유로존 재정위기 및 국내 가계부채문제 등의 영향요인으로 각종 경제지표의 악화 예상
 - 경제성장률(3.7%), 소비자물가(3.2%), 경상수지 악화 전망 등
- ☐ 사업재원 마련 여건 악화
 - 경제지표 악화 등으로 기업 중심의 기부축소 예상

나 대외 환경

- ☐ 국회·정부 중심의 제도개선 요구
 - 사업의 특성(무담보·무보증)에 맞는 상품개발 및 추진요구
 - 기존 복지사업자의 사업기반지원(운영비 등)관련 요구
- ☐ 기존 복지사업자의 환경 변화
 - 선거·마이크로크레딧 확대(서울시 등)에 편승하여 미소금융과 차별성을 강조하고, 타 기관으로부터 재원확충이 예상됨



그간의 성과에 기반한 안정적인 대출 확대와 관리시스템의 강화를 통한 사업의 내실화를 확고히 구축

2012년 미소금융사업

VISION

미소금융사업을 통한 소외계층의 자활·자립을 지속 지원

사업목표

안정적 사업운영 및 관리시스템의 내실화

전략과제

사업의 영속성 확보

안정적 사업운영 및 내실화

사업 인프라 재정비

미소아카데미의 효율적 운영

미소희망봉사단 활성화

외부협력 및 홍보강화

6개 부문 19대 중점 사업

① 사업의 연속성 확보

1. 재원 조성의 안정성·다각화 추진
2. 재원의 효율적 운용
3. 사전·사후관리를 통한 재원고갈 방지
4. 재단 운영의 투명성 제고

② 안정적 사업운영 및 내실화

5. 사업의 활성화
6. 특성화된 사업모델 구축
7. 미소금융사업의 제도개선
8. 기존 복지사업자 관련 제도개선

③ 사업 인프라 재정비

9. 복지사업자에 대한 검사체계 보완
10. 다양한 경로를 통한 고객 접근성 제고
11.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강화
12.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④ 미소아카데미의 효율적 운영

13. 미소금융 고객 대상자별 체계화된 교육
14. 지역법인 실무자 및 자원봉사자 교육

⑤ 미소희망봉사단 활성화

15. 자원봉사 인력확충 및 전문성 강화
16. 미소금융 이용자 지원 및 홍보활성화

⑥ 외부협력 및 홍보강화

17. 사회적 네트워킹 강화
18. 해외협력을 통한 국제화
19. 제도 및 성공사례의 지속홍보

1

사업의 연속성 확보

① 재원 조성의 안정화 · 다각화 추진

< 2012년 재원조성 목표 >

◇ 2,813억원의 재원조성을 목표

- 휴면예금(휴면보험금 포함) : 1,123억원(은행권 594억원, 보험권 529억원)
- 기부금 : 1,450억원
 - 6개기업 : 1,000억원(현대·LG·SK 각 200억 등)
 - 5개은행 : 200억원(우리·신한 각 100억)
 - 은행 등 : 250억원(부실채권정리기금 160억, 기타 90억)
- 대출금 회수 : 240억원

□ 휴면예금 출연대상 확대 및 기업 기부활성화 추진

- 법인·단체 명의의 휴면예금 출연 추진
- 중견기업의 미소금융사업 참여 확대
- 기부완료된 은행권의 미소금융사업 확대 및 추가기부 MOU
- 출연·기부 협약기관의 조기출연 적극 유도

② 재원의 효율적 운용

□ 휴면예금의 적기출연을 유도하여 수익률 제고

□ 안정성과 수익률 제고를 위한 재원 운용

- 단계별, 일정별 정밀한 자금소요 예측으로 단기 소요자금을 최소화
- 여유자금을 중·장기(1년 이상)로 운용
- 출연 휴면예금 분산예치 방식의 개선을 통한 수익률 제고
 - * 최고금리 제시 은행으로 통합하여 예치

③ 사전·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재원고갈 방지

☐ 상환을 제고를 위한 사전·사후관리 강화

- 대출심사의 전문성 및 컨설팅 능력의 제고
- “미소금융 컨설팅 종합시스템” 구축·시행
 - * 단계별 컨설팅 강화 : 상담 → 사전컨설팅 → 대출 → 창업 → 사후컨설팅
- 기존 복지사업자 감독체계 정비를 통한 상환을 제고
 - 복지사업자·이용자의 상시 감독을 통한 상환을 제고

☐ 운영경비 절감을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확보

- 예산통제시스템의 강화를 통한 운영경비 절감 추진
- 회계·자금관리를 표준화하여 지역지점의 자금관리를 강화

④ 재단 운영의 투명성 제고

☐ 홈페이지를 통하여 재단의 주요경영사항을 정기적으로 공시

- 주요 경영정보를 대외적으로 제공하여 경영 투명성을 제고
- 이해관계자의 알권리와 참여기회를 확대
- ‘11년도 이사회 의결사항을 바탕으로 ‘12년부터 시행

☐ “미소금융중앙재단 윤리강령” 제정 후, 시행

2

안정적 사업운영 및 내실화

⑤

사업의 활성화

< 2012년 사업 규모 >

◇ 총 2,840억원의 사업추진을 목표

- 미소금융사업 : 2,540억원
 - 기업·은행재단 : 2,373억원(기업 1,560억원, 은행 813억원)
 - 지역지점 : 167억원(27개 지점, 8개 출장소)
 - * 기업·은행재단은 미집행 대출재원, 대출회수액 및 조기출연 등을 활용
- 소액금융사업 : 250억원
- 소액보험사업 : 50억원

□ 미소금융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

- 다양한 특성화 상품의 지속 개발·보급
- 보다 많은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의 접근성 제고

□ 소액금융사업의 내실화 추진

- 기존 복지사업자의 상환율, 연체율, 운영실태를 종합 분석
- 문제가 있는 사업자는 지원을 축소·배제하고, 운영실태가 우수한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을 원칙
- 기존 복지사업자의 업무 전산화 추진 및 관리·감독 강화

□ 소액보험사업의 상품 및 제도개선

- 사업의 지원규모는 전년 수준을 유지하되,
- 소액보험지원의 수혜자와 상품을 다양화 할 수 있는 방안마련

⑥ 특성화된 사업모델 구축

- ☐ 지속적인 미소금융 지원대상자 확대
 - 미소금융 특성에 부합하는 CB(Credit Bureau)모형의 지속 개발
- ☐ 미소금융 특성화 상품 개발 다양화
 - 자영업단체와 연계하는 상품 및 기업·은행재단의 대출상품*을 확대
 - * '12년 중 50개('11년 35개)로 확대
- ☐ 청년 창업지원 활성화
 - “청년창업 자금지원모델”*을 구축하여 대상자 발굴 및 실효성 극대화
 - *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기업·은행재단·대학교·창업동아리 연계
- ☐ 마이크로프랜차이징 사업모델 개발 및 추진
 - 공공기관 및 사회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기관과 연계하는 사업모형
 - * KORAIL, 지하철공사, 여성발전센터 등

⑦ 미소금융사업의 제도개선

- ☐ 특정상품 쏠림 현상 방지
 - '11년도 화물차주 등 특정 상품으로의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월별 실링(Ceiling)제* 도입 권고
 - * 가급적 신규 대출에서 특정상품이 일정비율(예 : 3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 ☐ 차량관련 대출의 담보 설정 문제
 - 미소금융사업의 취지(무담보·무보증)에 걸 맞는 차량대출 담보설정의 제도를 개선
 - 개선 시, 용도와 처분·브로커개입 등의 도덕적해이 방지책 고려

⑧ 기존 복지사업자 관련 제도개선

☐ 복지사업자 선정 및 자금배분 관련

- 복지사업자 감독규정 및 현장실사와 관련한 세부기준 마련
- 민간 복지사업자 자격인증 강화

☐ 복지사업자 대출실태 및 감독 관련

- 기존 복지사업자 업무매뉴얼 보완 및 평가제도 구축
- 지원분야별 대출한도의 재정비
- 기존 복지사업자의 일부 대출상품을 미소금융취지에 맞도록 개선
- 전문성 있는 인력의 보강을 통한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

3

사업 인프라 재정비

⑨

복지사업자에 대한 감사체계 보완

- 복지사업자 감독(검사)의 한계를 보완하는 재단법령 개정
 - 복지사업자와 복지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직접 감독(검사)의 내용을 포함하는 재단법 시행령(제9조)의 개정 추진
- “복지사업자 지원계약서” 변경을 통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복지사업자의 주무관서별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및 감독에 관한 규칙”상에 준하는 검사·감독 기능을 계약서에 명시
 - 복지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직접 관리권 확보를 위한 장치*마련
 - * 대출약정서(복지사업자-이용자)에 중앙재단의 검사에 대한 사항 추가

⑩

다양한 경로를 통한 고객 접근성 제고

- 지점 운영 : 총 163개로 운영
 - 미소금융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소금융지점(출장소 포함)의 추가 설치
 - * '12년 연내 18개의 지점을 신규설치 (기업·은행재단 10개, 지역지점 8개)
 - 군(郡) 단위 지역에 지점을 두지 않고 종교단체 등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의 추진
 - * 지점 상호간 정보교환 및 업무협력 강화, 지점별 심사기준 표준화
- 모바일앱 개발을 통한 이용자의 편의 증진
 - 스마트폰을 통한 이용자의 미소금융에 대한 접근성 제고

⑪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강화

- ☐ 기존복지사업자 통합정보 시스템 보완
- ☐ 기술적 정보보호 대책 시행* (1단계)
 - 웹방화벽, 내부망 물리적, 분리개인정보 DB암호화, DB접근제어 등
 -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정보유출방지시스템 구축
 -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11.9.30.)
- ☐ 주요 업무시스템 서버 이중화 구성
- ☐ 업무시스템의 신규·추가 개발
 - 도로명주소법 시행('11.7.29.)에 따라 주소관리 체계 변경
 - 법인 휴면예금 조회 및 출연, 지급시스템 구축
 - 대외연계* 전문시스템 고도화
 - * 휴면예금, 신용정보, 중복수혜 등

⑫ 개인정보보호 체계 확립

-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11.9.30.)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
 - 개인정보 처리문서 안전 보관 방안 마련
 - 정보보안 취약점 분석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 ☐ 재단 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 수립
 - 휴면예금 및 미소금융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지침 마련·시행
 - 물리적·관리적 정보보호대책 수립·시행

4

미소아카데미의 효율적 운영

⑬

미소금융 고객 대상자별 체계화된 교육

□ 고객 특성별 맞춤형 교육

- 교육대상 : 미소금융 대출 예정자 및 대출자 약 6,300명
- 교육과정 : 총 7개 과정(34과목)
 - * 실전창업, 실전경영, 외식업운영 · 유통업운영 · 서비스업운영, 성공업체 현장실습 등
- 교육회수 : 총 350회 교육 (5개 광역거점*별로 동시교육)
 - *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 대상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전국 광역거점별 교육추진
- 소요예산 : 678,800,000원*
 - * 강사료, 강의장 대여료, 인쇄비, 식대 등

⑭

지역법인 실무자 및 자원봉사자 교육

□ 사후관리 전문가(RM) 양성 및 체계적인 자원봉사자 교육

- 교육대상 : 사후관리전문가, 지점실무자, 자원봉사자 약 1,968명
- 교육과정 : 총 11개 과정(56과목)
- 교육회수 : 총 30회 교육 (합숙 및 집합교육)
 - * 고객소통상담의 10개 과정
- 소요예산 : 163,875,000원*
 - * 강사료, 강의장 대여료, 인쇄비, 식대 등

5

미소희망봉사단 활성화

⑮

자원봉사 인력확충 및 전문성 강화

☐ 전문봉사자 및 일손지원봉사자 추가 확충

- 각계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전문봉사자 500명 확충
 - * 업종별 협회, 사회봉사단체,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시도별자원봉사센터, 금융기관 등
- 마이크로크레딧 학회(SoME)를 통한 일손지원봉사자 확충

☐ 자원봉사 활동의 체계적인 실적관리

- 미소희망봉사단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별 활동실적 관리*
 - * 방문일자, 장소, 봉사활동내용, 애로사항청취 등의 결과를 기록·관리

☐ 자원봉사자 활동 격려

- 분기별 자원봉사자 모임 개최* : 분야별 그룹화 방안검토
 - * 자원봉사활동을 격려하고 봉사자간 정보교류 및 참여증진 차원
- 우수활동자에 대한 특전 제공*
 - * 자원봉사인증서, 미소금융의날 포상추천, 취업을 위한 추천서 제공 등

⑯

미소금융 이용자 지원 및 홍보활성화

☐ 미소금융 홍보 활성화

- 전국 주요대학과 연계하는 마이크로파이낸스 교과목의 지속 추진
- 대학생 기자단을 활용한 홈페이지, 블로그 소통강화

☐ 미소금융 이용자 지원

- 마이크로크레딧 교과목 개설대학별 이용자 사후컨설팅 지원
- 대학생 인턴십을 활용한 지점별 업무지원 및 홍보강화
- "Teach for Korea"공부방 사업 지원을 통한 이용자의 편의증진

6

외부협력 및 홍보강화

⑰

사회적 네트워킹 강화

- ☐ 사회적기업 육성 네트워크를 통한 관계 강화
 - 사회적기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과 자원동원·연계 추진을 지원
 - 사회적기업의 확산과 지속가능성 제고에 참여
- ☐ “미소금융지역협의체”의 활성화 추진
 - 미소금융 협력기관 지정 및 운용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협력강화
 - 지역인사의 참여를 통한 투명하고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조 확립
 - 기부금 모금 역량강화 및 컨설팅·사후관리 협조체제 구축
- ☐ 기존 복지사업자와의 협력증진
 - 업무연계 강화를 통한 상생적 발전방안 모색
 - 공식협의체(복지사업자협의회)의 실질적·정례적 활동 추진

⑱

해외협력을 통한 국제화

- ☐ 국내외 기관과의 정보 교류
 - 마이크로크레딧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유용한 정보 등 공유
 - Microcredit Summit 2012 참가
- ☐ 미소금융 국제협력 사업 추진
 - 공적개발원조(ODA)차원의 한국전 참전국인 에티오피아에 미소금융사업을 확산
 - 해외 사업수행을 통해 미소금융 브랜드 및 사업모델의 대외 홍보

- 기부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대중홍보
 - “특집 미소금융 다큐멘터리” 방영을 통한 대중홍보
 - 기부·나눔·봉사의 문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미소금융 이용 수기공모를 통한 성공사례 발굴 홍보
 - 미소금융의 자활지원 성공사례를 추적하고 널리 홍보하여 미소금융 관계자(기부기관,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의 참여의식 확산
- 신규사업모델 아이디어 공모전
 - 지속가능한 사업모델 개발을 위한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 미소금융 이용자의 성공률 제고와 사후관리의 새로운 대안 모색
 - 수상자에 대한 시상을 통해 미소금융사업의 대중홍보 강화
- 커뮤니티의 활성화
 - 재단 및 봉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양한 계층 활동을 지원
 - 대학생기자단 등의 블로그를 통하여 미소금융 대출 체험기, 성공사례, 이용자 미담 등을 지속 소개

IV

2012년 사업추진 일정

사업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사업의 영속성 확보	1. 재원 조성의 안정성·다각화 추진 2. 재원의 효율적 운용 3. 사전·사후관리를 통한 재원고갈 방지 4. 재단 운영의 투명성 제고	1~12월 " " 분기별
안정적 사업운영 및 내실화	5. 사업의 활성화 6. 특성화된 사업모델 구축 7. 미소금융 사업의 제도개선 8. 기존복지사업자 관련 제도개선	1~12월 " ~3월 ~2월
사업 인프라 재정비	9. 복지사업자에 대한 검사체계 보완 10. 다양한 경로를 통한 고객 접근성 제고 11.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강화 12.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1월 1~12월 " "
미소아카데미의 효율적 운영	13. 미소금융 고객 대상자별 체계화된 교육 14. 지역법인 실무자 및 자원봉사자 교육	1~12월 "
미소희망봉사단 활성화	15. 자원봉사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16. 미소금융 이용자 지원 및 홍보 활성화	1~12월 "
외부협력 및 홍보 강화	17. 사회적 네트워킹 강화 18. 해외협력을 통한 국제화 19. 제도 및 성공사례의 지속홍보	1~12월 " "

< 별지 2 >

2012년도 예산(안)

2011. 12.



1

재무(BS) 계획 [안]

□ 기금 유입 : 1,782.6억원

○ 기금 조달(기본재산 증가, 대출채권 감소) : 1,613억

휴면예금 594억, 휴면보험 529억, 일반기부 250억, 대출회수 240억

* 기업·은행 지정기부금 1,200억원은 미포함

○ '12년 이월잉여(자본 미처분잉여금) : 169.6억

□ 기금 운영(기본재산 감소, 대출채권 증가) : 795.6억원

○ 원권리자지급 363억, 대출지원금 417억, 유형자산 15.6억

* 기업·은행재단 사업비 1,200억원은 미포함

(단위:억원)

과목	'12년계획 (A)	'11년추정 (B)	대비	
			증감(A-B)	비고
자산	9,985.9	8,806.3	1,179.6	
유동자산	8,740.9	7,753.9	987.0	
비유동자산	48.8	33.2	15.6	비품 15.6
대출채권	1,196.2	1,019.2	177.0	
창업	147.9	142.9	5.0	지원 30, 회수 25
신용회복	195.6	177.6	18.0	지원 50, 회수 32
사회적기업	100.5	180.5	(80.0)	지원 50, 회수 130
전통시장	452.1	342.1	110.0	지원 120, 회수 10
미소금융	300.1	176.1	124.0	지원 167, 회수 43
부채	8.9	8.9	0.0	
유동부채	6.4	6.4	0.0	
비유동부채	2.5	2.5	0.0	
자본	9,977.0	8,797.4	1,179.6	
기본재산	9,473.0	8,463.0	1,010.0	
휴면예금	4,014.3	3,617.3	397.0	출연 594, 지급 197
휴면보험금	2,242.8	1,879.8	363.0	출연 529, 지급 166
기부금	3,215.9	2,965.9	250.0	일반기부 250
미처분 잉여금	504.0	334.4	169.6	'12년 이월잉여 169.6

2

운영(PL) 예산 [안]

□ 수익(이자수익) 324.5억원

○ 자금운용 수익률 3.5% 목표 ('11.12월 3년 국고채수익률 3.36%)

□ 비용 154.9억원

○ 사업비 69.4억 : 소액보험 50억, 지점운영비 19.4억

○ 운영비 85.5억 : 인건비 21.3억, 관리비 46억, 감가 10.4억, 대손 5.7억, 예비비 21억

(단위:억원)

과목	'12년계획 (A)	'11년추정 (B)	대비	
			증감(A-B)	비고
수익	324.5	301.5	23.0	
이자수익	324.5	301.5	23.0	
휴면예금	137.5	115.8	21.7	'11년 실운용 4.36%
휴면보험금	76.8	70.0	6.8	'12년 목표 3.50%
일반기부금	110.2	115.7	(5.5)	
비용	154.9	143.0	11.9	
사업비	69.4	65.5	3.9	
소액보험	50.0	49.9	0.1	
지점운영비	19.4	15.6	3.8	지점 3개 신설 출장소 5개 신설
운영비	85.5	77.5	8.0	
인건비	21.3	17.0	4.3	
일반관리비	62.1	60.5	1.6	
예비비	2.1	0.0	2.1	
사업이익	169.6	158.5	11.1	
사업외수익	0.0	0.0	0.0	
사업외비용	0.0	0.0	0.0	
법인세차감전잉여	169.6	158.5	11.1	
법인세	0.0	0.0	0.0	
이월잉여	169.6	158.5	11.1	

(붙임)

2012년 재단운영비 세부내역

(단위: 천원)

계정별	'12년도 예산(안)	'11년도		비고
		예산	추정실적	
재단운영비	8,553,535	8,245,064	7,746,260	
인건비	2,133,910	2,018,929	1,695,332	
급여	1,472,358	1,388,777	1,298,505	33명 기준
제수당	289,221	223,360	203,425	
잠급여	208,800	288,000	96,125	계약직급여, 파견수당
퇴직급여충당금	163,531	118,792	97,277	33명×1개월분
일반관리비	6,211,789	6,075,697	6,050,928	
복리후생비	215,758	200,488	171,381	건강검진, 급식비 등
여비교통비	231,105	312,604	119,344	국내출장비, 해외출장비 등
통신비	119,588	121,027	101,907	전화료, 회선이용료 등
수도광열비	25,200	25,000	23,900	전산실 전기요금
세금과공과	154,295	142,740	126,434	주민세, 4대보험료 등
감가상각비	1,037,348	817,113	471,011	정물법
대손상각비	575,060	718,000	2,744,025	
지급임차료	408,180	415,240	401,557	사무실임차, 차량렌트 등
수선비	4,500	10,000	9,143	OA기기 유지보수 등
보험료	46,520	30,135	22,640	화재보험, 봉사단 단체보험 등
차량비	39,120	29,520	16,548	업무용차량 유류대 등
조사연구비	1,800	23,400	19,800	
교육훈련비	839,330	563,716	295,071	미소아카데미, 워크숍 등
회의운영비	115,540	131,790	53,249	이사회, 자문위원회 등
사무실운영비	11,280	6,000	5,995	사무실 생수 등
소모품비	39,080	34,280	29,473	사무용품 등
수수료	17,460	5,700	1,317	송금수수료, 발급수수료 등
홍보비	566,529	484,800	370,222	홍보광고, 홍보물품구매 등
업무안내비	0	465,000	346,130	
잡비	12,700	12,088	7,254	내방객 주차료, 소액물품 등
업무추진비	154,800	152,400	89,314	사업추진 업무협의, 화환대
도서인쇄비	238,185	271,106	43,842	도서비, 신문구독, 인쇄비 등
용역수수료	447,460	345,406	271,771	업무자문, 콜센터, 문서보관 등
전산업무비	646,901	518,194	93,963	전산 유지보수비 2억원 선급금 처리
행사비	70,250	65,950	43,529	지역법인개소, 창립기념행사
직무수행경비	193,800	174,000	172,108	
예비비	207,836	150,438	0	
정현원차	40,120	0	0	1인 채용
일반	167,716	150,438	0	재단운영비의 2%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

**13. 2010년부터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의 외부 연구
용역 현황**

☐ 2010년~2012년 8월 현재 연구용역 현황 : 「붙임」 참조

☐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 별도제출

붙임

2010년~2012년 8월 현재 정책연구용역

□ 2010년

연번	과제명	계약기간	계약자 (책임연구원)	용역비 (백만원)	계약 방식	공개 여부
1	지역금융활성화 방안 연구	10.03.26~ 10.07.25	한국개발연구원 (손욱)	30	수의계약	비공개
2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도입 방안	10.04.01~ 10.07.31	서울대 산학협력단 (정순섭)	30	수의계약	비공개
3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10.04.19~ 10.08.31	한국개발연구원 (강동수)	40	수의계약	공개
4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방안 검토	10.05.28~ 10.07.31	법무법인 올촌 (김정수)	30	경쟁→수의	공개
5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 연구	10.04.13~ 10.07.12	한국개발연구원 (연태훈)	45.5	경쟁→수의	공개
6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 검토	10.06.09~ 10.7.30	한국금융연구원 (구분성)	30	수의계약	공개
7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자본시장 활용방안	10.04.09~ 10.09.03	자본시장연구원 (김재철)	30	수의계약	비공개
8	국내외 조기경보 활동 동향 점검 및 금융시장 조기 경보모형 개선	10.05.01~ 10.10.31	한국금융연구원 (장민)	20	수의계약	비공개
9	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검토	10.08.30~ 10.12.20	한국금융연구원 (정찬우)	30	수의계약	공개
10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와 평가	10.09.16~ 10.12.15	한양대 산학협력단 (박대근)	30	수의계약	비공개
11	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10.09.20~ 10.12.20	한국금융연구원 (김정환)	25	수의계약	비공개
12	신용정보 유통체계 개선방안	10.10.11~ 10.12.11	한국금융연구원 (이상제)	30	수의계약	공개
13	국내은행 해외 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 감독 방안	10.10.11~ 10.12.11	한국금융연구원 (서근우)	25	수의계약	공개
14	기업경영 안정 등을 위한 상품파생시장 제도 개선방안	10.10.15~ 10.12.14	서울대 산학협력단 (안동현)	30	수의계약	공개
15	회계감독제도 개편 등에 대응한 감리조치기준 개선안 연구	10.10.15~ 10.12.14	한국법제연구원 (이준호)	30	수의계약	공개
16	우리나라 특정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이행방안	10.04.20~ 10.11.30	한국금융연구원 (이상제)	30	경쟁→수의	비공개
17	금융회사 자금세탁 판단지표(Rule)의 유용성 연구	10.10.27~ 10.12.27	(주)테이타메이션 (한미혜)	27.7	경쟁→수의	비공개
18	한국의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 -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10.10.25~ 10.12.20	KAIST, 삼성경제연구원 (이병태)	47.5	수의계약	공개
19	미국 금융규제개혁법 중 자본시장 관련 규제내용 및 시사점	10.11.03~ 10.12.20	자본시장연구원 (정찬우)	10	수의계약	공개
20	미국 금융개혁과 보험규제에 대한 시사점 연구	10.11.03~ 10.12.20	보험연구원	3	수의계약	공개
계				573.7		

□ 2011년

연번	과제명	계약기간	계약자 (책임연구원)	용역비 (백만원)	계약방식	공개여부
1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종합 대응 방안 마련	11.01.27~ 11.06.02	금융연구원 (이명활)	40	수의계약	공개
2	금감원장 및 감사 성과평가 개선방안	11.04.06~ 11.05.30	금융연구원 (이병윤)	20	수의계약	공개
3	회계산업 중장기발전 방안	11.05.02~ 11.06.30	한국회계학회 (이창우)	30	수의계약	공개
4	저축은행 경영부실 실상 및 원인 규명 백서	11.06.27~ 11.09.26	KDI (정찬우)	15	수의계약	공개
5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백서	11.07.01~ 11.12.30	KDI (고영선)	50	수의계약	공개
6	대형 IB 자기자본규제에 관한 연구	11.07.11~ 11.11.04	자본시장연구원 (장정모)	30	수의계약	비공개
7	금융소비자금융역량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11.07.26~ 11.11.30	KDI (천규승)	25	경쟁→수의	공개
8	금융회사의 금융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연구	11.08.19~ 11.10.31	법무법인 태평양 (정의중)	29	경쟁→수의	비공개
9	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계약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11.09.23~ 11.12.15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30	수의계약	공개
10	법인설립과 신탁계약 등이 자금세탁 등 불법적 목적에 이용될 위험과 그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11.10.04~ 11.12.20	김&장법률사무소 (서문식)	39	경쟁→수의	공개
11	비금융전문직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도 분석에 관한 연구	11.10.12~ 11.12.20	금융연구원 (이윤석)	44	경쟁→수의	비공개
12	금융회사간 단기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및 관리감독 개선 방안	11.10.19~ 11.12.16	금융연구원 (이규복)	30	수의계약	비공개
13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SIFI) 규제 도입방안	11.10.19~ 11.12.20	금융연구원 (김동환)	30	경쟁→수의	비공개
14	ETF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	11.10.25~ 11.12.15	금융연구원 (연태훈)	30	수의계약	공개
15	부동산개발금융 제도개선방안 연구	11.10.26~ 11.12.25	전국대산학협력단 (고성수)	30	경쟁→수의	비공개
16	외은지점 규율체계 정비관련 주요 검토사항	11.10.27~ 11.12.27	금융연구원 (서병호)	30	수의계약	공개
17	외환, 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11.07.15~ '12.02.2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덕용)	35 (이월)	경쟁→수의	비공개
18	청년창업 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방안	11.12.22~ '12.04.21	금융연구원 (구본성)	30 (이월)	수의계약	비공개
계				567		

□ 2012년

연번	과제명	계약기간	계약자 (책임연구원)	용역비 (백만원)	계약방식	공개 여부
1	보이스피싱 근절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2.04.06~ 12.06.03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윤해성)	20	수의계약	비공개
2	ELS 및 DLS 투자자보호 강화 방안	12.04.24~ 12.09.23	자본시장연구원 (남길남)	26	경쟁→수의	
3	고령화 대비 공·사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12.04.30~ 12.08.31	보험연구원 (김대환)	30	수의계약	
4	금융세제 현황 및 발전 방향	12.05.04~ 12.08.31	금융연구원 (연태훈)	30	경쟁→수의	
5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12.05.18~ 12.10.31	한국채권연구원 (박창균)	39	경쟁→수의	
6	기업공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2.05.25~ 12.08.23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35	경쟁→수의	
7	대학생 고금리 대출 이용 실태조사	12.06.08~ 12.07.07	한국궤협연구소 (박병일)	10	수의계약	공개
8	주요 신흥국과의 전략적 금융 협력 강화 방안	12.06.25~ 12.10.31	대외경제연구원 (강대창)	26	경쟁→수의	
9	금융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 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12.07.06~ 12.10.05	한국재정학회 연세대 산학협력단 서강대 산학협력단 (원윤희 외 3명)	20	경쟁→수의	
10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12.07.17~ 12.11.20	금융보안연구원 (김영태)	40	경쟁→수의	
1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 독체계 개편방향	12.07.26~ 12.11.26	한국연금학회 (신성환)	30	경쟁→수의	
12	대부업 관리·감독 효율성 제고 방안	12.07.30~ 12.10.29	한국금융연구원 (서병호)	20	수의	
13	가계부채 미시분석	12.08.16~ 12.11.15	한국금융연구원 (서정호)	40	경쟁→수의	
14	핵·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금지 국제기준 이행 방안	12.08.20~ 12.12.20	형사정책연구원 (박미숙)	35	경쟁→수의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

14.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에 따라 고정금리로 전
환했다가 상대적인 피해를 본 경우가 발생하
고 있는데, 금융위원회가 이와 관련, 현재 검
토 중인 보완대책이 있는지 혹은 향후 검토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것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금리
인상에 따른 추가적인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는 대신
금리인하에 따른 이익은 감수하는 것으로,

○ 고정금리 대출은 상환기간동안 금리변동이 있더라도
고정된 금리를 적용받음으로써 안정적인 금리부담을
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최근 시중금리와 고정금리 대출 금리가 하락하여 고정
금리 차입자가 상대적으로 금리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으나,

○ 금리 인하로 인한 상대적인 불이익은 금리 상승기의
이자부담 감소로 보완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 또한 차입자의 부담은 금리하락기 뿐 아니라 금리 상승기를 포함한 통상 10~20년에 달하는 전체 상환 기간을 두고 판단해야할 문제이며,

- 현 시점에서 고정금리 차입자의 유·불리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금리가 과도하게 하락한 경우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는 중도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에 따른 부담 감소분을 비교형량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낮은 금리로 재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현재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 상환기간동안 금리가 일정한 고정금리 상품, 5년이상 주기로 금리가 변동하는 고정금리 상품, 변동금리·고정금리가 혼합된 혼합형 상품 등 다양한 형태의 상품이 운용되고 있는 만큼,

- 차입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추어져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

15. 2008년 이후 퇴직자 재취업 현황

- 퇴직자명, 퇴직일, 퇴직사유, 재취업 기관명, 재취업 직급

□ 퇴직자 재취업 현황(2008.3 ~ 2012.7)

성명	퇴직일	퇴직사유	재취업 기관
이○○	08.03.28	명예퇴직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전○○	08.04.30	명예퇴직	은행연합회 감사
김○○	08.05.15	명예퇴직	법무법인
윤○○	08.06.07	계약만료	-
하○○	08.08.01	의원면직	검사 특채
장○○	08.08.20	의원면직	-
김○○	08.10.07	의원면직	금융감독원
강○○	08.11.19	의원면직	법무법인 회계사
김○○	08.12.09	의원면직	금융감독원 부원장
정○○	09.01.05	명예퇴직	금융투자협회 부장
노○○	09.01.08	의원면직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이○○	09.01.09	의원면직	법무법인 변호사
전○○	09.01.20	의원면직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	09.03.17	의원면직	법무법인 변호사
양○○	09.03.26	명예퇴직	한국자금중개 전무
김○○	09.04.30	의원면직	금융투자협회
나○○	09.05.13	명예퇴직	산업은행 계약직
한○○	09.05.15	의원면직	신영증권 상무이사
박○○	09.09.11	명예퇴직	SK C&C 상무
김○○	09.10.12	의원면직	-
김○○	09.11.17	의원면직	한국증권금융 사장
이○○	09.11.19	의원면직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
김○○	10.02.17	의원면직	한국거래소 주임
나○○	10.03.02	의원면직	한국정책금융공사 팀장
임○○	10.04.15	의원면직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서○○	10.04.15	의원면직	한국정책금융공사 팀장
김○○	10.06.17	의원면직	-
김○○	10.08.23	의원면직	-

성명	퇴직일	퇴직사유	재취업기관
남○○	10.10.14	의원면직	한국정책금융공사 팀장
임○○	10.12.06	의원면직	파인트리 파트너스(자산운용사)
진○○	11.01.03	의원면직	송실대 객원교수
최○○	11.02.16	명예퇴직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권○○	11.03.26	의원면직	금융감독원장
이○○	11.03.27	임기만료	법무법인 변호사
김○○	11.05.02	명예퇴직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안○○	11.06.02	의원면직	-
공○○	11.09.23	명예퇴직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남○○	11.09.28	의원면직	KT 상무
김○○	11.12.28	파면	파면
이○○	12.01.01	계약만료	-
박○○	12.02.27	의원면직	-
원○○	12.03.14	명예퇴직	금융결제원 감사
이○○	12.03.21	의원면직	두산그룹
김○○	12.05.18	의원면직	예금보험공사
이○○	12.05.21	명예퇴직	신용보증기금 이사
김○○	12.05.26	명예퇴직	예금보험공사 사장
진○○	12.07.02	명예퇴직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

16. 2008년 이후 공직자 윤리법 제18조에 의해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서 및 취업승인 요청서 사본

□ 금융위 설립(2008.2월) 이후 취업제한 대상기관 재취업자

(2012년 7월말 현재)

이름	퇴직 직급(직책)	퇴직일시	취업기관 취업일시
이○○	부위원장	08.3월	LS네트웍스 고문(08.3월)
이○○	금융정보분석원장	08.3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08.4월)
양○○	부이사관	09.3월	한국자금중개 전무(09.4월)
한○○	서기관	09.5월	신영증권 상무이사(09.5월)
박○○	부이사관	09.9월	SK C&C 상무(09.10월)
김○○	금융정보분석원장	09.11월	한국증권금융사장(09.11월)
남○○	서기관	11.9월	주식회사 kt 전문임원(11.9월)
이○○	전문계약직 가급	12.3월	주식회사 두산 상무(12.4월)

□ 취업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승인요청서 : 별도제출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

**17. 최근 4년간 소속직원에 대한 수사착수, 범죄사실
통보현황, 기소여부 내역**

□ 2009년 이후 금융위원회 직원에 대한 범죄사실 통보
현황 등 : 별도첨부

[별첨1]

금융위원회 직원 범죄행위 관련 현황

□ 2009년 이후 검·경찰로부터 기소(유예포함)받은 금융위원회 직원 현황 및 결과는 다음과 같음.

연번	접수(통보)	직위	혐의내용	검찰 처분내용
1	09.1.23	주무관	공연음란	기소유예
2	09.11.16	주무관	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3	10.10.4	사무관	가정폭력(상해, 재물손괴)	기소유예
4	11.6.22	고위공무원	뇌물수수	징역1년6월 벌금 10,000,000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

18. 부처별 산하위원회 목록, 위원명단 및 인적사항

공적자금관리위원회

○ 위원 명단 및 인적사항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당연직	김석동	금융위원장
당연직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
은행연합회추천 금융전문가	남상구	고려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국회추천 경제전문가	이재술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대표
국회추천 경제전문가	박영석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법원추천 법률전문가	민병훈	공감법률사무소 변호사
대한상의추천 경제전문가	오규택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공인회계사회추천 회계전문가	이기화	다산회계법인 대표

○ 회의참석수당 (당연직은 제외)

- (기본 2시간) 회당 10만원, (2시간 초과시) 회당 15만원

○ 회의개최실적 ('11.9.8일 ~ '12.8.2일)

- 21회(대면회의 20회, 서면회의 1회) 회의를 개최하여
안건 82건(의결안건 36건, 보고안건 46건)을 처리

□ 공정시장과 소관 위원회 현황('12.6월말 기준)

명칭	법적근거	회의 내용	회의 참석 수당	회의개최 실적*
감리 위원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23, §25)	· 회계감리·조사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전 심의	금융위 운영비 에서 지급 - 안전검토비 (10만원) 및 참석수당(10 만원) * 외부 위촉직에 한정하여 수당 지급	08년 6회 09년 9회 10년 13회 11년 8회 12년 9회
자본시장 조사 심의위원회	자본시장 조사업무규정 (§21, §22)	· 불공정 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심의, 이의신청· 직권재심 등에 관한 사전 심의		08년 13회 09년 13회 10년 13회 11년 7회 12년 7회
회계제도 심의위원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23, §24)	· 회계처리기준 수정요구, 회계감사기준 제·개정 승인 등 회계제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사전 심의		08년 4회 09년 4회 10년 4회 11년 1회 12년 1회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	공인 회계사법 (§48)	·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인 회계사에 대한 징계의결		08년 0회 09년 2회 10년 1회 11년 1회 12년 1회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위원회	공인 회계사법 (§6조의2)	· 공인회계사 시험과목, 선발인원 등 시험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공인회계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중요 사항 심의		08년 1회 09년 1회 10년 1회 11년 0회 12년 1회

* 정부조직 개편으로 금융위로 이관된 시점('08.2.29)부터 '12년 6월말 기준

□ 각 위원회 위원명단 및 인적사항('12.6월말 기준)

위원회명	위원명	구분	소속/직위
감리위원회	유재훈	당연직	증선위 상임위원
	진웅섭	당연직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김호중	당연직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김광윤	당연직	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장
	최성환	위촉직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
	정석우	위촉직	고려대 경영대 교수
	황이석	위촉직	서울대 경영대 교수
	지현미	위촉직	계명대 교수
	최호영	위촉직	법무법인 다담 변호사
자본시장 조사심의 위원회	유재훈	당연직	증선위 상임위원
	진웅섭	당연직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정연수	당연직	금감원 부원장보
	최성환	당연직	금융위 법률자문관
	박경호	위촉직	법무법인 원 변호사
	안동현	위촉직	서울대학교 교수
	김유니스	위촉직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회계제도 심의위원회	유재훈	당연직	증선위 상임위원
	진웅섭	당연직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김형돈	당연직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김호중	당연직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권현수	위촉직	삼덕회계법인 이사
	한종수	위촉직	이화여대 교수
	전규안	위촉직	숭실대 교수
	함종호	위촉직	안진회계법인 감사본부총괄대표
	이선종	위촉직	삼성전자 부사장
	정다미	위촉직	명지대 교수
	이영훈	위촉직	포스코 전무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	추경호	당연직	금융위 부위원장
	신민철	당연직	감사원 금융기금감사국장
	황상철	당연직	법제처 경제법제국장
	김형돈	당연직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진웅섭	당연직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정기영	위촉직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부회장
	손성규	위촉직	증선위 비상임위원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위원회	추경호	당연직	금융위 부위원장
	고승범	당연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진웅섭	당연직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이재일	위촉직	안진회계법인 부대표
	최현덕	위촉직	회계기준원 책임연구원
	이정치	위촉직	일동제약(주) 대표이사
	최관	위촉직	성균관대 교수

국제협력팀

☐ 위원회 명칭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 구성원 인적사항

구 분	성 명	현 직위
민간위원 (10인)	황성호	우리투자증권 대표이사
	최석윤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 공동대표
	정상기	미래에셋자산운용 부회장
	Patrick Mange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부사장
	이장호	BS금융지주 회장
	Michael Hellbeck	한국SC금융지주 부사장
	모종린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태혁	부산대 경영학부 교수
	김유니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연희	보스턴컨설팅그룹 시니어 파트너
정부위원 (5인)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
	윤상직	지식경제부 차관
	박원순	서울특별시시장
	허남식	부산광역시시장
유관기관 위원 (6인)	박병원	은행연합회장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
	김규복	생명보험협회장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최종석	한국투자공사장

□ 회의참석수당 예산배정 및 사용 내역

(단위 : 천원)

연도	예산배정	집행
2009	34,650	1,700
2010	25,200	10,800
2011	11,250	4,500

※ 2012년 예산배정 : 3,750천원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실적 및 참석자 현황

회차	안건	참석률
1차 (대면) ('08. 6. 30)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 -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안) -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안)	21/28
2차 (서면) ('08. 7. 30)	-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안 -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안	서면
3차 (서면) ('08.12. 3)	- 금융중심지 지정 평가단 구성·운영(안)	서면
4차 (대면) ('09. 1.20)	- 금융중심지 지정(안)	28/24
5차 (서면) ('09. 5.14)	- 금융중심지조성분과위원회 구성(안) - 금융전문인력분과위원회 구성운영(안) - 실무금융전문인력 연수원 지정 및 예산배정(안)	서면
6차 (대면) ('09.12.21)	-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서울 여의도, 부산 문현) 확정 -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 평가계획 -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추진실적(보고)	17/28
7차 (서면) ('10. 1.15)	- 녹색금융 특화MBA 선정·지원 기본계획(안)	서면
8차 (서면) ('10. 2. 2)	- 녹색금융 특화MBA 심사·선정 계획(안) -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	서면
9차 (서면) ('10. 3.11)	- 녹색금융 특화MBA 심사단 확정(안)	서면
10차 (대면) ('10. 3.22)	- 녹색금융 특화MBA 심사결과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안) -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 '10년 교육계획	19/28
11차 (대면) ('10. 9.10)	- 금융중심지정책 경과·및 평가 - 서울 여의도 금융중심지 조성 현황 및 발전계획 - 부산 문현 금융중심지 조성현황 및 발전계획 -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업무 지원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18/21
12차 (서면) ('11. 3.18)	- 녹색금융 MBA 지원사업 '10년 결과 및 '11년 추진계획 - 2010년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 평가 결과 보고	서면
13차 (대면) ('11. 6. 8)	-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자본시장 제도 개선 방안 - 서울 여의도 금융중심지 조성 현황 및 향후 계획 - 부산 문현 금융중심지 조성 현황 및 향후계획 -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업무 지원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17/20
14차 (대면) ('11. 8.25)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 (2011~2013)	16/20
15차 (서면) ('12. 3.28)	-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금 교부안 - 녹색금융특화 MBA사업 2011년 실적 및 2012년 추진계획 보고	서면
16차 (서면) ('12. 7.9)	-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안 -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운영규정 제정안	서면

□ 금융위원회

○ 위원 명단 및 인적사항

직 위	성 명	주요 학력 및 경력
위 원 장	김 석 동	서울대학교 경영학과(행시 23회) 前 재정경제부 제1차관
부 위 원 장	추 경 호	고려대학교 경영학과(행시 25회) 前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상 임 위 원	홍 영 만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행시 25회) 前 증선위 상임위원
상 임 위 원	이 상 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美 뉴욕 콜럼비아대학교 경제학 박사 前 금융시장제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당 연 직 위 원 (기획재정부 차관)	신 제 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행시 24회) 前 금융위 부위원장
당 연 직 위 원 (금융감독원 원장)	권 혁 세	서울대학교 경영학과(행시 23회) 前 금융위 부위원장
당 연 직 위 원 (예금보험공사 사장)	김 주 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행시 25회) 前 금융위 사무처장
당 연 직 위 원 (한국은행 부총재)	박 원 식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前 한은 부총재보
비 상 임 위 원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 인 숙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美 하버드대 로스쿨 前 한국거래소 사외이사

○ 회의 참석 수당(지급대상 : 비상임위원)

- (기본 2시간) 회당 10만원, (2시간 초과시) 회당 15만원

○ 회의 개최 실적(2012.1.~7월말 기준)

- (정례회의) 14회, (임시회의) 2회, (서면회의) 3회 개최
- 의결안건 185건, 보고안건 54건 처리

□ 증권선물위원회

○ 위원 명단 및 인적사항

직 위	성 명	주요 학력 및 경력
위 원 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추 경 호	고려대학교 경영학과(행시 25회) 前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상 임 위 원	유 재 훈	서울대학교 무역학과(행시 26회) 前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
비 상 임 위 원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허 창 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美 오하이오주립대 경영학 석사, 박사 前 한국정책금융공사 운영위원회 위원 現 서울시립대 경영대학 교수
비 상 임 위 원 (연세대학교 교수)	손 성 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美 캘리포니아대 경영학 석사 美 노스웨스턴대 회계학 박사 現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비 상 임 위 원	류 시 관	고려대학교 법학과 美 위스콘신 매디슨주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前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회사 부사장

○ 회의 참석 수당(지급대상 : 비상임위원)

- (기본 2시간) 회당 10만원, (2시간 초과시) 회당 15만원

○ 회의 개최 실적(2012.1.~7월말 기준)

- (정례회의) 14회, (임시회의) 1회
- 의결안건 171건, 보고안건 14건 처리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

19. 감사원에서 금융위원회로 발송한 공문(금융기금
감사국 제1과-1020호, 2012.05.01)에 의거 금융위원회가
산은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보낸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송부'라는
제목의 공문(감사담당관-517, 2012.05.02) 사본

□ 우리 위원회는 감사원으로부터 「정책금융기관 자회사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2012.05.02.에 접수받아 해당 기관에
동일자에 통보하였음.

○ 상기 통보 관련 공문 : 별도제출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

20. 감사원에서 금융위원회로 발송한 공문(금융기
금감사국 제1과-1020호, 2012.05.01)에 의거 산
은금융지주회사 및 계열사가 금융위원회로
회신한 공문 사본 일체

□ 산은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회신 공문은 총 4건임

- 산은금융지주(별첨1)
- 산은자산운용(별첨2)
- 산은캐피탈(별첨3)
- 대우증권(별첨4)

산 은 금 융 지 주

수신자 금융위원회 위원장

(경유)

제목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에 대한 집행계획 보고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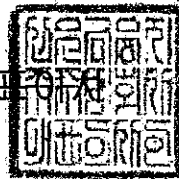
2. 감사원 처분요구에 대한 집행계획('12.7.3일 감사원 보고)을 불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불 임 1. 감사결과 집행계획(요약) 1부.

2. 감사결과 집행계획 1부.

3.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에 대한 집행계획 보고 1부. 끝.

산은금융지주 대표이사



팀원

이종윤

팀장

이민호

실장

2012.07.25.

홍성진

시행 감사-2012-128

(2012. 07. 25.)

접수

우 150-973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은은행본점

전화 02-369-2254

전송 02-369-2297

/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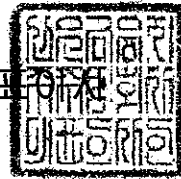
산 은 금 용 지 주

수신자 감사원장
(경유) 금융기금감사국제1과
제목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에 대한 집행계획 보고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원에서 통보하신 처분요구 등에 대한 집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감사결과 집행계획 1부. 끝.

산은금융지주 대표이사



발행	이중윤	팀장	이민호	실장	전결 2012.07.03.
시행	감사-2012-116	(2012. 07. 03.)	접수	홍성진	
우	150-973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본점	/		
전화	02-369-2254	전송 02-369-2297	/		/ 공개

감사원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내용(집행계획)

(2012. 6. 29)

지적 종류	제 목	처분요구사항	조치내용(집행계획)
통보	1. 산은금융지주 자회사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 안 미비	○ 민영화가 완료되기 전까지 A등급 이상 회사채 인수업 무와 구조화채권 인수업무 를 축소하는 등 회사채 인 수업무를 대우증권 등 자회 사에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	○ 시장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기관 앞 판매목적의 회 사채 인수 축소 중 ○ 산업은행과 협의하여 민영화 추진 상황 등을 감안한 단계별 회사채 인수업무 축소 등의 계획을 수립할 예정
	2) 산은캐피탈 등 자회사 업무·기능 조정방안 마련	○ 법인카드 등 경쟁력 열위 사업 재검토 등 자회사 업 무·기능 조정방안 마련	○ 기존 발급카드 정리 등을 감 안하여 '13년말까지 법인카 드 사업부문 중단 완결 예정 ○ CIB형 여신전문사 지향, 선택 리스 및 부동산PF 선별 취급 등 발전방안 수립료('12.6월)
	3) 자회사간 시너 지 효과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산은금융지주에서 산은캐 피탈에게 자금지원 등을 통 해 이자비용 절감 등의 시너 지 창출 방안을 마련	○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 결과와 산은캐피탈의 자금 지원 요청을 고려하여 신용 공여 실행여부 결정 예정 ○ 또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하여 은행과 Credit Line 개설 추진 중

지적 종류	제 목	처분요구사항	조치내용(집행계획)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우증권과 산은자산운용 간의 펀드 분야 시너지 활성화 대책 필요 ○ 공식·비공식으로 각종 시너지 관련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은자산운용 펀드 운용수익률 제고 등 경쟁력 역량 강화를 위한 포괄적 발전방안 수립('12.5월) ○ 대우증권 총 판매 펀드 중 산은자산운용 펀드 판매 비중을 '15년까지 30%로 제고 ○ 그룹 시너지 강화를 위해 CIB·Retail 협의회를 CB·IB·PB·AM 협의회로 확대 개편하였음('12.2월)
통보	2. 두 자산운용사 간 업무 중복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적으로 두개의 자산운용사의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 두개의 자산운용사를 통합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9월까지 두 자산운용사의 업무 조정방안 마련 예정 * 업무조정 방안(예시) 1) 산은자산-증권형, 인프라 자산-프로젝트형으로 특화 2) 인프라는 SOC 관련업무에 특화, 산은자산은 증권, 부동산, 선택펀드 운용 3) 산은자산과 인프라자산 합병
통보	3. 중국고섬 2차 상장업무 불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공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총액인수계약 단계부터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적정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안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상장 인수업무를 진행할 경우에는 당해 조항을 총액인수계약서에 반드시 삽입하도록 총액인수계약서 표준 Template 변경 ○ 수요예측 결과 기관투자자 경쟁률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에 재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프로세스 추가

지적 종류	제 목	처분요구사항	조치내용(집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상장업무를 무리하게 추진하여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주요 관련자들에 대하여 적절한 책임을 추궁하는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주사의 부문감사 감사결과 확정되는 대로 주요 관련자들에 대하여 적절한 책임을 추궁할 예정에 있음
통보	4. 산은캐피탈 자산 건전성 분류 및 리스크관리 업무 등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하게 과다 지급된 경영평가 상여금 630백만원 환수방안 마련 ○ 산은캐피탈 등 자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적정성을 검토하고 분류결과를 분석하여 평가하는 방안 마련 ○ 부실채권 발생내역 등 수시 공시사항 누락 방지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장, 감사에 대한 경영평가상여금의 반환 독촉을 위한 면담 및 공문발송 등 지속적인 환수 노력 경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환 불이행시, 강제 환수방안 등을 검토하여 대응방안 강구 ○ 직원 단체성과급의 경우 직원 사기저하 및 노동조합 반발 등이 예상되는 등 회사 경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 ○ 자회사 경영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적정성을 지주사에서 매월 모니터링 및 검토하는 절차 구축 ○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수시공시 사항에 대하여 '12년 3월부터 월별 모니터링 하는 프로세스 시행

지적 종류	제 목	처분요구사항	조치내용(집행계획)
		○ 공시를 하지 아니한 퇴직 임직원에 대한 주의등 조 치요구	○ 공시누락 등에 대한 조사· 확인을 거쳐 산은캐피탈 대표이사에게 관련자에 대 한 처분을 요구할 예정



산 은 자 산 운 용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감사원 감사결과 문책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1. 귀 회(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2년 5월 2일 통보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문서번호 : 감사담당관-517)」에 의거 문책요구 사항에 대해 조치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문책요구사항 조치 결과 보고서 1부, 끝.

산은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이사 임홍용

수신자 금융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대리 박정욱 차장 조혜연 부장 백병로 이사 권혁성
05/31
대표이사 임홍용

협조자 차장 신재혁 전무 김용수

시행 컴스17-100 (2012. 05. 31.) 접수

우 150-716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3 /

전화 02-3774-8038 전송 / jwpark@kdbasset.co.kr / 공개

감사원 감사결과 문책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 문책요구

○ 문책사유

- 펀드 설정 및 사후관리 업무 태만

○ 문책대상자

□ 조치내용

○ []에 견책 조치 완료(2012. 5. 25)

- 감사원 감사 결과 []에 대한 문책요구에 대해
2012.5.25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여 논의한 결과
[]에 대해 “견책” 조치를 의결하였음(붙임1. 인사위원회의사록
사본 참조)
- []에 대한 견책조치를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
였음(붙임2. 인사기록카드 사본 참조)

붙 임 : 1. 인사위원회의사록 사본1부

2. 인사기록카드 사본1부, 끝.

산 은 캐 피 탈

수신자 감사원/금융위원회(금융기금감사국 제1과/감사담당관실)
(경유)

제목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요구와 통보사항에 대한 회신

1. 감사원 금융기금감사국 제1과-1020(2012.05.01) 및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517(2012.05.02) 관련입니다.

2. 산은금융지주 자회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서 2012.5.2자로 요청하신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송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제목	요구사항	조치 내용
LIG건설(주)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스대출 업무 처리 불철저	관련자 () 주의 촉구	5.24자로 주의장 발부
(주)케너텍에 대한 에너지융합리화자금 대출업무 처리 부적정	관련자 () 주의 촉구	5.24자로 주의장 발부
본점 사무실 실내공사 계약 업무 불철저	관련자 () 주의 촉구	5.24자로 주의장 발부

산은캐피탈 대표이사

2012.06.25.
검사역 황상규 실장 가범현
시행 검사2012-611-203 (2012. 06. 25.) 접수
우 150-740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전화 02-6330-0184 전송 02-6330-0720 / skhwang@kdbc.co.kr / 공개

대 우 증 권

수신자 금융위원회위원장(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회보

1. 귀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 -517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송부” (2012.05.02)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3. 위와 관련된 처리결과를 첨부와 같이 회보합니다.

첨 부 : 1.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내용(집행계획)_금융위원회 1부. 끝 .

대우증권주식회사

차장	송재열	파트장	심배석	부서장	공영대	상근감사위원	윤승한	2012.06.28.
시행	감사44-2239	(2012. 06. 28.)	접수					
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3			/				
전화	02-768-3952	전송	02-783-4673	/	jaeyul.song@dwsec.com	/	공개	

1. 신용거래시 반대매매수량 산정방식 개선으로 투자자 보호 등에
기여 (통보- 모범사례)

□ 내용 및 조치요구

○ 모범내용

은 기존 반대매매 상환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한
전액상환방식을 개발하여 적용·시행하여 투자자보호 및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2011.10.01.부터 전체 증권회사에 적용

○ 조치요구

-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대상자에게 표창을 하는 등 사기진작방안 마련

□ 조치내용

- 에게 대표이사 표창을 실시(2012.06.01.)하였으며, 특별휴가 3일을 부여함.
- 당사의 사보(인쇄사보, 전자사보) 6월호에 모범사례를 소개하였으며, 사내방송 및 엘리베이터 LCD 등을 통하여 동 사례를 홍보하였음.

2. 신탁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의 불건전 영업행위 (주의)

□ 지적내용 및 조치요구

○ 지적내용

- 자본시장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탁재산간 자전거래가 4건, 계 440억 여원 이루어짐.
- 17개 일임형 랩계좌에서 5차례에 걸쳐 투자자 동의 없이 계 1억 8천여만 원의 대우증권 주식을 매수함.

○ 조치요구

- 자본시장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 및 투자자의 동의 없이 대우증권 주식을 매수하는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철저
- 관련자에게 주의 촉구

□ 조치내용

○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 원천 차단

-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2011.03.24.) 이후 위탁자의 운용지시가 있더라도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자산중 시장을 통해 처분이 불가능한 자산은 운용하지 않고 있음.

- 정기예금은 예금의 만기와 신탁계약기간 만기를 일치시켜 운영

○ 자문형 랩 운용시 당사 발행 주식은 매수 가능 종목군에서 제외함.

○ 관련자에 대한 주의 촉구

- 관련자인 와 에 대한 주 의 조치 완료 (2012.05.14.)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

21. 산은지주 IPO 세부 추진 계획

- 산은 민영화는 '09.5월 국회의 산은법 개정을 통해 '14.5월 까지 산은지주의 최초지분을 매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그간 산은지주는 수신기반 확충, 수익성·건전성 제고 등 체질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IPO를 준비 중에 있음
- 산은의 체질개선 성과를 토대로 향후 국내 금융산업 발전, 국내외 시장여건, 매각가치 극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은 민영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

22-1. 기관내 TFT 설치 및 활동 현황

- 기간 : 2009.1.1~현재
- TFT 명, 설치일, 설치목적, 활동종료일, 구성인원, 회의개최일, 활동성과 등
- 회의개최일은 회의개최 횟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회의가 개최된 날짜를 모두 표시

☐ 다음 페이지 참조

□ TTF설치 및 활동현황

연번	TFT명	설치일	설치목적	활동종료일	구성인원	회의개최일	활동성과
1	신흥국 관점의 규제개혁 TF	'10.11.	G20 서울정상회의 및 FSB 서울총회 이후 한국이 주도적으로 의제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함	'11.9.	20명	'10.11.24(1차) '10.12.3(2차) '10.12.10(3차)	거시건정성 정책체계·수단, 신흥국 이슈의 발굴 등에 대한 체계를 정립하여 G20/FSB 한국의제의 모멘텀 확보
2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합동 TF	'11.1.	가계부채의 종합대책 마련	'11.5.	11명	'11.1.12(1차) '11.1.19(2차) '11.1.26(3차) '11.2.9(4차) '11.5.23(5차)	'11.6.29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발표
3	단기지도금리 개선 관련 관계기관 합동 TF	'12.7.	단기지도 금리 개선	진행중	12명	'12.7.19 (1차) '12.7.25 (2차) '12.8.1 (3차) '12.8.14 (4차) '12.8.21 (5차) '12.9.6 (6차)	단기지도금리 개선방안 발표(8.22) *단기코픽스 도입, CD발 행 정상화 등 현재 자금시장 단기지도 금리 논의중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

22-2. 소관 TFT(Task Force Team) 설치 및 활동 현황

- 기간 : 2009.1.1 ~ 현재
- TFT명, 설치일, 설치목적, 활동종료일, 구성인원, 회의개최 회수, 회의개최일, 활동성과 등

□ 소관 TFT 설치 및 활동 현황

TF명	설치일	설치 목적	활동 종료일	구성	개최 회수 등	활동 성과
바젤3 제도화 및 대응을 위한 T/F	'11.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젤3 국내 도입을 위한 제도 마련 등 대응체제 마련 	계속	금융위, 금감원, 금융연구원, 은행권 실무관리자 등	상시개최 (금감원에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2011.9월) 작성에 참고 BCBS(바젤 은행감독위원회) 논의 동향 파악
불커를	'12.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커를의 국내 적용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등 	'128월말	금융위, 금감원, 은행연합회, 국내은행 실무관리자 등 13명	총3회 '12.6.5 '12.6.13 '12.7.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불커를 규제의 세부내용, ②불커를이 국내 은행 및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③은행권 및 감독당국의 조치 필요사항 등을 상세히 점검·파악 중
커버드본드 특별법 제정을 위한 T/F	'12.6.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커버드 본드 발행을 위한 특별법안 마련 	'127월말	금융위, 금감원,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주요시중은행, 은행연합회, 신용평가사, 법률전문가 등 11명	총3회 '12.6.21 '12.7.4 '12.7.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법제화의 효과, 발행 세부 절차사항, 해외사례 등에 대한 검토 중임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

22-3. 소관 TFT(Task Force Team) 설치 및 활동 현황

- 기간 : 2009.1.1 ~ 현재
- TFT명, 설치일, 설치목적, 활동종료일, 구성인원, 회의개최 회수, 회의개최일, 활동성과 등

자본시장과

□ TFT(Task Force Team) 설치 및 활동 현황

TFT 명	설치일	설치목적	활동 종료일	구성인원	회의 개최 회수	활동 성과
자본시장 제도개선 민관합동 위원회	'11.2.24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 발전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	11.6.21	금융위 부위원장, 최운열(서강대 교수), 박상용(연세대 교수), 박준(서울대 교수), 조재호(서울대 교수), 박경서(고려대 교수), 오규택(중앙대 교수), 김태준(금융연구원장) 등	5회	개정안 마련
전자증권법 제정 T/F	'12.1.17	전자증권법 개정안 마련	12.3.27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박준(서울대 교수), 홍정훈(국민대 교수), 상장회사협의회 조사본부장 금융투자협회 증권서비스 본부장, 예탁결제원 금융인프라 추진단장 등	8회	개정안 마련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

22-4. 소관 TFT(Task Force Team) 설치 및 활동 현황

- 기간 : 2009.1.1 ~ 현재
- TFT명, 설치일, 설치목적, 활동종료일, 구성인원, 회의개최 회수, 회의개최일, 활동성과 등

은 행 과

□ 소관 TFT 설치 및 활동 현황

TFT 명	설치 일	설치 목적	활동 종료 일	구성 인원	회의 개최 회수	회의 개최일	활동 성과	비고
헤지펀드 모범 규준 TF	'11. 6월	헤지펀드의 설립·운용·환매 등 과정에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한 실무지침을 제시해 제도의 조기안착 지원	'11.12.6	8인 (전문가, 업계, 학계 등)	5회	매월	헤지펀드와 프라이빗 브로커 관련 모범규 준 제정	사무관 김성진 (2156- 9893)
투자자 보호 제도 개선 TF	'12 7.13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펀드 제도 개선	진행중 (8월말 종료 예정)	18인 (업계, 학계 등)	1회	'12.7.1 3	현재 진행중	사무관 이한샘 (2156- 9894)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

22-5. 소관 TFT(Task Force Team) 설치 및 활동 현황

- 기간 : 2009.1.1 ~ 현재
- TFT명, 설치일, 설치목적, 활동종료일, 구성인원, 회의개최 회수, 회의개최일, 활동성과 등

공정시장과

□ 소관 TFT 설치 및 활동 현황

TFT 명	설치일	설치 목적	활동 종료일	구성 인원	회의 개최 회수	회의 개최일	활동 성과
국제회계 기준 정착 추진 단	'09.3.31	· 국제회계기준 (IFRS)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한 아슈레컬 및 지원 방안 검토	'10.11월	17	5	'09.3.18 '09.7.10 '09.12.28 '10.5.17 '10.11.30	· 각 분야별 IFRS 추진 상황 점검 · 교육 및 홍보 애로사항 점검 및 지원방안 마련
회계산업 선진화 민관합동 위원회	'11.5.13	· 회계투명성 제고 및 회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11.10월	13	5	'11.5.13 '11.7.6 '11.8.26 '11.9.23 '11.10.28	·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등을 마련
불공정 거래 조사 개선 TF	'12.3.30	· 신속한 불공정 거래 조사 등을 위한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조사 체계 구축	'12.12월	6	5	'12.3.30 '12.4.4 '12.4.10 '12.4.16 '12.5.17	· 불공정거래 예방 강화 불공정거래 조사 활성화 및 관련 제도개선 등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개선방안'을 마련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

22-6. 소관 TFT(Task Force Team) 설치 및 활동 현황

- 기간 : 2009.1.1 ~ 현재
- TFT명, 설치일, 설치목적, 활동종료일, 구성인원, 회의개최 회수, 회의개최일, 활동성과 등

전자금융팀

□ 소관 TFT 설치 및 활동 현황

TFT 명	설치일	설치 목적	활동 종료일	구성 인원	회의 개최 회수	회의 개최일	활동 성과
금융회사 IT보안 강화 TF	'12.4.19	금융IT보안 점검 및 보안 강화 대책 마련	'11.6월	26	8회	'11.4.15 '11.4.22 '11.6.2 '11.6.7 '11.6.21 '11.6.27 '11.6.30 '11.7.1	금 용 IT 보 안 강화 종합대책 마련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 T/F	'11.12.20	보이스피싱 피 해를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종합대책 마련	'12.1월	13	5	'11.12.20 '11.12.27 '12.1.3 '12.1.10 '12.1.17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종합대책 마련
한EU FTA 관련 정보보호 TF	'12.6.1	정보처리업무의 해외이전허용에 따른 정보보호 방안 검토	활동 중	12	2	'12.6.1 '12.6.19	금융정보이전에 따른 정보보호 방안 논의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

23. 감사기구 설치 및 감사책임자 선임 관련 자료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된 감사기구 및 감사책임자에 대한 자료
- 설치일, 감사기구 명칭, 감사책임자명, 소속인원, 감사수행 실적, 최근 지적사항 내용 등

24. 감사업무지침 또는 매뉴얼

○ 감사기구 현황

설 치 일	감사기구 명칭	감사책임자명	소속 인원	비 고
2008.02.29.	감사담당관	송재근	총 7명	

○ 감사수행 실적 및 감사결과(지적사항)

감 사 명	감사 기간	감사결과	비 고
2008년도 금융위원회 자체감사	'08.06.23 ~ 06.27	별첨1	별도제출
신용보증기금 종합감사	'08.11.17 ~ 11.28	별첨2	별도제출
여신금융협회 종합감사	'09.07.06 ~ 07.17	별첨3	별도제출
금융연수원 종합감사	'09.11.16 ~ 11.27	별첨4	별도제출
한국회계기준원 종합감사	'10.03.29 ~ 04.06	별첨5	별도제출
금융결제원 종합감사	'10.05.31 ~ 06.14	별첨6	별도제출
전국은행연합회 종합감사	'10.11.15 ~ 11.26	별첨7	별도제출
2010년도 금융위원회 자체감사	'10.12.16 ~ 12.22	별첨8	별도제출
신용회복위원회 종합감사	'11.08.25 ~ 09.07	별첨9	별도제출
한국공인회계사회 종합감사	'11.11.21 ~ 11.29	별첨10	별도제출
미소금융중앙재단 종합감사	'11.10.20 ~ 10.28 / '11.12.05 ~ 12.16	별첨11	별도제출
2011년도 금융위원회 자체감사	'11.12.26 ~ 12.30	별첨12	별도제출

* 2009년도의 경우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09.06.15~07.17) 수감으로 자체감사 생략

○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 별첨13 별도제출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

25. 한국기업데이터 지배구조 개편 관련 자료
26. 한국기업데이터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세부 계획
 - 사업추진 취지, 세부 일정, 주주구성 및 지분을 변경 계획, 지배구조 개편 방법, 재무구조 변경 계획 등의 내용포함
27. 한국기업데이터를 「중소기업 전담 신용정보회사로 육성」 하기 위한 세부 계획
28. 한국기업데이터 지배구조 개편시 「금융기관과 신용정보 공유추진」 세부계획
29. 과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용정보 인프라 구축」 과 관련한 사업실적
 - 최근 5년간 사업추진 실적과 총투자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0. 한국기업데이터의 감자 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
 - 추진사유, 재무적 이익, 자본감소비율 등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
31. 한국기업데이터에 대한 중장기적 발전 계획
 - 위상과 역할, 투자계획, 비즈니스 모델, 신용정보 인프라 확충 등의 내용

☐ 해당 자료는 한국기업데이터에서 제출하였음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

32.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관련

- 최근 2년간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및 항목별 조치내역, 미조치 내용의 향후계획
-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주요 위원회로부터 권고받은 내역 및 항목별 조치내역, 미조치항목과 사유

은 행 과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일	제도개선 권고 내용	처리결과
'10.03.10	우체국 예금 건전성에 관한 감독기구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예금의 건전성 기준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고, 우리위원회는 기준안에 대한 검토의견 전달 - 우정사업본부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정
'10.03.10	예금의 구속행위에 대한 관련자 제재수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 은행법('10.4월 국회 통과, 11.18일 시행)에서 은행의 예금 구속행위(꺾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반드시 과태료(5천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제재 규정 신설

보 험 과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일	제도개선 권고 내용	처리결과
'10.10.19	【보험피해방지 제도개선 권고】 ○ 보험계약시 계약자에 대한 보험모집자의 설명의무 구체화, 보험설계사 관리감독 강화 및 선지급수수료제도 개선 등	-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안 중 수용가능한 의견의 경우 보험업법 및 시행령등 개정시 ('11.1.24시행) 반영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일	제도개선 권고 내용	처리결과
'10.7.28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및 대출심사 기준 차별금지】	- 보험가입 및 대출심사 기준을 조사하여 장애인 차별 조항이 있는 경우 시정하도록조치
'10.10.4 '10.11.4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 금지 등】 ○ 보험상품 이용과 관련한 장애인 차별방지를 위한 규정검토 및 감독강화	-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 시 장애인차별 금지조항 신설 (보험업법§97①, '11.1.24시행) - 보험가입심사시 비장애인과 동일기준으로 심사하도록 모집인에 대한 교육강화 및 설계사 자격시험시 관련 문항 출제하도록 조치

제 도 팀

기관명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국민권의 위원회	임의적 절차(진행) 규정의 강행규정화	- 제재규정 강행규정화 대상 선정 · 규정변경예고(~2010.11.12일)
	제재기준의 세분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2010.1.5) - 내부적으로 운영 중인 제재기준을 시행 세칙에 반영
	임직원에 대한 금전적 제재 방안 검토	- 주요 선진국 등 해외사례 조사·연구 진행 중
	감독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신뢰성 제고	「제재내용 공개수준 확대방안」 시행 (2010.1.28) - 재판상 공개 곤란한 경우 등을 제외 하고 원칙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

33-1. 최근 2년간 본부(본청)의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 최근 2년간 감사원 처분요구서는 총 8건임

감 사 명	감사 기간	감사결과	비 고
정책금융제도 개편 및 운영실태	'10.09.06 ~ 10.13	별첨1	
대한생명 매각 관련 공적자금 운용실태	'10.12.09 ~ 12.29.	별첨2	
2010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검사 등 결산감사	'11.03.17 ~ 03.25	별첨3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실태	'11.03.21 ~ 05.26	별첨4	
어음대체결제수단 이용 대출 등 운영실태	'11.07.04 ~ 07.29	별첨5	
증권시장 운영 및 감독실태	'11.09.19 ~ 10.31	별첨6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12.01.09 ~ 02.28	별첨7	
금융위원회 재무감사	'12.03.05 ~ 03.16.	별첨8	

□ 별첨 1 - 정책금융제도 개편 및 운영실태 : 별도제출

□ 별첨 2 - 감사결과보고서 : 별도제출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

33-2. 최근 2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 최근 2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는 총 2건임

감 사 명	감사 기간	감사결과	비 고
2010년도 금융위원회 자체감사	'10.12.16 ~ 12.22	별첨1	
2011년도 금융위원회 자체감사	'11.12.26 ~ 12.30	별첨2	

자체감사(정기)

12.16 ~ 12.22

2010년 금융위원회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2011. 1.

금 융 위 원 회

[감 사 담 당 관 실]

- 목 차 -

I. 감사개요

II.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2. 부문별 감사결과

가.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나. 출납업무 담당자 운용

다. 대통령 지시사항 등 주요사업 추진·관리

라. 법령 제·개정절차 이행수준

3.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4. 감사결과 처리요령

I. 감사실시 개요

〈목 적〉

◇ 예산집행·회계처리 및 국정과제, 대통령지시사항등 주요사업 이행·관리실태 등에 대한 정기점검

⇒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개선대안 마련 및 기관운영의 안정성·효율성 제고

* 「'10년 자체감사계획」('10.2.8 기보고)에 따른 감사임

1 실시개요

□ 감사기간 : '10.12.16(목) ~ 12.22(수), 5일간

□ 감사대상 : '08.7 ~ '10.11 기간중 예산집행실태 등

□ 감사반원: 감사담당관실 5명(감사담당관, 5급 2, 주무관 2)

□ 감사방법: 서면점검

* 수감부서의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서면위주로 실시

2 감사중점

□ 예산집행·회계처리의 적정성

□ 대통령 지시사항 등 주요사업 추진·관리의 적정성

□ 법령 제·개정절차 이행의 적정성

□ 외부감사(감사원) 지적사항 이행실태

II.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 금번 감사는 '08년 자체감사('08.6.23~6.27) 이후 2년6월만에 실시
 - 예산집행 등 기관운영의 기본적 사항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조직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하는데, 중점을 둠
- 감사결과 금융위 설립('08.2.28) 초기 업무시스템 정비 과정에서 나타났던 불안정성은 상당부분 안정화된 것으로 평가
 - 다만, 회계 관련 서류의 관리 등 예산집행의 세부적인 부분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보완할 부분도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분야별 주요 발견사항]

- ①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관서운영경비 출납부서)
 - ☞ 출납서류 편철·관리 및 지출증빙·집행방법 등 부적정
- ② 대통령 지시사항등 주요사업 추진·관리(행정인사과)
 - ☞ 정상적으로 추진·관리 → 특이사항 발견되지 아니함
 - * 대부분 과제가 완료되었거나 종료요청중이며, 일부 미완료과제도 정상 추진중
- ③ 법령 제·개정절차 이행 → 부패영향평가 의뢰 미흡(관련부서)
 - ☞ '09.7 ~ '10.6 기간중 21건의 제·개정(안)중 14건 기한도과 등
- ④ '09년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지적사항 이행(관련부서)
 - ☞ 관련 제도 개선등 적절히 조치

가.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① 출납서류 편철·관리 부실 및 지출증빙 처리 부적정

□ 출납 관련서류 편철·관리 부실

-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제31조 내지 제33조)에 따라 매월 출납업무 마감 후 출납계산서, 국고예금 월계대사표 및 비목별 지출증빙서류를 편철·관리하여야 함

<관서운영경비 출납서류 편철방법>

① 출납계산서(규칙 제7호 서식)	• 월단위로 편철
② 국고예금월계대사표(00년 00월분)	
③ 세목별 간지(본월지출액: 00원, 건수: 00건)	• 세목별로 구분
④ 지급결의서	
⑤ 내부결재(품의서)	• 5년간 보관
⑥ 기타 증빙자료(영수증, 계약서, 청구서 등)	

- 그러나 금융정책국 등은 예산집행 서류를 연간 목별로만 관리하는 등 계산증명규칙과 다르게 관리하여 출납계산서와 국고예금월계대사 및 지출증빙간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게 함

< 부서별 지적사항 >

부서명	지 적 내 용
■ 금융정책국	• '08.7~'10.11 기간중의 출납서류 관리 부실
■ 금융서비스국	• '08.7~'10.11 기간중의 출납서류 관리 부실
■ 자본시장국	• '10.1~'10.11 기간중의 출납서류 관리 부실
■ 대변인실	• '08.7~'10.11 기간중의 출납서류 관리 부실

□ 사전품의 없이 공공요금 등 관서운영경비 집행

- 「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24p)」은 예산 집행시
정당한 결재권자의 결재를 통하여 집행하도록 규정
- 또한, 「금융위원회 위임전결규정」은 예산 집행시 중요사항은
국장, 일반사항은 과장이 전결토록 규정
-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 공공요금, 기타운영비 등을 집행하면서
사전 품의 없이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
 - * 예산집행시에는 집행건별로 집행사유, 집행대상, 소요예산 및 해당 예산과목
등에 대하여 결재권자의 결재(품의)를 득하여 집행하여야 함

□ 예산집행 품의서에 결재권자의 서명이 아닌 도장 날인

-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3조제8호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문서는
서명(행정전자서명 포함)에 의한 결재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 서명은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일부 부서에서 업무추진비등 품의서에 부서장 서명이 아닌
도장을 날인하여 증빙자료로 관리

□ 정부구매카드 사용시 부서명 서명 및 특근매식비 현금집행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24p 및 101p)」에 따라 정부구매
카드 사용시에는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하여야 하며,
 - 특근매식비의 집행은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야 함
- 그러나, 상당수 실·국에서 정부구매카드 사용시 부서명(○○팀 등)
으로 서명하였고, 대변인실은 특근매식비 집행시 현금으로 집행*
 - * '08.12.18(273,000원) 및 '08.12.23(25,000원)

② 관서운영경비 집행방법 부적정

□ 통역비 지급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미 실시

- 소득세법시행령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 그러나 대변인실은 '09.9.29 김○○에게 통역료 80만원을 지급하면서 관련 세금(기타소득세)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 * 단, 지급금액의 80%(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기타소득)이 5만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소득세법 제21조제2항, 84조제3호, 시행령 제87조제1항)
 - 강의로 25만원 지급시: 25만원의 80%(20만원)를 공제하면 기타소득은 5만원으로 기타소득세 비과세
 - 강의로 30만원 지급시: 30만원이 80%(24만원)를 공제하면 기타소득은 6만원으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 09년도 발생 에디터 비용을 '10년도 예산으로 집행

- 국고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전년도 발생 채무확정액을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됨
- * 예외) 공무원보수, 군인사망급여금, 군인전상급여금, 보험료, 이자 등
- 그러나, 금융정보분석원은 '09년 12월 발생한 영문에디터(2명) 비용 2,664,690원을 '10년도 예산(수용비)에서 지급

□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을 초과하여 관서운영경비 지급

-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32조제3항 및 제33조에 따라 출납공무원은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 내에서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여야 함
- 그러나 기획조정관실은 업무추진비를 지급함에 있어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자금을 초과하여 지급*

* '09.3, 6, 9월에 각각 1,580,000원, 393,000원, 6,160,000원씩을 초과 지급

⇒ 첫째, 예산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와 방법으로 집행할 것

- 반드시 정당한 결재권자의 서명에 의한 사전 결재로 집행
- 정부구매카드 영수증에는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
- 특근매식비는 정부구매카드로 집행
- 연도내 발생경비는 당해 연도 예산으로 집행(법령상 예외는 제외)
- 예산과목별 교부액을 준수하여 집행

둘째, 예산집행 서류는 계산증명규칙에 부합도록 편철·관리할 것

나.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 담당자 운용

□ 출납업무 담당자 운용 개선 필요

-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 담당부서 중 출납 관련 서류의 관리 등이 상대적으로 부실한 부서의 경우 대부분 공무원 경력이 없는 초임자(주무관) 1인이 출납업무를 담당

- 출납업무 뿐만 아니라 민원업무 등 다른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어 출납업무에 상대적으로 소홀

대변인실	금융정책국	금융서비스국	자본시장국
• 주무관 1(담당)	• 주무관 1(담당)	• 주무관 1(담당)	• 주무관 1(담당)

- 반면, 출납업무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부서의 경우 실무관이나 사무원이 출납업무 담당자를 보조

- 출납업무 담당자의 업무부담 완화 및 업무수행의 안정성·효율성을 제고

행정인사과	기획조정관실	금융정보분석원	공자위사무국
• 주무관 1(담당)	• 주무관 1(담당)	• 주무관 1(담당)	• 주무관 1(담당)
• 주무관 1(보조)	• 사무원 1(보조)	• 주무관 1(보조)	• 사무원 1(보조)

⇒ 출납업무 담당 1명만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서는 실무관 또는 사무원을 출납공무원 보조자로 지정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토록 지원할 것

*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에서 실시하는 예산·회계교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교육 등

다. 대통령 지시사항 등 주요사업 추진·관리

①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현황 : 특이사항 없음

□ '11.01 현재 총 38개 지시사항중 36개 완료, 2개 지시사항 추진중
< 미완료 대통령지시사항 추진현황 >

지시일	지시내용	이행단계	담당과	처리기한
09.09.03	구조조정 추진 관련	추진 중*	기재단	10.12.31
10.12.21	전국민 보안의식 강화	추진 중**	감사	11.12.31

* 추진계획 수정·보완하여 승인요청 중으로 승인시 처리기한 연장 예정

** 추진계획 수립 및 승인 완료

② 국정과제 추진현황 : 특이사항 없음

□ '11.01 현재 27개의 과제중 23개 완료, 4개 과제 추진중
< 미완료 국정과제 추진현황 >

세부실천과제	계기	시한	단계
단기사채 제도 법적 근거 마련	인수위 국정과제	10.하	연장요청*
산업은행의 원활한 민영화 여건 마련	'09 8.15 경축사	12.하	추진 중
체계적인 금융교육실시	인수위 국정과제	12.하	추진 중
햇살론의 안정적 정착	'10 8.15 경축사	12하	추진 중

* '11년 상반기까지 기한연장을 요청 중에 있으며 1월중 연장승인 예정

⇒ '10.3.4 ~ 4.16 기간중 우리 위원회등 29개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된 감사원의 「주요사업 추진실태 감사」에서도 지적사항 없었음

다. 법령 제·개정시 필요절차 이행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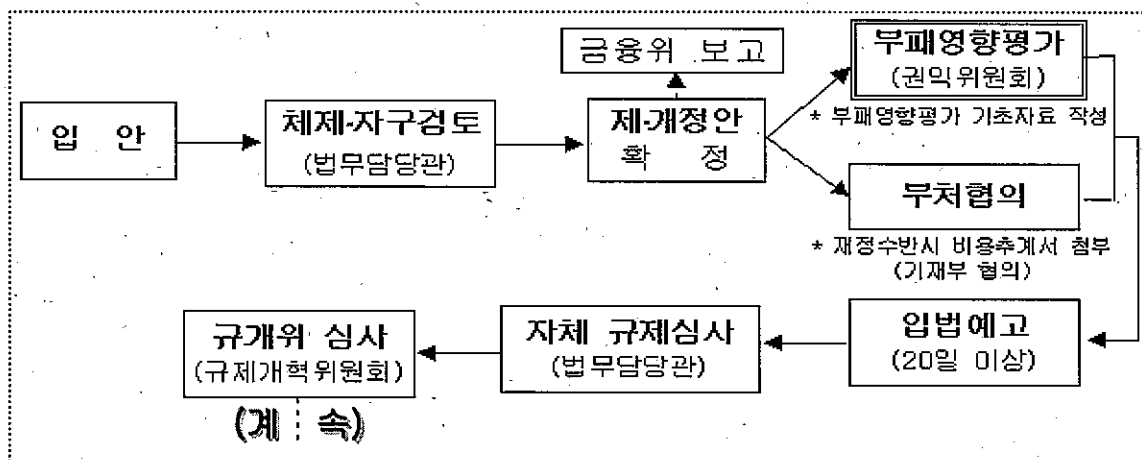
□ 현 황

- 법령 제·개정시에는 부패영향평가*, 부처협의,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준수 하여야 함 (표1 참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법령 입안시 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의뢰토록 규정(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30조)

-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09.10.1 ~ '10.9.30 기간중 총 21건의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안

< 부패영향평가 의뢰 : 부처협의와 병행 실시 >



□ 점검결과

- 법령 입안시 필요한 절차는 대체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으나, 부패영향평가 의뢰가 다소 미흡
- 총 21건 중 7건만이 기한내 부패영향평가를 의뢰, 12건은 입법예고 이후에 의뢰, 2건은 의뢰하지 않음 (표2 참조)

⇒ 향후 법령 제·개정시 반드시 부패영향평가 의뢰를 입법예고 전에 부처협의와 병행하여 실시토록 할 것

□ 지적사항 및 조치구분

지 적 사 항	조치구분
■ 출납서류 편철·관리 부실 및 지출증빙 처리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에 부합토록 집행 관련 서류 편철 → 1개월 이내 감사담당관실로 그 결과 회보 (금정국, 서비스국, 자본국, 대변인실) · 관서운영경비는 지급건별로 결재권자의 직접 서명에 의한 품의 (또는 전자결재)를 통하여 집행하고, 정부구매카드 사용시에는 카드 영수증에 반드시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할 것 (금정국, 서비스국, 자본국, 기획조정관실, 행정인사과, FIU, 공자위사무국) · 특근매식비를 현금으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대변인실) 	주 의
■ 관서운영경비 집행방법 부적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서운영경비 집행시 원천징수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 (대변인실) · 법령과 다르게 지난 연도 채무확정액을 현 연도 예산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할 것 (FIU) · 교부받은 과목별 자금한도를 초과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할 것 (기획조정관실) 	주 의
■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 보조인력 지정 등 개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관 또는 사무원을 출납업무 보조자로 지정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토록 지원하여 출납업무가 안정적·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개선 (금정국, 서비스국, 자본국, 대변인실) 	권 고
■ 민간전문가 파견·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전문가를 파견 받아 활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무원 임용령(제41조의2) 및 공무원임용규칙(제42조)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할 것 (전부서) · 민간전문가 파견·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행정인사과) 	현지조치

※ 위 지적사항과는 별도로 모든 부서는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시 반드시 부패영향평가 의뢰(국민권익위원회)를 부처협의와 병행하여 실시하시기 바람

□ 향후 조치계획

- 감사결과 각부서 및 감사원에 통보
-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교육 (1월중)

4 감사결과 처리요령

1. 처분요구 사항의 조치기한

- 가. 문책사항은 1월 이내
- 나. 변상사항은 3월 이내
- 다. 개선·개선통보·시정·권고사항은 2월 이내

2. 조치결과 보고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 는 상기 조치기한 이내에 자체 조치한 후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함

3. 이의신청

소관부서는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의견서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자체감사(정기)

2011.12.26 ~ 12.30

2011년 금융위원회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2012. 2.

금 융 위 원 회

[감사담당관실]

- 목 차 -

I . 감사개요

II .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2. 부문별 감사결과

가.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나. 민원업무 처리

3.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4. 감사결과 처리요령

I. 감사실시 개요

〈목 적〉

◇ 예산집행·회계처리, 계약사무, 민원처리실태 등에 대한 정기점검

⇒ 취약한 부분에 대한 개선대안 마련으로 기관운영의 안정성·효율성 제고 및 爲民奉仕의 행정구현

* 「'11년 자체감사계획」('11.2.1 기보고)에 따른 감사임

1

실시개요

- ☐ 감사기간 : '11.12.26(월) ~ 12.30(금), 5일간
- ☐ 감사대상 : 以前 자체감사 대상 이후의 예산집행실태 등
* 예산집행실태 등은 '10.12월 이후, 민원처리실태는 '10.7월 이후
- ☐ 감사반원: 감사담당관실 5명(감사담당관, 5급 2, 주무관 2)
- ☐ 감사방법: 서면점검(필요시 현장실사)

2

감사중점

- ☐ 예산집행·회계처리의 적정성
- ☐ 민원업무 처리의 적정성
- ☐ 以前 자체감사 지적사항 이행의 적정성

II.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 ☐ 예산집행 및 민원처리 등 기관운영의 기본적 사항에 대한 정기 점검을 통해 조직운영의 안정성·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
- ☐ 감사결과 중대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아니함. 다만, 예산집행 서류의 관리 및 민원처리기한 준수 등 일부 보완이 필요

[분야별 주요 발견사항]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관련>

- ①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관서운영경비 출납부서)
 - ☞ 지출증빙 관리 및 배정한도 준수 집행 등 철저 필요
- ② 5천만원 초과 전용건 일상감사 미이행(기획행정실)
 - ☞ 건당 5천만원 초과 이·전용 및 이월은 일상감사 대상

<민원업무 처리 관련>

- ① 처리기한 미준수 및 연장통보 부적정
 - ☞ 처리기한 도과 처리(109건, 1.7%) 및 임의형식 연장통보 등
- ② 이첩민원 해소 필요(산금과 민원 92% 신보·기보·캠코에 이첩)
 - ☞ 신보·기보·캠코에 국민신문고 구축하여 직접처리 필요

2 분야별 감사결과

가.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관련

1 점검개요

□ 2011년도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중 각 부서에서 직접 집행하는 관서운영경비를 중심으로 점검

○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총액은 1조 5,530억 77백만원으로 대부분이 전출금·상환지출·이전지출* 등이며,

*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 IBRD차관원리금상환, 모기지론이차보전, 농어가목돈마련장려기금출연 등

○ 직접 집행액은 306.8억원(2.0%)으로 이 중 인건비(144.1억원)를 제외한 집행(162.7억원)을 중점 점검

<2011년도 일반회계 집행실적 (억원, %)>

구분	인건비	물건비	자산취득	이전지출	상환지출	전출금등	계
예산 (비중)	163.2 (1.0)	155.1 (1.0)	5.0 (0.0)	707.7 (4.5)	31.8 (0.2)	14,493.5 (93.2)	15,556.3 (100.0)
지출 (비중)	157.1 (1.0)	144.1 (0.9)	4.3 (0.0)	705.0 (4.5)	26.7 (0.2)	14,493.5 (93.3)	15,530.8 (100.0)
이월	0	0.7	0	0	0	0	0.7
불용	6.1	10.3	0.7	2.7	5.1	0	24.9

□ 예산집행지침, 감사원 계산증명규칙 등 관련 규정 부합여부 및 집행절차, 증빙처리의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② 점검결과 지적사항

① 관서운영경비 집행방법 부적정

□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을 초과하여 관서운영경비 집행 등

○ 국고금관리법시행령(제32조3항 및 제33조)에 따라 출납공무원은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 내에서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여야 함

○ 그러나 금융정책과 등은 업무추진비 등을 지급함에 있어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자금을 초과하여 지급*

* 금융정책과(업무추진비 5,095,100원, 특근매식비 2,984,780원 / 6~9월), 자본시장과(업무추진비 2,345,932원 / 4월)

○ 또한, 기획행정실은 국외출장에 따른 여비를 국외여비가 아닌 국내여비 예산에서 집행

* APG 연차총회 참석(인도)을 위한 국외여비 2,861,610원을 국내여비로 집행(7.15)

□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시 상대방 성명 등 기재 미비

○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지침 141p)

○ 그러나, 기획재정담당관실 등은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주된 상대방의 소속·성명 미기재*

* 기획재정담당관실('11.2.28 / 970,000원), 국제협력팀('11.6.8 / 954,800원), 정책홍보팀('11.8.11 / 568,000원)

⇒ 매월 교부받은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을 준수하고, 예산과목에 충실하여 집행하며,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집행시에는 반드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성명을 기재할 것 (주의 : 해당부서)

② 출납서류 편철·관리 및 지출증빙 처리 부적정

□ 출납 관련서류 편철·관리 부실

-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제31조 내지 제33조)에 따라 매월 출납업무 마감 후 출납계산서, 국고예금월계대사표 및 비목별 지출증빙서류를 편철·관리하여야 함

<관서운영경비 출납서류 편철방법>

① 출납계산서(규칙 제7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단위로 편철 • 세목별로 구분 • 5년간 보관
② 국고예금월계대사표(00년 00월분)	
③ 세목별 간지(본월지출액: 00원, 건수: 00건)	
④ 지급결의서	
⑤ 내부결재(품의서)	
⑥ 기타 증빙자료(영수증, 계약서, 청구서 등)	

- 그러나 금융정책과 등은 월별 출납서류에 출납계산서 등 일부 서식을 누락하여 편철

부서명	누락서류
■ 금융정책과	• 출납계산서, 세목별 간지, 지급결의서
■ 정책홍보팀, 기획행정실	• 국고예금월계대사표
■ 기획재정담당관실	• 세목별 간지

□ 사전품의 없이 관서운영경비 집행

- 「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24p)」은 예산 집행시 정당한 결재권자의 결재를 통하여 집행하도록 규정
- 그러나 자본시장과는 일반수용비 집행에 있어 일부 품의서 누락

부서명	품의서 누락 사례
■ 자본시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2.23(생수 1,101,100원), 3.16(복사기드럼 765,600원), 4.14(용지 2,127,000원), 5.19(사무용품 657,900원), 9.7(명패 283,800원), 11.30(토너 4,957,700원) 등

⇒ 예산집행 서류는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에 부합토록 편철·관리하고, 수용비 집행시 품의서 누락사례가 없도록 할 것 (주의 : 해당부서)

③ 건당 5천만원 이상 전용건에 대한 일상감사 미이행

□ 「금융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은 건당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산전용에 대하여 일상감사 대상으로 규정

※ 일상감사대상(금융위 일상감사 실시지침)

- 예산이 5억원 이상인 사업
- 성과관리계획상 주요 정책과제 (집행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일정규모 초과 계약건 (종합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기타공사: 8천만원, 용역·물품의 제조·구매: 5천만원)
- 건당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산의 아·전용 및 이월
- 주거래 은행의 선정·변경
- 실·국 단위 이상에서 개최하는 워크숍, 연찬회 등 행사 및 외부 참석인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과단위 행사 포함)

□ 그러나 기획행정실은 FIU 인건비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본부 인건비에서 8,000만원을 전용('11.12.23)하면서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음

<FIU 인건비 전용내역>

(단위 : 백만원)

일자	건명	세부사업명	'11예산원액	변경액	변경 후 금액
12.23	FIU 인건비 부족에 따른 예산 자체전용	FIU 인건비	2,926	80	3,006
		본부 인건비	12,745	△80	12,665

⇒ 향후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산전용건에 대하여 반드시 일상감사를 의뢰하는 등 「금융위 일상감사 실시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 (주의 : 기획행정실)

④ 성실한 업무처리로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모범사례)

□ ○○국은 '10년 자체감사시 예산집행 서류를 연간 목별로만 관리하는 등 계산증명규칙과 다르게 하여 출납계산서와 국고예금월계대사 및 지출증빙간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게 하였고,

○ 수용비, 공공요금 등을 결제권자의 결재를 득한 사전품의 없이 집행하였으며, 정부구매카드 사용시 사용영수증에 사용자의 실명이 아닌 부서명으로 서명한 사례가 빈번하여 지적(주의)을 받은 바 있음

□ 그러나, '11년 1월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 담당자가 아래와 같이 교체되면서 금번 감사일 현재 '10년도 감사 지적사항을 완전히 해소하는 한편 관서운영경비 집행과정에서 '예산집행지침'을 성실히 이행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크게 제고함

소 속	성 명	직 급	담당업무	담당기간
○○과	○○○	○○	○○국 관서운영경비 출납	'11.1월 ~ 현재

⇒ 각 과장은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 담당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동 모범사례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 행정인사과장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한 상기 담당자에게 포상 등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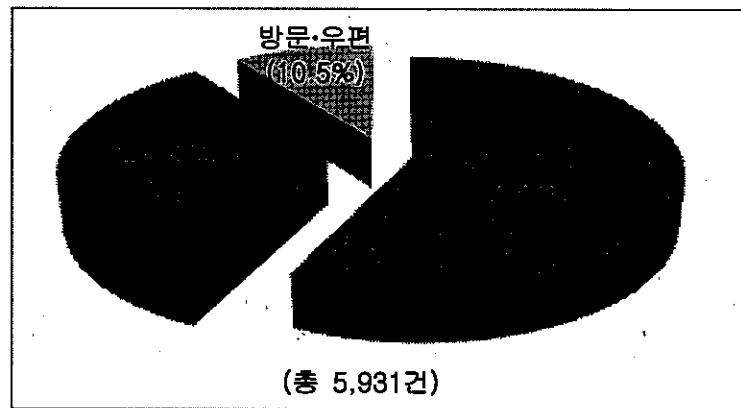
나. 민원업무 처리 관련

① 현황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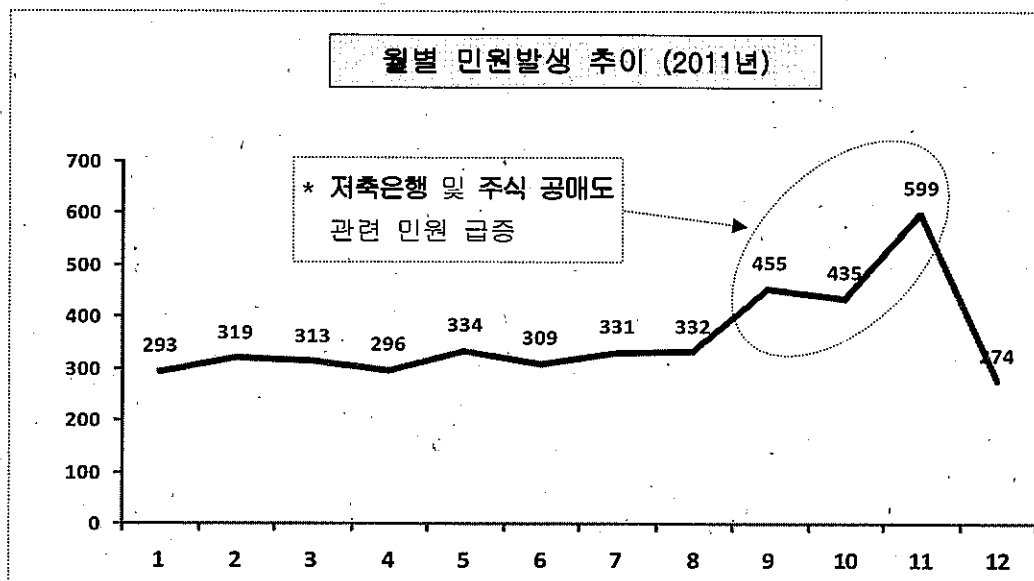
□ 점검대상기간('10.7.1 ~ '11.11.30)중 총 5,931건* 접수·처리

* 반복민원 433건 포함시 6,364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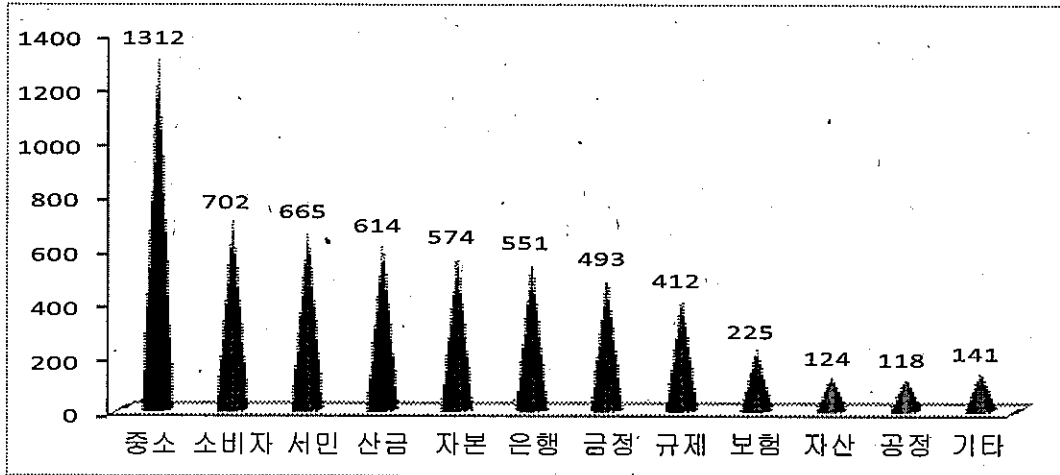
구 분	건 수
신 문 고	3,238
홈페이지	2,067
방문·우편	626
합 계	5,931



- 통상적으로 매월 3백건 내외의 민원이 발생하며, 저축은행 등 특정 사안 발생시 일시적으로 급증



□ 부서별 : 중소기업과 → 금융소비자과 → 서민금융과 순



○ 중소기업·소비자·서민등 3개 과의 민원은 모두 서민금융 관련 민원으로 총 2,679건으로 전체 민원의 45.2% 차지

- 이들 민원의 만족도*는 44.7%로 전체 만족도 49.0% 보다 4.3%p 낮게 나옴

* 중소기업(41.7%), 금융소비자(48.5%), 서민금융(49.2%)

○ 산업금융과 민원*은 대부분(91.8%) 신보, 기보, 캠프 민원으로 해당 기관에 이첩되었으며, 만족도는 42.9%로 나타남

산업과 민원(건)	신 보	기 보	캠 코	기 타	합 계
	311	98	155	50	614

□ 속성별 : 일반민원*(3,544) → 법령질의(1,160) → 제도개선(592) → 진정(493) → 기타(231)의 순

* 일반민원 대부분도 현행제도 내에서 해소가 어려운 진정성 민원

* 법령질의 만족도는 83.3%로 전체 평균(45.2%)보다 월등히 높음

② 점검결과 지적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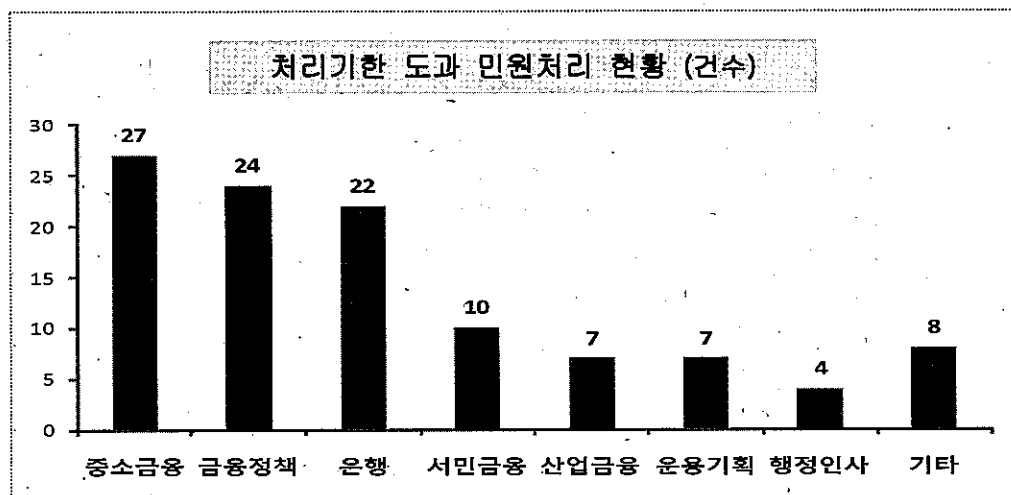
① 처리기한 미준수 및 연장처리 부적정

- 처리기한 준수율은 98.3%로 '10년 점검시의 95.8%보다는 개선되었으나, 중앙행정기관 평균 99.5%* 보다는 낮음

* 「2011년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만족도 평가(권익위)」에서 금융위의 처리기한 준수율은 '보통'으로 외통부, 교과부 등과 함께 최하위권

- 처리기한 연장 등의 조치 없이 처리기한*을 초과한 경우는 109건 (1.7%)으로 중소기업과, 금융정책과, 은행과에 집중됨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일반질의·상담은 7일, 법령질 의는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함



-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연장사유 및 처리예정기한을 명확히 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및 시행규칙(제8조)

- 그러나, 일부 서신민원(방문·우편)의 경우 당해 민원인에게 처리기한 연장통보 없이 국민신문고상으로만 연장처리

- * 서신민원의 경우 행정편의상 국민신문고에 등재·관리하더라도 처리기한 연장은 당해 민원인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서신으로 하여야 함

<사 례>

민원인	접수일	처리일	연장횟수	처리부서
김OO	'11.01.31.	'11.03.18.	3회	금융정책과
이OO	'10.07.16.	'10.08.17.	3회	산업금융과
강OO	'10.10.29.	'10.11.26.	3회	중소금융과
황OO	'11.05.20.	'11.06.22.	3회	서민금융팀
홍OO	'10.08.11.	'10.09.10.	3회	은행과
심OO	'11.10.17.	'11.11.17.	3회	보험과
김OO	'10.07.21.	'10.08.20	3회	운용기획팀

- 또한, 서신으로 연장통보 하는 경우 공문 또는 법정 서식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나, 임의양식*으로 처리

- * 담당자, 시행일, 기관장직인 등 없이 A4 용지에 연장사유 및 예정처리 기한만을 임의로 작성하여 민원인에게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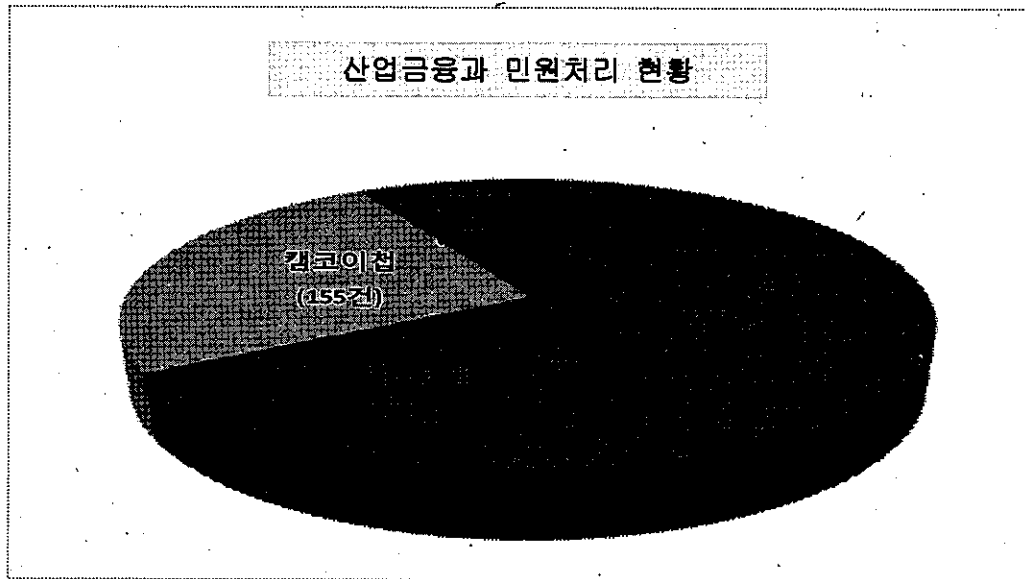
<사 례>

관련 민원현황				처리부서
민원인	신청일	접수일	처리일	
박OO	'11.08.30	'11.08.30	'11.09.16	산업금융과

⇒ 법정 처리기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서신민원의 처리기한 연장 통보는 반드시 공문 또는 법정서식에 의할 것 (주의 : 해당부서)

② 이첩민원 해소노력 필요

- 산업금융과 민원 경우 대부분이 신보, 기보, 캠프 관련 민원으로 접수민원의 92% 가량을 해당 공공기관에 이첩



- 이는 해당 공공기관에 국민신문고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른 것으로 국민신문고 구축시 신속한 민원회신과 함께 이첩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감소시킬 것으로 판단
- * '10년 민원점검시 지적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국민신문고가 구축됨에 따라 자본시장과 민원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최근 예금보험공사의 신문고 구축으로 금융소비자와 민원도 상당수 감소
- * LH공사, 국민연금공단, 대한주택보증 등 상당수 공기업들 또한 국민신문고를 구축하여 소관 민원을 직접 처리

⇒ 신보 등에 국민신문고를 구축함으로써 신속한 민원회신과 함께 이첩에 따른 행정업무를 감소시킬 필요 (권고 : 산업금융과)

3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 지적사항 및 조치구분

분야	지 적 사 항	조치 구분
예산 집행 / 회계 처리	■ 출납서류 편철·관리 부실 및 지출증빙 처리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납계산서, 한국은행 월계대사, 세목별 간지, 지출결의서 및 지출증빙(품의서, 영수증 등) 등을 '감사원 계산증명 규칙'에 부합토록 철저히 관리할 것 (금융정책과, 정책홍보팀, 기획재정담당관실, 기획행정실) 일반수용비 집행시 품의서 누락사례가 없도록 할 것 (자본시장과) 	주의
	■ 관서운영경비 집행방법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별 교부받은 예산과목별 자금한도를 초과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할 것 (금융정책과, 자본시장과) 국외여비를 국내여비예산에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기획행정실)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집행시 증빙서류에 주된 상대방의 소속성명을 기재할 것 (기획재정담당관실, 국제협력팀, 정책홍보팀) 	주의
	■ 일상감사 미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당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산전용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일상 감사를 이행할 것 (기획행정실) 	주의
	■ 성실한 업무처리로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한 업무처리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 (모범사례) 	모범 사례
민원 처리	■ 처리기한 미준수 및 연장처리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처리기한을 준수하며, 서신민원에 대한 처리기한 연장은 연장사유·예정처리기한을 명확히 한 공문 또는 법정서식에 의할 것 (행정인사과, 금융정책과, 산업금융과, 은행과, 보험과, 중소기업과, 서민금융과, 운송기획팀) 	주의
	■ 이첩민원 해소노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보 등에 국민신문고를 구축함으로써 신속한 민원회신과 함께 이첩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일 필요 (산업금융과) 	권고

□ 향후 조치계획

○ 감사결과 각부서 및 감사원에 통보

1. 처분요구 사항의 조치기한

가. 문책사항은 1월 이내

나. 변상사항은 3월 이내

다. 개선·개선통보·시정·권고사항은 2월 이내

2. 조치결과 보고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상기 조치기한 이내에 자체 조치한 후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함

3. 이의신청

소관부서는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의견서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

33-3.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 해당사항 없음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

33-4. 최근 2년간 「감사원법」 제29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 해당사항 없음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

33-5. 2012년 자체감사계획서

☐ 2012년 자체감사계획서 : 별첨1

2012년도 금융위원회 감사계획

◇ 기 본 방 향 ◇

- 자체감사는 일상감사로 수감부서의 '업무부담 최소화'
- 산하기관 감사는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성 극대화'

□ 금융위와 산하기관중에서 감사원 감사대상을 제외한 산하기관 11개*를 대상으로 '12년 감사계획을 수립

* 휴면예금재단, 공인회계사회, 여신금융협회,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 금융연수원, 금융연구원, 회계기준원, 금융보안연구원, 신용정보협회, 신용회복위원회

○ 자체는 일상감사(수시)와 공직기강 점검(수시, 년 4~5회), 민원 처리실태 점검(12월) 으로 구분 실시

* 자체 회계 및 기관운영 감사는 금년도 감사원 정기감사에 따라 미 실시

- 공직기강 점검은 「'12년 공직기강 추진계획」, 민원처리실태 점검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34조)에 따라 각각 실시

○ 산하기관 감사는 장기미실시 기관, 소관부서의 감사수요, 감사 가능인력 등을 고려하여 3개 기관을 선정·실시

- 금융연구원(5월), 여신금융협회(8월), 금융보안연구원(10월)

- 감사범위·방법 :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현지감사

□ 월별 세부일정(예정)

1월	4월	5월	7월
공직기강 점검(설명절)	공직기강 점검(총선)	금융연구원 감사	공직기강 점검(하계휴가)
8월	9월	10월	12월
여신금융협회 감사	공직기강 점검(추석)	금융보안연구원 감사	민원점검 공직기강점검(연말)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

**34-1. 최근 3년간 감사원 등 타 기관으로부터의
징계현황**

☐ 해당사항 없음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

**34-2. 최근 2년간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 해당사항 없음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

**35-1. 최근 3년간 연도별 고객만족도 및 친절도
조사결과보고서**

☐ 최근 3년간 연도별 전화친절도 평가결과보고서는 3건임

보 고 서 명	평 가 일	감사결과	비 고
2009년도 전화친절도 조사결과보고서	'09.12.18	별첨1	
2010년도 전화친절도 조사결과보고서	'10.10.28	별첨2	
2011년도 전화친절도 조사결과보고서	'11.12.23	별첨3	

금융위원회 직원 전화친절도 내부평가 결과

1. 평가개요

□ 평가기간: '09. 12. 18(금), 1일간

□ 평가방법: 사전에 무작위로 선정된 4·5급 이하 직원 67명을 대상으로 외부인(2명)에 의한 전화 모니터링 실시

- 직급별 안배: 4·5급(31명), 6·7급(27명), 실무관·사무원(9명)
- 과별 안배: 과직원 6명 미만 2명, 6명 이상 3명씩 선정·평가

□ 평가항목: 수신신속성(10점), 최초인사(10점), 친절성(20점), 정확성(20점), 상대방연결(20점), 끝맺음(20점)

2. 평가결과

□ 전체 평균점수는 81.4점으로 전년(79.4)에 비해 소폭 개선

- 최초응대(수신신속성, 최초인사)는 우수하나, 답변태도(친절성, 정확성) 및 끝맺음은 개선이 필요
- 직급별로는 6급 이하 직원들이, 부서별로는 지원부서와 소속기관이 상대적으로 친절한 것으로 평가

3. 향후 조치계획

□ 각 실·국에 평가결과 통보

- 우수부서(3개과, 각 20만원) 및 개인(10명, 각 5만원) 포상

※ 별첨: 09년 금융위 직원 전화친절도 평가결과(우수부서 및 직원 현황 포함)

[별첨] 09年 금융위 직원 전화친절도 평가결과

□ 부서별 평가결과(전체평균: 81.4점)

순 위	과(팀)명	점 수	순 위	과(팀)명	점 수
1	제도운영과*	95.0	13	산업금융과	82.3
1	회수관리팀*	95.0	14	심사분석3과	82.0
3	정책홍보팀*	94.7	15	자산운용과	81.3
4	기획행정실	94.0	16	심사분석2과	79.0
5	금융시장분석과	93.7	17	금융정책과	78.0
6	재정기획담당관	92.5	18	글로벌금융과	77.0
7	심사분석1과	90.0	19	국제협력팀	73.0
8	행정인사과	88.7	20	금융구조개선과	71.6
9	은행과	88.0	21	규제법무담당관	71.3
10	공정시장과	87.0	22	자본시장과	67.0
11	심사분석실	86.0	23	보험과	54.0
12	운용기획팀	85.7	24	중소서민금융과	44.5
평 균	81.4				

* 우수부서(3): 제도운영과, 회수관리과, 정책홍보팀(각 20만원 포상)

□ 직급별 평가결과 및 우수직원(10명)

구 분	전체평균	우수직원(각 5만원 포상)
4·5급	75.6	000(기획행정실), 000(제도운영과), 000(심사분석2과), 000(시장분석)
6·7급	85.6	000(금융시장분석과), 000(정책홍보팀), 000(자산운용과), 000(행정인사과), 000(기획재정담당관실)
실무관사무원	88.6	000(회수관리)

□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수신신속성 (10점)	최초인사 (10점)	친절성 (20점)	정확성 (20점)	상대연결 (20점)	끝맺음 (20점)	총 점 (100점)
9.1	9.7	16.9	16.7	18.7	17.8	100.0

금융위원회 직원 전화친절도 평가결과 보고

I 평 가 개 요

□ 평가기간 : '10. 10. 28(목), 1일간

□ 평가방법 : 4·5급 이하 직원 79명 무작위 선정·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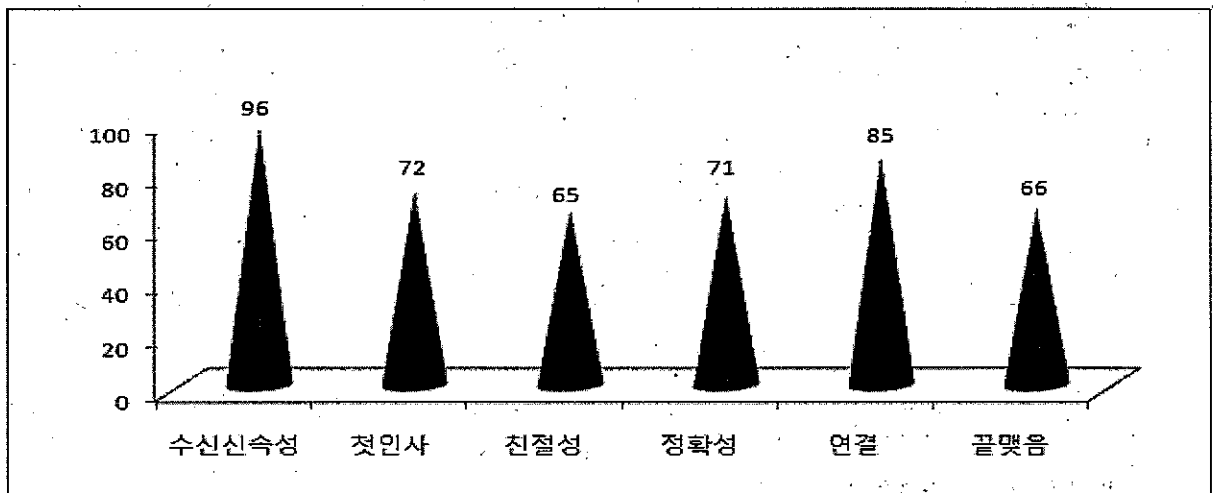
- 직급별 안배: 4·5급(26명), 6·7급(25명), 실무관·사무원(19명), 파견(9명)
- 과별 안배: 과직원 6명 미만 2명, 6명 이상 3명, 15명 이상 4명씩 선정

□ 평가항목: 수신신속성(10점), 최초인사(10점), 친절성(20점), 정확성(20점), 상대방연결(20점), 끝맺음(20점)

II 평 가 결 과

□ 전체 평균점수는 74.5점으로 수신신속성 및 담당자 연결은 비교적 잘 이루어짐

○ 최초인사, 친절성, 정확성 및 끝맺음 부분은 노력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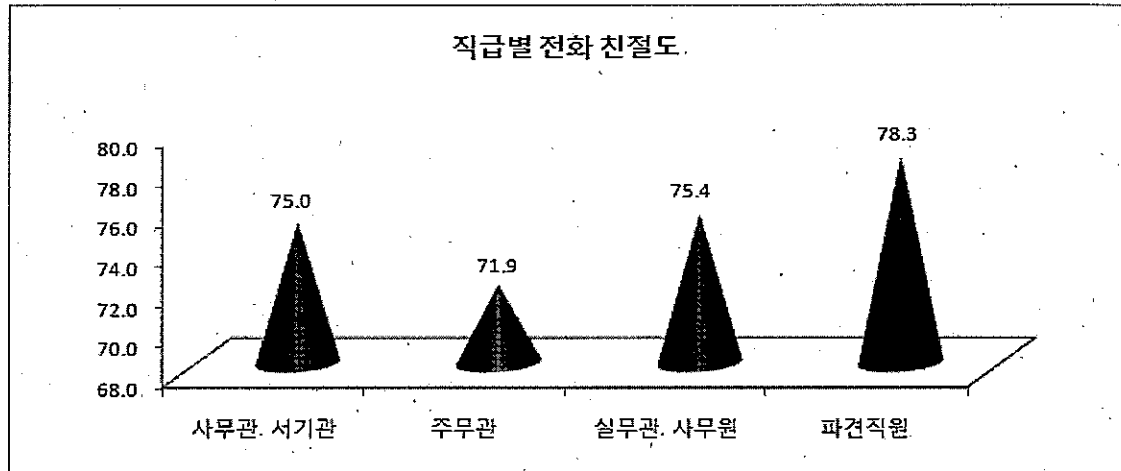
①최초인사 : 첫인사("안녕하십니까?" 등) 및 소개("○○과 ○○○입니다.") 미흡

②친절성·정확성 : 소관이 아니라면서 말 끊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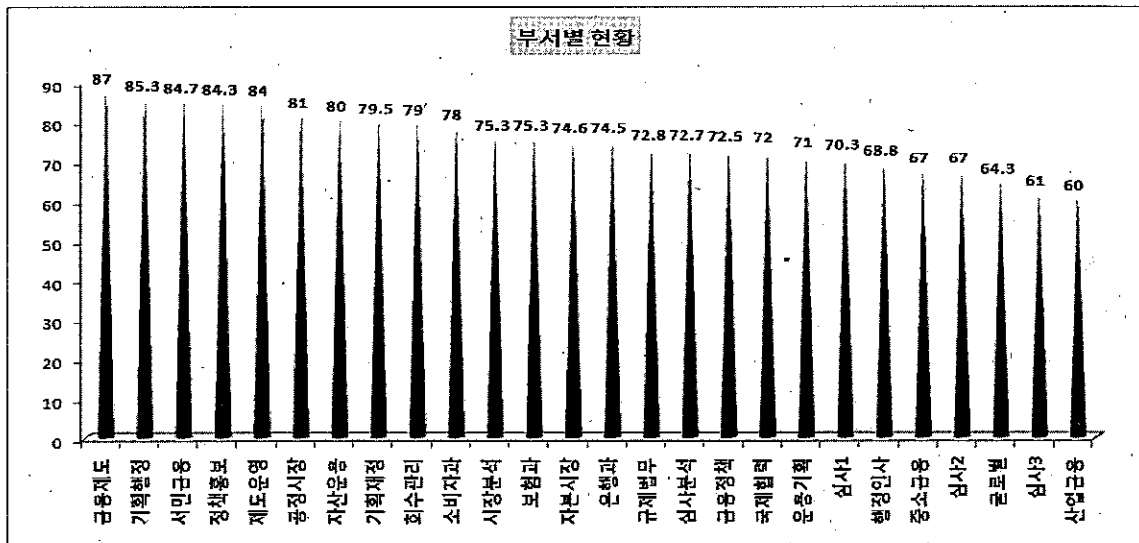
③연결 : 잘못된 연결(잘못된 부서 또는 민원실 연결)

④끝맺음 : 인사말 없이 민원인보다 먼저 끊음

- 직급별로는 파견직원과 실무관(사무원)의 친절도가 다소 높게 평가되었으며, 주무관의 친절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 부서별로는 금융제도팀, 기획행정실, 서민금융팀 순으로 높게 평가됨



Ⅲ 조 치 계 획

-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 등

- 우수 부서(상위 3개과) 및 개인(90점 이상)에 대한 포상 : 행정인사과
- 불량자(60점 미만자)에 대한 '주의' 조치 : 감사담당관실

- 평가결과 각 실·국 통보

【별첨1】 10년 금융위 직원 전화친절도 평가결과

【별첨2】 평가결과에 따른 전화응대시 유의사항

[별첨1] 10年 금융위 직원 전화친절도 평가결과

□ 부서별 평가결과 [전체평균: 74.5점]

순 위	과(팀)명	점 수	순 위	과(팀)명	점 수
1	금융제도팀	87.0	14	은행과	74.5
2	기획행정실	85.3	15	규제개혁법무	72.8
3	서민금융팀	84.7	16	심사분석실	72.7
4	정책홍보팀	84.3	17	금융정책과	72.5
5	제도운영과	84.0	18	국제협력팀	72.0
6	공정시장과	81.0	19	운용기획팀	71.0
7	자산운용과	80.0	20	심사분석1과	70.3
8	기획재정	79.5	21	행정인사과	68.8
9	회수관리팀	79.0	22	중소금융과	67.0
10	금융소비자과	78.0	22	심사분석2과	67.0
11	보험과	75.3	24	글로벌금융과	64.3
11	금융시장분석과	75.3	25	심사분석3과	61.0
13	자본시장과	74.6	26	산업금융과	60.0
평 균	74.5				

* 우수부서(3): 금융제도팀, 기획행정실, 서민금융팀(각 20만원 포상)

□ 개인별 우수자 (90점 이상)

구 분	우 수 직 원	직급평균
4·5급	000(90, 제도운영과)	75.0
6·7급	000(92,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00(90, 기획행정실), 000(90, 금융시장분석과)	71.9
실무관사무원	000(92, 대변인실), 000(90, 회수관리팀)	75.4
파견직원	000(95, 서민금융팀/캠코)	78.3

* 5급 1명, 6·7급 3명, 사무원 2명, 파견직원 1명(각 5만원 포상)

□ 기타사항

- 우수 및 미흡사례 통화녹음은 향후 전화친절도 교육시 활용

[별첨2]

전화 응대시 유의사항

(“이것만은 지킵시다!”)

단계별	유 의 사 항
최초 수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히 받을 것(벨소리 3회 이내) ■ 소속 및 성명을 반드시 밝힐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녕하세요? ○○과 ○○○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상냥한 어조로 밝고 경쾌하게 받을 것
의사 소통	<p>①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하여 성급히 상대방의 말을 끊지 말 것 ■ 충분히 경청(필요시 메모)하면서 중간 중간 친절히 ‘예~’라고 응대 ■ 민원의 요지를 되물어 확인하고 친절히 소관부서로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께서 ○○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동 건은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어서 제가 직접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관찮으시다면 담당부서인 ○○과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연결 중에 전화가 끊어질 경우 불편하시더라도 000번으로 다시 걸어 주시면 담당자와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식으로 친절히 응대 <p>② 소관부서를 모를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하여 성급히 상대방의 말을 끊지 말 것 ■ 충분히 경청(필요시 메모)하면서 중간 중간 친절히 ‘예~’라고 응대 ■ 민원의 요지를 되물어 확인하고 담당자 확인 후 즉시 연락하겠다고 양해를 구할 것(잘못된 부서나 민원실로 연결하지 말 것) <p>③ 소관 사항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분히 경청(필요시 메모)하면서 중간 중간 친절히 ‘예~’라고 응대 ■ 민원요지를 되물어 확인하고 쉽고 명료하게 민원에 회답 ■ 수용이 어려운 사안은 거절식 즉답 보다는 완곡한 표현으로 회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의 안타까운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정책 수립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식으로 완곡히 응대
끝맺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끝맺음 인사 잊지 말 것(“감사합니다” 등) ■ 민원인이 끊은 것을 확인하고 수화기를 내려놓을 것

금융위원회 직원 전화친절도 평가결과 보고

I

평 가 개 요

① 평가기간 : '11. 12. 23(금), 28(수) 2회에 걸쳐 실시

② 평가대상 : 4·5급 이하 직원 84명

※ 선정기준

- '10년도 전화친절도 조사 미흡직원(70점 이하) 17명
- 직급별 배분: 4·5급(29명), 6·7급(35명), 실무관·사무원(10명), 파견(10명)
- 과별 배분: 과직원 6명 미만 2명, 6명 이상 3명, 15명 이상 4명씩 선정

③ 평가항목

- 최초응대 : 수신신속성(10점), 최초인사(10점)
- 응대내용 : 친절성(20점), 정확성(20점), 담당자 연결(20점)
- 마무리 : 끝인사 여부 등 끝맺음(20점)

④ 평가방법 및 평가자

- 평가방법 : 2차에 걸쳐 평가
 - 1차로 자체감사기간 중 실시하였으나 사전 정보 유출 등으로 유의성 있는 결과로 보기 곤란
 - 이에따라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불시에 2차 평가 시행
- 평가자 : 전문가 2인(OOOOOO, OOOOOO), 금융정책알리미 2인

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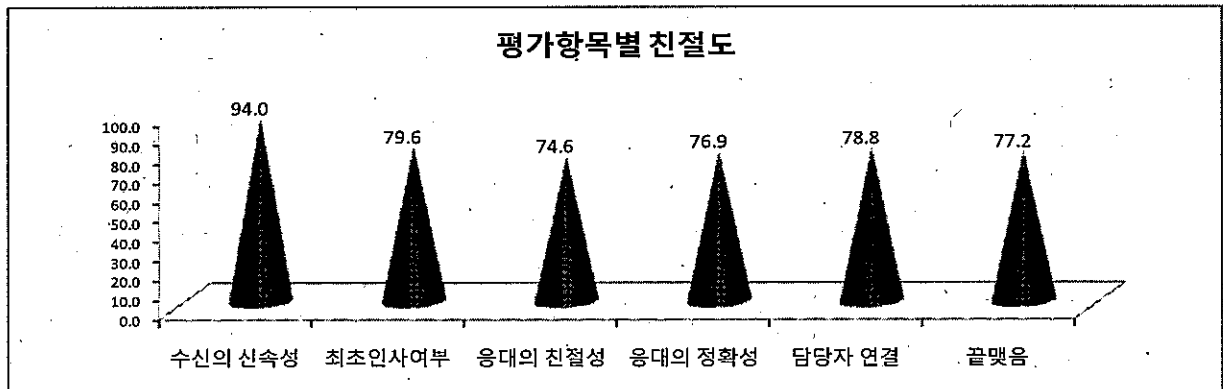
평 가 결 과

- ① (총 평) 전체 평균점수는 78.9점이며, 보통 이상 67명(80%)으로 금융위 직원의 전화친절도는 대체로 양호

< 평가점수별 인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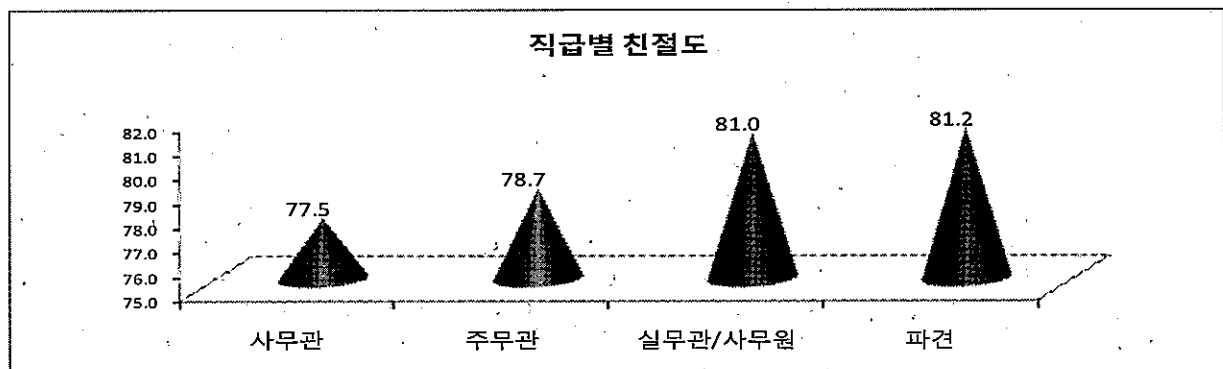
등급	인원	등급	인원
우수(90점 이상)	8	미흡(70점 이하)	16
양호(80~90)	41	미응신	1
보통(70~80)	18	-	-

- ② (항목별 평가) 수신자의 신속성은 우수하나, 그 외의 평가항목은 개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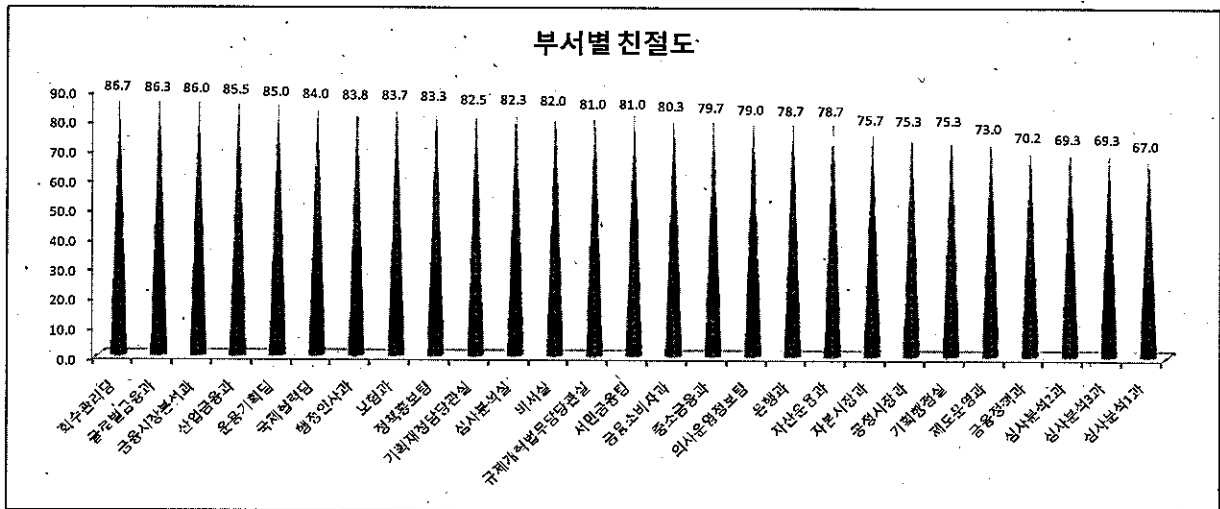
- ① 최초인사 : 첫인사 및 자기소개 미흡
- ② 친절성·정확성 : 통명스러운 말투, 소관이 아니라면서 말 끊기
- ③ 연결 : 잘못된 부서 또는 민원실 연결, 업무담당자 안내 부족 등
- ④ 끝맺음 : 인사말 없이 민원인보다 먼저 끊음

- ③ (직급별 평가) 파견직원과 실무관(사무원)의 친절도는 우수하나, 사무관의 친절도가 상대적으로 미흡



④ (부서별 평가) 각 부서의 업무 특성에 따라 전화친절도 상이

- 회수관리팀, 글로벌금융과, 금융시장분석과 순으로 높게 평가됨
- 대통령 업무보고 등 현안업무가 많은 부서 미흡(금융정책과)
- 업무특성상 민원인과의 접촉 기회가 없는 부서 미흡(금융정보분석원)
- 특히, 일부부서의 경우 부재자의 전화를 당겨받지 않아 통화 연결이 어려움(산업금융과 등)



⑤ 개인별 평가 : 전년도 미흡자(70점이하 17명)의 경우 전체 평균수준으로 응대 태도가 개선

- 올해 평가에서 다시 미흡 평가를 받은 인원은 3명

Ⅲ 조치 계획

□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 등

- 우수 부서(상위 3개과) 및 개인(90점 이상)에 대한 포상 : 행정인사과
- 불량자(70점 미만자)에 대한 '주의' 조치 : 감사담당관실

□ 평가결과 각 실·국 통보

【별첨1】 11년 금융위 직원 전화친절도 평가결과

【별첨2】 평가결과에 따른 전화응대시 유의사항

[별첨1]

11年 금융위 직원 전화친절도 평가결과

□ 부서별 평가결과 (전체평균: 78.9점)

순 위	과(팀)명	점 수	순 위	과(팀)명	점 수
1	회수관리팀	86.7	15	금융소비자과	80.3
2	글로벌금융과	86.3	16	중소금융과	79.7
3	금융시장분석과	86.0	17	의사운영정보팀	79.0
4	산업금융과	85.5	18	자산운용과	78.7
5	운용기획팀	85.0	19	은행과	78.7
6	국제협력팀	84.0	20	자본시장과	75.7
7	행정인사과	83.8	21	공정시장과	75.3
8	보험과	83.7	22	기획행정실	75.3
9	정책홍보팀	83.3	22	제도운영과	73.0
10	기획재정담당관실	82.5	24	금융정책과	70.2
11	심사분석실	82.3	25	심사분석2과	69.3
11	비서실	82.0	26	심사분석3과	69.3
13	서민금융팀	81.0	27	심사분석1과	67.0
14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81.0			
평 균	78.9				

* 우수부서(3): 회수관리팀, 글로벌금융과, 금융시장분석과(각 20만원 포상)

□ 개인별 우수자 (90점 이상)

구 분	우 수 직 원	직급평균
4·5급	000(95, 금융시장분석과)	77.5
6·7급	000(92, 글로벌금융과)	78.7
실무관·사무원	000(96, 국제협력팀), 000(91, 산업금융과)	81.0
파견직원	000(91, 보험과), 000(91, 중소기업과)	81.2

* 5급 1명, 6·7급 1명, 사무원 2명, 파견직원 2명(각 10만원 포상)

□ 기타사항

- 친절도 조사 결과 결과 미흡자에 대한 친절교육 실시 예정

[별첨2]

전화 응대시 유의사항

(“이것만은 지켜시다!”)

단계별	유 의 사 항
최초 수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히 받을 것(벨소리 3회 이내) ■ 소속 및 성명을 반드시 밝힐 것 ☞ 안녕하세요? ○○과 ○○○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상냥한 어조로 밝고 경쾌하게 '받을 것'
의사 소통	<p>①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하여 성급히 상대방의 말을 끊지 말 것 ■ 충분히 경청(필요시 메모)하면서 중간 중간 친절히 '예~'라고 응대 ■ 민원의 요지를 되물어 확인하고 친절히 소관부서로 연결 ☞ “선생님께서도 ○○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동 건은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어서 제가 직접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괜찮으시다면 담당부서인 ○○과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연결 중에 전화가 끊어질 경우 불편하시더라도 000번으로 다시 걸어 주시면 담당자와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식으로 친절히 응대 <p>② 소관부서를 모를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하여 성급히 상대방의 말을 끊지 말 것 ■ 충분히 경청(필요시 메모)하면서 중간 중간 친절히 '예~'라고 응대 ■ 민원의 요지를 되물어 확인하고 담당자 확인 후 즉시 연락하겠다고 양해를 구할 것(잘못된 부서나 민원실로 연결하지 말 것) <p>③ 소관 사항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분히 경청(필요시 메모)하면서 중간 중간 친절히 '예~'라고 응대 ■ 민원요지를 되물어 확인하고 쉽고 명료하게 민원에 회답 ■ 수용이 어려운 사안은 거절식 즉답 보다는 완곡한 표현으로 회답 ☞ “선생님의 안타까운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정책 수립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식으로 완곡히 응대
끝맺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끝맺음 인사 잊지 말 것(“감사합니다” 등) ■ 민원인이 끊은 것을 확인하고 수화기를 내려놓을 것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

35-2. 금융위원회 소송현황

☐ 연도별 소송 현황(12.8.20. 기준)

연도	신규 접수	종결 처리(확정)					계류 (차년 이월)
		계	승소	패소	취하	기타	
2008	35	20	16	2	1	1	15
2009	14	10	8	1	1	0	19
2010	10	13	10	0	3	0	16
2011	27	12	8	1	3	0	31
2012	31	11	7	0	4	0	51
계	117	66	49	4	12	1	-

* 금융감독위원회 계류(2008. 3. 3 이전) 19건 포함

☐ 부분별 및 유형별 소송 현황(원고로 소제가 사건 없음)

부분별 유형별	국가소송(피고)	행정소송(피고)
인허가	0	7
자격·신분	1	27
과징금·과태료	0	23
정보공개	0	6
손해배상	47	0
기타	0	6
계	48	69

□ 패소 사건 및 후속 조치

종결 년도	사건명	심급별 판결 요지	심급별 결과	후속조치
2008	해임요구처분취소 (손○○ 외 1, 2008구합2156)	○원고 손○○ 외 1에 대한 금융위의 '07.12.31 자 해임요구처분을 각각 취소함 ○손○○가 퇴직 전 3년 이내에 근무한 보험검사 1국의 업무가 삼성화재보험(주) 과 사이에, 이○○이 퇴직 전 3년 이내에 근무한 소비자보호 센터 민원처리파트의 업무가 미래생명보험(주) 과 사이에 각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1심 : 패	판결로 종결 (후속조치 불필요)
2008	해임요구처분취소 (이○○, 2008구합17028)	○원고에 대한 금융위의 '08.4.11자 해임요구처 분을 취소함 ○원고가 퇴직 전 3년 이내에 근무한 검사총괄국의 업 무와 현대캐피탈(주)와의 사이에 밀접한 업무관 련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의 처분 은 위법함	1심 : 패	판결로 종결 (후속조치 불필요)
2009	해임요구처분취소 (○○ 외 1, 서울행정 2008구합6561)	○피고가 2008. 1. 29. ○○ 등에 대하여 한 원 고에 대한 해임요구처분 취소함 ○원고가 퇴직 전 3년 이내에 재직한 소속부서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6호에 정한 법령에 근거하여 ○○ 등을 직접 감독하 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1심 : 패	판결로 종결 (후속조치 불필요)
		○1심 판결 요지 원용 ○(추가) 원고의 관련 형사사건이 무죄 확정됨	2심 : 패	
2011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연대, 서울행정 2007구합35166)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 등 관련 자 료 정보공개 청구 거부를 취소 ○이 사건 정보는 진행 중 재판(형사사건)의 쟁 점이 아니며, 제3자가 비공개 요청을 한 사 유만으로 비공개 대상이 될 수는 없음	1심 : 일부 패	재판결과에 따라 보유 자료 공개
		○1심 판결 요지 원용 ○(추가) 금융위(금감원) 미보유 정보는 각하	2심 : 일부 패	
		○2심 판결의 잘못이 없음	3심 : 일부 패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

35-3. 최근 3년간 연도별, 부분별, 유형별 민원제기 및 처리현황

□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 연도별 민원 접수 현황

(단위: 건)

	2010년 (‘10.1~‘10.12.)	2011년 (‘11.1~‘11.12.)	2012년 (‘12.1~‘12.6.)
접 수	4,531	3,351	1,492

○ 부분별 민원 접수 현황

(단위: 건)

기 간	진정·건의 등	법령질의	일반질의 및 기타
2010년 (‘10.1 ~ ‘10.12.)	3,768	504	774
2011년 (‘11.1 ~ ‘11.12.)	2580	848	491
2012년 (‘12.1 ~ ‘12.6.)	970	472	257

□ 처리결과 현황

(단위: 건)

	처리완료	민원취하 등
2010년 (‘10.1 ~ ‘10.12.)	4,666	380
2011년 (‘11.1 ~ ‘11.12.)	3,554	368
2012년 (‘12.1 ~ ‘12.6.)	1,436	225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

35-4.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 최근 3년간('09년~'12년 6월말 기준) 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명	계약시점	용역비 (계약금액)	계약자
09년	네트워크 및 PC 유지보수	09.1.1	33	(주)현대디지털코어
09년	금융위원회 청사 이전에 따른 이사	09.1.11	33	베스트무빙주식회사
09년	청사 이전 관련 파티션 및 가구 이전 설치	09.1.16	21	김태원
09년	청사 이전 관련 FIU 이전 설치 공사	09.1.16	21	진광사
09년	청사 이전 관련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09.1.11	26	에스프레너
09년	청사 이전 관련 과별 파티션 및 유리벽체 칸막이 공사	09.1.11	49	제너시스디자인
09년	청사 이전 관련 통신망 구축	09.1.16	35	진두아이에스
09년	청사 이전 관련 전산실 구축 및 전산 장비 이전 설치	09.1.16	49	(주)현대디지털코어
09년	통신장비 유지보수	09.1.16	61	(주)삼성네트웍스
09년	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방안	09.3.16	45	한국금융연구원
09년	금융상품판매업법 제정을 위한 연구	09.4.13	30	자본시장연구원
09년	자본시장 등 금융부문별 노동력 특성 분석 및 수급 전망	09.4.21	30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09년	수도권 광역금융벨트 조성 방안	09.5.13	30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09년	위탁보증 제도 개선방안 연구	09.5.28	28.8	한국금융연구원
09년	국내 자본시장-외환시장 연계성 증가의	09.6.1	20.5	자본시장연구원

연도	사업명	계약시점	용역비 (계약금액)	계약자
	파급효과 분석			
09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09.1.16	195	(주)네모소프트
09년	전자문서시스템 기록물 이관 구축	09.10.5	33	(주)핸디소프트
09년	금융민원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09.9.10	267	(주)인젠트
09년	금융정보분석원 전산실 이전 구축	09.4.2	389	(주)일래스틱 네트웍스
09년	금융위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사업	09.11.1	30	(주)코리즌
09년	2009년도 법령 영문화사업	'09.7.1	55	한국법제연구원
09년	금융위원회 영문 홍보 브로슈어 제작	09.12.23	20	디자인플러스
09년	금융위기 이후(Post-Crisis) 대비 금융 감독체제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09.6.10	40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09년	금융위기의 원인분석 및 시사점분석	09.7.9	35	한국금융연구원
09년	금융투자산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09.8.5	32	자본시장연구원
09년	테러자금조달 방지 체제의 선진화 국제화 방안 연구	09.8.28	35	아주대 산학협력단
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09.9.16	20	자본시장연구원
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09.9.18	20	보험연구원
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금수취 비은행 금융 회사 발전방안 등에 관한 연구	09.9.30	20	한국금융연구원
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국내 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09.10.7	30	한국금융연구원
09년	금융정보생산의 시스템 리스크 완화 방안 연구	09.10.8	20	한국금융학회
09년	주요국에서의 금융변혁기에 대응한 금융정책사례 연구	09.10.15	40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09년	마이크로크레딧의 현황 및 정책적 과제	09.11.11	23	한국채권연구원
10년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도입 방안	10.3.15	30	서울대 산학협력단
10년	지역금융활성화 방안 연구	10.3.26	30	한국개발연구원
10년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자본시장	10.4.9	30	자본시장연구원

연도	사업명	계약시점	용역비 (계약금액)	계약자
	활용방안			
10년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 연구	10.4.13	45.5	한국개발연구원
10년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10.4.19	40	한국개발연구원
10년	국내외 조기경보 활동 동향 점검 및 금융 시장 조기 경보모형 개선	10.5.1	20	한국금융연구원
10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방안 검토	10.5.28	30	법무법인 율촌
10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 연구	10.6.9	30	한국금융연구원
10년	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검토	10.8.30	30	한국금융연구원
10년	금융전문인력 현황조사 및 수급전망	10.9.1	50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10년	국제금융체제 개편 등에 대한 연구	10.9.16	30	한양대 산학협력단
10년	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10.9.20	25	한국금융연구원
10년	신용정보 유통체계 개선방안	10.10.11	30	한국금융연구원
10년	금융기관 해외진출 관련 현황 및 감독체계 검토	10.10.11	25	한국금융연구원
10년	기업경영 안정 등을 위한 상품파생 시장 제도 개선방안	10.10.15	30	서울대 산학협력단
10년	회계감독제도 개편 등에 대응한 감리조치기준 개선안 연구	10.10.15	30	한국법제연구원
10년	우리나라 비금융전문직의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이행방안	10.4.20	30	한국금융연구원
10년	자금세탁행위 조기경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자금세탁 혐의거래지표 연구	10.10.27	28	(주)데이타메이션
10년	한국의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 -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10.10.25	48	KAIST, 삼성경제연구원
10년	온실가스 의무저감 등에 대한 공시·감독 체계 개선안 연구	10.10.28	40	한국자본시장연구원
10년	녹색금융 활성화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10.10.20	40	한국금융연구원
10년	블로그 개편 및 온라인 홍보 활성화 사업	10.10.11	20	(주)유달리커뮤니 케이션즈

연도	사업명	계약시점	용역비 (계약금액)	계약자
10년	정보보안 개선사업	10.11.11	36	(주)코리존
10년	FSB 서울총회 행사진행 용역	10.10.15	20	(주)인터컴
11년	홈페이지 유지보수사업	11.3.3	36	(주)코리존
11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Based Android OS) 개발용역	11.3.25	28	(주)아이윈디
11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11.2.28	244	(주)인젠트
11년	2011년도 네트워크 및 PC 유지보수	11.1.1	49	현대디지텍코어
11년	가계부채대응방향	11.1.27	40	한국금융연구원
11년	금융감독원장 및 감사 성과평가 개선방안	11.4.6	20	한국금융연구원
11년	회계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11.5.2	30	한국회계학회
11년	금융능력 및 금융이해도 조사	11.6.10	40	한국개발연구원
11년	개인정보보호 사업	11.5.16	29	(주)위너다임
11년	금융서비스협상관련 금융회사 업무위탁 개선방안 연구	11.8.19	29	(주)태평양법무법인
11년	대형 IB 자기자본 규제에 관한 연구	11.7.11	30	한국자본시장연구원
11년	글로벌금융위기 극복 백서	11.7.11	50	한국개발연구원
11년	외환자본시장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11.7.15	3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1년	금융소비자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11.7.26	25	한국개발연구원
11년	비금융전문직 고객의 자금세탁위험도 분석에 관한 연구	11.10.12	44	한국금융연구원
11년	정보보호공유시스템 고도화 용역	11.10.11	111	(주)누리인포스
11년	금융교육콘텐츠 개발 용역	11.9.21	60	한국개발연구원
11년	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 서비스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 방안	11.9.23	30	한국자본시장연구원
11년	법인설립과 신탁계약 등이 자금세탁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11.10.4	39	김&장 법률사무소
11년	공자위홈페이지 서버이전 및 유지보수 용역계약	11.6.1	30	(주)퓨즈
11년	금융회사간 단기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및 관리감독 개선방안	11.10.19	30	한국금융연구원
11년	SIFI규제 국내 제도화 방안 연구	11.10.19	30	한국금융연구원

연도	사업명	계약시점	용역비 (계약금액)	계약자
11년	2011년 금융인력 현황 조사 및 수급 전망	11.10.21	45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1년	ETF시장의 건전한 발전 방안 연구	11.10.25	30	한국금융연구원
11년	부동산개발금융 제도개선 방안 연구	11.10.26	30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11년	외음지점규율체계 정비 관련 주요 검토 사항 연구	11.10.27	30	한국금융연구원
11년	정책포털 연계 및 웹접근성 표준화 사업	11.10.31	34.6	(주)트루디정보기술
11년	청년창업 중소기업금융환경 혁신방안 연구	11.12.22	30	한국금융연구원
12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12.1.13	298	(주)인젠트
12년	통신설비 유지보수 용역	12.1.16	39.6	(주)대성텔레콤
12년	ELS 및 DLS 투자자 보호 강화방안 연구	12.4.24	26	한국자본시장연구원
12년	2012년 홈페이지 유지보수 사업	12.3.8	39	(주)트루디정보기술
12년	금융위 뉴스저작물 통합이용 사업	12.4.1	71	한국언론진흥재단
12년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	12.5.22	39	한국채권연구원
12년	기업 공시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12.5.25	35	한국자본시장연구원
12년	보이스피싱 근절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2.4.4	20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12년	고령화대비 공·사 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방안 연구	12.4.30	30	보험연구원
12년	금융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12.5.4	30	한국금융연구원
12년	주요 신흥국과의 전략적금융협력 강화 방안 연구	12.6.25	26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 20백만원 이상 건에 대하여 작성

☐ 해약 및 배상, 보상 현황 - 해당사항 없음.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

36. 비공개 회의 관련

-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7월 30일까지 이사회 비공개 회의록 사본(원본대조필)
-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7월 30일까지 기관에서 작성된 비공개문서 현황 및 사본 일체(원본대조필)

☐ 해당없음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

37. 조직, 인사 관련

1. 2009년 이후 신규채용 및 승진된 임원, 기관장, 1급 이상 직원의 주요 경력(대선·총선 캠프와 관련된 경력 명기)

직 위	성 명	재직기간	주요 경력
위원장	진동수	'09. 1.20 ~ '11. 1. 2	재정경제부 제2차관 조달청장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 금감위 상임위원 중선위 상임위원
위원장	김석동	'11. 1. 3 ~ 현 재	재정경제부 제1차관 금감위 부위원장 재정경제부 차관보 금융정보분석원장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부위원장	권혁세	'09.11.17 ~ '11. 3.26	금융위 사무처장 중선위 상임위원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제국장
부위원장	신제윤	'11. 3.27 ~ '11. 9. 7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대통령실 경제보좌관실 비서관 재정경제부 국제금융심의관
부위원장	추경호	'11. 9. 8 ~ 현 재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OECD대표부 공사참사관
금융위 상임위원	이상제	'11. 3.28 ~ 현 재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재부장관 자문관
금융위 상임위원	임승태	'09. 2.10 ~ '10. 4.14	금융위 사무처장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재정경제부 금융정책심의관

직 위	성 명	재직기간	주요 경력
금융위 상임위원	최종구	'10. 5.12 ~ '11. 4.10	국경위 금융선진화국장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 재정경제부 금융정책심의관
금융위 상임위원	이석준	'11. 4.12 ~ '12. 1.17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기획재정부 행정예산심의관
금융위 상임위원	홍영만	'12. 3. 9 ~ 현 재	증선위 상임위원 국경위 실무추진단장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증선위 상임위원	김주현	'09. 2.10 ~ '09.12. 6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 금감위 기획행정실장
증선위 상임위원	최규연	'09.12. 7 ~ '11. 3.17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기획재정부 회계결산심의관 재정경제부 홍보관리관
증선위 상임위원	홍영만	'11. 4.11 ~ '12. 3. 8	국경위 실무추진단장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증선위 상임위원	유재훈	'12. 3. 9 ~ 현 재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기재부 국고국장 금융위 대변인
사무처장	권혁세	'09. 2.10 ~ '09.11.16	증선위 상임위원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재정경제부 제산소비세제국장
사무처장	김주현	'09.12. 7 ~ '12. 5.25	증선위 상임위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
사무처장	정은보	'12. 7. 2 ~ 현 재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기재부 FTA 전략기획단장
금융정보 분석원장	최수현	'09.12. 7 ~ '11. 2.15	금융위 기획조정관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파견 금감위 기획행정실장
금융정보 분석원장	김광수	'11. 3.21 ~ '11. 8. 3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재정부 공자위 사무국장 대통령실 경제정책 선임행정관
금융정보 분석원장	박재식	'12. 2. 6 ~ 현 재	기재부 국고국장 지경부 우본 보험사업단장 제네바대표부 참사관

성명	채용일	채용사유	직급	담당업무
이OO	'09. 2. 1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선제적인 외신대응 중요성 증가	전문계약직 가급	금융정책 관련 외신홍보 총괄
김OO	'09. 3. 2		전문계약직 나급	금융정책 관련 외신홍보업무
이OO	'09. 7. 2	글로벌 금융협력 업무의 전담	전문계약직 가급	국제업무 기획 및 총괄
이OO	'09. 7.21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대국민 홍보 중요성 심화	전문계약직 가급	기획홍보 및 홍보 관련 대외업무
국OO	'09. 8.31	행정전문성 제고 위한 공인회계사 채용	일반계약직 5호	금융산업 · 회계 정책 및 감독
김OO	'09. 8.31	행정전문성 제고 위한 변호사 채용	일반계약직 5호	금융 관련 법령 및 규정 제 · 개정
박OO	'09. 8.31		일반계약직 5호	
김OO	'09. 8.31	금융 및 국제금융 전문가 채용	일반계약직 5호	국제금융협력
정OO	'09.12.14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선제적인 외신대응 중요성 증가	전문계약직 나급	금융정책 관련 외신홍보업무
박OO	'09.12.31	금융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일반계약직 6호	금융통상 협상업무
차OO	'10. 4. 7	행정전문성 제고 위한 변호사 채용	일반계약직 5호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 제개정
김OO	'10. 9.29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협력 전문가 채용	일반계약직 5호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구 협력업무
서OO	'10.12.13	국제금융 전문가 채용	일반계약직 4호	금융개방 및 금융국제화정책 관련 업무

성명	채용일	채용사유	직급	담당업무
이OO	'11.11. 1	회계·기금 결산 담당인력 전문성 제고	전문계약직 나급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 등
김OO	'11.10.28	금융감독 정책 담당 법률전문가 채용	일반계약직 5호	금융감독·검사 및 제재 제도 개선
이OO	'12. 1. 3	은행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감독정책 관련 전문가 채용	일반계약직 5호	은행업 인·허가 정책 수립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홍OO	'12. 2.27	공적자금 회수관리 정책 관련 법률전문가 채용	일반계약직 5호	기금의 관리 및 청산 업무
남OO	'12. 2.27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률전문가 채용	일반계약직 5호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 운영
김OO	'12. 2.27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선제적인 외신대응 중요성 증가	전문계약직 가급	금융정책 관련 외신통보 총괄
임OO	'12. 4.24	글로벌 금융협력 업무의 전담	전문계약직 가급	국제업무 기획 및 총괄

2. 2009년 이후 특채자 현황 및 사유(명단, 특채일, 사유,
직급, 직위, 업무분장)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

38. 성과보고 및 업무계획

- 기관장 및 상급기관에 보고한 실·국
단위성과보고서(2011년)

☐ 별도첨부

2011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금융위원회)

대한민국정부

목 차

제1장 2011년 성과목표관리체계

1. 2011년도 재정운용 현황
2. 성과목표관리체계도
3. 목표 및 관리과제 현황
4. 일반현황(조직·인원·재정규모)

제2장 2011년도 성과보고

1. 주요 재정사업 성과
2. 성과목표관리체계별 자원배분 현황

제3장 과제별 성과달성 현황 및 분석

1. 전략목표Ⅰ
2. 전략목표Ⅱ
3. 전략목표Ⅲ
4. 전략목표Ⅳ
5. 전략목표Ⅴ

【별첨】

1. 회계·기금별 결산 현황
2. 관리과제 재정운용 현황
3. 성과 달성도 현황
4. 성과목표관리체계별 예산 및 결산 현황
5. 성과목표관리체계와 예산사업과의 연계 현황
6. '11년도 성과계획서 변경 사항
7. 관리과제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제1장

2011년 성과목표관리체계

1. 2011년도 재정운용 현황

◇ 2011년 금융위원회는 따뜻하고 강한 선진 일류 금융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한 5대 중점과제를 설정·추진

- 첫째, 원활한 기업자금 공급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실효성 있게 지원
 - 국책은행 및 보증기관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자금조달 안정화 및 실물경제 회복에 기여
 - 특히, 미래 성장잠재력확충을 위한 핵심분야(수출·녹색·서비스·우수기술)에 대한 중점 지원을 통해 경쟁력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전인
- 둘째, 금융시스템상의 취약요인을 재정비하여 금융위기 등 비상시기에도 영향을 적게 받는 '튼튼한 금융시스템'을 구축
 -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통하여 국내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을 글로벌 우량은행에 근접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제고
 - 금융회사 보유 부실채권을 신속히 인수·정리하는 등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선제적·적기 대응으로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 셋째, 제조업 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진 금융산업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화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노력을 강화
 -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한국형 헤지펀드를 도입하는 등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 금융산업의 선진화 기틀 마련
 - 금융소비자 보호법,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제도적 금융

인프라 정비를 적극 추진

- IT를 활용하여 금융행정 업무를 개선하고, 소셜 미디어 및 뉴미디어를 통하여 정책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효율적·효과적 금융행정 추진
- 넷째, 위기과정에서 어려움이 가중된 서민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등 '서민·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에 주력
 - 지점 확대 등을 통해 미소금융을 활성화하는 한편 햇살론 등 보증부 서민대출을 통해 서민의 금융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고금리 부담을 완화
 - 금리우대 보증자리론 및 주택금융신용보증 공급을 통하여 서민 계층을 지원함으로써 계층 간의 차이를 해소하고 사회적 화합을 유도
 - 「금융교육 중장기비전」을 수립하고 「금융교육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금융교육시스템을 확립
- 다섯째, 2010년 G-20의 의장국으로서 높아진 국가위상을 활용, '우리 금융의 글로벌 위상 제고'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Korea Discount'를 'Korea Premium'으로 전환
 - 영국, 호주 등 G20금융당국들과 적극적으로 MOU를 체결하는 등 금융관련 국제협력 강화
 - 금융중심지 기본계획('11~'13)를 수립·시행하는 등 금융중심지의 조성을 통한 금융 글로벌화 정책 적극 추진
 -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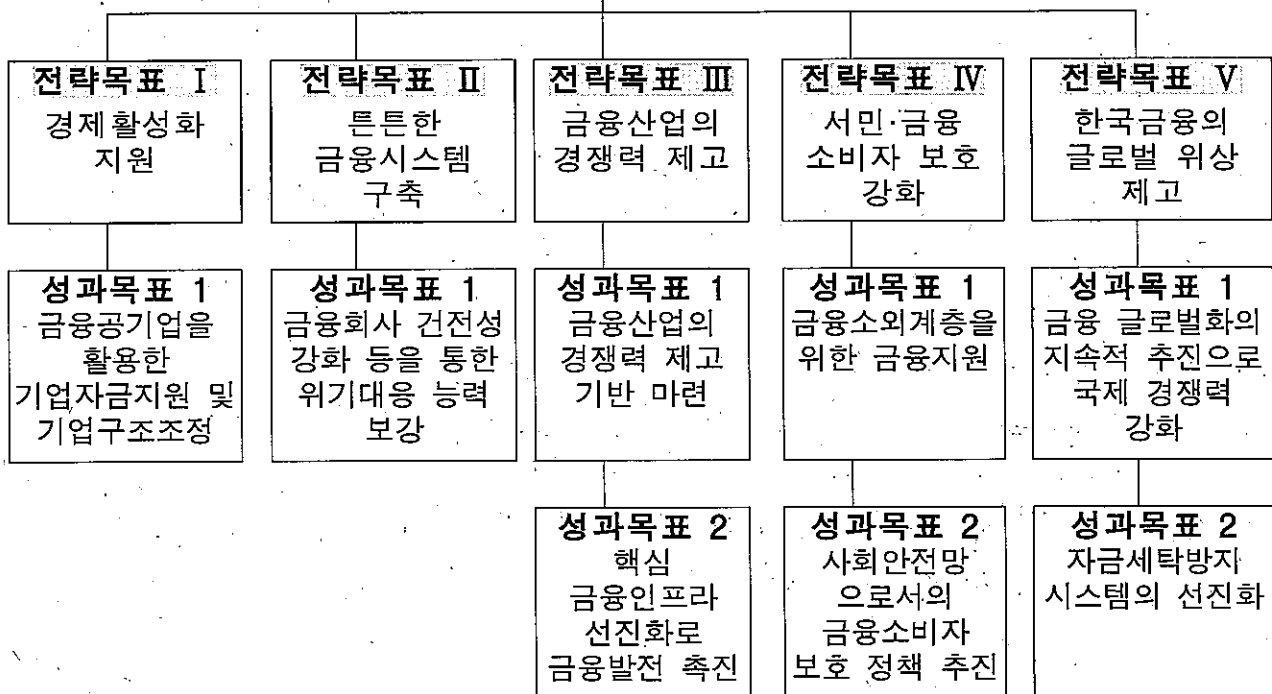
2. 성과목표관리체계도

임무 및 비전

- ◇ 금융위는 「금융위원회설치법」에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받음
- (임무) 이를 위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금융시장 육성, 금융이용자 보호”를 3대 임무로 설정
 - (비전) 정책비전을 “금융시장 안정 유지와 금융선진화”로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5대 전략목표를 적극 추진
- ➔ **전략목표 I** 경제활성화 지원
전략목표 II 튼튼한 금융시스템 구축
전략목표 III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전략목표 IV 서민·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전략목표 V 한국금융의 글로벌 위상 제고

임무 : 1. 금융산업의 선진화
 2. 금융시장의 안정 도모
 3. 금융수요자 보호

비전 : 금융시장 안정 유지와 금융선진화



3. 목표 및 관리과제 현황

구분	전략 목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소 계	일반재정	정보화	R&D
개수(개)	5	8	20	15	5	
비율(%)	-	-	100	75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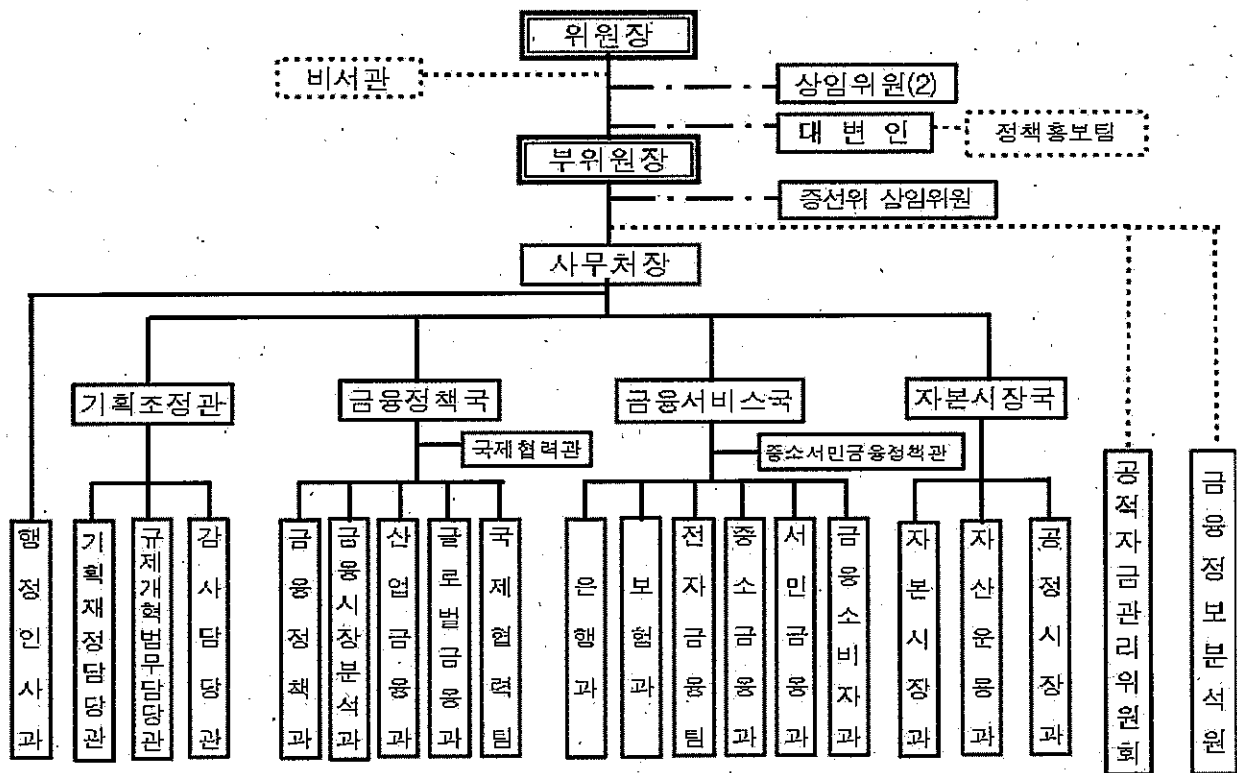
성과목표	관리과제	부문
전략목표 I : 경제활성화 지원		
성과목표 I-1 : 금융공기업을 활용한 기업자금지원 및 기업구조조정	(1) 신보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 지원	일반재정
	(2) 기술창업기업 등 핵심분야에 대한 보증지원강화	일반재정
	(3)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지속적 보증지원	일반재정
	(4) 신보 IT 운영	정보화
	(5) 기보 IT 운영	정보화
전략목표 II : 튼튼한 금융시스템 구축		
성과목표 II-1 :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 등을 통한 위기대응 능력 보강	(1) 금융·기업 구조조정지원	일반재정
전략목표 III :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성과목표 III-1 : 금융산업의 경쟁력제고기반 마련	(1) 금융업법 체계개편	일반재정
성과목표 III-1 : 핵심 금융인프라 선진화로 금융발전 촉진	(1) 효율적 금융정책 지원을 위한 정보화 지원	정보화
	(2) 금융행정지원 효율화	일반재정
전략목표 IV : 서민·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성과목표 IV-1 :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1) 농어가목돈 마련 저축장려	일반재정
	(2) 우대보증자리론을 통한 무주택 서민 주택구입지원	일반재정
	(3)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보증지원	일반재정

성과목표	관리과제	부문
	(4)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운용정보화	정보화
성과목표 IV- 1 :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추진	(1) 저축의 날 행사	일반재정
	(2) 역모기지론을 통한 서민층 노후연금 보증	일반재정
	(3) 금융소비자 보호	일반재정
전략목표 V : 한국금융의 글로벌 위상 제고		
성과목표 V- 1 : 금융 글로벌화의 지속적 추진으로 국제 경쟁력 강화	(1) 금융중심지조성과 발전	일반재정
	(2) 금융관련 국제협력	일반재정
성과목표 V- 2 :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의 선진화	(1) FIU 전산망 구축운영	정보화
	(2) APG유형론 실무회의 개최	일반재정

4. 일반현황

(1) 조 직 : 1관·3국·1정책관·16과·3팀, 2소속기관

- 본 부 : 1관 3국 1정책관 1대변인 16개과 3개팀
- 소속기관 : 금융정보분석원(2실 4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2팀)



(2) 인 원 (2012.1월말기준)

○ 본부 179명, 금융정보분석원 55명,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12명

(단위 : 명)

구 분	정무직	고위 공무원	3급	4급	5급	6·7급	기타	계
정 원	2	12	5	36	112	54	25	246

(3) 기관운영 재정규모

(단위: 억원)

구 분	'10년도		'11년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 총지출	165,807	79,577	122,872	82,329
▪ 인건비	3,714	3,375	3,853	3,675
▪ 기본경비	3,025	2,894	7,062	6,528
▪ 주요 사업비	159,068	73,309	111,957	72,126

제2장

2011년도 성과보고

1. 주요 재정사업 성과

(1) 전략목표별 주요 성과

<총괄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목표의 성과지표수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5	8	11	3	5	3
		100%	27.3%	45.5%	27.3%

(단위 : 개)

◆ 전략목표 I : 경제활성화 지원

□ 국책은행 및 보증기관 등을 활용하여 기업자금을 원활히 공급

- 중소기업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자금조달 안정화* 및 실물경제 회복에 기여

* 중소기업 자금사정 전망지수(BSI)는 금융위기 이후 호전된 상태이며 자금조달 곤란을 경영애로로 보는 중소기업 비율도 낮은 수준을 유지

- 특히, 미래 성장잠재력확충을 위한 핵심분야(수출·녹색·서비스·우수 기술)에 대한 중점 지원을 통해 경쟁력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견인

◆ 전략목표 II : 튼튼한 금융시스템 구축

□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 등을 통한 위기대응 능력 보장

-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통하여 국내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을 글로벌 우량은행에 근접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금융회사의 손실흐수능력 제고

* 국내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11.9월말) : 14.13%

글로벌 우량은행 BIS비율('11.7월 뱅커스지 기준 세계 20대 은행 BIS 비율의 평균) : 14.69%

- 금융회사 보유 부실채권을 신속히 인수·정리하는 등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선제적·적기 대응으로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 '11년 중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은행 및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부실채권 27조원을 1.7조원에 매입

◆ 전략목표 III :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 금융산업이 新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 마련
 -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한국형 헤지펀드를 도입하는 등 자본 시장 개혁을 통해 금융산업의 선진화 기틀 마련
 - 금융소비자 보호법,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제도적 금융 인프라 정비를 적극 추진
- 효율적인 금융행정 인프라 구축
 - IT를 활용하여 금융행정 업무를 개선하고, 소셜 미디어 및 뉴미디어를 통하여 정책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효율적·효과적 금융행정 추진

◆ 전략목표 IV : 서민·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 지점 확대 등을 통해 미소금융을 활성화하는 한편 햇살론 등 보증부 서민대출을 통해 서민의 금융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고금리 부담을 완화
 - * 햇살론('10.7월 ~) : 보증을 통해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해 저금리자금 대출 (5년간 10조원 공급 목표)
 -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및 주택금융신용보증 공급을 통하여 서민 계층을 지원함으로써 계층 간의 차이를 해소하고 사회적 화합을 유도
-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추진
 - 「금융교육 중장기비전」을 수립하고 「금융교육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금융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금융교육시스템을 확립

* 금융교육 정책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조정·지원 등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고령자의 주거 안정 및 노후소득 보장을 달성

◆ 전략목표 V : 한국금융의 글로벌 위상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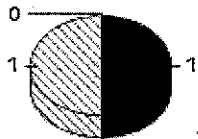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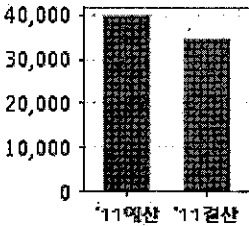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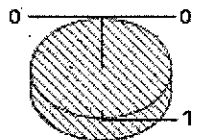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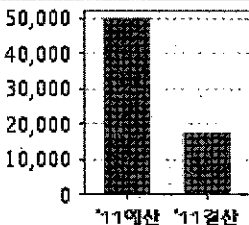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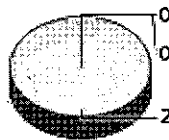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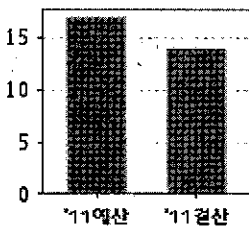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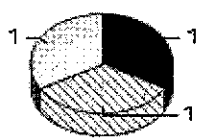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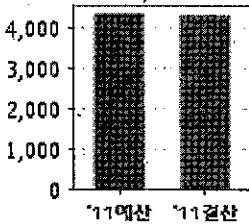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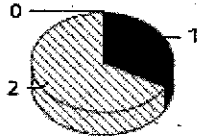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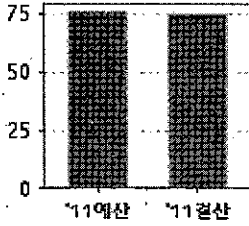
□ 금융관련 국제협력 강화 및 금융 글로벌화 정책 적극 추진

- 영국, 호주 등 G20금융당국들과 적극적으로 MOU를 체결하는 한편, 한-EU FTA를 정식 발효하고, 호주와의 FTA 금융서비스 협상도 마무리
- 금융중심지 기본계획('11~'13)를 수립·시행하는 등 금융중심지의 발전을 위하여 제도 개선, 생활 및 기업환경 개선 등 추진

□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의 선진화

-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시행령·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 등을 통해 우리나라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금지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춰 선진화
-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회의(APG 유형론 실무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 (총 57개국, 13개 국제기구 참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강화

(2) 전략목표별 성과달성 현황 그래프

구 분	'11 달성현황(개)	결산액(억원)
전략목표Ⅰ : 경제활성화 지원		
전략목표Ⅱ : 튼튼한 금융시스템 구축		
전략목표Ⅲ :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전략목표Ⅳ : 서민·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전략목표Ⅴ : 한국금융의 글로벌 위상 제고		

* : 초과달성(130% 이상), : 달성(100~130%), : 미달성(100%미만)

(3) 성과목표별 성과달성 현황

구 분		'10 달성	'11 달성	'11 결산액 (억원)
전략목표 I: 경제활성화 지원				
□ 금융공기업을 활용한 기업자금지원 및 기업구조조정 (I-1)				34,676
• 국책금융기관 중소기업 자금공급 (단위:조원)	신규	○		
• 보증지원업체의 만족도 (단위:%)	신규	◎		
전략목표 II: 튼튼한 금융시스템 구축				
□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 등을 통한 위기대응 능력 보강 (II-1)				17,698
• 은행권 BIS비율 (단위:%)	신규	○		
전략목표 III: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기반 마련 (III-1)				1
•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단위:%)	신규	X		
□ 핵심 금융인프라 선진화로 금융발전 촉진 (III-2)				14
• 정부입법계획 달성률 (단위:%)	신규	X		
전략목표 IV: 서민·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IV-1)				4,336
• 금융소외계층 지원인원 (단위:명)	신규	◎		
• 주택금융지원 등 수혜자 만족도 (단위:%)	신규	○		
□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추진 (IV-2)				2
• 금융소비자보호를 획기적으로 제고 (단위:)	신규	X		
전략목표 V: 한국금융의 글로벌 위상 제고				
□ 금융 글로벌화의 지속적 추진으로 국제 경쟁력 강화 (V-1)				26
• 양자 다자간 금융협상을 통한 국제협력강화 (단위:건)	신규	○		
• 국내외 금융기관 진출입 지원률 (단위:%)	신규	◎		
□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선진화 (V-2)				50
•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선진화 달성률 (단위:%)	신규	○		

* ◎ 초과달성(130% 이상), ○ 달성(100%~130%미만), X 미달성(100% 미만)

2. 성과목표관리체계별 자원배분 현황

(1) 전략목표별 자원배분 현황

☐ 자원배분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결산액	비중
<input type="checkbox"/> 전략목표1: 경제활성화 지원	34,676	61.0
<input type="checkbox"/> 전략목표2: 튼튼한 금융시스템 구축	17,697	31.2
<input type="checkbox"/> 전략목표3: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14	0.0
<input type="checkbox"/> 전략목표4: 서민·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4,338	7.6
<input type="checkbox"/> 전략목표5: 한국금융의 글로벌 위상 제고	75	0.1

☐ 자원배분 기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중소기업 육성,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전략목표 I 에 재원을 우선적으로 배분
- 또한, 금융위기 재발에 대한 시장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세를 유지하기 위해 전략목표 II 에도 재원을 중점 배분
- 위기이후 어려움이 가중된 서민층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필요성이 지속됨에 따라 전략목표 IV 에 대한 재원 투입은 전년대와 유사한 수준 유지 ('10년 4,271억원 → '11년 4,338억원)

☐ 특이사항

- 전략목표 III, V 는 주로 비재정사업과 관련된 관리과제로 구성
 -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III) 및 한국금융의 글로벌 위상 제고(V)는 관련

금융제도 제·개정,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하여 추진되어 재정 투입이 상대적으로 적음

(2) 전략목표별 자원배분 추이

□ '11년에도 전년대와 마찬가지로 실물경제활성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및 위기재발방지를 위한 금융기관 건전성 강화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해당 분야에 재원의 90% 이상을 배분하는 자원배분 추이 유지

○ 다만, 성과목표체계 조정으로 '10년도 전략목표 I 이 '11년도에는 전략목표 I, II로 세분화됨에 따라,

- 전략목표 I 의 자원비중은 감소한 반면, 전략목표 II의 자원비중은 증가

* ('10년도) 전략목표 I (금융시장 안정유지와 위기재발방지) 자원 비중 (%) : 94

성과목표 I-1 (기업자금 지원) 자원 비중 (%) : 47

성과목표 I-2 (건전성 강화) 자원 비중 (%) : 47

* ('11년도) 전략목표 I (경제활성화 지원) 자원 비중 (%) : 61

전략목표 II (튼튼한 금융시스템 구축) 자원 비중 (%) : 31

제3장

과제별 성과달성 현황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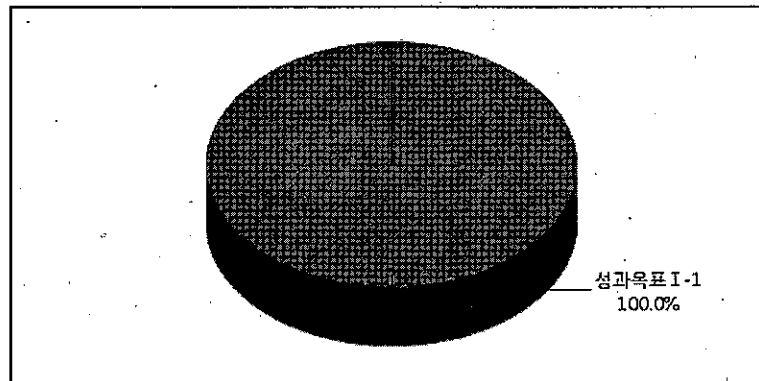
전략목표 I

경제활성화 지원

주요내용

- ◇ 보증기관 등 금융공기업을 활용하여 기업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는 한편, 지속적인 기업구조조정 유도
 - 신보·기보 등을 통해 설비투자자금 등 기업자금을 공급하고 성장동력기업·기술혁신기업에 대한 보증공급
 -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실시 등을 통해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유도하여 시장잠재불안 요인 해소 및 기업경쟁력 강화

<성과목표별 재정투입 현황>



《전략목표 I : 성과달성 현황》

(단위:개)

성과목표			관리과제		
구분	성과지표수	달성지표수	구분	성과지표수	달성지표수
I-1 금융공기업을 활용한 기업자금지원 및 기업구조조정	2	2 (1)	정보화	5	5
			일반재정	7	6 (3)

□ 전략목표 I : 성과달성 현황

부문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09년도	'10년도	'11년도
전략목표 I : 경제활성화 지원							
성과목표 I-1 : 금융공기업들 활용한 기업자금지원 및 기업구조조정		① 국책금융기관 중소기업 자금 공급(조원)	보증기관신보, 기보 농신보 지원 실적 합계	목표	-	신규	52.5
				실적	-	-	56.3
				달성률(%)	-	-	107
		② 보증지원업체의 만족도(%)	설문조사	목표	-	신규	70
				실적	-	-	91.5
				달성률(%)	-	-	131
일반 재정	신보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 지원	① 신보를 통한 성장 동력 확충 부문 보증공급(조원)	Σ당해연도 성장동력확충지원액과 목표치를 비교하여 목표달성률 산출	목표	16.0	16.0	18.5
				실적	21.3	28.5	27.3
				달성률(%)	133	178	148
		② 구상권 회수액 (억원)	Σ구상권 회수액	목표	-	추가	6,199
				실적	-	-	7,269
				달성률(%)	-	-	117
일반 재정	기술창업 기업 등 핵심분야에 대한 보증 지원 강화	① 기술평가보증 잔액비율 (%)	$(\Sigma \text{기술평가보증잔액} / \Sigma \text{총보증잔액}) \times 100$	목표	80.0	90.0	-
				실적	84.9	90.1	-
				달성률(%)	106	100	-
		① 기술창업기업 신규지원비율(%)	$(\Sigma \text{기술창업신규보증공급} / \Sigma \text{신규보증공급}) \times 100$	목표	-	변경	45.0
				실적	-	-	47.4
				달성률(%)	-	1	105
		② 핵심분야 보증공급 (조원)	Σ핵심분야보증공급	목표	12.4	11.5	10.5
				실적	15.7	14.4	15.1
				달성률(%)	127	125	144
		③ 구상권 회수액 (억원)	Σ구상권회수액	목표	-	추가	2,700
				실적	-	-	3,222
				달성률(%)	-	-	119
일반 재정	농림수산업 자에 대한	① 선도농우대보증 잔액(억원)	선도농우대보증 최근3개년평균성장률	목표	23,000	25,000	23,338

부문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09년도	'10년도	'11년도
	지속적 보증지원		에 성장추세치 반영	실적	21,500	22,239	23,157
				달성률(%)	94	89	99
		② 선도능우대 보증사고율 (%)	(선도능보증사고액잔액 /선도능보증액)	목표	1.7	1.6	-
				실적	1.4	0.8	-
				달성률(%)	121	200	-
		② 구상채권 회수율 (%)	(구상채권 회수 누계/대위변제 누계)×100	목표	-	변경	13.64
				실적	-	-	19.80
				달성률(%)	-	-	145
정보화	신보 IT 운영	① 정보화 처리건수 (건)	정보화관리시스템 등록 기준 (신보 자체 운영)	목표	-	신규	120
				실적	-	-	152
				달성률(%)	-	-	127
		② IT시스템가동률 (%)	신보 내 정보화 핵심성과지표(KPI) 중 정량지표인 '무중단 시스템 달성률' 활용	목표	-	신규	99.9
				실적	-	-	99.97
				달성률(%)	-	-	100
정보화	기보 IT 운영	① 정보화 처리건수 (%)	정보화관리시스템 등록 기준 (기보 자체 운영)	목표	-	신규	120
				실적	-	-	154
				달성률(%)	-	-	128
		② 전산환경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5단계 등급별 점수 합산 / 전체 응답자	목표	-	신규	85
				실적	-	-	88.9
				달성률(%)	-	-	105
		③ 안정적인고 효율 적인 시스템 운용 (%)	정상가동 / 년가동시간	목표	-	신규	99
				실적	-	-	100
				달성률(%)	-	-	101

□ 전략목표 I : 재정집행 결과

(단위:억원, %)

성과목표체계		대상사업						
과제 코드	과제명	회계구분	사업 코드	예산사업명	사업 구분	'11 예산	'11 결산	집행률 (%)
전략목표 I : 경제활성화 지원						39,866	34,676	87.0
성과목표 I - 1: 금융공기업을 활용한 기업자금지원 및 기업구조조정						39,866	34,676	87.0
I-1- 일반재정(1)	신보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 지원	신용보증 기금	2400-2431	신보 대위변제	단위 사업	22,450	21,050	93.8
		신용보증 기금	2400-2432	보증연계투자	단위 사업	0	0	0.0
		신용보증 기금	2400-2433	신보 운영	단위 사업	2,000	1,938	96.9
I-1- 일반재정(2)	기술창업기업 등 핵심분야에 대한 보증 지원 강화	기술신용 보증기금	2400-2441	기보 대위변제	단위 사업	10,633	8,613	81.0
		기술신용 보증기금	2400-2442	중소기업투자	단위 사업	100	55	55.1
		기술신용 보증기금	2400-2443	기보 운영	단위 사업	1,074	911	84.9
I-1- 일반재정(3)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지속적 보증지원	농림수산 업자신용 보증기금	2300-2332	농신보대위변제	단위 사업	3,270	1,796	54.9
		농림수산 업자신용 보증기금	2300-2377	농신보운영	단위 사업	105	102	98.0
I-1- 정보화(1)	신보 IT 운영	신용보증 기금	3300-3378-203	신보 IT운영(정보화)	세부 사업	(133)	(132)	99.6
I-1- 정보화(2)	기보 IT 운영	기술신용 보증기금	3300-3379-204	IT운영(정보화)	세부 사업	(89)	(74)	82.3

(1) 주요내용

□ 성과목표 개요

- 국책은행 및 보증기관 등을 활용하여 기업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는 한편, 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하여 기업 체질개선을 유도
 - 국책은행·보증기관을 활용한 기업의 설비투자자금 지원 등을 통해 투자 활성화 및 중소기업 활력회복을 도모
 -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실시 등을 통해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유도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09년도	'10년도	'11년도
①국책금융기관 중소기업 자금 공급(조원)	보증기관 지원 실적 합계	목표	-	신규	52.5
		실적	-	-	56.3
		달성률(%)	-	-	107
②보증지원업체의 만족도(점)	설문조사	목표	-	신규	70
		실적	-	-	91.5*
		달성률(%)	-	-	131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의 평균

(2) 성과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

1)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 기여도

- 금융위기 과정에서 확대된 정책자금 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한편, 미래 성장잠재력확충을 위한 핵심분야(수출·녹색·서비스·우수기술)에 대한 중점 지원을 강화
- 향후 경제성장을 견인할 분야에 원활하게 자금을 공급하여 자금조달 안정화 및 실물경제 회복에 기여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 대내외 경제 여건 변동에 따른 시장상황을 점검하여 자금을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자금조달 안정화 및 실물경제 회복에 기여
 - 중소기업 자금사정 전망지수(BSI)는 금융위기 이후 호전된 상태이며 자금조달곤란을 경영애로로 보는 중소기업 비율도 낮은 수준을 유지
 - * 중기자금사정 전망 BSI(한은) : (08.12)62 → (09.12)91 → (10.12)88 → (11.6)93 → (11.12)85
 - ** 자금곤란 중소기업 비율(중기중앙회, %) : (08.12)39.2 → (09.12)26.0 → (10.12) 23.2 → (11.12) 23.3

☐ 원인분석

- 고객중심경영 마인드 제고, 고객가치 창출 극대화 노력 등으로 고객 만족도 수준은 전반적으로 우수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결산보고서, 월보, 통계자료 등
 - * 작성시기 및 횟수
 - 결산보고서 : 2012년 2월, 연 1회(출처 : 공기업경영실적보고서)
 - 월보 : 매월 초(전 월 자료), 월 1회
 - 통계자료 : 매월 초(전 월 자료), 월 1회(총보증공급, 보증잔액(공급액) 등)
- 기획재정부 “2011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자료

2) 향후 개선사항

☐ 해당사항 없음

① 신보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 지원(I-1-일반재정(1))

가. 주요내용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 경제난국 극복 후 국가 경제의 재도약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민경제 기여도 및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높은 성장동력 확충부문에 대한 보증공급을 확대
-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창업 기업지원
- 미래성장동력의 근간이 되는 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 저탄소 녹색성장 중심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녹색성장기업 지원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09년도	'10년도	'11년도
① 성장동력 확충부문 보증공급 (조원)	Σ 당해연도 성장동력 확충지원액	목표	16.0	16.0	18.5
		실적	21.3	28.5	27.3
		달성률(%)	133.1	178	148
② 구상권회수액(억원)	Σ 구상권 회수액	목표	-	신규	6,199
		실적	-	-	7,269
		달성률(%)	-	-	117

나. 성과분석

□ 성과목표 달성 기여도

- 창업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녹색성장기업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부문에 대한 보증공급 확대를 통해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경쟁력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견인
- 효율적인 회수활동을 통해 구상권을 회수함으로써 국가 재정부담

완화에 기여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 최근의 경기동향, 최근 3개년 보증공급 현황, 만기도래 규모 등을 바탕으로 연초 보증공급 목표를 설정
- 창업기업, 녹색성장기업 등 핵심분야에 대한 보증비율, 보증한도 우대조치 등을 통해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선별지원 강화
- 미래성장동력 확충 전 부문에 대한 보증지원 목표 초과달성
 - * 창업기업지원 : ('11목표) 9.0조원 → ('11.12월 실적) 10.3조원
 - 경영혁신형기업 지원 : ('11목표) 8.0조원 → ('11.12월 실적) 11.6조원
 - 녹색성장기업 지원 : ('11목표) 4.0조원 → ('11.12월 실적) 5.4조원

□ 원인분석

- 금융위기 이후 비핵심분야에 대한 보증공급 비중을 줄이고 핵심분야(창업, 경영혁신형, 녹색성장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성과목표치 초과달성
- 특히 경영혁신형기업 신규 인증의 활성화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녹색성장기업 대상이 확대됨에 기인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 신용보증기금 결산보고서, 월보, 통계자료 등을 통하여 미래성장동력 확충 부문에 대한 공급실적 확인
- * 작성시기 및 횟수
 - 결산보고서 : 2012년 2월, 연 1회(출처 : 공기업경영실적보고서)
 - 월보 : 매월 초(전 월 자료), 월 1회
 - 통계자료 : 매월 초(전 월 자료), 월 1회(보증사고율, 보증잔액(공급액) 등

다. 향후 개선사항

□ 해당사항 없음

② 기술창업기업 등 핵심분야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I-1-일반재정(2))

가. 주요내용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 기술평가와 기술보증을 통한 기술금융 활성화로 경제 활력 제고와 성장잠재력 확충
- 기술창업기업과 벤처창업기업 등 핵심분야보증 중점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공급 원활화
 - 기술창업기업 등 고용 창출 우수기업에 보증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정부의 일자리 창출 시책을 적극 뒷받침
 - 녹색성장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09년도	'10년도	'11년도
① 기술평가보증 잔액비율(%)	$\frac{(\sum \text{기술평가보증잔액})}{(\sum \text{총보증잔액})} \times 100$	목표	80.0	90.0	-
		실적	84.9	90.1	-
		달성률(%)	106	100	-
①기술창업기업 신규지원비율(%)	$\frac{(\sum \text{기술창업신규보증공급})}{(\sum \text{신규보증공급})} \times 100$	목표	-	변경	45.0
		실적	-	-	47.4
		달성률(%)	-	-	105
②핵심분야 보증공급(조원)	$\sum \text{핵심분야보증공급}$	목표	12.4	11.5	10.5
		실적	15.7	14.4	15.1
		달성률(%)	126.7	125	144
③구상권 회수액(억원)	$\sum \text{구상권회수액}$	목표	-	추가	2,700
		실적	-	-	3,222
		달성률(%)	-	-	119

나. 성과분석

□ 성과목표 달성 기여도

- 기술창업기업에 대해 과거 재무실적이 아닌 기술력·사업성 등 미래성장가능성 위주로 기술평가보증 지원을 하여 기술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공급에 기여
- 녹색성장기업, 수출기업, 벤처창업기업, 우수기술기업 등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4대 핵심분야를 중점 지원함으로써 이들 기업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고부가가치 경제로의 전환하도록 촉진
- 효율적인 회수활동을 통해 구상권을 회수함으로써 국가 재정부담 완화에 기여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 (기술창업기업 신규지원비율)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하고 신규업체 발굴을 확대하기 위해 “새싹기업 찾기 캠페인”을 실시(연 2회) 하고, 영업점 경영성과지표에 기술창업기업 지원노력도를 반영하여 계획배분 및 실적 관리
 - (핵심분야 보증공급) 지속적인 신성장동력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녹색성장기업, 우수기술기업 등 4대 핵심분야에 대한 보증비율 및 보증한도 확대 등을 통해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역량 집중
- 4대 핵심분야 전 부문에 대한 보증지원 목표 초과 달성

【 4대 핵심분야 지원현황 】

(단위: 억원, %)

구 분	2011년		
	계 획	실 적	달 성 율
녹색성장기업	15,000	24,314	162.1
수출기업	18,000	22,171	123.2
벤처창업기업	29,000	45,017	155.2
우수기술기업	43,000	59,820	139.1

- (구상권 회수) 회수가능성을 고려한 채권단계별 세분화된 회수활동과 다양한 채무자정보를 활용한 적극적인 회수활동 전개

□ 원인분석

- 핵심분야에 대한 보증공급은 금융위기사 확대된 보증의 정상화를 추진 하면서 핵심분야(녹색성장기업, 수출기업, 벤처창업기업, 우수기술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성과목표치를 초과달성
 - 특히, 벤처창업 부문과 신성장동력인 창출 분야인 녹색성장기업에 기술 금융 지원역량을 집중하여 전략적으로 보증 운영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 기술신용보증기금 결산보고서, 월보, 통계자료 등을 통하여 기술창업 기업과 핵심분야보중에 대한 지원 실적, 구상권 회수실적 확인

* 작성시기 및 횟수

- 결산보고서 : 2012년 2월, 연 1회(출처 : 공기업경영실적보고서)
- 월보 : 매월 초(전 월 자료), 월 1회
- 통계자료 : 매월 초(전 월 자료), 월 1회(보증사고율, 보증잔액(공급액) 등)

다. 향후 개선사항

- 핵심분야보중에 대한 보증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안정화된 점을 감안하여 '11년 성과지표 중 「핵심분야 보증공급」지표를 개선할 필요
- 정책지원효과가 높은 신성장동력분야, R&D활성화 등에 대한 지표를 반영하여 기술금융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

③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지속적 보증지원(I-1-일반재정(3))

가. 주요내용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09년도	'10년도	'11년도
①선도농우대보증잔액(억원)	선도농우대보증 최근3개년평균성장률에 성장추세치 반영	목표	23,000	25,000	23,338
		실적	21,500	22,239	23,157
		달성률(%)	93.5	89.0	99
②선도농우대보증사고율(%)	(선도농보증사고액잔액/ 선도농보증액)	목표	1.7	1.6	-
		실적	1.4	0.8	-
		달성률(%)	121	200	-
②구상채권 회수율(%)	(구상채권 회수 누계/대위 변제 누계)×100	목표	-	변경	13.64
		실적	-	-	19.80
		달성률(%)	-	-	145

나. 성과분석

□ 성과목표 달성 기여도

- 선도농우대보증은 농어촌 선도농어업인에게 원활한 금융지원을 통해, 농어촌 경제활성화에 기여
 - 보증지원 확대('11년 신규보증 31,600억원 달성, 전년대비 4,538억증가)
- 선도농업어업인에 대한 계속적인 금융지원은 “계속적인 기업자금 공급을 통한 경쟁력 있는 기업 육성”의 성과목표 달성에 기여

○ 구상채권회수를 제고를 통하여 보증지원확대 여력 확보

- 운용배수 4.9배('11년말), 보증여력 26조 7,045억원('11년말)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 선도농우대보증을 확대하기 위하여 연초 신규보증 공급지표 설정

-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매월, 분기별 사업추진평가 실시

○ 보증추진 독려를 위한 교육실시 및 추진전략회의 개최

- 금융기관 임직원 및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실시

- 연간 4회 추진전략회의 개최, 부진사무소에 대한 대책보고 실시

○ 구상채권 회수추진 지표부여 및 상시·특별회수추진기간 설정하여 집중추진

○ 구상채권 회수독려를 위한 관리시스템 강화

- 성과관리를 통한 회수실적 제고 및 공공기관 정보를 활용한 회수자원 발굴

- 채권추심 전문기관에 아웃소싱 확대

□ 원인분석

○ 선도농우대보증은 과거 3년 평균 보증잔액(2조 1,929억원) 보다 성과지표를 2조 3,338억원으로 의욕적으로 높게 설정한 반면

- 외부적으로 농어업 경제환경이 축소되고 내부적으로는 농신보 전체 보증잔액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목표보다 다소 낮게 달성됨

* 농림어업 GDP 비중 축소 : '00년 (4.6%) → '10년(2.6%)

* 농신보 보증잔액 : '10년(91,446억원) → '11년(85,615억원)

○ 구상채권 회수율은 기금 건전성제고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성과지표를 최근 5개년 평균 회수율로 산정함으로써 목표보다 다소 초과하여 달성

【구상채권 회수율 산출근거】

(단위:%)

구분	'05년(A)	'06년(B)	'07년(C)	'08년(D)	'09년(E)	'11년계획(F) = A+B+C+D+E ÷ 5
회수율	11.2	12.0	13.3	15.0	16.7	13.64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결산보고서, 월보, 통계자료 등을 통하여 선도농보증지원에 대한 공급실적 및 구상채권 회수율 확인

* 작성시기 및 회수

- 결산보고서 : 2012년 2월, 연 1회
- 월 보 : 매월 초, 월 1회
- 통계 자료 : 매월 초, 월 1회

다. 향후 개선사항

□ 선도농업인 육성을 위한 보증제도 개선 추진

-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신용보증 전문성 강화
 - 전문가인력 양성확대 및 금융기관 임직원 교육훈련 강화
- 보증심사 시스템 선진화
 - 농업기술력 우수사업자에 대한 우대 심사시스템 도입
 - 보증심사시 심사평점 평가방법 개선

□ 변화된 구상권 회수 여건을 반영한 의욕적인 목표 설정(기 반영)

- 과거 회수율 및 최근년도 구상권회수율을 분석하여 '12년도 성과계획에 반영
 - 구상채권 회수율 목표 : '11년(13.64%) ⇒ '12년(20.3%)

4 신보 IT 운영(I-1-정보화(1))

가. 주요내용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 신용보증, 채권관리 등 신용보증기금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최적의 정보시스템 운영
- 신용보증 관련 요청과제에 대하여 적절한 IT자원을 투입하여 즉시 전산화를 달성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09년도	'10년도	'11년도
①정보화 처리건수(건)	정보화관리시스템 등록 기준 (신보 자체 운영)	목표	-	신규	120
		실적	-	-	152
		달성률(%)	-	-	127
②IT시스템 가동률(%)	하단 내용 참조*	목표	-	신규	99.9
		실적	-	-	99.97
		달성률(%)	-	-	100

* 신보 내 정보화 핵심성과지표(KPI) 중 정량지표인 '무중단시스템 달성률'과 동일

- 평가방법 : 5등급 측정 ('S'등급 : 99.9%이상, 'A'등급 : 97.5%이상, 'B'등급 : 95.0%이상, 'C'등급 : 92.5%이상, 'D'등급 : 92.5%미만)

나. 성과분석

□ 성과목표 달성 기여도

- 업무 요구사항을 민첩하게 대응하여 적시에 전산화함으로써 신용보증기금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
- IT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직원이 업무처리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조직의 목표 달성에 이바지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 신규 전산화 요건 발생 시 현업관계관리 창구인 RM(Relationship Management) 담당자를 통해 요구사항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
- 실무 경험이 풍부한 내부인력과 아웃소싱한 외부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각 부문별로 전담시켜 안정적으로 IT 시스템 운영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 정보화 처리건수 : 자체 운영하고 있는 '업무전산화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화 처리자료를 수집하고, 본 자료는 매년 정보화활동 결과 보고(담당이사 결재)를 통해 품질을 확인
- IT시스템 가동률 : ITSM(IT Service Management) 중 장애관리 프로세스에 등록된 장애내역을 근거로 무중단시간 및 서비스시간을 측정하고, 그 결과는 핵심성과지표 담당부서에서 검증

다. 향후 개선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기보 IT 운영(I-1-정보화(2))

가. 주요내용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 급변하는 경영환경 및 정보기술(IT)환경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사용자 중심의 쉽고 편리한 정보시스템 구현
- 정보화업무의 원활한 지원, 정보화기기(서버, 통신 장비 등)의 장애발생 최소화 등 효과적인 유지정비체계 구축으로 지속적인 업무서비스 기반 제공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09년도	'10년도	'11년도
①정보화 처리건수(건수)	정보화관리시스템 등록 기준 (기보 자체 운영)	목표	-	신규	120
		실적	-	-	154
		달성률(%)	-	-	128
②전산환경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5단계 등급별 점수 합산 / 전체 응답자	목표	-	신규	85
		실적	-	-	88.9
		달성률(%)	-	-	105
③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운용(%)	정상가동 / 년가동시간	목표	-	신규	99
		실적	-	-	100
		달성률(%)	-	-	101

나. 성과분석

□ 성과목표 달성 기여도

- 기술평가모형 및 인증절차 개선 등 정보화 개발과제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구축하여 기술·창업기업을 위한 기술금융 종합지원체계를 강화
- 전산 장애의 사전예방 및 최소화를 통해 성과목표인 생산성 극대화를

도모하여 전략목표인 모범적인 금융 공기업 구현에 기여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 전사적 정보기술아키텍처(EA)를 활용한 업무분석, 정보화 요건 도출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업무정보화를 추진하여 정보시스템 만족도 제고
- 중장기 정보화전략계획(ISP)에 근거한 체계적인 정보화추진에 따라 IT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환경 제공
 - *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통합모니터링 환경구축, 접근제어시스템 구축 등 IT인프라확충
 - * IT전담요원의 지속적인 시스템 성능개선 및 장애예방 모니터링 실시 등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 기술신용보증기금 정보화관리시스템,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운영일지 등을 통하여 성과지표 결과 확인
- 정보화처리건수
 - * 그룹웨어 「전산개발광장」에 등록된 정보화 요청건 중 완료등록된 건수
- 전산환경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 * 기금 전 직원(정규직)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시스템(5단계 등급 합산)으로 연간 2회 설문을 실시하여 평균합

구 분	조사시기	설문대상 (A)	응답인원 (B)	응답율 (B/A)	5단계등급 합산(C)	만족도 (C/B)	연간만족도 (%)
상반기	6월	935명	358명	38.3%	32,230	90.0%	88.9
하반기	12월	938명	183명	19.5%	16,100	87.9%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운용
 - * 전산관리되고 있는 “시스템 장애발생일지”상의 장애시간을 산출하여 정상가동시간을 산출
- 성과지표관련 사항을 전결권자의 확인을 통해 전산시스템으로 관리

다. 향후 개선사항

□ 안정적인 시스템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IT인프라 확충

- 외장스토리지 증설, 노후화된 네트워크장비(백본스위치) 교체 및 라우터 장비 이중화 등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을 더욱 강화

(3) 내부 및 외부지적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성과 목표	전년도 성과보고서	○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등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보증 규모를 확대할 것 (‘11년 신·기보 국정감사)	○ 중소기업의 자금흐름상황 및 대외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12년은 보증규모를 54.8조원으로 확대
관리 과제 (I-1-일반 재정(1))	전년도 성과보고서	○ 해당사항 없음	
	자율평가	○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 해당사항 없음	
관리 과제 (I-1-일반 재정(2))	전년도 성과보고서	○ 해당사항 없음	
	자율평가	○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 해당사항 없음	
관리 과제 (I-1-일반 재정(3))	전년도 성과보고서	○ 선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보증제도 개선 추진	○ 개인농어업인 보증요율 인하(0.2%) - 시행일 : ‘11. 4. 27
	자율평가	○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 해당사항 없음	
관리 과제 (I-1-정보 화(1))	전년도 성과보고서	○ 해당사항 없음	
	자율평가	○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 해당사항 없음	
관리 과제 (I-1-정보 화(2))	전년도 성과보고서	○ 해당사항 없음	
	자율평가	○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 해당사항 없음	

전략목표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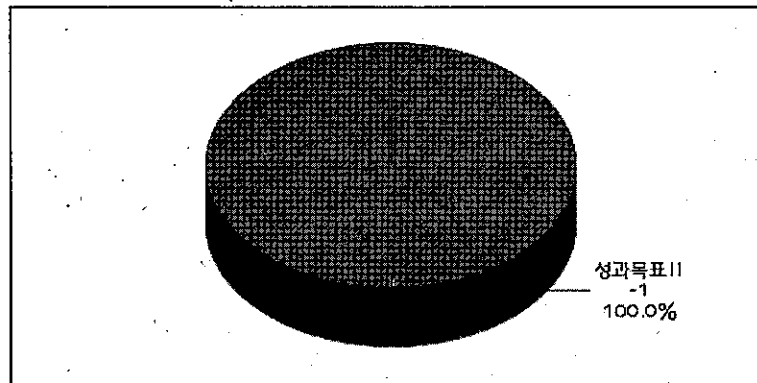
튼튼한 금융시스템 구축

주요내용

◇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강화하여 위기대응능력을 제고

- 은행부문 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자본적정성을 유지토록 지도하여 은행시스템의 건전성 제고 및 안정적 발전 기반 마련
- 금융회사가 보유한 부실자산을 인수정리함으로써 시장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성과목표별 재정투입 현황>



《전략목표 II : 성과달성 현황》

(단위:개)

성과목표			관리과제		
구분	성과지표수	달성지표수	구분	성과지표수	달성지표수
II-1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 등을 통한 위기대응 능력 보강	1	1	일반재정	1	1 (1)

□ 전략목표 II : 성과달성 현황

부문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09년도	'10년도	'11년도
전략목표 II: 튼튼한 금융시스템 구축							
성과목표 II-1 :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 등을 통한 위기대응 능력 보강		① 리스크 평가기준 정비	관련 규정 개정안 마련여부	목표	리스크 점검	리스크 평가기준 정비	-
				실적	리스크 점검	완료	-
				달성률(%)	100	100	-
		① 은행권 BIS비율 (%)	계량	목표	-	변경	12.00
				실적	-	-	14.17
				달성률(%)	-	-	118
일반 재정	금융·기업 구조조정 지원	① 은행권 부실채권비율 (%)	은행권 부실채권비율	목표	신규	1	-
				실적	-	1.86	-
				달성률(%)	-	54	-
		① 부실채권인수규모 (억원)	부실채권 인수규모	목표	-	변경	3,000
				실적	-	-	27,021
				달성률(%)	-	-	900

□ 전략목표 II : 재정집행 결과

(단위:억원, %)

성과목표체계		대상사업						
과제코드	과제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예산사업명	사업구분	'11 예산	'11 결산	집행률 (%)
전략목표 II: 튼튼한 금융시스템 구축						50,000	17,697	35.4
성과목표 II-1: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 등을 통한 위기대응 능력 보강						50,000	17,697	35.4
II-1- 일반재정(1)	금융·기업 구조조정지원	구조조정 기금	2100-2131	금융구조조정지원 (구조조정기금)	단위 사업	45,000	16,613	36.9
		구조조정 기금	2100-2132	기업구조조정지원 (구조조정기금)	단위 사업	5,000	1,084	21.7

(1) 주요내용

□ 성과목표 개요

-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여타 산업에 비해 파급효과가 큰 금융회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손실흡수능력 제고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09년도	'10년도	'11년도 (9월말)
① 리스크 평가기준 정비	관련 규정 개정안 마련여부	목표	리스크 점검	리스크 평가기준 정비	-
		실적	리스크 점검	완료	-
		달성률(%)	100	100	-
① 은행권 BIS비율(%)	계량	목표	-	변경	12.00
		실적	-	-	14.17
		달성률(%)	-	-	118

(2) 성과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

1)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 기여도

- 은행산업은 국내 금융산업의 근간이므로 은행의 건전성 제고는 국내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

- 은행부문 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자본적정성을 유지토록 지도하여 은행시스템의 건전성 제고 및 안정적 발전 기반 마련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통하여 '11.9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14.13%(Tier1 비율은 11.41%) 수준을 유지
 - 이는 글로벌 우량은행 BIS비율 평균*(14.69%)에 근접한 매우 양호한 수준
 - * '11.7월 뱅커스지 기준 세계 20대 은행 BIS 비율의 평균
 - 한편, 현재 국내 모든 은행이 경영실태평가 1등급 기준인 BIS자기자본비율 10%, Tier1 비율 7%를 초과하고 있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 성과측정을 위한 자료 수집 방법
 - '11년 국내은행이 제출한 업무보고서 확인(금융감독원)
- 품질확인
 - 금융감독원은 BIS자기자본비율의 신속하고 정확한 산출을 위하여 각 은행이 제출한 업무보고서로 잠정치를 먼저 산출한 후, 은행의 분기별 결산 후 확정치를 다시 산출함

2) 향후 개선사항

- 유럽 재정위기 심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 등 시장불확실성 요인이 잔존하고 있어, 자본적정성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특히, '13년부터 도입되는 바젤Ⅲ 자본규제에 대비하여 향후 국내은행의 자본적정성이 양적·질적으로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① 금융·기업 구조조정지원(Ⅱ-1-일반재정(1))

가. 주요내용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함으로써 금융기관 자산 건전성 제고
- 구조조정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인수·정리함으로써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목표대비 달성률	'09년도	'10년도	'11년도
①은행권 부실채권비율 (%)	은행권 부실채권비율	목표	신규	1	-
		실적	-	1.86	-
		달성률(%)	-	54	-
①부실채권 인수규모(억원)	부실채권 인수규모(억원)	목표	-	변경	3,000
		실적	-	-	27,021
		달성률(%)	-	-	900

나. 성과분석

□ 성과목표 달성 기여도

- 금융회사 보유 부실채권을 신속히 인수·정리하는 등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선제적·적기 대응으로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및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 부실채권 규모 및 가격 등을 자산관리공사와 개별 금융회사간 협의하여 정한 후 공자위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금융회사 보유 부실채권을 인수

* 부실채권 매입절차: 매각의사 조회 및 접수 → 인수조건 협의 → 매입대금 산정 → 공자위 심의 → 캠프 경관위 의결 →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 '11년 중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은행 및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부실채권 2.7조원을 1.7조원에 매입

(단위 : 억원)

	채권액	매입액
은행	2,890	834
비은행	24,131	16,036
계	27,021	16,870

- 특히, 저축은행 PF채권(1.9조원)은 PF사업장 실태조사('11.5.30~6.9)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1.4조원에 매입

□ 원인분석

- '10년도 성과지표(은행권 부실채권 비율)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을 포함하여 외부요인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아 객관적인 실적을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 '11년도부터는 성과지표를 금융회사 부실채권 인수규모로 변경

* 2010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

- '11년도 성과지표 작성 당시('10.5~6월)는 구조조정기금의 설립초기로, 부실채권 인수실적이 미미하고 관련 데이터가 부족하여 성과목표치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설정한 측면이 있음

- '09년도 계획(보증한도)(15조원) 대비 지원실적(17,819억원) 비율*을 적용하여 '11년도 계획(당시 2.5조원) 대비 예상 인수규모(3,000억원)를 목표치로 설정

* '09년 구조조정기금 설립 당시에는 시장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충분한 규모('09,'10년 각각 20조원)의 보증한도를 설정하였고, 이러한 조치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실제 구조조정기금의 집행률이 최소화됨(12%수준)

- 이후 저축은행 경영 정상화 및 구조조정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저축은행

부실 PF채권 인수*가 급증하게 됨에 따라 목표치를 크게 초과 달성

* 저축은행 부실PF채권 인수 실적(채권액(매입액))

- ('09년) 없음 → ('10년) 40,658억원(25,197억원) → ('11년) 21,416억원(13,866억원)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 근거 자료 : 2011년 결산 보고서('12.2월말 완료 예정)

○ 자료수집 방법

- 대상 :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 규모

- 자료수집 시기 : 수시

- 자료 출처 : 구조조정기금 지원 및 정리실적 보고(공자위 안전), 공적자금
운용현황 보도자료(매월), 공적자금 백서

다. 향후 개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12년도부터는 구조조정기금은 부실채권 인수 없이 기존 인수자산 정리에 주력할
계획으로 12년 성과계획서 관리과제에 미포함

(3) 내부 및 외부지적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성과 목표	전년도 성과보고서	○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 해당사항 없음	
관리 과제 (Ⅱ-1-일반 재정(1))	전년도 성과보고서 (감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인 실적측정이 불가능한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로 은행권 부실채권 비율을 사용하는 것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을 포함하여 외부요인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아 객관적인 실적 측정이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채권을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정리할 경우와 같이 시장상황 및 금융회사 여건 등 외부변수에 과도하게 영향을 받는 실적을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것은 당해 과제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측정에 한계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 '11년도부터는 성과지표를 은행권과 비은행권을 포함한 금융회사 부실채권 인수규모로 변경하였음
	2011 성과계획서 (예산정책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적정성 부족 (예산정책처 지적사항) - 금융구조조정사업의 경우 경기호전 등으로 부실채권 규모가 줄면 오히려 성과 실적이 낮아지므로 '당해년도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발생액 대비 인수규모' 등의 성과 지표로 대체하여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줄이는 방안 고려 - 기업구조조정사업의 경우 구조조정기업의 자산인수 규모 및 자산인수로 인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과지표 등을 추가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구조조정사업의 경우 당해연도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발생액* 대비 인수규모 등으로 지표를 대체하는 것은 부실채권정리를 시장에 우선 맡기고 추가적으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지표로서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 은행권의 부실채권을 제외하고는 비은행권 부실채권의 경우는 발생액 통계가 없었음 - 기업구조조정사업의 경우 인수 대상이 되는 구조조정개선 기업의 자산은 범위가 포괄적이므로 지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경우 대표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는 검토의견을 예정처에 既제출하였음 ('10년 11월) ○ 향후에는 지적사항을 고려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다만 구조조정기금은 12년 이후 추가로 부실채권을 인수할 계획이 없고, 기존 인수자산 정리에 주력할 계획임에 따라, '12년 성과계획서상 관리과제로 설정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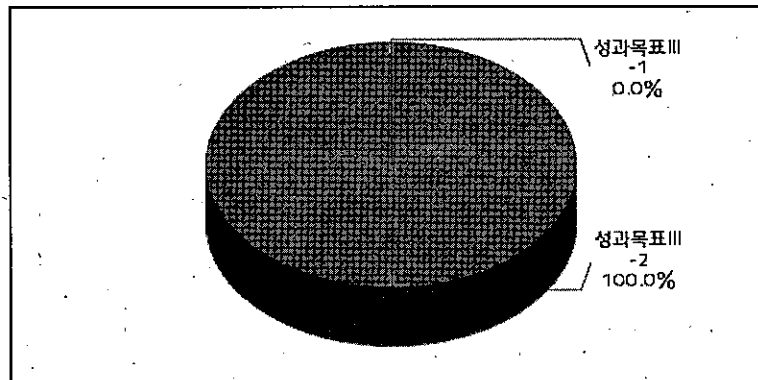
전략목표Ⅲ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주요내용

- ◇ 금융산업이 위기 이후 新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쟁력 제고기반을 마련
 - 영업규제 개혁과 금융인프라의 개선을 지속추진
 - 합리적인 금융규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 산업 선진화 촉진
- ◇ 핵심금융인프라 선진화로 금융발전 촉진
 - 금융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령 제개정,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핵심금융 인프라 구축을 도모

<성과목표별 재정투입 현황>



《전략목표 Ⅲ : 성과달성 현황》

(단위:개)

성과목표			관리과제		
구분	성과지표수	달성지표수	구분	성과지표수	달성지표수
Ⅲ-1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기반 마련	1	0	일반재정	1	0
Ⅲ-2 핵심 금융인프라 선진화로 금융발전 촉진	1	0	일반재정	3	3
			정보화	2	2

□ 전략목표 III : 성과달성 현황

부분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09년도	'10년도	'11년도
전략목표 III: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성과목표 III-1 :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기반 마련		①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11년GDP-'10년GDP)/ 10년GDP*100 ■ GDP는 금융보험업만	목표	-	신규	금융산업 성장률 연간 4%
				실적	-	-	1.5
				달성률(%)	-	-	38
일반 재정	금융업법 체계개편	① 합리적 금융규제개혁방안 마련	보고서 제출 건수	목표	신규	2	-
				실적	-	2	-
				달성률(%)	-	100	-
		① 2단계(기능별) 법령 제·개정	국회홈페이지에서 법안제출여부 확인	목표	-	변경	2
				실적	-	-	0
				달성률(%)	-	-	0
성과목표 III-2 : 핵심 금융인프라 선진화로 금융발전 촉진		① 금융 인프라 관련 제도개선 실적	('09년)제도개선 여부 ('10년)제도개선 건수	목표	제도개선	3	-
				실적	미완료	3	-
				달성률(%)	미달성	100	-
		① 정부 입법 계획 달성률(%)	국회제출 또는 통과법안/당초입법계획 *100	목표	-	변경	80
				실적	-	-	67.7
				달성률(%)	-	-	83
일반 재정	금융행정지 원 효율화	① 조직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률 (%)	('11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10년 역량강화 프로그램)*100	목표	신규	105	110
				실적	-	128	111
				달성률(%)	-	122	101
		② 연구보고서 활용률 (%)	(법령개정, 정책 반영 등 정책용역 활용 수 / 연구용역 발주 수) * 100	목표	신규	60	70
				실적	-	71.4	88.2
				달성률(%)	-	119	126
		③ 금융정책 인지도 향상률(%)	주요 금융정책별 평균 인지도	목표	신규	10	10
				실적	-	56.7	10.1
				달성률(%)	-	567	101
정보화	효율적 금융정책 및 감독 지원을	① 사용자 만족도(%)	$\Sigma(\text{항목별가중치} \times \text{항목별응답자}) / \text{전체응답자}$	목표	85	86	87
				실적	86.6	87.0	87.1

부문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09년도	'10년도	'11년도
	위한 정보화 지원	② 정보시스템 운영의 안정화(분)	IT시스템 장애시간 = Σ장애시간(분) / Σ단위시스템(수)	달성률(%)	101.8	101.1	100.1
				목표	-	추가	50
				실적	-	-	42
				달성률(%)	-	-	119

□ 전략목표 III : 재정집행 결과

(단위:억원, %)

성과목표체계			대상사업					집행률 (%)
과제코드	과제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예산사업명	사업구분	'11 예산	'11 결산	
전략목표III: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17	14	87.6
성과목표III- 1: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기반 마련						0	0	70.4
III-1- 일반재정(1)	금융업법 체계개편	일반회계	1100-1131-301	금융업법체계개편	세부 사업	(0)	(0)	70.4
성과목표III- 2:핵심 금융인프라 선진화로 금융발전 촉진						16	14	88.3
III-2- 일반재정(1)	금융행정지원 효율화	일반회계	7100-7135	금융행정지원일반	단위 사업	10	9	84.7
III-2- 정보화(1)	효율적 금융정책 및 감독 지원을 위한 정보화 지원	일반회계	7100-7132	정보화지원	단위 사업	5	5	95.7

(1) 주요내용

□ 성과목표 개요

-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금융산업이 위기 이후 新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장단기 발전전략 수립 이후 구체적인 정책화 방안 추진
 - 영업규제 개혁과 금융인프라의 개선을 지속추진하고 금융공기업 민영화를 지속추진
 - 합리적인 금융규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 산업 선진화 촉진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09년도	'10년도	'11년도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금융보험업 GDP 성장률	목표	-	신규	연간 4%
		실적	-	-	1.5%
		달성률(%)	-	-	38

(2) 성과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

1)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 기여도

-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한국형 헤지펀드를 도입하는 등 자본 시장 개혁을 통해 금융산업의 선진화 기틀 마련

- 금융소비자 보호법,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제도적 금융 인프라 정비를 적극 추진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 업권별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 개선방향 결정 → 법령 또는 규정 개정 절차 추진

□ 원인분석

- 유럽 재정위기,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등 부정적인 대외여건이 계속됨에 따라 금융보험업의 GDP 성장세가 둔화된 측면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상 국민계정 수치를 기준으로 성과지표 실적 작성

2) 향후 개선사항

- GDP 성장률은 외부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보다 성과 목표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대체하는 방안 검토

Ⅰ 금융업법 체계개편(Ⅲ-1-일반개정(1))

가. 주요내용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 시장여건과 현실적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기능별 법 통합 작업을 계속
 -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입법작업 추진
- 이와 동시에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금융위기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 G-20을 중심으로 진행중인 국제적 규제·감독 정책 논의흐름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모색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09년도	'10년도	'11년도
①합리적 금융규제개혁 방안마련 (건)	합리적규제와 관련된 용역·출장검토보고서 제출 건수	목표		2	-
		실적	신규	2	-
		달성률(%)		100	-
①2단계(기능별) 법령 제·개정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국회제출	목표	-	변경	2
		실적	-	-	0*
		달성률(%)	-	-	0*

* 금융소비자보호법 : '11년말 규제심사 완료, '12.2월 국회제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11년말 입법예고 중, '12.5월 법제처 심사 중

나. 성과분석

□ 성과목표 달성 기여도

- 합리적 금융규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능별 법 통합 작업의 일환인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회사 지배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입법작업 지속 추진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 '11년초 관계부처 협의 진행
- 저축은행 사태 이후 「금융감독 혁신 TF」 논의(5월~9월)
 -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강화방안, 금융회사 감사위원회 제도에 대한 논의 포함
- TF 논의결과를 반영한 법률안 관계부처 협의 및 금융위원회 보고(10~11월)
-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예고(11월), 규제심사 완료(12월)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12월)

□ 원인분석

- 당초 '11년 중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저축은행과 관련하여 「금융감독 혁신 TF」가 운영되고 관련내용*이 논의됨에 따라 TF 논의결과를 법안에 반영하는 추가 절차 필요
 - * 금감원내 소비자보호 기능·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원 설립을 검토(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회사 감사위원회 제도 논의(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이로 인해 '11년 중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못했으나 현재 법제처 심사 등 국회제출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중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 입법 절차 단계별 보도자료(입법예고, 국무회의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성과지표 달성을 확인

다. 향후 개선사항

□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국회제출

-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국회제출을 위한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

(3) 내부 및 외부지적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구 분		지 적 사 항	개 선 사 항 (조치결과 및 계획)
성과 목표	전년도 성과보고서	○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 해당사항 없음	
관리 과제 (Ⅲ-1-일반 재정(1))	전년도 성과보고서	○ 해당사항 없음	
	자율평가	○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 해당사항 없음	

(1) 주요내용

□ 성과목표 개요

- 금융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령 제개정,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핵심금융 인프라 구축을 도모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09년도	'10년도	'11년도
① 금융 인프라 관련 제도개선 실적	('09년)제도개선 여부 ('10년)제도개선 건수	목표	제도개선	3	-
		실적	미완료	3	-
		달성률(%)	미달성	100	-
① 정부입법계획 달성률	국회제출/입법계획*100	목표	-	신규	80
		실적	-	-	66.7
		달성률(%)	-	-	83

(2) 성과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

1)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 기여도

- G20-FSB 등 금융위기 이후 자본시장의 위험성을 제어하기 위한 국제적 금융규제논의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 이러한 국제적 금융규제논의의 국내적 수용 차원에서 우리 자본시장의 인프라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
- ⇒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 우리 금융투자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여 금융산업 경쟁력 기반 마련에 기여
- 또한 최근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음
 - 이에 정보기술부문 및 보안에 대한 금융회사의 관심도와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됨

⇒ 금융기관의 정보기술부문 보안역량 강화,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 및 대응능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하여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기타 대부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등의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 법안 입안과정에서 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와 감독 당국간에 T/F회의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사전에 일반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침

○ 정부입법 절차 과정에서는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관계 부처, 일반국민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 규개위·법제처 심사과정에서 금융 핵심인프라 구축을 통한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관련법령의 시급한 개정이 필요함을 심사 기관에 충분히 설명하여 심사 기관의 적극 협조를 얻어냄

□ 원인 분석

○ '11년 입법계획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6건의 입법 계획을 수립하고 80%의 목표치*를 설정하였음

* 정부입법계획 달성률 측정산식 : 국회제출/당초 입법계획

- 입법계획 6건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4건은 정상적으로 국회에 제출하였고,

- 나머지 「금융회사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등 2건은 총리실의 금융감독법 체계 개편 T/F회의 논의결과를 반영하여 추진하려 하였으나,

- 논의가 지연되어 동 법률안들의 연내 국회제출에 차질을 초래

○ '11년 입법계획 중 국회 미제출 법안들에 대해서는 금년도 입법 계획에 포함하여 입법추진 중에 있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 차관·국무회의 시스템,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을 통해 자본시장법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을 확인
- 당초 입법계획 대비 정부입법절차가 지연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관부서에 신속히 입법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등 입법진행절차를 수시 모니터링

2) 향후 개선사항

- 개별 입법계획 마련시 향후 예상되는 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입법예고, 법제처 제출 등 단계별 입법기한이 상당기간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해야 할 필요 있음

1 효율적 금융 및 감독정책 지원을 위한 정보화 지원(III-2-정보화(1))

가. 주요내용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 IT를 활용한 업무혁신 및 지속적인 정보화 추진으로 금융정책 및 감독역량을 강화하고 업무 성과 제고
- 정보시스템 개선·보완을 통해 정보시스템 운용의 효율성 증진 및 금융위 업무의 생산성 향상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
- 금융업 관련 인허가, 등록신고 등 금융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민원처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개선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09년도	'10년도	'11년도
사용자 만족도	$\Sigma(\text{항목별가중치} \times \text{항목별응답자}) / \text{전체응답자}$	목표	85	86	87
		실적	86.6	87.0	87.1
		달성률(%)	101.8	101.1	100.1
정보시스템 운영의 안정화	IT시스템 장애시간 = $\Sigma \text{장애시간(분)} / \Sigma \text{단위시스템(수)}$	목표	-	추가	50
		실적	-	-	42
		달성률(%)	-	-	119

* 단위시스템 : 업무포탈, 민원관리, 메신저, 정보보호공유, 전자회의, ITA, 금융민원

나. 성과분석

□ 성과목표 달성 기여도

- 지속적인 정보화 추진 및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행정업무 지원 강화
-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공공I-PIN 적용 및 공인인증서 고도화 구축 등 정보시스템 개선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개선
- 정보보호공유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강화 등 금융 인프라 선진화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 사용자 개선·불편·오류사항 등 요구사항을 수렴('11.1월)하여 자체 정보 시스템 개선을 적극 추진
- 민원담당자의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민원시스템 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
- 정보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용자 교육 실시 및 정보시스템 장애 최소화 노력 등을 통한 정보시스템 만족도 제고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 정보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및 발전 향 등 설문 조사 실시
 - 5급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1회 실시('11.12.29)
 - 총 설문대상 193명 중 103명(53.4%) 응답
 - 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정보시스템 장애 관리대장의 장애시간을 누적하여 장애발생시간 산출
 - '11.01.01 ~ 12.31 기간 중 총 5회 292분간 장애 발생
 - 지표 계측 대상은 업무포탈, 민원관리, 메신저, 정보보호공유, 전자회의, ITA, 금융민원 등 7개 시스템

다. 향후 개선사항

- 타 부처 등의 우수사례를 참고 및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정보시스템 개선을 통한 사용자 만족도 수준 제고 필요
- 정보시스템 개선 및 장애 대비 이중화 구성 등 정보시스템 확충을 통하여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기반 방안 마련 검토

② 금융행정지원 효율화(Ⅲ-2-일반재정(1))

가. 주요내용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 구성원의 직무수행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의 일체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직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실시
-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한 연구용역 수행
- 금융개혁 과제들에 대한 전방위적 홍보를 통해 대국민 이해를 제고하고, 소통과 공감을 강조하는 정책 흐름에 맞춰 쌍방이 소통하는 방식의 홍보 강화
 - 소셜 미디어(트위터, 블로그 등)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새로 등장하는 뉴미디어(스마트폰)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효과 제고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09년도	'10년도	'11년도
① 조직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률(%)	('11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10년 역량강화 프로그램)*100	목표	신규	105	110
		실적	-	128	111
		달성률(%)	-	122	101
② 연구보고서 활용률 (%)	(법령개정, 정책반영 등 정책용역 활용수 /연구 용역 발주수) * 100	목표	신규	60	70
		실적	-	71.4	88.2
		달성률(%)	-	119	126
③ 금융정책 인지도 향상률 (%)	주요 금융정책 별 평균인지도(설문조사)	목표	신규	10	10
		실적	-	56.7	10.1
		달성률(%)	-	567	101

나. 성과분석

□ 성과목표 달성 기여도

- 도서요약서비스,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 조직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기획·시행하여 금융위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 도모
- 주요정책 현안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 등을 지원
- SNS, 블로그, 홈페이지 등 온라인·뉴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정책 홍보효과 극대화 및 정책 대상자를 상대로 긍정적 여론 확산 유도
- 보도자료 배포 등 적극적인 언론 취재지원 및 현장방문을 통한 현장상황 점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관련 정책 추진력 제고
 - 현장과 밀접한 정보 수집 및 능동적 홍보를 통해 금융발전의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 내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기존 실시하던 프로그램 외에 조직역량 강화에 효과적인 신규 교육 프로그램* 발굴
 - * 도서요약 서비스, 직원 필요 도서 지원, 간부·출입기자 세미나 등
- 정책연구용역관리시스템(PRISM) 정비를 통해 용역이 완료된 연구과제의 활용도를 점검하고, 미활용 연구과제에 대한 활용을 독려
- 소셜 미디어(트위터, 블로그 등), 뉴미디어(스마트폰)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적극적인 취재지원을 통해 정책홍보 효과 제고

① 정책 블로그 및 금융정책알리미 운영

- 정책블로그(금상첨화) 및 Facebook에 금융정책 알리미*들이 작성한 기사를 게재**하여, 국민 눈높이 수준에 맞춘 정책 설명을 통해 이해편의성 제고

* 2011년 상반기(4기) 60명, 하반기(5기) 34명 활동

* 블로그 포스팅 수 356건, 방문자 수 201,260 명, 총 페이지뷰 318,685

② SNS 운영 확대

트위터	following 1,646, followers 4,076, tweets 1,578	www.twtkr.com/fsckorea
미투데이	친구 5,041	me2day.net/fsc_korea
페이스북	Like 1,578	facebook.com/fsckorea

③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정책홍보 강화

- e-뉴스레터·홍보동영상·정책자료 등으로 금융정책을 알기 쉽게 제공하고 서민금융 관련 정책홍보 자료를 중점적으로 표출

* e-뉴스레터 46회 배포

④ 「금융동향」 어플리케이션 개발 (안드로이드OS 용)

- 아이폰 기반으로 제공되던 ‘금융동향’ 어플리케이션을 안드로이드 용으로도 개발·배포하여 다양한 수요층에 대응
- * 시장동향, 금융뉴스, 금융용어 사전 등으로 구성, 금융위 트위터와 연계하여 쌍방향 소통 강화

⑤ 브리핑, 인터뷰, 보도자료 등 적극적인 취재 지원

* 브리핑·설명회 48건, 보도자료 339건, 현장점검 6건, 언론사 공동기획 13건 실시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 금융위원회 주관 자체 직장교육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공문 시행 기록으로부터 조직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률 실적치 도출

* 조직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률 : 111% = ('11년 10건) / ('10년 9건)

('10년 : 9건) 금융강좌(브라운백미팅), 주무관학습동아리, 소양교육, 스터디그룹, 금융 전문지식 외부교육 지원, 전화영어, 전직원 워크숍, 직급별 워크숍, 커뮤니케이션 역량교육
('11년 : 10건) 도서요약 서비스, 금융강좌(브라운백 미팅), 소양교육, 스터디그룹, 금융 전문지식 외부교육 지원, 전화영어, 직급별 워크숍, 커뮤니케이션 역량교육, 직원 필요 도서 지원, 간부·출입기자 세미나

-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를 정책연구용역관리시스템(PRISM)에 입력하고, 동 시스템의 통계보고서 자료의 최근 3개년 실적치를 활용

* PRISM 활용건수/활용율 : 45건, 88.2%

- 서민생활밀착 정책지원상품인 “희망홀씨대출”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전국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하여 실시

- 직접 방문조사, 표본 1200명

다. 향후 개선사항

□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 부족

- 현재 금융상황 및 금융제도와 정책 전반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고취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자료 생산·배포 필요성 대두
- 금융 이해도를 높이고 친근함을 느낄수 있도록 쉬운 자료 배포 필요
 - 일정 간격으로 홈페이지·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시의성 있는 자료를 알기 쉽게 제작하여 배포할 것

□ 홍보 성과지표 정량화 필요성

- SNS매체 이용자 수와 같이 정량화가 가능한 지표로 전환이 바람직

(3) 내부 및 외부지적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성과 목표	전년도 성과보고서	○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 해당사항 없음	
관리 과제 (Ⅲ-2- 정보화(1))	전년도 성과보고서	○ 정보시스템 장애에 대비하여 사전점검 및 성능개선을 위한 성과지표 추가	○ 11년 성과지표로 정보시스템 운영의 안정화 추가 - 측정방법 : 시스템 장애시간
	자율평가	○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 해당사항 없음	
관리 과제 (Ⅲ-2-일반 재정(1))	전년도 성과보고서	○ 홍보 성과지표 현실화 및 지표 지속성 문제 - 홍보성과의 지표를 정량 화가 가능한 성과지표로 수정함이 바람직	○ 12년 성과지표 개선 - 목표를 전국민 대상 금융정책 인지도 향상률에서 정량으로 수정
	자율평가	○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 조직역량강화 프로그램 성과지표 사업 평가를 위한 타당성 부족	○ 성과지표 변경 - 조직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률 → 주요 조직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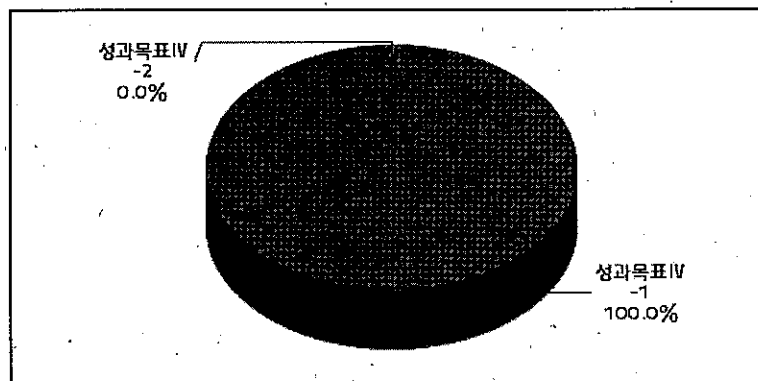
전략목표Ⅳ

서민·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주요내용

- ◇ 미소금융사업, 서민금융회사의 보증부 서민대출, 전환대출, 신용회복지원 등을 통해 금융소외계층 금융지원
 - 미소금융 지점 확대, 다양한 상품개발 등을 통해 미소금융을 활성화
 - 저신용·저소득 계층에 대한 보증부 서민대출을 통해 서민의 금융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고금리 부담을 완화
- ◇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교육 등 금융의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종합대책 수립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금융교육 추진기관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체계적 금융교육 실시

<성과목표별 재정투입 현황>



《전략목표 Ⅳ : 성과달성 현황》

(단위:개)

성과목표			관리 과제		
구분	성과지표수	달성지표수	구분	성과지표수	달성지표수
Ⅳ-1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2	2 (1)	일반재정	6	6 (2)

			정보화	2	2
IV-2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추진	1	0	일반재정	5	5 (3)

□ 전략목표 IV : 성과달성 현황

부문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09년도	'10년도	'11년도
전략목표 IV: 서민·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성과목표 IV-1 :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① 금융소외계층 지원인원 (단위:명)	마이크로크레딧, 신용회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한 인원 총계	목표	-	신규	132,000
				실적	-	-	237,184
				달성률(%)	-	-	180
		② 주택금융지원 등 수혜자 만족도 (%)	보증자리론, 우대보증자리론 등 금융지원 수혜자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점수	목표	-	신규	70
				실적	-	-	75
				달성률(%)	-	-	107
일반 재정	농어가목돈 마련 저축장려	① 기금출연실적 (억원)	기금출연액	목표	650	-	-
				실적	650	-	-
				달성률(%)	100	-	-
		① 예금계좌수 증대 (천좌)	실적자료	목표	변경	100	85
				실적	-	102	104
				달성률(%)	-	102	122
일반 재정	우대보증자리 론을 통한 무주택 서민 주택구입지원	① 모기지론 이차보전 지급실적 (억원)	공급실적	목표	신규	45.6	-
				실적	-	31.9	-
				달성률(%)	-	70	-
		① 모기지론이차보전 지급실적(%)	(지급실적/지급계획)* 100	목표	-	변경	80
				실적	-	-	95.5
				달성률(%)	-	-	119
		② 모기지론 이용자 만족도(점)	리카르도 5점 척도 방식 사용	목표	신규	70	70
				실적	-	61.5	75.5
				달성률(%)	-	88	108
		③ 우대 모기지론 공급건수(건수)	공급실적	목표	-	추가	1,958
				실적	-	-	7,573

부문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09년도	'10년도	'11년도
				달성률(%)	-	-	387
일반 재정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지원	① 주택보증공급(억원)	공급실적	목표	신규	80,000	87,000
				실적	-	114,903	206,700
				달성률(%)	-	143.6	238
		② 주택보증 '이용자 만족도(점)	항목별 리카르도· 척도 점수 합계	목표	신규	70	-
				실적	-	72.7	-
				달성률(%)	-	104	-
		② 보증자리론 이용자 만족도(점)	리카르도 5점 척도 방식 사용	목표	-	추가	70
				실적	-	-	74.1
				달성률(%)	-	-	106
정보화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운용 정보화	① 사용자 만족도 조사(점)	리카르도 5점 척도방식 사용	목표	-	신규	80
				실적	-	-	96.2
				달성률(%)	-	-	120
		② IT 시스템 운영의 안정화(분)	IT시스템 장애시간 = Σ장애시간(분) / Σ단위시스템(수)	목표	-	신규	35분
				실적	-	-	30
				달성률(%)	-	-	116
성과목표 IV- 2 :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추진		① 금융소비자보호를 획기적으로 제고	법령 등 제도 마련여부 확인, (국무회의 보고, 국회제출 실적 등)	목표	-	신규	법령 등 제도 마련
				실적	-	-	금융소비 자보호법 국회제출 추진(규제 심사 완료)
				달성률(%)	-	-	0
일반 재정	저축의 날 행사	① 저축의 날 행사 홍보실적 (회)	개최 여부	목표	개최		
				실적	개최		
				달성률(%)	100		
		① 저축의 날 행사 홍보실적(회)	중앙일간지 보도수	목표	변경	3	4
				실적	-	12	12
				달성률(%)	-	400	300
일반 재정	역모기지론을 통한 서민층 노후연금보증	① 주택연금 지원실적 (억원)	공급실적	목표	303	660	920
				실적	531	911	1,401

부 문	관 리 과 제	성 과 지 표	측 정 산 식 (또는 측정 방법)	목 표 대 비 달 성 률	'09년 도	'10년 도	'11년 도
				달성률(%)	175	138	152
		② 주택연금 이용자 만족도(점)	리카르도 5점 척도방식 사용	목표	신규	70	70
				실적	신규	90.5	89.9
				달성률(%)	신규	129	128
		③ 주택연금 공급 건수(건수)	공급실적	목표	-	추가	1,600
				실적	-	-	2,936
				달성률(%)	-	-	184
일 반 재 정	금 용 소 비 자 보 호	①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제출된 보고서	목표	-	신규	마련
				실적	-	-	마련
				달성률(%)	-	-	100

□ 전략목표 IV : 재정집행 결과

(단위:억원, %)

성과목표체계		대상사업						
과제 코드	과제명	회계구분	사업 코드	예산사업명	사업 구분	'11 예산	'11 결산	집행률 (%)
전략목표Ⅳ: 서민·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4,375	4,338	99.2
성과목표Ⅳ- 1: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4,369	4,336	99.2
Ⅳ-1- 일반재정(1)	농어가목돈 마련 저축장려	일반회계	1200-1234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장려기금출연	단위 사업	637	637	100.0
		농어가목 돈마련저 축장려기 금	2300-2331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장려	단위 사업	1,212	1,212	100.0
Ⅳ-1- 일반재정(2)	우대보금자리론을 통한 무주택 서민 주택구입지원	일반회계	1200-1232	모기지론이차보전	단위 사업	47	44	95.5
Ⅳ-1- 일반재정(3)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보증지원	주택금융 신용보증 기금	2600-2631	주신보운영(주신보 계정)	단위 사업	2,438	2,413	99.0
Ⅳ-1- 정보화(1)	주택금융신용보증기 금 운용 정보화	주택금융 신용보증 기금	3400-3476-202	기금운영정보화(정 보화)	세부 사업	(23)	(18)	79.4
		주택금융 신용보증 기금	3400-3476-202	기금운용정보화(정 보화)	세부 사업	(11)	(8)	77.4
성과목표Ⅳ- 2: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추진						5	2	42.3
Ⅳ-2- 일반재정(1)	저축의 날 행사	일반회계	1200-1231	금융서비스지원	단위 사업	0	0	89.8
Ⅳ-2- 일반재정(2)	역모기지론을 통한 서민층 노후연금 보증	주택금융 신용보증 기금	2600-2631	주연보운영(주연보 계정)	단위 사업	3	0	17.9
Ⅳ-2- 일반재정(3)	금융소비자 보호	일반회계	1100-1131-303	금융소비자보호	세부 사업	(1)	(1)	87.4

(1) 주요내용

□ 성과목표 개요

○ 미소금융의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미소금융 지점 확대, 다양한 상품개발 등을 통해 미소금융을 활성화
- 전문인력 양성 강화, 미소금융 지점 감독 효율화, 유관기관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 법적·제도적 인프라 개선

○ 서민금융회사의 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 저신용·저소득 계층에 대한 보증부 서민대출을 통해 서민의 금융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고금리 부담을 완화

* '10년 하반기부터 5년간 최대 10조원을 공급하되, 보증자원(2조원)은 서민금융회사와 정부가 1조원씩 출연

- 금리우대 보증자리론 및 주택금융신용보증공급을 통하여 서민 계층을 지원함으로써 계층 간의 차이를 해소하고 사회적 화합을 유도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09년도	'10년도	'11년도
① 금융소외계층 지원인원 (단위:명)	마이크로크레딧, 신용회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한 인원 총계	목표	-	신규	132,000
		실적	-	-	237,184
		달성률(%)	-	-	180
② 주택금융지원 등 수혜자 만족도	(우대보증자리론 만족도 + 보증자리론만족도) / 2	목표	-	신규	70
		실적	-	-	75
		달성률(%)	-	-	107

(2) 성과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

1)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 기여도

- 미소금융 사업, 서민금융회사의 보증부 서민대출, 전환대출, 신용회복 지원 등을 통해 금융소외 서민층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제도개선을 통하여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가. 서민우대금융 제도보완

○ 미소금융 활성화

- (대출지원) 각종 자영업 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미소금융 지점 설립을 통해 접근성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이동 버스를 통해 “찾아가는 미소금융”을 전개하여 수혜자를 적극 발굴
 - * '11년말 현재 세탁업중앙회, 미용사협회 등 27개 직능단체와 협조
 - * '10.10~'11.12, 전국 216개 전통시장 순회 상담
- (사후관리) 미소금융 수혜자가 자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미소금융 전문인력(RM, Relationship Manager) 양성

○ 햇살론의 안정적 운영

- (대상 확대) 실수요자 위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환자금을 공급
 - * 햇살론 지원대상 저소득 기준을 완화(연소득 2,000만원 이하→ 2,600만원 이하), 자영업자의 대출요건(소득 대비 채무 상환액비율기준 등) 완화('11.3~)
 - * 연 20%이상 고금리채무를 10%대 저금리 채무로 전환('11.9~)
- (건전성 제고) 서민금융회사 내규에 '햇살론 구속성예금(꺾기) 금지 기준'을 마련하여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서민의 피해 방지('11.3~)
- (보증시스템 구축) 서민층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특성을 반영한 종합신용평가지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증 및 대출심사에 활용('11.9~)

- * 최근 1년 이내 대출보유 총 건수, 최근 6개월내 5일 이상 10만원 이상 연체 경험, 총소득 대비 총부채 비율 등 11개 요소로 구성

나. 신용회복 지원제도 등 금융안전망 보강

○ 바뀐드림론 활성화('11.6~)

- (지원대상 확대)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인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바뀐드림론 지원
- (지원창구 확충) 바뀐드림론 지원 접수창구를 캠코 및 6개 은행에서 전국 16개 은행으로 확대(창구 약 5,400개 → 약 7,300개)
- (재활자금 지원) 바뀐드림론을 받은 후 1년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서 여타 고금리채무를 신규 차입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소액 재활자금(4%)을 지원

○ 신용회복 지원제도 보강

- (사전채무조정제도 연장시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사전채무조정(Pre-workout) 제도를 '13.4.12까지 2년 연장
<월별 사전채무조정 접수건수 추이>

(단위 : 명)

구분	'10.10월	11월	12월	'11.1월	2월	3월
신청자수	721	866	961	951	810	1,073

- (상환기간 등 연장) 신용회복 지원자의 자활의지 및 소득수준에 따라 채무 상환기간 및 상환유예기간을 연장하여 상환부담을 완화('11.6~)
 - * 상환기간 최대 2년 연장(8년→10년), 상환유예 최장 2년 부여, 성실상환자 최대 15% 추가감면 인센티브 제공 등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보강
- (중소·벤처기업인 재기 지원) 실패한 기업의 연대보증채무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 기업인이 취업을 통해 재기하려는 경우에도 신용회복을 지원('11.2~)
 - * 그간 법인채무 연대보증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 경우에는 벤처·중소기업인이 재창업하는 경우에만 신용회복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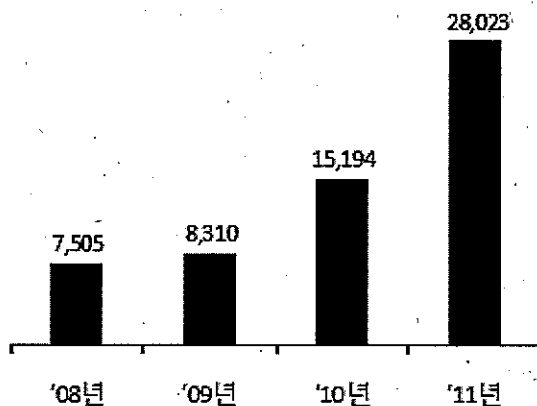
-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의 경우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출한도를 증액함으로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 주택금융신용보증의 경우, 소외계층에 대한 은행재원 전세자금보증 대상을 확대하고, 특례보증 신규 지원을 통해 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

□ 원인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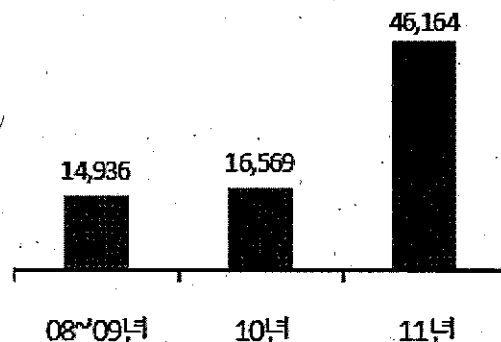
- 미소금융 및 전환대출 지원실적이 크게 증가하여 '11년도 목표치를 초과 달성(달성률 : 179.9%)
 - 미소금융은 총 497개의 대출채널을 통해 적극적인 수요자 발굴 및 지원으로 실적이 크게 증가
 - * 미소지점 145, 기존복지사업자 15, 전통시장 상인회 337
 - 전환대출은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창구 증가로 실적이 크게 증가

< 미소금융 대출추이(단위: 명) >



< 전환대출 대출추이(단위: 명) >

* '08.12월 시행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 미소금융중앙재단, 신용회복기금 및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미소금융 지원실적, 전환대출 및 채무조정 지원 인원 집계
-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및 주택금융신용보증 : 2011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구 분	주요 내용
조사기간	□ '11.9월 ~ 11월
조사기관	□ NICE 알앤씨
조사대상	□ 자체고객만족도 : 보금자리론, 주택개인보증, 주택사업자보증 □ 위탁금융기관 직원 만족도 : 위탁금융기관 직원
조사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Telephone Survey - 1,526명을 대상으로 실시 * 1,526명 중 보금자리론 고객 620명, 위탁금융기관직원 245명

2) 향후 개선사항

□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내실화

가. 서민우대금융 활성화

○ 미소금융은 신상품을 개발하고 지원대상도 확대

- 미소금융 지역재단에서도 신용등급이 양호한 저소득층(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대출이 가능하도록 개선

* 현재는 기업·은행재단에서만 '특성화 상품'을 통해 대출

- 2013년까지 전국의 주요 전통시장(900여개)*에 미소금융 지원채널을 구축하여 저리의 미소금융 자금을 지원

* 전통시장 미소금융 지원채널(개) : ('11)300 → ('12)600 → ('13)900

- 창업을 통한 자활의지가 확고한 저소득 서민가계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미소금융을 적극 지원

* 청년층 이용이 부진(20대 대출자 비율: 6.7%)한 미소금융에 청년 창업지원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여 경영컨설팅까지 연계 지원

○ 햇살론은 대환대출 및 자영업자 대출 활성화

- 대환대출에 대한 보증지원 비율을 확대(85% → 95%)

- 중기청이 인정한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득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하는 등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햇살론 지원요건을 완화

나. 신용회복 지원제도 등 금융안전망 보강

○ 신용회복기금의 바뀌드림론 지원대상 확대

- * (현행) 3천만원을 한도로 1회에 한하여 전환대출 허용 → (개선) 바뀌드림론을 지원 받은 후 3년이 경과하고 상환을 완료한 자에 대하여 총 3,000만원 범위내에서 추가 전환대출 허용

○ 신용회복 지원 보강

- 1년이상 성실상환자에 대한 신용회복기관(신용회복위원회·신용회복기금)의 저리 긴급 생계자금 지원 확대

* ('10년) 700억원 → ('11년) 약 900억원 → ('12년) 1,000억원

- 신용회복 지원시 신청비 및 채무재조정 면제대상을 확대

- * 긴급상황 발생을 이유로 하는 채무재조정 비용을 1회에 한하여 면제, 취약계층에 대해 신용회복 신청비(5만원) 면제

1 농어가목돈 마련 저축 장려(IV-1-일반재정(1))

가. 주요내용

☐ 관리과제 개요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에 대하여 저축기관(단위 농·수협)이 지급하는 기본이자(연 5.5%)에 추가하여 별도의 법정장려금(연1.5%~9.6%) 지급을 위한 재원조달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09년도	'10년도	'11년도
①기금출연실적(억원)	기금출연액	목표	650	-	-
		실적	650	-	-
		달성률(%)	100	-	-
①예금계좌수 증대(천좌)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장려기금 결산보고서	목표	변경	100	85
		실적	-	102	104
		달성률(%)	-	102	122

나. 성과분석

☐ 성과목표 달성 기여도

- 가입대상 농어민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을 통한 저소득 농어민의 안정적 생활기반 마련에 기여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 저축가입대상인 농어민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을 적극유도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결산보고서, 농·수협 통계현황을 제출 받아 성과지표 달성률 확인

다. 향후 개선사항

☐ 해당사항 없음

② 우대보금자리론을 통한 무주택 서민 주택구입지원(IV-1-일반재정(2))

가. 주요내용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 정부 이차보전을 통하여 모기지론 금리를 인하(0.5~1.0%p)함으로써 저소득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 지원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09년도	'10년도	'11년도
① 모기지론 이차보전 지급실적 (억원)	공급실적	목표	신규	45.6	-
		실적	-	31.9	-
		달성률(%)	-	70	-
① 모기지론이차보전 지급실적(%)	(지급실적/지급계획)*100	목표	-	변경	80
		실적	-	-	95.5
		달성률(%)	-	-	119
② 모기지론 이용자 만족도(점)	리카르도 5점 척도방식 사용	목표	신규	70	70
		실적	-	61.5	75.5
		달성률(%)	-	88	108
③ 우대 모기지론 공급건수(건수)	공급실적	목표	-	추가	1,958
		실적	-	-	7,573
		달성률(%)	-	-	387

* 지급계획 47억원 대비 지급실적 44.9억원으로 95.5% 달성

나. 성과분석

□ 성과목표 달성 기여도

- 정부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저소득,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주택시장 안정 도모

- '11년 총 7,573가구에 5,110억원의 우대보금자리론 공급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05.8.31)에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무주택 서민을 위한 우대보금자리론 상품개발
- '05.10월 ~ '06.10월 한시적 공급 후 '07.8월 공급 재개
- 출시 이후 '11년 말까지 총 17,326가구에 10,498억원의 우대보금자리론 공급

<참고 :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공급현황>

	'05	'06	'07	'08	'09	'10	'11	계
공급건수	239	1,379	928	2,794	1,956	2,457	7,573	17,326
공급액(억원)	118	686	506	1,612	1,073	1,393	5,110	10,498
이차보전액(억원)		5.5	8.4	18.9	27.1	31.9	44.9	136.7

- 대출조건 개선을 통한 지원대상 확대 및 대출한도 상향조정('11.1월)
- 우대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을 완화(연소득 20백만원 이하→25백만원 이하)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출한도 증액(1억→1.5억)

□ 원인분석

- 우대보금자리론 공급건수가 목표를 초과달성한 이유는 u-보금자리론 출시를 통한 금리경쟁력 확보('10.6월), 대출조건 개선을 통한 지원대상 확대 및 대출한도 상향조정('11.1월) 등 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 데 기인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 (모기지론 이차보전 지급실적 및 우대보금자리론 공급건수) 주택금융공사 결산보고서, 월보, 통계자료 등

○ (모기지론 이용자 만족도) 2011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구 분	주요 내용
조사목적	□ 신뢰성 있는 고객서비스 품질 측정 및 결과 피드백을 통한 대고객 서비스 품질과 고객만족수준 향상
조사기관	□ NICE 알앤씨
조사대상	□ 자체고객만족도 : 보금자리론, 주택개인보증, 주택사업자보증 □ 위탁금융기관 직원 만족도 : 위탁금융기관 직원
조사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Telephone Survey - '11.9월 ~ 11월 총 1,526명을 대상으로 실시 * 1,526명 중 보금자리론 고객 620명, 위탁금융기관직원 245명

다. 향후 개선사항

□ 대출조건 개선을 통한 지원대상 확대('12.1.16일부터 시행)

○ 우대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을 완화(연소득 25백만원 이하→45백만원 이하)

<참고. 우대보금자리론 상품개요>

구 분	우 대 형	우 대 형 II
부부합산 연소득	25백만원 이하	25백만원 초과~45백만원 이하
이차보전	1.0~0.5%p	0.4%p
대출조건	주택규모(85㎡ 이하), 주택가격(3억원 이하) 대출한도(1억원, 다자녀가구 1.5억원) 등	

③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보증 지원(IV-1-일반재정(3))

가. 주요내용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 주택금융신용보증을 통한 주택금융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09년도	'10년도	'11년도
①주택보증공급(억원)	공급실적	목표	신규	80,000	87,000
		실적	-	114,903	206,700
		달성률(%)	-	143.6	238
②주택보증 이용자 만족도(점)	항목별 리카르도 척도 점수 합계	목표	신규	70	-
		실적	-	72.7	-
		달성률(%)	-	104	-
②보증자리론이용자만족도(점)	리카르도 5점 척도 방식 사용	목표	-	신규	70
		실적	-	-	74.1
		달성률(%)	-	-	106

나. 성과분석

□ 성과목표 달성 기여도

- 고객중심의 보증운용 추진체계 확립
- 시장 친화적 보증신상품 개발로 주택금융시장에서 공적 기능강화에 기여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
 - 국민주택기금 및 공사 보증대상에서 제외되어 제도권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하던 소외계층에 대한 은행채원 전세자금보증대상 확대('11.1월) 및 취급은행 확대('11.7월)
 - 국민주택기금 만기대환 대출자, 신용회복지원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전세자금보증 취급요건 완화 등 특례조치 확대('11.1월)

- 은행재원 전세보증의 세대주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보증대상자 범위 확대('11.7월)
-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전세자금보증 지원 확대
 - LH공사 등이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10년 이상 장기로 공급하는 국민 임대 세입자에 대한 특례보증 신규 지원('11.4월)
 - 재개발·재건축 단지 이주 세입자에 대한 특례보증 신규 지원('11.4월)
- 시장환경에 적시 대응한 산상품 출시
 - 지차체협약 주택개량자금 특례보증 및 인터넷 전용 전세자금보증 도입('11.10~11월)
-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의 주거안정과 비용부담 완화를 적극 추진
 - 저소득자, 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에 대한 기준보증료율 인하('11.10월)
 - 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연체보증료 및 추가보증료 감면('10.12~'11.3월)

* 약 3개월 간 총 2만 4천여명에게 1억 5천만원의 보증료를 감면

□ 원인분석

- 고객중심 보증운용체제 확립을 통하여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자금 등 개인보증을 중점 지원하여 공급목표 초과달성
- 보증한도 확대, 취급요건 완화 및 취급절차 합리화 등 제도개선과 시장환경 및 정부정책에 대한 우대보증 시행으로 공급목표 초과달성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 주택보증 공급실적 자료수집 방법
 - 주택금융공사 결산보고서, 주택금융월보, 통계자료 등
- 주택보증 이용자 만족도 자료수집 방법
 - 2011년도 상시 고객만족도 조사

구 분	주요 내용
조사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고객
표본규모	총 1,526명 - 보증자리론 620명, 개인보증 622명, 사업자보증 39명, 위탁금융기관 245명
조사기관	NICE 알앤씨
조사기간	2011년 9월 ~ 11월
조사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Telephone Survey

다. 향후 개선사항

□ 고객중심의 보증상품 재설계 및 보증대상 추가 확대

- 월세가구 지원을 위한 월세자금보증 등 신상품 개발 검토
- 보증요건 추가완화를 통한 보증대상 확대

□ 주택공급자보증 신상품 개발

- 사업자보증 취급대상(관리형 개발신탁) 확대 추진

④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운용 정보화(IV-1-정보화(1))

가. 주요내용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 주택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정보화 사업 추진으로 업무 생산성 향상 및 고객 만족도 제고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09년도	'10년도	'11년도
①사용자 만족도 조사(점)	리카르도 5점 척도 방식 사용	목표	-	신규	80
		실적	-	-	96.2
		달성률(%)	-	-	120
②IT시스템 운영의 안정화(분)	IT시스템 장애시간 = $\frac{\sum \text{장애시간(분)}}{\sum \text{단위시스템(수)}}$	목표	-	신규	35
		실적	-	-	30
		달성률(%)	-	-	116

나. 성과분석

□ 성과목표 달성 기여도

- 사용자 중심의 IT시스템 개선 지원을 통해 성과목표 달성에 기여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 HINET 업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지속적인 개선
 - 주요업무 시스템 개선 현황
 - 독거노인 행복돌봄 서비스 전산 개발('11.5월)
 - 사업자보증 간이 조사심사서 전산 개발('11.7월)
 - 전자소송 전자지급명령 인지액 인하 전산 개발('11.7월)
 - 다주택보유 여부 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11.8월)
 - 개인보증 BSS(행동평점모형) 전산 개발('11.8월)

○ 업무시스템의 성능 개선 및 최신화 노력

- 시스템 소프트웨어(WAS) 업그레이드 추진('11.6월~10월)
- HINET 업무시스템 운영 주축이 되는 중요 소프트웨어의 최신화 작업
- 공사에서 운영중인 15대의 서버에 설치된 WAS 교체 후 모든 업무 프로그램 재정비

○ IT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체계 유지 노력

- 24시간 365일 전산업무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인력운영
- 유지보수 협력업체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 사용자 만족도 조사

- 정보시스템 활용성, 편의성, 즉시성 등 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구 분	주요 내용
조사대상	전 임직원
조사기간	2011.01.01 ~ 2011.12.31
조사방법	IT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품질에 대한 5점 척도 평가

○ IT시스템 운영의 안정화

- 정보시스템 로그기록, 운영일지 등

다. 향후 개선사항

□ 안정적 시스템 운영 및 신속한 IT서비스 지원

- 노후화 장비 교체, 성능 진단을 통한 개선
-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고객 수요 및 정보 활용도 분석
- 체계적인 IT전문 역량 강화

□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IT 보안 전문 역량 확보

(3) 내부 및 외부지적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성과 목표	전년도 성과보고서	○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p><미소금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신용자 및 영세상인 등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미소금융 대출조건 등을 개선할 것 <p><햇살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소금융 지역지점의 연체율이 높아져 가는 것과 관련하여 대손인정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 ○ 햇살론과 관련한 분담비율 및 자기책임부담금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소금융 지역재단에서도 신용등급이 양호한 저소득층(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대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는 기업·은행재단에서만 '특성화 상품'을 통해 대출 ○ 2013년까지 전국의 주요 전통시장(900여개)*에 미소금융 지원채널을 구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시장 미소금융 지원채널(개) : ('11)300 → ('12)600 → ('13)900 ○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회 의결을 통해 지역지점의 회수불능 채권에 대해서는 상각 처리할 계획 ○ 햇살론 대환대출에 대해 보증비율 상향조정 추진(85%→95%)
관리 과제 (IV-1- 일반 재정(1))	전년도 성과보고서	○ 해당사항 없음	
	자율평가	○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 해당사항 없음	
관리 과제 (IV-1-	전년도 성과보고서	○ 대출조건 개선을 통한 지원대상 확대 및 대출한도 상향조정	○ 대출조건 개선을 통한 지원대상 확대 및 대출한도 상향조정('11.1월)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일반 재정(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대보증자리론 소득요건을 완화(연소득 20백만원 이하→25백만원 이하)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출한도 증액(1억→1.5억)
	자율평가	○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년 국정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금리우대 보증자리론의 연소득 기준을 완화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금리우대 신상품 출시 - 연소득 25백만원 초과 45백만원 이하인 무주택가구에 대해 정부 이차보전을 통해 금리를 0.4%p 인하한 우대형Ⅱ 상품 출시('12.1.16일) ※ 시가 3억원, 85㎡ 이하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원(다자녀 1.5억원) 지원 -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민층 도시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
관리 과제 (IV-1- 일반 재정(3))	전년도 성과보고서	○ 해당사항 없음	
	자율평가	○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 해당사항 없음	
관리 과제 (IV-1- 정보화 (1))	전년도 성과보고서	○ 해당사항 없음	
	자율평가	○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 해당사항 없음	

(1) 주요내용

□ 성과목표 개요

-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종합대책 수립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금융교육 강화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추진
 - 관련법에 산재한 「판매규제 - 분쟁조정 - 금융교육」 등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단일법에 담아 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금융교육 추진 기관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체계적 금융교육 추진
-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주택연금을 제공하고 역모기지론을 통해 서민층 노후연금 보충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09년도	'10년도	'11년도
금융소비자보호를 획기적으로 제고	법령 등 제도 마련 여부 확인	목표	-	신규	법령등 제도시행
		실적	-	-	금융소비자보호법 국회제출 추진 (규제심사 완료)
		달성률(%)	-	-	0

* '12.2.2 국회 제출

(2) 성과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

1)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 기여도

-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면 불완전 판매규제 및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 등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종합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 법제정 T/F회의('10.2월), 공청회('10.6월) 등을 거쳐 마련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안 초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11.3월)
 - 공정위, 법무부 등 관계부처 의견 및 감사원 감사의견을 금융소비자 보호법안에 반영
- 총리실 「금융감독혁신 T/F」('11.5월~9월) 논의결과를 반영한 최종안('11.11월 금융위 보고)에 대해 추가적으로 관계부처 협의
- '11.12월 규제심사 완료
- ※ '12.1월 법제처 심사 완료하고 '12.2.2 국회 제출

□ 원인분석

- 총리실 「금융감독혁신 T/F」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함에 따라 추진일정 지연
- * 금감원내 소비자보호 기능·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원 설립을 검토('11.9월 총리실 T/F 금융감독혁신방안 발표)
-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여러 제도를 포괄하는 단일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계부처 및 업계의 의견수렴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 입법 절차 단계별 보도자료(입법예고, 국무회의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성과지표 달성을 확인

2) 향후 개선사항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및 시행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할 필요

① 저축의 날 행사(IV-2-일반재정(1))

가. 주요내용

☐ 관리과제 개요

- 저축의 날 행사 및 저축홍보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전한 저축의식을 고양하고 국민의 저축률을 향상시켜 국가의 산업자금 및 노후자금 마련에 기여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09년도	'10년도	'11년도
①저축의 날 행사 홍보실적(회)	개최 여부	목표	개최	-	-
		실적	개최	-	-
		달성률(%)	100	-	-
①저축의 날 행사 홍보실적(회)	중앙일간지 보도수	목표	변경	3	4
		실적	-	12	12
		달성률(%)	-	400	300

나. 성과분석

☐ 성과목표 달성 기여도

- 저축의 날 행사 개최 및 저축홍보를 통하여 사회 안전망으로서 저축의 중요성 인식 확대에 기여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 저축유공자(훈포장 및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등) 포상을 통한 저축 미담 전파와 어린이 저축홍보 책자 발간 등을 통해 저축에 대한 관심 및 저변확대

☐ 원인분석

- 훈장포상자, 연예인 표창자 등의 선정을 잘하여 국민에게 귀감을 주는 한편, 최근 국민저축률이 하락하는 등 저축률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어 저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고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 행사 익일 신문스크랩자료 기준으로 성과지표 달성률 확인

다. 향후 개선사항

- ☐ 저축의 날 행사 및 홍보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건전한 저축의식 고양

② 역모기지론을 통한 서민층 노후연금 보증(IV-2-일반재정(2))

가. 주요내용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고령자의 주거 안정 및 노후소득 보장을 달성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09년도	'10년도	'11년도
①주택연금 지원실적(억원)	공급실적	목표	303	660	920
		실적	531	911	1,401
		달성률(%)	175	138	152
②주택연금 이용자 만족도(점)	리카르도 5점 척도 방식 사용	목표	신규	70	70
		실적	-	90.5	89.9
		달성률(%)	-	129	128
③주택연금 공급건수(건수)	공급실적	목표	-	추가	1,600
		실적	-	-	2,936
		달성률(%)	-	-	184

나. 성과분석

□ 성과목표 달성 기여도

- 외부환경 및 수요자 니즈 분석을 통해 주택연금제도 활성화 도모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 노인 금융교육 프로그램 운영('11.2~12월)
- 고령자 특성을 고려하여 가입자 권리를 강화하고 고객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약정 철회제도' 신설('11.3월)
- 고령자 편의를 위한 독거노인 행복돌봄 서비스* 시행('11.6월)
 - * 정기적 말벗 서비스 지원 및 고객의 소리 모니터링
- 재산세 직권감면 서비스 시행('11.6월)

- 가입시 '가족반대'에 부딪히는 고령층 현실에 부합한 특화서비스로 가족공감 프로그램 운영(연중)
- 거동, 공개, 개인 상담을 기피하는 고령자 특성을 반영한 찾아가는 상담 프로그램 운영(연중)

□ 원인분석

- 고령자 특화서비스 운영으로 고객본인 및 고객가족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어 주택연금 인지도 제고에 따라 공급목표 초과달성
- 기가입고객에 대한 서비스 강화로 주택연금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노후생활 정착화에 이바지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 주택연금 지원실적 및 공급건수 자료수집 방법
 - 주택금융공사 결산보고서, 주택금융월보, 통계자료 등
- 주택연금 이용자 만족도 자료수집 방법
 - 2011년도 공공기관고객만족도(PCSI) 조사 결과

구 분	주요 내용
주 관	기획재정부 (조사설계 : 한국생산성본부, 주관사업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대상기관	80개 준정부기관 (연·기금운용(1) : 6개)
조사대상	직접 서비스 고객* 245개 표본 (총 2,658개 모집단) * 주택사업자(도시형생활주택보증 포함) 및 주택연금보증 이용고객
조사방법	일대일 방문조사
실사조사	'11.10.21 ~ 11.30

다. 향후 개선사항

□ 가입요건 개선으로 가망고객 범위 확대

- 주택연금 가입제한 요건 중 1가구 1주택 제한요건 완화 등 지속적인 수요기반 확대를 위한 가입요건의 추가적인 완화 필요
-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필요

③ 금융소비자 보호(IV-2-일반재정(3))

□ 관리과제 주요내용

- 금융소비자들이 정보부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금융교육시스템을 확립할 필요
- 금융교육 정책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조정·지원 등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교육협의회」를 운영
- 국민들의 금융능력 및 금융이해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소비자 편에선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금융교육 중장기비전」 수립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09년도	'10년도	'11년도
①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보고서 제출	목표	-	신규	마련
		실적	-	-	마련
		달성률(%)	-	-	100

나. 성과분석

□ 성과목표 달성 기여도

- 우리 국민의 금융능력 및 이해도 현황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금융교육 중장기 비전 수립,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 등에 반영
- 금융소비자편에선 「금융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금융소비자에게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교재 개발
- 금융교육 중장기 비전 마련으로 정부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금융교육 실시 기반을 마련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 정책연구기관의 용역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관련 전문가의 자문 및 금융교육 단체가 참여하는 금융교육협의회에서 논의(3회개최)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 금융능력 및 이해도조사는 지역, 연령, 소득수준, 직업 및 교육수준 등을 고려하여 1,200가구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 실시
- 금융교육 표준 콘텐츠 및 금융교육 중장기 비전은 관련 전문가의 자문 및 금융교육협의회에서 심의

다. 향후 개선사항

- 금융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금융상담 등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제고

(3) 내부 및 외부지적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성과 목표	전년도 성과보고서	○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 해당사항 없음	
관리 과제 (IV-2- 일반 재정(1))	전년도 성과보고서	○ 해당사항 없음	
	자율평가	○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 해당사항 없음	
관리 과제 (IV-2- 일반 재정(2))	전년도 성과보고서	○ 해당사항 없음	
	자율평가	○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년 국정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주택연금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를 통한 홍보강화 및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와 공식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행정조직과 연계한 주택연금 제도 홍보를 추진하여 지방활성화를 도모 - 지자체와의 교류협력 강화 및 MOU 등 추진 - 지방 노인행사 및 이벤트 참여를 확대 ○ 지방수요를 확대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 추진 및 취급금융기관 확대로 지방활성화 유도 - 지방 거주자의 특성을 고려한 수시인출금 비율확대 등 - 지방 고령층 편의제고를 위한 취급금융기관 확대(제주은행, 수협 등)
관리 과제 (IV-2- 일반 재정(3))	전년도 성과보고서	○ 해당사항 없음	
	자율평가	○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교육에 대한 중장기 비전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하며, 금융교육협의회 심의를 거쳐 금융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할 것('11년 국정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용역과 금융교육협의회 심의를 통해 금융교육 중장기 비전을 마련하였고 향후 단기·중기·장기과제로 구분하여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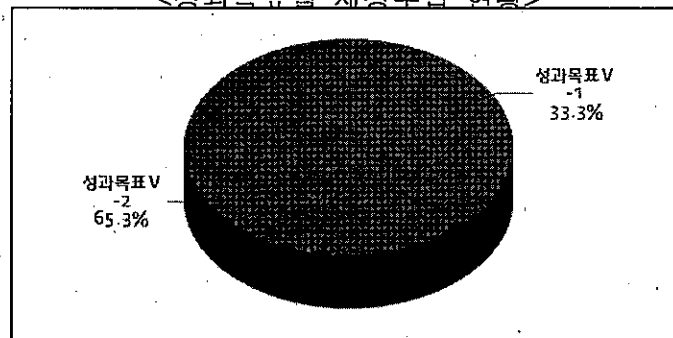
전략목표 V

한국금융의 글로벌 위상제고

주요내용

- ◇ 한국금융의 국제화·선진화를 지속 추진하여 국제경쟁력 강화
 - G20금융당국들과 적극적으로 MOU를 체결하는 한편, 한국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FTA 금융협상 지속 추진
 - 금융중심지를 육성하여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
- ◇ 우리나라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금지제도를 국제수준으로 제고
 -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시행령·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 등을 통해 우리나라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금지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춰 선진화

<성과목표별 재정투입 현황>



《전략목표 V : 성과달성 현황》

(단위:개)

성과목표			관리과제		
구분	성과지표수	달성지표수	구분	성과지표수	달성지표수
V-1 금융 글로벌화의 지속적 추진으로 국제 경쟁력 강화	2	2 (1)	일반재정	4	3 (1)
V-2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선진화	1	1	일반재정	1	1
			정보화	2	2

□ 전략목표 V : 성과달성 현황

부문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09년도	'10년도	'11년도
전략목표 V : 한국금융의 글로벌 위상 제고							
성과목표 V-1 : 금융 글로벌화의 지속적 추진으로 국제 경쟁력 강화		① 양자·다자간 금융협상을 통한 국제협력강화(건)	FTA 협정문 및 양허안 작성 실적,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관련 애로조사 실적	목표	신규	10	-
				실적	-	12	-
				달성률(%)	-	120	-
		① 양자·다자간 금융협상을 통한 국제협력강화(건)	협상 참석수 및 협정문/양허안 작성 횟수, 정보 및 양허 개선 요구사항 교환 횟수	목표	-	신규	5
				실적	-	-	5
				달성률(%)	-	-	100
		② 금융클러스터 조기정착유도(회)	금융중심지 조성 분과위원회 개최 등 실무회의 개최실적	목표	신규	8	-
				실적	-	10	-
				달성률(%)	-	125	-
		② 국내외 금융기관 진출입 지원률(%)	금융기관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한 유효한 처리 건수 비율	목표	-	신규	75
				실적	-	-	100
				달성률(%)	-	-	133
일반 재정	금융중심지 조성과발전	① 금융중심지 추진위 개최(회)	회의개최 여부	목표	2	2	-
				실적	3	5	-
				달성률(%)	150	250	-
		① 금융중심지추진위 정책추진건수(건수)	금융중심지추진위 심의안 건수	목표	-	변경	3
				실적	-	-	1
				달성률(%)	-	-	33
		② 외국금융회사 애로사항 해소(%)	각종 인허가 및 영업 관련 애로사항 처리	목표	개선	-	-
				실적	완료	-	-
				달성률(%)	100	-	-
		② 외국금융회사 애로사항 해소(%)	조치 및 답변제공건수/ 접수된 애로 및 건의사항) * 100	목표	변경	70	-
				실적	-	100	-
				달성률(%)	-	143	-
		② 국내외 금융기관의 금융중심지 지원 센터 활용 건수(건)	금융중심지 지원센터의 국내외 금융기관 지원 실적	목표	-	변경	80
				실적	-	-	234

부문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09년도	'10년도	'11년도	
		③ 녹색 금융 특화 MBA 수강생 수(명)	녹색금융특화 MBA 교육인원	달성률(%)	-	-	292	
				목표	-	추가	60	
				실적	-	-	63	
				달성률(%)	-	-	105	
일반 재정	금융관련 국제협력	① 우리 금융회사의 상대국 진출 지원 실적	금융협상 및 MOU 체결 실적	목표	개선	-	-	
				실적	완료	-	-	
				달성률(%)	100	-	-	
		①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우리 금융 산업의 선진화(회)	면담, 협상, 정보교류, 회의참석 및 MOU 체결 횟수	목표	변경	5	-	
				실적	-	19	-	
				달성률(%)	-	380	-	
		① 국제 협상 횟수 (회)	협상 참석수 및 협정문양허안 작성 횟수, 정보 및 양허 개선 요구사항 교환 횟수	목표	-	변경	5	
				실적	-	-	5	
				달성률(%)	-	-	100	
성과목표 V-2 :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선진화			① 심사분석 제공률 (%)	(제공건수 / 심사분석 건수) * 100	목표	50	55	-
					실적	59.1	62.4	-
					달성률(%)	118	113	-
	① 자 금 세 탁 방 지 시스템 선진화 달성률(%)		14개 중점 FATF 권고사항에 대한 7개국* 평균 대비 달성도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목표	-	변경	84	
				실적	-	-	85.7	
				달성률(%)	-	-	102	
	② 심사분석 건수 증가율(%)		('10년중 심사분석 증가건수/ '09년중 심사분석 건수)*100	목표	12	13	-	
				실적	16	46	-	
				달성률(%)	133	354	-	
일반 재정	APG유형론 실무회의 개최		① 실무회의 참석자수 (명)	회의기간 중 등록된 참가자수	목표	-	신규	225
					실적	-	-	278
					달성률(%)	-	-	124
정보화	FIU 전산망 구축운영	① 심사분석 제공률 (%)	(제공건수 / 심사분석 건수) * 100	목표	50	55		
				실적	59.1	62.4		
				달성률(%)	118	113		
		① 자금세탁협의도 적중률(배)	고위험STR의법집행 기관제공비율=(Σ고위험	목표	-	변경	4.24	
실적	-			-	4.72			

부문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09년도	'10년도	'11년도
			제공건/Σ전체제공건/ (Σ고위험불제공건/ Σ전체불제공건)	달성률(%)	-	-	111
		② 심사분석 건수 증가율(%)	(10년 중 심사분석 증가건수/09년 중 심사분석 건수)*100	목표	12	13	-
				실적	16	46	-
				달성률(%)	133	354	-
		② FIU 정보화시스템 서비스 수준 달성도(%)	5개 운용지표 목표 치합의 평균	목표	-	변경	80
				실적	-	-	85.9
				달성률(%)	-	-	107

□ 전략목표 V : 재정집행 결과

(단위:억원, %)

성과목표체계			대상사업					
과제 코드	과제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예산사업명	사업구분	'11 예산	'11 결산	집행률 (%)
전략목표 V : 한국금융의 글로벌 위상 제고						76	75	97.5
성과목표 V-1: 금융 글로벌화의 지속적 추진으로 국제 경쟁력 강화						26	25	96.5
V-1- 일반재정(1)	금융중심지 조성과발전	일반회계	1100-1135	금융중심지조성과발 전	단위 사업	20	20	97.8
V-1- 일반재정(2)	금융관련 국제협력	일반회계	1100-1131-302	금융관련 국제협력	세부 사업	(5)	(5)	91.8
성과목표 V-2: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선진화						50	49	98.0
V-2- 일반재정(1)	APG유형론 실무회의 개최	일반회계	1300-1331-302	APG유형론 실무회의	세부 사업	(4)	(3)	92.5
V-2- 정보화(1)	FIU 전산망 구축운영	일반회계	1300-1331-501	FIU전산망구축운영(정보화)	세부 사업	(46)	(45)	98.6

(1) 주요내용

□ 성과목표 개요

- 한국금융의 국제화·선진화를 위하여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금융글로벌화 정책을 적극 추진
- FTA 금융서비스 협상70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금융중심지(클러스터)를 육성하여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09년도	'10년도	'11년도
① 양자·다자간 금융협상을 통한 국제협력강화(건)	FTA 협정문 및 양허안 작성 실적,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관련 애로조사 실적	목표	신규	10	-
		실적	-	12	-
		달성률(%)	-	120	-
① 양자·다자간 금융협상을 통한 국제협력강화(건)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해외 금융당국과의 양자 및 다자협상, 정보교환 및 시장개방 요구 횟수	목표	-	변경	5
		실적	-	-	5
		달성률(%)	-	-	100
② 금융클러스터 조기정착유도(회)	금융중심지 조성 분과위원회 개최 등 실무회의 개최실적	목표	신규	8	-
		실적	-	10	-
		달성률(%)	-	125	-
② 국내외 금융기관 진출입 지원률(%)	금융기관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한 유효한 처리 건수 비율	목표	-	변경	75
		실적	-	-	100
		달성률(%)	-	-	133

(2) 성과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

1)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 기여도

- 일본, 중국 등 우리 주변 경쟁국들이 금융산업의 발전과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FTA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 주변 경쟁국보다도 먼저 미국, EU, 페루 등 거대 경제권 및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신흥국과 FTA를 체결하여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
 - 한-호주 FTA의 성공적 협상을 통해, 미국, 유럽에 이어 또 하나의 거대 경제권과의 경제 협력 교두보를 마련하여 우리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 예상
-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 국내외 금융회사 진출입 활성화, 금융중심지 조성 지원, 금융회사 경영환경 개선 등 다양한 금융중심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동북아 금융허브 달성의 계기를 마련
 -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금융중심지 기반 확립'을 목표로 4대 영역(자본시장 고도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금융인프라 선진화, 금융중심지 조성 가속화) 50개 세부과제를 수립
 - (국내외 금융회사 진출입 활성화) 외국사 유치설명회(IR) 개최, 외국사 진입 지원 One-stop 서비스 제공, 국내외 금융회사의 진출입과 관련한 애로·건의 사항 처리 등을 통해 금융중심지 대내외 기반 조성에 기여
 - * (국내금융사 해외점포수) '10년 329개→'11년 343개
 - ** (외국금융사 국내점포수) '10년 149개→'11년 154개
 - (금융중심지 조성 지원) 서울국제금융센터 개소('11.10) 및 부산국제금융센터 입주협약 체결('11.12) 등 금융중심지 물적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녹색 금융 MBA 운영 및 해외 Job Fair 개최 등을 통해 인적 기반 조성을 강화
 - (금융회사 경영환경 개선) 금융법령 영문화, 외국금융인 전용출입국 카드 발급, 금융거래가이드북 발간 등을 통해 외국금융회사 경영환경을 개선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 현행 FTA협상은 외교통상부주관으로 상대국 지정후 협상개시를 선언한 후, 금융위는 금융서비스 분야에 참여하여 FTA 협상을 추진
- 외교통상부가 주관하여 관계부처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 실시

- 금융협상 전 과정을 통해 이해관계자인 금융업계 건의사항 등 의견을 충실히 수렴(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손보협회, 생보협회를 통한 의견수렴 연 4회 실시)
 - * 협정문 조항 및 양허안 관련 사항에 대한 국제협상 전문가(변호사)의 의견 청취 및 심층 검토
- '11년에는 한-EU FTA를 정식 발효하고, 호주와의 FTA 금융서비스 협상도 마무리
 - 한-호주 FTA 금융협상: 총 8차례(최종협상횟수 8회, '11년은 마지막 협상 1회 개최)의 협상을 통해, 우리측 요구사항(request)을 반영하는 등 금융서비스 분야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 * 국책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및 방카슈랑스 판매방법 등 우리측 요구반영
- EU 및 미국과의 FTA 무역/이행위원회 개최 및 터키와의 FTA, WTO/DDA 협상이 차질 없이 진행중
 - * '11년 FTA/DDA 금융협상 추진현황
 - WTO/DDA 금융서비스 위원회 협상참여(총 4회, 제네바)
 - 한-EU FTA 무역위원회 개최(1차례 실시, 10월 서울)
 - 한-터키 FTA 금융협상(1차례 실시, 3월 터키 앙카라)
- 또한 既체결한 FTA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 지원
 - 한-EU FTA 무역위원회 개최에 앞서, FTA 합의사항의 이행 상황을 점검
-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등을 통해 '11년중 총 97건*의 금융회사 애로사항을 접수하였으며, 이를 제도 및 절차 안내·면담 주선·자료집 발간 및 제공 등의 방법으로 100% 처리
 - * 국내금융사 해외진출 관련 31건, 외국금융사 국내진입 관련 51건, 외국금융사 환경개선 관련 14건 등

□ 원인분석

- (국내외 금융기관 진출입 지원을-초과 달성) '11년중 국내외 금융기관의 애로·건의 사항에 대한 유효한 처리건수 비율은 100%로, 당초 목표인 75%를 133% 초과 달성
 - 100% 지원을 자동 달성*을 방지하기 위해 접수된 건의사항에 대한

유효한 처리 비율을 측정산식으로 제시했으나, 소관부서로의 이관 처리 등을 고려하면 접수된 건의사항 모두가 유효하게 처리됨

* '10년에는 접수된 건의사항에 대한 단순 답변제공률을 측정산식으로 제시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 FTA 협상에 필요한 협정문·양허안 작성과 협상 참석 실적 및 국내 금융회사의 FTA 교역 상대국 진출 관련 수요 및 애로조사 횟수

* FTA 금융협정문 및 양허안 작성 건수

- 측정대상기간 : 11.1.1~11.12.31

- 측정대상 표본 : FTA 상대국에 제시한 협정문과 양허안, 회기간 제안서 작성 건수

* 금융회사의 FTA 교역 상대국 진출 수요 및 애로조사

- 측정대상기간 : 11.1.1~11.12.31

- 측정대상 표본 : 국내 금융회사의 터키, 미국, 중국, 일본 금융시장 진출 계획 및 애로사항을 금융 협회를 통한 의견 취합 건수 및 시장 간담회 개최 건수

○ (국내외 금융기관 진출입 지원율) 국내외 금융기관 진출입 지원을 위한 금융기관의 애로·건의사항 접수 사항에 대한 유효한 처리 건수 비율

- 측정대상기간 : 11.1.1~11.12.31

- 측정대상 표본 : 금융중심지지원센터에 유·무선으로 접수된 국내금융회사 해외진출·외국금융회사 국내진입·외국금융사 환경개선 건의 자료 전수조사

2) 향후 개선사항

□ (국내외 금융기관 진출입 지원율) 국내외 금융회사의 진출입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보다 직접적인 지표를 발굴할 필요

○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진입 건수 및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건수 등을 성과지표로 활용할 필요

①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V-1-일반재정(1))

가. 주요내용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 금융중심지의 발전을 위하여 제도 개선, 생활 및 기업환경 개선 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
- 국내외 금융기관의 진·출입 지원 및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설립된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역할 강화
 - * 금융중심지지원센터 개소('08.9.9), 부산금융중심지지원센터 개소('09.5.15)
- 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금융중심지 조성의 핵심 요소인 우수한 금융인력 양성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 성률	'09년도	'10년도	'11년도
①금융중심지 추진위 개최(회)	회의개최 여부	목표	2	2	-
		실적	3	5	-
		달성률(%)	150	250	-
①금융중심지추진위 정책추진건수 (건)	금융중심지추진위 심의안 건수		-	변경	3
		실적	-	-	1
		달성률(%)	-	-	33
②외국금융회사 애로사항 해소 (%)	각종 인허가 및 영업 관련 애로사항 처리	목표	개선	-	-
		실적	완료	-	-
		달성률(%)	100	-	-
②외국금융회사 애로사항 해소 (%)	조치 및 답변제공건수/ 접수 된 애로 및 건의사항 * 100	목표	변경	70	-
		실적	-	100	-
		달성률(%)	-	143	-
②국내외 금융기관의 금융중심지 지원 센터 활용 건수(건)	금융중심지 지원센터의 국 내외 금융기관 지원 실적	목표	-	변경	80
		실적	-	-	234
		달성률(%)	-	-	292
③녹색금융특화 MBA 수강생 수(명)	녹색금융특화 MBA 교육인원	목표	-	추가	60
		실적	-	-	63
		달성률(%)	-	-	105

나. 성과분석

□ 성과목표 달성 기여도

- (금추위 정책추진건수) 자본시장 선진화를 중심으로 우리 금융산업을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금융중심지 기본계획*('11~'13)을 금추위를 통해 심의하여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핵심적으로 기여

*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주요 내용 및 세부추진 과제>

- ① 자본시장 고도화(16개) : 투자은행 활성화, 헤지펀드 도입,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 등
- ②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11개) : 실물경제 연계 강화, 금융산업 선진화, 글로벌화 등
- ③ 금융인프라 선진화(10개) : 금융규제개혁, 금융감독 시스템 발전, 소비자 보호 강화, 인력양성 등
- ④ 금융중심지 조성 가속화(13개) : 국내외 금융회사 진출입 지원, 경영 및 생활환경 개선 등
- (금융기관의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활용 건수)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통해 국내외 금융회사의 진출입 및 외국금융회사 영업환경 개선 등을 지원함으로써 금융중심지 대내외 기반 조성에 기여

*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주요 업무 추진실적>

- ① 금융중심지 조성 지원 : 금융중심지 IR 실시(MOU 3건 체결), 해외 Job Fair 개최(73명 채용 예정), 해외금융인력 채용 네트워크(152명 채용)
- ② 외국계 금융사 지원 : 애로·건의 사항 등 처리(64건), 금융법령 영문화(94건), 간담회 및 면담(44건), 국내 진입 관련 원스톱 서비스 제공(3개社)
- ③ 국내사 해외진출 지원 : 애로·건의 사항 등 처리(61건), 간담회 및 면담(8건), 외국법령 DB(28개국 152개), 중국 은감회 및 인니 감독당국 면담 등
- ④ 경영·생활환경 개선 : 외국인 전용 출입국카드 발급(53명), 비자발급 지원(29건), 보험 거래가이드북 발간, Fn hub Newsletter 발간 등
- (녹색금융특화 MBA 수강생 수) 신성장동력인 녹색금융분야의 전문가를 육성하여 금융중심지 추진 및 발전에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금융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 (금융중심지추진위 정책추진건수) '11년중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총 7건*의 금융중심지 정책을 상정하였으며, 이 중 1건(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심의

* ① 12차 금추위('11.3.18) : 11년 녹색금융 MBA 추진계획, '10년 실무금융인력 사업 결과

② 13차 금추위('11.6.8) : 자본시장 제도 개선방안, 서울·부산 금융중심지 조성 현황 및 향후계획,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실적 및 향후 운영방향

③ 14차 금추위('11.8.25) :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11~'13)

- (금융기관의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활용 건수) '11년중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통해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애로사항 해소(97건) · 면담(52건), 간담회(29건), 정보제공(53건) 등 총 234건의 업무를 지원
- (녹색금융특화 MBA 수강생 수)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63명)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고, 녹색교과목 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등 녹색금융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적절히 양성하고 녹색금융 교육기관 역량을 제고

□ 원인분석

- (금융중심지추진위 정책추진건수-목표치 미달성) 당초 목표산정시에는 금융중심지법 개정안 및 세부기준 심의를 위한 심의안건 상정을 감안 하였으나, 법령 재개정 지연으로 심의 일정이 연기
- 그러나 금융중심지 정책 핵심사항인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심의 하였으며, 자본시장 제도 개선방안 등 금융산업 선진화 · 국제화를 위한 중요 사항들이 보고 안건에 다수 포함
- (금융기관의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활용건수-초과달성) 금융중심지 지원센터의 금융기관 지원실적 집계방법의 변경*으로 전년도(88건)에 비해 지원센터 활용건수가 급상승(234건)
* (기존) 국내외 금융기관 애로 · 건의 사항만을 집계→(변경) 국내외 금융기관 대상 면담 · 간담회 · 업무관련 정보제공 등도 실적에 포함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 (금융중심지추진위 정책추진건수) '11년중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통해 심의한 심의 안건 수
- 측정대상기간 : 11.1.1~11.12.31
- 측정대상 : '11년중 개최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제12차, 제13차, 제14차) 심의 안건
- (금융기관의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활용 건수)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국내외 금융기관 지원 실적
- 측정대상기간 : 11.1.1~11.12.31
- 측정대상 : '11년중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통해 국내외 금융기관 지원을 위한 수행된 애로 및 건의사항 처리, 면담, 간담회, 정보제공, 유권해석, 인허가 접수 등을 전수조사
- (녹색금융특화 MBA 수강생 수) 녹색금융특화 MBA 수행대학(KAIST, 고려대) 제출자료
- 측정대상기간 : 11.1.1~11.12.31
- 측정대상 : 녹색금융특화 MBA 수행대학(KAIST, 고려대)의 녹색금융과정 수강생 수

다. 향후 개선사항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정책추진건수) 금융중심지 정책 전반의 추진 성과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성과지표를 다양화

※ (기존)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정책 심의건수 → (개선)금융중심지정책 추진 종합평가

* 금추위 개최횟수(가중치 20%), 금추위 심의·보고 안건 수(가중치 10%), 금융중심지 기본 계획 세부과제 추진건수(가중치 70%)

-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활용건수)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분야별 업무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다양화

※ (기존)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활용 건수→ (개선)금융중심지지원센터 실적 종합평가

- * ① 금융중심지 조성 지원 : 해외 IR 및 MOU 지원, 해외 Job Fair, 금융인력 DB 구축 등
- ② 외국금융회사 진입 지원 : One-stop 민원서비스, 금융법령 영문화, 외국사 간담회 등
- ③ 국내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 : 해외진출 애로사항 해소, 해외감독당국 세미나, 외국법령 DB 구축 등
- ④ 경영 및 생활환경 개선 : 출입국카드 발급, 금융거래가이드북 발간, Newsletter 발행 등

- (녹색금융특화 MBA 수강생 수) 녹색금융특화 MBA 수강생 수는 산출 지표에 가까운바, '12년도 성과지표는 녹색금융특화 MBA 졸업생 수 및 교육생 만족도 조사 결과로 대체

② 금융관련 국제협력(V-1-일반재정(2))

가. 주요내용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 적극적인 국제금융기구 활동, 국제회의 유치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우리 금융시장과 감독정책에 대한 해외 홍보강화
- 금융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외국 금융감독당국과의 협력 강화, 감독경험 공유 및 감독현안 협의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목표대비 달성률	'09년도	'10년도	'11년도
① 우리 금융회사의 상대국 진출 지원 실적	금융협상 및 MOU 체결 실적	목표	개선	-	-
		실적	완료	-	-
		달성률(%)	100	-	-
①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우리 금융 산업의 선진화(회)	면담, 협상, 정보교류, 회의참석 및 MOU 체결 횟수	목표	변경	5	-
		실적	-	19	-
		달성률(%)	-	380	-
① 국제 협상 횟수(회)	협상 참석수 및 협정문/양허안 작성 횟수, 정보 및 양허 개선 요구사항 교환 횟수	목표	-	변경	5
		실적	-	-	5
		달성률(%)	-	-	100

나. 성과분석

□ 성과목표 달성 기여도

- 영국, 호주, 터키 등 G20 금융당국과의 MOU 체결을 통해 한국의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국제적 위상 강화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 2010년 G20 의장국으로서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G20 금융당국과의 금융협력 강화를 위해 G20 금융당국에 MOU 체결 요청 서신* 발송('11.2.17)
- * G20 중, 미체결 금융당국에 MOU 체결 요청서한 발송(14개국 29개 금융당국)
- G20 금융당국 중, MOU 체결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터키, 호주 등과 MOU 체결 논의를 시작

○ 호주, 터키, 영국 등 G20 금융당국 및 신흥국인 몽골 금융당국과 총 5건의 MOU를 체결

* MOU 신규 체결 :

1. 호주 건전성감독청('11.8.28)
2. 몽골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위원회('11.9.2)
3. 터키 은행감독청('11.11.25)
4. 터키 자본시장위원회('11.11.25)
5. 영국 금융청('11.11.28)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 MOU 체결 실적

- 측정대상기간 : 11.1.1~11.12.31
- 측정대상 표본 : 호주 건전성감독청과의 MOU 체결서, 몽골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위원회 MOU 체결서, 터키 은행감독청·자본시장위원회 MOU 체결서, 영국 금융청 MOU 체결서

다. 향후 개선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내부 및 외부지적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성과 목표	전년도 성과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FTA 협상과정에서 국내외 금융회사들과의 유기적 공조를 더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협상 전 과정을 통해 이해관계자인 금융업계 건의사항 등 의견을 충실히 수렴 -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손보협회, 생보 협회를 통한 의견수렴 연 4회 실시
	국회, 감사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사항 없음 	
관리 과제 (V-1- 일반 제정(1))	전년도 성과보고서	<p><금추위 정책추진건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추위 활동성과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회의 개최횟수 뿐 아니라 총 상정안건 수도 고려 <p><녹색금융특화 MBA 수강생 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11년도에는 금추위 총 심의안건수를 성과지표로 제시 - '12년도에는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할 수 있도록 성과측정지표를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중간평가 실시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별 예산배정을 차등적으로 실시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
	자율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p><녹색금융특화 MBA 수강생 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표 적정성 제고 - 수강생수는 산출지표이며 성과지표로 적절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녹색금융특화 MBA 졸업생 수로 성과지표 설정 - 교육생들에 대한 교육만족도 조사 병행
관리 과제 (V-1- 일반 제정(2))	전년도 성과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사항 없음 	
	자율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한 측정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실적치를 산정하여 목표치 초과 달성 ('10년 결산감사, 감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년은 관리과제의 목적에 보다 적합하고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였고, 과거 추세치와 측정방법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목표치 설정

(1) 주요내용

□ 성과목표 개요

-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정회원 가입을 계기로 우리나라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금지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춰 선진화
 - *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for Money Laundering) : G7 정상합의로 '89년 설립,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규범제정, 이행평가·제재 등을 수행, 우리나라는 '09.10월 정회원에 가입
 -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시행령 개정 등 법률개정 후속조치를 통해 테러자금조달 금지제도 선진화 추진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 등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선진화 추진
 - 국제수준에 맞는 선진적인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금지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
 - 최신의 자금세탁 유형·기법에 대한 국가간 정보교류 및 연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11년도 APG 유형론 실무회의 개최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09년도	'10년도	'11년도
①심사분석 제공률 (%)	(제공건수 / 심사분석건수) * 100	목표	50	55	-
		실적	59.1	62.4	-
		달성률(%)	118	113	-
①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선진화 달성률(%)	14개 중점 FATF 권고사항에 대한 7개국* 평균 대비 달성도 *미국,영국,캐나다,호주,일본, 이탈리아싱가포르	목표	-	변경	84
		실적	-	-	85.7
		달성률(%)	-	-	102
②심사분석 건수 증가율(%)	('10년중 심사분석 증가건수/ '09년중 심사분석 건수)*100	목표	12	13	-
		실적	16	46	-
		달성률(%)	133	354	-

(2) 성과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

1)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 기여도

- 법률개정을 통해 아국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금지제도를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가 요구하는 국제수준으로 선진화함으로써 한국금융의 글로벌 위상 제고에 기여
-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법 개정(8.23일 국회통과),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계류 중(12.2월 임시국회 중 통과 예상)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 FATF 49개 권고사항 중 2개 권고(SR.Ⅱ, SR.Ⅲ3)의 이행(11.10.6.자 FATF 사무국 평가보고서)을 통해 목표(84%)를 초과 달성((85.7%))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 FATF 사무국 평가보고서(11.10.6자 기준)가 제시한 우리나라의 이행률에 기초

2) 향후 개선사항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추진

① FIU 전산망 구축운영(V-2-정보화(1))

가. 주요내용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 금융환경 변화에 편승하여 지능화하는 자금세탁수법에 대비한 FIU 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기능 개선 위한 시스템 구축
- CTR과 외환정보를 활용하여 급증하는 STR의 효율적인 선별시스템 구축으로 양질의 STR를 분석관에 제공하여 심사분석 기간 단축
- 사업 세부내용
 - CTR·외환자료의 유형분석을 통한 고위험 STR선별시스템 운영
 - 금융회사간 자금세탁방지 정보공유 시스템 개선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 과 지 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09년도	'10년도	'11년도
①심사분석 제공률(%)	(제공건수 / 심사분석건수) * 100	목표	50	55	-
		실적	59.1	62.4	-
		달성률(%)	118	113	-
①자금세탁혐의도 적중률(%)	(Σ고위험제공건/Σ전체 제 공 건)/(Σ고위험불제 공건/Σ전체불제공건)	목표	-	변경	4.24
		실적	-	-	4.72
		달성률(%)	-	-	111
②심사분석 건수 증가율(%)	('10년 중 심사분석 증가건수/'09년 중 심사분석 건수)*100	목표	12	13	-
		실적	16	46	-
		달성률(%)	133	354	-
②FIU정보화시스템서비스 수준달성도(%)	5개 운용지표*별 목표 치합의 평균	목표	-	변경	80
		실적	-	-	85.9
		달성률(%)	-	-	107

* 장애조치, 시스템 응답시간, CSR 납기율, 우선배당 적중률, 일일점검 처리율

나. 성과분석

□ 성과목표 달성 기여도

- CTR, 외환자료의 자금세탁 유형분류 및 전략분석시스템 도입으로 국제수준에 맞는 선진적인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
 - STR상세분석 보조 자료로 활용하던 CTR 및 외환자료의 자금세탁 유형을 분류하고 이를 활용하여 고위험 STR을 선별, 분석하는 시스템 구축 등 지속적인 기능개선으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금지업무의 선진화에 기여
- 금융환경 변화에, 편승한 자금세탁수법의 지능화에 대비한 금융기관간 자금세탁방지 업무 운영격차 해소를 위하여 금융기관과의 자금세탁 관련 정보 공유 시스템 개선
 - 업무운영도가 높은 대형금융기관과 중소형 금융기관간 AML업무 운영격차 최소화, 협의거래참고 유형 및 자금세탁방지 지식정보 교류 서비스 구현에 기여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 CTR 및 외환자료의 자금세탁유형관리 시스템 운영
 - STR 상세분석 보조 자료로 활용하던 CTR 및 외환자료, 신용정보 등을 기반으로 보고지역/기관/계좌/미성년자 등 거래정보를 활용하여 자금세탁유형을 분류하여, 이를 STR자료와 매핑으로 고위험 STR을 선별하여 심사분석관에게 양질의 STR를 제공함
- CTR 및 외환자료를 활용한 STR 전략분석 시스템 개선
 - 산재된 STR 관련 데이터(CTR/STR/외환 등)를 계좌/주체별로 통합 분석하고 관련정보와의 연동, 데이터 필터링 기능 강화 등 STR확장 연계도를 개발하여 심사분석관에게 STR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심사분석시간 단축
- 보고기관간 자금세탁방지 정보공유 체계 개선
 - 금융환경 변화에 편승한 자금세탁수법의 지능화에 대비하여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업무운영도가 높은 대형금융기관과 중소형 금융기관간 자금세탁방지 업무 운영격차 최소화, 협의거래 유형 및 자금세탁방지 정보 공유를 위하여 금융기관과의 자금세탁 관련 정보 공유 시스템 개선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 (자료수집 방법) 시스템 접수 건수 및 통계 확인(11.1.1. ~ 12.31)

- (자금세탁혐의도적중률) 금융기관에서 보고된 STR중 심사분석 건수와 분석후 법집행기관에 제공된 건수 확인
- (FIU정보화시스템서비스수준 달성도)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및 위탁 운영 서비스 수준 운용지표 관리대장 및 시스템 로그 기록 확인
- (방 법) 시스템 접수 건수 및 통계 확인
- (자료 출처) FIU정보시스템

○ (품질확인) 자금세탁혐의도적중률 / FIU정보화시스템서비스수준 달성도

- 보고된 STR 등 자료중에서 주민번호 오류, 손상된 파일 등 분석 불가능한 자료는 제외함
- STR접수부터 상세분석 완료까지 시간을 고려하여, 보고건수는 접수일, 법집행기관 제공은 심사분석 완료일을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함

다. 향후 개선사항

□ FIU 전산시스템의 지속적인 고도화

- 국제적 자금이동의 급증 등 금융환경 변화에 편승한 자금세탁수법 지능화에 대비한 심사분석프로그램 개선
- 혐의성이 높은 STR의 위험도를 자동으로 평가하여 걸러내는 지능형 배당시스템(룰&스코어링 시스템) 고도화 등 정보처리 인프라 개선

② APG 유형론 실무회의 개최(V-2-일반재정(1))

가. 주요내용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 최신의 자금세탁 유형·기법에 대한 국가간 정보교류 및 연구 증진을 목적으로 '11년도 APG 유형론 실무회의 국내 개최
- 총회와 함께 APG 양대 공식행사인 실무회의를 유치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유형론 논의에서의 입지를 제고
- 실무회의에는 10월말~11월초 3일간 40개 APG 회원국 및 국제기구 관계자 200~250여명이 참석할 예정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09년도	'10년도	'11년도
①실무회의 참석자수(명)	회의기간 중 등록된 참가자수	목표	-	신규	225
		실적	-	-	278
		달성률(%)	-	-	124

나. 성과분석

□ 성과목표 달성 기여도

- FATF와 APG의 공동 유형론 회의와 함께 범죄자산 추적, FIU 기능 증진 회의를 성공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유형론 회의의 새로운 모델을 개척했다는 국제사회의 평가
- 부산시는 외국참가자들에게 국제도시로서의 부산시의 이미지와 해양·파생 금융중심지의 가능성을 확고하게 각인시키는 효과를 거둠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 FATF와의 협의를 통해 FATF/APG 합동 국제회의로 격상('11.2월)된 후 APG의 요청에 따라 아테 및 남동 아프리카가 참여하는 「자금세탁방지 법집행 실무 워크숍」('11.12.9~10일)을 추가
- 금융정보분석원 김근익 기획행정실장, 이천세 심사분석실장 등 아국 관계자의 FATF/APG 합동 유형론회의(12.6~8일), 법집행 실무회의(12.9~10일), APG/에그몽 - FIU 세미나(12.9일) 공동의장 수임, 주제별 사례발표(금융정보분석원, 법무부, 관세청) 및 활발한 토의참가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분야 국제논의에 주도적 참여 계기를 마련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 APG 공식 웹사이트에 등록자를 기준으로 57개국 262명(한국 포함), 13개 국제기구 16명, 총 278명이 참가하여 역대 최다국·국제기구, 최다 인원 참가 유형론 회의로 기록

다. 향후 개선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내부 및 외부지적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성과 목표	전년도 성과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선진화 지속 추진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의 추가 개선 - 외환 및 고액현금거래 등에 대한 정밀 심사분석 시스템 구축 - 의심거래보고의 증가에 따라 심사분석업무 효율화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제도 선진화를 지속 추진 - 감독·검사제도 등 개선을 위한 특정 금융거래보고법 개정('12.2.27일) - 테러자금조달금지제도 개선을 위한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개정('11.8.23일) - 정보화 개발사업을 통해 외환, 고액현금거래 등 정밀 분석시스템 구축 - 심사분석관 전문교육 등 심사분석 업무 효율화 지속 추진
	국회, 감사원 등	○ 해당사항 없음	
관리 과제 (V-2- 정보화 (1))	전년도 성과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 자금이동의 급증 등 금융환경 변화에 편승한 자금 세탁수법 지능화에 대비한 외환 및 고액현금거래 연계 분석 시스템 고도화 추진 ○ 급격히 증가하는 STR(혐의 거래보고)에 대비하여 심사 분석프로그램 개선 등 정보 처리 인프라 고도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R 관련자료(CTR/STR/외환 등)를 계좌·주체 및 관련자료와 연동하는 STR 확장연계도 고도화 등 STR전략 분석시스템 개선 ○ 외환 및 고액현금거래의 자금세탁유형을 분류/활용하여 급증하는 STR중 고위험 STR를 선별, 분석관이 상세분석에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
	자율평가	○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 해당사항 없음	
관리 과제 (V-2-일반 재정(1))	전년도 성과보고서	○ 해당사항 없음	
	자율평가	○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 해당사항 없음	

별첨1
회계 기금별 결산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0년도	'11년도
□ 합계 (A+B)		
○ 총지출	79,577	82,329
○ 총계	531,399	295,948
□ 예산계 (A)		
○ 총지출	1,398	1,011
○ 총계	31,426	15,531
[일반회계]		
• 총지출	1,398	1,011
• 총계	31,426	15,531
□ 기금계 (B)		
○ 총지출	78,146	81,318
○ 총계	499,973	280,417
[공적자금상환기금]		
• 총지출	0	0
• 총계	201,559	35,920
[기술신용보증기금]		
• 총지출	10,264	11,024
• 총계	30,645	26,81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총지출	3,831	2,436
• 총계	16,460	26,110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 총지출	1,282	1,213
• 총계	1,559	1,553

(단위 : 억원)

구분	'10년도	'11년도
[부실채권정리기금]		
• 총지출	2,619	5,717
• 총계	24,731	14,868
[신용보증기금]		
• 총지출	23,328	25,932
• 총계	47,082	63,266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총지출	322	13,009
• 총계	126,090	68,105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총지출	2,770	2,982
• 총계	14,569	15,614
[구조조정기금]		
• 총지출	33,730	18,723
• 총계	37,277	28,167

별첨2

관리과제 재정운용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0년도		'11년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 재정운용 총액(A+C)	580,647	531,399	330,687	295,947
□ 관리과제 총액(B+D)	151,987	71,307	94,325	56,803
□ 차액(A+C)-(B+D)	428,660	460,093	236,362	239,144
◇ 소관 총계(A)	580,647	531,399	330,687	295,947
◇ 소관 회계·기금에 계상된 관리과제 총액(B)	151,987	71,307	94,325	56,803
▫ 회계	1,209	1,216	779	773
▫ 기금	150,778	70,090	93,546	56,029
▪ 일반재정	151,922	71,241	94,015	56,517
▪ 정보화	65	65	310	285
▪ R&D	0	0	0	0
◇ (A - B)	428,660	459,995	236,362	239,144
- 인건비	3,714	3,375	3,853	3,675
- 기본경비	3,025	2,894	7,062	6,528
- 내부거래	30,033	30,027	61,819	57,796
- 보전지출	384,807	421,794	145,996	155,822
- 기타	7,081	1,905	17,632	15,323
◆ 타부처 소관 회계·기금에 계상된 총계(C)	0	0	0	0
◆ 타부처 소관 회계·기금에 계상된 관리과제 총액(D)	0	0	0	0
▪ 일반재정	0	0	0	0
▪ 정보화	0	0	0	0
▪ R&D	0	0	0	0
◆ (C - D)	0	0	0	0
- 인건비	0	0	0	0
- 기본경비	0	0	0	0
- 내부거래	0	0	0	0
- 보전지출	0	0	0	0
- 기타	0	0	0	0

별첨3

성과 달성도 현황

1. 성과목표별 성과 달성도 현황

(1) 총괄현황

(단위: 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목표의 성과지표수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5	8	11	3	5	3
		100%	27.3%	45.5%	27.3%

(2) 세부현황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 대비 달성률	'09년도	'10년도	'11년도
전략목표 I: 경제활성화 지원						
성과목표 I-1: 금융공기업을 활용한 기업자금지원 및 기업구조조정	① 국책 금융기관 중소기업 자금공급(조원)	보증기관신보, 기보, 농신보 지원 실적 합계	목표	-	신규	52.5
			실적	-	-	56.3
			달성률 (%)	-	-	107
	② 보증지원업체의 만족도(%)	설문조사	목표	-	신규	70
			실적	-	-	91.5
			달성률 (%)	-	-	131
전략목표 II: 튼튼한 금융시스템 구축						
성과목표 II-1: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 등을 통한 위기대응 능력 보강	① 리스크 평가기준 정비	관련 규정 개정안 마련여부	목표	리스크 점검	리스크 평가기준 정비	-
			실적	리스크 점검	완료	-
			달성률 (%)	100	100	-
	① 은행권	계량	목표	-	변경	12.00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 대비 달성률	'09년도	'10년도	'11년도
	BIS비율(%)		실적	-	-	14.17
			달성률 (%)	-	-	118
전략목표Ⅲ: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성과목표 Ⅲ- 1 :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기반 마련	①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11년GDP-'10년GDP)/'10년 GDP*100 ■ GDP는 금융보험업만	목표	-	신규	금융산업 성장률 연간 4%
			실적	-	-	1.5
			달성률 (%)	-	-	38
성과목표 Ⅲ- 2 : 핵심 금융인프라 선진화로 금융발전 촉진	① 금융 인프라 관련 제도개선 실적	('09년)제도개선 여부 ('10년)제도개선 건수	목표	제도개선	3	-
			실적	미완료	3	-
			달성률 (%)	미달성	100	-
	① 정부입법 계획 달성률(%)	국회제출 또는 통과법안/당초입법계획 *100	목표	-	변경	80
			실적	-	-	66.7
			달성률 (%)	-	-	83
전략목표Ⅳ: 서민·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성과목표 Ⅳ- 1 :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① 금융소외계층 지원인원(단위:명)	마이크로크레딧, 신용회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한 인원 총계	목표	-	신규	132,000
			실적	-	-	237,184
			달성률 (%)	-	-	180
	② 주택금융지원 등 수혜자 만족도(%)	보증자리론, 우대보증자리론 등 금융지원 수혜자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점수	목표	-	신규	70
			실적	-	-	75
			달성률 (%)	-	-	107
성과목표 Ⅳ- 2 :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추진	① 금융소비자보호를 획기적으로 제고	법령 등 제도 마련여부 확인, (국무회의 보고, 국회제출 실적 등)	목표	-	신규	법령 등 제도 마련
			실적	-	-	금융소비자 보호법 국회제출 추진(규제 심사 완료)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 대비 달성률	'09년도	'10년도	'11년도
			달성률 (%)	-	-	0
전략목표 V: 한국금융의 글로벌 위상 제고						
성과목표 V-1 : 금융 글로벌화의 지속적 추진으로 국제 경쟁력 강화	① 양자·다자간 금융협상을 통한 국제협력강화(건)	FTA 협정문 및 양허안 작성 실적,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관련 애로조사 실적	목표	신규	10	-
			실적	-	12	-
			달성률 (%)	-	120	-
	① 양자·다자간 금융협상을 통한 국제협력강화(건)	협상 참석수 및 협정문/양허안 작성 횟수, 정보 및 양허 개선 요구사항 교환 횟수	목표	-	신규	5
			실적	-	-	5
			달성률 (%)	-	-	100
	② 금융클러스터 조기정착유도(회)	금융중심지 조성 분과위원회 개최 등 실무회의 개최실적	목표	신규	8	-
			실적	-	10	-
			달성률 (%)	-	125	-
	② 국내외 금융기관 진출입 지원률(%)	금융기관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한 유효한 처리 건수 비율	목표	-	신규	75
			실적	-	-	100
			달성률 (%)	-	-	133
성과목표 V-2 :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선진화	① 심사분석 제공률 (%)	(제공건수 / 심사분석건수) * 100	목표	50	55	-
			실적	59.1	62.4	-
			달성률 (%)	118	113	-
	①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선진화 달성률(%)	14개·중점 FATF 권고사항에 대한 7개국* 평균 대비 달성도 *미국,영국,캐나다,호주,일본, 이탈리아,싱가포르	목표	-	변경	84
			실적	-	-	85.7
			달성률 (%)	-	-	102
	② 심사분석 건수 증가율(%)	('10년중 심사분석 증가건수/ '09년중 심사분석 건수)*100	목표	12	13	-
			실적	16	46	-
			달성률 (%)	133	354	-

2.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1) 총괄현황

(단위: 개)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부 문	과제수	지표수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5	8	일반재정	15	28	10	15	3
		정보화	5	11	0	11	0
		R&D	0	0	0	0	0
합 계			20	39	10	26	3
				100%	25.6%	66.7%	7.7%

(2) 세부현황

성과목표	부문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 대비 달성률	'09년도	'10년도	'11년도
전략목표 I: 경제활성화 지원								
(1) 금융 공기업을 활용한 기업자금 지원 및 기업구조 조정	일반 재정	신보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 지원	① 신보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부 문 보증공급(조원)	Σ당해연도 성장동력확충지원액과 목표치를 비교하여 목표달성률 산출	목표	16.0	16.0	18.5
					실적	21.3	28.5	27.3
					달성률(%)	133.1	178	148
		구상권 회수액(억원)	② 구상권 회수액(억원)	Σ구상권 회수액	목표	-	추가	6,199
					실적	-	-	7,269
					달성률(%)	-	-	117
	기술창업 기업 등 핵심분야에 대한 보증 지원 강화	기술창업 기업 등 핵심분야에 대한 보증 지원 강화	① 기술평가보증 잔액비율(%)	(Σ기술평가보증잔액/ Σ총보증잔액) * 100	목표	80.0	90.0	-
					실적	84.9	90.1	-
					달성률 (%)	106	100	-
		기술창업 기업 등 핵심분야에 대한 보증 지원 강화	① 기술창업기업 신규지원비율 (%)	(Σ기술창업신규보증공급)/(Σ신규보증공급)* 100	목표	-	변경	45.0
					실적	-	-	47.4
					달성률(%)	-	-	105
		핵심분야 보증공급(조원)	② 핵심분야 보증공급(조원)	Σ핵심분야보증공급	목표	12.4	11.5	10.5
					실적	15.7	14.4	15.1
					달성률(%)	126.7	125	144

성과목표	부문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 대비 달성률	'09년도	'10년도	'11년도
전략목표 II: 튼튼한 금융시스템 구축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지속적 보증지원	③ 구상권 회수액(억원)	Σ구상권 회수액	목표	-	추가	2,700	
				실적	-	-	3,222	
				달성률(%)	-	-	119	
		① 선도농우대보증 잔액(억원)	선도농우대보증 최근3개년평균성장률에 성장추세치 반영	목표	23,000	25,000	23,338	
				실적	21,500	22,239	23,157	
				달성률(%)	93.5	89	99	
		② 선도농우대 보증사고율(%)	(선도농보증사고액잔액/선도 농보증액)	목표	1.7	1.6	-	
				실적	1.4	0.8	-	
				달성률(%)	121	200	-	
		② 구상채권 회수율(%)	(구상채권 회수 누계/대위변제 누계)×100	목표	-	변경	13.64	
				실적	-	-	19.80	
				달성률(%)	-	-	145	
	정보화	① 정보화 처리건수(건)	정보화관리시스템 등록 기준 (신보 자체 운영)	목표	-	신규	120	
				실적	-	-	152	
				달성률(%)	-	-	127	
		② 전산환경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정보화관리시스템 등록 기준 (기보 자체 운영)	목표	-	신규	99.9	
				실적	-	-	99.97	
				달성률(%)	-	-	100	
		① 정보화 처리건수(%)	정보화관리시스템 등록 기준 (기보 자체 운영)	목표	-	신규	120	
				실적	-	-	154	
				달성률(%)	-	-	128	
		② 전산환경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정보화관리시스템 등록 기준 (기보 자체 운영)	목표	-	신규	85	
				실적	-	-	88.9	
				달성률(%)	-	-	105	
		③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운용(%)	5단계 등급별 점수 합산 /전체 응답자	목표	-	신규	99	
				실적	-	-	100	
				달성률(%)	-	-	101	

성과목표	부문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 대비 달성률	'09년도	'10년도	'11년도
(1)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 등을 통한 위대응 능력보강	일반 재정	① 은행권 부실채권비율 (%)	은행권 부실채권비율	목표	신규	1	-	3,000
					실적	-	1.86	-
		① 부실채권인수 규모(억원)	부실채권 인수규모	목표	달성률 (%)	-	54	-
					-	변경	3,000	
					실적	-	-	27,021
					달성률 (%)	-	-	900
전략목표Ⅲ: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1) 금융 산업의 경쟁력 제고 기반 마련	일반 재정	금융업법 체계개편	① 합리적 금융규제 개혁방안마련	보고서 제출 건수	목표	신규	2	-
					실적	-	2	-
					달성률 (%)	-	100	-
			① 2단계(기능별) 법령 제·개정	국회홈페이지에서 법안제출여부 확인	목표	-	변경	소비자 보호법, 경영 구조법 국회 제출
					실적	-	-	0
					달성률 (%)	-	-	0
(2) 핵심 금융 인프라 선진화로 금융발전 촉진	일반 재정	금융행정 지원 효율화	① 조직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률 (%)	('11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10년 역량강화 프로그램)*100	목표	신규	105	110
					실적	-	128	111
					달성률 (%)	-	122	101
			② 연구보고서 활용률 (%)	(법령개정, 정책 반영 등 정책용역 활용 수 / 연구용역 발주 수) * 100	목표	신규	60	70
					실적	-	71.4	88.2
					달성률 (%)	-	119	126
			③ 금융정책 인지도 향상률 (%)	주요 금융정책별 평균 인지도	목표	신규	10	10
					실적	-	56.7	10.1
					달성률 (%)	-	567	101
	정보화	효율적 금융정책 및 감독 지원을 위한 정보화 지원	① 사용자 만족도 (%)	$\frac{\sum(\text{항목별가중치} \times \text{항목별응답자})}{\text{전체응답자}}$	목표	85	86	87
					실적	86.6	87.0	87.1
					달성률 (%)	101.8	101.1	100
			② 정보시스템 운영의 안정화(분)	IT시스템 장애시간 = $\frac{\sum \text{장애시간(분)}}{\sum \text{단위시스템(수)}}$	목표	-	추가	50
					실적	-	-	42

성과목표	부문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 대비 달성률	'09년도	'10년도	'11년도
					달성률(%)	-	-	119

전략목표Ⅳ: 서민·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1) 금융 소외 계층 위한 금융 지원	일반 재정	농어가목돈 마련 저축장려	① 기금출연실적 (억원)	기금출연액	목표	650	-	-
					실적	650	-	-
					달성률 (%)	100	-	-
			① 예금계좌수 증대(천좌)	실적자료	목표	변경	100	85
					실적	-	102	104
					달성률(%)	-	102	122
		우대 보금자리론 을 통한 무주택 서민주택 구입지원	① 모기지론 이차보전 지급실적(억원)	공급실적	목표	신규	45.6	-
					실적	-	31.9	-
					달성률 (%)	-	70	-
			① 모기지론이차보전 지급실적(%)	(지급실적/지급계획)*100	목표	-	변경	80
					실적	-	-	95.5
					달성률(%)	-	-	119
			② 모기지론 이용자 만족도(점)	리카르도 5점 척도 방식 사용	목표	신규	70	70
					실적	-	61.5	75.5
					달성률(%)	-	88	108
			③ 우대 모기지론 공급건수(건)	공급실적	목표	-	추가	1,958
					실적	-	-	7,573
					달성률(%)	-	-	387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지원	① 주택보증공급(억원)	공급실적	목표	신규	80,000	87,000
					실적	-	114,903	206,700
					달성률(%)	-	143.6	238
			② 주택보증 이용자 만족도(점)	항목별 리카르도 척도 점수 합계	목표	신규	70	-
					실적	-	72.7	-

성과목표	부문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 대비 달성률	'09년도	'10년도	'11년도
			② 보금자리론 이용자 만족도(점)	항목별 리카르도 척도 점수 합계	달성률 (%)	-	104	-
					목표	-	추가	70
					실적	-	-	74.1
					달성률(%)	-	-	106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운용 정보화	① 사용자 만족도 조사(점)	리카르도 5점 척도방식 사용	목표	-	신규	80
					실적	-	-	96.2
					달성률(%)	-	-	120
			② IT 시스템 운영의 안정화(분)	IT시스템 장애시간 = Σ장애시간(분) / Σ단위시스템(수)	목표	-	신규	35분
					실적	-	-	30
					달성률(%)	-	-	116
(2) 사회안 전망으 로서의 금융소 비자 보호 정책 추진	일반 재정	저축의 날 행사	① 저축의 날 행사 홍보실적(회)	개최 여부	목표	개최	-	-
					실적	개최	-	-
					달성률 (%)	100	-	-
			① 저축의 날 행사 홍보실적(회)	중앙일간지 보도수	목표	변경	3	4
					실적	-	12	12
					달성률(%)	-	400	300
		역모기지론 을 통한 서민층 노후연금 보증	① 주택연금 지원실적(억원)	공급실적	목표	303	660	920
					실적	531	911	1,401
					달성률(%)	175	138	152
			② 주택연금 이용자 만족도(점)	리카르도 5점 척도방식 사용	목표	신규	70	70
					실적	신규	90.5	89.9
					달성률(%)	신규	129	128
		금융소비자 보호	③ 주택연금 공급건수(건수)	공급실적	목표	-	추가	1,600
					실적	-	-	2,936
					달성률(%)	-	-	184
			① 금융 교육 활성화방안 마련	제출된 보고서	목표	-	신규	마련
					실적	-	-	마련
					달성률(%)	-	-	100

성과목표	부문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 대비 달성률	'09년도	'10년도	'11년도
전략목표 V: 한국금융의 글로벌 위상 제고								
(1) 금융 글로벌 화의 지속적 추진으 로 국제 경쟁력 강화	일반 재정	금융중심지 조성과발전	① 금융중심지 추진위 개최(회)	회의개최 여부	목표	2	2	
					실적	3	5	
					달성률 (%)	150	250	
			① 금융중심지추진위 정책추진건수(건수)	금융중심지추진위 심의안 건수	목표	-	변경	3
					실적	-	-	1
					달성률 (%)	-	-	33
			② 외국금융회사 애로사항 해소 (%)	각종 인허가 및 영업 관련 애로사항 처리	목표	개선	-	-
					실적	완료	-	-
					달성률 (%)	100	-	-
			② 외국금융회사 애로사항 해소 (%)	조치 및 답변제공건수/ 접수된 애로 및 건의사항) * 100	목표	변경	70	-
					실적	-	100	-
					달성률 (%)	-	143	-
			② 국내외 금융기관의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활용 건수(건)	금융중심지 지원센터의 국내외 금융기관 지원 실적	목표	-	변경	80
					실적	-	-	234
					달성률 (%)	-	-	292
			③ 녹색금융특화 MBA 수강생 수(명)	녹색금융특화 MBA 교육인원	목표	-	추가	60
					실적	-	-	63
					달성률 (%)	-	-	105
		금융관련 국제협력	① 우리 금융회사의 상대국 진출 지원 실적	금융협상 및 MOU 체결 실적	목표	개선	-	-
					실적	완료	-	-
					달성률 (%)	100	-	-
			①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우리 금융 산업의 선진화 (회)	면담, 협상, 정보교류, 회의참석 및 MOU 체결 횟수	목표	변경	5	-
					실적	-	19	-
					달성률 (%)	-	380	-
(2) 자금세 탁방지 시스템의 선진화	정보화	APG유형론 실무회의 개최	① 실무회의 참석자수(명)	회의기간 중 등록된 참가자수	목표	-	신규	225
					실적	-	-	278
					달성률 (%)	-	-	124
			① 심사분석 제공률(%)	(제공건수 / 심사분석건수) * 100	목표	50	55	

성과목표	부문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 대비 달성률	'09년도	'10년도	'11년도
					실적	59.1	62.4	
					달성률 (%)	118	113	
			① 자금세탁혐의도 적중률(배)	고위험STR의법집행기관제공 비율=(Σ 고위험제공건/ Σ 전체 제공건)/(Σ 고위험불제공건/ Σ 전체불제공건)	목표	-	변경	4.24
					실적	-	-	4.72
					달성률(%)	-	-	111
			② 심사분석 건수 증가율(%)	('10년 중 심사분석 증가건수/'09년 중 심사분석 건수)*100	목표	12	13	-
					실적	16	46	-
					달성률 (%)	133	354	-
			② FIU 정보화시스템 서비스 수준 달성도(%)	5개 운용지표*별 목표치합의 평균	목표	-	변경	80
					실적	-	-	85.9
					달성률(%)	-	-	107

별첨4

성과목표관리체계별 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 억원, %)

성과목표관리체계			대상사업					
과제코드	관리과제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예산사업명	사업구분	'11 예산	'11 결산	집행률
총 계						94,326	56,803	60.21
전략목표 I : 경제 활성화 지원						39,856	34,676	87
성과목표 I - 1: 금융공기업을 활용한 기업자금지원 및 기업구조조정						39,856	34,676	87
I-1- 일반재정(1)	신보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 지원	신용보증 기금	2400-2431	신보 대위변제	단위 사업	22,450	21,051	93.77
		신용보증 기금	2400-2433	신보 운영	단위 사업	2,001	1,939	96.9
I-1- 일반재정(2)	기술창업기업 등 핵심분야에 대한 보증 지원 강화	기술신용 보증기금	2400-2441	기보 대위변제	단위 사업	10,633	8,613	81.01
		기술신용 보증기금	2400-2442	중소기업투자	단위 사업	100	55	55.05
		기술신용 보증기금	2400-2443	기보 운영	단위 사업	1,074	912	84.87
I-1- 일반재정(3)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지속적 보증지원	농림수산 업자신용 보증기금	2300-2332	농신보대위변제	단위 사업	3,270	1,797	54.94
		농림수산 업자신용 보증기금	2300-2377	농신보운영	단위 사업	105	103	97.96
I-1- 정보화(1)	신보 IT 운영	신용보증 기금	3300-3378-203	신보 IT운영(정보화)	세부 사업	(133)	(133)	99.55
I-1- 정보화(2)	기보 IT 운영	기술신용 보증기금	3300-3379-204	IT운영(정보화)	세부 사업	(90)	(74)	82.31
전략목표 II : 튼튼한 금융시스템 구축						50,000	17,698	35.39
성과목표 II - 1: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 등을 통한 위기대응 능력 보강						50,000	17,698	35.39
II-1- 일반재정(1)	금융·기업 구조조정지원	구조조정 기금	2100-2131	금융구조조정지원 (구조조정기금)	단위 사업	45,000	16,614	36.92
		구조조정 기금	2100-2132	기업구조조정지원 (구조조정기금)	단위 사업	5,000	1,084	21.69
전략목표 III: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17	15	87.58
성과목표 III- 1: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기반 마련						1	1	70.43
III-1- 일반재정(1)	금융업법 체계개편	일반회계	1100-1131-301	금융업법체계개편	세부 사업	(1)	(1)	70.44
성과목표 III- 2: 핵심 금융인프라 선진화로 금융발전 촉진						16	14	88.32

(단위 : 억원, %)

성과목표관리체계			대상사업					
과제코드	관리과제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예산사업명	사업구분	'11 예산	'11 결산	집행률
III-2- 일반재정(1)	금융행정지원 효율화	일반회계	7100-7135	금융행정지원일반	단위 사업	11	9	84.67
III-2- 정보화(1)	효율적 금융정책 및 감독 지원을 위한 정보화 지원	일반회계	7100-7132	정보화지원	단위 사업	5	5	95.7
전략목표 IV: 서민·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4,375	4,339	99.15
성과목표 IV- 1: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4,370	4,336	99.22
IV-1- 일반재정(1)	농어가목돈 마련 저축장려	일반회계	1200-1234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장려기금출연	단위 사업	637	637	100
		농어가목 돈마련저 축장려기 금	2300-2331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	단위 사업	1,213	1,213	100
IV-1- 일반재정(2)	우대보금자리론을 통한 무주택 서민 주택구입지원	일반회계	1200-1232	모기지론이차보전	단위 사업	47	45	95.49
IV-1- 일반재정(3)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보증지원	주택금융 신용보증 기금	2600-2631	주신보운영(주신보계정)	단위 사업	2,438	2,414	99.01
IV-1- 정보화(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운용 정보화	주택금융 신용보증 기금	3400-3476-202	기금운용정보화(정보화)	세부 사업	(11)	(9)	77.39
		주택금융 신용보증 기금	3400-3476-202	기금운영정보화(정보화)	세부 사업	(24)	(19)	79.36
성과목표 IV- 2: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추진						5	2	42.29
IV-2- 일반재정(1)	저축의 날 행사	일반회계	1200-1231	금융서비스지원	단위 사업	1	1	89.84
IV-2- 일반재정(2)	역모기지론을 통한 서민층 노후연금 보증	주택금융 신용보증 기금	2600-2631	주연보운영(주연보계정)	단위 사업	4	1	17.94
IV-2- 일반재정(3)	금융소비자 보호	일반회계	1100-1131-303	금융소비자보호	세부 사업	(1)	(1)	87.35
전략목표 V: 한국금융의 글로벌 위상 제고						77	75	97.51
성과목표 V- 1:금융 글로벌화의 지속적 추진으로 국제 경쟁력 강화						26	26	96.5
V-1- 일반재정(1)	금융중심지 조성과발전	일반회계	1100-1135	금융중심지조성과발전	단위 사업	21	20	97.81
V-1- 일반재정(2)	금융관련 국제협력	일반회계	1100-1131-302	금융관련 국제협력	세부 사업	(6)	(5)	91.77

(단위 : 억원, %)

성과목표관리체계				대상사업				
과제 코드	관리과제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예산사업명	사업구분	'11 예산	'11 결산	집행률
성과목표 V - 2: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선진화						51	50	98.04
V-2- 일반재정(1)	APG유형론 실무회의 개최	일반회계	1300-1331-302	APG유형론 실무회의	세부 사업	(4)	(4)	92.53
V-2- 정보화(1)	FIU 전산망 구축운영	일반회계	1300-1331-501	FIU전산망구축운영 (정보화)	세부 사업	(46)	(46)	98.56

< 일반회계 >

(단위:백만원)

회계	지정	분야	부분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단위 사업수	단위사업	단위사업명	세부 사업수	세부사업	세부사업명	'11예산	'11결산	관리과제코드	관리과제명	비고
합계																
11	0	010	014	1100	금융정책지원	2	1131	금융정책지원	3	301	금융인력체계개선	71	50	III-1-일반재정(1)	금융인력 체계개선	단위사업1, 세부사업1
11	0	010	014	1100	금융정책지원	2	1131	금융정책지원	3	302	금융관련 국제협력	573	526	V-1-일반재정(2)	금융관련 국제협력	단위사업1, 세부사업1
11	0	010	014	1100	금융정책지원	2	1131	금융정책지원	3	303	금융소비자보호	128	112	IV-2-일반재정(3)	금융소비자 보호	단위사업1, 세부사업1
11	0	010	014	1100	금융정책지원	2	1135	금융중심지 조성 개발전	3	301	금융중심지 추진	213	168	V-1-일반재정(1)	금융중심지 조성개발전	단위사업1, 세부사업3
11	0	010	014	1100	금융정책지원	2	1135	금융중심지 조성 개발전	3	302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보조	510	510	V-1-일반재정(1)	금융중심지 조성개발전	단위사업1, 세부사업3
11	0	010	014	1100	금융정책지원	2	1135	금융중심지 조성 개발전	3	303	금융전문인력양성	1,350	1,350	V-1-일반재정(1)	금융중심지 조성개발전	단위사업1, 세부사업3
11	0	010	014	1200	금융서비스	3	1231	금융서비스지원	1	301	저축의날 행사 및 저축장려	60	54	IV-2-일반재정(1)	저축의 날 행사	단위사업1, 세부사업1
11	0	010	014	1200	금융서비스	3	1232	모기지론이제 보전	1	541	모기지론이제보전	4,700	4,488	IV-1-일반재정(2)	우대보증자리론을 통한 무주택 서민 주택구입지원	단위사업1, 세부사업1
11	0	010	014	1200	금융서비스	3	1234	농어가물동미련 저축장려기금 출연	1	881	농어가물동미련저축장려 기금출연	63,700	63,700	IV-1-일반재정(1)	농어가물동 미련 저축장려	단위사업1, 세부사업1
11	0	010	014	1300	금융정보분석	1	1331	자금세탁방지 추진	3	301	FIU운영	1,295	1,237	관리과제없음		
11	0	010	014	1300	금융정보분석	1	1331	자금세탁방지 추진	3	302	APG유형론 실무회의 대상	430	388	V-2-일반재정(1)	APG유형론 실무회의 개최	단위사업1, 세부사업1
11	0	010	014	1300	금융정보분석	1	1331	자금세탁방지 추진	3	501	FIU전산망구축운영정보 화	4,623	4,556	V-2-정보화(1)	FIU 전산망 구축운영	단위사업1, 세부사업1
11	0	010	014	7100	금융행정지원	6	7101	분류·인건비	1	101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12,779	12,131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설정	
11	0	010	014	7100	금융행정지원	6	7102	소속기관·인건비	2	101	FIU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2,926	2,940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설정	
11	0	010	014	7100	금융행정지원	6	7102	소속기관·인건비	2	102	금자위사부국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645	576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설정	
11	0	010	014	7100	금융행정지원	6	7111	분류·기본경비	10	201	기획조정관실기본경비(총 액인건비·대상)	1,379	1,318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설정	
11	0	010	014	7100	금융행정지원	6	7111	분류·기본경비	10	202	대변인실기본경비(총액인 건비·대상)	17	16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설정	

회계	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단위 사업수	단위사업	단위사업명	세부 사업수	세부사업	세부사업명	'11예산	'11결산	관리과제코드	관리과제명	비고
11	0	010	014	7100	금융행정지원	6	7111	본부 기본경비	10	203	금융정책국기본경비(총액 인건비 대상)	72	72		과제미실정	
11	0	010	014	7100	금융행정지원	6	7111	본부 기본경비	10	204	금융서비스국기본경비(총 액인건비대상)	55	53		과제미실정	
11	0	010	014	7100	금융행정지원	6	7111	본부 기본경비	10	205	자문시장국기본경비(총액 인건비대상)	49	37		과제미실정	
11	0	010	014	7100	금융행정지원	6	7111	본부 기본경비	10	251	기획조정관실기본경비(총 액인건비 대상)	4,249	3,331		과제미실정	
11	0	010	014	7100	금융행정지원	6	7111	본부 기본경비	10	252	대변인실기본경비(총액인 건비 미대상)	254	243		과제미실정	
11	0	010	014	7100	금융행정지원	6	7111	본부 기본경비	10	253	금융정책국기본경비(총액 인건비 미대상)	335	278		과제미실정	
11	0	010	014	7100	금융행정지원	6	7111	본부 기본경비	10	254	금융서비스국기본경비(총 액인건비미대상)	302	226		과제미실정	
11	0	010	014	7100	금융행정지원	6	7111	본부 기본경비	10	255	자문시장국기본경비(총액 인건비미대상)	261	235		과제미실정	
11	0	010	014	7100	금융행정지원	6	7118	소속기관 기본경비	2	201	공자위사무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89	86		과제미실정	
11	0	010	014	7100	금융행정지원	6	7118	소속기관 기본경비	2	251	공자위사무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	400	318		과제미실정	
11	0	010	014	7100	금융행정지원	6	7132	정보화지원	1	501	정보화 지원(정보화)	542	519	III-2-정보화(1)	호출점 금융정책 및 간접 지원을 위한 정보화 지원	단위사업1, 세부사업1
11	0	010	014	7100	금융행정지원	6	7135	금융행정지원원 반	3	301	행정포털성 중건 및 능력개발	113	98	III-2-일반재정(1)	금융행정지원 호출화	단위사업1, 세부사업3
11	0	010	014	7100	금융행정지원	6	7135	금융행정지원원 반	3	302	정책연구개발	650	502	III-2-일반재정(1)	금융행정지원 호출화	단위사업1, 세부사업3
11	0	010	014	7100	금융행정지원	6	7135	금융행정지원원 반	3	303	금융정책발전기	330	325	III-2-일반재정(1)	금융행정지원 호출화	단위사업1, 세부사업3
11	0	010	014	8400	회계기금간거래(전 출금)	1	8411	회계기금간거래 일반회계)	1	880	일반회계에서공적자금상 환기금으로전출금	1,449,353	1,449,353		과제미실정	
11	0	010	014	8600	회계기금간거래(예 수입금상환)	1	8611	회계기금간거래 원금상환(일반회 계)	1	881	일반회계에서공자기금으 로 IBRD차관원금상환	2,754	2,622		과제미실정	
11	0	010	014	8700	회계기금간거래(예 수이자상환)	1	8711	회계기금간거래 이자상환(일반회 계)	1	882	일반회계에서공자기금으 로 IBRD차관이자상환	424	50		과제미실정	

합계	단위사업수	15
	관리과제수	11

< 공적자금상환기금 >

(단위:백만원)

회계	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단위 사업수	단위사업	단위사업명	세부 사업수	세부사업	세부사업명	'11예산	'11결산	관리과제코드	관리과제명	비고
합계																
44	0	010	014	9500	기금운용비	1	3574	기금운용비(공적 자금상환기금)	1	201	기금관리비	3,779,411	3,592,021			
44	0	010	014	9100	기금간거래(예수원 금상환)	1	9111	공공자금관리기 금예수원금상환(공 적자금상환기 금)	1	841	공적자금상환기금에서공 자기금으로 예수원금상환	1,291,900	1,291,900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설정	
44	0	010	014	9200	기금간거래(예수이 지상환)	1	9211	공공자금관리기 금예수이자상환(공 적자금상환기 금)	1	842	공적자금상환기금에서공 자기금으로 예수이자상환	2,487,500	2,285,716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설정	
44	0	010	014	9700	여유자금운용	1	9715	통화증권(관예 치(공적자금상환 기금)	1		통화증권기관예치	0	14,402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설정	

단위사업수	4
관리과제수	0

< 기술신용보증기금 >

(단위:백만원)

회계	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단위 사업수	단위사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	세부사업명	'11예산	'11결산	관리과제코드	관리과제명	비고
합계															
71	0	110	111	2400	산업금융지원	3	2441	기보 대위면제	1	300	기술보증대위면제	2,505,702	2,505,366		
													1-1-일반재정(2)	기술창업기업 등 핵심분야에 대한 보증 지원 강화	단위사업3
71	0	110	111	2400	산업금융지원	3	2442	중소기업투자	1	300	혁신신도형중소기업투자	1,053,300	861,348		
													1-1-일반재정(2)	기술창업기업 등 핵심분야에 대한 보증 지원 강화	단위사업3
71	0	110	111	2400	산업금융지원	3	2443	기보 운영	5	302	구상권관리	46,234	31,760		
													1-1-일반재정(2)	기술창업기업 등 핵심분야에 대한 보증 지원 강화	단위사업3
71	0	110	111	2400	산업금융지원	3	2443	기보 운영	5	303	기술평가	5,000	4,880		
													1-1-일반재정(2)	기술창업기업 등 핵심분야에 대한 보증 지원 강화	단위사업3
71	0	110	111	2400	산업금융지원	3	2443	기보 운영	5	304	보증신속	15,819	18,675		
													1-1-일반재정(2)	기술창업기업 등 핵심분야에 대한 보증 지원 강화	단위사업3
71	0	110	111	2400	산업금융지원	3	2443	기보 운영	5	305	보증도환급	23,015	23,015		
													1-1-일반재정(2)	기술창업기업 등 핵심분야에 대한 보증 지원 강화	단위사업3
71	0	110	111	2400	산업금융지원	3	2443	기보 운영	5	306	업무용부동산취득	10,757	12,949		
													1-1-일반재정(2)	기술창업기업 등 핵심분야에 대한 보증 지원 강화	단위사업3
71	0	110	111	3300	기금운영비	1	3379	기금운영비(기술 신용보증기금)	4	101	인건비	90,156	90,156		
													관리과제없음		
71	0	110	111	3300	기금운영비	1	3379	기금운영비(기술 신용보증기금)	4	201	기금관리비	48,406	42,172		
													관리과제없음		
71	0	110	111	3300	기금운영비	1	3379	기금운영비(기술 신용보증기금)	4	203	신금관리비	9,400	4,707		
													관리과제없음		
71	0	110	111	3300	기금운영비	1	3379	기금운영비(기술 신용보증기금)	4	204	IT운영(정보화)	8,992	7,401		
													1-1-정보화(2)	기초 IT 운영	단위사업1, 세부사업1
71	0	110	111	9700	여유자금운용	1	9701	여유자금운용(기 술신용보증기금)	4	971	통화금융기관에치	943,438	1,307,045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설정	
71	0	110	111	9700	여유자금운용	1	9701	여유자금운용(기 술신용보증기금)	4	972	비통화금융기관에치	100,000	145,000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설정	
71	0	110	111	9700	여유자금운용	1	9701	여유자금운용(기 술신용보증기금)	4	974	크레딧	20,000	12,638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설정	
71	0	110	111	9700	여유자금운용	1	9701	여유자금운용(기 술신용보증기금)	4	975	국제외채관리비	100,000	114,233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설정	

합계	단위사업수	5
	관리과제수	2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단위:백만원)

회계	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단위 사업수	단위사업	단위사업명	세부 사업수	세부사업	세부사업명	'11예산	'11결산	관리과제코드	관리과제명	비고
합계																
72	0	100	101	2300	농어민금융지원	2	2332	농식보대위면제	1	680	대위면제금	2,440,632	2,610,998			
72	0	100	101	2300	농어민금융지원	2	2377	농식보운영	2	310	소송관련적절차비용	327,027	179,692	1-1-일반제정(3)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지속적 보증지원	단위사업2
72	0	100	101	2300	농어민금융지원	2	2377	농식보운영	2	660	보증료환급	4,612	4,605	1-1-일반제정(3)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지속적 보증지원	단위사업2
72	0	100	101	3200	기금운영비	1	3277	기금운영비(농림 수산업자신용보 증기금)	5	101	인건비	5,699	5,691	1-1-일반제정(3)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지속적 보증지원	단위사업2
72	0	100	101	3200	기금운영비	1	3277	기금운영비(농림 수산업자신용보 증기금)	5	201	기금관리비	40,158	40,158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설정	
72	0	100	101	3200	기금운영비	1	3277	기금운영비(농림 수산업자신용보 증기금)	5	202	구상권관리	8,921	6,458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설정	
72	0	100	101	3200	기금운영비	1	3277	기금운영비(농림 수산업자신용보 증기금)	5	203	위탁사업비	5,272	3,105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설정	
72	0	100	101	3200	기금운영비	1	3277	기금운영비(농림 수산업자신용보 증기금)	5	204	선급법인세	4,338	3,133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설정	
72	0	100	101	9700	여유자금운용	1	9701	여유자금운용(농 림수산업자신용 보증기금)	2	971	통화금융기관에치	1,672	751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설정	
72	0	100	101	9700	여유자금운용	1	9701	여유자금운용(농 림수산업자신용 보증기금)	2	975	국채외채권매입	1,733,303	2,316,478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설정	
72	0	100	101	9700	여유자금운용	1	9701	여유자금운용(농 림수산업자신용 보증기금)	2	975	국채외채권매입	309,430	50,933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설정	

합계	단위사업수	4
	관리과제수	1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

(단위:백만원)

과목	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단위 사업수	단위사업	단위사업명	세부 사업수	세부사업	세부사업명	'11예산	'11결산	관리과제코드	관리과제명	비고
합계																
73	0	100	101	2300	농어민금융지원	1	2331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	1	301	저축장려금	121,264	155,275	IV-1-일반저축(1)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	단위사업1, 세부사업1
73	0	100	101	3200	기금운영비	1	3276	기금운영비(농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1	201	기금관리비	0	0		과제미설정	
73	0	100	101	9700	여유자금운용	1	9701	여유자금운용(농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2	970	한국은행예치	1	1		과제미설정	
73	0	100	101	9700	여유자금운용	1	9701	여유자금운용(농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2	971	통화금융기관예치	34,010	34,010		과제미설정	

합계	단위사업수	3
	관리과제수	1

< 부실채권정리기금 >

(단위:백만원)

과목	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단위 사업수	단위사업	단위사업명	세부 사업수	세부사업	세부사업명	'11예산	'11결산	관리과제코드	관리과제명	비고
합계																
74	0	010	014	1100	금융정책지원	1	1161	금융기관 반환금(부실채권정리기금)	1	770	금융기관 반환금	2,891,442	1,486,798			
74	0	010	014	3500	기금운영비	1	3573	기금운영비(부실채권정리기금)	4	101	인건비	155,422	122,702		과제미설정	
74	0	010	014	3500	기금운영비	1	3573	기금운영비(부실채권정리기금)	4	201	기금관리비	4,970	3,863		과제미설정	
74	0	010	014	3500	기금운영비	1	3573	기금운영비(부실채권정리기금)	4	202	자산관리비	4,519	2,840		과제미설정	
74	0	010	014	3500	기금운영비	1	3573	기금운영비(부실채권정리기금)	4	203	자산매각비	456,287	442,511		과제미설정	
74	0	010	014	3500	기금운영비	1	3573	기금운영비(부실채권정리기금)	4	203	자산매각비	769	3		과제미설정	
74	0	010	014	8300	기금간거래(대출금)	1	8320	기금간거래(대출금)	1	840	부실채기금에서공적자금 상환기금으로의전출금	960,000	750,000		과제미설정	
74	0	010	014	9700	여유자금운용	1	9703	여유자금운용(부실채권정리기금)	2	971	통화금융기관예치	1,047,521	159,197		과제미설정	
74	0	010	014	9700	여유자금운용	1	9703	여유자금운용(부실채권정리기금)	2	972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71,954	5,682		과제미설정	

합계	단위사업수	4
	관리과제수	0

< 신용보증기금 >

(단위:백만원)

회계	계정	분야	부호	프로그림	프로그림명	단위 사업수	단위사업	단위사업명	사무 사업수	사무사업	사무사업명	'11예산	'11결산	관리과제코드	관리과제명	비고
합계																
75	0	110	111	2400	신원보증지원	3	2431	신보 대위변제	3	300	일반보증대위변제	2,624,472	6,336,567	1-1-일반보증(1)	신보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 지원	단위사업3
75	0	110	111	2400	신원보증지원	3	2431	신보 대위변제	3	301	우동회사(신보)대위변제	2043,816	1,903,564	1-1-일반보증(1)	신보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 지원	단위사업3
75	0	110	111	2400	신원보증지원	3	2431	신보 대위변제	3	302	시장인정특별보증대위변제	193,200	188,271	1-1-일반보증(1)	신보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 지원	단위사업3
75	0	110	111	2400	신원보증지원	3	2432	보증연계특자	1	300	보증연계특자	8,000	7,253	1-1-일반보증(1)	신보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 지원	단위사업3
75	0	110	111	2400	신원보증지원	3	2433	신보 운영	5	301	국산권관리	91,245	90,014	1-1-일반보증(1)	신보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 지원	단위사업3
75	0	110	111	2400	신원보증지원	3	2433	신보 운영	5	302	본점 지원이전	4,494	1,916	1-1-일반보증(1)	신보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 지원	단위사업3
75	0	110	111	2400	신원보증지원	3	2433	신보 운영	5	303	업무공간물	8,634	10,549	1-1-일반보증(1)	신보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 지원	단위사업3
75	0	110	111	2400	신원보증지원	3	2433	신보 운영	5	304	보증포탈금	96,652	91,372	1-1-일반보증(1)	신보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 지원	단위사업3
75	0	110	111	2400	신원보증지원	3	2433	신보 운영	5	305	통화금융기관이자	30	0	1-1-일반보증(1)	신보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 지원	단위사업3
75	0	110	111	3300	기금운영비	1	3378	기금운영비(신용 보증기금)	4	101	인건비	185,891	179,791	관리과제없음		
75	0	110	111	3300	기금운영비	1	3378	기금운영비(신용 보증기금)	4	201	기금관리비	87,028	77,784	관리과제없음		
75	0	110	111	3300	기금운영비	1	3378	기금운영비(신용 보증기금)	4	202	신금원세	23,830	23,373	관리과제없음		
75	0	110	111	3300	기금운영비	1	3378	기금운영비(신용 보증기금)	4	203	신보 IT운영(정보화)	13,338	13,278	1-1-정보화(1)	신보 IT 운영	단위사업1, 세부사업1
75	0	110	111	9700	여유자금운용	1	9702	여유자금운용(신 용보증기금)	5	971	통화금융기관예치	1,083,374	1,972,112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설정	
75	0	110	111	9700	여유자금운용	1	9702	여유자금운용(신 용보증기금)	5	972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30,000	630,000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설정	
75	0	110	111	9700	여유자금운용	1	9702	여유자금운용(신 용보증기금)	5	974	국채매입	97,000	357,885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설정	
75	0	110	111	9700	여유자금운용	1	9702	여유자금운용(신 용보증기금)	5	975	국채외채권매입	279,000	513,629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설정	
75	0	110	111	9700	여유자금운용	1	9702	여유자금운용(신 용보증기금)	5	977	기타유가증권매입	200,000	259,775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설정	

합계	단위사업수	5
	관리과제수	2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단위:백만원]

행차	계정	분과	부문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단위 사업수	단위사업	단위사업명	세부 사업수	세부사업	세부사업명	'11예산	'11결산	관리과제코드	관리과제명	비고
합계																
76	0	010	014	1100	금융정책지원	3	1131	금융구조조정 지원	3	310	출연	18,543	6,810,472		과제미설정	
76	0	010	014	1100	금융정책지원	3	1131	금융구조조정 지원	3	330	소송및법적절차비	872	46		과제미설정	
76	0	010	014	1100	금융정책지원	3	1131	금융구조조정 지원	3	370	기타정리지원경비들	56,075	5,086		과제미설정	
76	0	010	014	1100	금융정책지원	3	1132	비통화금융기관 이자상환(예금보 환기금채권상환 기금)	1	740	비통화금융기관이자상환	18,649	18,643		과제미설정	
76	0	010	014	1100	금융정책지원	3	1133	국공채이자상환(예 금보험기금채 권상환기금)	1	780	국공채이자상환	1,315,826	1,263,798		과제미설정	
76	0	010	014	3500	기금운영비	1	3575	기금운영비(예금 보험기금채권상 환기금)	2	101	인건비	11,682	9,624		과제미설정	
76	0	010	014	3500	기금운영비	1	3575	기금운영비(예금 보험기금채권상 환기금)	2	201	기금관리비	5,306	3,224		과제미설정	
76	0	010	014	9700	여유자금운용	1	9705	여유자금운용(예 금보험기금채권 상환기금)	2	971	통화금융기관예치	2,138,640	1,196,494		과제미설정	
76	0	010	014	9700	여유자금운용	1	9705	여유자금운용(예 금보험기금채권 상환기금)	2	972	비통화금융기관예치	655,998	466,303		과제미설정	
76	0	010	014	9800	차입금원금상환	2	9841	비통화금융기관 차입금원금상환(예 금보험기금채권 상환기금)	1	980	IBRD차입금원금상환	116,788	116,787		과제미설정	
76	0	010	014	9800	차입금원금상환	2	9861	국공채원금상환(예 금보험기금채 권상환기금)	1	980	예브채원금상환	3,730,000	3,730,000		과제미설정	

합계	단위사업수	7
	관리과제수	0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단위:백만원)

회계	계정	분야	부분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단위 사업수	단위사업	단위사업명	세부 사업수	세부사업	세부사업명	'11예산	'11결산	관리과제코드	관리과제명	비고
합계																
77	1	080	088	2800	주택금융지원	3	2831	주식보통영(주신 보계정)	3	301	구상권관리	1,470,936	1,561,442	IV-1-일반재정(3)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보증지원	단위사업1, 세부사업1
77	1	080	088	2800	주택금융지원	3	2831	주식보통영(주신 보계정)	3	302	보증료 환급	9,663	9,574	IV-1-일반재정(3)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보증지원	단위사업1, 세부사업1
77	1	080	088	2800	주택금융지원	3	2831	주식보통영(주신 보계정)	3	303	대위변제	11,147	10,018	IV-1-일반재정(3)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보증지원	단위사업1, 세부사업1
77	1	080	088	2800	주택금융지원	3	2871	차입금이자상환 (주신보계정)	1	741	차입금이자상환	223,000	221,803	IV-1-일반재정(3)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보증지원	단위사업1, 세부사업1
77	1	080	088	3400	기금운영비(주택신 용보증기금)	2	3476	기금운영비(주신 보계정)	4	101	인건비	8,424	7,487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설정	
77	1	080	088	3400	기금운영비(주택신 용보증기금)	2	3476	기금운영비(주신 보계정)	4	201	기금관리비	21,211	19,373	관리과제없음		
77	1	080	088	3400	기금운영비(주택신 용보증기금)	2	3476	기금운영비(주신 보계정)	4	203	위탁수수료	21,107	16,595	관리과제없음		
77	1	080	088	3400	기금운영비(주택신 용보증기금)	2	3476	기금운영비(주신 보계정)	4	202	기금운영정보화(정보화)	5,947	4,922	관리과제없음		
77	1	080	088	3400	기금운영비(주택신 용보증기금)	2	3476	기금운영비(주신 보계정)	4	202	기금운영정보화(정보화)	2,389	1,886	IV-1-정보보(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운용 정보화	단위사업1, 세부사업1
77	1	080	088	9700	여유자금운용	2	9701	여유자금운용(주 신보계정)	3	971	통화금융기관에치금	327,844	822,941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설정	
77	1	080	088	9700	여유자금운용	2	9701	여유자금운용(주 신보계정)	3	974	국공채매입	344,000	50,754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설정	
77	1	080	088	9700	여유자금운용	2	9701	여유자금운용(주 신보계정)	3	979	기타유기증권매입	435,625	324,263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설정	
77	1	080	088	9800	차입금원금상환	1	9840	비통화금융기관 차입금원금상환 (주신보계정)	1	989	차입금원금상환	28,000	28,000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설정	
77	2	080	088	2800	주택금융지원	3	2831	주연보통영(주연 보계정)	2	101	인건비	3,385	3,132	관리과제없음		
77	2	080	088	2800	주택금융지원	3	2831	주연보통영(주연 보계정)	2	201	기금관리비	2,840	2,499	관리과제없음		
77	2	080	088	2800	주택금융지원	3	2831	주연보통영(주연 보계정)	2	301	구상권관리	54	5	IV-2-일반재정(2)	역모기지론을 통한 서민층 노후연금 보충	단위사업1, 세부사업1
77	2	080	088	2800	주택금융지원	3	2831	주연보통영(주연 보계정)	2	302	대위변제	300	59	IV-2-일반재정(2)	역모기지론을 통한 서민층 노후연금 보충	단위사업1, 세부사업1
77	2	080	088	3400	기금운영비(주택신 용보증기금)	2	3476	기금운영비(주연 보계정)	1	202	기금운영정보화(정보화)	1,146	887	IV-1-정보보(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운용 정보화	단위사업1, 세부사업1
77	2	080	088	9700	여유자금운용	2	9701	여유자금운용(주 연보계정)	1	971	통화금융기관에치금	25,464	37,234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설정	

합계	단위사업수	8
	관리과제수	3

< 구조조정기금 >

(단위:백만원)

회계	계정	과목	분야	부문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단위 사업수	단위사업	단위사업명	세부 사업수	세부사업	세부사업명	'11예산	'11결산	관리과제코드	관리과제명	비고
합계																	
93	0	010	014	1100	금융정책지원	금융정책지원	1	1172	국공채이자상환(구조조정기금)	1	780	국공채이자상환	5,575,054	2,816,728			
93	0	010	014	2100	구조조정지원	구조조정지원	2	2131	금융구조조정지원(구조조정기금)	1	311	금융기관부실자산인수정리	189,400	86,747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실정	
93	0	010	014	2100	구조조정지원	구조조정지원	2	2132	기업구조조정지원(구조조정기금)	1	312	구조조정기업자산인수정리	4,500,000	1,661,362	11-1-일반재정(1)	금융·기업 구조조정지원	단위사업2
93	0	010	014	3500	기금운영비	기금운영비	1	3576	기금운영비(구조조정기금)	3	101	인건비	500,000	108,435	11-1-일반재정(1)	금융·기업 구조조정지원	단위사업2
93	0	010	014	3500	기금운영비	기금운영비	1	3576	기금운영비(구조조정기금)	3	201	기금관리비	6,004	5,988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실정	
93	0	010	014	3500	기금운영비	기금운영비	1	3576	기금운영비(구조조정기금)	3	202	자산관리비	8,898	6,841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실정	
93	0	010	014	9700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	1	9720	여유자금운용(구조조정기금)	2	971	통화금융기관예치	3,529	2,958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실정	
93	0	010	014	9700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	1	9720	여유자금운용(구조조정기금)	2	972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83,802	796,409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실정	
93	0	010	014	9700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	1	9720	여유자금운용(구조조정기금)	2	972	비통화금융기관예치	73,451	148,000	관리과제없음	과제미실정	

합계	단위사업수	5
	관제수	1

(단위 : 백만원)

성과 목표	관리과제 코드	관리과제명	예산 변경		지표 변경		목표치 변경		변경 사유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I-1. 금융공기업을 활용한 기업자금지원 및 기업구조조정			4,015,655	4,015,605					· 관리과제 예산 변경에 따른 상위 성과목표 예산 변경
I-1-1-재정②		기술창업기업 등 핵심분야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	1,180,760	1,180,710					· 예산 감액
III-2. 핵심 금융인프라 선진화로 금융발전 촉진			1,712	1,608					· 관리과제 예산 변경에 따른 상위 성과목표 예산 변경
III-2-재정①		금융행정지원 효율화	1,170	1,066					· 예산 감액
IV-2.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추진			1,582	542					· 관리과제 예산 변경에 따른 상위 성과목표 예산 변경
IV-2-재정③		금융소비자보호	168	128					· 예산 감액
V-1. 금융 글로벌화의 지속적 추진으로 국제 경쟁력 강화			2,961	2,596					· 관리과제 예산 변경에 따른 상위 성과목표 예산 변경
V-1-1-재정①		금융중심지 조성파발전	2,373	2,023	실무인력양성 교육인원	삭제	140명		· 예산 감액 - 금융전문인력 사업 내 실무전문인력양성 세사업 예산(350 백만원)이 전액 감액되어 이와 관련한 성과 목표를 삭제
V-1-1-재정②		금융관련 국제협력	588	573					· 예산 감액

별첨7

관리과제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성과목표관리체계		최근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비고
과제코드	관리과제명	'07년도 ¹⁾	'08년도 ¹⁾	'09년도 ¹⁾	'10년도 ¹⁾	
전략목표 : I. 경제활성화 지원						
성과목표 : 1. 금융공기업을 활용한 기업자금지원 및 기업구조조정						
I-1-재정①	신보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 지원				보통	
I-1-재정②	기술창업기업 등 핵심분야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				보통	
I-1-재정③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지속적 보증지원				보통	
I-1-정보화①	신보 IT 운영					11년 성과계획 신규 관리과제
I-1-정보화②	기보 IT 운영					11년 성과계획 신규 관리과제
전략목표 : II. 튼튼한 금융시스템 구축						
성과목표 : 1.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 등을 통한 위기대응 능력 보강						
II-1-재정①	금융·기업 구조조정지원					09년~11년 한시사업
전략목표 : III.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성과목표 : 1. 금융산업의 경쟁력제고기반 마련						
III-1-재정①	금융업법 체계개편					10년 성과계획 신규 관리과제
성과목표 : 2. 핵심 금융인프라 선진화로 금융발전 촉진						
III-2-정보화①	효율적 금융정책 및 감독 지원을 위한 정보화 지원					11년 평가대상
III-2-재정①	금융행정지원 효율화					행정지원 사업
전략목표 : IV. 서민·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성과목표 : 1.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IV-1-재정①	농어가목돈 마련 저축장려					의무지출 사업으로 평가실익 없음
IV-1-재정②	우대보증자리론을 통한 무주택 서민 주택구입지원	보통				11년 평가대상
IV-1-재정③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보증지원	보통				11년 평가대상
IV-1-정보화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운용 정보화					11년 평가대상
성과목표 : 2.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추진						
IV-2-재정①	저축의 날 행사					행사개최비용으로 평가실익 없음
IV-2-재정②	역모기지론을 통한 서민층 노후연금 보증					11년 평가대상
IV-2-재정③	금융소비자 보호					11년 단년도 사업
전략목표 : V. G-20회의 개최를 통한 금융의 글로벌 위상 제고						
성과목표 : 1. 금융 글로벌화의 지속적 추진으로 국제 경쟁력 강화						
V-1-재정①	금융중심지 조성과발전			미흡 (금융전문인력양성사업)		
V-1-재정②	금융관련 국제협력					10년 성과계획 신규 관리과제
성과목표 : 2.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의 선진화						
V-2-정보화①	FIU 전산망 구축운영		보통	매우우수		
V-2-재정①	APG유형론 실무회의 개최					11년 단년도 사업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

39. 성과보고 및 업무계획

- 기관장에게 보고한 실·국 단위 업무계획서(2012년)

☐ 금융위원회는 실·국 단위로 업무계획을 금융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있지 않으며, '12년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은 별첨과 같습니다.

* (첨부) '12년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2012년 업무계획

기업과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든든한 금융

2012년 금융정책 방향과 과제

2011. 12. 30.



금융위원회

목 차

I. 지난 4년 금융정책 평가

1. 지난 4년 금융정책 추진성과
2. 보완할 점

<참고1> 2011년 업무계획 추진현황

<참고2> 지난 4년간 금융산업 변화모습

II. 2012년 금융정책 추진여건 및 전망

1. 대외여건 및 전망
2. 대내여건 및 전망

III. 2012년 금융정책 방향

1. <제1목표> 위기에 강한 금융
[과제①] 시장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과제②] 금융시스템 선진화
2. <제2목표> 기업과 동반금융
[과제③]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
[과제④] 미래대비 금융지원 확충
3. <제3목표> 서민과 나눔금융
[과제⑤] 서민금융 지원 확대
[과제⑥] 사회공헌활동 및 소비자보호 강화

I. 지난 4년 금융정책 평가

1. 지난 4년 금융정책 추진성과

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등 시장안정 노력

◆ 글로벌 금융위기의 국내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위기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

□ '08.9월 리먼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주력

○ 원화·외화 유동성 공급, 은행 자본확충 지원, 금융회사 유동성·건전성 제고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

*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1,000억불 한도), 정부·한은을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 채권시장안정펀드(5조원) 및 은행 자본확충펀드(4조원)를 통한 지원 등

○ 유동성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실물경제의 신용경색 발생을 차단

* 중소기업 대출 만기 전액 연장, Fast Track 프로그램 실시(지원업체수 11,861개, 지원액 30.7조원), 보증공급 확대(55.4조원), 상생보증 프로그램 가동 등

□ 위기극복 이후 금융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금융안정 기반을 공고히 함

○ 과도한 자본 유출입에 따른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를 도입

* 외화유동성 비율 산출시 자산유형별 유동화 가중치 적용, 외화안전자산 보유제도 도입, 여전사 원화용도 외화차입 제한, 김치본드 투자제한 등

○ 은행의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을 억제하고 유동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대율 규제를 도입

* 원화에대율 '13년말(100% 이하) 도입, '11.6.29대책시 도입시기 단축('12.6말)

○ 금년 하반기 들어 유럽 재정위기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은행 스스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 외화자금 확보를 유도

* '11.11말 국내은행 외화현금유동성은 '11.6말 대비 6배 이상 증가

⇒ 주요국보다 빠르게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금융권의 위기대응능력도 대폭 향상

* 단기외화차입비중 : ('08말) 50.1% → ('11.9말) 29.2%

* 은행 BIS비율 : ('08.6말) 11.4% → ('11.9말) 14.1%

나. 잠재불안 요인에 대응

◆ 그동안 부채중심의 금융 외형성장과정에서 누적된 가계부채, 저축은행 등 잠재위험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

-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추진
 -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와 대출구조 개선 등을 위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6.29대책)'을 마련·시행
 -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외형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레버리지 규제 도입 등 여전사의 가계대출 건전성 강화방안 마련
- 저축은행 업권 전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부실 저축은행을 신속·과감히 정리
 - 저축은행 일괄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7개 저축은행을 정리하는 등 '11년중 16개 저축은행을 구조조정
 - 「구조조정기금」 및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재원을 활용하여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뒷받침
 - * 5조원의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하여 저축은행 PF 부실채권 등을 매입
 - ** 예금보험기금 내에 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조달을 위해 설치
- PF 부실이 시장전반의 취약요인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PF 부실을 신속히 정리하는 한편 사업장 정상화를 최대한 지원
 - PF 부실 정리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시장에 의한 자율적인 PF 부실 정리를 유도
 - PF 정상화뱅크* 설립 등 사업장 정상화 지원 기반을 마련
 - * 7개 시중은행이 출자, '11년중 1.8조원 규모의 은행권 PF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사업성 있는 사업장의 정상화 추진

⇒ 시장안정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들을 관리함으로써 시장안정 기반을 공고히 하고 대외 불안요인에 대한 대응능력을 극대화

- * 신규 주택담보대출중 고정금리대출 비중 : ('10.12월중) 35% → ('11.9월중) 19.7%
- * 은행권 PF 부실채권 규모 : ('10.12말) 6.3조 → ('11.9말) 3.9조

다.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충

◆ 저소득층·저신용층 등 취약계층의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3대 서민금융 등을 통해 서민금융 지원을 확충

□ 3대 서민금융을 통해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대폭 확대

○ '08년 이후 '11.10월말까지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를 통해 총 3.4조원(약 40.4만건)을 서민층에 공급

* 지원실적('11.10월말까지): 미소금융('08.7) 5.4만건 0.4조원, 새희망홀씨('10.11) 14.9만건 1.2조원, 햇살론('10.7) 20.1만건 1.8조원

□ 가계부채 관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민층의 금융애로에 대응하여 「서민금융 기반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

* 미소금융 적격자 발굴·경영컨설팅 강화,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 전환대출 지원대상 확대(연소득 2,600만원 이하), 사전채무조정 제도 2년 연장 등

□ 수수료, 금리 등 금융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

○ '08년 이후 4차례에 걸쳐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을 인하

*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상한: ('08.10 이전) 3.3~3.6% → ('11.6) 2.0~2.15%
(전통시장내 중소가맹점 1.6~1.8%, 서울시내 3대 대형백화점 2.0~2.4%)

○ 여신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대출 최고금리를 2차례('10.7월, '11.6월)에 걸쳐 10%p 인하(49% → 39%)

○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하고 채무조정과 전환대출 등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

* 채무조정('08.1~'11.8월) 51.4만명(신용회복기금 21.4만명, 신복위 30만명)
전환대출('08.1~'11.8월) 5.9만명, 0.6조원

⇒ 금융채무불이행자와 저신용층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

* 금융채무불이행자: ('08월)227만명 → ('11.9월)130만명

* 저신용자(7~10등급) 비중: ('07월)22.9% → ('11.6월)17.3%

라. 한국 금융의 국제적 위상 제고

◆ 성공적 위기극복을 바탕으로 G20 글로벌 금융개혁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금융 선진화 노력을 꾸준히 추진

- '10년 G20 의장국으로서 핵심 금융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선진국과 신흥국간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 BCBS, FSB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Basel III*, SIFI 규제** 관련 서울 G20 정상회의 합의사항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 * 은행 자본규제, 유동성 규제, 레버리지 규제 등
 - ** 추가 자본 적립방안, 정리절차 마련 등
 - 신흥국 관점의 규제개혁 및 거시건전성 정책체계를 신규의제로 제안하고 우리의 금융위기 극복 경험 등을 국제적으로 공유
- 선진금융 방식과 국제기준을 지속적으로 도입하는 등 금융 선진화 노력도 착실히 추진
 - 자본시장법 제정 등 자본시장 규율체계를 선진형으로 전환* 하고 전문사모펀드(헤지펀드) 제도 도입
 - *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Negative System) 도입 등
 - 금융중심지 지정('09.1월, 서울 여의도 및 부산 문현), 해외진출 확대* 등 금융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 경주
 - * 금융회사 해외점포수 : ('07말) 253개 ('11.9말) 341개
 - 파생상품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고 실질심사제도 도입·소속부제도 개편 등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을 제고
 - * 사후증거금 제도 개선, 파생상품 포지션 한도 제한 등
 - 국제회계기준(IFRS), 보험사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 등 선진제도를 도입·시행
 - 한국 증시가 FTSE 선진국 지수에 편입('09.9월)되고,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구(FATF)에도 가입('09.10월)

⇒ 한국 금융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되고 선진금융국가로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2

보완할 점

- (시장불안요인) 유럽 재정위기 확산 우려와 가계부채 문제는 여전히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의 잠재 불안요인
 - 유럽 재정위기 확산 우려가 지속되고 북한정세의 불확실성 등으로 금융시장은 주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 높은 자본시장 개방도와 파생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요인도 작용
 -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으로 은행권은 대출 증가속도와 구조가 개선되고 있으나, 제2금융권 증가세는 지속
 - 경기부진 등으로 서민가계 소득여건이 악화되고 지출부담이 늘어나 연체율이 급등할 경우 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향후과제) 유럽 재정위기 등 시장불안요인에 철저히 대응하고, 제2금융권을 포함한 부문별 가계대출 증가속도 관리와 구조 개선을 지속 추진할 필요

- (실물부문) 그간 실물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은 위기사정이 어려워진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 공급확대에 집중
 -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되고 있는 연대보증제도, 담보위주 대출 관행 등의 중소기업 지원 제도와 관행에 대한 근본적 개선은 미흡
 - 대출 부실화에 따른 책임문제도 기술력·성장성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부족한 요인
 - 유동성 공급 등 시장불안에 대한 대응에 집중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 100세 시대 등 미래를 대비한 금융지원에는 미흡

(향후과제) 중소기업 지원관련 제도·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미래에 대비한 금융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

□ (서민금융 등) 서민 금융지원의 경우 일정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서민층이 충분히 체감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함

- 3대 서민금융 등을 통한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는 서민층의 금융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
 - 제2금융권·대부업체 등 서민층이 이용하는 서민금융기관의 상대적 고금리 등 금융부담이 큰 상황
 - 특히, 대학생 등 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이 미흡한 실정
- 카드 가맹점수수료를 지속 인하해 왔으나, 중소가맹점 등은 여전히 상대적인 고부담을 이유로 불만이 지속

(향후과제) 대학생과 서민층의 금융애로 완화를 지속 추진할 필요

□ (금융인프라) 자산규모 증가 등 그간 금융산업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으나, 이에 비해 질적 수준은 미흡

- 금융산업의 생산성*·경제기여도**는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
 - * 제조업 대비 금융업의 생산성(배) : 한국 1.01, OECD 20개국 평균 1.65
 - ** 금융산업 부가가치 비중(% , 08년) : 한국 6.6, 영국 7.5, 미국 8.4
- CEO에 권한집중·사외이사의 자기권력화, 저축은행 상근감사의 견제기능 소홀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신뢰 저하
- 금융 IT화를 통해 효율성이 제고된 반면, IT 보안에 대한 관심과 인식부족으로 개인정보 유출, 전산장애가 수차례 발생
 - * 현대캐피탈(11.4월), 농협(11.4월)
- 보이스 피싱, 저축은행 후순위채 판매* 등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중시 경영 및 소비자보호 제도나 감독이 충분하지 못함
 - * 저축은행 후순위채 불완전판매관련 신고 접수건수(10.28 기준) : 4,310건, 1,535억원
- 저축은행 사태이후 비리예방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금융감독에 대해 신뢰성이 저하

(향후과제)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 지배구조·IT보안·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및 금융감독의 신뢰를 제고

[참고1] 2011년 업무계획 추진현황

☐ 2011년 업무계획상 '미래로 세계로, 함께하는 선진금융'을 위해 선정했던 대부분의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

○ 현재 66개 세부과제 중 62개 과제는 정상 추진중

○ 4개 과제는 법률안 국회제류 및 관계부처 법령개정 지연 등으로 다소 지연

*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 금융중심지법 시행령 및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고용부 소관)과 연관) 지연

< 2011년 업무계획 추진현황 >

분 야	세 부 과 제		추진상황	
	개수	주요 내용	정상	지연
1. 시장불안요인에 선제대응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 예보기금 공동계정도입, 예보료 인상 • 자본유출입 모니터링 강화 등 	9	-
2. 실물경제 지원 강화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장 동력 지원 확대 •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금융지원 • 창업활성화 등 일자리 창출 지원 등 	11	1
3.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 자동차보험 부담 경감방안 추진 •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등 	8	1
4. 서민금융 내실화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소금융 활성화 • 햇살론 공급확대 및 전환대출 활성화 • 신용회복 지원 확대 등 	13	-
5. 금융시스템 선진화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 추진 • 중앙청산소 도입 추진 • G20 금융개혁의 성공적 추진 	6	1
6. 글로벌 경쟁력 확충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정 • 금융투자회사의 전문화·특성화 촉진 • 금융중심지 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 	15	1

☐ 법률개정 사항은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관계부처 시행령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는 개정조치 완료 후 신속히 추진

[참고2] 지난 4년간 금융산업 변화 모습

□ (자산규모) 전반적인 금융자산 규모가 꾸준히 성장

금융업권별 자산규모 추이 (조원)

	FY 07	FY 08	FY 09	FY 10	2011.9	07말 대비
은행	1,567.8	1875.3	1800.0	1841.8	1,995.7	+27.3%
보험사	371.4	402.3	458.7	518.8	545.9	+47.0%
증권사	130.9	148.8	177.0	199.8	253.0	+93.3%
여전사	89.6	102.1	104.1	120.8	154.6	+72.5%
저축은행*	53.2	63.5	74.9	86.4	59.7*	+12.2%
계	2,212.9	2,592.0	2,614.7	2,767.6	3,008.9	+36.0%

* 2011.9월 현재 영업중인 저축은행(91개사) 기준

□ (수익성) 금융위기를 겪으며 전반적인 수익성이 저하되었으나, 점차 위기이전의 이익수준으로 회복해 가는 모습

금융업권별 당기순이익 추이 (조원)

	FY 07	FY 08	FY 09	FY 10	2011.1~9
은행	15.0	7.7	6.9	10.1	12.4
보험사	3.8	1.9	4.0	6.1	3.2*
증권사	4.4	2.0	2.9	2.8	1.2*
여전사	3.7	2.4	2.8	3.7	2.1
저축은행	0.37	△0.13	△0.56	△0.80**	0.14**

* 2011.4~9월 수치(3월결산) / ** 2011.7~2011.9월 수치(6월결산)

□ (건전성) 위기 이후 은행 BIS 비율이 14%수준으로 개선되는 등 전반적인 건전성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

금융업권별 건전성지표 추이 (%)

		FY 07	FY 08	FY 09	FY 10	2011.9말
은행	BIS비율	12.28	12.31	14.36	14.55	14.17
	부실채권비율	0.7	1.1	1.2	1.9	1.7
보험사	부실채권비율	1.98	1.86	1.74	1.15	1.13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	591	617	580	555	518
여전사	카드사 연체율	3.79	3.43	2.23	1.68	1.91
	카드사外 연체율	2.8	4.5	3.9	3.8	3.5
저축은행	BIS비율	9.09	9.08	9.43	9.05	10.31*
	부실채권비율	10.2	9.4	10.3	10.6	15.2*

* 2011.9월 현재 영업중인 저축은행(91개) 기준

II. 2012년 금융정책 추진여건 및 전망

1 대외여건 및 전망

◇ 유럽 재정위기 지속, 중국경기 둔화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및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예상

- '12년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정책대응 여력 약화 등으로 경기회복세가 약화될 전망
 -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는 실물·재정부문에서 초래된 것으로 위기해소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유럽은 재정위기 해결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재정긴축 등으로 경기둔화가 예상
 - 미국은 주택·고용 부진과 저금리·재정악화에 따른 정책대응 능력 약화 등으로 빠른 경기회복세 기대는 어려운 상황
 - 중국 등 신흥국은 내수를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가 예상되나 글로벌 경기악화에 따른 수출감소 등 둔화 우려도 상존

< IMF 경제성장률 전망(11.9.20일, 단위 : %) >

구 분	전세계	미국	유로존	중국	일본
'11년	4.0	1.5	1.6	9.5	△0.5
'12년	4.0	1.8	1.1	9.0	2.3

- 국제금융시장은 남유럽 재정위기가 주변국 및 은행으로 확산될 우려 등 불확실성 지속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 건전성 악화에 따라 자본확충이 어려워진 유럽계 은행들이 자산감축에 나서면서 글로벌 신용경색이 심화될 가능성
 -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성향으로 신흥국에 대한 투자자금이 이탈하는

등 시장변동성이 확대되고 미국 국채 등 안전자산 선호 심화 우려

2 대내여건 및 전망

◇ 실물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서민층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금융부문에서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 내년도 국내경제는 유럽·미국 등 세계 주요국의 성장둔화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될 전망

* 한은·재정부는 '12년도 성장률 둔화를 예상 ('11년 3.8% → '12년 3.7%)

○ 특히 경기애 민감한 중소기업·서민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예상

- 경기둔화 등으로 중소기업 여신공급이 위축될 경우 창업 부진, 투자감소 등 실물부문 성장기반이 취약해질 우려
- 서민, 저신용층의 경우 소득회복 지연으로 생계대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나 원리금 부담은 가중될 우려

□ 국내금융시장도 경제 성장둔화와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 유럽 재정위기 심화 및 북한정세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외국인투자 감소 및 외화차입금의 급격한 유출 가능성

* (주요신평사·IB등 평가) 북한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한국 신용등급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북한권력이양 과정에서 동아시아내 불확실성이 증대될 가능성

○ 경기 둔화와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 등에 따라 금융회사의 수익성도 저하될 가능성 상존

Ⅲ. 2012년 금융정책 방향

〈 기본방향 : 3대 정책목표 및 6개 중점과제 〉

◇ 「기업과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든든한 금융」을 통해 실물경제의 탄탄한 성장 지원과 금융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조화롭게 추구

⇒ 이를 위해 3대 정책목표와 6개 중점과제에 역량을 집중

【정책목표 1 : 위기에 강한 금융】

- ① **시장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 유럽 재정위기, 북한정세 변화, 가계부채 등 대내외 잠재불안 요인에 적극 대비
- ② **금융시스템 선진화** :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금융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체질 개선 등 다각적인 금융선진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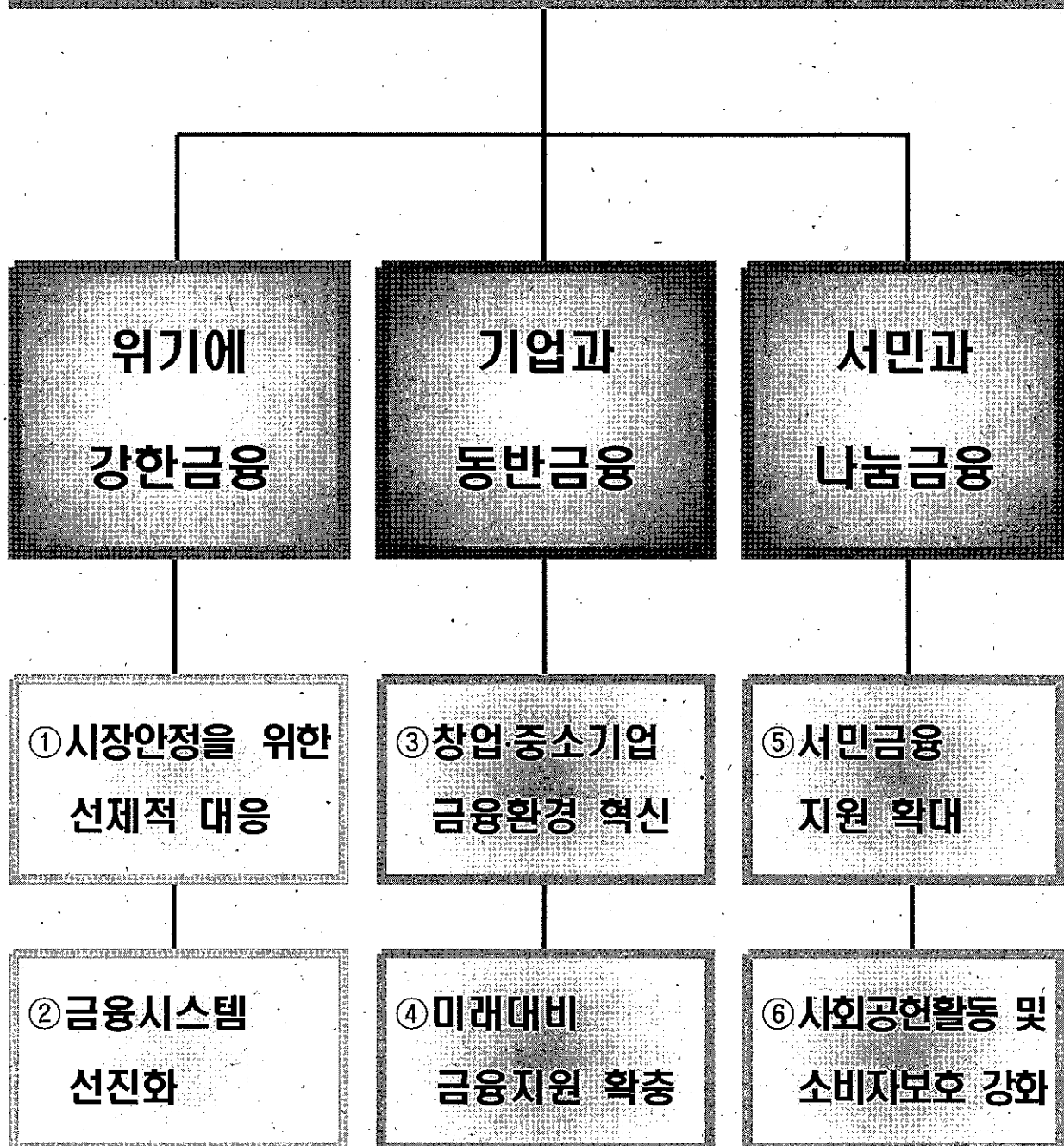
【정책목표 2 : 기업과 동반 금융】

- ③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 : 창업·중소기업의 금융환경을 혁신하고 경기둔화에 대응한 기업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
- ④ **미래대비 금융지원 확충** :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대비 금융지원을 확충

【정책목표 3 : 서민과 나눔 금융】

- ⑤ **서민금융 지원 확대** : 서민금융을 공급하는 다각적인 체계를 구축·발전시켜 서민 등 금융 애로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
- ⑥ **사회공헌활동 및 소비자보호 강화** : 금융권의 사회공헌활동 강화를 적극 유도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더욱 확충

기업과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든든한 금융



기업과 서민에게 희망을



위기에 강한 금융

기업과

[과제①] 시장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과제②] 금융시스템 선진화

[과제③]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

가. 위기발생에 대비한 신속 대응체계 확립

- ① 시장 동향·위험요인 점검 강화
- ② 위기발생시 신속대응

나. 가계부채 및 PF 연착륙 추진

- ① 가계부채 연착륙 추진
 - 가계부채증가 속도관리
 - 대출구조 개선
 - 가계부채 동향 점검 강화
- ② PF 연착륙 추진
 - PF대출 정상화 지원
 - PF대출 건전화 방안 검토

다. 외환건전성 제고

- ① 외화유동성 확보 및 차입선 다변화
- ② 외환건전성 규제 탄력적 적용

라. 금융회사 위기대응능력 확충

- ① 금융회사 이익 내부유보
- ②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 방지
- ③ 자본적정성 기준 강화
- ④ 금융회사 감독 강화

마. 금융권 건전성 강화

- ① 저축은행 조기정상화
- ② 상호금융 건전성 관리 강화

가. 자본시장 개혁

- ① 자본시장 시스템 개편
 - 투자은행 도입 및 헤지펀드 정착
 - 신용평가제도 선진화·파생상품시장 건전화 추진 등
- ② 금융투자산업 경쟁력 제고
- ③ 단기자금시장 개편

나. 금융산업 지배·소유 구조 개선

- ①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
- ② 대주주 자격요건 유지의무
- ③ 은행소유규제 검토

다. 전자금융을 통한 경쟁력 제고

- ① 경쟁도입 및 감독시스템 정비
- ② 전자금융 인프라 마련

라. 투명·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① 공시·제재 강화
- ② 회계법인 감사품질 제고
- ③ 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

마. 금융국제화 확대 추진

- ①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 ② 금융중심지 기반 확대
- ③ FTA 이행 후속조치 마련
- ④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

가. 창업 지원 강화

- ① 창업지원 환경 혁신
 - 연대보증제도 개선
 - 정책금융기관 지원 확대
 - 미소금융 지원
 - 청년창업지원펀드 마련
- ② 재기 중소기업인 신용회복 지원
 - 신용회복지원 확대, 법인부실책임자 등록제도 개선 등

나. 중소기업 금융인프라 혁신

- ① 금융회사 여신관행 개선
 - 은행 임직원 면책제도 개선
 - 중기 신용평가 인프라 개선
- ② 정책금융기관 투자지원 강화
- ③ 직접금융시장 접근성 확대

다. 정책금융 효율화

- ① 정책금융 공급 확대
- ② 정책자금의 효율적 배분
 - 창업, 신생기업 보증 확대
- ③ 일자리 창출기능 강화

라.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

- ① 채권단 주도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 ② 경기 취약업종 구조조정 지원
 - 대주단협약 운영기한 연장, P-CBO 확대

주는 든든한 금융



동반금융

[과제④]

미래대비 금융지원 확충

가. 신성장동력 산업 금융지원 강화

- ① 정책자금 지원 확대
 - 신성장동력산업 육성펀드 확대
 - 정책금융공사 온렌딩 지원 확대
 - 해외 프로젝트 여신 지원 강화
- ② R&D 자금공급 확대 및 특례 보증 확대
- ③ 코스닥 상장 지원 강화

나. 녹색 산업 금융지원 강화

- ① 녹색산업 정책금융 공급 확대
- ②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
- ③ 녹색금융상품 출시 유도
- ④ 녹색 경영공시 강화

다. 100세 시대 대비 금융안전판 제공

- ① 노후대비 장기투자상품 마련
 -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신설
- ② 주택연금 활성화 추진
 - 지급방식 개선
 - 주택연금 취급기관 확대
- ③ 연금보험 활성화
- ④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 ⑤ 퇴직 금융인 취업지원
 - 금융권 퇴직인력 DB 구축



서민과 나눔금융

[과제⑤]

서민금융 지원 확대

가. 서민 금융공급 확대

- ① 3대 서민금융 공급 확대
- ② 서민층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 자금 지원 강화
- ③ 금융비용 부담 완화
 - 저금리전환대출 대상 확대
 -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나. 서민층 금융피해 방지

- ① 사금융 피해방지 및 구제강화
 - 불법광고·신종사기 상시점검
 -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환급 제도 개선
- ② 전화금융사기 피해방지
 - 유형별 맞춤형 예방대책
 - 금융회사 피해보상
- ③ 보험사기 근절 및 보험금 누수 방지

다. 신용회복 지원 강화

- ① 신용회복 지원관련 비용 경감
- ② 대학생 신용애로 완화
 - 채용시 신용정보 이용제한
 - 정부 일반상환 학자금 연체 정보 일정기간 집중유예 추진

라. 신용카드 제도 개선

- ① 수수료율 체계 합리화
- ② 직불형 카드 활성화
- ③ 가맹점 표준약관 제정
- ④ 수수료율 조회시스템 구축

[과제⑥]

사회공헌활동 및 소비자보호 강화

가. 금융회사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 ① 사회공헌활동 예산 확대
- ② 고졸채용 지속 확대
- ③ 사회공헌활동 지속 확대
 - 학자금보증대출상품 제공
 - 대학생 등 주거안정방안
 - 청년창업 지원
- ④ 사회공헌활동 내실화
 - 사회공헌 담당조직 확충
 - 사회공헌 실적 비교공시 및 경영실태평가 반영

나. 금융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 ① 금융상품 비교공시 확대
- ② 보험상품 및 연금저축상품 설명의무 강화
- ③ 연령별·계층별 금융교육 강화
- ④ 불완전판매 감독 강화

다.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 ① 6대 판매행위 규제원칙 규정
- ② 제재강화 및 분쟁조정제도
- ③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라. 전자금융 거래 안전성 강화

- ① 개인정보 수집 억제
- ② IT인력·예산 강화
- ③ 연간 IT보안계획 수립
- ④ IT보안의무 위반시 제재강화

1 <제1목표> 위기에 강한 금융

< 기본 방향 >

- ◆ 북한 리스크 대두 이후 보다 확대된 신속 대응체계를 통해 대내외충격 발생에 신속히 대응
 - 가계부채 등 잠재위험요인 관리, 금융회사 위기대응능력 강화 등을 통해 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처
- ◆ 자본시장 혁신, 투명·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 금융 인프라를 정비
 - 국제적인 금융협력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국제적인 금융협력 강화 등 금융국제화도 지속 추진

■ [제①과제] 시장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 가. 위기발생에 대비한 신속대응체계 확립
- 나. 가계부채 및 PF 연착륙 추진
- 다. 외환건전성 제고
- 라. 금융회사 위기대응능력 확충
- 마. 금융권 건전성 강화

■ [제②과제] 금융시스템 선진화

- 가. 자본시장 개혁
- 나. 금융산업 지배·소유 구조 개선
- 다. 전자금융을 통한 경쟁력 제고
- 라. 투명·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마. 금융국제화 확대 추진

제①과제

시장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가. 위기발생에 대비한 신속대응체계 확립

◆ 유럽 재정위기, 세계경기 부진 등 대외 불안요인 지속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

⇒ 글로벌 충격의 국내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위기발생시 확고한 시장안정 도모

① (상시시장점검)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 하고, 상황별로 대응방안을 신속 시행 추진

- 금융위·금감원 합동 「비상금융상황대응팀(팀장: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대외여건 변화와 이상징후에 대해서 신속히 대응
 - * 채권, 주식, 외환, 역외 등 외국인자금 유출입 동향, 은행 외화유동성 현황 등 시장동향을 「비상금융통합상황실」 등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
-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한 계량적 점검과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정성적 점검을 병행하여 위협요인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
 - * 위기 예측력이 높은 지표(외화유동성, 단기외채, 자산건전성 등) 및 리스크 요인(가계부채, 신용카드 대출, 부동산 PF 등)을 점검
- 글로벌 IB, 해외사무소, 외은지점 등과 Hot-line을 가동하여 국제금융시장 및 외국인 투자자 동향을 보다 신속히 파악

② (위기대응) 위기 발생시에는 시장불안을 초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既마련된 위기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신속·과감하게 시행

- 위기대응계획의 상황별 조치사항(action plan)을 재점검·보완하여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필요시 관련 법규도 사전 정비
-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정보와 인식을 공유하는 등 국내외 금융시장간 연관된 움직임에 체계적으로 대응

나. 가계부채 및 PF 연착륙 추진

◆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가 지속되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PF대출의 건전성이 취약

* 금년 1~9월 중 가계대출 증가율 : 5.4% (은행 4.2%, 제2금융권 6.9%)

⇒ 향후 경기침체 장기화시 잠재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가계부채·PF대출의 연착륙을 지속 추진

① (가계대출)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금융공급은 유지하되 가계대출 증가속도 관리·대출구조 개선 등 가계부채 연착륙을 도모

○ 실물경제 성장과 균형된 가계부채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 ('08)8.7%→('09)7.7%→('10)8.1%→('11.1~9월)5.4%

- 은행권은 예대율 및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본규제 강화* 등 은행권 가계대출의 적정증가를 유도

* 예대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고 일시상환형 대출,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 거치식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

- 부문별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시 추가대책을 마련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 확대

-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계획('16년말 30% 목표)의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세제혜택 등 제도적 기반 조성

* 저위험 대출의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인하(0.125%→0.05%) 등

** 소득공제한도 : (i)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시 확대(1,000만원→1,500만원)
(ii) 여타 대출시 축소(1,000만원→500만원)

- 정부·한은 출자로 주택금융공사 자본금을 확충하여 커버드 본드·MBS 발행여력을 제고

- 가계부채 모니터링 등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시 대응
 - 가계부채 증가요인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다양한 지표를 통해 가계부채 부담을 면밀하게 점검
 - 저소득·저신용층의 상환능력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
- 가계부채 동향 점검 등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간 협력을 강화

② (PF대출) 사업성 있는 PF대출 정상화를 지원하고 PF부실 재발을 방지

- 금융회사의 사업성 판단에 따라 자체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은 적극적 만기연장 및 자금공급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
- 특히, 사업성이 있는 부실 PF사업장은 PF 정상화뱅크 등에서 인수하여 최대한 정상화를 추진하고 필요시 2차 PF 정상화뱅크 설립
 - * PF 정상화뱅크를 통해 금년중 1.8조원의 부실채권 매입
-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저축은행 PF사업장중 사업성이 높은 사업장은 민간사업자를 유치하여 정상화 추진
 - * 금년 1차 입찰(31개 사업장, 1.3조원)을 실시하여 민간사업자 유치 추진 중
- PF부실 재발 방지를 위해 보증에 의존한 대출관행 개선, 객관적인 사업성 평가에 기초한 대출 시스템 정착 유도 등을 위한 PF대출 개선방안을 마련

다. 외환건전성 제고

◆ 정부의 감독강화, 은행의 자체확보 노력 등으로 국내은행 외화유동성은 양호한 상황

* '11.11말 국내은행이 보유한 외화 현금유동성은 6달 대비 약 6배 증가

⇒ 외화유동성 확보 및 건전성 제고 노력을 지속 추진하여 대외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

① (유동성 확보) 외화유동성 확보 및 차입선 다변화 지속 추진

- 국내은행 외화 Stress Test를 통해 외화유동성 여력을 지속 점검하고, 부족분은 구체적 조달 계획을 마련하여 조기에 확충토록 독려
* 위기발생시 최소 3개월 동안 견딜 수 있는 외화유동성 자체 확보
-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양호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수출입은행·정책금융공사 등)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외화 여유자금을 확보
* 선제 확보한 여유자금은 유사시 중소기업 무역금융·외화대출 등의 용도로 활용
- 중동자금 활용 등 외화자금 조달창구를 다변화
* 수은은 사우디에서 7.5억리얄(약2억불)의 현지통화표시 채권 발행('11.11.24)

② (건전성 규제) 외환건전성 규제의 탄력적 운용

-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불안요인 전개상황, 외화수급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본유출입 관련 규제를 탄력운용함으로써 거시건전성 확보
- 외은지점, 국내은행 해외점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의 외환건전성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선제적 대응
- 차입 만기 장기화 및 불요불급한 외화자산 증가억제 등 지속 유도
* 국내은행 외화부문 경영계획 밀착 점검, 성과지표(KPI) 설계시 외환건전성 부문 강화 등

라. 금융회사 위기대응능력 확충

◆ 금융권의 수익성·건전성이 안정적이나 대내외 불안요인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대응능력을 확충할 필요

* 은행 당기순이익(조원) : (FY09)6.9 → (FY10)10.1 → ('11.1~9)12.4
⇒ 금융회사의 내부유보 확대, 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추진

1 (내부유보) 금융회사 이익의 내부유보 확대를 유도

- Stress Test를 통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자본적립·내부유보 적정성을 분석하여 **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고 과도한 배당을 억제**
 - * 최근 월가 점령시위 등으로 촉발된 과도한 이익배분 관련 사회적 비판과 대내외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

2 (건전성) 금융회사의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을 방지하는 등 건전성을 제고

- 은행의 예대율* ('12.6말까지 100% 충족)을 지속 관리하고, 여전사에 “자기자본대비 총자산 한도제(레버리지 규제)”를 도입
 - * 시중은행 예대율(%) : ('07말)122.2→('08말)118.0→('09말)112.4→('10말)98.2→('11.10말)97.0
 - * 여전사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 배수 : ('07말)5.9→('08말)6.5→('09말)5.3→('10말)5.1→('11.9말)5.3
- 은행*의 대손준비금 적립기준을 강화하고, 저축은행**의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및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 추진
 - * 대손준비금 산정방식을 채권유형별 산정방식으로 개선 등
 - ** 담보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업계평균 경험손실율을 반영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최소적립율을 점진적으로 인상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 금융회사(D-SIFI*)의 건전성 규제에 대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국내도입방안을 검토
 - *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③ (자본적정성) 적정한 자본여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자본적정성 기준을 강화

- 은행은 바젤Ⅲ 자본규제('13년부터 단계적 도입) 및 유동성 규제('15년 도입) 시행에 대비
 - * 은행별 자본적정성 유지계획을 수립·점검하고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자본(contingent capital)제도 도입을 추진
- 보험사는 기본자본 요건을 개선하는 등 지급여력 산정기준을 강화
 - * 자기자본을 엄격하게 적용(현재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을 한도없이 인정)하고, 결손누적으로 대손준비금 미적립시 요적립액을 지급여력에서 차감 등
- 저축은행은 BIS자기자본비율 규제를 보완하여 기본자본 중심으로 운영
 - * BIS비율을 보완하는 자기자본 규제 도입추진, 과도한 후순위채 발행 제한 등
- 신협은 출자금 제도를 개선하여 자본확충을 유도
 - * 조합원당 출자금 한도확대(총출자금의 10%→15%), 배당금의 출자금 전환 허용,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시 경영실적을 반영하여 익년도에 환급

④ (감독체계)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간 협력 강화

- 외은지점 진입 관련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 영업형태별 감독 방안 등 외은지점 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검토
- 예보의 단독조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공동검사 결과 등에 대한 시정조치요청권을 부여 (예보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추진중)
- 거시건전성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상설협의체 설치

마. 금융권 건전성 강화

◆ 2011년 저축은행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 및 상호금융에 대한 감독강화를 통해 해당 업권의 건전성을 제고

⇒ 주기적인 Stress Test 실시 등을 통해 자체 정상화를 유도하는 등 상시 구조조정시스템으로 전환

① (저축은행) 경영정상화를 추진중인 저축은행의 자구노력을 적극 유도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상시 구조조정으로 전환

○ 현재 유예 등의 조치를 받은 저축은행과 구조조정기금에 PF채권을 매각한 저축은행(45개)에 대해 자본확충을 이행토록 독려

* 연도별 BIS비율 목표(1년내 6%, 2년내 7%, 3년내 8%) 달성

○ 정부의 지원과 자구노력에도 자체 정상화가 곤란할 경우 시장 안정을 위해 신속히 정리

* 필요시 금융안정기금을 통한 자본 확충 및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부실 PF채권 추가 매입 추진

○ 충분한 구조조정 재원 확보를 위해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운영기한 연장 추진(예보법 개정안 국회계류중)

○ 본연의 서민금융증가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영업기반 확충 등 경쟁력 강화 지원

* 재무건전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대해 할부금융업 허용 등

② (상호금융) 가계부채 확대에 따른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여 해당 업권의 안정을 유도

○ 신탁은 경영개선요구대상 신탁의 자구노력 촉진을 위해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충분한 예보기금 적립을 위해 목표기금제 도입을 검토

○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상호금융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

제②과제

금융시스템 선진화

가. 자본시장 개혁

◆ 기관투자자 비중이 낮아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자금조달 비중**이 낮은 실정

* 증시 주가 등락률 및 일중 최대변동률('11.8-9월중, %) :

미국(Δ 10.4, 5.9), 영국(Δ 12.1, 7.6), 일본(Δ 11.7, 3.3), 한국(Δ 17.8, 8.0)

** 자금조달 비중('10년 기준) : 미국 1.25, 일본 1.51, 호주 3.70, 한국 0.78

⇒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금융투자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

① (인프라) 자본시장 저변확대 및 증시 안전판 마련 등 자본시장 관련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

- 자본시장법령 개정을 통해 국내 투자은행을 활성화하고 전문 사모펀드(헤지펀드) 안착을 도모
- 대체거래시스템(ATS : Alternative Trading System), 중앙거래청산소(CCP : Central Counterparty)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
- 기업 신용등급 산정체계 개선, 시장투명성 및 감독 강화 등을 통해 신용평가제도를 선진화
- 파생상품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개인의 신중한 투자를 유도하는 등 파생상품시장을 건전화
 - * 장내옵션 거래단위 조정, 장내파생상품 현금예탁비율 상향, ELW 상장 기준 강화, FX마진거래 개시증거금률 상향, ELS 투자자보호 강화 등
- 연기금의 임원·주요주주 보고의무 완화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면제 등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안전판 역할을 제고

② (금융투자산업) 진입기준을 개선하는 등 금융투자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자본시장의 폭과 깊이를 확대

- 금융투자업은 투자은행(IB) 출현과 병행하여 전문화·특화된 “작지만 강한 중소형 증권사” 지원방안을 마련

* 연구용역실시 등을 통해 중소형사의 특화전문화 유도 등 지원방안 마련

- 자산운용업은 전문화가 가능하도록 인가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펀드 판매채널을 경쟁적 구조*로 개선

* 계열운용사 판매비중 축소, 단위농협 등 서민금융회사에 펀드판매허용, 장기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판매보수율 체감방식 개선 등

- 신탁업은 새로운 신탁제도 도입 등 「신탁법」 개정(‘12.7.26 시행)에 따라 규율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

③ (단기자금시장) 기관간 RP 및 전자단기사채 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콜시장 중심의 단기자금시장을 개편

- 증권사의 과도한 콜 차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단기조달 장기운용의 유동성 리스크를 방지

* ‘11.6월~‘12.6월까지 자기자본의 25%까지 차입한도를 단계적 축소

* 증권사 콜머니 현황(조원): (‘11.5말) 13.9(9말) 10.5(10말) 9.4[5말 대비 △4.5]

- 콜 시장은 ‘14년부터 은행 중심의 시장으로 원활히 개편될 수 있도록 제도적·실무적 기반 마련

* 제2금융권 자금조달을 위해 기관간 RP시장 및 전자단기사채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제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허용도 검토

- 기관간 RP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합리적인 단기물 금리 기간구조 산출

* 현재 CD금리(3개월)는 시중금리의 움직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

나. 금융산업 지배·소유 구조 개선

◆ 대주주·경영진 모럴헤저드, CEO·사외이사의 밀착관계 형성 등 대내외적으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중요성이 강조
⇒ 금융회사 지배구조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고 쏠업권에 대한 일관성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규율 체계를 마련

① (규율체계)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업권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형성

○ 이사회 기능 강화 등 금융회사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

- * 사외이사 독립성 확보 : 사외이사를 '(현행)1/2이상→(개선)과반수'로 구성, 사내이사의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참여금지를 통해 영향력 방지 등
- *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 : 상근 감사위원 선임시에도 대주주 의결권 제한(3%), 감사위원 선임시 분리선출방식 도입 등

○ 금융회사 보수의 투명성 강화 등 보수체계의 합리화를 유도

- 임원 유형별(사외이사, 사내이사, 감사, 업무집행책임자) 보수총액을 공시하고, 성과연동 보수지급, 성과보수 이연지급 등 합리적인 보수제도를 확립

- * 보수위원회 설치,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공시도 의무화

○ 자체적인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공시 의무화

- * CEO를 포함한 임원선임, 이사회 운영 등 지배구조에 관한 원칙과 절차

② (대주주자격) 대주주에 대해 자격요건 유지의무(주기적 자격심사) 부과를 쏠업권으로 확대하여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 도모

○ 대주주에 대하여 일정주기마다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심사하고 자격미달시 요건충족명령, 의결권제한, 주식처분명령을 부과

③ (은행소유규제) 비금융주력자 제도를 포함한 은행 소유규제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

다. 전자금융을 통한 경쟁력 제고

◆ IT발달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및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 및 제도적 여건은 미흡

* 전자금융거래건수 : ('08년)87억건 → ('09년)98억건 → ('10년)114억건

⇒ 전자금융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 소비자 요구를 충족하고 금융산업 발전을 지원해 나갈 필요

① (전자금융업) 전자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감독시스템도 정비

○ 전자금융업자의 시장진입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여 시장 참여자를 확대

*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 발행업자의 경영지도기준 완화 등

○ 해외 전자금융 시스템 및 감독체계 등에 대한 조사·분석 등을 통해 전자금융 거래 체도를 개선

② (전자금융 인프라) 전자금융시장의 활성화와 이용자 편의를 촉진

○ 전자단기사채법이 제정됨에 따라 전자단기사채의 발행·유통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

○ 전자증권법을 제정하여 실물증권 발행·유통에 따른 비용을 축소하고 투명성을 제고

③ (전자문서) '종이 없는(paperless)' 친환경 금융거래 기반 마련

○ 보험 청약서, 상품설명서 등 보험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종이를 전자문서로 대체

* 1개 보험사당 A4용지 1.53억장(나무 15,300그루, 탄소 2,534톤 발생) 절약 가능

○ 자동이체를 위한 본인확인 서명도 전자적 방식으로 가능토록 개선

라. 투명·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불공정거래·부실감사·회계분식 등 시장질서 저해 행위가 상존
⇒ 공정한 금융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

① (불공정거래) 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공시·제재를 강화

- 대량보유(5%) 보고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 임원의 횡령·배임, 회계분식 등의 전력을 사업보고서에 공시
- 저축은행의 허위·지연 공시 등에 대해 형사벌(현재 과태료)을 부과하고, 대주주·임직원 등에게 미공개정보 누설 금지 의무 부과

② (회계감사)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제고 등을 통해 회계투명성 확보

- 과징금 상한 조정(5억→20억원), 동종업종에 대한 감사제한 등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제고
- 상장법인·금융회사 감사법인에 대한 일정 자격요건(품질관리 능력·및 손해배상책임능력)을 요구하는 감사인 등록제 도입

③ (자금세탁) 국제기준 도입 등 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 추진

-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체도를 국제기준에 맞춰 지속 개선
 - *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제재 개선, 테러자금 관련 거래제한 범위 확대, 업종·규모·상품별 자금세탁 위험도 평가 등
- 축적된 정보*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분석하는 전략적 심사·분석 체계를 구축하여 불법 금융거래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
 - *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외환거래 및 행정정보 등

마. 금융국제화 확대 추진

- ◆ 국제적인 금융협력 등을 통한 정책공조가 중요해지고 금융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회사 해외진출 등 국제화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 상황
⇒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한 글로벌 파트너십 확충, 금융중심지 육성, 해외진출 확대 및 국제적인 금융규제 논의에 적극 참여

1 (글로벌 파트너십) 주요 신흥국 및 선진국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구축

- 금융당국간 협력약정(MOU) 체결을 통해 정보교류 및 감독 협력을 강화하여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
* 현재 미국, 독일 등 18개국 30개 기관과 MOU를 체결
- 신흥국 감독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를 위한 다각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
- 한·중·일 당국간 핫 라인(Hot Line) 활성화를 통해 국제공조를 강화

2 (금융중심지) 금융중심지 기반을 지속 확대

-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금융중심지 기반 확립'을 목표로 「제2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011~2013)」을 차질 없이 추진
* 4대 핵심영역(자본시장 고도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금융인프라 선진화, 금융중심지 조성 가속화)별 주요 금융정책과제 추진
- 금융중심지법 개정안 시행('12.4월) 및 서울국제금융센터 완공('12.10월)을 계기로 국내외 금융회사의 금융중심지 집적을 가속화
- 금융중심지 IR을 통해 금융중심지정책 및 서울·부산 금융중심지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외국 금융사 국내 진입을 유도
* 서울시·부산시와 공동으로 미주·유럽 등지에서 금융중심지 홍보 IR 실시 (하반기)

③ (국제논의 주도) G20, FSB, BCBS 등을 통한 국제적인 금융규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이에 따른 국내제도도 정비

- Basel III,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등의 세부규제방안 마련 과정에서 선진국·신흥국간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등 리더쉽 발휘
 - * 글로벌 SIFI에 대한 각국 협의체인 위기관리그룹(CMG : Crisis Management Group) 및 감독자협의체에 참여
- G20 글로벌 금융규제개혁 합의사항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FSB 이행점검 및 평가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제적 신뢰도를 제고
 - * (주요 점검 대상 정책과제) Basel III,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개혁, 보상 관행, 효과적인 정리체계를 포함한 G-SIFI 정책패키지, 그림자금융 등

④ (FTA 이행) 한·EU 및 한·미 FTA 이행을 통해 한국 금융산업의 대외적 신뢰도가 제고되는 계기로 활용

- 금융정보처리의 해외위탁 관련 제도정비 및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검토 (협정문 발효일로부터 유예기간 2년)
 - * 해외위탁 근거 신설 및 감독 강화 (수탁자 감독당국의 검사권 보장, 수탁회사의 조사동의, 국내 법령 준수 의무 부과 등)
- 4대 공제(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및 우체국보험 관련 법령·규정 개정이 완료* 되는대로 금융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 (유예기간 2~3년)
 - * 농업협동조합법 및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은 개정완료
- 한·미 FTA 발효시 공제상품에 대해서도 상품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제상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
 - *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민영보험과 동일한 상품심사 기준 적용 추진

⑤ (해외진출) 금융회사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및 수익원 다변화 지원

- 해외진출 금융회사의 애로·건의 사항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해외 금융당국과의 협의 등을 통해 이에 대한 해결 노력을 강화
- 금융공공기관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금융부문의 해외진출 효과를 극대화

〈 기본 방향 〉

- ◆ 청년·기술창업 환경을 혁신하여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확산을 적극 추진
 - 여신관행 개선, 정책금융 효율성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금융 인프라도 획기적으로 개선
- ◆ 녹색 산업 등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견인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지원과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 기반을 강화

■ [제③과제]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

- 가. 창업 지원 강화
- 나. 중소기업 금융인프라 혁신
- 다. 정책금융 효율화
- 라.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

■ [제④과제] 미래대비 금융지원 확충

- 가. 신성장동력 산업 금융지원 강화
- 나. 녹색 산업 금융지원 강화
- 다. 100세 시대 대비 금융안전판 제공

제③과제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

가. 창업 지원 강화

◆ 최근 청년층의 벤처창업과 녹색산업 등 첨단기술 창업이 감소하는 등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는 추세

* 첨단 고기술 제조업 창업(개) : ('00년) 10,407 → ('09년) 5,207

* 2030 청년 벤처CEO 비중(%) : ('00년) 54 → ('10년) 10

⇒ 청년창업 및 중소기업 붐업(Boom-up)을 통해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환경을 조성

1] (창업환경 혁신) 청년·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금융 환경을 혁신

- 창업에 큰 부담이 되는 연대보증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
 - 법인은 실제경영자만 입보하도록 하되, 공동 창업시 개인별 연대보증 부담을 대폭 경감
- 정책금융기관의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
 - * 신·기보의 청년특례보증 지원 : (현행) 5천만원 → (개선) 3억원
 - * 정책금융기관의 창업지원 : ('11년) 17.2조원 → ('12년) 21.7조원
- 창업을 통한 자활의지가 확고한 저소득 서민가계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미소금융을 적극 지원
 - * 청년층 이용이 부진(20대 대출자 비율: 6.7%)한 미소금융에 청년 창업지원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여 경영컨설팅까지 연계 지원
- 금융권 공동으로 청년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여 기업의 창업을 지원
 - 3년간 0.5조원 수준의 청년창업지원펀드를 조성하여 1만 여개 기업의 창업 지원

② (재기 중소기업인 지원) 재기 중소기업CEO의 신용회복을 지원

- 신·기보 등 공적보증기관의 채무 감면폭 확대 추진
 - * 현행 신·기보 원금감면한도는 30%(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50%)
- 법인의 채무불이행 부실책임자로 등록되는 '관련인 정보'를 신용회복 시작시 삭제
 - 또한, 2년 이상 성실 상환시 '신용회복 지원 중 정보'도 삭제
 - * 현재는 법인 채무와 관련없는 개인 채무에 대해서만 신용회복 시작시 '연체정보'를 삭제하고 2년이상 성실상환시 '신용회복지원 정보'도 삭제
- 신용회복 개시와 동시에 최대 2년간 변제금 상환을 유예

나. 중소기업 금융인프라 혁신

◆ 중소기업은 직접금융 보다는 대출 등 간접금융에 의존하고, 금융회사는 매출액·담보 등 외형중심의 대출관행을 유지

* 중소기업 직접금융(주식·채권) 비중(%)
: (07년) 7.3 → (09년) 20.1 → (11.1~8월) 11.2

⇒ 여신관행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접근성을 제고

① (여신관행 개선) 기술력·성장성 중심의 여신 관행을 정착

- 은행 임직원의 면책제도 개선 등을 통해 외형 중심의 중기 대출 심사관행을 혁신
- 중소기업 금융 특화 CB* 육성, 공공정보 공유 확대 검토 등을 통해 중소기업 신용평가 인프라를 개선

* '05년 중소기업 정보 공유를 위해 KED를 설립하였으나 충분한 정보 집중이 이루어지지 않아 중소기업 신용대출 지원기능이 미흡

② (투자지원 강화)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지원 패러다임을 투자 중심으로 전환

○ 대출·투자를 동시에 제공하는 복합금융 지원 추진

* ('12년) 정책금융공사(신규 1,000억원), 산은(신규 1,000억원), 기은(신규 2,000억원)

○ 정책금융공사의 벤처조합 등을 통해 중소기업 CB·BW 등 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확대

* ('11년) 700억원 → ('12년) 1,200억원

③ (직접금융 확대) 중소기업 직접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

○ 성장과정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활용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주식 전문투자자시장」을 신설*

* 코스닥시장 진입 이전단계의 중소·벤처기업에 모험자본(Venture Capital)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전문투자자 중심으로 신시장 운영

○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검증받은 기술강소기업의 상장 추진을 위해 상장특례 확대 등 코스닥시장 제도개선을 추진

* 현재 상장특례가 인정되는 「벤처기업」과 「신성장동력기업」이외에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기술인증에 근거한 별도의 특례기준 마련

○ 증권회사의 비상장 신생기업 발굴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나치게 엄격한 기업금융 업무 관련 규제 합리화

* 현재는 기업금융 부분에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더라도 자금지원(고유재산운용)으로 연결되는데 정보교류 차단장치 등이 제한요인으로 작용

다. 정책금융 효율화

◆ 정책금융기관은 대내외 변동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중소기업 지원의 안전판으로서 역할을 수행
⇒ 정책금융 지원을 탄력적으로 확대

① (정책금융 강화) '12년도 중기 정책금융공급 규모를 실물경제 부진에 대비하여 탄력적으로 확대

<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계획(단위:조원) >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계획	실적(잠정)	계획	'11년 대비
합계	80.7	104.8	104.6	92.7	106.1	106.4	+13.7

* '12년 계획(조원) : 정책금융공사(4.7)+산은(11.0)+기은(36.0)+신보(38.0)+기보(16.7)

-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한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Fast-track 프로그램을 '12.12월까지 1년 연장

* 지원실적(조원) : ('09년) 21.5 → ('10년) 5.3 → ('11.1~11월) 1.2

② (자금배분 효율화) 정책금융기관의 효율적 자금 배분을 통해 창업·신기술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신·기보의 장기·고액·한계기업에 대한 보증을 축소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창업·신생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

③ (일자리 창출) 정책금융기관의 신규채용 확대, 창업 등 금융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능을 강화

- 산은 등 13개 금융공공기관의 신규 채용규모를 크게 확대

* ('11년) 579명 → ('12년) 1,328명 (+749명)

- 신·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 * ('11년) 7.3조원 → ('12년) 8.4조원

라.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지속

◆ 경기둔화, 일부 업종의 경영여건 악화 등으로 기업의 유동성 부족·부실화 가능성이 증가

⇒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별·지원 함으로써 부실 확산을 사전에 차단

① (구조조정) 채권단 주도로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지속 추진

- 회생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채권단 주도의 채무재조정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적극 지원
- 회생가능성이 없는 부실·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시장 퇴출을 유도함으로써 시장불확실성 해소를 도모

* 신용공여 5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평가(7~10월)를 실시하고
신용공여 3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분기별 수시평가를 실시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만료('13년말)에 대비,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자율적인 구조조정 체제의 정착 방안을 검토

* 금융회사간 협약을 통해 시장 자율적인 구조조정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여타 구조조정 제도와의 조화방안 등을 모색

② (취약부문) 경기 취약업종 및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한 적기 대응

- 경기민감업종(건설·조선·해운)에 대해서는 채권은행 등을 통해 자금사정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

- 필요시 업종별 수시평가를 통해 선제적 구조조정 추진

- 대주단협약 운영기한 연장('11년말 → '12년말)을 통해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 건설사를 지원

- '12년중 발행수요 등을 보아가며 건설사 P-CBO를 1조원 추가발행

* '10.12월~'11.9월중 1.1조원 既발행

[참고] 중소기업 금융애로 실태조사(IBK경제연구소) 결과

◇ 중소기업(3,000개), 창업기업(420개), 금융기관 여신 담당자(600명)를 대상으로 금융 수요·공급시 애로사항 등에 대해 설문·면접 조사

① 수요자(창업·중소기업) 측면

- (은행대출 곤란) 창업 초기기업의 63.1%가 은행에서 대출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
 - * 은행대출이 곤란한 사유로 까다로운 대출심사(44.5%), 과도한 담보 요구(41.9%), 신용보증서 위주 대출(38.9%) 등을 지적
- (연대보증 부담) 창업 초기기업의 경우 연대보증에 따른 직·간접적 폐해가 상당한 수준(25.1%)인 것으로 조사
 - * 연대보증 폐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신용등급 우수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완화(43.4%), 회사경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연대보증인 입보제한(28.2%)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
- (직접금융 이용 저조)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주식, 회사채 등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보다는 차입 등 간접금융에 의존
 - * 주된 자금조달방식 : 은행대출 95.5%, 신용보증대출 32.6%, 주식·회사채발행 4.4%

② 공급자(금융기관) 측면

- (기술력평가대출 미미) 금융기관 여신담당자들은 중소기업 여신 심사시 기술력보다 담보, 신용등급 등을 중요하게 고려
 - * 중소기업 여신취급시 고려요인 : 담보 55.5%, 신용등급 50.7%, 기술력 11.9%
- (신용대출시 애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이 어려운 사유로 사업성평가의 어려움(61.5%), 부실여신 발생시 책임문제(59.3%), 신용평가 정보 부족(39.1%) 등을 지적
- (부실발생시 책임문제) 여신 심사시 규정·절차를 준수하였음에도 부실발생시 제재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

제④과제

미래대비 금융지원 확충

가. 신성장동력 산업 금융지원 강화

◆ 미래성장동력인 신성장동력 산업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 자금공급 등을 확대·지원

⇒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자금공급, 기업의 R&D 지원 등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

① (자금 공급)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

- 정책금융공사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펀드(4개 펀드, 6천억원) 추가 조성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펀드 집행률을 제고
* ('11년말) 14개 펀드, 3조1,746억원 → ('12년) 18개 펀드, 3조7,746억원
-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공사의 특별온렌딩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외화 온렌딩제도 도입을 추진
*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특별온렌딩 : ('11년) 1.29조원 → ('12년) 1.50조원
- 원전 등 해외 프로젝트 여신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간 공조 체제를 강화
* 정책금융기관간 협의회 구성·운영, 업무협조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② (R&D 지원) R&D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제고

- R&D 및 既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
* R&D 자금공급 규모(산은·기은) : ('11년) 0.99조원 → ('12년) 1.1조원
- R&D 단계별로 기술력을 평가하고 필요 자금을 지원하는 기보의 R&D특례보증을 확대
* 기보 R&D 특례보증 : ('11년) 0.9조원 → ('12년) 1.4조원

③ (상장 지원) 코스닥 상장특례('11.3월 도입)를 활용한 신성장동력 산업의 상장 지원을 강화

나. 녹색 산업 금융지원 강화

- ◆ 녹색금융지원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상황
⇒ 정책금융기관의 녹색산업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금융회사의 녹색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

① (자금공급) 녹색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대폭 확대

-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의 녹색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공급을 확대

*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자금지원(조원) : ('11년) 8.6 → ('12년) 10.9

② (인력양성)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

- 학교별 교육과정('10~'11년)에 대해 실시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등 '12년 이후 학교별 예산배정에 활용

③ (녹색금융상품) 민간 금융회사의 녹색금융상품 출시 유도

- 녹색 수요자를 인증대상에 포함하는 등 녹색인증 대상확대 방안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

* 현행 녹색인증제도는 녹색상품 공급자 위주로 한정되어 있어 '녹색상품 소비증가 → 공급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 마련이 어려움

④ (인프라 구축) 녹색기업 투자촉진을 위해 녹색 경영공시 강화

- 온실가스 배출업체 등의 녹색경영정보(온실가스 배출량 등)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 공시하도록 의무화

* 녹색경영정보에 대한 자율공시 제도는 既 시행('11.1월)

다. 100세 시대 대비 금융안전판 제공

◆ 급속한 고령화·베이비붐 세대 퇴직시기 도래 등에 따라 은퇴·노후 대비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

* 퇴직연금 규모는 '06년말 0.8조원에서 '11.10월말 39.2조원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며, '15년말 90조원에 달할 전망

⇒ 노후나 퇴직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퇴직금융인의 재취업을 지원

① (장기펀드) 자본시장을 활용하여 노후대비 장기투자상품을 마련

○ 장기·분산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신설

* (예)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개인, 10년 이상 적립

- 업계의 펀드운용·판매보수 최적화 및 투자자의 연령·위험 성향 등을 고려한 맞춤형 상품개발을 유도

② (주택연금) 노후소득을 지원하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지속 추진

○ 노후 연령별 지출형태를 감안하여 수시인출한도를 확대*하고, 주택연금 지급방식을 다양화**

* 의료·교육비 등 일반 생활자금의 경우에도 수시인출한도를 대출한도의 30%→50%로 확대(주담대 상환·임차보증금 반환의 경우 이미 대출한도의 50%까지 수시인출 가능)

** 종신지급하더라도 지급초기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지급하고 지급후반기에는 적게 지급하는 전후후박(前厚後薄) 형태로 월지급금을 지급

○ 주택연금 취급기관을 확대(11개 은행 → 은행·보험사 등 추가)하여 접근성을 제고

○ 국민연금, 농지연금 등과 연계 마케팅 추진을 통해 인지도를 제고

③ (연금보험) 노후 연금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

- 건강상태에 따라 연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연금상품 개발 등을 통해 연금보험 기피 계층을 흡수
- 고연령층의 위험보장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위험을 및 관련 통계 제공 등 노후건강보험 상품 개발을 위한 인프라 제공
 - * 100세 이상 고연령층도 민영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질병별 산출기간을 확대(예:암위험률 82세 → 112세)
- 가입자의 취향에 따라 연금상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연금 상품 수익률 및 수수료에 대한 비교공시를 강화

④ (퇴직연금) 노후생활자금 준비를 위한 효과적 자산운용 추진

- 확정기여형(DC)과 개인퇴직계좌(IRA)에 주식형·혼합형 펀드 투자를 허용하는 등 자산운용규제 합리화 추진
 - * 미국, 호주 등 선진국은 주식 및 펀드에 대한 투자제한 규제가 없으나, 우리나라는 DC 및 IRA의 경우 채권형펀드 투자만 허용

⑤ (취업지원) 퇴직 금융인이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에서 재취업을 희망하는 금융권 퇴직 인력 정보를 관리하는 '금융권 퇴직인력 DB'를 구축
- 금융권 퇴직자와 기업간 구인/구직 매칭서비스 제공, 정부에서 운영중인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등 추진

3 <제3목표> 시민과 나눔금융

< 기본 방향 >

- ◆ 3대 서민금융·주택금융공사 보증 등을 활용하여 서민금융을 확대
 - 신용회복지원 확대, 신용카드 제도개선 및 피해예방·구제 강화 등을 병행하여 서민층 금융애로를 해소
- ◆ 금융권의 사회공헌활동 등 나눔경영을 활성화
 - 서민 등 금융약자를 보호하고 보이스피싱 예방, IT보안 강화 등 소비자보호 인프라도 확충

■ [제⑤과제] 서민금융 지원 확대

- 가. 서민 금융공급 확대
- 나. 서민층 금융피해 방지
- 다. 신용회복 지원 강화
- 라. 신용카드 제도 개선

■ [제⑥과제] 사회공헌활동 및 소비자보호 강화

- 가. 금융회사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 나. 금융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 다.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 라. 전자금융 거래 안전성 강화

제⑤과제

서민금융 지원 확대

가. 서민 금융공급 확대

◆ 유럽 재정위기 문제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경기 부진 등에 따라 서민층의 금융애로가 증가 우려

⇒ 내실있는 서민금융 지원으로 서민층의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

① (3대 서민금융) 3대 서민금융을 통해 서민금융공급을 확대

○ 미소금융은 신상품을 개발하고 지원대상도 확대

- 미소금융 지역재단에서도 신용등급이 양호한 저소득층(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대출이 가능하도록 개선

* 현재는 기업·은행재단에서만 '특성화 상품'을 통해 대출

- 2013년까지 전국의 주요 전통시장(900여개)*에 미소금융 지원 채널을 구축하여 저리의 미소금융 자금을 지원

* 전통시장 미소금융 지원채널(개) : ('11)300 → ('12)600 → ('13)900

- 미소금융을 점검한 후 제도적 정착을 위한 전면 쇄신방안을 마련·추진

○ 햇살론 대환대출에 대한 보증지원 비율을 확대(85% → 95%) 하고 중기청이 인정한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득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하는 등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햇살론 지원요건을 완화

○ 새희망홀씨는 연간 대출 공급규모를 지속 확대('11년 1.2→'12년 1.5조원)

< 3대 서민금융 개요 및 실적 >

구분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목표	· 10년간 2조 2천억원	· 5년간 10조원	· 5년간 은행권 영업이익 10%
대상	· 7~10등급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6~10등급(4천만원 이하) · 연소득 2.6천만원이하	· 5~10등급(4천만원 이하) · 연소득 3천만원이하
이자율	· 연 2~4.5%	· 연 11~14%	· 연 11~14%
실적	· 4,614억원(56,336건) ('08.7월 ~ '11.11.30)	· 18,374억원(204,946건) ('10.7.26 ~ '11.11.30)	· 11,913억원(148,759건) ('10.11.8 ~ '11.10.31)

② (주택자금)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을 통해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

- 무주택 서민에게 장기·저리 고정금리 주택구입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금리우대형 보금자리론 지원을 확대

* 부부합산 연소득 2,500~4,500만원 무주택 서민이 85㎡ 이하 주택구입시 지원하되 12년중 일정한도 내에서 공급(연소득 2,500만원 이하는 既공급중)

-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은행 전세자금대출로 전환하는 특례보증을 신설(5,000억원 한도)

*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상여금·수당 포함)으로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전세거주자 지원

③ (금융비용부담) 전환대출 등을 통해 서민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

- 전환대출인 신용회복기금의 바뀐드림론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서민층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

* (현행) 3천만원을 한도로 1회에 한하여 전환대출 허용 → (개선) 바뀐드림론을 지원받은 후 3년이 경과하고 상환을 완료한 자에 대하여 총 3,000만원 범위내에서 추가 전환대출 허용

※ 신용회복기금의 바뀐드림론 개요 및 실적

- ▶ (개요) 대부업체 등의 20% 이상 고금리채무를 11% 수준의 은행채무로 전환
- ▶ (재원) 신용회복기금이 보유한 금융회사 출자금
- ▶ (실적) '08.12~'11.10월말 기준 총 6.8만명, 6,852억원

-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여 중개수수료를 인하

* 관련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11.11월)
- (현행) 최대 12% 수준 → (개선) 상한 5%

- 사회적 기업인 한국이지론(주)의 대출중개기능을 활성화하여 서민들에 대한 맞춤형 대출안내, 환승론 서비스 등을 확대

* 온라인 외에 오프라인 중개업무도 병행하여 본인의 소득·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을 안내하고 홍보활동을 강화

나. 서민층 금융피해 방지

◆ 서민, 노약층, 부녀자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금융사기 및 불법 금융거래로 인한 피해가 다수 발생

*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금액(억원) :

('08년) 877 → ('09년) 621 → ('10년) 554 → ('11.1~11월) 879

⇒ 3대 금융사기(私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

① (私금융 피해) 불법 금융거래로 인한 서민피해를 방지하고 피해 구제를 강화

○ 온라인상 불법 금융광고 행위, 불법추심, 신종대출사기 등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을 지속

- 금감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불법 私금융으로 인한 피해예방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지속

○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행위에 대한 금감원의 감시를 강화하고, 불법 중개수수료 환급제도 개선* 추진

* (예) 고객이 대출중개기관(현행)이 아닌 대부업체(개선)로부터 중개수수료를 환급 받도록 하는 제도 도입

○ 대부업체에 대한 광고규제 등을 통해 서민들을 상대로 한 과도한 대출권유 행위를 억제

* 대부광고시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표시 의무화 등

②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

- 가장 빈발하는 사기 유형에 대한 ‘핀셋식’ 예방대책을 마련
 -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사기유형·편취방법 등에 따라 유형화·분석
 - * 비대면 인출시의 본인확인절차 강화, 공인인증서 비대면 재발급절차 강화, 비대면 인출·이체시 한도조정 등 규제 강화
- 보이스피싱 신종수법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신속하고 유기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보이스피싱 피해방지협의회”를 구성
 - * 대만사례 :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대응으로 교통부, 법무부, 재정부, 금융감독관리원이 참여하는 ‘反詐欺부서통합협조회의’를 구성
- 금융위, 경찰청, 방통위, 관련 협회가 참여하여 “금융-경찰-통신”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금융회사의 자발적 협조를 유도
-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대출 방지에 소홀한 금융회사에 대해 적절한 피해보상(예: 원금일부 감면 등)을 하도록 적극 지도·감독
- 피해자의 성별·연령·피해규모 분석 등을 통해 금융사기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교육·홍보를 강화

③ (보험사기) 보험사기 근절 및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 보험설계사 등 보험관계업무 종사자의 보험사기 금지 의무 신설 및 등록취소 등 제재조치를 마련
- 보험조사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보험사기 조사 효율성을 제고
 - 회의개최 정례화(분기별 개최), 유관기관간 공동조사 및 정보 공유 활성화 등을 추진
- 자동차보험금 누수요인, 병의원 연루 보험사기 등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
- 공익광고 방송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

다. 신용회복 지원 강화

◆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감소하는 등 일정 성과가 있으나 사후 신용회복지원과 함께 신용불량 방지 등 사전 노력도 필요한 상황

⇒ 신용회복 지원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대학생 취업애로 요인을 개선

① (신용회복) 성실한 신용회복자에 대한 저리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신용회복 지원관련 비용부담을 경감

○ 1년이상 성실상환자에 대한 신용회복기관(신용회복위원회·신용회복기금)의 저리 긴급 생계자금 지원을 확대

* ('10년) 700억원 → ('11년) 약 900억원 → ('12년) 1,000억원

- 저리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경우 햇살론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협조를 강화

○ 신용회복 지원시 채무재조정 비용 및 신용회복 신청비 면제 대상을 확대

* 긴급상황 발생을 이유로 하는 채무재조정 비용을 1회에 한하여 면제, 군복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신용회복 신청비(5만원) 면제

② (취업지원) 채용시 신용정보 이용제한 등 대학생 취업애로 완화

○ 학자금 대출 연체정보 등 신용정보를 직원 채용 여부를 판단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

○ 정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연체한 경우, 졸업후 일정기간(예:2년) 동안 정보의 집중 유예를 추진

○ 대학생에 대해서는 소득증빙이 없더라도 신용회복 지원을 허용하고, 신용회복 개시와 동시에 최대 2년간 변제금 상환을 유예

라. 신용카드 제도 개선

◆ 그동안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카드수수료 부담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

* 연매출 2억원 미만 중소가맹점(약 70%)에 대해 대형마트 수준(1.8%이하) 적용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체계의 투명성·합리성을 제고

① (수수료율 체계) 수수료율 체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

- 수수료율 체계를 업종별 중심에서 가맹점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전면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유도

* 수수료 부담의 전반적 경감, 가맹점간 수수료율 격차 축소,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유지

② (직불형 카드) 카드결제 관행을 “직불형 카드 중심”으로 전환시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대폭 경감

- 직불형 카드 비중을 5년내(‘16년까지)에 선진국 수준으로 견인

* 직불형 카드 이용 비중(‘09년, %) : 한국 9.0, 독일 92.7, 영국 74.4, 미국 42.3

<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현황 >

카드종류	신용카드(A)	직불(체크)카드(B)	차이(A-B)
일반가맹점	1.5~3.6%	1.5~1.7%	최고 2.1%p
중소가맹점	1.8%이하	1.0%	최고 0.8%p

- 소비자의 직불형 카드 이용 촉진을 위해 소득공제 차등 폭 확대 등 인센티브를 확충

* '12년부터 소득공제율을 “신용 20%·직불 25% → 신용 20%·직불 30%”로 개선한데 이어 추가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 추진

- 카드사 및 은행의 직불형 카드 영업을 활성화

* 계좌 이용 수수료 인하, 다양한 유형의 신용·직불 겸용카드 발급 유도 등

○ 가맹점이 직불형 카드를 적극 수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직불형 카드수납이 가능한 단말기 설치 등

③ (표준약관) 가맹점의 권익을 대폭 제고하는 내용으로 가맹점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불공정한 계약행태를 시정

○ 신용판매대금 지급시한을 명시하고, 카드사 귀책사유로 판매대금 지급 지연시 카드사 배상책임을 명시

○ 판매대금 지급보류 사유*를 최소화함으로써 카드사의 자의적인 대금지급 가능성을 차단

* 카드거래 매출전표 위·변조 등 가맹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만 한정

○ 카드사가 가맹점에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할 경우, 사전 통보를 의무화

*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경우 1개월전 서면 통보 의무화

④ (조회시스템) 가맹점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카드회사별 수수료율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⑤ (실태점검) 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 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여 시정

○ 부당한 수수료율 적용 등 가맹점의 제반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가맹점 권익을 보호

제⑥과제

사회공헌활동 및 소비자보호 강화

가. 금융회사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 '월가 점령시위(Occupy Wall Street)' 등을 계기로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요구 및 사회적 감시와 비판이 확산

⇒ 금융권의 자발적인 사회공헌활동(Richess Oblige)을 활성화

① 금융권의 사회공헌활동 예산 확대

- 금융권이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노숙자 및 다문화가정 등 어려운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예산을 확대

* 금융권 사회공헌활동 예산 : ('11년) 0.9조원 → ('12년) 1.3조원

② 금융권의 고졸채용 확대를 지속 유도

- 고졸채용자의 승진 불이익 방지 및 학업 지속 등 금융전문가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금융권은 '11~'13년 중 약 8,718명 채용 예정
연평균 채용 규모 : ('09-'10년 1,813명, '11-'13년 2,906명)

③ 대학생 및 소외계층 지원, 청년창업 지원, 고졸채용 확대 등 금융권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확대

- 은행이 보증재원을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대학생의 고금리

채무를 낮은 금리로 전환하는 학자금보증대출상품 제공

○ 지방출신 대학생 등을 위한 주거안정방안 강구

○ 펀드조성을 통해 청년창업을 지원

④ 수수료 인하·이자부담 완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수수료 체계의 정례적인 재점검 관행을 정착

* 취약계층에 대한 자동화기기 수수료 인하, 신용공여 연체이자 및 수수료 인하, 저축성 보험 중도해약환급금 상향조정 등

⑤ 사회공헌활동이 전시성·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체계를 구축

○ 금융회사별로 사회공헌 전담임원 임명 등 담당조직 확충, 사회 공헌 휴가제도 도입 등 추진

○ 금융회사별 사회공헌 실적을 비교공시(naming and shaming)하는 방안을 마련

○ 사회적 책임 이행상황 및 성과 등을 금융회사 경영실태평가 항목으로 신설 또는 평가비중을 제고

나. 금융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 소비자 주권은 커지고 있으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회사의 경영이나 감독기준이 미흡한 상황
⇒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

① (공시) 금융상품의 내용이나 부담에 대한 비교공시를 확대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

○ 은행·카드·증권·보험 등 각 금융권 협회 주도로 수수료 등에 대한 공시를 확대

- (은행) 미공시되고 있는 수수료(중도상환수수료, 대리사무수수료 등)를 공시

- (카드) 신용카드 금리수준별 회원분포와 평균금리 공시대상을 확대

- (증권) 위탁매매수수료, 자문형 랩어카운트 수수료, 신용공여 이자율에 대한 비교공시를 강화

- (보험) '공시내용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 평가' 실시 등을 통해 공시내용을 쉽게 재정비하고 활용도를 제고

*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공제상품의 공시 강화방안도 마련 추진

- (신협) 대출종류별·신용등급별 금리 수준 등 비교공시대상을 확대

② (상품설명) 보험상품 및 연금저축상품 판매시 설명의무 강화

○ 노인 등 보험취약 계층에 대한 보험상품광고 규제 및 상품 설명의무 강화 등 피해방지 대책 마련

○ 세금추징으로 중도해지시 불이익이 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세계적적 연금저축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및 공시를 강화

- * 해지시 세금추징 패널티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금융권역별 모든 연금저축에 대해 동일 기준으로 수수료 및 이율 공시와 경과기관별 수익률 통합비교공시를 의무화

③ (금융교육) 금융소비자 역량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서비스 강화

- 연령별·계층별 교육수요에 특화된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
 - * 연령별 「생애주기 맞춤형 금융교육 콘텐츠」개발, 금융교육 콘텐츠를 e_book 및 web zine 형태로 보급하여 원스톱 학습 환경 구축
- 찾아가는 금융교육·방문상담 실시 및 참여형·토론형 프로그램 등을 통한 현장서비스 활성화
 - * 지방주민을 위하여 지자체와 공동(MOU체결)으로 금융교육 확대, 재래시장 등 현장상담 및 교육 실시, 대학방문 「캠퍼스 금융토크」 개최
- 금융회사 재무정보를 보다 쉽게 표현하고 동종 금융상품간 비교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모범 가이드라인 개발

④ (감독강화)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한 감독을 강화

- 저축은행 후순위채는 원칙적으로 전문투자자에 대한 사모발행으로 제한하고 공모시에도 창구 직접판매는 금지
- 수수료 과다책정 등 불합리한 연금약관에 대한 심사 강화
- 보험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출 방식 개선을 추진
 - * 국제회계기준의 책임준비금 평가방식이 “원가→시가기준”으로 변경될 예정으로 전문계리법인을 통해 보험사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적정성을 평가

다.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가 개별 업권법에 산재되어 있어 효과적인 규제 체계가 미흡한 실정

⇒ 금융소비의全过程(사전 정보제공-금융상품 판매-사후피해 구제)을 포괄하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 체계를 구축

① (판매행위)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6대 판매행위 규제 원칙」 규정

*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구속성상품계약 체결 금지원칙,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 상품유형에 따른 위험 및 특성을 감안하여 상품별로 규제적용 여부 및 구체적인 규제내용을 차별화*

* (예) 설명의무 (①투자성상품 : 투자 위험, ②예금성상품 : 이자율·중도 해지 수수료, ③보장성상품 : 보험료,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② (제재강화) 과징금제도 신설 등 위반시 제제도 대폭 강화

* 설명의무, 광고규제 등 판매행위 규제위반시 당해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영업 이익의 3배 범위에서 부과

③ (분쟁조정제도)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고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소액사건(예 : 5백만원 이하)은 분쟁조정 진행 중 소송제기를 금지

*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 중지

④ (금융소비자보호원) 소비자 보호기능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원을 금감원내에 인사·예산·업무상 독립성을 강화한 준독립기구로 설치

라. 전자금융 거래 안전성 강화

◆ 전자금융은 외형적으로 성장*(전체 금융거래 80%)하고 있으나,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 증가 및 고객정보 유출** 등 금융사고 발생

* 일평균 인터넷뱅킹 거래건수 약 38백만건, 거래규모 약 32조원

** '11년 고객정보 유출건수 총 5차례, 약270만건

⇒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전자금융 보안체계를 강화

① (정보보호) 이용자 편의제고 및 개인정보 보안을 위해 금융 거래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보수집을 억제

- 금융권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불필요한 정보수집을 제한하는 등 개선방안 검토

② (IT보안체계) 금융회사의 IT보안 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등 전자금융거래 안전성을 강화

- 금융회사가 적정수준의 보안관련 인력·예산*을 유지하도록 유도

* (인력) 전체인력의 5%를 IT 인력으로, IT 인력의 5%를 보안인력으로 확보
(예산) 전체IT예산의 7%를 보안예산으로 확보

-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시스템 및 홈페이지 등에 대해 취약점을 정례적으로 분석·평가하도록 함으로써 보안역량을 제고

- CEO 책임하에 연간 IT보안계획을 수립하여 감독당국에 제출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지정 등 IT보안관련 책임성을 강화

- IT보안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침해유인을 최소화

* 중대한 보안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중징계하고,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시 형사처벌 신설 등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

<예,결산>

40. 2009년 이후 연도별 기관장, 임원 법인카드
사용내역

☐ 별도제출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

41. 기부금 납부 및 사회공헌활동 관련

- 2009년 이후 연도별 기부금 지출명세서 및 지출사유(일자, 단체, 지출액)
- 2009년도 이후 연도별 사회공헌활동 내역

□ 기부금 납부 및 사회공헌 활동내역

○ 부정기 행사

장소	일자	방문자	활동 내용	기부내용
아동복지시설 방문	09.1.19	전광우 위원장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 위문 방문	위문금 : 50만원 위문품 : 50만원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 방문	09.1.20	이창용 부위원장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 위문 방문	위문금 : 50만원
서울 보훈병원	09.6.19	부위원장	보훈병원 위문 및 병실 환자 위로	위문금 100만원
은평 천사원 방문	09.9.23	사무처장	추석맞이 어린이시설 위문 및 환경미화 등 봉사활동	위문금 : 250만원
적십자사 바자회	09.11.3	간부 사모님	간부 사모님 적십자사 바자회 참여 및 판매 수익금 기부	수익금 710만원
인천해역방어 사령부 위문	09.12.23	진동수 위원장	연말연시 군장병 위문	위문금 : 1,000만원 (각 부처 모금액 보훈처에서 배분) 위문품 : 산하기관 자발적 증정
광야교회	10.2.4	진동수 위원장	노숙자 밥퍼행사 봉사활동 및 위로	위문금 500만원
서울보훈병원	10.6.17	권혁세 부위원장	보훈병원 위문 및 병실 환자 위로	위문금 100만원

장소	일자	방문자	활동 내용	기부내용
시립 영등포장애인 복지관	10.9.17	권혁세 부위원장	추석맞이 장애인복지관 위문 및 송편빚기대회 진행 지원 봉사활동	위문금 200만원, 위문품 100만원
적십자사 바자회	10.10.6	간부 사모님	간부 사모님 적십자사 바자회 참여 및 판매 수익금 기부	수익금 812만원
광주 제1전투비행단	10.12.23	진동수 위원장 (산하공공기 관장)	연말연시 군장병 위문	위문금 : 1,000만원 (각부처 모금액 보훈처에서 배분) 위문품 : 산하기관 자발적 증정
아동복지시설 혜심원	10.12.24	진동수 위원장	연말연시 아동복지시설 위문 및 환경미화 등 봉사활동	위문금 100만원, 위문품 100만원
영등포노인 케어센터	11.1.24	김석동 위원장	노인복지시설 위문 및 애로사항 청취 등	위문금 100만원, 위문품 100만원
양재 사회복지관	11.1.31	권혁세 부위원장	장애인직업훈련장 방문 및 격려	위문금 50만원
서울보훈병원	11.6.2	신제윤 부위원장	보훈병원 위문 및 병실 환자 위로	위문금 100만원
영등포 응달샘 드롭인센터	11.7.23	김석동 위원장	노숙자 급식 배식봉사	위문금 100만원
삼성농아원	11.9.6	김석동 위원장	추석맞이 청각장애아동 위문	위문금 100만원 위문품 100만원
적십자사 바자회	11.9.28	간부 사모님	간부 사모님 적십자사 바자회 참여 및 판매 수익금 기부	수익금 870만원
광명 육군 제52사단	11.12.16	김석동 위원장	연말연시 군장병 위문	위문금 : 1,000만원 (각부처 모금액 보훈처에서 배분) 위문품 : 산하기관 자발적 증정
교남 소망의 집	11.12.23	김석동 위원장	장애인직업훈련장 방문 및 격려	위문금 100만원 위문품 150만원
영등포노인 케어센터	11.12.23	상임위원 등	거동불편 어르신 저녁 식사 배식 및 말벗 봉사	위문금 100만원 위문품 150만원

장소	일자	방문자	활동 내용	기부내용
신길동 독거노인 및 쪽방촌	12.1.18	추경호 부위원장	독거노인 오찬 및 점퍼 입혀드리기	위문금 95만원 위문품 150만원
영등포 응달샘 드롭인센터	12.3.24	김석동 위원장	노숙자 급식 배식봉사	위문금 50만원
영등포 응달샘 드롭인센터	12.6.23	추경호 부위원장	노숙자 급식 배식봉사	위문금 50만원 위문품 50만원
서울보훈병원	12.6.20	추경호 부위원장	보훈병원 위문 및 병실 환자 위로	위문금 100만원

○ 봉사동아리 정기 봉사활동(금융위 사랑봉사단)

연 도	활동 시기	참석	활동 내용	기부금액
2010	매월 셋째주 토요일(9회)	금융위 직원 중 봉사활동 희망자	독거노인 청소 및 말벗봉사 소년소녀가장 생활비 지원 쪽방촌 생필품 지원 노숙자시설 배식봉사	1,116만원
2011	매월 셋째주 토요일(8회)			1,120만원
2012	매월 셋째주 토요일(6회)			942만원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

42. 광고홍보선전비 지출 관련 - 금융정책알리기

☐ 2009년 이후 연도별, 매체별, 부분별 광고홍보선전비 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7월말)	합계
금융정책알리기	48	173	65	1	287
T V	11	-	-	-	11
신 문	21	123	63	-	207
홍보콘텐츠제작	16	50	2	1	69

□ 2009년 이후 언론사별 광고홍보선전비 지출액 및
광고홍보선전내용

(단위 : 건, 만원)

연도	매 체 명	금 액	내 용
'09	KBS	1,100	'5천만의 아이디어로' 방송 협찬
	조선일보 외 25개 ¹⁾	2,140 ²⁾	서민생활대책 (달라지는 서민생활)
	소계	3,240	-
'10	매일경제	1,247	G20 성과 및 대국민 감사
	한국경제	1,247	
	서울경제	832	
	헤럴드경제	832	
	파이낸셜뉴스	624	
	머니투데이	624	
	아시아경제	520	
	아시아투데이	416	
	아주경제	416	
	코리아타임스	624	
	코리아헤럴드	624	
	중앙데일리	624	
	제작인쇄	600	
	동아일보	3,053	FSB 서울총회 개최
	소계	12,281	-
'11	중앙선데이	979	서민금융 자원제도
	동아일보	990	
	The City(더시티)	880	
	시장경제신문	3,410	
	소계	6,259	-
계		21,780	-

1)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조선일보 등 중앙지 11개, 매일경제 등 경제지 8개, 메트로 등 무가지 7개 매체에 정부합동광고

2) 총 19,256만원 가운데 금융위 부담 금액 2,142만원 (9개 부처 공동 부담)

□ 2009년 이후 연도별 정책홍보 지출명세서

(단위 : 백만원)

'09년		'10년		'11년	
항목	집행	항목	집행	항목	집행
홍보전문가 인건비	36	홍보전문가 인건비	70	홍보전문가 인건비	70
블로그 기자단 운영 및 블로그 구축	21	정책알리미 확대개편 및 운영	27	금융정책알리미 운영	32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	30	블로그개편 및 온라인홍보 활성화	20	홈페이지 유지보수	36
위기극복 포털 사이트 구축	25	정보보안개선	36	개인정보 보호 개선	29
정책홍보 동영상 제작	16	홈페이지 유지보수	24	정책포털 연계 및 웹 접근성 표준화	35
TV프로그램 협찬	11	금융위원회 홍보영상	50	온라인 경품비	3
홍보컨설팅	7	FSB 광고	92	신문광고	63
서민생활대책 광고	21	G20 광고	31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30
자산취득비	25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19	홍보컨설팅	15
		자산취득비	17	업무계획 인포그래픽스	2
				자산취득비	10
합 계	192	합 계	386	합 계	325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

43-1. 2009년 이후 연도별 기관장 및 임원, 직급별 급여총액, 인상을 현황

□ 2009년 이후 연도별 기관장 및 임원, 직급별 급여총액,
인상률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직 급	2009	2010	2011	2012.8
장관급	113	116	119	82
차관급	112	110	113	78
고위공무원	1,181	1,363	1,366	1,049
부이사관	369	298	420	251
서기관	2,707	2,856	3,054	2,131
사무관	5,149	5,277	5,954	4,210
6급 이하	2,450	2,495	2,855	2,129
계약직	605	871	922	679
특정직(경찰)	409	367	420	316
계	13,095	13,753	15,223	10,925

※ 인상률(국회의결) : 2009년 및 2010년 동결, 2011년(5.1%), 2012년(3.5%)

<참고 : 국가공무원 보수체계(全 국가공무원 동일)>

구 분	보수체계(단위 : 천원)
정무직	고정급적 연봉제 (장관급 : 106,273, 차관급 : 103,209)
고위공무원단	직무성과급적 연봉제(기준급+직무급+성과급) (기준급 : 51,524~76,700, 직무급 : 4,800~10,800, 성과급* : 전년 업무실적 반영)
과장급	성과급적 연봉제 (3급 : 53,632~79,837, 4급 : 42,449~73,036)
4급 이하 (과장급 제외)	봉급(공무원 보수규정 별표3, 4, 5, 8, 10의 봉급표) 수당(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성과급* : 전년 업무실적 반영 지급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

43-2. 2009년 이후 기관장 및 임원별 기본급 및
기타 수당변동 현황

☐ 위 '44-1번' 답변자료 참고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

43-3. 2009년 이후 연도별, 직급별 각종 수당 신설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참고 :국가공무원 수당체계(全 국가공무원 동일)>

수당명	지급금액
대우공무원수당	월 기본급의 4.1%
정근수당	근무연수에 따라 월 기본급의 0%~50%
정근수당가산금	근무연수에 따라 월 5~13만원
가족수당	배우자(4만원), 기타부양가족(1인당 2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중·고생 자녀 학비(수업료 등)
육아휴직수당	월 기본급의 40%(50만원~1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직급별 단가×시간외근무시간
관리업무수당	월 기본급의 9%
정액급식비	월 13만원
명절휴가비	월 기본급의 60%(연2회)
연가보상비	개인별 단가×연가보상일수(1급 이하)
직급보조비	월 9.5~75만원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

43-4. 2009년 이후 연도별, 직급별 성과급 지출현황

☐ 2009년 이후 연도별, 직급별 성과급 지출현황

연 도	지급 대상	지급예산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연봉(44명) - 연봉제 공무원(과장급 이상, 계약직) ○ 성과상여금 - 4급(호봉제) 및 5급 이하 : 173명 	633,642천원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연봉(50명) - 연봉제 공무원(과장급 이상, 계약직) ○ 성과상여금 - 4급(호봉제) 및 5급 이하 : 172명 	677,161천원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연봉(55명) - 연봉제 공무원(과장급 이상, 계약직) ○ 성과상여금 - 4급(호봉제) 및 5급 이하 : 210명 	680,607천원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연봉(54명) - 연봉제 공무원(과장급 이상, 계약직) ○ 성과상여금 - 4급(호봉제) 및 5급 이하 : 220명 	795,129천원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

43-5. 2009년 이후 연도별, 직급별 특별성과급
지출현황

☐ 해당사항 없음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

43-6. 2009년 이후 연도별 직급별 복지포인트 지급현황

□ 2009년 이후 복지포인트 지급 현황

연도	직급별	포인트	비고
09	고위공무원 이상	11,440	16명
	부이사관	4,150	6명
	서기관	28,279	47명
	사무관	48,667	101명
	주무관	19,777	50명
	실무관	6,390	12명
	계약직원	4,540	10명
	계	123,243	242
10	고위공무원 이상	11,450	16명
	부이사관	2,880	4명
	서기관	29,960	46명
	사무관	54,530	98명
	주무관	24,750	54명
	실무관	5,780	11명
	계약직원	10,170	23명
	계	139,520	252명
11	고위공무원 이상	11,790	16명
	부이사관	3,850	5명
	서기관	32,360	47명
	사무관	62,550	100명
	주무관	28,270	58명
	실무관	7,390	13명
	계약직원	10,320	28명
	계	156,530	267명
12	고위공무원 이상	10,810	15명
	부이사관	4,550	6명
	서기관	29,900	47명
	사무관	60,260	110명
	주무관	34,930	74명
	실무관	6,160	10명
	계약직원	13,260	37명
	계	159,870	299명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

43-7. 2009년 이후 근로자복지자금 출연내역 및
근로자복지자금 지출내역

☐ 해당사항 없음.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

43-8. 2009년 이후 신설된 임직원에 대한 각종
후생복지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

43-9. 2009년 이후 임직원 주택자금, 학자금,
기타 각종 자금지원 현황 및 조건

☐ 해당사항 없음.